

2012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V)

2012. 9



금 융 위 원 회



# 총 목 차

(가, 나, 다, 순)

## (I 권)

강 기 정 의원 .....	1
강 석 훈 의원 .....	389
김 기 식 의원 .....	565
김 기 준 의원 .....	749

## (II 권)

김 영 주 의원 .....	1
김 영 환 의원 .....	111
김 용 태 의원 .....	493
김 재 경 의원 .....	501

## (III 권)

김 중 훈 의원 .....	1
노 회 찬 의원 .....	447
민 병 두 의원 .....	695
박 대 동 의원 .....	963

## (IV 권)

박 민 식 의원 .....	1
성 완 종 의원 .....	195
송 광 호 의원 .....	351
송 호 창 의원 .....	489
신 동 우 의원 .....	547
안 덕 수 의원 .....	629
유 일 호 의원 .....	827

## (V 권)

이 상 직 의원 .....	1
이 종 결 의원 .....	219
정 호 준 의원 .....	707
조 원 진 의원 .....	1001



# 요 구 자 료 목 차

(가, 나, 다, 순)

## 이상직 의원

1-1. FTA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추진실적 .....	3
1-2. 2012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관련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실적 .....	5
1-3. 2012년도 녹색산업 정책금융 공급확대 추진실적 .....	7
1-4. 3대 서민금융 공급 확대 추진실적 .....	8
1-5. 중소기업 주식 전문 투자시장 신설 추진 실적 .....	9
1-6. 금융회사 사회공헌활동 예산 확대 및 고졸채용 지속 확대 추진 실적 .....	10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	11
3.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에 제기된 민원 사항 및 조치 현황 (연도별/유형별 분류) .....	16
4. 최근 3년간 금융위 고객편의시설 임대현황 및 관련 규정 .....	17
5. 최근 3년간 임직원 급여 현황(직급별) 및 성과급 지급 현황 .....	18
6. 최근 3년간 내외부 감사관련 임직원징계 현황 .....	20
7.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서 .....	21
8. 최근 3년간 경찰청과 주고받은 특정금융정보 수사결과 내용 .....	58
9.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현황 .....	59
10. 녹색금융 실적 보고서 .....	67
11. 법률자문위원 자문료 지급 현황 .....	69
12. 최근 3년간 금융위가 금융권에 내린 지침 내용(공문서 사본 포함) ....	71

13.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작성 배포한 정책 Q&A 자료 .....	72
14. 최근 3년간 금융기관별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및 평가표 .....	81
15. 최근 3년간 후원 및 협찬 현황/관련 규정 .....	82
16. 자료제출요구서 - 임직원 행동강령 .....	83
17. 최근 3년간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햇살론 등 서민 금융지원기관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서 .....	105
18. 김석동 위원장 취임사 및 취임이후 현재까지 위원장이 발표한 (금융정책국 소관)금융정책 및 추진현황/ 언론 인터뷰 자료 및 내 외부 기고문 .....	106
19.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현황 및 사유/징계 내역 .....	107
20. 개인정보 파일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절차 .....	108
21. 금융권 대출광고 현황 및 대출광고 관련 규제 법률, 지침, 규정	110
22. 가계부채 관련 .....	116
-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고정금리로 전환한 서민 가계의 피해 우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면? / 향후 검토예정인 정책적 지원방안	
23. 금융위 직원 외부 위탁교육현황(대학원 등) 및 교육비 지원현황 (등록금 대비 지원액 등) .....	118
24. 대우신소재의 스마트저축은행 인수 심사자료 및 승인 내역 일체 ....	119
25. 휴면카드 감축 방안 및 카드 과당경쟁 대응방안 .....	142
26. 금융회사의 고졸채용 현황 및 채용후 비정규직·정규직 현황 ...	215
27. 미소금융 출범 후 연도별 미소금융 이용현황 실적 .....	216
28. 2011년 1월 ~ 2012년 9월까지 퇴직자 재취업 현황 .....	217

29.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관련 .....	218
- 청년창업재단 보증 및 직접투자 지원 현황(건수/액수)	
- 보증지원 업종별 분류	

## 이종걸 의원

1. 11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향후 계획 .....	221
2. 최근 3년간 감사 관련 .....	222
3. 최근 3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채용현황 및 처우 현황 정리 .....	524
4. 최근 3년간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연도별 예산, 구매절차, 구매일자, 구매품목 및 업체 등) .....	525
5. 최근 3년간 인력운용 현황(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	535
6. 최근 3년간 임직원들 퇴직현황 및 그 사유 .....	541
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파견현황 및 파견이유(외부에서 기관으로 파견된 사례 포함) .....	543
8. 최근 3년간 기관별·직급별 임금·연봉 현황(정규직 및 비정규직 (계약직) 구분) .....	550
9. 최근 3년간 직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과 관련 연도별 지급현황(지급 인상률 및 지급액) .....	552
10. 최근 3년간 연도별 급료, 인건비 등 지출액 현황 .....	553
11. 최근 3년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	555
12. 최근 3년간 교육훈련별 임직원 교육이수내역 .....	557
13. 최근 3년간 법인카드 발급 현황 .....	558
14. 최근 3년간 임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 .....	561

15. 최근 3년간 퇴직 임직원의 유관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연도, 퇴직일, 성명, 직급 (직위), 퇴직시 및 퇴직전 1년간 담당업무, 재취업일, 재취업처, 직급(직위) 등) .....	562
16.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관련 .....	564
17. 최근 3년간 횡령, 예산 부적절 집행 등으로 인한 소속 임직원 징계 현황(일시, 부서명, 혐의사실 요약, 조치내역) .....	587
18. 최근 3년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588
19. 최근 3년간 일반예산 중 광고홍보비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	589
20. 최근 3년간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591
21. 최근 3년간 정부출연금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 (연도별, 건별) .....	594
22. 수입 및 지출 연도별·분야별 상세 내역 .....	595
2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 .....	601
24.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605
25. 각종 위원회 위원 현황 .....	606
26. 각 기관·공사별 공문서 수발신 목록 및 부서별 경상경비 지출부 .....	611
27. 금융위원회 소송현황('10~12) .....	612
28. 최근 3년간 각 월별 금융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현황 .....	623
29. 최근 3년간 각 월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회, 참석/불참 현황 및 사유, 관련 규정 .....	624
29-1. 금융위, 증선위(최근 3년간 각 월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 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회의) 현황 및 참석/불참 현황 및 사유, 관련 규정 .....	625
29-2. 최근 3년간 각 월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각종 회의 현황 및 참석/불참 현황 및 사유, 관련 규정 .....	634

30. 최근 3년간 LTV·DTI규제 변동현황 일체 (행정지도 시행방안) ..	636
31. 최근 3년간부터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퇴직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 사외이사·감사·준법감사인으로 재취업한 현황(이름, 과거 3년간 금융위에서의 부서, 직급, 나이, 출신대학) .....	656
32. 최근 3년간 현재 외부 인사에 대한 금융위 출입증 발급대장 사본 .....	657
33. 가계부채 TF(가계부채 미시분석 작업반) 구성현황(명단, 출신, 직급 등), 개최 일지 및 각 소속 공무원의 참석현황 .....	659
34. 단기지표금리 개선 위한 관계기관 합동TF 구성 현황, 개최일지 및 회의록 내용 일체 .....	660
35. RP 시장 활성화 및 RP 금리 육성방안 세부내용 .....	678
36. 단기코픽스 세부 시행방안 내용 일체 .....	702
37.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금융감독원과 주고받은 공문 파일 .....	706

## 정호준 의원

1-1. 미소금융서민금융 지원대책 .....	709
- “제도 도입 시 수요전망” 대비 현재 실적, 제도변동 현황	
- 최근 3년간, 연도별·지역별·신용등급별 지원실적	
- 최근 3년간 편법대출 적발현황 및 사례	
- 미소금융 이용시 요구되는 서류 및 지원 자격 현황	
1-2. 햇살론 서민금융 지원대책 .....	714
- “제도 도입 시 수요전망” 대비 현재 실적, 제도변동 현황	
- 최근 3년간, 연도별·지역별·신용등급별 지원실적	
- 최근 3년간 편법대출 적발현황 및 사례	

2. 최근 3년간, 부실 저축은행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한 증권선물위의 검토보고서 및 조치내역 .....	720
3. 최근 3년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채권금융기관 에 요구한 시정요청 사항 및 시정요구 미이행에 따른 조치내역 ..	721
4. 최근 3년간,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해당 불공정영업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 현황 .....	722
5. 최근 3년간, 은행 및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현황 .....	723
6.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처분관련 행정심판 현황('10~12) ..	724
7. 최근3년간 증선위 위원구성 현황 및 위원별 회의 출석률 .....	727
8. 최근3년간 증선위 안전 목록 및 2011년 8월31일 제15차 증선위 정례 회의 회의록 사본 .....	727
9. 금융위원회(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재산변동내역 .....	778
- 최근 3년간 '정기변동사항 제출'	
10. 최근 3년간 각 금융공공기관의 보유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청와대, 기재부, 총리실 등 다른 부처로부터 받은 공문, 또는 금융공공기관 에게 발송한 공문 .....	779
11. 녹색금융 관련 정책금융기관별 지원실적 현황 .....	782
12.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의 업권별 재취업 현황 .....	783
13. 한·벨 투자협정분쟁 자문과 관련, Arnold & Porter LLP, 법무법인 태평양에게 의뢰한 자문내역 및 자문보고서 1부 .....	784
14. 금융위원회의 '11.11월 이후 연구용역 목록 .....	785
15. 최근 3년간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연구용역과 관련한 기안서 및 예산지급명세서, 결과보고서 각 1부 .....	787
16. 「금융교육 중장기 비전」 마련 사업에 따른 「금융 평등 배분지수」 개발현황 및 지수조사 결과보고서 .....	795

17.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1부 .... 799
18. 최근 5년간 금융투자협회의 과장급 이상 “정당가입자 또는 국회경력자” 채용현황(해당자의 인적사항 및 채용일시, 퇴직일시, 연봉, 직급 명기) ..... 998

## 조원진 의원

1. 2011.10.5 개최한 금융위원회 의안 제 225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 사본 ..... 1003
2. 2011.12.28 개최한 금융위원회 의안 제309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 사본 ..... 1004
3. 2012.1.27 개최한 금융위원회 의안 제12호, ..... 1005
4. 2012.2.8 개최한 금융위원회 회의 의안 제22호, 제23호, 제25호, 제28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1006
5. 2012.2.22 개최한 금융위원회 회의 의안 제31호, 제32호, 제35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1007
6. 2012.3.7 개최한 금융위원회 회의 의안 제46호, 제47호, 제49호, 제50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1008
7. 2012.3.21 개최한 금융위원회 의안 제62호~67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1009
8. 2012.3.21 개최한 금융위원회 보고 안건 제13호, 제14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1010
9. 2012.4.18 개최한 금융위원회 회의 의안 제80호, 제86호~93호, 제103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1011
10. 2012.5.2 개최한 금융위원회 회의 의안 제106호, 제108호, 제109호, 제112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1012

11. 2012.5.16 개최한 금융위원회 보고안건 제36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1013
12. 2012.6.8 개최한 금융위원회 의안 제144~147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1014
13. 2012.6.20 개최한 금융위원회 의안 제151~154호, 제159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1015

# 이 상 직 의원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1-1. FTA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추진실적

#### 글로벌금융과

- ☐ 한·EU(2011.7.1 발효) 및 한미 FTA(2012.3.15 발효) 금융서비스 합의사항은 유예기간이 있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행 완료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해외위탁허용(발효 후 2년 이내) 및 수협·신협·새마을 금고에 대한 금융위의 건전성 감독강화(3년 유예)

- ① (보험시장 관련) 보험중개업 등의 국경간 거래 개방, 보험사 인허가 단축 등 보험업법 개정 既 완료
  -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보험중개업자 국내 등록 의무조항 삭제
  - 아울러 보험사 인허가 기간도 단축(150일→120일)
- ② (감독투명성 제고 및 협력강화) 입법예고 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절차법 개정 완료
  - 아울러 효과적 감독협력을 위한 금융위와 미국 금융당국(FRB, OCC, FDIC, OTS)간 MOU도 체결 완료

□ 유보사항에 대해서도 유보 기간 내 차질없이 이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착실히 대비하고 있음

○ (공제사업 관련) 농협 등 4대 공제(농·수·신협, 새마을  
금고) 및 우체국 보험관련 법령도 개정<sup>\*</sup>되었거나  
개정작업 진행중

\* 농업협동조합법 및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완료

○ (정보처리 해외위탁 관련) 전문가 및 외국계 금융기  
관을 포함한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방안 마련중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1-2. 2012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관련 연대보증제도 개선 추진실적

#### 1. 추진경과

- ① 지난 2012.2.14일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기업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경감키로 한 바 있음
- ②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 주관의 “기업여신 연대보증기준” 마련\* 등을 거쳐 2012.5.2일부터 개선된 연대보증기준을 적용키로 하였음

\* 은행 등 관계기관 TF 운영(2~3월), 은행연합회 의결(4.18일)  
18개 은행 및 신·기보 내규 개정(4.30일 완료)

#### 2. 주요내용(2012.2.14일 발표)

##### ① 개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

- 다만,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이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

\* 대표자는 연대보증인 자격이 아닌 채무 당사자(‘주채무자’)로서 부담

현 행	개 선
① 공동대표자	(폐 지)
② 실제경영자	예외적으로 연대보증
③ 사업장·주택을 소유한 배우자	(폐 지)
④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배우자, 친족 등	(폐 지)

## ② 법인 :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

-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분담(1/n)토록 하여 공동창업을 활성화

현 행	개 선
①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①~⑤중 실제경영자 1인
② 실제경영자	
③ 최대주주	
④ 지분 30%이상 보유자, 과점주주 이사	
⑤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등	

## 3. 시행방안

### ① 신규대출(한도중액 포함) : 5.2일부터 전면 적용

### ② 기존여신 :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 (i) 원칙적으로 중소기업대출 위축 가능성, 은행의 업무처리 부담 등을 감안하여 대환\* 등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을 적용하되,

\* 통상 은행권은 약 3~5년을 주기로 기존 여신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 하여 신규여신으로 계약을 갱신(전반적인 대출조건 변경 등이 수반 된다는 점에서 단순 만기연장(통상 1년 주기)과는 차이)

- (ii) 만기연장시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 적용

- (iii) 향후 5년(2017.4.30일까지)동안 대환, 만기연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는 2017.4.30일까지의 무적으로 새로운 연대보증기준을 적용

\* 예시 : 만기 5년 이상 장기 시설자금대출 등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1-3. 2012년도 녹색산업 정책금융 공급확대 추진실적

- 정책금융기관은 대출, 보증 및 투자를 통해 8월말 기준으로 녹색기업에 약 12.3조원의 자금을 지원

#### < 정책금융기관별 녹색산업 자금지원 현황 >

(단위: 조원)

정책금융기관	'12년도 지원계획	'12.1월~8월 지원실적
산업은행	1.0	1.2
기업은행	2.0	1.9
정책금융공사	1.0	1.0
신용보증기금	4.1	5.8
기술보증기금	2.8	2.4
합계	10.9	12.3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1-4. 3대 서민금융 공급 확대 추진실적

구분	미소금융 (‘12.7월말, 소액보험 제외)	햇살론 (‘12.7월말)	새희망홀씨 (‘12.7월말)
대출실적	<u>6,464억 원</u> (74,776건) (‘08.7월 ~ ‘12.7.31)	<u>20,908억 원</u> (235,390건) (‘10.7.26 ~ ‘12.7.31)	<u>26,560억 원</u> (305,296건) (‘10.11.8 ~ ‘12.7.31)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1-5. 중소기업 주식 전문 투자시장 신설 추진 실적

- 정부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으로서 초기 벤처·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방안을 마련·발표하고(4.5일), 기자단 워크숍(5.3일) 및 공청회\* 개최(5.8)

\*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 학계, 업계, 언론사 등 참여

#### <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 신설방안 개요 >

- 전문투자자가 중심으로 시장 운영
- 업종제한 없이 최소한의 진입/퇴출요건만 적용
- 상장이후 공시의무를 완화하여 상장유지부담 최소화
- 증권사 등 지정자문인이 상장적격성 판단, 정보생성 기능을 담당
- 경쟁매매방식 도입

- 한국거래소와 증권회사, 벤처캐피탈협회 실무진 등이 참여하여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음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1-6. 금융회사 사회공헌활동 예산 확대 및 고졸채용 지속 확대 추진 실적

#### □ 금융회사 사회공헌활동 예산 확대 추진실적

구분	2011	2012
은행	6,800억원	10,000억원
금투	1,092.4억원	1,029.3억원
보험	484.6억원	999.5억원
여전	592.1억원	612.2억원
합계	8,969.1억원	12,641억원

#### □ 2011년 및 2012.1~8월중 은행, 금투회사, 보험사, 여전사 등의 고졸채용 실적

##### < 금융권 고졸채용 실적 >

구분	'11년	'12.1~8월
은행	1,058	571
금투	368	149
보험	1,384	1,085
여전	653	443
합계	3,463	2,248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 2009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계약 방식	활용내용
1	금융상품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방안	09.04.13~ 09.08.14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30	수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 마련시 활용
2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09.03.16~ 09.12.16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45	경쟁→ 수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등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수립에 활용
3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09.06.01~ 09.08.31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20.5	수의	자본-외환시장 연계성 분석·정책적 함의 활용
4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09.06.10~ 09.08.15	연세대 산학협력단 (최홍식)	40	수의	예보법 개정 등 정책추진 과정에 참고
5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09.05.13~ 09.11.30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오용협)	30	수의	금융중심지 정책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
6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09.05.28~ 09.11.11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28.8	경쟁→ 수의	현행 위탁보증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정책 수립에 활용
7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09.04.21~ 09.08.28	서울대 산학협력단 (김대일)	30	경쟁→ 수의	금융전문인력 지원방안 마련 등에 활용
8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09.07.09~ 09.11.30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35	수의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기초자료로 활용
9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09.08.05~ 09.12.02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32	경쟁→ 수의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방안마련 등에 활용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시 활용
10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09.08.28~ 09.12.28	아주대 산학협력단 (이윤제)	35	경쟁→ 수의	공중합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마련에 활용
1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 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09.10.07~ 09.12.06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30	수의	은행산업의 성장 전략과 발전방안을 위한 참고자료
12	주요국에서의 금융변혁기에 대응한 금융정책사례 연구	09.10.15~ 09.12.17	한양대 산학협력단 (박대근)	40	수의	주요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정책에 참고
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수취 비은행금융 회사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	09.09.30~ 09.12.05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20	수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회사의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계약 방식	활용내용
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09.09.18~ 09.12.17	(사)한국보험연구 원 (유경원)	20	수의	보험산업의 신성장 전략 및 발전방안마련에 참고
15	금융정보생산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방안 연구	09.10.08~ 09.12.23	한국금융학회 (이인호)	20	수의	신용평가회사의 공정성과 정확성, 평가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마련에 활용
16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방안 연구	09.11.11~ 09.12.10	한국채권연구원 (박창균)	23	수의	미소금융사업 제도 개선 및 정책반영에 활용
17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09.09.16~ 09.11.16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20	수의	중장기적으로 금융건전성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참고

※ 계약방식 “경쟁→수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제2호에 따라 2회 경쟁 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 □ 2010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계약 방식	활용내용
1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10.03.26~ 10.07.25	한국개발연구원 (손옥)	30	수의	저축은행, 신탁 등 기존 서민금융 기관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참고
2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10.04.01~ 10.07.31	서울대 산학협력단 (정순섭)	30	수의	장외 파생상품 CCP 도입시 참고자료로 활용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시 활용
3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10.04.19~ 10.08.31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40	수의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안 참고자료로 활용
4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	10.05.28~ 10.07.31	법무법인 율촌 (김정수)	30	경쟁→ 수의	11년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시 활용
5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10.04.13~ 10.07.12	한국개발연구원 (연태훈)	45.5	경쟁→ 수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 마련시 활용
6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검토	10.06.09~ 10.7.30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30	수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률안 마련시 참고
7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	10.04.09~ 10.09.03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철)	30	수의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투자산업 역할 제고 방안 마련시 참고
8	국내외 조기경보 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시장 조기 경보모형 개선	10.05.01~ 10.10.31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20	수의	금융위 조기경보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
9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10.08.30~ 10.12.20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30	수의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참고

연번	과 제 명	계약 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계약 방식	활용내용
10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와 평가	10.09.16~ 10.12.15	한양대 산학협력단 (박대근)	30	수의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에 대비
11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10.09.20~ 10.12.20	한국금융연구원 (김정환)	25	수의	현행 외환건전성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검토
12	신용정보 유통체계 개선방안	10.10.11~ 10.12.11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30	수의	국내 개인신용정보 평가 및 유통 제도개선 활용
13	국내은행 해외 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 감독 방안	10.10.11~ 10.12.11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25	수의	해외 점포에 대한 검사 및 그에 따른 조치시에 활용
14	기업경영 안정 등을 위한 상품파생시장 제도 개선방안	10.10.15~ 10.12.14	서울대 산학협력단 (안동현)	30	수의	파생상품 제도개선 관련 정책수립에 참조
15	회계감독제도 개편 등에 대응한 감리조치기준 개선안 연구	10.10.15~ 10.12.14	한국법제연구원 (이준호)	30	수의	'감리조치 개선방안' 마련시 참조
16	우리나라 특정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10.04.20~ 10.11.30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30	경쟁→ 수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중 비금융전문직(변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귀금속상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방안에 대한 정책수립시 용역 결과를 반영
17	금융회사 자금세탁 판단지표(Rule)의 유용성 연구	10.10.27~ 10.12.27	(주)데이타메이션 (한미혜)	27.7	경쟁→ 수의	자금세탁판단지표의 유용성 분석을 통해 의심거래보고서 품질개선에 활용
18	한국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10.10.25~ 10.12.20	KAIST, 삼성경제연구원 (이병태)	47.5	수의	해외 국가경쟁력 지수 등에 대한 대응 및 국내 평가기관의 설문 수행방식 개선 등에 활용
19	미국 금융규제개혁법 중 자본시장 관련 규제내용 및 시사점	10.11.03~ 10.12.20	자본시장연구원 (정찬우)	10	수의	자본시장관련 미국 금융규제 내용 및 시사점 검토
20	미국 금융개혁과 보험규제에 대한 시사점 연구	10.11.03~ 10.12.20	보험연구원	3	수의	미국 금융개혁 관련 보험규제에 대한 시사점 검토

□ 2011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계약 방식	활용내용
1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	11.01.27~ 11.06.02	금융연구원 (이명환)	40	수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적극 활용
2	금감원장 및 감사 성과평가 개선방안	11.04.06~ 11.05.30	금융연구원 (이병운)	20	수의	금감원 성과평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성과평가방안 마련
3	회계산업 중장기발전 방안	11.05.02~ 11.06.30	한국회계학회 (이창우)	30	수의	동 연구내용의 주요 주제들을 논의하여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4	저축은행 경영부실 실상 및 원인 규명 백서	11.06.27~ 11.09.26	KDI (정찬우)	15	수의	과거 부실원인 연구를 통해 향후 저축은행 건전화 방안 정책입안 참고자료로 활용
5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백서	11.07.01~ 11.12.30	KDI (고영선)	50	수의	금융위기 극복과정 기술 및 시사점을 도출
6	대형 IB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연구	11.07.11~ 11.11.04	자본시장연구원 (장정모)	30	수의	대형IB 자기자본규제 방안 마련시 정책 참고자료 및 법령 개정에 반영
7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11.07.26~ 11.11.30	KDI (천규승)	25	경쟁→ 수의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정책 추진에 활용
8	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11.08.19~ 11.10.31	법무법인 태평양 (정의중)	29	경쟁→ 수의	한-미 및 한-EU FTA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해외위탁 허용에 필요한 정책 입안시 참고자료로 활용
9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계약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11.09.23~ 11.12.15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30	수의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자료로 활용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계약 방식	활용내용
10	법인설립과 신탁계약 등이 자금세탁 등 불법적 목적에 이용될 위험과 그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11.10.04~ 11.12.20	김&장법률사무소 (서문식)	39	경쟁→ 수의	우리나라 환경에서 법인설립과 신탁계약이 자금세탁에 활용될 위험성과악과 대응방안 수립에 활용
11	비금융전문직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관한 연구	11.10.12~ 11.12.20	금융연구원 (이윤석)	44	경쟁→ 수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국내 입법 연구 및 외국사례 연구
12	금융회사간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관리감독 개선 방안	11.10.19~ 11.12.16	금융연구원 (이규복)	30	수의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장개편에 활용
1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 도입방안	11.10.19~ 11.12.20	금융연구원 (김동환)	30	경쟁→ 수의	국내 SIFI 규제 제도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
14	ET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11.10.25~ 11.12.15	금융연구원 (연태훈)	30	수의	EFT 시장 활성화 및 건전화 방안 마련시 참고
15	부동산개발금융 제도개선방안 연구	11.10.26~ 11.12.25	건국대산학협력 단 (고성수)	30	경쟁→ 수의	현행 부동산개발금융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건전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16	외은지점 규율체계 정비관련 주요 검토사항	11.10.27~ 11.12.27	금융연구원 (이윤석)	30	수의	외은지점 규제체계 정비 방안 모색
17	외환, 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11.07.15~ 12.02.29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윤덕용)	35	경쟁→ 수의	외환 자본시장을 이용한 광범위한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을 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 기법 개발에 활용
18	청년·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방안	11.12.22~ 12.04.21	금융연구원 (구본성)	30	수의	현행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지원 제도의 문제점 분석,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및 감독측면에 정책 수립에 활용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3.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에 제기된 민원 사항 및 조치 현황(연도별/유형별 분류)

#### ☐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 등 현황

(단위: 건)

기 간	진정·건의 등	법령질의	일반질의 및 기타
2010년 (‘10.1 ~ ‘10.12.)	3,768	504	774
2011년 (‘11.1 ~ ‘11.12.)	2580	848	491
2012년 (‘12.1 ~ ‘12.6.)	970	472	257

#### ☐ 처리 현황

(단위: 건)

	처리완료	민원취하 등
2010년 (‘10.1 ~ ‘10.12.)	4,666	380
2011년 (‘11.1 ~ ‘11.12.)	3,554	368
2012년 (‘12.1 ~ ‘12.6.)	1,436	225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4. 최근 3년간 금융위 고객편의시설 임대현황 및 관련 규정

☐ 해당사항 없음.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5. 최근 3년간 임직원 급여 현황(직급별) 및 성과급 지급 현황

#### □ 임직원 급여 및 성과급 지급 현황

##### ○ 연도별 기관장 등 직급별 급여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직 급	2009	2010	2011	2012.8
장관급	113	116	119	82
차관급	112	110	113	78
고위공무원	1,181	1,363	1,366	1,049
부이사관	369	298	420	251
서기관	2,707	2,856	3,054	2,131
사무관	5,149	5,277	5,954	4,210
6급 이하	2,450	2,495	2,855	2,129
계약직	605	871	922	679
특정직(경찰)	409	367	420	316
계	13,095	13,753	15,223	10,925

<참고 : 국가공무원 보수체계(全 국가공무원 동일)>

구 분	보수체계(단위 : 천원)
정무직	고정급적 연봉제 (장관급 : 106,273, 차관급 : 103,209)
고위공무원단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기준급+직무급+성과급) (기준급 : 51,524~76,700, 직무급 : 4,800~10,800, 성과급* : 전년 업무실적 반영)
과장급	성과급적 연봉제 (3급 : 53,632~79,837, 4급 : 42,449~73,036)
4급 이하 (과장급 제외)	봉급(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 4, 5, 8, 10의 봉급표) 수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성과급* : 전년 업무실적 반영 지급

○ 2009년 이후 성과급 지출현황

연 도	지급 대상	지급예산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연봉(44명)</li> <li>- 연봉제 공무원(과장급 이상, 계약직)</li> <li>○ 성과상여금</li> <li>- 4급(호봉제) 및 5급 이하 : 173명</li> </ul>	633,642천원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연봉(50명)</li> <li>- 연봉제 공무원(과장급 이상, 계약직)</li> <li>○ 성과상여금</li> <li>- 4급(호봉제) 및 5급 이하 : 172명</li> </ul>	677,161천원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연봉(55명)</li> <li>- 연봉제 공무원(과장급 이상, 계약직)</li> <li>○ 성과상여금</li> <li>- 4급(호봉제) 및 5급 이하 : 210명</li> </ul>	680,607천원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연봉(54명)</li> <li>- 연봉제 공무원(과장급 이상, 계약직)</li> <li>○ 성과상여금</li> <li>- 4급(호봉제) 및 5급 이하 : 220명</li> </ul>	795,129천원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6. 최근 3년간 내외부 감사관련 임직원징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7.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서

☐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는 총 2건임

감 사 명	감사 기간	결과보고서	조치결과
2010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10.12.16 ~ 12.22	별첨1	별첨2
2011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11.12.26 ~ 12.30	별첨3	별첨4

\* '09년도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09.06.15~07.17) 수감으로 자체감사 생략

<별첨 1>

자체감사(정기)

12.16 ~ 12.22

# 2010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11. 1.

금 융 위 원 회

[감사담당관실]

## - 목 차 -

### I. 감사개요 1

### II. 감사실시 결과

#### 1. 총 평

####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나.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다.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

라.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수준

####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4. 감사결과 처리요령

## I. 감사 실시 개요

### 〈목 적〉

◇ 예산집행·회계처리 및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등 주요사업 이행·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

⇒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 및 기관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 「'10년 자체감사계획」('10.2.8 기보고)에 따른 감사임

#### 1

#### 실시 개요

- ☐ 감사기간 : '10.12.16(목) ~ 12.22(수), 5일간
- ☐ 감사대상 : '08.7 ~ '10.11 기간중 예산집행실태 등
- ☐ 감사반원: 감사담당관실 5명(감사담당관, 5급 2, 주무관 2)
- ☐ 감사방법: 서면점검

\* 수감부서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서면위주로 실시

#### 2

#### 감사 중 점

- ☐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의 적정성
- ☐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의 적정성
- ☐ 외부감사(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실태

## II. 감사실시 결과

### 1 총 평

- 금번 감사는 '08년 자체감사('08.6.23~6.27) 이후 2년6월만에 실시
  -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하는데 중점을 둠
- 감사결과 금융위 설립('08.2.28) 초기 업무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나타났던 불안정성은 상당부분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
  - 다만, 회계 관련 서류의 관리 등 예산집행의 세부적인 부분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완할 부분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주요 발견사항]

- ①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관서운영경비 출납부서)
  - ☞ 출납서류 편철·관리 및 지출증빙·집행방법 등 부적정
- ② 대통령 지시사항등 주요사업 추진·관리(행정인사과)
  - ☞ 정상적으로 추진·관리 → 특이사항 발견되지 아니함
  - \* 대부분 과제가 완료되었거나 종료요청중이며, 일부 미완료과제도 정상 추진중
- ③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 → 부패영향평가 의뢰 미흡(관련부서)
  - ☞ '09.7 ~ '10.6 기간중 21건의 제·개정(안)중 14건 기한도과 등
- ④ '09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지적사항 이행(관련부서)
  - ☞ 관련 제도 개선등 적절히 조치

##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 ①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 출납 관련서류 편철·관리 부실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편철방법>

① 출납계산서(규칙 제7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단위로 편철</li> <li>• 세목별로 구분</li> <li>• 5년간 보관</li> </ul>
② 국고예금월계대사표(00년 00월분)	
③ 세목별 간지(본월지출액: 00원, 건수: 00건)	
④ 지급결의서	
⑤ 내부결재(품의서)	
⑥ 기타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청구서 등)	

- 그러나 금융정책국 등은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 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관리하여 출납계산서와 국고예금월계대사 및 지출증빙간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함

#### < 부서별 지적사항 >

부서명	지 적 내 용
■ 금융정책국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금융서비스국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자본시장국	• '10.1~'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대변인실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 사전품의 없이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경비 집행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 집행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또한,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은 예산 집행시 중요사항은  
국장, 일반사항은 과장이 전결토록 규정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등을 집행하면서  
사전 품의 없이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
  - \* 예산집행시에는 집행건별로 집행사유, 집행대상, 소요예산 및 해당 예산과목  
등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품의)를 득하여 집행하여야 함

#### □ 예산집행 품의서에 결재권자의 서명이 아닌 도장 날인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3조제8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문서는  
서명(행정전자서명 포함)에 의한 결재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 서명은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부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등 품의서에 부서장 서명이 아닌  
도장을 날인하여 증빙자료로 관리

####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부서명 서명 및 특근매식비 현금집행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 및 101p)」에 따라 정부구매  
카드 사용시에는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그러나, 상당수 실·국에서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부서명(○○팀 등)  
으로 서명하였고, 대변인실은 특근매식비 집행시 현금으로 집행\*
  - \* '08.12.18(273,000원) 및 '08.12.23(25,000원)

## ②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 통역비 지급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 소득세법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그러나 대변인실은 '09.9.29 김○○에게 통역료 80만원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기타소득세)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 단, 지급금액의 80%(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소득세법 제21조제2항, 84조제3호, 시행령 제87조제1항)
- 강의로 25만원 지급시: 25만원의 80%(20만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은 5만원으로 기타소득세 비과세
- 강의로 30만원 지급시: 30만원이 80%(24만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은 6만원으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 09년도 발생 에디터 비용을 '10년도 예산으로 집행

- 국고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전년도 발생 채무확정액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됨

\* 예외) 공무원보수, 군인사망급여금, 군인전상급여금, 보험료, 이자 등

-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은 '09년 12월 발생한 영문에디터(2명) 비용 2,664,690원을 '10년도 예산(수용비)에서 지급

### □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 지급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기획조정관실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

\* '09.3, 6, 9월에 각각 1,580,000원, 393,000원, 6,160,000원씩을 초과 지급

⇒ 첫째, 예산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집행할 것

-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서명에 의한 사전 결재로 집행
- 정부구매카드 영수증에는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
- 특근매식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
- 연도내 발생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법령상 예외는 제외)
- 예산과목별 교부액을 준수하여 집행

둘째, 예산집행 서류는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할 것

## 나.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 □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개선 필요

-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부서 중 출납 관련 서류의 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부서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 경력이 없는 초임자(주무관) 1인이 출납업무를 담당
- 출납업무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출납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

대변인실	금융정책국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국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반면, 출납업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부서의 경우 실무관이나 사무원이 출납업무 담당자를 보조

- 출납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업무수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

행정인사과	기획조정관실	금융정보분석원	공자위사무국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보조)	• 주무관 1(담당) • 사무원 1(보조)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보조)	• 주무관 1(담당) • 사무원 1(보조)

⇒ 출납업무 담당 1명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출납공무원 보조자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할 것

\*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서 실시하는 예산·회계교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교육 등

## 다.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

### ①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 특이사항 없음

□ '11.01 현재 총 38개 지시사항중 36개 완료, 2개 지시사항 추진중

#### < 미완료 대통령지시사항 추진현황 >

지시일	지시내용	이행단계	담당과	처리기한
09.09.03	구조조정 추진 관련	추진 중*	기재단	10.12.31
10.12.21	전국민 보안의식 강화	추진 중**	감사	11.12.31

\* 추진계획 수정·보완하여 승인요청 중으로 승인시 처리기한 연장 예정

\*\* 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완료

## ② 국정과제 추진현황 : 특이사항 없음

□ '11.01 현재 27개의 과제중 23개 완료, 4개 과제 추진중

### < 미완료 국정과제 추진현황 >

세부실천과제	계 기	시 한	단 계
단기사채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인수위 국정과제	10.하	연장요청*
산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여건 마련	'09 8.15 경축사	12.하	추진중
체계적인 금융교육실시	인수위 국정과제	12.하	추진중
햇살론의 안정적 정착	'10 8.15 경축사	12하	추진중

\* '11년 상반기까지 기한연장을 요청 중에 있으며 1월중 연장승인 예정

⇒ '10.3.4 ~ 4.16 기간중 우리 위원회등 29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원의 「주요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도 지적사항 없었음

## 다. 법령 제·개정시 필요절차 이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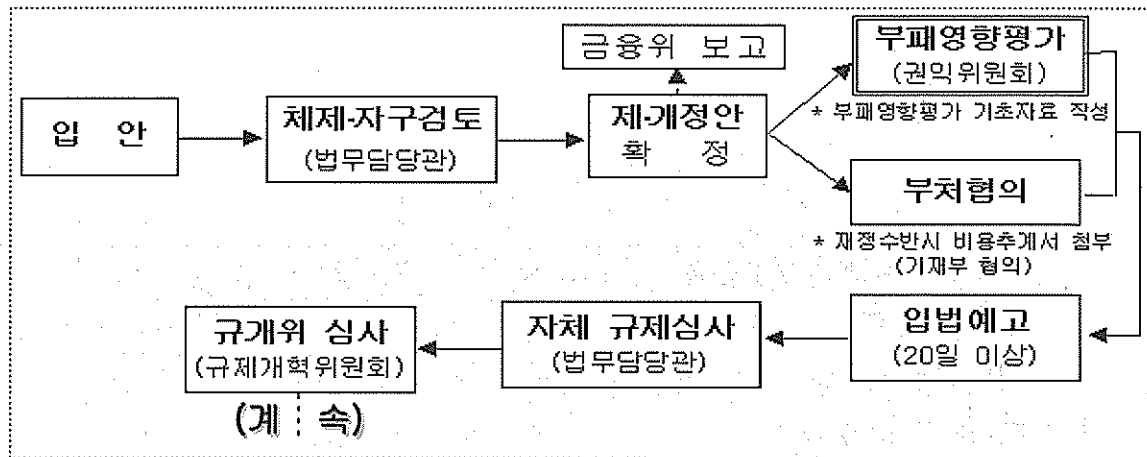
### □ 현 황

- 법령 제·개정시에는 부패영향평가\*,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표1 참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령 입안시 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토록 규정(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0조)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09.10.1 ~ '10.9.30 기간중 총 21건의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 : 부처협의를 병행 실시 >



□ 점검결과

- 법령 입안시 필요한 절차는 대체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으나, 부패영향평가 의뢰가 다소 미흡
- 총 21건 중 7건만이 기한내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12건은 입법예고 이후에 의뢰, 2건은 의뢰하지 않음 (표2 참조)

⇒ 향후 법령 제·개정시 반드시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입법예고 전에 부처협의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할 것

## □ 지적사항 및 조치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구분
<p>■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집행 관련 서류 편철 → 1개월 이내 감사담당관실로 그 결과 회보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대변인실)</li> <li>· 관서운영경비는 지급건별로 결재권자의 직접 서명에 의한 품의 (또는 전자결재)를 통하여 집행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시에는 카드 영수증에 반드시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할 것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기획조정관실, 행정인사과, FIU, 공자위사무국)</li> <li>· 특근매식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대변인실)</li> </ul>	주 의
<p>■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서운영경비 집행시 원천징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 (대변인실)</li> <li>· 법령과 다르게 지난 연도 채무확정액을 현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FIU)</li> <li>· 교부받은 과목별 자금한도를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기획조정관실)</li> </ul>	주 의
<p>■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보조인력 지정 등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출납업무 보조자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하여 출납업무가 안정적·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개선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대변인실)</li> </ul>	권 고

※ 위 지적사항과는 별도로 모든 부서는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시 반드시 부패영향평가 의뢰(국민권익위원회)를 부처협의와 병행하여 실시하시기 바람

## □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각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교육 (1월중)

###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다. 개선·개선통보·시정·권고사항은 2월 이내

###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자체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첨 2>

< '10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출납관리 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 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li> <li>- 그러나 대변인실 등은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관리</li> <li>○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 집행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li> <li>- 그러나 금융정책국 등은 공공요금 납부 등 일부건 품의서 누락하거나 부서장 서명이 아닌 일반도장 날인</li> <li>○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정부 구매카드 사용시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토록 규정</li> <li>- 자본시장국 등은 일부 사용영수증에 '부서명'으로 서명</li> <li>○ [조치요구사항]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부합토록 집행 관련 서류의 편철·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서운영 경비는 지급건별로 결재권자의 직접 서명에 의한 품의서에 의해 집행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시에는 사용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할 것</li> </ul>	주 의	○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 및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대변인실은 '09.9.29 김○○에게 통역료 80만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li> </ul> </li> <li>○ 「국고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전년도 발생 채무확정액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FIU는 '09년 12월 발생한 영문에디터 2명 비용 2,664,690원을 '10연도 예산에서 지급</li> </ul> </li> <li>○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에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기획조정관실은 '09년 3월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집행</li> </ul> </li> <li>○ [조치요구사항] 원천징수의무를 철저히 하고, 연도 내 발생경비를 차년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매월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에 준수할 것</li> </ul>	주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li> </ul>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금융정책국 등의 경우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를 1명이 담당하면서 국회업무 및 민원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면서 보조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서(FIU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납업무에 소홀</li> <li>○ [조치요구사항] 출납업무 담당을 1명으로 운용하고 있는 부서의 경우 보조인력을 지정하여 출납업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li> </ul>	권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보조인력 지정하여 출납업무를 보조토록 조치</li> </ul>	조치완료

<별첨 3>

자체감사(정기)

2011.12.26 ~ 12.30

# 2011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12. 2.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 목 차 -

### I . 감사개요

### II . 감사실시 결과

#### 1. 총 평

####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나. 민원업무 처리

####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4. 감사결과 처리요령

## I. 감사실시 개요

### 〈목 적〉

◇ 예산집행·회계처리, 계약사무, 민원처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

⇒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및 爲民奉仕의 행정구현

\* 「'11년 자체감사계획」('11.2.1 기보고)에 따른 감사임

### 1 실시개요

□ 감사기간 : '11.12.26(월) ~ 12.30(금), 5일간

□ 감사대상 : 以前 자체감사 대상 이후의 예산집행실태 등

\* 예산집행실태 등은 '10.12월 이후, 민원처리실태는 '10.7월 이후

□ 감사반원: 감사담당관실 5명(감사담당관, 5급 2, 주무관 2)

□ 감사방법: 서면점검(필요시 현장실사)

### 2 감사중점

□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민원업무 처리의 적정성

□ 以前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의 적정성

## II. 감사실시 결과

### 1 총 평

- ☐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 등 기관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조직운영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
- ☐ 감사결과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다만, 예산집행 서류의 관리 및 민원처리기한 준수 등 일부 보완이 필요

#### [분야별 주요 발견사항]

#####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 ①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관서운영경비 출납부서)
  - ☞ 지출증빙 관리 및 배정한도 준수 집행 등 철저 필요
- ② 5천만원 초과 전용건 일상감사 미이행(기획행정실)
  - ☞ 건당 5천만원 초과 이·전용 및 이월은 일상감사 대상

##### 〈민원업무 처리 관련〉

- ①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통보 부적정
  - ☞ 처리기한 도과 처리(109건, 1.7%) 및 임의형식 연장통보 등
- ② 이첩민원 해소 필요(산금과 민원 92% 신보·기보·캠코에 이첩)
  - ☞ 신보·기보·캠코에 국민신문고 구축하여 직접처리 필요

## 2

## 분야별 감사결과

##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 1. 점검개요

□ 2011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중 각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관서운영경비를 중심으로 점검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총액은 1조 5,530억 77백만원으로 대부분이 전출금·상환지출·이전지출\* 등이며,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IBRD차관원리금상환, 모기지론이차보전, 농어가목돈마련장려기금출연 등

○ 직접 집행액은 306.8억원(2.0%)으로 이 중 인건비(144.1억원)를 제외한 집행(162.7억원)을 중점 점검

<2011년도 일반회계 집행실적 (억원, %)>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자산취득	이전지출	상환지출	전출금등	계
예 산 (비중)	163.2 (1.0)	155.1 (1.0)	5.0 (0.0)	707.7 (4.5)	31.8 (0.2)	14,493.5 (93.2)	15,556.3 (100.0)
지 출 (비중)	157.1 (1.0)	144.1 (0.9)	4.3 (0.0)	705.0 (4.5)	26.7 (0.2)	14,493.5 (93.3)	15,530.8 (100.0)
이 월	0	0.7	0	0	0	0	0.7
불 용	6.1	10.3	0.7	2.7	5.1	0	24.9

□ 예산집행지침,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등 관련 규정 부합여부 및 집행절차, 증빙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 ② 점검결과 지적사항

### ①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 집행 등

-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32조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

\* 금융정책과(업무추진비 5,095,100원, 특근매식비 2,984,780원 / 6~9월), 자본시장과(업무추진비 2,345,932원 / 4월)

- 또한, 기획행정실은 국외출장에 따른 여비를 국외여비가 아닌 국내여비 예산에서 집행

\* APG 연차총회 참석(인도)을 위한 국외여비 2,861,610원을 국내여비로 집행(7.15)

####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시 상대방 성명 등 기재 미비

-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지침 141p)
- 그러나,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은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 미기재\*

\* 기획재정담당관실('11.2.28 / 970,000원), 국제협력팀('11.6.8 / 954,800원), 정책홍보팀('11.8.11 / 568,000원)

⇒ 매월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준수하고, 예산과목에 충실하여 집행하며,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기재할 것 (주의 : 해당부서)

## ② 출납서류 편철·관리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 출납 관련서류 편철·관리 부실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편철방법>

① 출납계산서(규칙 제7호 서식)	• 월단위로 편철
② 국고예금월계대사표(00년 00월분)	
③ 세목별 간지(본월지출액: 00원, 건수: 00건)	• 세목별로 구분
④ 지급결의서	
⑤ 내부결재(품의서)	
⑥ 기타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청구서 등)	• 5년간 보관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월별 출납서류에 출납계산서 등 일부 서식을 누락하여 편철

부서명	누락서류
■ 금융정책과	• 출납계산서, 세목별 간지, 지급결의서
■ 정책홍보팀, 기획행정실	• 국고예금월계대사표
■ 기획재정담당관실	• 세목별 간지

### □ 사전품의 없이 관서운영경비 집행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 집행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그러나 자본시장과는 일반수용비 집행에 있어 일부 품의서 누락

부서명	품의서 누락 사례
■ 자본시장과	• '11.2.23(생수 1,101,100원), 3.16(복사기드럼 765,600원), 4.14(용지 2,127,000원), 5.19(사무용품 657,900원), 9.7(명패 283,800원), 11.30(토너 4,957,700원) 등

⇒ 예산집행 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하고, 수용비 집행시 품의서 누락사례가 없도록 할 것 (주의 : 해당부서)

### ③ 건당 5천만원 이상 전용건에 대한 일상감사 미이행

-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은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으로 규정

※ 일상감사대상(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

- 예산이 5억원 이상인 사업
- 성과관리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집행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일정규모 초과 계약건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의 제조·구매: 5천만원)
-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의 아·전용 및 이월
- 주거대출 은행의 선정·변경
- 실·국 단위 이상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연찬회 등 행사 및 외부 참석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과단위 행사 포함)

- 그러나 기획행정실은 FIU 인건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본부 인건비에서 8,000만원을 전용('11.12.23)하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음

<FIU 인건비 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일자	건명	세부사업명	'11예산현액	변경액	변경 후 금액
12.23	FIU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 자체전용	FIU 인건비	2,926	80	3,006
		본부 인건비	12,745	△80	12,665

⇒ 향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건에 대하여 반드시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등 「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 (주의 : 기획행정실)

#### ④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모범사례)

□ ○○국은 '10년 자체감사시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 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하여 출납계산서와 국고예금월계대사 및 지출증빙간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고,

○ 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결제권자의 결재를 득한 사전품의 없이 집행하였으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사용영수증에 사용자의 실명이 아닌 부서명으로 서명한 사례가 빈번하여 지적(주의)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11년 1월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가 아래와 같이 교체되면서 금번 감사일 현재 '10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완전히 해소하는 한편 관서운영경비 집행과정에서 '예산집행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함

소 속	성 명	직 급	담당업무	담당기간
○○과	○○○	○○	○○국 관서운영경비 출납	'11.1월 ~ 현재

⇒ 각 과장은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모범사례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행정인사과장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상기 담당자에게 포상 등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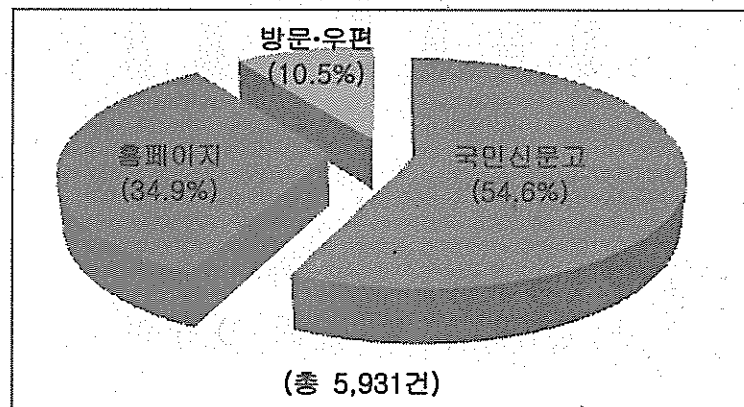
## 나. 민원업무 처리 관련

### ① 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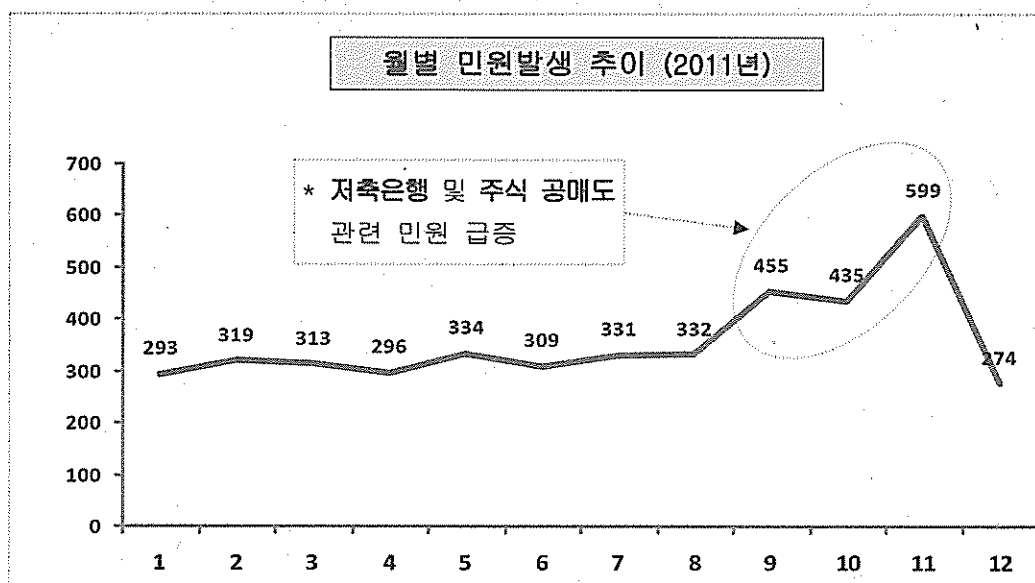
□ 점검대상기간('10.7.1 ~ '11.11.30)중 총 5,931건\* 접수·처리

\* 반복민원 433건 포함시 6,36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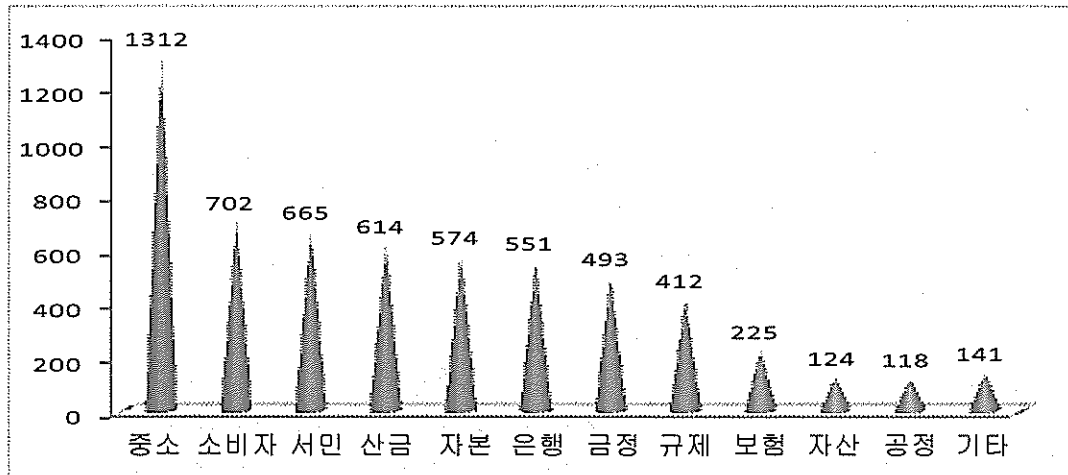
구 분	건 수
신 문 고	3,238
홈페이지	2,067
방문·우편	626
합 계	5,931



- 통상적으로 매월 3백건 내외의 민원이 발생하며, 저축은행 등 특정 사안 발생시 일시적으로 급증



□ 부서별 : 중소기업과 → 금융소비자과 → 서민금융과 순



○ 중소기업·소비자·서민등 3개 과의 민원은 모두 서민금융 관련 민원으로 총 2,679건으로 전체 민원의 45.2% 차지

- 이들 민원의 만족도\*는 44.7%로 전체 만족도 49.0% 보다 4.3%p 낮게 나옴

\* 중소기업(41.7%), 금융소비자(48.5%), 서민금융(49.2%)

○ 산업금융과 민원\*은 대부분(91.8%) 신보, 기보, 챔코 민원으로 해당 기관에 이첩되었으며, 만족도는 42.9%로 나타남

산금과 민원(건)	신 보	기 보	챔 코	기 타	합 계
	311	98	155	50	614

□ 속성별 : 일반민원\*(3,544)→ 법령질의(1,160) → 제도개선(592) → 진정(493) → 기타(231)의 순

\* 일반민원 대부분도 현행제도 내에서 해소가 어려운 진정성 민원

\* 법령질의 만족도는 83.3%로 전체 평균(45.2%)보다 월등히 높음

## ② 점검결과 지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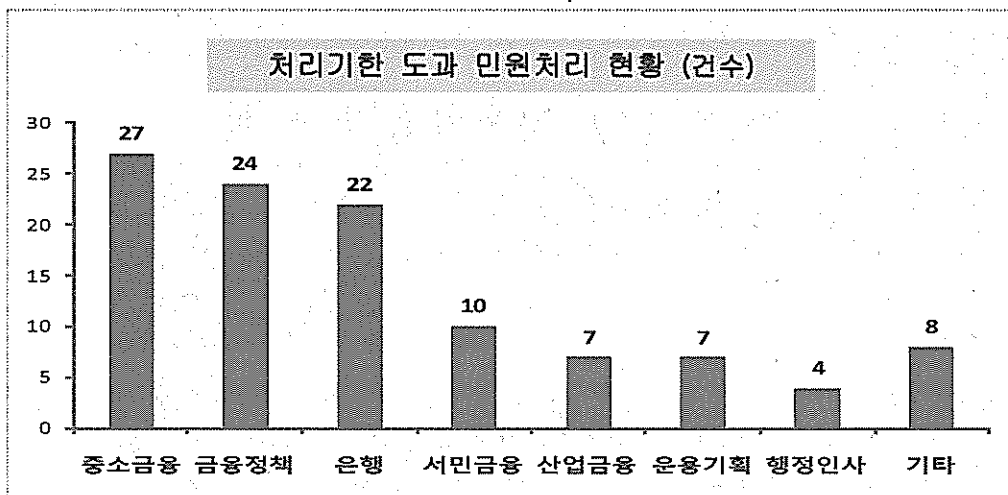
### ①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처리 부적정

- 처리기한 준수율은 98.3%로 '10년 점검시의 95.8%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 평균 99.5%\* 보다는 낮음

\* 「2011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권익위)」에서 금융위의 처리기한 준수율은 '보통'으로 외통부, 교과부 등과 함께 최하위권

- 처리기한 연장 등의 조치 없이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는 109건 (1.7%)으로 중소기업과, 금융정책과, 은행과에 집중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일반질의·상담은 7일, 법령질의를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을 명확히 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시행규칙(제8조)

- 그러나, 일부 서신민원(방문·우편)의 경우 당해 민원인에게 처리기한 연장통보 없이 국민신문고상으로만 연장처리

- \* 서신민원의 경우 행정편의상 국민신문고에 등재·관리하더라도 처리기한 연장은 당해 민원인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서신으로 하여야 함

<사 례>

민원인	접수일	처리일	연장횟수	처리부서
김OO	'11.01.31.	'11.03.18.	3회	금융정책과
이OO	'10.07.16.	'10.08.17.	3회	산업금융과
강OO	'10.10.29.	'10.11.26.	3회	중소금융과
황OO	'11.05.20.	'11.06.22.	3회	서민금융팀
홍OO	'10.08.11.	'10.09.10.	3회	은행과
심OO	'11.10.17.	'11.11.17.	3회	보험과
김OO	'10.07.21.	'10.08.20	3회	운용기획팀

- 또한, 서신으로 연장통보 하는 경우 공문 또는 법정 서식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임의양식\***으로 처리

- \* 담당자, 시행일, 기관장직인 등 없이 A4 용지에 연장사유 및 예정처리 기한만을 임의로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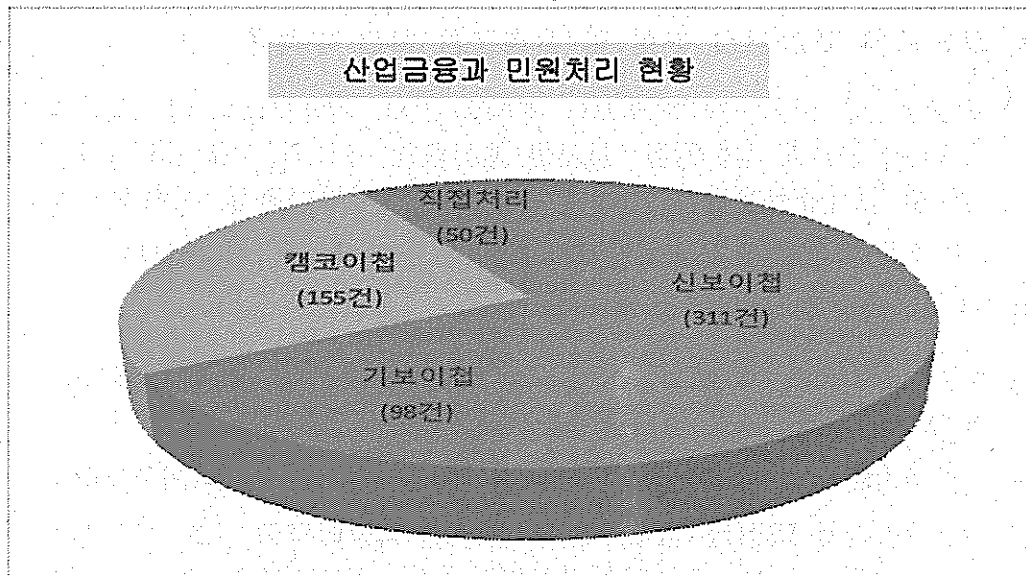
<사 례>

관련 민원현황				처리부서
민원인	신청일	접수일	처리일	
박OO	'11.08.30	'11.08.30	'11.09.16	산업금융과

⇒ 법정 처리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신민원의 처리기한 연장 통보는 반드시 공문 또는 법정서식에 의할 것 (주의 : 해당부서)

## ② 이첩민원 해소노력 필요

- 산업금융과 민원 경우 대부분이 신보, 기보, 캠코 관련 민원으로 접수민원의 92% 가량을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



- 이는 해당 공공기관에 국민신문고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 국민신문고 구축시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

- \* '10년 민원점검시 지적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국민신문고가 구축됨에 따라 자본시장과 민원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최근 예금보험공사의 신문고 구축으로 금융소비자와 민원도 상당수 감소
- \* LH공사, 국민연금공단, 대한주택보증 등 상당수 공기업들 또한 국민신문고를 구축하여 소관 민원을 직접 처리

⇒ 신보 등에 국민신문고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필요 (권고 : 산업금융과)

## □ 지적사항 및 조치구분

분야	지 적 사 항	조치 구분
예산 집행 / 회계 처리	<b>■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납계산서, 한국은행 월계대사, 세목별 간지,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품의서, 영수증 등) 등을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에 부합토록 철저히 관리할 것 (금융정책과, 정책홍보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행정실)</li> <li>일반수용비 집행시 품의서 누락사례가 없도록 할 것 (자본시장과)</li> </ul>	주의
	<b>■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별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자금한도를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금융정책과, 자본시장과)</li> <li>국외여비를 국내여비에산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기획행정실)</li> <li>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시 증빙서류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기재할 것 (기획재정담당관실, 국제협력팀, 정책홍보팀)</li> </ul>	주의
	<b>■ 일상감사 미이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일상 감사를 이행할 것 (기획행정실)</li> </ul>	주의
	<b>■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 (모범사례)</li> </ul>	모범 사례
민원 처리	<b>■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처리 부적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리기한을 준수하며, 서신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연장은 연장사유·예정처리기한을 명확히 한 공문 또는 법정서식에 의할 것 (행정인사과, 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은행과, 보험과, 중소기업과, 서민금융과, 신용기획팀)</li> </ul>	주의
	<b>■ 이첩민원 해소노력 필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보 등에 국민신문고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일 필요 (산업금융과)</li> </ul>	권고

## □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각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

###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다. 개선·개선통보·시정·권고사항은 2월 이내

###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자체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첨 4>

< '11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출납관리 서류 편철·관리 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li> <li>-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월별 출납서류에 출납계산서 등 일부 서식을 누락하여 편철</li> <li>○ 「'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집행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li> <li>- 그러나 자본시장과는 일반수용비 집행에 있어 생수 구입건 등 일부건 품의서 누락</li> <li>○ [조치요구사항] 예산집행 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하고, 수용비 집행시 품의서 누락 사례가 없도록 할 것</li> </ul>	주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 서류의 편철·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li> </ul>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32조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에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월별 지급을 초과하여 지급</li> </ul> </li> <li>○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은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 미기재</li> </ul> </li> <li>○ [조치요구사항] 매월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준수하고,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기재할 것</li> </ul>	주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li> </ul>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일상감사 의뢰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은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으로 규정</li> <li>- 그러나 기획행정실은 FIU 인건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본부 인건비에서 8,000만원을 전용(11.12.23)하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함</li> <li>○ [조치요구사항] 향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건에 대하여 반드시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등 「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li> </ul>	주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li> </ul>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이첩민원 해소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산업금융과 민원의 경우 대부분이 신보, 기보, 캠프 관련 민원으로 접수민원의 92% 가량을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 이는 해당 공공기관에 국민 신문고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 국민 신문고 구축시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li> <li>○ [조치요구사항] 산업금융과장은 신보 등에 국민신문고를 구축을 협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필요</li> </ul>	권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보등 당해 기관과 협의중 (산업금융과)</li> </ul>	추진중
민원처리기한 미준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처리기한 준수율은 98.3%로 '10년 점검 시의 95.8%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 평균 99.5% 보다는 낮음. 또한 일부 서신민원(방문·우편)의 경우 당해 민원인에게 처리기한 연장통보 없이 국민신문고상으로만 연장처리</li> <li>○ [조치요구사항] 법정 처리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신민원의 처리기한 연장 통보는 반드시 공문 또는 법정 서식에 의할 것</li> </ul>	주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처리기한 등을 준수토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li> </ul>	조치완료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8. 최근 3년간 경찰청과 주고받은 특정금융정보 수사결과 내용

-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사결과 내용'은 경찰청의 수사과정  
에 있는 정보이거나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와 관련  
된 정보로서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며 그 제공  
여부의 판단 권한은 경찰청에 있음
- 따라서 본 정보의 제공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수사결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9.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현황

☐ 별첨 엑셀파일 송부

금융위원회 비영리법인 등록현황(12.6월 기준)

순	단체명칭	유형	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비고
1	금융결제원	사단법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2	송창현	86.6.2	간접한 금융거래 및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제고 및 금융산업발전도모	531-1141	금융정책과
2	한국FP협회	사단법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8 동지빌딩 17층	유병철	00.12.18	FP제도 도입 및 관리권한을 통해 금융산업경쟁력 제고	3276-7531	금융정책과
3	한국CFO협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명동1가 5-1번지 보림빌딩 7층	김상현	02.4.3	재무관련 전문인력 교류·발전, 재무분야 전문인 양성 등을 통해 기업경영발전에 기여	755-8671	금융정책과
4	한국금융투자협회	사단법인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연구관 509호	장관형	03.8.25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속에 금융관계법령 개선방안 등을 연구	3290-1882	금융정책과
5	한국FPSB	사단법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538번지 성지빌딩 17층	유병철	04.11.2	배수준의 FP전문인력 양성, 금융문화 확산, 금융서비스 질적 향상	3276-7609	금융정책과
6	바른금융재정포럼	사단법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437-3	윤종현	06.3.17	금융 및 재정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대안부 창조제안	382-3806	금융정책과
7	한국지급결제학회	사단법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147 한국대광영대 서관519호	박승호	07.9.13	지급결제분야 학술·공동연구 교육 등	531-3215/3213	금융정책과
8	제주금융포럼	사단법인	서울시 용문구 내수동 6번지	고희원	03.8.22	제주도의 금융산업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연구, 제시	010-9092-5851	금융정책과
9	한미재무학회	사단법인	서울시 동대문 회기로 97	최승복	03.10.10	국내 학자 및 실무전문가들과 국제 KAFAC회원 간 연구 및 권역도모	02-958-3517	금융정책과
10	탈라금융포럼	사단법인	제주시 이도동 1026-8	윤태현	09.2.12	제주도의 금융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금융전문인력양성	070-7931-9730	금융정책과
11	한국금융연구센터	사단법인	서울 용문구 사리동 9번지	최종식	09.3.12	경제분야 연구 대상으로 특화된 연구 활동을 수행	02-732-1791	금융정책과
12	한국산업은행경제학회	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영무지원부	김영기	44.5월	산업경제의 성장발전을 위한 학제 연구, 조사, 의견교환, 정책제안 및 후속도모	787-6393	산업금융과
13	아이비케이은행금융재단	재단법인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 기원은행 18F	조준희	6.4월	국민경제 교육사업 지원과 중소기업 지역의 치료비 및 장학금 지급	3789-3984	산업금융과
14	연세대학교산업경영재단	재단법인	서울 중구 명동 1가 4-1	박병환	12.6월	창년형업 기반구축 및 교육, 투자·금융수행	3705-5080	산업금융과
15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청년금융거래소 본관) 410호	민상기	2003.4.14	청소년에 대한 신용관리 및 금융관련 교육연구	784-3037	금융소비자과
16	대한금융학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증권거래소 별관33층	이원상	06.4.11	금융실무자 상호간의 이해증진도모와 국내외 금융상용어어간	16-331-427	국제협력팀
17	여성금융인네트웍	사단법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8-85	김상경	07.5.9	여성상호간 정보도모, 정보교류, 여성금융인의 건강한 발전도모	778-0808	국제협력팀
18	국제금융포럼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신학원파라다이스 605호	이영준	10.8.11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국제화 및 국제금융통합지 발전에 관한 연구, 학제연구, 정책개발 및 산업협력	051-514-6503	국제협력팀
19	전국은행연합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명동 1가 4-1	신용규	28.11.1	금융산업발전도모, 건전한 신용거래질서확립, 금융산업의 복리후생증진 등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	3705-5290	은행과
20	우리은행금융우회	재단법인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	이덕훈	57.8.1	회원수익 및 후원, 회원경제 및 후생도모	2002-4634	은행과
21	한국금융인수원	사단법인	서울 용문구 한남동 23-1	김종환	76.6.5	금융기관 임직원 자질향상 및 전문능력 배양을 통해 금융업무 발전에 기여	3700-1545	은행과
22	한국금융학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명동 1가 4-1 은행회관 8층	조장혁	00.03.29	최적인 연구고무학인 학문 및 금융산업발전기여	3705-6325	은행과

23	총합금융협회	사단법인	서울 옹호구 관동동 197-28, 덕성빌딩	문관상	90.12.12	정합금융협회 건립추진위원회, 정합금융협회 연구, 연구, 회원상호간 친화도모	720-0570	은행과
24	한국금융연구원	사단법인	서울 중구 명동 1가	권태준	91.4.9	금융전반에 관한 연구사업추진, 금융산업발전 및 금융정책 수립에 기여	3705-6300	은행과
25	한국재무학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금융투자협회빌딩 8층	최학	95.5.17	재무학이론 및 재무관리연구, 조사, 정보 및 연구서적간행	2003-0941	은행과
26	금융지속가능발전	사단법인	서울 중구 명동 1가 30-1 매립정지미디어센터 10층	김진수	99.9.11	금융부문 진지적 진화에 대한 대중적인 수필 및 장부보조제도에 대한 과학적 분석	2000-2765	은행과
27	금융보안연구원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김관식	06.9.1	IS인성의 특성연구와 보건의에 대한 공동학제 통찰 도출에 기여	6919-9114	전자금융업
28	Secul IF Forum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민상기	07.11.23	금융산업발전의 기여	3771-0875	은행과
29	은행발전학회	사단법인	서울 옹호구 명동동 3가 53 성관관대 빌딩대역 410호	고종현	08.2.4	금융정책과 관련된 국내외의 규제 및 거래법제연구	780-0592	은행과
30	은행발전학회	사단법인	서울 옹호구 수송동 80번지 코리안리저빌딩 6층	홍재우	46.8.1	은행사업과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발전의 발전 도모	3702-5500	은행과
31	상업보통학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용두로 37(60-1) 덕성빌딩 19층	이우철	90.2.20	은행사업과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발전의 발전 도모	2262-6590	은행과
32	한국보통학회	사단법인	서울 성북구 보문동 1가45 보통연수원빌딩 7층	이준재	84.5.2	보통이론 및 실무에 대한 연구, 조사, 보통학계의 발전도모 및 신학점제	921-5541	은행과
33	한국보통학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소각동 51번지 협신빌딩빌딩 신관 1101호	김소현	70.9.7	보통의 보급과 보통계학 및 보통학계의 권익보존을 도모	3149-7149	은행과
34	한국보통계리사회	사단법인	서울 용인구 광명동 2가 29-15 북조빌딩 3층	박현준	05.5.24	보통수리학의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보통수리학의 발전도모	782-7440	은행과
35	한국보통계리사회	사단법인	서울 용인구 광명동 2가 29-15 북조빌딩 3층	김재현	87.12.30	보통수리학의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보통수리학의 발전도모	712-9112	은행과
36	한국보통계리사회	사단법인	서울 용인구 수송동 80번지 코리안리저빌딩(주) 10층	이근창	89.11.10	보통수리학의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보통수리학의 발전도모	2220-0384	은행과
37	보통연수원	사단법인	서울 성북구 보문동 1가 45번지 보통연수원빌딩	조병관	84.4.13	보통수리학의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보통수리학의 발전도모	920-0800	은행과
38	한국보통계리사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명동동 21 해방빌딩 신관 524호	박현진	99.7	보통수리학의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보통수리학의 발전도모	776-5536	은행과
39	한국보통계리사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용두로 37(60-1) 덕성빌딩 134-2	이영규	03.5.9	보통수리학의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보통수리학의 발전도모	733-3853	은행과
40	보통계리학회	사단법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강영규	89.11.18	보통수리학의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보통수리학의 발전도모	369-4030	은행과
41	한국보통계리사회	사단법인	서울시 용인구 광명동 2가 29-15 북조빌딩 303호	양희상	09.7.25	보통수리학의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보통수리학의 발전도모	712-9147	은행과
42	한국보통계리사회	사단법인	경기도 연천시 33동 1271 한양대학교 경성대학 427호	오창수	09.5.25	보통수리학의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보통수리학의 발전도모	331400-5642	은행과
43	보통연수원	사단법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보통계리사회빌딩 8층	김대식	10.11.25	보통수리학의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보통수리학의 발전도모	3775-9000	은행과
44	한국보통계리사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1004호	김지훈	01.5.29	보통수리학의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보통수리학의 발전도모	3299-1011	은행과
45	한국보통계리사회	사단법인	서울시 영등포구 용인동 7번지 상원대학교	이영식	09.10.5	보통수리학의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보통수리학의 발전도모	2287-5209	은행과
46	신용회계학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신용회계빌딩 4층	이영희	03.10.1	신용회계학회 연구, 조사, 회원상호간 친화도모	1600-5500	은행과
47	한국금융정보학회	사단법인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동 606호	이민호	10.9.23	신용회계학회 연구, 조사, 회원상호간 친화도모	02-880-6286	은행과
48	한국금융정보학회	사단법인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4-1 은행빌딩 15층	조희호	89.11.1	신용회계학회 연구, 조사, 회원상호간 친화도모	02-3705-5041	은행과

49	현대미소금융재단	시민법인	서울 서대문구 홍천로 2가 2-2 동정발원 11층	정태영	09.12.7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361-6000	서민금융과
50	삼성미소금융재단	시민법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1023-3번지	강재영	09.12.7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31-221-9711	서민금융과
51	해지미소금융재단	재단법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5-228번지	조광재	09.12.7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3773-2160	서민금융과
52	우리미소금융재단	시민법인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118-1번지	이순우	09.12.8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2002-2000	서민금융과
53	K8미소금융재단	시민법인	대전 중구 은행동 154 4층	민병택	09.12.8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42-254-1025	서민금융과
54	신한 미소금융재단	시민법인	인천 부평구 부평동 376-4	서진원	09.12.8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32-2151-3570	서민금융과
55	하나미소금융재단	재단법인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김경태	09.12.8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2275-0249	서민금융과
56	SK미소금융재단	시민법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101-14 녹음빌딩 2층	신원철	09.12.18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6332-5500	서민금융과
57	포스코미소금융재단	시민법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도동 555-149	최종태	09.12.18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54-231-7815	서민금융과
58	롯데미소금융재단	시민법인	서울 중구 남종동 51-1 삼성빌딩 8층	박성훈	09.12.18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757-3844	서민금융과
59	IGK미소금융재단	시민법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원동 520-3 중앙빌딩 4층	조판희	09.12.18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31-485-4693	서민금융과
60	미소금융서울서초구지점	시민법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2-1 동아리이벤트 지하 1층 104호	김영수	09.12.18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532-0069	서민금융과
61	미소금융서울영등포구지점	시민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87-1 중앙구장 제1별관 3층	박영희	09.12.18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352-0021	서민금융과
62	미소금융대구서구지점	시민법인	대구 서구 내당동 871-2	박성종	09.12.18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53-522-0071	서민금융과
63	미소금융광주서구지점	시민법인	광주 서구 광동 96-4	김재철	09.12.18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62-352-155	서민금융과
64	미소금융대전동구지점	시민법인	대전 동구 장동 28-35	이종근	09.12.18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42-242-0365	서민금융과
65	미소금융광원동원지점	시민법인	광원 동원시 동지동 682-8	박의림	09.12.18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3-255-013	서민금융과
66	미소금융충북영주지점	시민법인	충북 영주시 상암구 석교동 125-155	박노성	09.12.18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43-225-004	서민금융과
67	미소금융부산중구지점	시민법인	부산시 중구 부평동 2가 2-1 부산은행 4층	장진혁	10.1.12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51-255-003	서민금융과
68	미소금융제주지점	시민법인	제주시 이도2동 1176-17 하나은행 제주지점 3층	이봉원	10.1.12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64-722-005	서민금융과
69	미소금융광복동원지점	시민법인	경상북도 안동시 죽림동 911번지	박병철	10.4.27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54-855-302	서민금융과
70	미소금융부산연제구지점	시민법인	부산시 연제구 민선동 1361-9 행정타운 103호	이광우	10.4.27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51-710-225	서민금융과
71	미소금융대구중구지점	시민법인	대구 중구 서문동 2가 83번지	김석록	10.4.27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53-252-640	서민금융과
72	미소금융경기화성지점	시민법인	경기 화성시 진안동 539-4	장홍호	10.4.27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31-267-059	서민금융과
73	미소금융서울관악지점	시민법인	서울 관악구 신림2동 94-225	남상민	10.4.27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02-834-1040	서민금융과
74	미소금융광명가정지점	시민법인	경남 거제시 고현동 468 하이츠빌라 101호	오정민	10.4.27	저신용자소속층의 소득 형평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55-632-616	서민금융과

75	미소금융창기성남지점	사단법인	경시 성남시 수성구 태평2동 2309번지	권영준	10.4.27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융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61-721-210	서민금융과
76	미소금융창기구리지점	사단법인	경기 구리시 인왕동 127번지 구리동수리월드메이저빌딩 3층 53003호	이영린	10.5.19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융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31-552-215	서민금융과
77	미소금융창기북부지점	사단법인	전주시 원신구 건물 140-11	김대권	10.5.19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융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63-285-403	서민금융과
78	미소금융창기남원지점	사단법인	충남 청안시 서북구 봉동동 159-10 수암빌딩 5012호	정수철	10.5.19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융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41-571-271	서민금융과
79	미소금융 창북 경주지점	사단법인	경상북도 경주시 함안동 110-1	홍우표	10.11.18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융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54-749-308	서민금융과
80	미소금융 창기의정부지점	사단법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28-13	조인희	10.11.19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융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31-837-219	서민금융과
81	미소금융 창북익산지점	사단법인	전북 익산시 항안동 1가 244의1	이재관	10.11.20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융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65-952-404	서민금융과
82	미소금융 창기광주지점	사단법인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337번지 로얄프라자빌딩 2층 216호	김홍규	10.11.21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융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31-763-203	서민금융과
83	미소금융 창기광주지점	사단법인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69-369번지	권성경	10.11.22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융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32-935-102	서민금융과
84	미소금융 창기서울지점	사단법인	인천시 서구 서곶로 397	신덕근	10.11.23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융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31-573-501	서민금융과
85	미소금융 창기서울지점	사단법인	서울시 용문구 서양동 265-47	홍준석	11.1.11	저신용저소득층의 소액 융입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32-935-102	서민금융과
86	한국자부사건연구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문루자립회빌딩	리해태	97.9.27	중년산전 및 시정관련 주안제도의 정례연구 출판사업	3771-0600	자본시장과
87	코스모스협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한국거래소 빌딩 7층	노학영	99.1.17	코스모스특별법인 간담회상대주자비호모스특별법인관련 지원 및 교육등	369-4600	자본시장과
88	한국증권학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문루자립회빌딩 6층	김영락	78.3.1	회계상조건의 연구발표 및 학회등에 의해 출판된 회계연구	783-2615	자본시장과
89	한국재무관리학회	사단법인	경주시 북구 용평동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1호관 320호	정성훈	83.9.1	재무관리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 및 학회간 친목도모	82-530-149	자본시장과
90	한국증권분석학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금문루자립회빌딩 6층	홍건호	83.6.23	증권분석기술 향상 및 실무에 관한 연구발표 및 학회간 친목도모	784-1885	자본시장과
91	한국마성상학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한국금융투자협회빌딩 11층	홍정환	91.10.4	학술발표 및 연구발표, 학술지 및 간행물발간, 학회의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 간 교류협약	910-4578	자본시장과
92	한국비상상문시장연구회	사단법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56-1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서문관	93.7.8	상물전환관련연구 조사, 연구실용가능성 등을 검토한 논문발표	883-4732	자본시장과
93	한국증권학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한국거래소 빌딩 211호	송중순	01.3.19	증권거래법 등 증권관련법 연구발표 및 국제학회교류 지원	3774-4477	자본시장과
94	한국CEO포럼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조피스텔 611호	김승우의2명	01.7.19	포럼과 기업경영관찰을 위한 전문경영인의 직무와 역할을 포함한 전문간담회, CEO포럼행사	790-0663	자본시장과
95	한국금융리스크관리전문가협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명동1가 4-1 은행회관 7층	박기훈	01.8.29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 방안 연구	3705-5045	자본시장과
96	한국MSA협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동소기업진흥공단 4층	김동철	02.4.15	회원사 상호간 MSA에 관한 정보교환 활성화, MSA 전문가 양성 및 MSA관련 정책제정, 연구	760-6837	자본시장과
97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동 79 한국거래소 신관 9층	장영호	02.6.12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제시한	3775-3339	자본시장과
98	기업가치평가학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210-1	최영근	02.11.6	기업가치평가의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기업가치평가원 설립 및 회원간 친목도모	775-6432	자본시장과
99	한국기업법학회	사단법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9번지 흥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윤호	03.3.24	기업법지에 대한 조사, 연구, 출판 및 교육, 기업의 건전경영	043-261-2627	자본시장과
100	한국금융공학학회	사단법인	부산시 금정구 광전동 산50 부산대학교 상학관 526호	이기환	04.4.7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연구 등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051-510-3599	자본시장과

101	CFA한국협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소공동 81 소공동빌딩 701	김정수	06.11.20	무지관련 컨퍼런스	782-4704	자본시장과
102	파생시장협의회	사단법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스터즈타워 2010호	박휘준	07.27	파생시장 발전관련, 권자당국에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기금, 연련인 등에 대한 파생시장 발전 필요성 인식을 위한	730-6987	자본시장과
103	한국소액투자연구회	사단법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미스텔 607호	권성민	07.11.9	소액투자주주들을 위한 연구 및 기업가치 향상 지배구조개선	563-1477	자본시장과
104	한국에프피에스비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2	윤병철	08.7.11	개도재무와 관련한 연구, 조사, 학술지, 회보 및 연구, 영작물 의 간행	786-3386	자본시장과
105	글로벌미래연구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한국거래소 별관 602호	임주재	08.12.12	금융,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와 맞선 변화 방안 논의 및 정책방 향 제시	786-7667	자본시장과
106	KSO나눔재단	재단법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2동 1328	김경동	09.4.9	금융교육, 장학사업, 해외 자재발굴 지원사업	931-900-700	자본시장과
107	한국IF협의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한국거래소 별관 2층	이향호	09.3.30	IF에 대한 인식 제고 및 IF의 확산에 관한 사업 등	6922-5000	자본시장과
108	프리보드기업협회	사단법인	서울시 양천역 북동 행복원세상빌딩 1304호	송승환	10.3.25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및 관련 사업	2642-7440	자본시장과
109	KRX국민은행복합재단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중구 범일동 825-3	김봉수	11.2.28	금융발전과 인재육성, 사회복지 및 영의협력 등	3774-8864	자본시장과
110	자산운용연구원	사단법인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30-130	정승필	03.06.04	금융, 회계, 세제를 각종 제도 변화에 맞는 자산관리기법 연 구	010-9992-8540	자산운용과
111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 동아인도빌딩	김봉주	06.10.30	투자자교육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사, 연구	761-5100	자산운용과
112	한국사회적책임투자포럼	사단법인	서울 종로구 내수동 71 평화공공의 아현역단지 오피스텔 1413호	김영호	07.7.30	사회책임투자의 교육 및 홍보, 정책연구	739-1142	자산운용과
113	한국회계학회	사단법인	서울 서대문구 홍성로 2가 185-10 한국공인회계사회 4층	김지홍	73.10.22	회계학연구 및 교육발전과 회계학도의 건전한 연구활동 증 진, 회계의 이익과 진학도	363-1649	공정시장과
114	한국회계기준원	사단법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71 84-11 제보문스텔빌 4층 한국회계기 준원	임석익	99.8.27	회계기준기초 관련 업무(숙학기준 제정, 해석, 집의회의 업무 등)	2259-0190	공정시장과
115	한국관리회계학회	사단법인	서울 성동구 성일동 한일대학교 경영대학 610호	고원석	02.7.16	관리회계 및 관련분야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학술지, 회 계, 기업, 정부, 공공단체 등의 발전에 기여	2220-1077	공정시장과
116	미국공인회계사 협회	사단법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7-5 카이시시스템빌딩 13층	최창호	05.11.23	금융산업 및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581-4345	공정시장과
117	한국내부통제학회	사단법인	서울강남구 역삼동 738-37 아이네트빌딩 5층	이병철	09.10.7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관련 연구활동 지원 및 조사, 학 술지 발간, 내부통제 관련 인력 양성 등	591-2322	공정시장과
118	세금사회연구원	사단법인	경기도 평택시 칠산동 245 미성오피스텔 1303호	장영석	2008.9.26	·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자금세탁금조달금조달에 대한 학술연구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조달에 대한 증권거래 · 국민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기회	2610-8084	기회시장과
119	정경금융포럼	사단법인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김규복	2010.9.14	· 금융산업 및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890-0949	기회시장과
120	금융경제연구원	사단법인	서울시 중구 다동 88번지 동아빌딩 9층	양병민	04.5.24	· 금융산업 및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750-2339	은행과
121	신해보험협회	사단법인	서울 종로구 수송동 50번지 코리안리치타워빌딩 6층	윤재우	46.8.1	보험사업과 상호간 업무협력 유지 및 보험업의 발전 도모	3702-9500	보험과
122	생명보험협회	사단법인	서울 중구 용두로 3가 160-1 북서울빌딩 16층	이우철	50.2.20	보험사업과 상호간 업무협력 유지 및 보험업의 발전 도모	2262-6590	보험과
123	보험개발원	사단법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강영구	89.11.18	보험업의 상호간 업무협력의 개발, 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보험관련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을 통하여 보험산업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368-4000	보험과
124	보험연수원	사단법인	서울 정자동 보문로 1가 45번지 보험연수원 빌딩	조영진	94.4.13	· 보험사업과 상호간 업무협력 유지 및 보험업의 발전 도모 · 회계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 · 복구의	920-0800	보험과
125	한국채세보험협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고영진	73.5.15	인명보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율 체계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	780-8111	보험과
126	한국금융투자협회	사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박종수	09.1.28	회계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유지 및 투자보호를 위한 지출 규제 업무 등	2003-9300	자본시장과

127	한국공인회계사회	시단법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재로2가 185-10	관오형	8.3.1.4	공인회계사의 시민의식 제고, 공익적 자립형성 및 직능의 합 적 개진과 확충, 회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및 국제교류 의 증진 등	3149-0252	공정시장과
128	신용장부협회	시단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4번지 영등루아빌딩 2층	김석권	00.12.20	신용장부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장부회사들 사이 의 업무질서를 유지	3775-2761	서민금융과
129	한국대부금협회	시단법인	서울 용구 소공동 117번지 한국YMCA 전속인합법당 202호	양복송	03.10.21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확립 및 제도조사, 연구와 이종자보호	3487-5800	서민금융과

## 금융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12.6월 기준)

순	단 체 명 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 된 사 업	연 락 처	비고
1	신용사회구현 시민연대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97-12 중추빌딩 B101호	류창엽, 김상현	02.10.1	신용관리교육 및 계몽, 채무 및 부채계획 상담등을 통해 개인의 신용회복 지원	02-322-5112	서민금융과
2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911-7 (6층)	권상오, 문호준	08.5.8	각종신용회복지원안내, 직업교육, 직업 알선 및 창업지원	032-361-1004	서민금융과
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33 증권거래소 별관11층	박승복	00.10.30	자본시장발전 및 제도개선, 상장회사 기 업내용 공시 및 IR 에 관한 사업	02-783- 6501	자본시장과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10. 녹색금융 실적 보고서

□ 정책금융기관\*은 대출 및 보증, 보험 제공, 투자의 형태로 '09년에서 '11년까지 녹색산업에 27.2조원 지원

\*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산은·기은은 녹색기업에게 2.1조원, 6.1조원의 여신 제공

○ 정금공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1.5조원의 자금지원

- 대출(특별렌딩 포함) 1.1조원, 녹색·신성장 분야 전문 펀드조성을 통해 녹색기업에 0.4조원의 투자 시행

○ 신·기보는 녹색기업에 11.6조원, 5.9조원의 우대보증\* 제공

\* 보증비율 상향조정(85→90%) 및 보증료 인하(0.2~0.5%p) 등 혜택 제공

#### < 정책금융기관별 녹색산업 자금지원 현황 >

(단위 : 조원)

정책금융기관	'09년	'10년	'11년	합계
산 은	0.7	0.6	0.8	2.1
기 은	1.2	2.3	2.6	6.1
정금공	-	0.7	0.8	1.5
신 보	2.6	3.6	5.4	11.6
기 보	1.7	1.8	2.4	5.9
합 계	6.2	9.0	12.0	27.2

□ 민간자금 유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 녹색·신성장 여신 담당자의 면책범위를 구체화(11.6월)  
하고, 녹색·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요건을 완화(11.3월)
- 녹색산업지수 개발(10.12월), 녹색경영공시제도 도입(11.1월)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11. 법률자문위원 자문료 지급 현황

□ 자문건당 2인의 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하며(자문결과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각 30만원의 자문료 지급

#### ○ 2011년도 자문료 지급 현황\*

\* '의뢰시점 당시 자문이 가능한 위원'을 섭외하므로 위원 1인당 자문건수 편차 발생

자문위원	지급액	지급사유
A	90만원 (30만원 × 3건)	예금자보호법 해석 등 법률자문 3건 실시
B	90만원 (30만원 × 3건)	은행법 해석 등 법률자문 3건 실시
C	60만원 (30만원 ×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해석 등 법률자문 2건 실시
D	240만원 (30만원 × 5건)	자본시장법 해석 등 법률자문 8건 실시
E	90만원 (30만원 × 3건)	은행업감독규정 해석 등 법률자문 3건 실시
F*	0원 (30만원 × 0건)	-
G*	90만원 (30만원 × 3건)	산은법 해석 등 법률자문 3건 실시
H*	30만원 (30만원 × 1건)	금산법 해석 법률자문 1건 실시

\* '11.8월 신규위촉 위원

o 2012년도 자문료 지급 현황

자문위원	지급액	지급사유
A	<b>90만원</b> (30만원 × 3건)	대부업법 해석 등 법률자문 3건 실시
B	<b>90만원</b> (30만원 × 3건)	보험업법 해석 등 법률자문 3건 실시
C	<b>30만원</b> (30만원 × 1건)	여전법 해석 법률자문 1건 실시
D	<b>120만원</b> (30만원 × 4건)	신협법 해석 등 법률자문 4건 실시
E	<b>60만원</b> (30만원 × 2건)	전자금융거래법 해석 등 법률자문 2건 실시
F*	<b>60만원</b> (30만원 × 2건)	금산법 해석 등 법률자문 2건 실시
G*	<b>150만원</b> (30만원 × 5건)	한국산업은행법 해석 등 법률자문 5건 실시
H*	<b>90만원</b> (30만원 × 3건)	은행법 해석 등 법률자문 3건 실시

\* '11.8월 신규위촉 위원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12. 최근 3년간 금융위가 금융권에 내린 지침  
내용(공문서 사본 포함)

☐ 금융위가 금융권에 내린 지침 없음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13.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작성 배포한 정책 Q&A  
자료

☐ 별도첨부

-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정책 Q&A
- ② 금융교육 관련 정책 Q&A
- ③ 대출모집인 관련 정책 Q&A

##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정책 Q&A

### 1.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할 필요성?

-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
  - 금융감독 기능이 건전성 감독 위주로 이루어져 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
- ⇒ 불완전 판매 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 제정 추진

### 2.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의 의의?

- ☐ 현행 업권별 규제는 해당 업권의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규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규제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곤란
- ⇒ “동일상품-동일규제”라는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의 판매행위 전반을 규율하므로 불완전판매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

### 3.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신설한 취지?

- ☐ 현재 대출모집인은 업권별 모범기준에 따라 개별 금융협회에 등록토록 하고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 모범기준에는 법적 효력이 없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및 책임확보가 곤란
- ⇒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다른 판매채널과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

#### 4.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 ☐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조정 과정 중 어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중지
  - 금융회사는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면 조정결과가 통보되기 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사례 발생
- \* (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하는 형태로 소송 제기
- ⇒ 재판청구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예 : 5백만원 이하)의 경우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를 금지

#### 5.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혜택?

- ☐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자적인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감독정책 전반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
- ☐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 강화를 토대로
  -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개선

## ② 금융교육 관련 정책 Q&A

### 1.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 표준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다수의 금융교육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교육 교재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권역별로 제한되어 있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등에 한계가 있어 금융생활 전반에 활용 가능하면서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성인용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2011년)부터 KDI와 공동으로 금융 소비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담은 성인용 교육 콘텐츠의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2. 금번 금융교육 표준 콘텐츠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 금융 전 분야에 걸쳐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은 ①금융회사 이용 및 저축하기 ②알면 유익한 금융제도 ③신용관리 및 대출과 상환 ④금융투자 및 연금 ⑤보험 ⑥재무설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 금번 개발한 금융교육 표준 콘텐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금번 콘텐츠는 일반 성인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하였으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각 금융교육 관련단체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금융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중(2012년) 금융교육 표준 콘텐츠를 web zine 형태로도 제작하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4. 금번 개발한 금융교육 표준 콘텐츠의 활용계획은?

- 금융교육 단체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 학습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고,

동 콘텐츠를 기반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 동영상 자료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향후, TV·라디오 방송용 자료로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5. 금융교육 콘텐츠의 추가 개발 계획은 없나요?

- 금융감독원에서 금년중(2012년)에 급격한 고령화 시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저축·소비, 금융상품 선택, 재무관리 요령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 ③ 대출모집인 관련 정책 Q&A

#### 1. 금번 구축한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은 어떻게 접속하나요?

- [www.loanconsultant.or.kr](http://www.loanconsultant.or.kr)로 직접 접속하거나 주요 포털에서 '대출모집인 조회' 검색하여 접속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 및 각 업권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링크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나요?

-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 모집인 이름 또는 등록번호를 검색하면 정상 등록된 모집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인 이용시 유의사항을 비롯하여 대체중개채널 등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권 및 대출종류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수수료율도 일괄조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3. 금번에 개정되는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 일부에서 저신용자, 급전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수수료 징구, 허위·과장광고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출모집인이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수취할 수 없음을 사전고지하고, 이를 안내장 등 광고물에 표기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설명·고지의무의 이행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수수료 감액·벌점 부과(누적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부과방안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규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4.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 대출모집인의 불법수수료 징구, 허위·과장광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센터 ☎ 1332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중개수수료 신고센터(<http://s119.fss.or.kr>)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대출모집인 외에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없나요?

- 서민금융길라잡이(<http://www.hopenet.or.kr>)를 통해 내게맞는 대출을 검색하거나,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 여신협회 대출직거래장터([www.directloan.or.kr](http://www.directloan.or.kr)) 등 저렴한 대체중개채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14. 최근 3년간 금융기관별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및 평가표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으나

○ 검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 9개 기관에 검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특정금융거래보고법 §11⑥)

○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이행실태 점검 등)을 하게 할 수 있음(시행령 §15⑤)

□ 다만,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는 검사업무 수행과 개별 금융회사의 대외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15. 최근 3년간 후원 및 협찬 현황/관련 규정**

☐ 해당사항 없음.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16. 자료제출요구서 - 임직원 행동강령

☐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 별도첨부

##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08.4.3  
금융위원회 훈령 제15호(개정 2009.2.1)  
금융위원회 훈령 제41호(개정 2012.7.9)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2.1)

차. 그 밖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09.2.1)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금융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09.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09.2.1)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2.1)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2.1)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

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금융회사 등과의 의사소통 등) 공무원은 회의소집·자료징구 등 금융회사 등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1)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1)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공무원이 정

책의 검토·수립 및 집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금융관련 정보로서 보도자료·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1)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등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9.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2.1)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2.1)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2.1, 2012.7.9)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2.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2.1)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  
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결  
혼·출산·돌·사망·회갑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알려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  
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개정 2009.2.1)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개정 2009.2.1)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품등을 주거나  
받아서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위원장 명의의 경조사 관련 금품등
4. 기타 위원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위원장은 이 영을 위반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授受)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정인사과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제6장 보 칙

제22조(교육) ① 위원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의 교육·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위원장은 이 영의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명서				
소명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비고				
<div style="text-align: center;"> 20 . . .  소명인 (서명) </div>				

〈별지 제2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고사항						
<input type="checkbox"/> 교육과정(강의)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input type="checkbox"/> 공청회 <input type="checkbox"/> 토론회 <input type="checkbox"/> 심포지엄 <input type="checkbox"/> 기타						
1.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2. 요청사유				3. 장소		
4. 일시				5. 대가		
※ 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 / 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생략)						
월별	월간 총횟수	월간 총시간	월간 총대가	비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20 . . .</span> <span>신고자</span> <span>(서명)</span> </div>						

[별표]

외부강의 · 회의 등 대가기준(제15조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장·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위원장) 300(부위원장)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300(위원장) 200(부위원장)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이며, 상한액 초과시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반환이 불가한 부득이 한 경우(사유서 제출) 기준 초과액을 불우이웃돕기(금융위 사랑봉사단 등)에 기부(영수증 첨부)

(별지 제3호서식)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사항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채권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차용금액 (이율)						
차용사유						
상환기일						
증거서류						
직무관련 여부 및 내용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대여						
대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대상물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거서류						
직무관련 여부 및 내용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신고 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신고 내용				
증거 서류				
비고				

(별지 제5호서식)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반환비용 산출내역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자료			
반환받는 사 랑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과의 관 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div style="text-align: center;">20 . . . .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청 구 인 (서명)</div>				

(별지 제6호서식)

[illegible]

(별지 제7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 일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피상담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담 내용				
상담 결과				
<div style="text-align: center;">           20 .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div>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17. 최근 3년간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햇살론 등 서민 금융지원기관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서

※ 현재까지 서민금융지원기관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금융위 자체적으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18. 김석동 위원장 취임사 및 취임이후 현재까지  
위원장이 발표한 (금융정책국 소관)금융정책  
및 추진현황/ 언론 인터뷰 자료 및 내외부  
기고문

☐ 별도제출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19.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현황 및 사유/징계 내역**

- ☐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현황 및  
사유/징계내역/처벌규정
- 해당사항 없음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20. 개인정보 파일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절차

#### 1. 벌칙규정

□ 금융권의 개인정보 파일관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고 있음

○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70조~제75조의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

\* 1. 벌 칙 :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과태료 : 사안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절차

□ (파기기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 보유기간 종료일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 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조 제1항)

□ (파기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파기기준에 따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시행 후, 그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조 제3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의무(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조 제4항, 제5항)

### 3.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현황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금융회사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을 부여(제63조 제1항, 제2항)

<p>자료제출 요구권 (제63조 제1항)</p>	<p>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p>
<p>검사권 (제63조 제2항)</p>	<p>1.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63조 제3항)

-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검사항목에 포함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금감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업무 일반에 대한 검사를 수행(제37조)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21. 금융권 대출광고 현황 및 대출광고 관련 규제 법률, 지침, 규정

#### 은 행 과

- ☐ 은행법(§52의3)상 은행은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에 관한 광고시 이자율의 범위 등의 상품의 내용을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표시해야 하며,
  - 이자율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이 금지됨
- ☐ 관련 규정은 별도첨부하였음

## <은행법상 광고 관련 조항>

### □ 은행법

제52조의3(광고) ① 은행은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이하 이 조에서 "은행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그 은행의 명칭, 은행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은행상품과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은행이 은행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의 구체적 내용, 광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광고) ① 은행은 법 제52조의3에 따라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
4.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② 은행은 은행상품의 광고내용 등 관련 기록을 해당 은행상품의

존속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광고내용 등 관련 기록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은행업감독규정

제90조(광고사항 등) ① 영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은행은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광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은행상품의 경우: 이자율, 가입조건, 그 밖에 은행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은행상품의 경우: 이자율, 부대비용, 그 밖에 은행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업무와 관련된 은행상품의 경우: 부대비용, 수익률 등 손익결정방법, 상품에 내재된 위험, 가입조건, 그 밖에 은행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문, 잡지 등 인쇄물에 의한 광고와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에 의한 광고의 경우 등 광고 게재면적 또는 광고시간의 제약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광고사항을 전부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략된 내용에 관하여는 제89조제3항에 따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반드시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은행은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해 또는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구체적인 근거없이 최고, 최상, 최저, 우리나라 처음, 당행만이 등 최상 또는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현
  2. 보장, 즉시, 확정 등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
  3.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거래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에도 확정적인 것으로 표시하거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4. 통화,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특정 지수의 변동에 의해 이자율 또는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자율 또는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5. 은행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 또는 편익보다 작게 표시하거나 편익만을 강조함으로써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표현
  6. 기타 해당 상품의 내용상 은행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왜곡, 과장, 누락 또는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
- ④ 영 제24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은행상품의 광고내용 등 관련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은 해당 은행상품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⑤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중소금융과

### 여신전문금융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9)에 광고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중

제50조의9(광고)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이하 이 조에서 "여신금융상품"이라 한다)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명칭
2.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3.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2.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3.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
4. 그 밖에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의 주요 내용,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호저축은행

□ 저축은행의 광고규제 및 사전광고 심사에 관한 규정 도입 추진 중 ('12.7월 법률안 국회 제출\*)

\* 제18대 국회에 기제출되었으나 폐기되어 금번 국회 재제출

- 저축은행 상품광고시 유의사항 규정(§18의5)
-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18의6)

### <'12.7.10 국회 제출 「상호저축은행법」 정부안>

제18조의5(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①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이하 이 조에서 “상호저축은행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칭, 상호저축은행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상품에 대한 거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여부,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을 광고에 명확히 표시하여 거래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광고의 사전심사) ① 상호저축은행은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고의 사전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의 주요 내용,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22. 가계부채 관련

-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고정금리로 전환한 서민가계의 피해 우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면? / 향후 검토예정인 정책적 지원방안

□ 고정금리 대출은 상환기간동안 금리변동이 있더라도 고정된 금리를 적용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금리부담을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최근 시중금리\*와 고정금리 대출 금리\*\* 하락으로 고정금리 차입자가 상대적으로 금리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으나,

\* 3년만기 국고채 금리 : ('09)4.04 ('10)3.72 ('11)3.62 ('12.5월)3.38

\*\* (예) 20년만기 일반보금자리론 금리

: ('09말)6.30 → ('10말)5.80 → ('11말)5.60 → ('12.5월)5.20

- 차입자의 부담은 금리하락기 뿐 아니라 금리 상승기를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을 두고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신 금리인하에 따른 이익은 포기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는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 금리 인하로 인한 불이익은 금리 상승기의 이자부담 감소로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한편 고정금리 차주의 경우 금리가 과도하게 하락시,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낮은 금리로 재대출이 가능하며,

\* 단,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 현재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운용\*되고 있어, 차입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 \* ① 상환기간동안 금리가 일정한 고정금리 상품
- ② 5년이상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는 고정금리 상품
- ③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상품
- ④ 일정액은 고정금리, 일정액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상품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23. 금융위 직원 외부 위탁교육현황(대학원 등) 및 교육비 지원현황(등록금 대비 지원액 등)

- ☐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운영 및 예산지원 하는  
국내대학원 석사(야간) 위탁과정을 통해 교육비 지원

< 08년 이후 국내대학원 석사(야간) 과정 이수 현황 >

선발 연도	과정명	선발 인원	등록금 (12년2학기기준)	지원액 (12년2학기기준)	비고
09년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1	6,459,000원 (10년2학기)	6,121,900원 (10년2학기)	기준금액* 이상 일정비율 본인부담
11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1	5,667,000원	5,352,800원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1	6,168,000원	5,623,700원	
12년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1	8,208,000원	5,000,000원	상한액** 이상 본인 부담

\* 기준금액 : 인문사회계열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공계열 서울대 보건대학원 등록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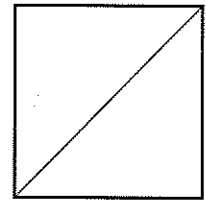
\*\* 상한액 : 인문사회계열 500만원, 이공계열 560만원(2012년)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24. 대유신소재의 스마트저축은행 인수 심사자료  
및 승인 내역 일체**

☐ 대유신소재의 스마트저축은행 인수 심사자료 및 승인내역을 별첨과 같이 첨부합니다.

별첨 : 대유신소재의 스마트저축은행 인수 심사자료 1부. 끝.



議案番號	第 號
議 決 年 月 日	2010. 6. 23 (第 11 次)

議  
決  
事  
項

(주)대유신소재 및 (주)◆◆◆의  
(광주)창업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金融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陳 棟 洙
提出年月日	2010. 6. 23

## 1. 의결주문

(주)대유신소재 및 (주)◆◆◆의 창업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각각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주)대유신소재 및 (주)◆◆◆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고 있는 창업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동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외 지역에 지점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주식 취득 승인을 신청해 온 바,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승인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별표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1조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반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주)대유신소재 및 (주)◆◆◆의 창업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붙임 1) 참조

-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별표2]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의2 및 제21조

나. 관계부처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검토의견 : (붙임 2) 참조

(별지 1)

## (주)대유신소재의 창업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

---

(주)대유신소재의 창업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 신청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 다 음 -

가. 상 호 : 주식회사 대유신소재

나. 대 표 : ○○○○

다.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7

라. 취득 대상회사 : 창업상호저축은행

마. 취득 주식수 : 1,000,000주(지분율 45.09%)

바. 취득 승인일 : 2010년 6월 23일

(별지 2)

(주)◆◆◆의  
창업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

---

(주)◆◆◆의 창업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 신청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 다 음 -

가. 상 호 : 주식회사 ◆◆◆

나. 대 표 : □□□

다.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825

라. 취득 대상회사 : 창업상호저축은행

마. 취득 주식수 : 400,000주(지분율 18.04%)

바. 취득 승인일 : 2010년 6월 23일

(붙임 1)

## 관 계 법 규

###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0조의2 (신고사항 등) ①~③ (생략)

④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양수(실질적으로 당해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중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⑦ (생략)

⑧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와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제5조의2 (지점등의 영업구역 외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최대주주가 속한 상호저축은행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2. 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결과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여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예금자의 권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

② 제1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서 대주주가 되려는 자와 최대주주가 공동으로 주식의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조제3항에서 "취득등" 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승인 요건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의 취득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증자 자금을 확보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다만,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자의 건전한 재무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는 면제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증자 자금은 차입자금이 아닐 것
3. 주식의 취득등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금(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달성에 필요한 인수 및 증자자금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주식의 취득등을 하려는 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144조의9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과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의 자기자본금(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각각 출자지분 해당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 제7조 (대주주의 범위) ① (생략)

②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각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자체 정상화를 위한 증자를 포함한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 나목.라목 및 제2호가목.나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요건은 제외한다.

[별표 2]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요 건
<p>1. 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등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기관인 경우</p>	<p>가.~나. (생 략)</p> <p>다.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p> <p>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3.~5. (생 략)</p>	<p>(생 략)</p>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14조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심사기준) ①~③(생략)

④시행령 [별표 1]에서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나목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기업경영분석중 중분류에 의한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비율 이하를 말한다.

⑤시행령 [별표 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 차입금을 포함하여 차입계약에 의한 모든 차입자금을 말한다. 다만 예금담보차입금과 같이 자기자금에 의하여 즉시상환이 가능한 차입자금은 제외한다.

⑥시행령 [별표 1]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 함은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제외)를 말하며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⑦~⑧ (생략)

제18조의2 (영업구역 외 지점등 설치) ①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2.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신청일로부터 직전 2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다만,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증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8%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그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호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정·타당한 증자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5%를 말한다.

③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

④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각각 인수 및 증자자금의 합계액의 3배 및 출자지분 해당액의 3배를 말한다.

**제21조 (주식취득등 승인)** ①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식의 취득등을 완료하고 당해 저축은행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으로부터 그 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행령 [별표 2]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위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 취득이후 동 상호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연결기준으로 7%이상이거나 일정기간 내에 7%이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④제14조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은 주식취득등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적기시정조치) 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 9. (생략)

② (생략)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붙임 2)

## (주)대유신소재 및 (주)◆◆◆의 (광주)창업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검토의견

### I. 신청개요

□ (주)대유신소재<sup>1)</sup> 및 (주)◆◆◆<sup>2)</sup>는 현재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어 있는 저축은행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최대주주 변경시 영업구역외 지점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광주)창업상호저축은행<sup>3)</sup>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하여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에 주식 취득 승인을 신청('10.5.25.)

1) '67.12.30 설립, 유가증권 상장, (주)△△△ 및 특수관계인 43.3%, '09.12말 현재 총자산 1,283억원, 자기자본 604억원, 납입자본금 272억원, 당기순이익 62억원

2) '60. 1.16 설립, 유가증권 상장, (주)△△△ 및 특수관계인 47.4%, '09.12말 현재 총자산 904억원, 자기자본 375억원, 납입자본금 251억원, 당기순이익 △34억원

3) '10.3.말 현재 총자산 2,421억원, BIS비율 △2.67%, 자기자본 △51억원

### <주식취득 승인 신청내용>

- 취득 예정 주식수 : 1,40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63.13%)
- 취득 예정 금액 : 총 140억원(주당 10,000원)
- 취득 방법 :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 인수
- 본건 취득후 추가증자 : 100억원(BIS비율 8%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금액)

### 창업상호저축은행의 지분변동계획

(단위: 주, %)

본건 취득 前			본건 취득 後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XXX, 000	374,066	45.75	XXX, 000	374,066	16.87
기타(□□□등)	443,594	54.25	기타(□□□등)	443,594	20.00
			(주)대유신소재	1,000,000	45.09
			(주)◆◆◆	400,000	18.04
합계	817,660	100.00	합계	2,217,660	100.00

## II. 승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이번 (주)대유신소재 및 (주)◆◆◆의 주식취득 승인신청은 영업구역 외의 지역에 지점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적기시정조치 유예중인 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것이므로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상의 인수자별 승인요건(시행령 별표2) 중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요건”과
- 영업구역 외 지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승인요건(시행령제5조의2 제2항)을 모두 심사

### ① 시행령 별표2 대주주 요건(대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충족 여부

1. 부채비율을 충족할 것. 한편,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은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부실기관의 정리(자체 정상화 포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감독원장 또는 예보사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요건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

-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다만, 200%초과~300%이하 구간에서는 당해법인의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 이내일 것

☐ 대유신소재 112.4%(≤200%)

☐ ◆◆◆ 268.1%(≥200%,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 123%)

- ◆◆◆의 '09년말 부채비율은 141.1%이나, 동사가 '10.3.23 △△△의 영업을 양수하여 경제적 실질이 변경되었으므로 심사기준을 최근 사업연도말 보다는 최근 분기말 현재의 부채비율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0.3월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심사한 결과 200% 및 동종업종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한편, 이번 주식취득 승인신청은 금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유예('10.5.26. 9차 금융위)된 창업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것으로

- ◆◆◆ 및 대유신소재는 동 저축은행에 '10.6월말 이전에 신규주식 취득(140억원) 및 추가증자(100억원) 등 총 240억원의 증자를 통해 경영을 정상화(BIS비율  $\Delta 2.67\% \rightarrow 10.44\%$ ) 시킬 계획인 점을 감안하여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요건의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

⇒ 요건 충족(◆◆◆는 요건적용 제외)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집단 및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 200% 이하일 것

- 해당사항 없음

⇒ 요건 충족

2. 인수자금이 자기자금일 것

- 신주인수자금 140억원 모두 승인신청자가 영업활동 등으로 조달한 자기자금인 것으로 확인

- 대유신소재(매출 80억원, 국세환급액 등 20억원), ◆◆◆(매출 40억원)

⇒ 요건 충족

3.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결과 해당사실 없음

⇒ 요건 충족

- (2) 최근 5년간 상호저축은행법령,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공정위, 검찰청 조회결과 해당사실 없음

⇒ 요건 충족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금감원이 확인결과 해당사실 없음

⇒ 요건 충족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3년간 기관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의미. 다만, 기관경고를 받은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 금감원이 확인결과 해당사실 없음

⇒ 요건 충족

**② 시행령 제5조의2 '지점등의 영업구역의 설치' 요건 충족 여부**

1.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적기시정 조치를 받거나 유예받은 저축은행 또는 금감원 검사 결과 재무상태가 금산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할 것이 명백하여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예금자 권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축은행에 해당하고,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직전 2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없을 것

□ 피인수자인 창업저축은행은 '09.12.말 현재 BIS비율이 △2.96%로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금산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0.5.26 금융위로부터 동 조치를 유예받았음

- 동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직전 2년간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없음

⇒ 요건 충족

2.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을 8% 이상(최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1년 이내에 BIS비율 8%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정·타당한 증자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BIS비율 5%)으로 개선 가능한 증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다만, 인수자가 은행, 증권, 보험회사, 저축은행 및 금융기관이 업무집행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치의무 면제

BIS비율 5%이상 달성을 위하여 총 140억원(대유신소재 100억원, ◆◆◆ 40억원)의 증자자금을 예치	
※ 140억원 증자로 '10.3말 현재 BIS비율은 5.62%로 상승	
대유 신소재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
◆◆◆	국민은행 및 광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

※ 대유신소재는 이와 아울러 BIS비율 8%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정·타당한 증자(100억원)계획을 제출(증자완료시 BIS비율은 10.44%로 상승)

⇒ 요건 충족

### 3. 증자자금이 자기자금일 것

□ 증자자금 140억원 모두 승인신청자가 영업활동 등으로 조달한 자기자금인 것으로 확인

◦ 대유신소재(매출 80억원, 국세환급액 등 20억원), ◆◆◆(매출 40억원)

⇒ 요건 충족

### 4.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자기자본이 재무건전성(BIS비율 5%) 달성에 필요한 인수 및 증자자금의 3배 이상일 것

대유 신소재	'10.3월말 자기자본이 616억원으로 인수 및 증자자금의 합계액(100억원)의 3배(300억원) 이상
◆◆◆	'10.3월말 자기자본이 414억원으로 인수 및 증자자금의 합계액(40억원)의 3배(120억원) 이상

⇒ 요건 충족

### III. 종합의견

□ 이번 (주)대유신소재 및 (주)◆◆◆의 (광주)창업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은

- 상호저축은행법령에서 정한 제반 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 승인후 창업저축은행에 신주인수 및 추가증자를 통하여 총 240억원을 증자할 계획으로 있어 동 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BIS비율  $\Delta$  2.67%  $\rightarrow$  10.44%)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신청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함

※ 경영권 이전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위 승인 이후 감독관을 파견하고 있으나, 창업저축은행은 경영개선명령 대상 저축은행으로서 M&A 등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부실방지를 위하여 감독관 파견 조치 완료('10.4.12)하였고 일정기간(예: 한달) 상주예정

(참고 1)

## (주)대유신소재

### 1. 주요 현황

('09.12월말 현재)

총자산	1,283억원 (1,356억원)*	부채	679억원(740억원)*
		자기자본	604억원(616억원)*
납입자본금	272억원(272억원)*	당기순이익	62억원(6억원)*
주요주주	(주)△△△ 및 특수관계인(43.3%)		
설립일, 대표	1967.12.30., ○○○○ 대표이사		
업종	자동차 알루미늄휠 및 스티어링휠 제조업		
본점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7		

\*10.3월말 기준

### 2. 주요 연혁

1967.12.30	산선공업(주) 설립
1975. 6. 9	증권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1997.10. 1	(주)두레에어메탈로 상호변경
1998. 8.14	회사정리절차개시
2003.12.20	회사정리절차 종결
2005. 4. 1	(주)성용하이메탈로 상호변경
2006. 1.26	(주)대우엠텍으로 상호변경
2006. 5.16	(주)엠앤에스로 상호변경
2006. 6.19	(주)대유에스텍을 흡수합병
2006. 6.27	(주)대유신소재로 상호변경

(참고 2)

## (주)◆◆◆

### 1. 주요 현황

('09.12월말 현재)

총자산	904억원 (1,526억원)*	부채	529억원(1,112억원)*
		자기자본	375억원(414억원)*
납입자본금	251억원(251억원)*	당기순이익	△34억원(11억원)*
주요주주	(주)△△△ 및 특수관계인(47.4%)		
설립일, 대표	1960.1.16., □□□ 대표이사		
업종	자동차시트, 알루미늄 휠의 원재료인 Ingot, 태양광모듈 제조업		
본점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825		

\*10.3월말 기준

### 2. 주요 연혁

- 1960. 1.16    ▣▣▣(주) 설립
- 1967. 2. 1    ▤▤▤(주)로 상호변경
- 1977. 1.28    증권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 2002. 3.29    (주)◎◎◎으로 상호변경
- 2003. 8.23    최대주주가 (주)△△△ 등으로 변경
- 2003.12. 3    (주)◆◆◆로 상호변경
- 2004. 4.14    자동차부품 제조업 개시
- 2006. 5.29    광전송장비 연구,개발 및 판매업 영위 (주)◆◆◆ 흡수합병
- 2009. 5. 6    태양광발전모듈 신규투자 결정
- 2010. 3.23    (주)△△△의 자동차부품 제조부문 등 영업양수

(참고 2)

## (광주)창업상호저축은행 현황

### 1. 일반현황

- ☐ 대표이사 : XXX
- ☐ 임직원수 : 57명(임원 4, 직원 53)
- ☐ 설 립 일 : '72.10.26
- ☐ 대 주 주 : XXX 및 특수관계인(45.75%)
- ☐ 본점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4가 53번지
- ☐ 지 점 : 1개(광산동)

### 2. 주요 재무·손익현황

(단위 : 억원, %)

	'09.6월 말	'09.12월 말	'10.3월 말	추정재무현황	
				'11.6월 말	'12.6월 말
총자산	2,547	2,859	2,421	2,732	3,554
수 신	2,338	2,695	2,392	2,371	3,141
여 신	2,055	2,383	1,977	2,507	3,314
고 정이하여신	520	587	592	200	134
비 율	25.29	24.63	29.94	7.98	4.05
자기자본	111	△61	△51	181	232
납입자본금	82	82	82	452	452
당기순이익	△28	△169	△162	△87	51
BIS비율	6.13	△2.96	△2.67	12.52	11.84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25. 휴면카드 감축 방안 및 카드 과당경쟁 대응방안

☐ 질의하신 것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11.12.26일)을 마련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 ※ 별첨 1.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보도자료(11.12.26일)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규정안(12.4.18일)  
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일부개정안(12.7.18일)

<별첨 1>

 금융위원회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p style="text-align: center;">2011. 12. 26(월) 14:00부터 보도 가능</p>		 금융감독원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감독국		
책 임 자	성대규 과장(2156-9810) 이익중 국장(3145-8160)	담 당 자	김정주 사무관 (2156-9815) 최성규 사무관(2156-9821) 이준수 팀 장(3145-8162) 홍경표 팀 장(3145-8770)
배 포 일	2011. 12. 26(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8) 총 40매

## 제 목 :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신용카드의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직불형 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 (주요 내용)

#### ① 신용카드 발급기준의 합리화

-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성년자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일정한 신용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토록 함

#### ②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의 합리화

-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정하게 책정토록 함

\*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예정

③ 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권유 영업 행위를 제한함

④ 휴면 신용카드 정리 및 해지절차 개선

- '12.1.1~3.31을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카드사 자율적으로 회원의 동의를 받아 휴면 신용카드를 정리토록 함

-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사용정지 조치하고, 이 후 3개월 경과 시까지도 사용정지 해제신청이 없으면 해지 조치토록 함

⑤ 연체 없는 회원은 언제든지 쉽게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의 부당한 해지 지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⑥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 카드사가 부당하게 부가서비스 제공 약속을 변경·중단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함

- 카드사의 부당한 회원 모집행위 성격의 부가서비스 제공행위를 규제함

## ⑦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

- 카드업계 스스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유도 하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함

## ⑧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하는 내용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함

## ⑨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앞으로 5년 내에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임
- (소비자)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형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 유도 등 직불형 카드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카드사·은행) 직불형 카드 영업에 적극 임하도록 전업 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은행의 IC직불카드 및 모바일 직불형 카드가 보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가맹점) 고객에게 직불형 카드 결제를 적극 권고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토록 유도함

## 10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운동 등 전개

-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의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운영함
- 소비자단체, 가맹점단체 등과 협조하여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 이용을 권장하는 사회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

◇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임

※ 별첨 :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2011년 12월 26일(월)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카드결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

2011. 12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 목 차

### I. 추진배경

### II.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방안

1.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
2. 휴면 신용카드 감축 및 신규발생 억제
3.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4.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제고
5.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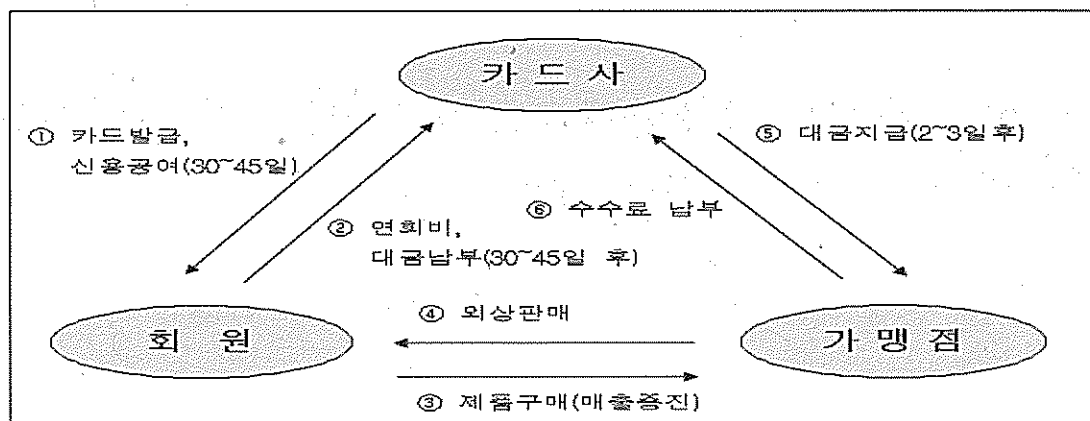
### III. 추진계획

□ 신용카드시장은 카드사-회원-가맹점의 3거래당사자가 신용카드를 매개로 상호이익\*을 증진하려는 데서 성립

\* (카드사) 회원에 대한 신용공여를 통해 가맹점의 매출증진 등에 기여한 대가로 수수료 수입 확보

\* (회 원) 연회비를 부담하는 대신 이자부담 없이 통상 30~45일의 외상구매 가능

\* (가맹점) 신용카드를 통한 외상구매로 매출이 늘어나고, 통상 2~3일내에 외상판매대금 회수



□ 신용카드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경우, 거래당사자의 이익증진은 물론 이용 편의성, 거래의 투명성 등 국민경제에 순기능

□ 그러나,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카드 남발 및 남용,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유발

○ 특히, 최근에는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심화

→ 신용카드시장이 안고 있는 당면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

-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외국과는 달리 예금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직불형 카드보다는 외상으로 구매하는 신용카드 중심의 카드결제 관행이 형성

< 주요국의 신용·직불형 카드 이용비중 >

(%, 2009년, 이용액 기준)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직불형카드*	42.3	74.4	92.7	9.0
신용카드	57.7	25.6	7.3	91.0

\* 비밀번호 입력 방식의 직불카드 + 서명방식의 체크카드

\* 미국의 경우 개인수표 사용으로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개인수표가 직불형 카드로 대체되면서 꾸준히 증가 추세

-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관행은 외상구매라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높은 사회적 비용 유발

○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은 가계 빚 증가로 귀결

○ 신용카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지급결제수단이기 때문에 직불형 카드에 비해 높은 가맹점 수수료가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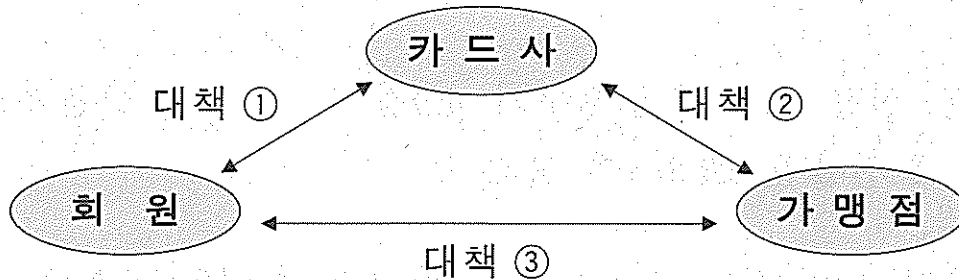
\* ①30~45일간의 신용공여(외상거래)에 따른 이자비용, ②연체발생에 따른 대손비용, ③채권추심비용, ④카드전표 회수·보관비용 등

→ 이러한 점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가맹점 수수료율이 직불형 카드는 1~1.5% 내외인 반면, 신용카드는 2% 내외를 유지

→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카드결제관행을 “신용카드 중심”에서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이 긴급

## 〈 기 본 방 향 〉

## ① 신용카드시장의 거래당사자간 당면 문제점을 해소



	문 제 점	대 책
①카드사와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카드빚, 과소비 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li> <li>○ 휴면카드 정리</li> <li>○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li> </ul>
②카드사와 가맹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합리한 수수료율 적용</li> <li>○ 불공정한 계약거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li> <li>○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li> </ul>
③회원과 가맹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수납제도로 인한 가맹점의 부담 가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 검토</li> </ul>

## ② 지급결제의 편의성을 확보하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가계부채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직불형 카드 제도를 개혁

# 1.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

◇ 신용카드 발급기준과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합리화하여 과도한 신용카드의 사용을 억제

## 가. 현황 및 문제점

□ 1인당 신용카드 보유매수가 4.9장에 이르고, 신용카드 이용 한도 소진율은 21.4%에 불과

○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용카드 발급은 큰 폭의 증가 추세

< 신용카드 주요 지표 >

	'08년	'09년	'10년	'11.9말
민간최종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비중(%)	49.7	52.8	57.0	61.3
신용카드 발급 수(만매) < 무실적 카드 >	9,624 <2,572>	10,699 <3,062>	11,659 <3,129>	12,253 <3,218>
1인당 신용카드 보유수(매)	3.7	4.0	4.4	4.9
카드 1장당 평균 이용한도 금액 (이용잔액 보유회원 기준, 백만원)	5.4	5.3	5.6	5.5
카드 이용한도 대비 소진율(%)	20.9	21.0	21.4	21.4

□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 발생

○ 가계부채 부담 가중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

○ 가맹점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귀결되어 사회갈등 유발

## 나. 개선방안

### 1 카드 발급기준의 합리화

#### 신용카드

□ 신용카드는 세 가지 기본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발급토록 함

#### ① 발급신청일 현재 민법상의 성년자일 것

\*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복지카드 발급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 인정

#### ②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을 것

\* (예) 소득금액-부채원리금 상환액

- 결제능력은 원칙적으로 신청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되, 카드사 자체 확인만으로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예) 공공기관, 법인인 기업체 등에 재직하여 재직여부 확인 등을 통해 소득 파악이 가능하고,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부채 파악이 가능하여 일정한 가처분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 등

-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추정 또는 의제 소득을 통해 결제능력 심사 가능

\* (예) 국민연금 납입 여부,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 소득 여부 등으로 의제

#### ③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최소 1개 CB사)일 것

- 다만 소득·재산 등을 감안하여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직불형 카드

□ 신용카드와 달리 기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예금계좌가 있는 사람은 발급 가능

○ 성년 여부, 결제능력 여부, 신용등급 여부에 관계없이 발급

→ 미성년자 등은 가족(신용)카드나 앞으로 혜택이 크게 증가할 직불형 카드를 이용하도록 권장

▶ 필요조치 :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 등

※ 관련 법규 시행일 이후 신규 발급 카드부터 적용하며, 기존 발급된 카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 2 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의 합리화

### 신용카드

□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 책정시 두 가지 사항을 준수토록 함

①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책정할 것

-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증액 신청토록 권유하는 행위 불가

②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관련 심사기록 등을 보관할 것

※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 직불형 카드

- ☐ 신용카드와 달리 이용한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회원 본인의 예금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필요조치 :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및 모범규준 제정

※ 관련법규 시행일 이후 신규발급 카드부터 적용하고, 기존 카드는 갱신시부터 적용

### 8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 제한

- ☐ 회원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 권유 영업행위\*를 제한

\* 전화, 메시지, 이메일, 방문 등

- 회원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카드사의 영업행위를 수용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회원의 선택란 명기

- 수용의사를 표명한 회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이용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를 허용

- ☐ 불완전 판매 등으로 민원이 많은 전화마케팅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 '11.1/4분기 중 카드사(검정은행 포함)의 전화마케팅 일평균 통화건수 : 48만 3,755건

▶ 필요조치 :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 및 모범규준 제정 등

※ 기존 카드는 갱신 발급시 회원의 의사를 확인토록 하되, 그 이전이라도 회원이 카드사에 의사 표명시 카드사는 이를 수용토록 함

## 2. 휴면 신용카드 감축 및 신규발생 억제

### ◇ 휴면 신용카드를 대폭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

#### 가. 현황 및 문제점

- 발급된 신용카드 4장 중 1장 이상이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이며, 매년 증가 추세

< 연도별 휴면 신용카드 수 >

	'08년	'09년	'10년	'11.9월
휴면카드 수 (만매)	2,572	3,062	3,129	3,218
휴면카드 비중 (%)	26.7	28.6	26.8	26.3

- 휴면카드의 증가를 방지할 경우, 자원낭비 등 부작용 심화

- ① 카드 1장당 평균 3.6만원의 발급비용 낭비
- ② 분실·도난 등 카드사고 위험을 높여 회원 및 카드사의 손실 초래
- ③ 국제브랜드사에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 등

#### 나. 개선방안

##### 1 휴면 신용카드 일제 정리

- '12.1.1 ~ '12.3.31까지를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현행 신용카드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카드사 자율적으로 휴면카드를 정리토록 함

- \* (현행약관의 절차) 1년 이상 미사용 카드는 1년 경과 후 3개월 내에 서면 등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확인하고,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에 해지

▶ 필요조치 : 행정지도

## 2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 개선

□ 카드사의 휴면카드 해지를 용이하게 하고 그 이행의무도 강화

- ① 1년 이상 미사용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서면, 이메일 등으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 확인
- ② 회원이 서면 등으로 1개월 내에 계약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즉시 사용정지 조치
-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즉시 해지 조치

\* (현행) 3개월내 해지의사 확인, 서면 등으로 해지의사 밝힌 경우에 한하여 해지

- ③ 사용정지 조치 후, 다시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으로부터 서면 등을 통한 사용정지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즉시 계약을 해지

→ 약 1년 4~5개월 간 미사용 신용카드는 자동 해지되는 효과

▶ 필요조치 : 여전업법 시행령 및 표준약관 개정

### 3 휴면 신용카드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 카드사별로 자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휴면카드 해지절차 및 휴면카드 현황(비율, 증가 추이 등) 등을 상시 공시
- 금감원 검사 시, 카드사들이 휴면카드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중점 검사
  - 휴면카드 비율이 높은 카드사는 무리한 카드발급 가능성이 큰 회사로 간주하고 카드발급 실태 등을 중점 점검

▶ 필요조치 :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 및 금감원 검사

### 4 신용카드 해지 편의성 제고

- 연체 없는 회원은 인터넷(카드사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연체 없는 회원이 신용카드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이를 즉시 이행토록 의무화
- 카드사의 부당한 해지지연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 강화
  - \* 해지를 연기·포기시킬 목적의 상품설명, 추가 혜택 약속 등
  - 금감원 등을 통해 부당한 신용카드 해지 지연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

▶ 필요조치 : 행정지도,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금감원 검사 등

### 3.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 카드사의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을 개선하여 회원의 권익을 제고

#### 가. 현황 및 문제점

- 카드사들이 회원확보 및 카드사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경쟁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
  - 이 과정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성격의 부가서비스 제공행위도 출현

< 연도별 부가서비스\* 제공금액 >

(단위 : 억원)

'07	'08	'09	'10	'11.上
17,794	22,633	24,158	30,950	17,594

\* 포인트적립, 항공마일리지, 할인서비스, 무이자할부

-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은 궁극적으로 회원·가맹점·카드사 모두에게 부작용 유발
  - (회원) 당장에는 혜택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카드 과다발급 및 남용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여 카드 빚, 과소비에 따른 고통 초래
  - (가맹점) 높은 수수료를 유지의 원인으로 작용
  - (카드사)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경영악화로 이어질 우려

## 나. 개선방안

### 1 부가서비스 제공 약속 이행에 대한 감독 강화

□ 카드사가 카드발급 시 회원에게 약속한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중단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

\* (예) : 신규 카드 발급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1년 경과 후 변경시 6개월 전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 미준수 행위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 미 이행 카드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

○ 특히, 부가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 사용실적 등을 회원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 필요조치 : 금감원 상시 감시,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등

### 2 부당한 카드회원 모집행위 성격의 부가서비스 제공행위 규제

□ 충동적 카드발급을 유도하는 부가서비스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카드회원 모집행위로서 제재

① 다수의 고객이 준수하기 어려운 조건 등을 내걸고 파격적인 부가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② 회원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수준\*의 선포인트를 제공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회원의 가처분 소득, 이용한도, 이미 제공받고 있는 선포인트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카드사별 선포인트 제공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추진

### ③ 경품제공 금지규정\*을 일탈하는 성격\*\*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집행위 금지(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 (예) 사실상 신용카드 사용에 관계없이 신규가입 회원에 한하여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사례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모범규준」에 반영

▶ 필요조치 : 여전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등

### 3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 카드사에 대한 감독 강화

□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이 일정수준(예: 20~25%)\*을 초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무리한 외형위주의 경영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간주하고 금감원 특별검사 등 감독 강화

\* 선발·후발사간 또는 전년도 실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 운용

▶ 필요조치 : 행정지도 및 금감원 검사

### 4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 카드 회원이 여러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신금융협회에 구축

→ 회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포인트를 활용한 기부를 활성화

▶ 필요조치 : 행정지도

## 4.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제고

◇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

### 가.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카드사들이 회원 확보 경쟁에 치중하면서 가맹점의 권익보호에는 소홀

○ 회원 확보를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 노력 등은 미흡

\* (전업카드사 및 주요 겸영은행 기준) '10년중 4조 3,349억원, '11년 상반기중 2조 4,989억원

○ 회원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반면,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별로 개별 약관 운용

□ 이에 따라,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가맹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불만 야기

○ 카드업 출범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업종별 차등 수수료율 체계가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는 비판

○ 카드사별 개별 약관이 카드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맹점의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제약

\* (예) 신용판매대금 지급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카드사 임의로 조정 가능,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가맹점의 귀책사유를 과도하게 규정

## 나. 개선방안

### 1 가맹점 수수료를 체계의 개선

□ 2007년 이후 카드업계는 총 6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하였지만, 가맹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

\* 지난 10.17일 발표한 “연매출 2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 계획 포함

○ 특히, 업종별 차등 수수료를 적용 및 대형점에 비해 중소형점이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는데 대한 불만 확산

□ 따라서, 신용카드 대신 낮은 수수료를 적용이 가능한 직불형 카드로 결제관행을 바꾸는 근본대책과 함께

○ 우선적으로 현행 불합리한 수수료를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카드업계 스스로 마련토록 함

#### ▶ 개선방향 (예시)

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

② 수수료를 체계를 합리화

- 업종별 수수료를 체계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를 체계로 전환
-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대폭 축소

③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 유지

- 수수료를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연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은 1.8%이하 또는 대형 할인매장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 원칙 견지

### ▶ 추진방법

- 카드업계 스스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

\*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연구원에 개선방안을 연구의뢰('11.6)한데 이어, '12.1월초까지 카드업계 공동으로 다른 전문기관에 추가 연구의뢰 계획

### ▶ 추진일정 (예시)

- '12.1/4분기 중 연구결과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목표

## 2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제정

### ① 가맹점 가입신청 후 철회 및 계약 해지권 부여

- 아울러, 수수료를 조회시스템 구축, 가맹점 가입 확정 전 적용 예정 수수료를 통보 등을 통해 가맹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판매대금 지급 시한을 명시(예 :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일 이내)

### ③ 신용판매대금 지급 보류 사유를 최소화\*하고,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에도 대금지급 보류기간을 최장 10일로 제한

\* (예시) 가맹점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부도 발생한 경우, 회원과의 분쟁 발생한 경우 등

④ 카드사가 가맹점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전  
통보 의무화(수수료를 인상 시에는 1개월 전에 서면 통보)

⑤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신용판매대금 지급 지연 시 카드사의  
배상 책임 명시

▶ 필요조치 : 표준약관 승인

### **3 가맹점별 수수료를 조회시스템 구축**

□ 가맹점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카드사별 수수료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신금융협회 내에 구축

▶ 필요조치 : 행정지도

### **4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실태 점검**

□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을 강화

○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를 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여 시정

□ 금감원 내에 부당한 수수료를 적용 등 가맹점의 제반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신고센터를 운용

▶ 필요조치 : 금감원 점검 및 신고센터 운용

## 5.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이 5년 내(2016년 까지)에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

### 가. 활성화를 위한 조건

□ 직불형 카드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 카드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3거래당사자(회원, 카드사, 가맹점)가 적극적으로 직불형 카드를 이용·발급·수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 정부 관련부처와 사회 각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

회 원 (소비자)	- 직불형 카드의 장점을 인식하고 신용카드에 우선하는 결제수단으로 이용
가맹점 · VAN사	- 직불형 카드 수납이 가능한 단말기 및 프로그램 설치 -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고객에게 직불형 카드 결제 권장 및 가맹점 차원의 혜택부여 노력
카드사 · 은 행	- 직불형 카드를 수납하는 충분한 가맹점 확보 노력 - 직불형 카드를 기피하는 영업전략을 탈피하고, 직불형 카드상품 적극 취급
정 부	- 직불형 카드의 편의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선도 - 소득공제 등 직불형 카드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NGO 등	-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직불형 카드 사용 운동 전개

## 나. 활성화 방안

### 1 회원(소비자) - 직불형 카드 이용 유도

#### 1 직불형 카드 이용 편의성 제고

##### ① 24시간 결제가능 시스템 구축

- 모든 유형의 직불형 카드가 24시간 사용이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

##### ② 신용카드 수준의 가맹점 확보

- 대다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직불형 카드의 사용이 가능토록 단말기 보급 및 프로그램 설치 추진

##### ③ 다양한 유형의 직불(체크)·신용 겸용카드 발급 유도

- 직불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의 선호 또는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겸용카드\* 발급 유도

\* (예시)

- (i) 직불+신용 겸용카드(1) : 결제기능이 자동으로 직불→신용결제 순서로 수행되는 카드
- (ii) 직불+신용 겸용카드(2) : 소비자가 결제할 때마다 직불·신용결제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
- (iii) 직불+소액신용 겸용카드 : 직불 위주로 결제하되, 소액(예: 10만원) 범위 내에서만 후불 신용결제가 가능한 카드(교통카드 활용 편의성 제고)
- (iv) 직불+선불 겸용카드 : 직불위주로 결제하되, 선불 교통카드 기능 등도 수행 가능한 카드

※ 기존 신용카드 회원이 겸용카드로 대체(또는 직불기능 추가) 발급 요청시 카드사가 수용토록 함

## ② 직불형 카드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① 신용카드와의 소득공제 차등 폭 확대

- 내년부터 적용될 소득공제율 인상\* 효과를 보면서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

\* 2012년부터 소득공제율 차등폭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할 예정  
(신용 20%, 직불 25% → 신용 20%, 직불 30%)

### ② 가맹점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여건 조성

-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직불형 카드 결제고객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예) 할인판매, 무료서비스, 경품(덤) 지급, 추가 포인트 적립 등

\*\* (예) 직불형 카드 수수료를 인하, 여전업법에 근거 마련 검토 등

### ③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 토록 유도(p21, 22 참조)

### ④ 직불형 카드 이용실적을 개인신용등급 산정시 반영

- 1차적으로 직불형 카드 이용 기간 및 실적을 가점요인으로 반영
- 직불형 카드 이용 고객이 불량률(연체율)이 낮다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입증되는 대로 반영비중을 확대

▶ 필요조치 : 관계기관 협의, 여전업법 개정 검토, 행정지도 등

## 2 전업카드사·은행 - 적극적인 직불형 카드 영업 유도

### 1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보급 애로요인 해소

#### ① 전업카드사의 은행 계좌이용 허용

- 전업카드사가 체크카드 발급을 목적으로 은행 등 수신 금융기관에 계좌이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토록 권고

\* 금융기관 결제계좌의 사회 인프라적 성격을 감안

#### ② 은행 계좌이용 수수료 인하

- 직불형 카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은행의 공익적 기능 등을 감안, 실비 보전이 가능한 수준에서 계좌이용 수수료가 책정되도록 유도

\* 계좌이용 수수료 인하로 인한 비용절감분을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체크카드 회원에 대한 혜택 제고 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

### 2 은행의 IC직불카드 보급

- 비밀번호 입력방식의 IC직불카드\*를 적극 보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현재 1억장 가량이 보급된 “현금IC카드”에 직불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카드로 과거 MS(Magnetic Stripe)식 직불카드에 비해 보안성이 강화된 새로운 방식의 직불카드

- 금융결제원과 은행, 가맹점간 관련 전산망 구축 및 IC카드용 단말기 설치 가맹점 확대

### ③ 모바일 직불형 카드의 보급

- 앞으로 사용이 증가될 모바일 카드를 우리나라 결제관행을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활용
- 원칙적으로 모든 모바일 카드에 직불결제기능 탑재 유도
- 직불·신용 겸용 모바일카드의 경우에도 직불(체크) → 신용 카드 순으로 결제기능이 수행되도록 하는 방안 권고

### ④ 카드사와 은행의 직불형 카드 영업 활성화 유도

#### ① 부가서비스 제공시 차별 해소

-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와 직불형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권고
- 고객이 신용카드 포인트와 체크카드 포인트를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유도
- \* 소비자가 이미 지급받은 신용카드 선포인트 상환부담 또는 기 적립된 포인트 활용 때문에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

#### ② 신용위험에 상응한 검사·감독 실시

- 직불형 카드의 발급 및 이용실적이 우량한 경영은행 및 카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시 우대\*
- \* 직불형 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대손위험 등 리스크가 적은 점을 감안
- 신용카드 위주의 영업을 지속하는 회사는 금감원에서 영업 행태 및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집중 검사

### ③ 직불형 카드 보급 기여 금융회사에 대한 포상

- 매년 직불형 카드 보급에 크게 기여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정부 포상 추진

\*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 및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한 점을 감안

▶ 필요조치 : 관계기관 협의, 금감원 검사 등

## 8 가맹점 - 직불형 카드를 적극 수납토록 유도

### ① 직불형 카드 단말기 설치 유도

- 가맹점 자율적으로 직불형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토록 권장(VAN사 협조)

### ② 적극적인 직불형 카드 결제 권유

-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직불형 카드 결제를 권유하고, 직불형 카드 결제 고객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권장(가맹점 단체와 협조)

▶ 필요조치 : 관계기관 협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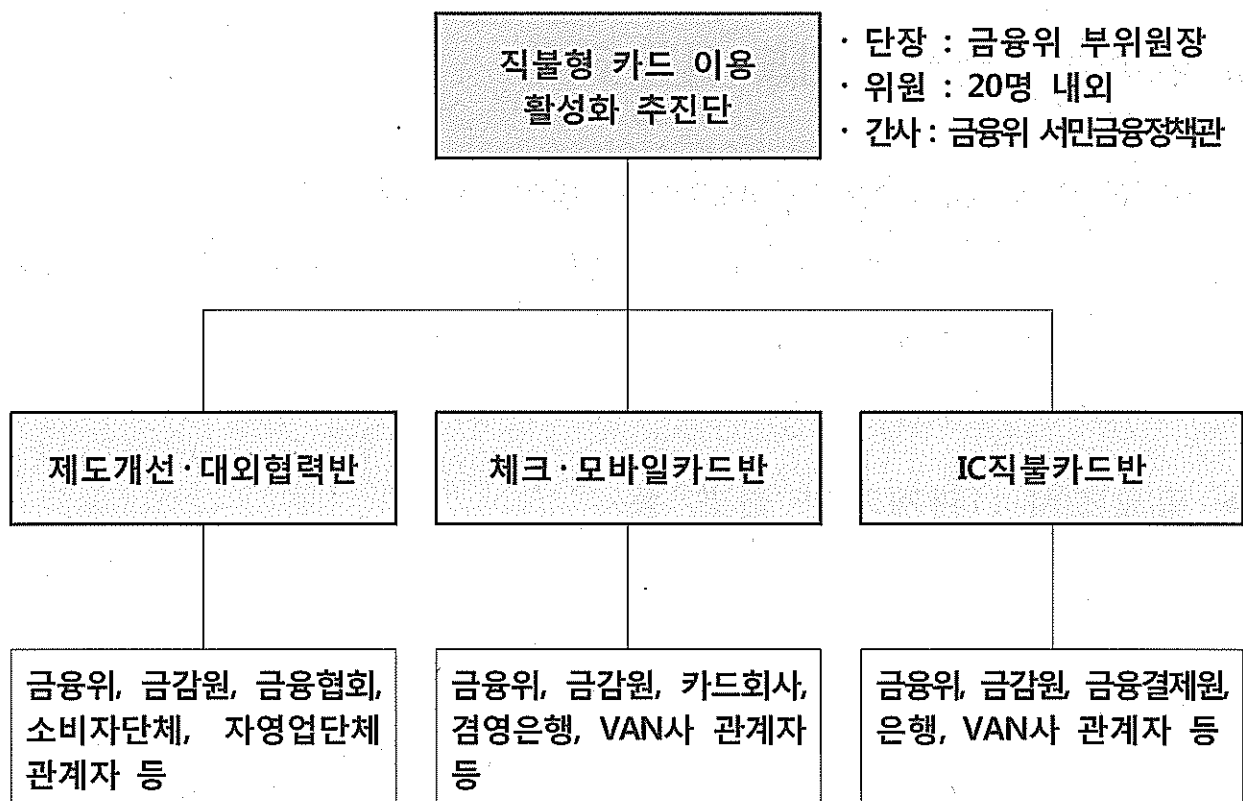
#### 4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운영

□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운영

○ 구성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단장), 금융협회 및 금융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및 자영업단체 관계자,  
금융위·금감원 관계자 등 약 20명 내외

○ 운영 : 분기 1회(필요시 수시) 추진단 회의를 개최,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 협의

- 추진단 아래 3개의 분야별 실무 추진반을 두고 활성화  
시책의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조 도출



## 5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운동 전개

- 소비자 단체 및 자영업 단체 등과 협조하여 직불형 카드 이용 촉진을 위한 범 사회운동을 전개

### ① 소비자 단체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불형 카드의 장점, 발급 및 이용방법 등을 홍보
- 특히, 주부 등을 대상으로 직불형 카드의 이점 등을 집중 홍보

### ② 자영업 단체

- 회원사를 대상으로 직불형 카드 수납시 혜택, 수납방법 등을 적극 홍보
- 가맹점이 고객에게 직불형 카드 결제를 적극 권장하고 혜택을 부여토록 협조 요청

### ③ 정부·공공기관

-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공적 용도로 사용 중인 신용카드를 가급적 직불형 카드로 대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솔선수범하여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를 사용토록 권고
- 전국 고등학교·대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를 발급받도록 교육 협조 요청

▶ 필요조치 : 관계기관 협조 등

### Ⅲ

### 추진계획

-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최대한 신속히 필요조치를 완료
- 특히, 직불형 카드가 빠른 시일 내에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

과 제 명	필요조치	시행시기 (계획)
<b>1.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b>		
① 카드 발급기준의 합리화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 등	'12년 상반기
② 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의 합리화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및 모범규준 제정	"
③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 제한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 및 모범규준 제정 등	"
<b>2. 휴면 신용카드 감축 및 신규발생 억제</b>		
① 휴면 신용카드 일제 정리	행정지도	'12.1/4분기
②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개선	여전업법 시행령 및 표준약관 개정	'12년 상반기
③ 휴면 신용카드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 및 금감원 검사	"
④ 신용카드 해지 편의성 제고	행정지도, 여전업 감독 규정 개정, 금감원 검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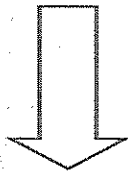
과 제 명	필요조치	시행시기 (계획)
<b>3.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b>		
① 부가서비스 제공 약속 이행에 대한 감독 강화	금감원 상시 감시,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등	지속추진, '12년 상반기
② 부당한 카드회원 모집행위 성격의 부가서비스 제공행위 규제	여전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등	'12년 상반기
③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 카드사에 대한 감독 강화	행정지도, 금감원 검사	지속추진
④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행정지도	'12년 상반기
<b>4.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제고</b>		
①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 (방안 마련)	행정지도 등	'12.1/4분기 목표
②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표준약관 승인	'12년 상반기
③ 가맹점별 수수료율 조회시스템 구축	행정지도	"
④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실태 점검	금감원 점검 및 신고센터 운용	지속추진
<b>5.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b>		
① 회원(소비자) - 직불형 카드 이용 유도	관계기관 협의, 여전업법 개정 검토, 행정지도 등	지속추진, '12년중
② 카드사은행 - 적극적인 직불형 카드 영업 유도	관계기관 협의, 금감원 검사 등	지속추진
③ 가맹점 - 직불형 카드를 적극 수납 토록 유도	관계기관 협조 등	"
④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운용	추진단 구성·운용	"
⑤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운동 전개	관계기관 협조 등	"

## 참고 1

## 종합대책의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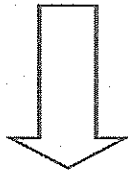
### 우리나라

신용카드 위주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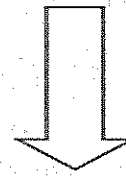
#### ◇ 신용카드는 외상(빚)으로 결제

- ▶ 이자비용 등 많은 비용 소요  
→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불가피
- ▶ 가게 부채, 과소비 유발



### 선진국

직불형 카드 위주로 발전



#### ◇ 직불형 카드는 예금으로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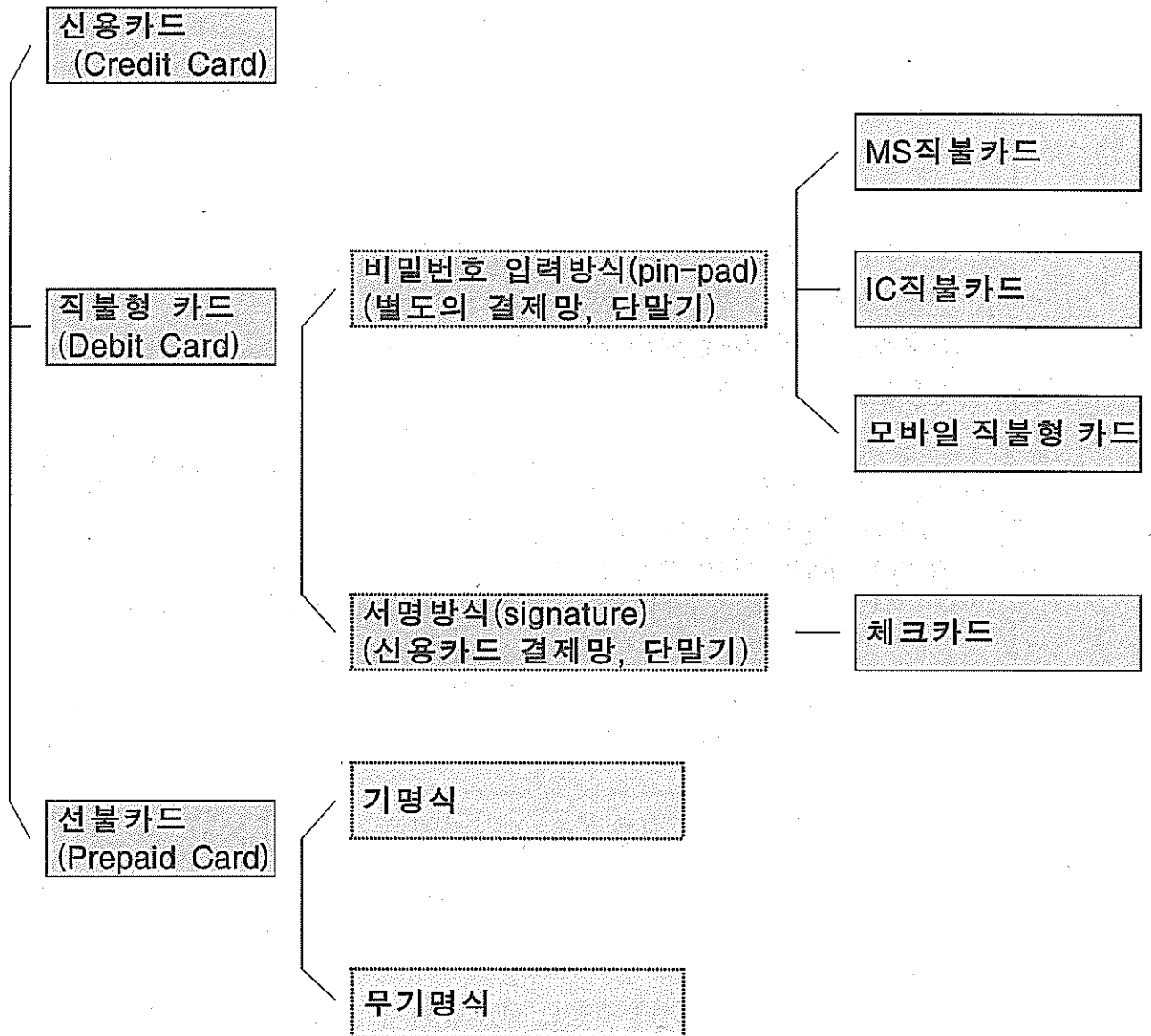
- ▶ 이자비용 등 없음  
→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 가능
- ▶ 소득범위내 지출, 건전 소비

#### ■ "신용카드 중심의 시장"을 "직불형 카드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

- ▶ 신용카드 사용 억제 +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 가맹점 수수료 문제 해소와 동시에 가게부채 부담 완화

## 참고 2

## 지급결제용 카드의 종류



- \* 신용카드 : 카드사와 회원간 약정한 이용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외상 결제가 가능한 카드
- \* 직불형 카드 : 회원의 결제계좌에 예치된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이체를 통해 결제가 가능한 카드
- \* 선불카드 : 카드사에 미리 지급한 금액을 카드에 저장하고, 그 저장된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제가 가능한 카드

### 참고 3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기준 현행개선편 비교

구분	현행	개선편
발급 기준	<p>① 만 18세 이상인 자일 것 (시행령)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소득증명서류 제출</p> <p>② 본인이 신청할 것 (법)</p> <p>③ 신용카드 한도액이 카드사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따른 개인 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법)</p> <p>④ 신용카드 발급에 관한 중요한 요건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일 것 (법)</u></p>	<p>① 민법상의 성년자일 것 (시행령) - 복지카드 발급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 인정</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을 것 (시행령)</p> <p>⑤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일 것 (시행령) - 객관적으로 결제능력이 입증되는 자는 예외 인정</p>
이용 한도 기준	<p><input type="checkbox"/>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준수</p> <p>① 회원이 요청 또는 사전동의한 범위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할 것 (감독규정)</p> <p>②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용한도를 책정할 것 (감독규정)</p>	<p><input type="checkbox"/> (현행과 같음)</p> <p>①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할 것 - 카드사는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 신청을 권유할 수 없음 (감독규정)</p> <p>②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관련 심사 기록과 자료를 보관할 것 (감독규정) *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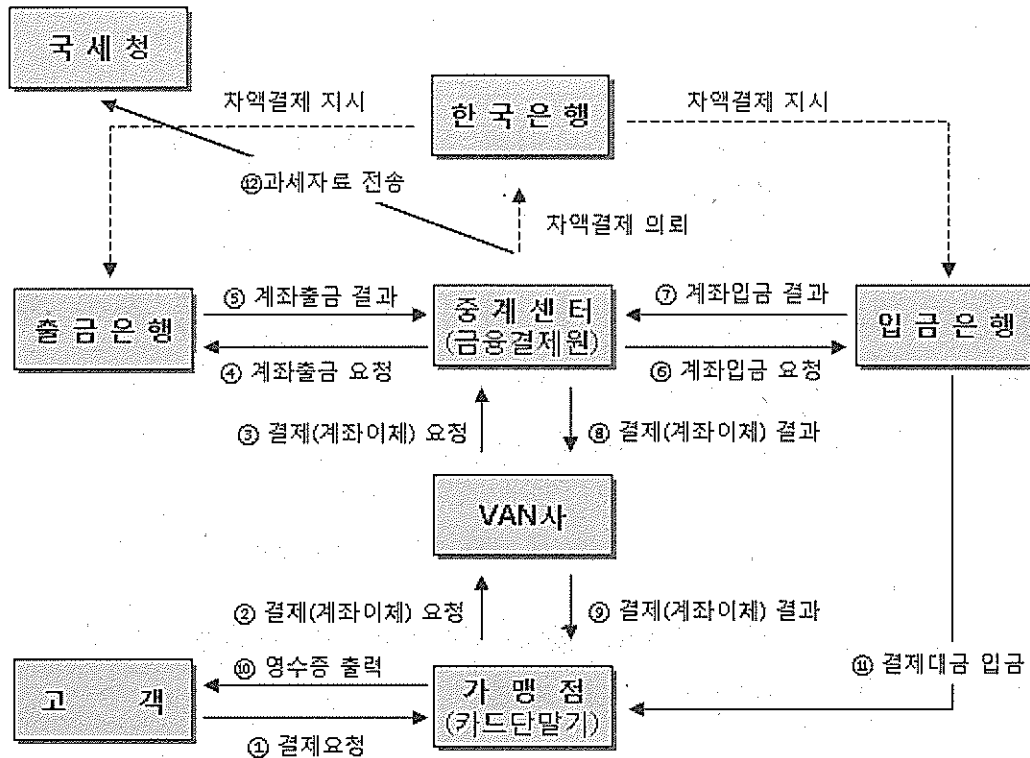
## 참고 4

## 신용카드 대비 직불형 카드의 장점

	장 점
회 원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대신 사용할 수 있는 등 신용카드와 동등한 수준의 지급결제 편의성 확보 가능</li> <li>○ ‘12년부터는 신용카드와의 소득공제 차등 폭이 확대* 되는 등 혜택이 늘어날 전망</li> <li>* 신용·현금카드 20%, 직불형 카드 25% → 30%</li> <li>○ 예금 범위 내 지출로 과소비, 카드빚 우려가 없음</li> </ul>
가맹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에 비해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이 가능 하여 수수료 부담 경감</li> <li>○ 신용카드 보다 판매대금도 더 빨리 회수 가능</li> </ul>
전업 카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가 큰 신용카드 위주의 영업을 보완 가능</li> <li>○ 자금조달 부담을 덜 수 있고, 총당금 적립, 조정자기 자본비율 등 규제 준수 부담 경감</li> </ul>
은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제계좌 개설 등을 통해 장기 안정적인 고객확보에 유리하고 신용 리스크 감소</li> </ul>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와 동등한 수준의 거래 투명성, 세원 확보 가능</li> </ul>
사회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게 빚 부담 경감, 금융채무 불이행자 양산 방지,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사회갈등 해소, 건전한 소비 문화 확산 등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 효과</li> </ul>

## 참고 5

## IC 직불카드의 결제 프로세스



구분	내용	비고
①	- 고객이 가맹점에서 IC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결제를 요청	
②	- 가맹점에서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결제처리하면, 결제요청정보가 계약된 VAN사로 전송	
③	- VAN사는 해당 결제요청정보를 중계센터로 전송	
④	- 중계센터는 출금은행(카드발급은행)으로 결제대금의 출금처리를 요청	
⑤	- 출금은행이 잔액확인 후 출금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중계센터로 전송	
⑥	- 중계센터는 입금은행(가맹점계좌보유은행)에 결제대금의 입금처리를 요청	
⑦	- 입금은행이 입금처리 후 처리결과를 중계센터로 전송	
⑧	- 중계센터는 VAN사로 결제결과를 전송	
⑨	- VAN사는 가맹점으로 결제결과를 전송	
⑩	- 가맹점에서 결제결과 수신 후 영수증 출력하여 제시	
⑪	- 익일 입금은행이 가맹점으로 결제대금을 입금	
⑫	- 중계센터에서 국세청으로 과세자료를 전송	

## 나.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

### ① 결제능력은 명목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規定 안 제24의5)

\* 가처분 소득(월소득 - 월채무상환금)이 陰인 과다 채무자에게도 발급 사례 존재

○ 이용한도 적정성을 정기적(매년 1회 이상)으로 점검

⇒ 신규 발급 신용카드부터 적용(단, 기존 카드는 갱신시 부터 적용)

### ②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금지(規定 안 제24의5)

⇒ 개정안 시행 후 즉시 적용

※ 신용카드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시할 계획

## 다. 부당한 이용권유 행위 제한 등

### ① 회원 사전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 금지(令 안 별표 1의3)

\* 신용카드 이용권유 수신여부 및 수신방법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식을 개선

### ② 부가서비스, 상품 이용조건 축소 또는 미표기 등 부당행위\* 금지 (規定 안 제25조제1항)

- \* i) 이용명세서, 상품안내 자료 등에 부가서비스 제공내용은 크게 표시하고, 이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의 이용실적 등은 작게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은 경우  
ii) 이자율, 수수료 등을 광고하거나 신용카드회원들에게 안내하면서 최저 수준만을 크게 표기하고 최고 수준은 작게 표기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경우

⇒ ①, ② 개정안 시행 후 즉시 적용

## 라.

##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개선 및 감독 강화

### ①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개선(승 안 제7조의2, 規定 안 제24조의11)

- (현행)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해지가능
  - \* 카드사가 회원에게 휴면 신용카드의 해지의사를 요청하여도 응답률이 매우 낮아, 이용의사가 없는 휴면카드를 해지할 수 없는 실정
- (개선) 회원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카드사가 해지 또는 유지의사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해지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동 사항을 반영할 계획(상반기 중)

#### ※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변경안

- ① 휴면 신용카드에 대하여 카드사가 1개월 내에 서면, 이메일 등으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 확인
- ② 회원이 서면 등으로 1개월 내 계약유지 의사 통보 → 즉시 사용가능  
계약유지 의사 미통보 → 사용정지
- ③ 사용정지 조치후 3개월 경과 전 사용정지 해제 신청 → 즉시 사용가능  
사용정지 해제 미신청 → 계약해지

#### ※ '12.1Q 휴면 신용카드 특별정리 : 총 신용카드 매수 794만매 감소

- 신용카드 매수 ('11말) 1.22억매 → ('12.3말 잠정) 1.14억매

### ② 휴면 신용카드 공시제 도입(規則 안 제3조)

- \* 카드사 및 여전협회 홈페이지 공시 : 휴면 신용카드의 수, 총 신용카드 수 대비 휴면 신용카드 수의 비중,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등

### ③ 신용카드 해지 지연행위\* 금지(規定 안 제25조)

- \* 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한 해지신청 편의 미제공
- ② 복잡한 해지절차 운영 등 부당한 해지업무 지체 처리

### 3.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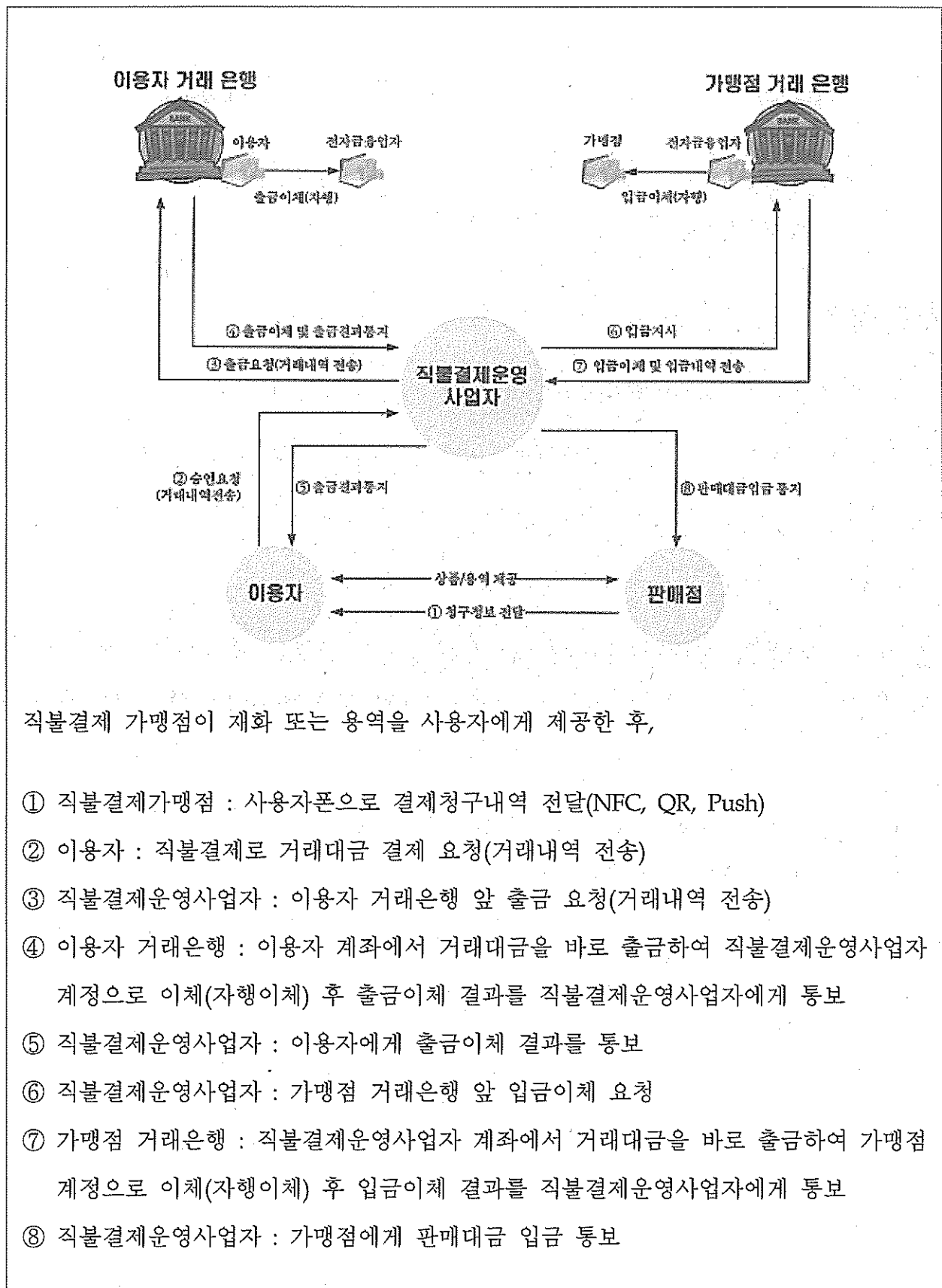
- '12. 4.18(수) ~ 5.28(월) 입법예고
- '12. 6 ~ 7월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 '12. 7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 '12. 8월 시행

※ 참고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은 4.26(목)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기본방향을 제시할 예정

\* 공청회 개요

- 일시 / 장소 : 4.26(목), 14:00 ~ 18:00 / 은행연합회
- 주관 : KDI, 금융연구원, 삼일PWC

※ 별첨 : 여전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안




**▶ IC직불카드 보급 및 이용을 위한 필요조치 사항**

- (i) 금융결제원과 은행 간 전산시스템 구축  
(금융결제원 및 은행)
- (ii) 금융결제원과 가맹점을 관리하는 VAN사간 전산시스템 구축  
(금융결제원 및 VAN사)
- (iii) 가맹점 모집 및 관리(VAN사, 은행)
- (iv) 가맹점에 IC카드용 단말기 및 프로그램 설치, 단말기 사용방법 교육 등(VAN사)

**▶ 모바일 직불형 카드의 보급 및 이용을 위한 필요조치 사항  
(예 : UbPay 서비스 방식)**

- (i) 회원의 UbPay 서비스 등록(회원)
  - \* 스마트폰을 통해 등록 가능
- (ii) 모바일 VAN사와 은행(카드사) 간 전산망 구축(VAN사, 은행 · 카드사)
  - \* 6개 주요은행 및 6개 카드사 기 구축
- (iii) 가맹점 모집 및 QR코드 부착 또는 단말기 설치(VAN사)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2. 4. 18(수) 금융위 보고 이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정책관 중소기업과		
책임자	권대영 과장(2156-9865)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2156-9854) 최성규 사무관(2156-9860)
배포일	2011. 4. 18(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18매

## 제목 : 여전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추진 배경

- ☐ 신용카드시장은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갈등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제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 종합대책 중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 2. 개정안 주요내용

#### 가.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

- ☐ 원칙적으로 성년자(만 20세 이상)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6등급 이내)를 보유한 경우에 발급 가능  
(승 안 제6조의7제2항, 規定 안 제24조)

\* (성년 적용 예외) 정부 등의 정책적 필요(복지예산 지원)로 발급이 불가피한 경우, 만 18세 이상으로서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

\*\* (신용등급 적용 예외)

- 객관적 자료로 결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 입증이 가능한 저신용자
- 직불카드이나 결제편의를 위해 소액신용한도(최고 30만원)를 부여한 검용카드

⇒ 신규 발급 신용카드부터 적용

## 나.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

### ① 결제능력은 명목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規定 안 제24의5)

\* 가처분 소득(월소득 - 월채무상환금)이 陰인 과다 채무자에게도 발급 사례 존재

○ 이용한도 적정성을 정기적(매년 1회 이상)으로 점검

⇒ 신규 발급 신용카드부터 적용(단, 기존 카드는 갱신시 부터 적용)

### ②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금지(規定 안 제24의5)

⇒ 개정안 시행 후 즉시 적용

※ 신용카드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시할 계획

## 다. 부당한 이용권유 행위 제한 등

### ① 회원 사전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 금지(令 안 별표 1의3)

\* 신용카드 이용권유 수신여부 및 수신방법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식을 개선

### ② 부가서비스, 상품 이용조건의 축소 또는 미표기 등 부당행위\* 금지(規定 안 제25조제1항)

\* i) 이용명세서, 상품안내 자료 등에 부가서비스 제공내용은 크게 표시하고, 이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의 이용실적 등은 작게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은 경우

ii) 이자율, 수수료 등을 광고하거나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안내하면서 최저 수준만을 크게 표기하고 최고 수준은 작게 표기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경우

⇒ ①, ② 개정안 시행 후 즉시 적용

**리.**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개선 및 감독 강화**

**①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개선(승 안 제7조의2, 規定 안 제24조의11)**

○ (현행)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해지가능

\* 카드사가 회원에게 휴면 신용카드의 해지의사를 요청하여도 응답률이 매우 낮아, 이용의사가 없는 휴면카드를 해지할 수 없는 실정

○ (개선) 회원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카드사가 해지 또는 유지의사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해지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동 사항을 반영할 계획(상반기 중)

※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변경안

① 휴면 신용카드에 대하여 카드사가 1개월 내에 서면, 이메일 등으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 확인

② 회원이 서면 등으로 1개월 내 계약유지 의사 통보 → 즉시 사용가능  
계약유지 의사 미통보 → 사용정지

③ 사용정지 조치후 3개월 경과 전 사용정지 해제 신청 → 즉시 사용가능  
사용정지 해제 미신청 → 계약해지

※ '12.1Q 휴면 신용카드 특별정리 : 총 신용카드 매수 794만매 감소

- 신용카드 매수 ('11말) 1.22억매 → ('12.3말 잠정) 1.14억매

**② 휴면 신용카드 공시제 도입(規則 안 제3조)**

\* 카드사 및 여전협회 홈페이지 공시 : 휴면 신용카드의 수, 총 신용카드 수 대비 휴면 신용카드 수의 비중,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등

**③ 신용카드 해지 지연행위\* 금지(規定 안 제25조)**

\* 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한 해지신청 편의 미제공

② 복잡한 해지절차 운영 등 부당한 해지업무 지체 처리

### 3. 추진계획

- ☐ '12. 4.18(수) ~ 5.28(월) 입법예고
- ☐ '12. 6 ~ 7월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 ☐ '12. 7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 ☐ '12. 8월                              시행

※ 참고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은 4.26(목)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기본방향을 제시할 예정

\* 공청회 개요

- 일시 / 장소 : 4.26(목), 14:00 ~ 18:00 / 은행연합회
- 주관 : KDI, 금융연구원, 삼일PWC

※ 별첨 : 여전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2012년 4월 18(수)  
금융위 보고 이후부터 보도 가능

---

**카드결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여전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안**

---

2012. 4. 18

**금 융 위 원 회**

## ■ ■ ■ 목 차 ■ ■ ■

### I. 추진 배경

### II. 주요 개정 내용

1.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
2. 부당한 이용권유 행위 제한
3. 휴면 신용카드 감축 및 신규발생 억제
4. 기타 제도개선

### III. 추진 계획

## 1. 추진배경

□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가계부채 부담 가중,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 심화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겪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카드결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중

□ 종합대책 중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 사항인

①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

② 부당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 제한,

③ 휴면 신용카드 감축 및 신규발생 억제,

④ 가맹점수수료를 공시체계 합리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별도로 가맹점 수수료를 체계 개편 및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 중

## II. 주요 개정 내용

### 1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

#### 가. 개정 이유

□ 1인당 신용카드 보유매수가 4.9장에 이르고, 신용카드 이용 한도 소진율은 22.7%에 불과

○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용카드 발급은 큰 폭의 증가 추세

< 신용카드 주요 지표 >

	'08년	'09년	'10년	'11년
민간최종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비중(%)	49.7	52.8	57.0	61.3
신용카드 발급 수(만매) < 무실적 카드 >	9,624 <2,572>	10,699 <3,062>	11,659 <3,129>	12,214 <3,111>
1인당 신용카드 보유수(매)	3.7	4.0	4.4	4.9
카드 1장당 평균 이용한도 금액 (이용잔액 보유회원 기준, 백만원)	5.4	5.3	5.6	5.5
카드 이용한도 대비 소진율(%)	20.9	21.0	21.4	22.7

□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 발생

○ 가계부채 부담 가중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

○ 가맹점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귀결되어 사회갈등 유발

□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기준을 합리화 하여 신용카드 남발과 남용을 억제

## 나. 개정 내용

### ㉠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 (승안 제6조의7제2항, 規定안 제24조)

#### ① 발급 신청시 본인 확인 방법을 명확화

- 본인확인 방법을 “공인전자서명, 유무선 통신을 통한 개인비밀번호 입력, 본인 신분증 제시 등”으로 명확화

#### ② 민법상 성년자\*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발급

\* 만 20세 이상 (13.7월부터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 (예외 인정 사유)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예 : 소년·소녀가장, 미혼모에 대한 복지에산 지원 등)
- 만 18세 이상으로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결제능력이 인정되는 고교졸업 연령이상의 취업자에게 발급 허용

#### ③ 개인신용 6등급 이내에 한하여 신용카드 발급

##### (예외 인정 사유)

- 이용대금 결제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거나, 본인이 입증 할 수 있는 경우

\* (예시) 재직증명, 납세증명 등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결제능력 확인

- 직불카드로 결제되거나 소액 신용한도를 부여한 겸용(직불·신용)카드는 신용등급 규제 미적용

- 직불 중심 겸용카드의 소액신용결제 한도 : 월 최고 30만원

· 대중교통 이용액(후불), 예금잔고 부족에 따른 결제편의 등을 고려

## 나. 개정 내용

### ㉠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 (승안 제6조의7제2항, 規定안 제24조)

#### ① 발급 신청시 본인 확인 방법을 명확화

- 본인확인 방법을 “공인전자서명, 유무선 통신을 통한 개인비밀번호 입력, 본인 신분증 제시 등”으로 명확화

#### ② 민법상 성년자\*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발급

\* 만 20세 이상 ('13.7월부터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 (예외 인정 사유)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예 : 소년·소녀가장, 미혼모에 대한 복지예산 지원 등)
- 만 18세 이상으로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결제능력이 인정되는 고교졸업 연령이상의 취업자에게 발급 허용

#### ③ 개인신용 6등급 이내에 한하여 신용카드 발급

##### (예외 인정 사유)

- 이용대금 결제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거나, 본인이 입증 할 수 있는 경우

\* (예시) 재직증명, 납세증명 등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결제능력 확인

- 직불카드로 결제되거나 소액 신용한도를 부여한 겸용(직불·신용)카드는 신용등급 규제 미적용

- 직불 중심 겸용카드의 소액신용결제 한도 : 월 최고 30만원

· 대중교통 이용액(후불), 예금잔고 부족에 따른 결제편의 등을 고려

<신용카드 발급기준 비교>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신청</li> <li>○ <u>만 18세 이상인 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미성년자도 발급가능</u></li> <li>*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소득증명서류 제출</li> </ul> </li> <li>&lt;신 설&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본인 확인 방법* 명확화</li> <li>* 신분증 제시, 공인전자서명, 유·무선 개인 비밀번호 입력 등</li> </ul> </li> <li>○ <u>민법상 성년자(만 20세 이상)로 한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 : 정부 등 정책적 필요, 만 18세 이상으로 재직증명 가능자</li> </ul> </li> <li>○ <u>개인신용 6등급 이내</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제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하거나 본인이 입증</li> <li>· 직불 중심 겸용(직불·소액신용)카드</li> </ul> </li> </ul> </li> </ul>

② 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의 합리화 (規定 안 제24의5)

① 명목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으로 월평균 결제능력 평가

○ 일부 카드사는 “소득”에 근거하여 결제능력을 평가

\* 사례 : 가처분 소득(월소득 - 월채무상환금)이陰인 과다 채무자에게도 카드발급

② 결제능력 심사기준의 제·개정 내용이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예 : 채무 반영도 미흡 등)하는 경우 금감원장이 변경을 요구

③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토록 권유하는 행위 금지

④ 회원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최소 1년)

⑤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심사기록과 자료의 보관의무

<신용카드 결제능력 심사 및 이용한도 책정기준 비교>

현 행	개 정 안
<b>□ 신용카드업자의 결제능력 심사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재산, 채무 등 결제 능력 심사시 반영할 사항</li> <li>○ 월 평균 결제능력 평가 기준</li> <li>○ 결제능력 심사기준 변경시 금감원장에게 보고 의무</li> </ul>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동일)</li> <li>○ <u>소득, 재산, 채무를 고려한 가처분 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 평가 기준</u></li> <li>○ 결제능력 심사기준 <u>제정·변경시</u> 금감원장에게 보고 의무</li> <li>○ <u>금감원장은 보고받은 결제능력 심사기준이 감독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변경을 요구</u></li> </ul>
<b>□ 신용카드업자가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의 요청 범위 내 책정</li> </ul>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평균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용한도를 책정</li> </ul> <p>&lt;신 설&gt;</p>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동일)</li> <li>○ <u>이용한도 중액 신청 권유 금지</u></li> <li>○ (현행과 동일)</li> <li>○ <u>정기적(매년 1회 이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u></li> <li>○ <u>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심사 기록과 자료를 보관할 것</u></li> </ul>

## 다. 시행 시기

### □ 발급 기준 : 신규 발급 신용카드부터 적용

\* 既 발급 카드 : 종전 규정이 적용, 개인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갱신발급 가능

### □ 가처분 소득을 반영한 결제능력 심사

○ 신규 발급 신용카드 : 시행일부터 적용,

既 발급된 신용카드 : 시행일 이후 갱신시 부터 적용

### □ 기타\* 개정사항 : 시행일 이후 적용

\* 결제능력 심사기준 규정 위반시 변경요구, 이용한도 증액신청 권유 금지,  
정기적 이용한도 적정성 점검, 이용한도 책정 관련 심사기록과 자료 보관

※ 개정안 시행일 전에 신용카드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 제시

## 라. 기대 효과

### □ 카드사의 내부발급 기준 완화를 통한 저신용자 발급경쟁 차단

### □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직불 중심 겸용 카드 이용을 통한 결제편의 제고

### □ 발급·이용한도 강화로 신용카드 대출을 통한 “채무 돌려막기”가 어려워져 저신용·다중채무 회원의 양산을 방지

※ 신용등급별 회원수 및 신용카드 채무 잔액 ('11년말 현재)

신용등급	회원수 (천명)	신용카드 채무 (조원)	신용판매	카드대출
1~6등급	20,313	40.5	28.0	12.5
7~10등급	3,108	16.2	6.6	9.5
(전체 대비 비중)	(13.3)	(28.5)	(19.1)	(43.3)

\* 자료 : 회원수 KCB, 신용카드 채무 6개 전업카드사(BC제외) 제출 자료 기준

※ 신용 7등급이하 신용카드 회원 중 저신용 다중채무자 현황('11말 6개 전업사)

- 회원 수 1백만명(총 회원의 41%), 카드채무 잔액 8.3조원(총 회원 채무잔액의 14.6%)

## 가. 개정 이유

□ 카드사는 회원확보 및 카드이용 유도 목적으로 회원에게 경쟁적으로 이용권유 마케팅을 실시

○ 카드사의 총 전화 마케팅 건수는 하루 평균 48.4만건 수준

※ 일 평균 전화마케팅 통화건수('11.1Q)

구 분	합계	카드발급	관촉 안내 등 <sup>1)</sup>	카드대출	리볼빙
건수(만건)	48.4	8.0	13.9	23.9	2.6

1) 카드 이용한도 상향, 선포인트 이용 권유, 할인행사 안내 등

□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과도한 이용권유에 시달리게 되고, 일부는 충동구매 등 불필요한 신용카드 이용 발생

## 나. 개정 내용

㉠ 회원의 사전 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권유 행위 금지(승 안 별표 1의3)

○ 신용카드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의 이용 또는 카드대출을 권유하는 영업행위\* 금지

\*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면, 이메일 등

-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식을 변경하여 회원이 이용권유 수신 여부 및 수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

※ 예시 :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식 상 이용권유 선택

카드 이용 권유 동의 여부	고객께서 동의하시면 전화, SMS, 서면, 이메일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권유」를 받아 보시게 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선택하는 이용권유 정보 수신방법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전화를 통한 이용권유에 동의 <input type="checkbox"/>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이용권유에 동의 <input type="checkbox"/> 서면을 통한 이용권유에 동의 <input type="checkbox"/> 이메일을 통한 이용권유에 동의
※ 이용권유에 동의하셨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권유 목적 연락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부가서비스, 상품 이용조건의 축소 또는 미표기 등 부당 행위 금지(規定 안 제25조제1항)

- 이용명세서, 상품안내 자료 등에 부가서비스 제공내용은  
크게 표시하고, 이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의 이용실적 등은  
작게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은 경우
- 이자율, 수수료 등을 광고하거나 신용카드회원들에게 안내  
하면서 최저 수준만을 크게 표기하고 최고 수준은 작게  
표기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가서비스 제공 관련 규제 등의 비교>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설) 회원의 사전 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 금지	
<input type="checkbox"/> (신설) 부가서비스, 상품의 이용조건에 부당한 은폐·축소 금지	
○ 금지 근거 규정만 존재(시행령)	○ 구체적 금지행위 제시(감독규정) * ①부가서비스 제공조건 축소표기 또는 미표기 ②이자율, 수수료의 최저 수준은 크게, 최고 수준은 작게 표기

## 가. 개정 이유

### □ 신용카드 4장 중 1장 이상이 휴면 신용카드\*

\*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

- 휴면 신용카드는 분실·도난 등 카드사고 위험을 높이고,
- 발급비용(매당 평균 9.6만원)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 유발

※ 연도별 휴면 신용카드 수 및 비중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휴면카드 수 (만매)	2,572	3,062	3,129	3,111
휴면카드 비중 (%)	26.7	28.6	26.8	25.5

### □ 카드사가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영업행태를 개선토록 하기 위해,

-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간소화, 휴면 신용카드 공시제 도입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나. 개정 내용

### ①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 개선(승 안 제7조의2, 規定 안 제24조의11)

- (현행)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해지가능

\* 카드사가 회원에게 휴면 신용카드의 해지의사를 요청하여도 응답률이 매우 낮아, 이용의사가 없는 휴면카드를 해지할 수 없는 실정

- (개선) 회원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도 카드사가 해지 또는 유지의사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해지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동 사항을 반영할 계획(상반기 중)

####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안)>

- ① 휴면 신용카드에 대하여 카드사가 1개월 내에 서면, 이메일 등으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 확인
- ② 회원이 서면 등으로 1개월 내 계약유지 의사 통보 → 즉시 사용가능  
계약유지 의사 미통보 → 사용정지
- ③ 사용정지 조치후 3개월 경과 전 사용정지 해제 신청 → 즉시 사용가능  
사용정지 해제 미신청 → 계약해지

### ② 휴면 신용카드 공시제 도입(規則 안 제3조)

- 카드사별로 자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휴면 신용카드 현황\*과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등을 공시

\* 휴면 신용카드의 수, 총 신용카드 수 대비 휴면 신용카드 수 비중 등

### ③ 신용카드 해지 지연행위 금지(規定 안 제25조)

- 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서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신청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 부여
- 카드사가 복잡한 해지절차 운영 등으로 부당하게 해지업무를 지체하여 처리하는 행위 금지

### 가. 개정 이유

- ☐ 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

\* 은행·보험·자본시장법령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참조하여 요건을 강화

- ☐ 가맹점수수료를 체계 개편에 따라 공시체계를 변경할 필요

### 나. 개정 내용

#### ①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승 안 제19조의8)

-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요 거래관계에  
있는 자 등을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추가
- 법률자문·경영자문 등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및 법무조합 등

#### ② 가맹점 수수료율 공시체계 변경(規則 안 제3조)

- 향후 수수료율 체계 개편 모습\*에 따라 공시체계를 탄력적  
으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개선


\* 예시 : 업계는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의 폐지를 검토

- (현행) “업종별” → (변경) “여전협회 구분”에 따른 공시

### Ⅲ. 향후 계획

---

- ☐ '12.4.18(수) ~ 5.28(월) 입법예고
- ☐ '12.6 ~ 7월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 ☐ '12.7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 '12.8월                            시행

 금융위원회	<b>보도자료</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금융산업의 선진화</li><li>• 금융시장의 글로벌화</li></ul>
	<b>배포시 부터 보도 가능</b>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책임자	권대영 중소기업과장 (2156-9850)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2156-9854) 이종립 사무관 (2156-9856)
배포일	2012. 7. 18.(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 (2156-9542~48) 총 10매

## 제 목 :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①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②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요건 강화,  
 ③ 카드사의 모집인 감독 책임 강화 ④ 광고규제 도입 ⑤ 레버리지 규제 도입

### I. 추진 배경

- 정부는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가맹점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카드사 외형확대 경쟁 사전 차단, 카드 이용자의 철저한 권익보호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
- ⇒ 이러한 대책들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 ① 첫째, 35년된 불합리한 업종별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로 전환
  - ② 둘째,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카드사의 일방적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에 따른 이용자 권익침해 방지
  - ③ 셋째, 카드사의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여 카드 모집절서의 건전화 유도
  - ④ 넷째, 여신금융회사(카드사, 할부·리스사 등)의 금융상품(카드·할부·리스·대출 등)에 대한 광고규제를 새로 도입하여 금융 이용자 보호
  - ⑤ 다섯째,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제(레버리지)」를 도입하여 여신금융회사의 외형확대 위주 경영 행태를 선제적으로 차단

## II. 개정안 주요내용

### 1 공정하고 합리적인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수수료 부담

합리성	공정성	정책적 고려
·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산정	· 대형가맹점의 불공정 행위 시정	· 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舊 체계 (폐지)	新 체계 (도입)
<b>◆ 불합리한 업종별 체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원칙과 합리적 기준이 결여된 수수료 산정</li> </ul>	<b>◆ 합리적인 가맹점별 체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근거에 기초한 수수료율 산정</li> <li>② 적격 비용(eligible cost) 부담</li> <li>③ 수익자 부담</li> <li>④ 부당한 차별 금지</li> </ol> </li> <li><input type="checkbox"/> 불이행시 : (카드사)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li> </ul>
<b>◆ 협상력을 통한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수수료 인하 압력</li> <li><input type="checkbox"/> 일반 가맹점 부담 증가 우려</li> </ul>	<b>◆ 대형가맹점(연 카드매출 1천억원 이상 법인) 부당행위 금지</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 금지</li> <li>②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의 대가 요구 금지</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불이행시 : (가맹점) 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li> </ul>
<b>◆ 중소가맹점에 대한 업계 자율의 우대 조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li> <li><input type="checkbox"/> (우대수준) 신용 1.8% 직불형 1.0%</li> <li><input type="checkbox"/> 업계 자율</li> </ul>	<b>◆ 중소가맹점 우대조치 법정 의무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대상) 연매출 2억원 이하</li> <li><input type="checkbox"/> (우대수준) 평균 수수료율의 8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 1.5%, 직불형 1.0%(업계 실제 적용)</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불이행시 : (카드사)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li> </ul>

※ 가맹점수수료 관련한 시행령·감독규정 개정내용은 '12.7.4일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방안 보도자료” 참조

## (1) 현황 및 문제점

-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제공조건은 카드이용자가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 포인트, 마일리지, 무이자할부 등 카드이용에 따른 부수적 혜택

\*\* 신용카드 사용이유 ('12.5월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 부가서비스, 무이자할부 등 사용시 경제적 혜택 35.2%, 소득공제 10.1%

- 그러나, 카드사는 합리적 사유가 없더라도 ① 신규 상품 출시 1년이 경과되고, ② 축소 변경 6개월 전에 이용자에 사전 고지 등을 이행하면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가 가능

- (카드사) 상품 출시 당시 높은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출시 1년 후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유인

\* 부가서비스 제공조건 변경 사례 : 142건 ('08.10~'11.3)

- 아울러,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로 전환시 가맹점수수료 수익 감소 보전을 위해 부가서비스(연간 약 3조원)를 급격히 축소시켜 그 부담을 이용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

\* 여신금융협회 추정에 따르면 연간 약 9천억원 수익 감소

- (이용자) 카드 가입시 기대하였던 혜택이 일방적으로 축소됨으로써 신뢰훼손 및 불만 소지

## (2) 개선방안 (規定 安 §25①)

- 신용카드회사의 부가서비스 변경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해
  - “현행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상품 수익성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
    - 금감원은 상품 약관변경 승인심사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
  - 위반시 제재 : 3개월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과징금

### <부가서비스 변경 요건 비교>

현 행	개 정
① 신규 상품출시 이후 1년 동안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이 없을 것  ②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사유와 변경 내용 등을 변경 6개월 전에 회원에게 사전 고지할 것  * 홈페이지, 대금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u>&lt;신 설&gt;</u>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u>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u>

\* 다만,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 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변경에 제한 없음(현행 유지)

## (3) 기대효과

- (소비자) 부가서비스 일방적 축소 변경이 어려워져 권익보호
- (카드사) 신규 상품 출시시 「미끼성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회원유치 영업행태 억제 등 영업질서 건전화
  -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가 어려워져 카드남발 억제 효과 기대

## (1) 현황 및 문제점

☐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모집인 제재는 엄격

\* 길거리 모집, 연회비 10% 초과 경제적 이익 제공, 다단계 판매 모집, 모집 위탁, 소속 카드사 외의 카드상품 모집, 무단 방문 모집 등 불법 모집행위  
⇒ 과태료 최고 500만원, 모집인 등록 취소 또는 6개월이내 영업정지

☐ 그러나, 카드사의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및 제재 수준이 낮아 카드사의 적극적인 불법 모집 예방노력이 부족

\*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 사실 인지 후 미신고, 모집인에 대한 '모집시 준수사항' 교육 미실시, 미등록 모집인의 신용카드 모집행위 및 대가 지급 ⇒ 과태료 500만원

## (2) 개선방안 (승 안 §7의2, §19의18, 規定 안 §24의11)

☐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의 준수사항, 카드사의 모집행위 점검 및 점검 방법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토록 의무화

※ 내부통제 기준 반영사항

- ① 신용카드 모집인이 카드 모집시 준수해야할 사항
- ② 신용카드 모집인의 모집행위 정기 점검 의무 및 점검 방법

☐ 위반시 제재 : 업무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기관 및 임직원 제재

## (3) 기대효과

☐ 카드사의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강화되어,  
카드사 스스로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유도

## (1) 현황 및 문제점

-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리스금융 등 여신금융회사의 금융상품(카드, 할부·리스·신기술, 대출 등)이 폭 넓게 이용되고 있으나,

\* 신용카드회원 수 8,441만명, 할부리스자산 33조원, 여전사 대출잔액 32조원

- 거래조건의 불충분한 설명, 금리 수준과 부수적 혜택 등에 대한 과장 광고 등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 지속 증가\*

\* (사례) 카드사 민원 건수 : (09년) 5,627 → (10년) 5,235 → (11년) 6,196

\*\* 은행업, 대부업법 등에는 광고규제 既도입

## (2) 개선방안 (승 안 §19조의15, 안 별표 1의4)

## ① 중요 거래 조건의 광고 포함 의무화

- 여신금융회사 금융상품(카드, 할부·리스·신기술, 대출 등)의 이자율, 수수료, 부수혜택 등 중요 거래조건을 광고에 필수적으로 반영

※ 광고 의무 반영 내용

- ◇ (신용카드) 연회비, 연체이자율, 부가서비스 주요내용 등  
◇ (대출) 대출금리, 연체이자율,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조건 등

## ② 허위·과장 광고 금지

- 소비자에게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금지

※ 광고 금지사항

- ◇ 최고, 최상, 최저 등 최상 또는 유일성을 나타내는 표현 광고  
◇ 보장, 즉시, 확정 등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 광고  
◇ 거래 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에도 확정적인 것처럼 표시하는 광고

### ③ 광고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광고시 준수사항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그 이행여부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확인(심의필)

#### ※ 광고시 준수사항

- ◇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사전에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의 확인을 받을 것
- ◇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상품 모집인이 광고관련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것

### ④ 과다 채무 및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 ① (과도한 채무 위험 경고) 여신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이 증가 추세(전년비 9.7%)인 만큼 채무의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대출 유도

\* 할부리스사 가계대출 : ('10말) 13.0조원 → ('11말) 14.2조원, (+1.2조원, +9.7%)

- ② (신용카드 남용 위험 경고) 외상 결제 및 대출의 편의성 등에 따른 충동적 카드 결제, “채무 돌려막기” 등 카드 남용 위험을 감소

#### ※ 경고문구 표시기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에 적용)

- 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 “과도한 채무, 고통의 시작입니다.”
  - “과도한 채무,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 ②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 알아야할 빚입니다.”

### ⑤ 위반시 제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3) 기대효과

- ☐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금융상품 선택을 유도하고 상품 분쟁소지 감소

##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 제한을 위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제(레버리지 규제)」 도입

### (1) 현황 및 문제점

- 여신금융회사는 예금을 받을 수 없고 회사채 등으로 자금조달
  - 자기자본 확충 노력 없이 과도한 외부 차입을 통해 무리하게 외형 확대 경쟁을 벌일 경우 금융시장 충격에 취약해지고,
    - 금융시장 불안 확산 등 부작용 유발 가능성

<참고> '03년 카드사태 당시의 위험전이 경로

- ① '99년 이후 카드사 자산 급증(연평균 30~40%)으로 레버리지 증가 →
  - ② 회계분식 사건에 따른 펀드 환매등으로 회사채 시장 경색 →
  - ③ 카드사 유동성 부족, 영업규모 감축('03년말 자산 전년말 대비 △48.%) →
  - ④ 이용한도·카드대출 축소로 신용카드 다중채무자의 부실화 급속 진행
- \* 카드관련 신용불량자 비중 : ('99년) 29.5% (59만명/총 200만명) → ('03년) 65% (240만명/총 372만명)
- ⑤ 금융시장의 경색 심화 등 악순환 발생

<전업카드사 자산, 자기자본, 레버리지 현황>

	'01말	'02말	'03말
자산(조원, %)	47.6 (34.5)	68.1 (43.1)	35.1 (△48.5)
자기자본 (조원)	5.1	6.1	△2.6
레버리지 (배수)	9.4	11.3	-

\* ( ) 전년말 대비 증감율, 대자대조표 기준

\*\* 부채비율 ('04말) 1,594% → ('12.3말) 320%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 제한 장치”를 마련하여 시장위험 초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
  - '12.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규제 도입 근거 마련(최고 10배 이내에서 레버리지 배수 설정)

(2) 레버리지 배수 상한 (승 안 §19의18, 規定 안 §7조의3)

□ 신용카드사 레버리지 상한 : 6배

- '03년 카드사태 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금감원) 결과 적정 레버리지 배수가 약 6.4배인 점을 감안, 6배로 정함

\* 평균 레버리지는 4.2배 (총자산 80조원, 총자본 19조원, '12.3월말기준)

- 다만, 금융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용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으로 유예기간 부여

□ 할부·리스·신기술사 레버리지 상한 : 10배

-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금감원) 결과 적정 레버리지 배수가 약 10.3배인 점을 감안, 10배로 정함

\* 평균 레버리지 7.1배 (총자산 79조원, 총자본 11조원, '12.3월말기준)

- 카드사와 달리 진입규제(등록제)가 낮고, 기업에 대한 물적금융 지원 성격을 감안 카드사와 배수 차등화

\* 기업관련 자산비중 66.4% : 할부리스신기술 42.7%(33조원), 기업대출(18조원)

- 다만, 법상 최고한도가 10배임을 감안 8배 내외 수준으로 레버리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

□ 법 시행('12.12.22일)후 3년의 유예 기간 부여

\* 한도 초과 여전사('12.3월) : 카드사 1개(총 7개), 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 6개(총 57개)  
→ 규제 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유예기간 내 규제 준수 유도(금감원)

□ 위반시 제재 : 과징금 1억원, 기관 및 임직원 제재

(3) 기대효과

- 외형 확대 위주의 경영 사전 차단, 안정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한 건실한 성장 유도로 금융시장의 충격 흡수력을 강화

### 3. 향후 계획

- ☐ '12.7.18 ~ 8.27 : 입법예고
- ☐ '12.9 ~ 10월 :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 ☐ '12.11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 '12.12.22 : 개정 규정안 시행
  -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1.5%) 적용은 9월 조기 시행
  - 레버리지 규제 준수를 위한 3년('15.12限)의 규제 이행기간 부여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26. 금융회사의 고졸채용 현황 및 채용후 비정규직 · 정규직 현황

- 2011년 및 2012.1~8월중 은행, 금투회사, 보험사, 여전사 등의 고졸채용 실적, 채용후 비정규직·정규직 현황은 다음과 같이 파악됨

#### < 금융권 고졸채용 실적 >

구분	'11년			'12.1~8월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은행	1,058	937	121	571	486	85
금투	368	266	102	149	75	74
보험	1,384	1,229	155	1,085	861	224
여전	653	628	25	443	419	24
합계	3,463	3,060	403	2,248	1,841	407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27. 미소금융 출범 후 연도별 미소금융 이용현황 실적

(단위: 건, 억원)

년도	지원건수	지원금액
2008년 7월	7,505	241
2009년	8,305	371.3
2010년	15,192	1,144.2
2011년	28,022	3,106.4
2012년 8월말	18,887	1,825.8
총 계	77,911	6,688.7

※ 소액보험지원 실적 제외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28. 2011년 1월 ~ 2012년 9월까지 퇴직자 재취업 현황

#### □ 퇴직자 재취업 현황

연도	퇴직일	이름	직위/직급	재취업처 및 직위
2011	'11.01.03	진○○	위원장	송실대 객원교수
	'11.02.16	최○○	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11.03.27	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11.03.28	이○○	상임위원	법무법인 변호사
	'11.05.02	김○○	고위공무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11.06.02	안○○	행정사무관	-
	'11.09.23	공○○	행정사무관	금융감독원
	'11.09.28	남○○	팀장	KT 상무
2012	'12.01.01	이○○	외신대변인	-
	'12.02.27	박○○	일반계약직5호	-
	'12.03.14	원○○	과장	금융결제원 감사
	'12.03.21	이○○	국제협력관	두산그룹
	'12.05.18	김○○	행정사무관	예금보험공사
	'12.05.21	이○○	과장	신용보증기금 이사
	'12.05.26	김○○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12.07.02	진○○	고위공무원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12.08.02	김○○	일반계약직5호	법무법인 변호사
	'12.08.13	전○○	서기관	Ibk 캐피탈 부사장
	'12.08.17	김○○	일반계약직5호	한국증권금융
	'12.08.31	김○○	일반계약직5호	-
	'12.09.04	오○○	전산사무관	-

##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

### 29.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관련

- 청년창업재단 보증 및 직접투자 지원 현황(건수/액수)
- 보증지원 업종별 분류

#### □ 지원현황 (8월말 기준)

		상담실적	집행실적	향후 실행계획
		(5.30일~8.31일)	(5.30일~8.31일)	(9.3~9.7일)
건수	보증	715건	396건	60건
	투자	9건	1건	-
금액	보증	298억 7천	141억 5천	25억
	투자	19억	3억	-
합계		724건	397건	60건
		317억 7천	144억 5천	25억

#### □ 보증지원 업종별 분류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조업	85	3,665	21.5	25.9
도소매업	184	6,200	46.5	43.8
건설업	11	420	2.8	3.0
서비스업	116	3,860	29.3	27.3
합계	396	14,145	100.0	100.0

## 이 종 결 의 원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1. 11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향후  
계획

☐ 별도제출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2. 최근 3년간 감사 관련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금융위 종합감사 등 기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는 총 10건임

감 사 명	감사 기간	비 고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10.03.15 ~ 03.19	별첨1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10.01.28 ~ 04.02	별첨2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	'10.09.06 ~ 10.13	별첨3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	'10.12.09 ~ 12.29	별첨4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11.03.17 ~ 03.25	별첨5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11.03.21 ~ 05.26	별첨6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운영실태	'11.07.04 ~ 07.29	별첨7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11.09.19 ~ 10.31	별첨8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12.01.09 ~ 02.28	별첨9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12.03.05 ~ 03.16	별첨10

#### ○ 감사원 지적사항(별첨11) 및 조치결과(별첨12)

#### □ 최근 3년간 자체(종합)감사는 총 2건임

감 사 명	감사 기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0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10.12.16 ~ 12.22	별첨13	별첨14
2011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11.12.26 ~ 12.30	별첨15	별첨16

<별첨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 금융위원회 )

2010. 4.

감 사 원

#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 II.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1. 2.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관리·감독 및 시행 부적정

(주의·시정)

3.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주의)

4.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주의)

5.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불납결손처분 부적정(주의)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목적

금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금융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이번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 범위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처리한 회계업무 전반과 “2009회계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였다.

##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성과보고서 검사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수행 관점에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고 성과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였는지 여부 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과 함께 성과지표를 통한 실적치가 객관적인

자료 및 출처 등에 의하여 검증가능하고, 측정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성과지표 실적치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0. 3. 15.부터 같은 해 3. 19.까지(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0. 4. 29.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 1. 일반 현황(2009. 12. 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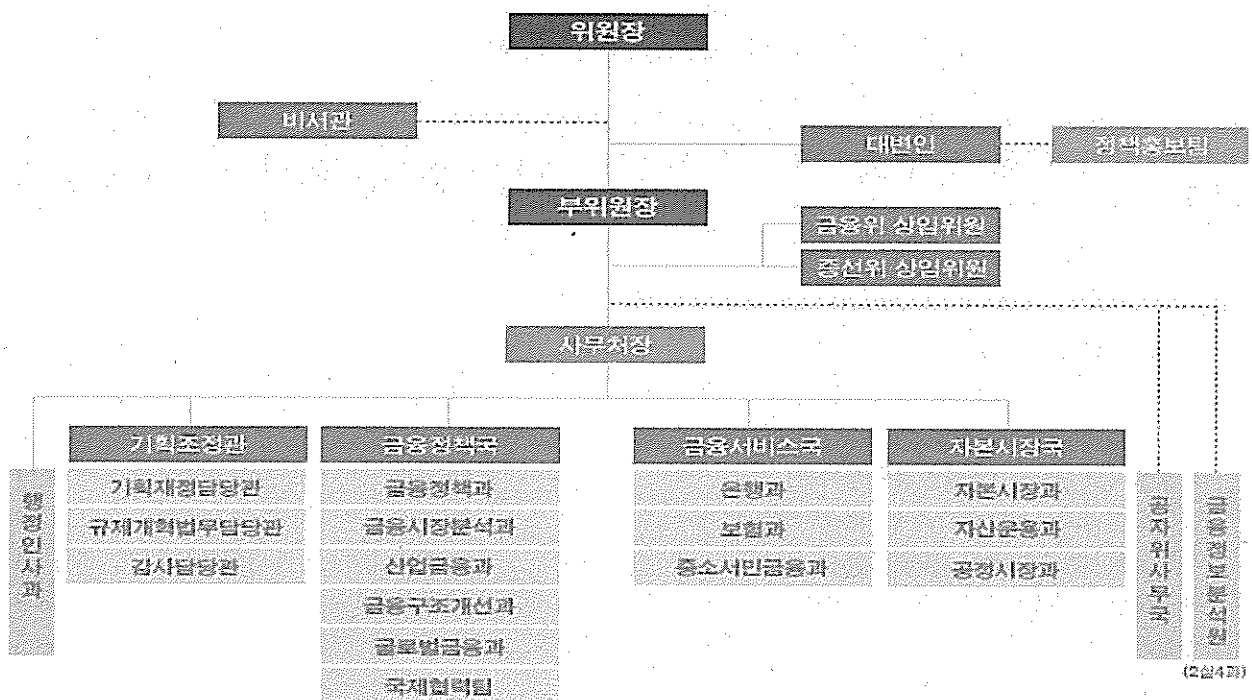
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그림 1]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다. (사무처) 본부에 1관 3국 1대변인 15과 2팀,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

[그림 1] 조직 현황



자료: 금융위원회

## 라. 인원

[표 1]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230	220	2	2	4	4	200	190	1	1	11	11	12	12
본 부	164	161	2	2	4	4	137	134	1	1	9	9	11	11
소속기관	66	59	0	0	0	0	63	56	0	0	2	2	1	1

주: 별도 정원(파견, 휴직 등) 제외함.

## 2.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금융위원회의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표 2]와 같이 58조 6,811억 원(일반회계 2조 8,868억 원, 기금 55조 8,76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50.5%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서민 등에 대한 지원강화로 2조 7,000억 원(한국산업은행 9,000억 원, 중소기업은행 8,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6,000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4,000억 원)을 출자하였기 때문이다.

[표 2]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단위: 억 원, %)

회 계 구 분		'09세출예산	'08세출예산	증감률
총 계		586,811	424,263	38.3
일 반 회 계		28,868	3,037	850.5
기금	소 계 (관리주체)	558,766	421,457	32.5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융위)	110,362	89,972	22.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위)	1,560	1,721	△9.3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57,909	30,743	88.3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24,595	16,030	53.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협중앙회)	20,912	13,250	57.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11,168	9,757	14.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117,819	170,412	△30.8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관리공사)	12,085	89,567	△86.5
	구조조정기금 (자산관리공사)	202,352	-	-

자료: 금융위원회

결국 일반회계 2조 8,868억 원 중 [표 3]과 같이 위 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출자금 등 2조 7,719억 원, 회계기금 간 거래 822억 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집행금액은 327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225억 원으로 전체의 68.8%에 해당(금융위원회가 직접 집행한 주요사업비는 102억 원)한다.

[표 3]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부 집행 현황

(금액단위: 억 원)

일반회계	28,868
인건비	139
기본경비*	86
주요사업비 -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출자 27,00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650 - 모기지론 이차보전 민간이전 39 - 역모기지론 출연 30	27,820 (좌측 금액 합은 27,719)
회계기금 간 거래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786 - IBRD차관 원금상환 31 - IBRD차관 이자상환 5	822

주: 기본경비는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월정직책금,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그 외 9개 기금이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2개 기금만 관리(한국은행에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기금은 개별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 3. 2009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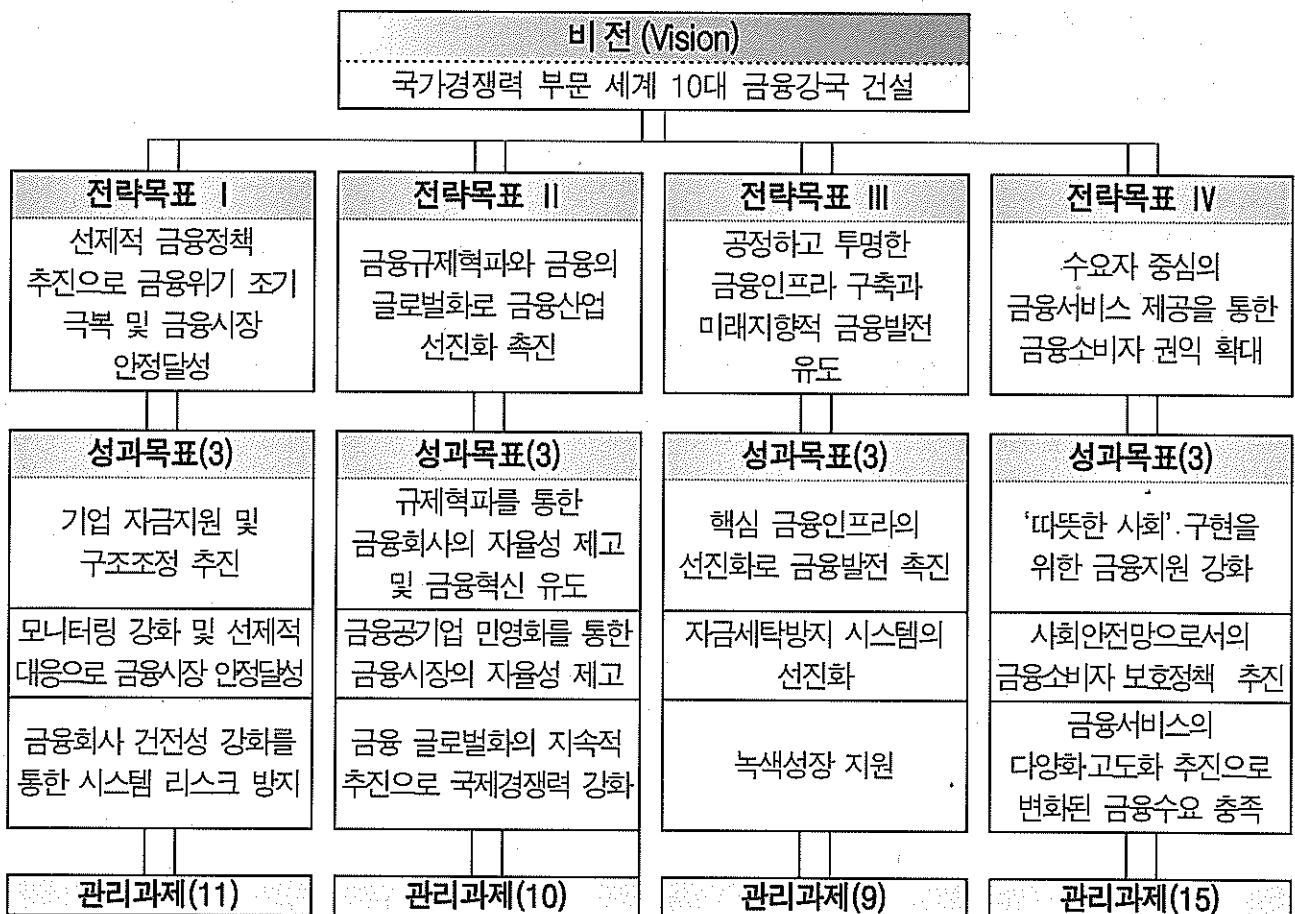
#### 가. 임무(Mission) 및 비전(Vision)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임무(Mission)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부문 세계 10대 금융강국 건설”을 비전(Vision)으로 설정하였다.

#### 나. 성과관리체계

위 비전 달성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4개의 전략목표, 12개의 성과목표, 45개의 관리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3개와 64개, 계 77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림 2] 금융위원회의 성과관리체계도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주의·시정요구

제 목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관리·감독 및 시행 부적정

소 관 청 ① 금융위원회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2005. 8. 31.)과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2007. 1. 31.)에 근거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 저소득·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리우대 모기지론으로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금리우대 보증자리론’을 개발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면서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내용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부합산 연소득 20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00백만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85m<sup>2</sup>)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우대 보증자리론으로 대출(실제 대출은 개별 은행에서 취급)해 주면서 소득구간별로 금리를 차별인하(0.5~1.0%p)<sup>1)</sup>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말 현재까지 6,871명에게 4,766백만 원을 이차보전 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1) 16백만 원 이하: 1.0%p 인하, 18백만 원 이하: 0.75%p 인하, 20백만 원 이하: 0.5%p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침)에 따르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주택전산망 전산자료를 조회<sup>2)</sup>하여 대출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대출실행 전 사전에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다주택 소유 여부를 재확인하며 대출실행 시 1주택 초과 보유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출실행 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출자와 약정한 「추가약정서」에도 “대출 실행일 이후에도 본인 또는 세대원의 전부 내지 일부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주택 이하인 상태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변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자와 세대원의 다주택 소유 여부를 2005년 11월 상품 출시 이후 사후적으로 한번도 검증하지 않았으며, 금융위원회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게다가 위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약정서」에는 사후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을 뿐 부당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2010년 3월 감사원에서 대출자와 그 배우자의 다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취급 금융기관의 부주의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출한 ‘취급기준 위반’ 사례가 3건(대출잔액 200백만 원, 부당 이차보전금 3백만 원), 대출 취급 시에는 무주택이었으나 대출 후 주택 추가구입 등으로 사후적으로 다주택이 된 ‘사후적 자격 상실’ 사례가 31건(대출잔액 1,552백만 원, 부당 이차보전금 26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에 따르면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백만 원)으로 다주택 소유자 총 34명에게 대출잔액 1,752,151,844원, 부당 이차보전금 29,131,935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3)</sup>

[표] 대출 부적격자 다주택 소유 현황

(단위: 명, 건, 원)

구 분	부적격 대출자 수	발건 주택수	부적격 대출잔액	부당 이차보전금
취급기준 위반 <sup>1)</sup>	3	6	200,072,054	2,939,440
사후적 자격 상실 <sup>2)</sup> (3주택자)	31 (3)	65 (9)	1,552,079,790	26,192,495 <sup>3)</sup>
계	34	71	1,752,151,844	29,131,935

주: 1. 주택소유자에게 대출실행

2. 세대별 1주택 사후유지 요건 위반(결혼으로 인한 주택취득 10명, 주택 추가 구입 21명)

3. 결혼으로 인한 주택취득 10명은 결혼일자를 알 수 없어 부당 이차보전금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음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특히 34명 중 3명은 금리우대 모기지론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후 추가로 2채 더 취득하는 등 주택 총 3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부산광역시 \*\*\* \*\* OO아파트 △△△동 △△△호를 보유하던 OOO의 경우 2008. 5. 7. 위 주택을 지인에게 증여하여 2008. 5. 8.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후 2008. 6. 20. 증여를 해제<sup>4)</sup>하는 등 사기성 대출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3) 한편 대출자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57건, 대출잔액 3,638백만 원으로 나타나 위 직계 존비속이 대출자의 동일 세대원인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의] 앞으로 다주택 소유자에게 금리우대 모기지론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시정] ①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의 '취급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3건의 대출금 200,072,050원을 회수하고 이차보전금 2,939,440원을 환수하여 국고에 반납하는 한편, '사후적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31건의 대출금 1,552,079,790원을 회수하고

② 앞으로 '사후적 자격 상실' 건에 부당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대출자와의 「추가약정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제5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별표]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와 같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임무-비전-전략목표(4개)-성과목표(12개)-관리과제(4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7개의 성과지표(성과목표 성과지표 13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64개)를 설정하고 각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한편, 위 관서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3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중 10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64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중 55개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표 1]과 같이 4개 전략목표의 달성률은 전체적으로 84% 수준이다.

[표 1] 전략목표 달성현황

전 략 목 표	사업규모(억 원)	성과지표 실적 (달성지표/전체지표, 달성률)
I.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33,667	17/17 (100%)
II.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23.1	15/19 (79%)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지향적 금융발전 유도	52.8	13/16 (81%)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4,709.5	20/25 (80%)
총 계	38,452.4	65/77 (84%)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기간(2010. 3. 15.~3. 19.) 중 위 13개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64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 계 77개 성과지표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1. 성과계획 수립 부적정

### ① “법 개정 여부” 등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위 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64개 중 14%인 9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들 지표는 목표 달성 여부가 국회 심의·통과 등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등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어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표 2]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현황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I-3-정책②)	RBC제도 시행	관련 법규 개정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II-1-정책①)	은행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금융상품 판매체계 개편 (II-1-정책②)	(가칭)금융상품판매법 제정	법 제정
보험회사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II-1-정책③)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회계·공시제도 개선 (III-1-정책①)	국제회계기준 관련 시행령 및 규정개정	시행령 및 규정개정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추진 (IV-2-정책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파생금융상품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 (IV-2-정책②)	관련 법령 개정	법령 개정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KPI 제도개선 (IV-2-정책③)	내부통제개선	법
헤지펀드 도입 (IV-3-정책②)	헤지펀드제도 도입 여부	시행령 개정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 ② 예산액에 따라 당연히 달성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IV-2-재정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및 저축장려금 지급  
 (성과지표) 기금출연실적(측정방법: 기금출연액, 목표치: 650억 원)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및 저축장려금 지급”의 성과지표를 ‘기금출연실적’, 목표치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금 예산액 ‘650억 원’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기금은 한국은행이 위탁관리하고 있고, 위 관서에서는 매년 전년

도에 기확정된 예산액 전액을 한국은행으로 전출하고 있어, 목표치인 기금출연액이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달성되기 때문에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 ③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을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 설정

(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IV-2-재정② 저축의 날 행사 개최  
(성과지표) 저축의 날 행사 개최(측정방법: 개최 여부, 목표치: 저축의 날 행사 개최)

관리과제 “저축의 날 행사”의 경우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저축의 날 행사 개최’로 하고 있으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74호)에 따르면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에 저축의 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1973년 법령 제정 이후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달성되는 등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 ④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불가능한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II.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성과목표) II-3.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II-3-재정③ 금융관련 국제협력  
(성과지표) 우리 금융회사의 상대국 진출 지원 실적(측정방법: FTA 금융협상 및 MOU체결실적, 목표치: 개선)

위 관서에서는 “금융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성과지표를 ‘우리 금융회사의 상대국 진출지원 실적’으로 설정하여 측정방법을 ‘FTA 금융협상 및 MOU 체결 실적’, 목표치를 ‘개선’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는 2008년 대비 FTA 금융협상 및 MOU 체결 실적이 증가하지 아니

하였는데도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목표치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달성률이 위 관서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리과제의 목표치로는 부적절하다.

## 2. 성과실적의 신뢰성 미흡

### ① 목표치를 임의로 유리하게 변경하여 실적 보고

(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IV-2-정책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성과지표) 특별펀드 조성(측정방법: 펀드규모, 목표치: 300억 원)

위 관서에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펀드 ‘300억 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국무총리실에서 시달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 추진계획」(2009. 9. 28.)에 따르면 성과지표 또는 목표치의 수정은 환경변화로 정책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등 환경변화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처의 자율적인 방법에 따르되, 각 부처가 참여하는 수정검토 TF를 반드시 거친 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성과지표 ‘특별펀드 조성’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무총리실 규정과 달리 목표치를 ‘100억 원(3년간 300억 원)’으로 임의로 수정한 후 성과보고서상의 목표치를 근거로 100% 달성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 결과 실제 달성률은 33.3%에 불과하나, 목표치를 임의로 수정함으로써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② 당해 연도의 실적치가 아닌데도 실적치로 제시

(전략목표) 1.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성과목표) 1-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

(관리과제) 1-1-정책②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

(성과지표) ①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성 여부(측정방법: 구성 여부, 목표치: 구성 여부)

② 위원 신규선임 및 사무국 인원 보강 여부(측정방법 및 목표치: 위원 신규 선임 및 인원 보강 여부)

위 관서에서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성 여부’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위원 신규선임 및 사무국 인원 보강 여부’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2008년 11월 이미 설치되었고, 위원의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보험협회 회장 등 관련 기관장이 선정하는 1~2명으로 되어 있으며, 2008년 12월 말 이미 각 기관에서 선정하는 등 위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전년도에 이미 달성되었거나, 과거 업무추진의 결과로 목표치가 자동적으로 달성되어 당해 연도 업무추진 성과와 무관한데도 당해 연도의 실적인 것처럼 표시하고는 목표달성으로 처리하였다.

###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① 앞으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관련되어 있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고

②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과계획서의 목표치를 임의로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과거연도의 실적을 당해 연도 사업의 성과로 측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

<b>임무</b>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
<b>비전</b>	국가경쟁력 부문 세계 10대 금융강국 건설
<b>전략목표 및 성과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략목표 I.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목표 I-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li> <li>- 성과목표 I-2.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 안정 달성</li> <li>- 성과목표 I-3.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방지</li> </ul> </li> <li>▪ <b>전략목표 II.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목표 II-1. 규제혁파를 통한 금융회사의 자율성 제고 및 금융혁신 유도</li> <li>- 성과목표 II-2.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자율성 제고</li> <li>- 성과목표 II-3. 금융 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li> </ul> </li> <li>▪ <b>전략목표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지향적 금융발전 유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목표 III-1. 핵심 금융인프라의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li> <li>- 성과목표 III-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li> <li>- 성과목표 III-3. 녹색성장 지원</li> </ul> </li> <li>▪ <b>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목표 IV-1.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li> <li>-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li> <li>- 성과목표 IV-3. 금융서비스의 다양화고도화 추진으로 변화된 금융수요 충족</li> </ul> </li> </ul>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는 2009. 3. 16. ○○○○연구원과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연구' 용역계약(계약기간: 2009. 3. 16. ~ 9. 16. 계약금액: 45,000,000원)을, 같은 해 8. 28.에는 ○○○○○ 산학협력단과 '테러자금조달 방지체제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연구 용역계약(계약기간: 2009. 8. 28. ~ 11. 9. 계약금액: 35,000,000원)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계약서」상 최종보고서는 각각 2009. 9. 16. 및 같은 해 11. 9.까지 50부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보고서 작성이 지연되자 위 관서에서는 각각 같은 해 12. 15. 및 12. 28.까지로 작성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연구용역 계약서」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사완료한 후 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 이외에는 지체상금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도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는 이들 최종보고서 초안<sup>1)</sup>을 2009년 12월 말경 컴퓨터 파일로 받았다는 이유로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최종보고서 50부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같은 해 12. 23.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접수조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2. 28. 두 과제의 용역비 전액 총 80,000,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최종보고서 50부는 2010년 3월 말 현재 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용역 마무리 작업에 대한 인센티브 저하로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 완성도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지 않은 연구용역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개발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1) 최종보고서 초안과 최종보고서의 내용차이: 최종보고서는 2010년 2월 FATF 총회에서 FATF 측과 협의한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이행계획(「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 포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게 됨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불납결손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 위반자에게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 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미수납액 중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과징금 등을 불납결손처분<sup>1)</sup>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관서는 [표 1]과 같이 2008년에 과징금 및 과태료 26,194백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7,825백만 원을 수납받고 2,017백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9년에는 2008년 미수납된 16,352백만 원 및 신규 13,921백만 원 등 총 30,273백만 원을 부과하여 7,251백만 원을 수납받고 834백만 원을 불납결손처분하였다.

1) 2005. 6. 29. 금융위원회 수입징수관(행정인사과장)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징수업무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과징금 등 징수업무 및 결손처분관련 중요사항은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함.

[표 1]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해당연도	징수결정액 <sup>2)</sup>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소계	납기 미도래	거소불명· 재력부족	징수유예
2008년	26,194	7,825	2,017	16,352	2,062	13,810	480
2009년	30,273	7,251	834	22,188	4,210	15,394	2,584

주: 전년도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 징수결정액에 포함됨.

자료: 금융위원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채무면제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sup>2)</sup>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 불납결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채납자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징수결정 금액을 수납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 결정통지 등의 사유가 있어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을 때에만 불납결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0년 3월 감사원 감사기간 중 위 관서의 결손처분 내역 중 결손액이 큰 대상을 표본조사한 결과 결손액이 690백만여 원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2004. 7. 15. 폐업)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으로 ○○○○공제조합 출자금 43백만여 원<sup>3)</sup>과 차량 △△△△△(자동차 등록번호 #####, 2001년 8월 14일 제작)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

3) 2002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는 장부가액 12백만여 원, 시가 20백만여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그런데도 위 관서는 위 업체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2007. 4. 27. 재산조사 결과 재산이 없었으며 2008. 11. 28. 현장조사 결과 최후 주소지에 법인이 존재하지 않고 폐업하였다는 사유로 [표 2]와 같이 위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의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이 2010. 11. 23.<sup>4)</sup>인데도 과징금 51백만여 원은 2008. 10. 29.에, 639백만 원은 2009. 5. 22.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불납결손하였다.

[표 2] (주)○○○○○의 불납결손 내역

(금액단위: 원)

부과일	과징금 체납액	위원회 판단 소멸시효 완성일	불납결손 결정일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
2003. 7. 23.	51,400,000	2008. 10. 29.	2008. 12. 11.	2010. 11. 23.
2002. 6. 14.	639,000,000	2009. 5. 22.	2009. 12. 29.	2010. 11. 23.

자료: 금융위원회

그 결과 위 관서에서 위 업체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하였으면 회수할 수 있었던 과징금(○○○○공제조합 출자금만도 2002년 기준 20백만여 원, 2010년 기준 43백만여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sup>5)</sup>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결손 처분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2004. 5. 31. 위 관서는 (주)○○○○○에 부과한 과징금 51백만여 원과 639백만 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소멸시효 중단 목적으로 (주)○○○○○ 소유 아파트(울산광역시 남구 \*\*\* \*\*\*)를 압류하였고, 위 부동산이 2005. 11. 24. 법원 강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5. 11. 24.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은 2010. 11. 23.임.

5) (주)○○○○○의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없다가, 2007. 11. 27. 북부산세무서에서 889백만여 원을, 2008. 1. 17. 서대구세무서에서 51백만여 원을 압류함. 따라서 위 관서는 2007년 11월 이전에 채권압류한 후 법원에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었음.

<별첨 4>

# 감사결과보고서

-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 -

2011. 7.

감 사 원

#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 II. 대한생명 매각 경위 등 주요 현황

1. 공적자금 지원 전 대한생명 매각 경위
2. 대한생명 공적자금 지원 경위
3. 대한생명 매각 경위
4. 예금보험공사의 국제중재 관련 경위

## III. 감사 결과

1. 인수자격 관련 특혜 논란
2. 공적자금 손실 등 가격 적정성 논란
3. 매각과정에서의 기망행위 관련 논란
4. 조치할 사항

[ 별 표 ]

## 표 목 차

- [표 1] 1~3차 입찰참가자 현황
- [표 2] 대한생명 관련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내역
- [표 3] 대한생명 지분 변동 현황
- [표 4] 대한생명 매각 관련 주요 경위
- [표 5] 한화계열 3사에 대한 제재조치 및 이행결과
- [표 6] ○○그룹과 <<그룹에 대한 제재조치
- [표 7] 2001년 대한생명 경영실적 추이
- [표 8] 감정평가 방식별 63빌딩 감정평가금액
- [표 9] 대한생명의 기업가치 구성 내역
- [표 10] 할인율 적용에 따른 대한생명의 신계약가치 비교
- [표 11] 협상일자별 대한생명 매각협상가격 변동 추이
- [표 12] 대한생명과 관련된 소송에서의 승소 내역
- [표 13] 한화그룹의 부채비율 현황
- [표 14] 대한생명 등에서 @@@(주)로부터 분양받은 내역

## 그림 목차

- [그림] 대한생명 매각 관련 주요 기관별 업무

# I.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국회에서 2010. 10. 1.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에 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 한다)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이를 점검하여 국회에 그 실태를 보고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감사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국회 감사요구 내용 >

대한생명 매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자격 문제, 기망행위 여부, 매각가격의 적정성 문제, 공적자금 손실문제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 2.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10년 전에 있었던 매각절차 및 매각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는데 상당 시일이 소요되었고, 당시 관련자들도 이미 상당수가 퇴직한 후였기 때문에 면담을 통한 진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감사로 접근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국회 감사요구 내용을 포함하여 그동안 언론·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밝히고자 노력하면서 인수자격 관련 특혜 논

란, 공적자금 손실 등 가격 적정성 논란, 매각과정에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논란을 감사중점으로 설정하였다.

### 3. 감사 기간 및 인원

2010. 12. 9.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15일간 감사인원 11명(공인회계사 1명, 변호사 1명 포함)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1. 6. 23.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대한생명 매각 경위 등 주요 현황

### 1. 공적자금 지원 전 대한생명 매각 경위

- '99. 2. 13. : 금융감독원, 대한생명 자산·부채 평가 및 특별검사 착수

▶ 실사 결과, '98. 12. 31. 기준으로 순자산 부족액 2조 9,080억 원

- '99. 3. 23. : 구 금융감독위원회, 경영관리명령 부과 및 직접 매각 추진

- '99. 5~7월 : 구 금융감독위원회, 3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

[표 1] 1~3차 입찰참가자 현황

구 분	1차('99. 5. 8.)	2차('99. 6. 7.)	3차('99. 6. 28.)
참가자 수	4개사	8개사	5개사
입찰 참가자	○○ <sup>1)</sup> , ○○, ○○(미국), ○○(미국)	한화, ○○, ○○, ○○(미국), ○○(미국), ○○(미국), ○○(홍콩), ○○(홍콩)	한화 <sup>2)</sup> , ○○(미국), ○○(미국), ○○(미국), ○○(홍콩)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료 재구성

### 2. 대한생명 공적자금 지원 경위

- '99. 9. 14. : 구 금융감독위원회,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 '99. 10. 1. : 예금보험공사, 500억 원 출자

- '99. 11. 25. : 예금보험공사, 2조 원 추가 출자

1) ○○그룹은 자금 조달 가능성은 높으나, 투자 규모(1조 원)가 다른 회사(2조 원)에 비해 적어 탈락하였음

2) 한화그룹은 계열사인 ○○○○○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문제로 탈락하였음

- '00. 4. 12. : 경영정상화 세부 이행계획 약정서 체결
- '00. 12. 2. : 국회, 추가 공적자금 조성(1.5조 원) 동의
- '01. 9. 6. : 예금보험공사, 1.5조 원 추가 출자

[표 2] 대한생명 관련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일 자	관련 금액	지원 사유 및 회수 방법
지 원	합 계	35,500	-
	'99. 10. 1.	500	▪ 완전감자에 따른 출자
	'99. 11. 25.	20,000	▪ 경영정상화를 위한 순자산 부족분 지원
	'01. 9. 6.	15,000	▪ 경영정상화 및 매각추진을 위한 순자산 부족분 지원
회 수 <sup>3)</sup>	합 계	12,406	-
	'02. 12. 12.	8,236	▪ 예보 보유 지분 51% 매각(1주당 2,275원)
	'08. 9. 29.	2,584	▪ 예보 보유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 이행(1주당 2,275원)
	'10. 3. 5.	1,586	▪ 대한생명 상장공모 시 구주매출에 참여(8%, 1주당 8,200원)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료 재구성

### 3. 대한생명 매각 경위

- '01. 3. 20.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제3차), 대한생명 매각추진방안 의결
- '01. 5. 30. : 예금보험공사, 매각자문사 등 선정

▶ 매각주건사로 메릴린치&○○은행을, 법무법인으로 ㉠과 ㉡를, 회계법인으로 ㉢회계법인을, 보험계리법인으로 ㉣를 선정하였음

- '01. 8. 7.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제11차), 대한생명 세부 매각추진방안 의결

▶ 매각대상 주식은 51% 이상, 자격은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  
▶ 63빌딩은 투자자 성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는 분리매각)

3) 2010년 12월 현재, 예보의 잔여지분(215백만 주)을 감안하면 추가로 약 1조 7천억여 원의 공적자금이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215백만 주 × 1주당 8,200원 = 1조 7,630억 원)

- '01. 10. 8. : ①①와 한화 컨소시엄, 인수의향서 제출
- '02. 3. 13. : 예금보험공사, 구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자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
- '02. 3. 20. : ①①, 거래구조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입찰 포기
- '02. 6. 21. : 구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에 투자자 자격요건에 대한 회신
- '02. 6. 27.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제26차), 한화 컨소시엄을 조건부 우선협상자로 선정

- ▶ 대한생명 인수 후, 3년간 한화계열사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 금지
- ▶ '05년 말까지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위 조건들 미충족 시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지분에 대해 콜옵션 행사)

- '02. 9. 18. : 구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에 투자자 자격요건에 대한 수정 회신
- '02. 9. 23.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제32차), 한화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자로 선정,  
대한생명 지분 51% 매각 의결
- '02. 10. 28. : 예금보험공사, 한화 컨소시엄과 대한생명 매각 본계약 체결
- '02. 12. 12. : 매각대금 수령 및 지분양도 등의 매각절차 완료

- ▶ 매각대금 8,236억 원은 2차례에 걸쳐 분할 수령('02. 12. 12., '04. 12. 13.)

[표 3] 대한생명 지분 변동 현황

(단위: %)

구 분		'02년 10월	'03년 12월	'07년 12월	'08년 9월	'10년 3월 <sup>4)</sup>
한 화 컨소시엄	한화그룹	30.50	34.00	51.00	67.00	50.25
	오 릅 스	17.00	17.00	-	-	-
	맥쿼리생명	3.50	-	-	-	-
예금보험공사		49.00	49.00	49.00	33.00	24.75
기 타 주 주		-	-	-	-	25.00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료 재구성

4) 2010년 12월 현재 대한생명의 대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한화그룹[○○ 24.88%, ○○ 21.67%, ○○○ 3.70%]에서 50.25%, 예금보험공사에서 24.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4. 예금보험공사의 국제중재 관련 경위

○ '04. 11. 17. : 검찰, ○○○○ ◎◎◎ @@@(대한생명 매각 당시 협상 대표)에  
대한 수사 착수

○ '05. 2. 15. : 검찰, 위 사람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 제기

▶ 한화그룹과 맥쿼리생명 사이에 이면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 내용을 숨긴 채, 전략적 투자자인 것처럼 투자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

○ '05. 7. 1. : 서울지방법원, 1심 무죄(입찰방해)

○ '05. 11. 18. : 서울고등법원, 2심 무죄(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 '06. 6. 16. : 대법원,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확정

▶ 맥쿼리생명에 2,000만 달러를 빌려주고, 컨소시엄에 참가한 것처럼 위장해 입찰과 업무를 방해한 부분은 무죄, 재정경제부장관 등에게 뇌물공여 의사표시한 부분은 유죄

○ '06. 7. 28. : 예금보험공사, 매매계약 무효·취소를 구하는 국제중재 신청

○ '08. 7. 23. : 국제중재법원, 예금보험공사의 청구를 기각(패소)

○ '08. 9. 29. : 예금보험공사, 한화그룹 앞으로 콜옵션 대상 주식 이전

### Ⅲ. 감사 결과

#### 1. 인수자격 관련 특혜 논란

한화그룹에서 대한생명을 인수하려던 당시(2002년),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제4호 등5)에 따라 부채 비율이 200% 이하이고,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이 아니며6),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 등 주요 출자자7)(이하 “대주주”라 한다)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그런데 당시 한화 컨소시엄8)(한화그룹+오릭스+맥쿼리생명)에 속한 한화그룹은 2001년 12월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32%로 200%를 초과하고 있었고, [가]·[나]·[다] 등 과거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 구 금감위 규정(「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부실 책임을 면하는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실질적인 책임 여부에 있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었다.

또한, 2002. 3. 14. 계열사에 대해 분식회계(주식회사 ㉠ 3,310억 원, ㉡ 주식회사 1,214억 원, 주식회사 ㉢ 3,554억 원)를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는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있어 위 대주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대한생명 인수 자격이 없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다.

- 5) 「보험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별표 1]과 「보험업 감독규정」 제18조 제2항 [별표 2]에 부채 비율이 200% 이하이고,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이 아니며,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 등 주요 출자자(대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음
- 6) 「보험업 감독규정」 제18조 제2항 [별표 2]에 구 금감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 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었음
- 7) '주요 출자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함
- 8) 2001. 8. 7. 제11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대한생명 세부 매각추진방안을 의결하면서 투자자 자격을 “원칙적으로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함에 따라 당시 보험사가 없었던 한화그룹(59.8%)에서는 일본 소매금융기관인 오릭스(33.3%)와 호주 생명보험사인 맥쿼리생명(6.9%)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음

이러한 논란에 대해 ① 매각심사소위원회(이하 “매각소위”라 한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화 컨소시엄을 조건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라 한다) 의사결정의 적정 여부, ② 공자위 사무국의 매각소위 심사결과보고서 조작 여부, ③ 대주주 변경 시에도 보험업 신규허가 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④ 한화의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로서의 책임 여부, ⑤ 한화계열사 분식회계로 인한 인수 자격 상실 여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 (1) 공자위 의사결정의 적정 여부

### < 검토 내용 >

- 매각소위에서 한화 컨소시엄은 대한생명 인수 자격이 없다고 결론내리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도 공자위에서 우선 협상대상자<sup>9)</sup>로 선정한 의사결정의 적정 여부

### ① 2002년 6월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한 상황

1999년 구 금감위에서 3차례에 걸쳐 대한생명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인수가격을 너무 낮게 제시(㉠㉠)하였거나 금융기관 부실책임자로서 인수자격이 없다(한화)라는 사유 등으로 모두 탈락된 이후, 정부에서 2001년까지 3.5조여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다시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2002년 6월 당시 인수대상자는 과거 대한생명 인수에 참여하였다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제척된 한화 컨소시엄만이 유일하게 남은 상황으로 같은 해 4월부터 위 한화 컨소시엄의 인수자격과 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온 매각소위는 같은 해 6. 18. 제34차 매각소위에서 4명 중 3명의 의견으로 한화 컨소시엄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데 자격이 없다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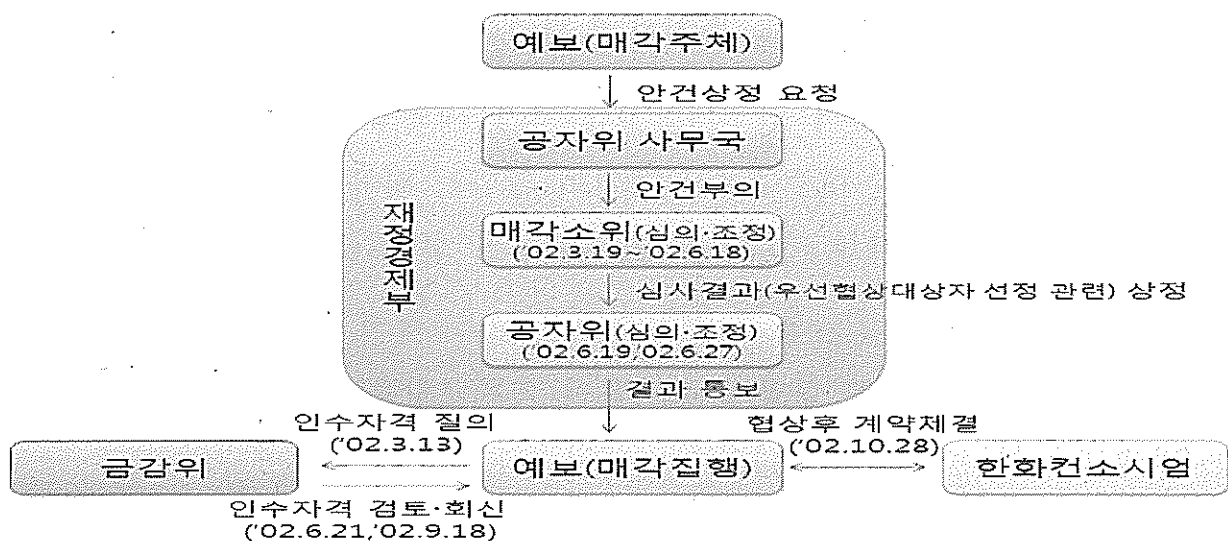
9)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기간 동안 매각협상에 우선적으로 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므로 매각 과정에서 큰 의의를 지님

그러나 2002. 6. 27. 제26차 공자위에서는 「보험업법」 제5조의3 등에 따른 보험사의 대주주 요건은 신규 설립할 때의 허가 요건으로서 기존 보험사를 인수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구 금감위의 유권해석을 함께 검토하여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찬성의 표결로써 위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같은 해 9. 23. 위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자로 결정하였다.

## ② 검토 중점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해서 [그림]과 같이 매각주체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라 한다)에서 대한생명 안전 상정을 요청하면 매각소위에서 공자위 사무국으로부터 받은 대한생명 매각 관련 심사보고서 등의 안전을 심의·조정한 후, 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공자위 안전으로 올려 이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조정을 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그림] 대한생명 매각 관련 주요 기관별 업무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02년 9월까지 공자위(제1차~제32차)와 매각소위(제1차~제35차) 회의 중에서 대한생명 관련 안건 자료, 의사경과요지, 의결서 등을 검토하고, 당시 관련자들과의 전화·대면 면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공자위 의사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 ③ 검토 결과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 재정경제부 산하에 공자위를 두도록 했으므로 대한생명 매각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최종적인 심의·조정 권한은 공자위에 있고, 매각소위는 단지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자산 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자위 소속으로 설치된 산하기구로서 공자위 기능을 보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비록 2002. 6. 18. 제34차 매각소위에서 4명 중 3명의 의견으로 한화 컨소시엄으로의 대한생명 매각을 반대하였으나, 공자위가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위 매각소위 심사결과에 기속되어야 하는 의무는 없고, 위 매각소위에서도 위 컨소시엄이 대한생명 인수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매각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공자위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므로 매각소위의 반대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공자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02. 6. 27. 제26차 공자위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구 보험업 법령상의 대주주 요건을 한화 컨소시엄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구 금감위의 인

수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함께 검토하여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찬성(찬성 4, 반대 2, 불참 1)의 표결로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④ 내용 판단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최종 결정 권한은 공자위에 있고, 그 공자위에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표결로써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그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공자위 사무국의 매각소위 심사결과 보고서 조작 여부

##### < 검토 내용 >

- 공자위 사무국에서 매각소위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의견을 다수의견으로 왜곡하는 등 심사결과 보고서를 조작하여 공자위 안건으로 상정했는지 여부

#### ① 공자위 사무국의 업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0조 제1항 및 구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등에 따르면 공자위의 업무 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해 구 재정경제부 산하<sup>10)</sup>에 공자위 사무국을 두어 공자위 및 매각소위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자위 사무국에서 3.5조여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 매

10) 공자위는 2000년 12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구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나, 2008년 2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2009년 4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다시 설치되었음

각과 관련하여 [표 4]와 같이 2002년 6월과 7월 사이에 개최된 공자위와 매각소위를 보좌하고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4] 대한생명 매각 관련 주요 경위(2002년 6~7월)

- 2002. 6. 12. 사무국, 매각소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통보
- 2002. 6. 17. 사무국, 공자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통보
- 2002. 6. 18. 제34차 매각소위 개최, 한화의 인수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 2002. 6. 19. 제25차 공자위 개최, 구 금감위와 ○○학회 의견 보완 요청
- 2002. 6. 24. 구 재정경제부, 구 행정자치부에 ●●● 위원 해촉 의뢰
- 2002. 6. 25. 사무국, 매각소위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공자위 안건 수정 보고  
사무국, 공자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통보
- 2002. 6. 26. 구 행정자치부, 구 재정경제부에 ●●● 위원을 해촉하는 내용의 발령 통지
- 2002. 6. 27. 제26차 공자위 개최, 한화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2002. 7. 2. 제35차 매각소위 개최, 최종 심사결과를 사후 심의하여 수정 의결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료 재구성

## ② 검토 중점

한화 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 자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2002년 6월 당시 공자위(제25~26차)와 매각소위(제34~35차) 회의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당시 관련자들<sup>11)</sup>과의 면담과 제출된 이메일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심사결과 보고서 조작 여부를 확인하였다.

## ③ 검토 결과

2002. 6. 18. 제34차 매각소위에서 한화 컨소시엄의 경우, 대한생명 인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자위 사무국은 2002. 6. 19. 제25차 공자위

11) 2002. 6. 18. 제34차 매각소위에서 한화 컨소시엄이 대한생명 인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자위 안건으로 보고하도록 위임했던 매각소위 위원(▲▲▲)과 당시 공자위 사무국 실무자

안전으로 올리기 위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 사무국이 매각소위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반발<sup>12)</sup>이 있어 공자위 안전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매각소위 위원장(▶▶▶)이 구두 보고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2002. 6. 27. 제26차 공자위 안전에는 매각소위의 반대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공자위에서도 표결을 통해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공자위 의결 후인 같은 해 7. 2. 제35차 매각소위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추인까지 하였으므로 매각소위 의견이 왜곡·조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사무국은 2002년 6월 대한생명 매각 입찰에 유일하게 참여한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자위 위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매각소위 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공자위에 제대로 전달하는 한편, 공자위 위원의 출석관리를 제대로 하여 공자위 의결에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으나, 다음과 같이 위 사무국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

#### 문제점 가) 대한생명 매각 관련 매각소위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불철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9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정부와 예보 등 자산 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자위 산하에 매각소위를 두도록 되어 있고, 매각소위는 그 심사결과를 공자위에 보고하도록 규정<sup>13)</sup>되어 있다.

12) ▲▲▲ 위원은 사무국에서 작성한 심사결과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메일을 송부함

13) 「매각심사소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도 매각소위는 자산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3조의1에도 매각대상 자산 및 매각의 기본방안을 결정하는 사항을 심사·의결하고, 최종심사 결과 및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사항에 대해 공자위에 보고하도록 규정

또한, 「매각심사소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사무국장은 의결권이 없음)하여 의결서에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구 재정경제부 소속 직원은 매각소위 회의의 의사경과요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무국은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 매각소위 위원들의 논의 및 찬성·반대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충분히 반영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자위 안건으로 올리는 등 보좌 역할을 제대로 하여, 심사결과 보고서 ‘바꿔치기’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2002. 6. 18. 개최된 제34차 매각소위에서 대한생명 매각입찰에 참여한 한화컨소시엄에 대한 투자제안서를 심사한 결과, 위 한화 컨소시엄의 경우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별표 1]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매각소위 위원 중 한 명인 ♠♠♠ 위원이 그 내용을 기재<sup>14)</sup>하여 공자위에 안건으로 보고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공자위에서 매각소위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별표 1] “사무국과 ♠♠♠ 위원 초안 등 비교”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사무국<sup>15)</sup>은 위 매각소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조기 민영화를 통한

---

하고 있음

14) 공자위에 제출한 심사보고서는 매각소위 위원들의 견해를 토대로 재작성하되, 의결권 있는 과반수(4명 중 3명)가 한화 컨소시엄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명시하기로 의결하였음

15) 2002. 6. 18. 당시 사무국장은 매각소위 회의에서 “한화에 파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내가 안 판다.”라고 하였으나, 같은 해 6. 19. “대한생명 인수 자격에 있어 한화 컨소시엄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책상 필요하면 협상안을 제시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였음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 및 국가 신인도 제고, 매각절차 장기화에 따른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화 컨소시엄이 대한생명 인수 후에 일정시점까지 위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인수 후 일정기간 동안 대출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34차 매각소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매각소위 심사결과와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자위 안전으로 상정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매각소위 위원들이 위 사무국이 임의로 작성한 위 안전에 반발함에 따라 위 안전을 정식 매각소위 심사결과 보고서로 채택하지 못하였고, 2002. 6. 19. 개최된 제25차 공자위에는 최종 심사결과 보고서를 상정하지 못하였으며, ▶▶▶ 매각소위 위원장이 구두로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sup>16)</sup>하여 공자위는 당일 위 한화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구 금감위와 ○○학회의 의견을 보완하여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같은 해 6. 27. 개최된 제26차 공자위에도 여전히 한화 컨소시엄이 대한생명 인수 후에 일정시점까지 위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된 안전이 상정<sup>17)</sup>되어 위 한화 컨소시엄이 조건부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되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공자위 의결이 있는 뒤에 이미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같은 해 7. 2. 매각소위<sup>18)</sup>를 다시 열어 이를 추인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와 다르게 공자위 등이 운영된 유일한 사례가 되었으며, 그 후에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심사결과 보고서 ‘바꿔치기’ 논란 등의 빌미가 되었다.

16) 회의 종료 후에 ♠♠♠ 위원은 사무국에서 작성한 심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였음

17) 제25차 공자위 회의 후, 위 사무국에서는 매각소위 위원들과 이메일 등을 통해 재협의하여 제26차 공자위 안전으로 상정하였음

18) 매각소위에서 최종 심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음

## 문제점 나) 공자위 위원 출석관리 불철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자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무국은 공자위 위원들에 대한 출석관리를 하면서, 2002. 4. 12. 공자위 위원 8인 중 대통령 위촉으로 선임된 ●●● 위원<sup>19)</sup>의 경우 같은 해 5월 (정확한 날짜 미상)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정식 해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원 신분으로 계속 남아 있었는데도, 같은 해 6. 17. 및 6. 25. 제25차 및 제26차 공자위 회의 개최사실을 위원들 및 관계자에게 통보하면서 ●●● 위원에 대해서는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제26차 공자위 회의 개최 (2002. 6. 27.)를 앞둔 같은 해 6. 24. 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 위원에 대한 해촉을 의뢰하여 개최 전날인 같은 해 6. 26. 해촉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6. 27. 개최된 제26차 공자위 회의에서는 위 공자위 재적 위원이 당초 8명(의결정족수 5명)에서 7명(의결정족수 4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의결정족수에 필요한 위원의 숫자에 영향을 주었고, 한화 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각소위의 반대의견이 있어 논란이 있다가 결국 위원 4명의 찬성<sup>20)</sup>으로 가결(우선

19) 당초에 ●●● 위원의 임기는 2002. 4. 12.부터 2004. 4. 11.이었음

20) 제26차 공자위 회의에 매각소위 위원장(▶▶▶▶)은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불참하였음

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위원 1명의 표결가치가 부각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 (3) 대주주 변경 시에도 보험업 신규허가 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검토 내용 >

- 매각소위 등의 의견처럼 보험업을 신규로 설립허가할 때에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요건'을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한화그룹(대주주 변경)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① 2002년 구 금감위 공식의견(유권해석)과 관련한 상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년 당시 한화그룹은 「보험업법」 제5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2002. 6. 18. 제34차 매각소위에서도 현행 법령상 기존 보험사를 인수할 때에는 주요 출자자 요건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나,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인수자가 충분한 경영·출자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위 요건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2002. 3. 13. 예보에서 구 금감위에 대한생명 매각 관련 투자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2002. 6. 19. 제25차 공자위에서 매각소위로 하여금 한화 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 자격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공식의견을 접수한 후에 이를 최종보고하도록 하였다.

이후 구 금감위는 같은 해 6. 21. 당시 보험업법령(「보험업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보험회사 설립허가 시에만 주요 출자자 자격요건을 규

정하고 있으나, 설립 이후 대주주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보험업법」 제7조의2에 따라 대주주 변동 사항은 금감위(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 보험사(대한생명)를 인수하는 한화그룹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서는 신규 설립허가 시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자격요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적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식의견을 회신하였고, 같은 해 6. 27. 제26차 공자위에서 이 공식의견을 바탕으로 한화 컨소시엄을 조건부 우선 협상대상자<sup>21)</sup>로 선정하였다.

## ② 검토 중점

2002. 6. 27. 제26차 공자위에서 한화그룹에 대한 대한생명 인수 자격 논란을 종결하고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구 금감위의 공식의견(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자료 등을 검토하고, 관련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위 의견 및 검토 절차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다.

## ③ 검토 결과

「보험업법」 제7조의2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이 있는 경우에 구 금감위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구 금감위에서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주식을 취득(지분 51% 이상)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 위 규정에 따라 대한생명으로 하여금 최대주주 변경 내용을 보고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구 금감위가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된

21) 예외로 하여금 한화 컨소시엄과의 협상과정에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차단벽(Fire Wall)을 마련하고 대한생명의 대주주로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

한화그룹에 신규 설립허가 시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조건과 같은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주식 양수도 계약 자유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보험업법」에 최대주주 변경 시 주요출자자 조건을 적용한다는 명시적 근거<sup>22)</sup>가 필요하였다.

또한, 2000. 1. 21. 보험회사 신규 설립허가 시 주요 출자자 조건을 갖추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된 이후, 구 금감위는 ■■화재, ●●화재 등 다른 부실 보험회사를 매각하면서 변경된 최대주주<sup>23)</sup>에게도 위 법에 따른 주요 출자자 조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화 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에만 이를 적용하게 되면 법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와 같이 당시 「보험업법」에 최대주주를 변경할 때에 주요 출자자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고, 다른 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 주요 출자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 금감위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자격에 대하여 법적 제한이 없다<sup>24)</sup>고 한 공식의견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 ④ 내용 판단

「보험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시 구 금감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 최대주주 변경 시에도 신규 설립허가 시 요구되는 주요 출자자 조건을 적용하려면 명시적 법규정이 필요한 점, 다른 부실 보험회사를 인수한 대

22) 2003. 8. 30 개정된 「보험업법」 제6조 제4항에서 보험회사의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주요 출자자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금감위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두었음

23) 2001. 12. 7. ◆◆의 ■■화재 인수(지분 100%)와 2002. 1. 12. ●●의 ●●화재 인수(지분 100%)에도 신규 설립허가 시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았음

24) 최대주주 변경 시에는 보험회사 신규 설립허가 시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조건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화그룹의 부채비율 과다 여부는 보험사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없었음

주주에게 위 주요 출자자 요건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구 금감위에서 주요 출자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한화그룹에 대해 기존 보험사인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데 있어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한 공식의견(법령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4) 한화의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로서의 책임 여부<sup>25)</sup>

##### < 검토 내용 >

- 과거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로서 한화그룹이 책임 이행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책임을 면책하도록 한 금융당국 결정의 적정 여부

#### ① 한화그룹의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로서 책임 이행과 관련한 상황

한화그룹은 1998년 퇴출된 [가가가가]과 [나나나나] 대주주로서 2002년 2월 말 기준으로 각각 1조 4,794억 원, 1조 4,874억 원 등 약 3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였다.

2000. 2. 24. 구 금감위에서 ○○○○의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를 승인하면서 ○○○○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퇴출된 [가가가가]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sup>26)</sup>에 따라 1,300억 원<sup>27)</sup>의 증권금융채권(이하 “증금채”라 한다)을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25) 이미 검토한 “(3)항”과 같이 한화 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 시에만 보험업 법령상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한화그룹의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로서의 책임 유무는 대한생명을 인수하는데 관계없는 사안이나, 실질적인 책임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하였음

26)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새로운 금융업 진출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부실의 일정 부분을 부담할 경우에는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경제정책조정회의(1999. 10. 22.)를 근거로 2000. 1. 14. 금감위 의결로 마련된 규정임

27) 순자산부족액(8,352억 원) × 대주주 지분율(33.3%) × 1/2 = 1,300억 원으로 당시 대주주 지분율은 실제로 17.38%였으나 대주주 지분율이 33.3% 이하인 경우에는 33.3%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임

이후, 구 금감위에서는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재무구조 개선효과도 제한적이어서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의 승인조건 변경 신청에 따라 증금채 매입기간을 기존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2000년 12월까지 3회로 분할<sup>28)</sup> 매입하는 것으로 2000. 8. 25. 변경 의결하였다.

한편, 2001. 3. 16. 구 금감위 간담회<sup>29)</sup>에서 ○○○○에 대한 선물업 허가에 대해 검토하면서 [나나나나] 부실책임과 관련하여 IMF 관리체제 이전에는 임원 선임 등에 있어 정부 통제 및 간여가 있어 대주주의 경영참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는 이유로 IMF 당시 퇴출된 은행에 대해 대주주의 경영참여 및 부실책임이 없는 것으로 포괄의제하자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같은 해 4. 27. 구 금감위에서 간담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여 선물업 허가를 하는 등으로 한화그룹은 [나나나나] 부실책임에서 면책되었다.

## ② 검토 중점

[가가가가] 부실 책임과 관련하여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따라 증금채 1,300억 원을 실제 매입했는지 여부와 [나나나나] 부실 책임과 관련하여 구 금감위 간담회 당시 제출된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의 검토 의견과 구 금감위 결정 내용 등을 검토하여 부실 책임이 없는 것으로 포괄의제한 구 금감위 면책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28) 2000년 8월 이내 100억 원, 9월 이내 추가 500억 원, 12월 이내 700억 원으로 연장

29) 2001. 3. 16. 간담회 참석 위원은 부위원장 [가가가] 등 7명의 위원이었는데, 간담회는 구 금감위 운영의 효율성과 신중한 심사를 위해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었음  
이는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각 위원들 사이에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하는 목적이므로, 개별 인허가 사안은 구 금감위의 정식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되었음

### ③ 검토 결과

#### 가) ○○○○ 대주주로서 부실책임 이행 관련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의 채권예탁자계좌부를 확인한 결과, 2000. 8. 31. 100억 원, 같은 해 9. 30. 500억 원, 같은 해 12. 29. 700억 원의 증금채를 ○○○○이 인수한 사실이 있어 한화그룹이 위 금감위의 변경 의결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1,300억 원의 채권매입을 통해 부실책임을 이행하였지만 실제 부담금액은 328억 원에 불과<sup>30)</sup>하여 1조 4,794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에 비해 적은 금액이므로 증금채 매입은 실효성이 없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액은 전액 예금대지급 자금으로 위 금액 자체가 부실규모가 아니고 이미 지원된 공적자금 중 ○○○○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배당을 통해 9,887억 원을 이미 회수한 바도 있었다.

#### 문제점 나) ○○○○ 대주주로서 부실책임에 대한 면책결정 부적정

2001. 3. 2.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 운용방안”<sup>31)</sup>에 대한 구 금감위 간담회 수정안에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여부는 일반법리와 적용 관례에 따라 경영참여 사실여부 및 부실경영에 관련된 사실의 정도에 따라

30) 채권인수금액(1,300억 원)에서 5년 만기 특수채(AA) 기준으로 현가할인한 인수 당시 채권의 현재가치(972억 원)를 뺀 금액

31)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 제도 도입 이후 1년 동안 운용과정에서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거나 적용사례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한 향후 운용방향을 정립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논의 내용은 ①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파악, ② 부실경영에 대한 직·간접 책임의 범위, ③ 순자산부족액 적용 기준시점, ④ 경제적 책임부담 시 실질 손실부담액의 형평성이었음

판단한다고 하였고, 판단의 일관성 유지와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당해 부실금융기관 관련 소관 감독부서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네네네네] 소관 부서인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은 한화계열에 [네네네네] 부실 관련 경영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는 검토 결과를 선물업 허가 담당 부서인 증권감독국에 검토 자료로 제출하였고, 2001. 3. 16. 증권감독국에서는 위 은행감독국 의견과 한화 측 의견, 내부 변호사 의견을 구 금감위 간담회 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자료에서 은행감독국은 “[네네네네]의 은행장 등 경영진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대주주인 한화계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으나, 「은행법」의 내용, [네네네네] 이사회 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한화계열이 다른 주주와의 담합 등을 통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깊게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경영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화계열에 대한 신용공여 등은 대주주에 대한 경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 사항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하였다.

반면, 위와 별도로 증권감독국에서 첨부한 내부 변호사 2인의 의견은 “부실 경영의 책임이 없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최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며, 한화계열에 대한 신용공여 등은 대주주에 대한 경영책임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사실”이라며 위 은행감독국 의견과 상반된 견해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구 금감위에서 2001. 4. 27. 간담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여 선물업 허가를 하는 등으로 한화그룹

의 [나나나나]에 대한 부실책임을 면책결정하면서 한화계열의 경영책임 여부 판단에 있어 위 상반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그런데 [별표 2] “퇴출은행 최대주주의 부실책임 관련 비교”와 같이 한화계열 여신 비중(15.2%)은 1998년 6월 당시 퇴출된 다른 4개 은행의 대주주 여신비율 평균(7.2%)에 비해 두 배나 높았고, 다른 4개 은행과 달리 대주주에 대한 지급보증비율(37.4%)도 높았으며, [가가가가] 출신인 상임이사 1명을 선임하는 한편, 한화계열에 대한 역외외화대출 6백만 달러가 전액 부실화되는 등 [나나나나]에 대한 한화계열의 실질적인 경영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도 2001. 3. 16. 구 금감위 간담회에서 [나나나나]에 대한 한화계열사의 부실책임을 없는 것으로 포괄의제하자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4. 27. 구 금감위에서 ○○○○이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선물업 허가를 함으로써 한화그룹은 [나나나나] 부실책임에서 면책된 결과, 국회 등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 ④ 내용 판단

한화그룹은 [가가가가] 부실책임과 관련하여 증금채 매입을 조건대로 이행하였으나, [나나나나] 부실책임과 관련해서는 한화계열 여신 비중, 대주주에 대한 지급보증비율 등과 같은 정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고, 금융감독원 내부에 상반된 의견이 있었는데도 구 금감위에서 다른 퇴출

은행과 함께 부실책임이 없는 것으로 포괄의제 결정한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업무처리였다.

#### (5) 한화계열사 분식회계로 인한 인수자격 상실 여부

##### < 검토 내용 >

- 시민단체 등에서 2002년 3월 한화계열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한 사실을 적발당하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였으므로 대한생명 인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의 적정 여부

#### ① 한화계열사 분식회계와 관련한 상황

1998년 12월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59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해석」 42-59에 따르면, “부의 영업권<sup>32)</sup>은 20년 이내의 기간 중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환입한다”고 규정하여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를 의무화하였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점검한 결과, 한화계열 3사[(주)㉠㉠, (주)㉡㉡, ㉢㉢(주)]는 투자주식 취득가액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인식하면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액 발생연도의 당기순이익으로 일시에 반영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2. 3. 14.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위 한화계열 3사에 대해 [표 5]와 같은 제재조치를 한 바 있고, 한화계열 3사는 이를 이행하였다.

[표 5] 한화계열 3사에 대한 제재조치 및 이행결과

32) 취득가액(시장매입가액)과 장부가액(시장매입가액의 5~7배) 간의 차액

회사명	지적사항	제재조치	이행결과
(주)㉔㉔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 : 3,311억 원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	이행
		감사인 지정 2년	'02. 6. 28., '03. 6. 26. 지정
		시정요구	'02. 4. 12. 이행
(주)㉕㉕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 : 3,554억 원	유가증권 발행제한 6개월	이행
		감사인 지정 2년	'02. 6. 28., '03. 6. 26.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1명)	'02. 4. 12. 이행
		시정요구	'02. 4. 12. 이행
㉖㉖(주)	①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 : 1,214억 원 ② 지분법 평가 시 내부 미실현 이익 미제거 : 1,594억 원 ③ 담보제공자산에 대한 주식 미기재 : 2,550억 원	유가증권 발행제한 6개월	이행
		감사인 지정 2년	'02. 6. 28., '03. 6. 26.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1명)	'02. 4. 9. 이행
		시정요구	'02. 4. 9. 이행

자료: 금융감독원

## ② 검토 중점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조치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와 분식회계 위반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한 다른 사례의 경우 보험업 영위에 있어 제한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시민단체 고발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③ 검토 결과

이미 검토한 “(3)항”과 같이 한화 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 시에만 보험업 법령상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화계열 3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가증권 발행제한(3~6개월),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2년)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당시 보험사<sup>33)</sup>를 소유하고 있던 ○○그룹[○○(주)·●●(주)·◇◇(주)]과 △△그룹[△△(주)]도 [표 6]과 같이 한화계열 3사와 유사한 제재를 받았으나 이를 이유로 보험업 영위에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표 6] ○○그룹과 △△그룹에 대한 제재조치

구 분	회사명	지적사항	제재조치
○○그룹	○○(주)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	유가증권 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상당(1명), 시정요구
	●●(주)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주)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	경고,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요구
△△그룹	△△(주)	①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식 미기재	주의, 시정요구

자료: 금융감독원

그리고 2002년 3월 구 금감위에서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자격에 대한 검토’<sup>34)</sup>에서 한화계열사의 분식회계는 가공매출 계상 등과 같은 고의적인 회계조작이 아니고 주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회계처리라는 점에서 한화그룹의 사회적 신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및 한화의 시정조치 결과가 보험사 신규 설립허가 시에는 주요 출자자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설립 이후 주요 출자자가 되는 경우(대주주 변경)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2002년 10월 시민단체(참여연대)에서 위 분식회계와 관련한 한화

33) ○○화재, ○○생명, △△생명

34) 2002. 3. 13. 예보에서 대한생명 매각 관련 투자자 자격요건에 대한 질의를 하자 보험감독과에서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상임위원 2인과 부위원장,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유사한 내용으로 같은 해 4월 공자위 매각소위에 제출하였음

계열 3사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05년 3월 검찰에서는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바도 있었다.

#### ④ 내용 판단

금융감독원에서 한화계열 3사의 분식회계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였고, 유사한 사례에서 이를 이유로 보험업 영위 제한을 한 적이 없으며, 가공매출 계상 등과 같은 고의적인 회계적 사실의 조작이 아니라는 구 금감위 의견 및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법적인 조치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고, 당시에 대주주 변경 시 신규 설립허가를 할 때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요건을 적용할 수 없었으므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에 분식회계 적발 사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공적자금 손실 등 가격 적정성 논란

예보에서 공적자금 3.5조여 원이 투입된 대한생명을 매각(지분 51%)하는 실무 업무를 하면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노력해야 했다.

그런데 위 공사는 매각 과정에서 [표 7]과 같이 그 당시 대한생명 경영실적이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어 공적자금의 추가 출자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앞으로의 경영전망을 비관적으로 추정한 자료를 토대로 2001년 9월에 공적자금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도록 유도하였고,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 등이 대한생명 가치를 평가·산정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지 않는 등 대한생명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한화 컨소시엄과의 매각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있었다.

[표 7] 2001년 대한생명 경영실적 추이

(단위: 억 원)

구 분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당기순이익	8,794	607	2,057	3,032	3,098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결국, 2002년 10월 위 공사는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생명(지분 51%)을 2001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수준인 8,236억 원<sup>35)</sup>에 매각하였고, 이 가격은 대한생명 지분을 100%로 환산할 경우에 1조 6,15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매각 1년 전에 추가로 투입된 공적자금 1조 5천억 원을 감안하게 되면 실제 매각가격은 1,150억 원에 불과하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에 손실을 초래<sup>36)</sup>했다는 사회

35) 매각대금 8,236억 원조차도 2차례(2002. 12. 12.와 2004. 12. 13.)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였음

36) 구 금감위가 공개 매각을 추진하던 1999년에 한화 측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정부 부담을 6,700억 원으로 제시하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적자금의 실제 부담이 없었으나, 2002년에는 3조 5,5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도 대한생명을 1조 6,150억 원(지분 100%로 환산)으로 매각하여 1조 9,350억 원만큼의 공적자금 회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의혹도 있었음

적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① 1999년 한화 측이 제시한 투자조건과 비교했을 때, 공적자금 회수의 손실 여부, ② 대한생명 매각 직전 공적자금 1.5조 원 투입의 적정 여부, ③ 대한생명 가치평가 및 산정의 적정 여부, ④ 대한생명 매각가격의 적정 여부, ⑤ 대한생명 관련 소송 승소액 귀속의 적정 여부, ⑥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가 쌍방대리를 했는지 여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 (1) 1999년 한화 측이 제시한 투자조건 대비 2002년 매각조건의 적정 여부

##### < 검토 내용 >

- 1999년 구 금감위가 추진하던 대한생명 매각 시 한화 측이 제시한 투자조건과 비교하여 공적자금 3.5조여 원이 투입되었는데도 2002년 공자위가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생명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으로 공적자금 회수에 큰 손실을 보았는지 여부

#### ① 1999년과 2002년 대한생명 매각 경위 등 비교

금융감독원에서 1999년 2월에 대한생명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8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생명의 순자산 부족액은 2조 9,080억 원으로 정상적인 보험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구 금감위는 1999년 5월에서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한생명의 공개 매각을 추진하였다.

구 금감위에서 1999. 6. 28. 최종 입찰 결과, 당시 한화 측은 위 순자산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1조 5,600억 원을 투자금액으로 제시하고 그 외 6,800억 원을 후순위 차입으로 충당하며, 나머지 6,700억 원을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등의 투자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한화 측이

부실금융기관인 [가]의 대주주였던 사유로 매각 대상에서 탈락되는 등으로 대한생명 매각이 실패하였다.

이처럼 대한생명 매각 추진이 실패한 이후에 향후 부실규모 증가가 우려되자, 구 금감위에서는 순자산 부족액에 대해 먼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을 정상화한 뒤에 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9월까지 예보에서 총 3조 5,500억 원의 공적자금을 대한생명에 출자하고, 2001년 3월부터 공자위는 대한생명 매각을 다시 추진하여 2002. 9. 23. 대한생명(지분 51%)을 한화 컨소시엄에게 8,236억 원(지분 100%로 환산할 경우 1조 6,150억 원)에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 ② 검토 중점

1999. 6. 28. 구 금감위가 추진했던 대한생명 공개 매각에서 한화 측이 제시한 투자조건과 2002. 9. 23. 제32차 공자위에서 대한생명 지분 51%를 한화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을 때의 매각가격 및 공적자금 투입액 등을 비교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고서도 1999년에 비해 2002년에 공자위가 대한생명을 헐값으로 매각<sup>37)</sup>하여 공적자금 회수에 큰 손실을 보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 ③ 검토 결과

1999년 구 금감위가 추진했던 매각 과정에서는 대한생명에 대한 재무실사가 없어 정확한 기업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한화 측은 순자산 부족

37) 대한생명 매각가격의 적정 여부는 “(4)항”에서 별도로 검토하였음

액(2조 9,080억 원) 충당을 위한 투자조건을 제시하는 동시에 추후에 실사를 통한 가치 평가를 하고서 순자산 부족액을 초과하는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 초과 부분만큼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대한생명의 경우, 1999년 이후에 추가 부실이 발생하여 예보에서는 당시 순자산 부족액 2조 9,080억 원보다 6,420억 원 많은 3조 5,5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고, 2002년 공자위에서 매각을 다시 추진하면서 대한생명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1조 700억 원의 부실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으로 1999년 한화 측이 투자조건을 제시한 이후에 총 1조 7,120억 원의 추가 부실이 나타났다.

#### ④ 내용 판단

1999년 구 금감위가 한화 측의 투자조건을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추가 부실액 1조 7,120억 원만큼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2002년도 매각 조건하에서의 실질적인 공적자금 부담액 1조 9,350억 원과의 차이는 2,230억 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1999년과 2002년 매각을 추진했을 때의 대한생명 부실규모에 차이가 있는 등 경영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 (2) 대한생명 매각 직전 공적자금 1.5조 원 투입의 적정 여부

##### < 검토 내용 >

- 예보에서 대한생명에 대해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한화 컨소시엄에 특혜를 주기 위해 매각 직전에 비관적으로 경영 전망을 한 자료를 토대로 1.5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하여 실제 매각가격은 1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적정 여부

## ① 공적자금 1.5조 원 투입과 관련한 상황

1999. 9. 14. 구 금감위에서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자본감소 명령과 함께 예보에 순자산 부족액의 50% 이상을 출자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11. 25. 예보에서는 ㉔회계법인의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드러난 순자산 부족분 3조 3,548억 원 가운데 예보채권 발행한도와 대한생명 영업력 등을 고려하여 60% 수준인 2조 500억 원을 출자하였다.

그러나 2000년 3월 말 기준으로 다시 대한생명 순자산 부족액이 1조 6,312억 원<sup>38)</sup>에 이르는 등 경영 정상화가 지연되자, 같은 해 9월 구 금감위는 대한생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매각 업무도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sup>39)</sup>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해 12월에 국회로부터 대한생명 추가 출자(1.5조 원)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01. 4. 25. 개최된 위 공사 제15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생명의 순자산 부족액이 2조 500억 원으로 확대<sup>40)</sup>되어 추가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실누적으로 인한 순자산 부족 현상의 장기화로 인해 조기 경영정상화에 차질이 발생하고, 기업가치 하락으로 인한 매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유로 1.5조 원을 추가로 출자하기로 의결<sup>41)</sup>하여 같은 해 9. 6. 위 금액을 대한생명에 출자하였다.

38) ㉔회계법인에서 작성한 '대한생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오류 수정손실(1,547억 원), 대우그룹 관련 추가손실 반영(714억 원), ▽▽ 전 회장의 세금대납손실(426억 원) 등으로 인해 2조 500억 원의 공적자금 투입 후에도 순자산 부족액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39) 2001. 3. 20. 제3차 공자위에서도 대한생명 관련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매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적자금 추가 투입을 통한 경영정상화와 매각을 병행하기로 결정하였음

40) ㉔회계법인에서 대한생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실사를 한 결과, 주식시장 침체(종합주가지수 : 2000. 1. 4. 1059, 같은 해 12. 26. 504) 등으로 인한 주식평가손실(2,264억 원),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추가(1,117억 원) 등으로 인해 대한생명의 순자산 부족액이 2조 5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41) 대한생명에 대한 추가 출자분 1조 5,000억 원을 제외한 5,500억 원의 순자산 부족액은 대한생명의 자구노력으로 해소하기로 하였음

## ② 검토 중점

공적자금 1.5조 원 투입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2001년 9월까지 공자위, 매각소위 회의 자료는 물론, 예보 운영위원회 등의 근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한화 컨소시엄에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비관적인 경영전망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공적자금 1.5조 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 ③ 검토 결과

예보에서 대한생명에 대한 잠재적 투자자인 한화 컨소시엄과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인수요청서를 접수(2001. 10. 8.)하기 이전인 2000년 9월에 이미 구 금감위에서 대한생명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기도 했으므로 한화 컨소시엄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로 보기는 곤란하다.

또한, 당시 대한생명의 과다한 순자산 부족분을 그대로 두고 매각을 추진하기보다는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1.5조 원을 추가로 출자하는 등으로 재무건전성을 개선한 후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었고, 추가 출자한 만큼 매각가치가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매각가격에 그 가치 증가분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추가 출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었다.<sup>42)</sup>

## ④ 내용 판단

대한생명 매각을 추진하기 1년 전부터 이미 대한생명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42) 2001년부터 대한생명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은 공적자금 1.5조 원이 추가로 투입된 후에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어 나타난 효과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위 공사에서 의도적으로 경영전망을 비관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음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1.5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되어 있었고, 대한생명의 당기순이익 발생이 공적자금 1.5조 원 추가 투입을 통한 재무개선 효과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한화 컨소시엄에 특혜를 주기 위해 비관적 경영전망을 토대로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 (3) 대한생명 가치평가 및 산정의 적정 여부

#### < 검토 내용 >

- 예보에서 매각주관사인 메릴린치 등이 평가하여 산정한 대한생명의 기업가치에 대해 적정하게 검토하고 매각협상을 했는지 여부

#### ① 대한생명의 기업가치 산정방법과 63빌딩 감정평가방법

대한생명에 대한 기업가치 산정방법은 국내에서 합리적 기업가치(Appraisal Value)로 생명보험사 기업가치를 산정한 후에 매각한 최초 사례<sup>43)</sup>였다.

합리적 기업가치 산정방법은 해당 기업의 장부상 가치인 요구자본과 잉여자본으로 구성된 순자산가치, 현재 보유 중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인 보유계약가치와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영업을 통해 유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인 신계약가치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그중 보유계약가치와 신계약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으로부터

43) 기업가치(1조 6,150억 원) = 보유계약가치(9,010억 원) + 신계약가치(1조 7,870억 원) + 조정 순자산가치(△1조 730억 원)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현재가치를 계산해야 하는데,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과 신계약물량의 발생기간 등의 가정이 필요하다.

2001. 3. 20. 공자위의 대한생명 매각 의결에 따라 2002. 10. 28. 예보에서는 대한생명 지분 51%와 위 보험사의 보유자산인 63빌딩<sup>44)</sup>을 함께 일괄매각하는 것으로 한화 컨소시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이전에 위 공사의 요청에 따라 2001. 9. 30. 기준으로 63빌딩을 감정평가한 (주)■■■■■감정평가법인은 63빌딩의 적정가격을 [표 8]과 같이 재조달 원가에 근거한 ‘원가방식’,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사례와 비교하는 ‘비준방식’, 매년 창출되는 현금흐름으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 ‘수익방식’으로 각각 산정한 후 이를 가중 평균하여 4,750억 원으로 정식 감정평가액을 제시하였다.

[표 8] 감정평가 방식별 63빌딩 감정평가금액

(단위: 억 원)

원가방식	비준방식	수익방식	적정가격
5,184	4,750	4,500	4,750

자료: (주)■■■■■감정평가법인

## ② 검토 중점

2001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공자위 및 매각소위 회의자료와 예보 등에

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에 소재해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로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위치하여 한강 조망권도 있는 등 여러 장점을 보유함

서 대한생명 매각을 위해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산정한 자료를 검토하고, 당시 대한생명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여 자산·부채평가를 실시한 ㉠㉠ 회계법인, 63빌딩을 포함한 부동산 감정평가를 실시한 (주)㉡㉡㉡감정평가법인, 현재 보유한 보험계약가치와 앞으로 발생할 신계약가치를 산정한 보험계리법인 ㉢㉢의 관련자, ○○학회 평가팀장 등을 면담하여 위 대한생명 기업가치 산정 방법과 가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국내 다른 보험계리법인[㉣㉣㉣(주)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 ③ 검토 결과

2001. 8. 7. 제11차 공자위에서는 대한생명 매각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의결하면서 세부 매각조건은 매각주체인 예보에 일임하기로 함에 따라 대한생명의 기업가치 산정 및 매각가격 협상 등 매각과 관련된 실무를 위 공사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후에 그 결과를 공자위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사에는 대한생명 매각 실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01. 6. 27. 용역계약을 통하여 메릴린치 피어스 페너 앤 스미스(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orporated)와 ○○은행(이하 “메릴린치”라 한다)을 매각 자문사로 선정하여 매각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법률·회계·부동산 감정평가 등의 자문과 계리평가를 위하여 법무법인 ㉤㉤, ㉠㉠회계법인, (주)㉡㉡㉡감정평가법인 및 ㉢㉢을 각각 자문 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표 9]와 같이 대한생명의 기업가치를 평가·산정하도록 하는 등 매각 실무를 수행하였다.

[표 9] 대한생명의 기업가치 구성 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평가금액(할인율 15% 적용)	
	'01년 9월 말 기준	'02년 3월 말 기준
1. 조정 순자산가치	△12,200	△10,730
2. 보유계약가치	6,110	7,540 ~ 9,010
3. 신계약가치	18,500	15,440~17,870
4. 기업가치(1+2+3)	12,410	12,250~16,150

자료: 예금보험공사

그 후, 2002. 6. 27. 제26차 공자위에서 한화 컨소시엄을 대한생명 매각의 조건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에 따라 위 공사는 한화 컨소시엄과 세부 매각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대한생명)을 매각할 때에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협상가격의 근거가 되는 기업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협상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했다.

또한, 한화 컨소시엄에서도 위 공사에서 제시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기초45)로 인수가격을 별도로 정하여 협상에 임하였으므로 위 공사는 대한생명 매각을 추진할 때 기업가치를 정확히 산정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부 미비점들이 발견되었다.

#### 문제점 가) 신계약가치 산정시 발생기간 적용 부적정 및 할인율에 대한 보고 미흡

##### 1) 신계약가치 발생기간 파소 적용

45) 2002. 8. 5. 한화 컨소시엄은 ‘대한생명 입찰과 관련한 한화 컨소시엄 최종 입찰가격’을 제시하면서 “한화 컨소시엄은 위 공사의 대한생명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 서울사무소(지점)로부터 2002. 7. 4.에 제공받은 최근 자료를 분석하고 대한생명의 최근 실적을 충분히 감안하여 별첨과 같이 입찰가격을 제시합니다.”라고 하였음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가치는 순자산가치, 보유계약가치 및 신계약가치로 구성되어 있고, 신계약가치는 앞으로 발생할 보험가입 계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인데 통상 1년간의 신계약가치를 구한 후에 배수를 곱하여 전체 신계약가치를 산정하거나, 처음부터 몇 년간의 신계약 해당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대한생명 매각이 국내 최초 사례)이 있다.

2002년 당시 예보에서 대한생명 기업가치 가운데에서 중요한 부분인 신계약 가치를 산정하면서 대한생명은 국내 3위 규모의 생명보험회사로서 공적자금 3조 5,500억 원이 투입되어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2001회계연도 당기순이익도 8,684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위해 신계약 물량의 발생기간을 최대한 길게 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2002년 6월(정확한 날짜 미상)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보험계리평가기관인 ㉠㉠가 신계약물량의 발생기간을 3년, 5년, 10년 가운데서 선택할 것을 요청<sup>46)</sup>하자 위 공사는 이에 대한 비교·검토 없이 매각주간사(메릴린치)의 의견에 따라 5년으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계약가치는 미래의 수익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이를 반영할 때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야 하는데 위 ㉠㉠는 [표 10]과 같이 보유계약가치와 신계약가치의 할인율을 13%, 15%, 17% 세 가지로 적용하되, 신계약

46) 2001년 9월에는 ㉠㉠가 1년치의 신계약가치를 평가하여 배수 문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나중에 예보와 ㉠㉠가 협의하여 공사 측 기업가치는 다시 산정해야 했기 때문에 배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는 3년, 5년, 10년 세 가지 (안)을 제시하여 위 공사와 주간사가 협의를 통해 5년으로 결정하였음

가치에 대해서는 보유계약가치에 비해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신계약물량의 발생기간 5년을 기초로 평가시점에서 신계약 판매시점까지 추가로 5%를 더 하여 할인율을 18%, 20%, 22%로 하여 신계약가치를 세 가지로 산정하였고, 2002년 6월(정확한 날짜 미상) 위 공사에서는 그 중간 값인 할인율 15%(평가시점에서 판매시점까지 20%)를 선택하여 신계약가치를 1조 7,870억 원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초로 한화 컨소시엄과 가격협상을 시작<sup>47)</sup>하였다.

[표 10] 할인을 적용에 따른 대한생명의 신계약가치 비교(2002년 3월 말 기준)

(단위: 억 원)

할인율 13%(판매시점까지 18%)	할인율 15%(판매시점까지 20%)	할인율 17%(판매시점까지 22%)
17,370~20,080	15,440~17,870	13,880~16,090

주: 신계약에 대해서는 판매시점에서 평가시점까지 5% 추가 할인

자료: 예금보험공사

## 2) 공자위에 신계약가치 산정 시 적용한 할인율에 대한 보고 미흡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계리평가기관인 ㉠㉠에서 신계약물량의 발생기간 5년을 기초로 신계약가치에 대한 할인율 13%, 15%, 17%와 신계약가치에 대한 평가시점에서 신계약 판매시점까지 적용하는 할인율 18%, 20%, 22%로 각각 신계약가치를 산정하였는데 예보는 그 가운데에서 신계약가치에 대한

47) 기업가치와 매각가격은 다른 개념으로 기업가치는 매각협상가격의 근거가 되는 것인 반면, 매각가격은 매도자(예보)와 매수자(한화 컨소시엄, 통상 우선 협상대상자) 사이에 매각협상을 통해 도출되는 것으로 기업가치 평가 및 산정과 매각협상가격에 있어 일부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헛값 매각’ 등 매각가격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할인율을 15%(평가시점에서 판매시점까지 20%)로 선택하여 위 가치를 1조 7,870 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신계약가치는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가치를 구성하는 가장 큰 항목이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은 신계약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큰 변수<sup>48)</sup>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02년 6월 매각소위에서 위 15% 할인율도 높다고 하는 등 논란<sup>49)</sup>이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예보에서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결정과 심사를 하는 공자위와 매각소위에 기업가치 산정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신계약가치 산정에 적용된 할인율을 제대로 보고하여 위 위원회들의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도 위 공사는 2002. 6. 19.부터 같은 해 9. 23.까지 개최된 모든 공자위와 매각소위에 위 신계약가치를 보고할 때에는 신계약 전체에 대해 15% 할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면서도 신계약가치에 대한 평가시점에서 신계약 판매시점까지의 할인율은 실제로 2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초로 한화 컨소시엄과 협상을 시작<sup>50)</sup>하였다.

48) 기업가치평가에 있어 현재가치 할인에 사용되는 자기자본비용의 선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를 선택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한 15%(5년 기간)를 기준으로 1%의 자기자본비용 변화(할인율 변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7~8% 수준이 되므로 어떤 기업의 기준가치를 2조 원이라 가정한다면 할인율 1%의 변화에 따라 1,500억 원 내외의 기업가치평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49) 매각소위에서 보유계약 및 신계약가치 산정 시 적용된 할인율 수준(15%)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학회에 할인율 15%가 적절한지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위 ○○학회는 어떤 수치를 사용할 것인가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며 가장 낙관적인 값만을 사용할 경우에 할인율은 최소 12% 내외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하였음

50) [별표 3] “신계약물량 발생기간과 할인율에 따른 대한생명 신계약가치 비교”와 같이 위 공사가 공자위와 매각소위에 보고한 것처럼 신계약물량 발생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신계약가치는 2조 69억 원인데도 위 공사에서는 평가시점에서 판매시점까지의 할인율을 20%로 적용하여 신계약가치를 1조 7,870 억 원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위 공사는 신계약가치를 2,199억 원만큼 더 적게 산정한 상태에서 한화 컨소시엄과 협상을 시작하였음

이에 대하여 예보는 대한생명의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계약물량의 발생기간을 5년으로 하였고, 매각협상과정에서 위 발생기간에 대해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이견이 없었으며, 대한생명 매각 이전에 신계약물량 발생기간을 5년 전후로 한 유사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년간 신계약가치를 계상한 후, 이에 대해 협상을 통한 배수를 곱하여 산정한 기존 방식과 달리 대한생명 매각은 신계약물량의 발생기간을 반영하여 신계약가치를 산정한 방식의 최초 사례였고, 예보는 국민 세금이 투입(3조 5,500억 원)된 대한생명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신계약물량의 발생기간을 최대한 길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했는데도 이에 대한 비교·검토 없이 매각주간사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다만, 위 공사는 대한생명 매각의 매도자 입장에서 신계약물량의 발생기간을 더 많이 인정했다면 공적자금 회수금액이 증가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점과 신계약가치에 대한 평가시점에서 신계약 판매시점까지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공자위 안전 등에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 문제점 나) 차감할 필요 없는 ‘지급여력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매각협상을 위한 기업가치 계상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금액’은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보험회사가 일정한 수준의 자기자본(순자산가치)을 보험계약자 몫으로 유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유보된 순자산만큼 주주의 몫에서 제외되고 향후 보험계약이 만료될 때에 다시 환원시키게 되므로 보험사 매각을 위한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이를 고려<sup>51)</sup>해야 한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56조 및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7]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할 때, 부동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2002년 대한생명 매각 당시 부동산 장부가액은 1조 8,362억 원이었으며, 감정평가액은 9,652억 원이었다.

따라서 대한생명에 대한 지급여력금액 산정을 하면서 위 부동산 장부가액(1조 8,362억 원) 중 감정평가액(9,65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8,710억 원)만큼의 지급여력에 대해서는 주주 입장에서 앞으로 추가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이익을 유보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주주의 기회비용 4,645억 원<sup>52)</sup>을 대한생명 기업가치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었다.<sup>53)</sup>

그런데도 위 공사는 기업가치 산정 용역기관인 태태가 대한생명에 대한 지급여력을 산정하면서 부동산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지급여력을 확충하는 것을 전제로 위 지급여력 확충에 대한 주주의 기회비용을 차감하여 기업가치를 1조 6,150억 원으로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02. 10. 9. 구 금감위(보험감독과)에서 검토한 ‘대한생명 매각 관련 본 계약 체결(안) 검토’에 따르면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할 때에는 부동산에 대해 장부가액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공사 측 자문사가 평가한 기업가치는 부동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인 8,710억 원(할인을 15%를

51)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주주 입장에서는 순이익이 발생하여도 모두 배당받을 수 없고 일정기준에 따라 자본이나 잉여금 등을 ‘지급여력’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위 ‘지급여력’을 투자하여 운용수익률(본 건의 경우 연간 7%)이 발생하더라도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본 건의 경우 연간 15%)에 비하여 더 낮은 수익률로 투자되어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게 됨

52)  $(8,710\text{억 원} \times (\text{주주 요구수익률 } 15\% - \text{지급여력 운용수익률 } 7\%)) \div \text{할인율 } 15\% = 4,645\text{억 원}$

53)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2002. 5. 20. 회제이 8360-00153)에서도 대한생명이 보유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부동산의 사용가치가 장부가액을 상회한다면 부동산 감정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대해서 감액손실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함으로써 대한생명보험 지급여력평가 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인정하였고,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2. 1. 12. 매각 본 계약을 체결한 ★★★★★보험주식회사 사례가 있었음

적용하면 4,645억 원)만큼 과소계상 되었음을 지적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는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공자위나 매각소위에 보고하지 않은 채, 기업가치는 양측이 각자의 방식으로 산정한 후 최종 금액 1조 6,150억 원의 51%에 해당하는 8,236억 원으로 한다고 합의되어 2002. 9. 23. 공자위 의결까지 거친 사항이므로 내부 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수정을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로 과소 계상된 기업가치를 기초로 합의된 매각가격대로 계약을 체결<sup>54)</sup>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여력을 인정할 경우, 대한생명 기업가치는 2조 795억 원으로 추정되는데도 주주의 기회비용분인 위 4,645억 원을 기업가치에 반영하지 않은 채 한화 컨소시엄과 가격협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예보는 대한생명에 대한 지급여력금액을 산정하면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부동산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순자산이 증가하는 효익<sup>55)</sup>(8,710억 원)을 기업가치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었으나, 위 효익을 계리적인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기업가치 산정 용역기관에서 지급여력 확충에 대한 주주의 기회비용을 차감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생명의 기업가치(1조 6,150억 원)는 주주에게 귀속될 현금 흐름을 구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유계약가치(9,010억 원)와 신계약가치(1조 7,870억 원)를 계산한 후, 조정 순자산가치를 차감(1조 730억 원)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주주에

54) 위 공사는 구 금감위의 지적에 대해 2005년 3월까지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생명 당기순이익으로 충당금(적립금)을 쌓은 후, 충당금이 부동산 가치 차액 보전 가능한 시점에서 부동산을 재평가한 뒤에 시가를 장부가치로 반영하기로 하여 대한생명 기업가치가 8,710억 원(할인율 15%를 적용하면 4,645억 원)만큼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각 계약은 공자위에서 의결한 그대로 하되 사후적으로 한화 측의 배당을 제한함으로써 기업가치가 과소 계상된 부분을 치유하고자 하였음

55) 배당제한 증가에 따른 효익 또는 지급여력 충족재원 증가에 따른 기회비용

게 귀속 가능한 모든 현금 흐름을 포함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예보는 지급여력가치(부동산 장부가 - 감정평가액)를 기업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효익을 제한하는 방법(주주배당 제한)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업무를 철저히 했다고 보기 곤란하다.

다만, 위 공사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위 효익의 가치를 산정하여 기업가치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고, 주주간 계약서에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장부가에 반영하기 전까지 주주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으로 사후에 위 효익을 차단한 사실은 인정한다.

#### 문제점 다) 63빌딩을 공식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 협상

2002년 10월 예보에서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생명을 매각(지분 51%)하면서 위 생명보험사 소유의 63빌딩도 일괄매각하였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대한생명)의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고, 2001. 8. 7. 제11차 공자위와 2002. 9. 23. 제32차 공자위에서 대한생명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63빌딩을 분리매각하거나 일괄매각하는 것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으므로 적절하게 평가된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서는 안 되었다.

그런데 위 공사 및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는 63빌딩을 포함한 부동산의 적절한 가격 산정을 위해서 (주)■■■■■감정평가법인<sup>56)</sup>에 감정평가를 요청하였는데 위 감정평가법인은 63빌딩의 적정가격을 4,750억 원으로 평가하였다.

56) 해외 감정평가법인인 ■■■■에도 감정평가를 요청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인 4,750억 원과 차이가 너무 많아 그대로 채택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각협상을 하기로 함

그러나 위 공사에서는 대한생명의 인수 희망자였던 한화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2002. 6. 27.)되기 이전부터 한화 측과 63빌딩 매각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한화 측에서 63빌딩의 가격을 3,800억 원으로 제시하고, 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개인 의견으로 위 감정평가법인의 공식 감정평가액 4,750억 원보다 11.9%(520억 원) 낮은 4,230억 원을 협상 가격으로 제시하자, 마치 이를 위 감정평가법인의 공식적인 수정가격인 것처럼 그대로 인정하여 4,230억 원으로 63빌딩의 가격을 낮추어 조정<sup>57)</sup>한 후 대한생명 매각 가격(8,236억 원)에 이를 포함하여 일괄매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보는 (주)■■■■■감정법인의 감정평가액(4,750억 원)을 토대로 감정평가사 개인 의견을 참고하여 매각협상을 위한 금액(4,230억 원)을 정한 후, 한화 컨소시엄의 제시금액(3,800억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였으므로 특혜가 아니고, 63빌딩을 대한생명(지분 51%)과 함께 일괄매각하여 전체의 매각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사에서 수정된 공식 감정평가액인 것처럼 수용한 (주)■■■■■감정법인 감정평가사의 63빌딩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순수한 개인 의견이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공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위 공사에서 63빌딩을 대한생명과 일괄매각하면서 전체 매각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다만, 예보는 4,230억 원이 위 공사의 매각협상을 위한 금액으로 (주)■■■■■

57) (주)■■■■■감정평가법인의 공식 감정평가액(4,750억 원)과 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개인 의견을 인정하여 매각협상에 반영한 금액(4,230억 원)과의 차이인 520억 원만큼 기업가치를 과소계상(대한생명 지분 51%를 곱하면 265억 원 상당임)한 상태로 한화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하게 되었음

감정평가법인의 공식 감정평가액이 아닌데도 이를 수용하여 당시 63빌딩 가치를 낮추는 등의 업무처리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 (4) 대한생명 매각가격의 적정 여부

##### < 검토 내용 >

- 예보에서 공적자금 3.5조 원이 투입된 대한생명(지분 51%)을 한화 컨소시엄에 8,236억 원으로 매각한 가격에 매각부대조건(지분 51% 매각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 부여, 매각대금 50%를 2년간 이연함에 따른 이자절감수익)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

#### ① 경영권 프리미엄의 중요성

경영권 프리미엄<sup>58)</sup>은 기업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가로서 기업 고유의 가치라기보다는 기업 경영권을 매개로 하는 거래에 있어서 인수기업(한화 컨소시엄)이 피인수 기업(대한생명)을 인수함에 따른 인수기업의 시너지 효과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인수기업은 다른 계열 기업과의 협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현금흐름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를 산정하여 상장사의 현재 주가 또는 생명보험사 기업 가치(순자산가치+보유계약가치+신계약가치)에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지불하게 된다.

2002년 당시 비상장 생명보험사<sup>59)</sup>였던 대한생명에 대해서도 51% 이상의 지

58) 최근 ①②은행을 인수하기로 한 ③④지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지분가격의 10%를 더 지급하기로 했고, ⑤⑥지주는 ⑦⑧은행 등을 인수하기 전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없다며 불참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경영권 프리미엄은 인수·합병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분을 매각한 뒤, 증시에 상장될 때까지 잔여지분을 회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므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51% 이상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상받을 필요성이 있었다.

## ② 검토 중점

2001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공자위 및 매각소위 회의자료와 예보 등에서 한화 컨소시엄과 대한생명 매각 협상을 위해 준비했던 자료를 검토하고, 당시 매각 실무를 담당하였던 관련자들과 ○○학회 평가팀장 등을 면담하여 매각 가격 8,236억 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콜옵션 가치 등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에 외국계 투자은행으로부터 콜옵션 산정 방법 등을 검증받는 등으로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 ③ 검토 결과

예보는 3.5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한생명에 대해 2002. 6. 27. 공자위에서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위 컨소시엄으로부터 인수가격 제안을 받아 검토하고 [표 11]과 같이 6차례에 걸친 매각 협상을 진행하여 같은 해 10. 28. 대한생명 지분 51%를 8,236억 원(지분 100%로 환산하면 1조 6,150억 원, 5년 이내에 추가 16% 지분에 대한 콜옵션 포함)에 매각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한생명 매각 관련 실무를 수행하였다.

59) 2010년 3월 대한생명은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를 통해 국내 증시에 상장되었음

[표 11] 협상일자별 대한생명 매각협상가격 변동 추이

(단위: 억 원)

구 분	'02. 7. 5.	'02. 7. 8. <sup>60)</sup>	'02. 7. 13. <sup>61)</sup>	'02. 8. 5.	'02. 8. 29.	'02. 9. 22.
매각협상가격	11,000	12,200	13,000	14,200	15,200	16,150

자료: 예금보험공사

위 공사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대한생명)을 매각할 때에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했고, 국민의 세금(공적자금)이 3.5조 원이나 투입된 대한생명에 혈값 매각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경영권 프리미엄,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 가치, 매각대금 이연납부에 따른 이자경감액을 기업가치 등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이를 기초로 한화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문제점: 대한생명 매각부대조건에 대한 매각협상가격 반영 미흡**

**문제점 가) 매각협상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 미반영 의혹**

2001. 7. 27. 예보에서 작성하여 공자위와 매각소위에 제출한 ‘대한생명(주) 매각추진방안’에 따르면 대한생명 지분을 51%에서 66%까지 매각하게 되면 대주주 지분양도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해 매각가치를 높일 수 있고, 67% 이상의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의 극대화를 통해 초기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60) 2002. 7. 8. 한화 컨소시엄은 콜옵션 16%와 매각대금 2회 분할 납부의 조건을 제시하였음

61) 2002. 7. 13. 한화 컨소시엄은 제시한 인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 1,400억 원을 포함하였음

그리고 대한생명 매각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2002년 4월과 5월에 개최된 매각소위에서도 매각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한 바도 있었다.

또한, 2002. 7. 12. 위 공사에서 작성한 ‘대한생명 매각 관련 협상내용 보고’에 따르면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매각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1,4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위 공사의 기업가치 산정 용역기관인 ④④가 평가한 기업가치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비교 검토하였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를 별도로 산정하여 기업가치에 반영하는 등으로 한화 컨소시엄과 매각가격 협상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위 공사는 2002. 6. 27. 대한생명 매각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위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추진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별도로 산정하지도 아니하였고, ④④가 구체적인 경영권 프리미엄 금액을 밝히지도 않은 채, 막연하게 기업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으로 위 컨소시엄과의 매각협상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 문제점 나) 매각협상가격에 콜옵션 가치 미반영

예보의 요청으로 2002년 10월 구 금감위(보험감독과)에서 회신한 ‘대한생명 매각 관련 본계약 체결(안) 검토’에 따르면 한화 측에서 행사 가능한 콜옵션 적용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공적자금의 회수가 가능하므로 5년 후(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장시점)에 행사 가능한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의 적용

가격을 당초 매각가격(주당 2,274.51원)이 아닌 공정하고 통상적인 방법을 통한 재평가된 가격<sup>62)</sup>으로 매각하도록 위 공사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위 공사에서는 한화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할 때에는 위 추가 지분 매입권(콜옵션) 16%를 재평가하여 그 옵션가치를 별도로 산정한 후에 기업가치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대한생명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면서 위 콜옵션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추가로 매입할 때의 적용가격도 재평가된 가격이 아닌 당초 매각가격으로 위 컨소시엄이 콜옵션을 행사하도록 하여 위 컨소시엄이 실제로 당초 가격인 2,584억 원(주당 2,274.51원)으로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최소 619억 원<sup>63)</sup>에서 최대 1,384억 원<sup>64)</sup>만큼 그 가치<sup>65)</sup>가 반영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문제점 다) 매각협상가격에 매각대금 이연납부에 따른 이자수익 미반영

예보에서 한화 컨소시엄과의 매각협상을 하면서 대한생명 매각대금의 50%에 해당하는 4,118억 원을 2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납부조건을 이연해 주었으므로 그에 따른 2년간 이자비용 453억 원을 매각협상가격에 포함하여 협상을 추진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협상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위 “가항”, “나항”, “다항”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위 공사는

62) 한화 입장에서는 주당 가치가 현재 매각가격보다 상승한 경우에만 지분을 추가 매입(콜옵션 행사)할 것이므로 한화가 추가 매입할 때의 적용가격은 주식분할, 병합, 추가적인 발행, 주식배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고려한 이자비용, 옵션 가격 모델 중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인정 받는 모델인 ‘블랙숄츠모형’ 등에 따라 재평가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했음

63) 2,584억 원 - {2,584억 원 ÷ (1.0563)<sup>5</sup>(2002. 10. 31. 기준의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 619억 원

64) 콜옵션 16%(113,600,000주)의 가치에 대해 ‘블랙숄츠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할 경우에 1,384억 원으로 추정됨

65) 2004. 8. 4. (주)한화는 오릭스로부터 콜옵션을 주당 1,116원에 매입하였음

한화 컨소시엄과의 대한생명 매각협상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콜옵션 가치, 매각대금 이연 납부로 인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채, 대한생명의 순수 기업가치(조정 순자산가치+ 보유계약가치+신계약가치)만 산정하여 협상을 시작한 반면, 위 컨소시엄은 위 공사가 제시한 기업가치 범위 내에서 매각가격을 제시하면서도 제시된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과 콜옵션 가치 등이 모두 반영된 것처럼 하여 협상가격을 제시했는데도 예보에서는 이 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협상가격을 그대로 인정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는 매각 협상을 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 콜옵션 가치, 매각대금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비용 등 합계 최소 2,472억 원<sup>66)</sup>에서 최대 3,237억 원<sup>67)</sup>을 매각협상가격에 추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대한생명을 한화 컨소시엄에 8,236억 원(51% 지분가치)에 매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보는 대한생명 매각 당시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이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산정하기는 곤란하였고, 2002. 9. 23. 제32차 공자위에 경영권 프리미엄은 일종의 무형자산으로서 대한생명 기업가치에 포함되었다는 의견을 보고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 받은 후에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권 프리미엄은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경영권 확보를 위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인수자(한화 컨소시엄) 측에서 오히려 대한생명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발생 등을 감안하여 포함(1,400억 원)했고, 2002년 7월 예보에서

66) 경영권 프리미엄 1,400억 원 + 콜옵션 최소가치 619억 원 + 이연납부 경감액 453억 원

67) 경영권 프리미엄 1,400억 원 + 콜옵션 최대가치 1,384억 원 + 이연납부 경감액 453억 원

내부 검토 문서를 통해 대한생명 기업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매각가격과 비교까지 했으면서도 이를 반영하여 가격협상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일종의 무형자산으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위 공사는 ‘블랙솔즈모형’에 따른 콜옵션 가치산정방식은 대한생명 매각당시에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생명보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옵션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 콜옵션 가치 및 매각대금 이연납부에 따른 이자비용은 기업가치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한화 컨소시엄과의 매각협상을 통해 매각가격을 상향시키는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실제 매각가격(8,236억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자문사 최소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생명 기업가치 평가에 적용된 할인율(15%)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생명보험사가 없었는데도 재무관리이론을 통해 산출한 바 있으므로 국내에 상장된 보험사가 없어 콜옵션 가치를 산출할 수 없었다는 위 공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대한생명 기업가치와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매각가격은 구분해야 하는 개념으로 위 컨소시엄이 제시한 매각가격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어 있지만 예보의 기업가치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컨소시엄이 제시한 매각가격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제외하면 매각자문사 최소가치보다 낮은 가격을 기초로 매각협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5) 대한생명 관련 소송 승소액 귀속의 적정 여부

< 검토 내용 >

- 예보가 매각 이후 발생하게 될 대한 생명과 관련된 소송에서의 승소액을 위 공사에 귀속되도록 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에 손실이 발생하고, 대한 생명 인수자인 한화 컨소시엄에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

①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소송 승소액의 귀속과 관련한 상황

2003. 11. 28. 대한 생명은 기독교선교 ㉔㉔재단을 상대로 대한 생명의 전 회장이었던 ∇∇∇이 1993년 6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위 기독교선교 ㉔㉔재단에 불법으로 기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2010년 12월 303억여 원을 회수한 것을 포함하여 [표 12]와 같이 위 보험 회사와 관련된 3건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그런데 예보에서는 2002. 10. 28. 한화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취득하는 소송 승소액 귀속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표 14]와 같이 대한 생명 관련 소송 승소액이 한화 컨소시엄으로 귀속되고, 위 귀속액만큼의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표 12] 대한 생명과 관련된 소송에서의 승소 내역

구 분	판결금액	합의금액	회수액	소제기일	확정판결일	지분에 따른 예보 환수 가능액 <sup>68)</sup>
㉔㉔	3,970만 달러	3,500만 달러	3,500만 달러	'99년 12월	'04. 12. 29.	1,785만 달러
㉔㉔	683억 원	-	4,000만 원	'02. 10. 2.	'07. 5. 10.	2,040만 원
㉔㉔재단	507억 원	348억 원	303억 원	'03. 11. 28.	'08. 4. 24.	228억 원

자료: 예금보험공사

68) 예보는 2002. 10. 28.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 생명을 매각(지분 51%)한 후에 대한 생명에 대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8. 9. 29. 한화그룹에 대한 콜옵션 이행으로 33%의 지분을, 2010. 3. 13. 대한 생명의 유상증자 및 상장 등으로 인하여 24.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각 승소액 귀속시기의 지분 보유 비율에 따라 미환수분 액수를 산정하였음

## ② 검토 중점

2002. 9. 18. 예보에서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공자위에 보고한 최종 협상 결과 보고서와 2002. 10. 28. 한화 컨소시엄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 전 대한생명 회장과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세금 등 1,596억여 원의 우발채무 및 우발자산과 관련된 위 공사의 보고 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한생명 매각 이후 발생하는 우발채무 및 우발자산을 한화 컨소시엄에 귀속되도록 한 업무처리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 ③ 검토 결과

2002. 6. 27. 공자위에서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에 예보는 위 컨소시엄과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면서 대출채권 부실화 등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분만큼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풋백 옵션<sup>69)</sup>을 위 컨소시엄에 부여하지 않는 대신에 세금·계열사 간의 법적 분쟁 등 제한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였다.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 전 회장의 횡령금액<sup>70)</sup>과 관련하여 1999.

69) 풋백 옵션은 기업의 인수·합병 계약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예, 추가 부실 발생)하면 매수자가 기업 인수 후에 일정한 시점이나 가격에 대해 매도자에게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70) 2002. 10. 28. 예보가 한화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당시 대한생명은 ∇∇∇ 전 회장이 횡령한 1,809억여 원에 대한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585억여 원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908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상황이었고, ∇∇∇ 전 회장이 1999. 6. 29. 퇴직함에 따라 특수 관계가 소멸되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 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1항 제1호에 따라 앞으로 ∇∇∇ 전 회장이 횡령한 1,867억여 원 등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합계 1,343억여 원의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4. 1.부터 1999. 6. 29.까지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1,343억여 원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추가 등록세 등 253억여 원<sup>71)</sup>을 위 공사의 보전대상에서 제외하여 한화 컨소시엄에 위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위 공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종 협상을 타결하였고, 2002. 9. 23. 공자위는 위와 같은 최종 협상 결과를 전제로 대한생명을 위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예보에서는 위 최종 협상 결과를 한화 컨소시엄과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서에 반영하여 위 컨소시엄에 대출채권 부실화 등과 관련된 풋백 옵션을 부여하지 않았고, 향후 ∇∇∇ 전 회장 및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되어 발생 가능한 세금을 위 공사의 보전대상에서 제외하여 매각 이후에 발생 가능한 일부 우발채무를 위 컨소시엄에 부담하게 하는 한편, 매각 이후에 발생하는 소송 승소액 등과 같은 우발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④ 내용 판단

예보에서 한화 컨소시엄과 소송 승소액 등 우발자산 귀속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으나, 대출채권 부실화 등과 관련된 풋백 옵션을 위 컨소시엄에 부여하는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생명 매각 이후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우발채무와 우발자산은 발생 확정과 동시에 대한생명에 귀속되어 위 공사와 위 컨소시엄은 보유지분에 비례하여 손익을 간접적으로 누리게 되므로

71) 대한생명은 1996. 1. 1. 이후 과밀억제권역 내인 불광동, 강서, 성남시 분당에 지점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 138조에 따라 94억여 원의 등록세를 추가적으로 더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대한생명의 안양, 부평, 강남 사옥 부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어 158억여 원의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었으므로 향후 ∇∇∇ 전 회장과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합계 1,596억여 원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음

예보가 우발자산에 대한 별도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점만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곤란<sup>72)</sup>하다.

또한, 우발채무와 우발자산이 확정될 때마다 별도의 귀속 조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절차와 비용이 별도로 필요하여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명료하게 처리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불확실한 우발채무와 우발자산의 처리 방법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예보에서 앞으로 대한생명이 취득하게 될 소송 승소액과 같은 우발자산에 대해 귀속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만으로 공적자금 회수에 손실이 발생하고, 위 컨소시엄에 특혜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 (6)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가 쌍방대리를 했는지 여부

##### < 검토 내용 >

- 예보에서 대한생명 매각을 위한 주간사로 메릴린치를 선정한 절차의 적정 여부와 메릴린치가 한화 컨소시엄 측에도 자문하는 등 쌍방대리를 하였는지 여부

#### ① 예보의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

2001. 4. 20. 정부, 학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보의 ‘매각주간사 선정 위원회’에서 매각주간사 제안서를 접수한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1차 제안서 평

72) 우발채무와 우발자산은 원칙적으로 매매 대상 회사에 귀속(이 사건의 경우, 대한생명)되는 것이지만, 부실 회사의 인수·합병 시 매수자는 자산 부실에 따른 추가 손실에 대한 보전을 위해 우발채무에 대한 풋백 옵션을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임. 예보도 대한생명 매각 이전인 1999. 12. 31. 〰〰〰은행을 〰〰〰에 5천억여 원에 매도하면서 일반여신은 2002년 말까지, 워크아웃 여신은 2003년 말까지 추가로 부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보가 2001년 말까지 3조 7,756억여 원의 풋백 옵션 대금을 공적자금으로 지급한 바 있어(현재까지 5조 2천억여 원의 풋백 옵션 대금 투입), 대한생명 매각 당시에 제한적인 항목(세금, 계열사 간의 법적 분쟁 등)에 대해서만 손실 보전을 약정하고 일반적인 자산(대출채권, 유가증권, 소송 패소액 등) 부실에 대한 풋백 옵션을 부여하지 않았음

가를 통하여 ①①① 등 5개 기관<sup>73)</sup>으로 압축하였고, 이후 2001. 4. 27. 매각소위(1인)·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5인)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1차 평가 결과로 선정된 5개 기관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2차 평가를 실시하여 메릴린치를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였다.

## ② 검토 중점

매각주간사로 선정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12개 기관(1차) 및 5개 기관(2차)에 대한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당초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메릴린치의 수입 수수료 명세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위 기간 중에 한화 컨소시엄으로부터의 수수료 수입이 있는지도 확인하여 쌍방대리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다.

## ③ 검토 결과

예보에서 대한생명 매각주간사 선정 절차와 평가 자료 등을 확인해 본 결과, 매각주간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메릴린치에 대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메릴린치가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쌍방대리를 한 경우에 수취하였을 수도 있는 수수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화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02. 8. 5. 한화 컨소시엄은 ‘대한생명 입찰과 관련한 한화 컨소시엄

---

73) ①①①, ①① & ⑧⑧, ①①①, ⑨⑨ & ⑨⑨, 메릴린치

최종입찰가격'을 제시하면서 대한생명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 서울사무소(지점)로부터 2002. 7. 4.자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대한생명의 실적을 충분히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다고 한 사실이 있으나, 보험회사에 대한 계리가치 평가가 복잡하고 채택된 가정에 따라 계리가치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으로 인해 통상의 보험회사 M&A과정에서 매도자 측에서 매각대상 보험회사의 보험계리가치 평가자료를 매수자 측에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만으로 쌍방대리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내용 판단

메릴린치를 대한생명의 매각주간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별도의 계좌추적을 통해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감사상의 한계가 있어 한화에서 메릴린치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

### 3. 매각과정에서의 기망행위 관련 논란

2004. 11. 17. 검찰에서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인수자격 관련 특혜 의혹과 공적자금 손실 등 가격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당시 한화그룹의 협상 대표였던 ○○○○ ○○○○ @@@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2006. 6. 16.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검찰 수사와 3심 재판 과정에서 대한생명을 최종 인수한 한화 컨소시엄이 조건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2002. 6. 27.)되기 전인 2001년 12월에 한화그룹은 위 컨소시엄에 생명보험사가 참여<sup>74)</sup>하여 투자자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당시 투자참여가 불투명하던 맥쿼리생명(호주계 생명보험사)의 명의를 사실상 차용하는 내용의 비밀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생명사가 한화 컨소시엄의 전략적 투자자라는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예보에 제출하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을 인수한 한화그룹에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계약을 무효화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① 기망행위를 이유로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계약을 무효화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보에서 한화의 기망행위를 사유로 국제중재 신청한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③ 조건부 우선 협상대상자였던 한화 컨소시엄의 조건 이행에 대한 예보 점검의 적정 여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74) 대한생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은 국내의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었음

(1) 기망행위를 이유로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계약을 무효화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 내용 >

- 검찰 수사와 국내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한화그룹과 맥쿼리생명 사이의 이면계약 등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계약을 무효화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① 한화그룹과 맥쿼리생명 사이의 이면계약과 관련한 검찰 기소 내용

한화그룹 임원(○○○○ ○○○ @@@)은 공자위가 제시한 투자자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 호주계 생명보험사인 맥쿼리생명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2001년 12월 초순경 한화 컨소시엄에 위 생명보험사가 참여하는 대가로 대한생명 인수 후에 운용자산의 1/3에 해당하는 자산운용권을 주는 것 이외에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위 생명보험사의 투자지분(3.5%)에 해당하는 출자금 미화 2,000만 달러<sup>75)</sup>와 이에 따른 제반 비용<sup>76)</sup> 전부를 한화그룹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2년 9월 초순경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팀 사무실에서 컨소시엄 구성원이 각자 대한생명 지분을 직접 인수하기로 하면서 한화그룹은 맥쿼리생명의 대한생명 인수자금을 곡물수출입방식을 통하여 지원<sup>77)</sup>하고, 그 외에 위 생명

75) 2001. 12. 14. 한화그룹이 제시한 대한생명 예상 인수가격 7,000억여 원에 대한 맥쿼리생명의 지분

76) 보험료, 대리인 수수료, 은행수수료, 법률자문비용, 위험회피를 위한 헤지비용, 세금, 문서작성 비용 등

77) 곡물수출입 회사인 □□ □□□□, ▲▲ ▲▲▲와 사전 협의하에 주식회사 한화는 □□ □□□□부터 대두유(Soybean oil) 27,180,816달러 상당을 360일 뒤 결제조건의 기한부 수입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하고, 한화는 다시 위 대두유를 주식회사 ▼▼▼▼에 27,918,280달러에 360일 뒤 결제조건으로 외상수출하며, ▼▼▼▼은 위 대두유를 ☆☆☆☆☆에 26,338,000달러에 360일 뒤 결제조건으로 외상수출하고, ☆☆☆☆☆는 위 대두유를 한화가 사전에 알선해 준 ▲▲ ▲▲▲에 26,338,000달러에 즉시 현금결제 조건으로 수출하여 그 대금 전액을 맥쿼리생명에 대한생명 주식 인수자금으로 대여하고, 맥쿼리생명은 위 26,338,000달러(한화 28,262,500,000원)를 대

보험사의 컨소시엄 참여에 따른 제반 비용과 이익제공은 1차 이면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2차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한화 컨소시엄은 이러한 이면계약의 내용을 숨기고 마치 맥쿼리생명 이 진정한 투자 의사가 있는 전략적 투자자인 것처럼 투자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2002. 9. 23. 공자위로 하여금 대한생명(지분 51%)을 위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10. 28. 예보와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는 2005. 2. 15. 위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한화그룹 임원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한 후,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하여 예비적으로 기소하였다.

## ② 검토 중점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한화 측의 기망행위에 대한 법원의 형사판결문과 국제중재법원의 국제중재 판정문 및 관련 소송기록 일체를 입수한 후,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의 한화그룹 임원에 대한 무죄 판단의 근거와 국제중재 소송에서의 패소 사유를 확인하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이유로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계약을 무효화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 ③ 법원의 한화그룹 임원에 대한 무죄 판단의 근거

서울지방법원(1심 법원)은 2005. 7. 1. 위와 같은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공자위가 제시한 투자자 자격조건은 필수 조건이 아닌 우대 조건으로 투자자를 본격

---

한생명 주식 인수자금으로 하여 한화그룹 및 오릭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에 대한생명 입찰에 참여하며, ☆☆☆☆☆는 대한생명 주식보호 예수기간 1년이 경과한 즉시 한화그룹이 지정한 회사(○○○○)에 위 생명보험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주식을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한화그룹이 위 곡물 매입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였음

적으로 심사하기 전에 ㉠㉠가 입찰을 포기하여 2인 이상의 경쟁을 전제로 하는 입찰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2005. 11. 18. 서울고등법원(2심 법원)도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예비적으로 기소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매각소위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한화 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자격과 가격 등의 문제에는 심사를 엄격하게 했으면서도 맥쿼리생명의 대한생명 주식 인수자금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위 컨소시엄도 투자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컨소시엄이 위 생명보험사의 인수자금 조달방법을 예보 등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월한 부정한 수단이나 책략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2006. 6. 16. 대법원에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한화그룹 임원의 이면계약 체결 행위에 관한 입찰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sup>78)</sup>를 확정하였다.

#### ④ 국제중재 소송에서의 패소 사유

2006. 7. 28. 예보는 국제중재법원에 맥쿼리생명이 한화그룹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진정한 전략적 투자자인 것처럼 공사를 기망한 후에 주식매매계약

78) 구 재정경제부장관 등에게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부분 등은 유죄를 선고하였음

등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국제중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중재법원은 맥쿼리생명이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하여 투자와 관련된 위험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고의적으로 이면계약 내용을 숨긴 사실은 모두 소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예보는 입찰과정에서 한 번도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하여 위 보험사로부터 구체적인 보장을 요구하거나 주식 자금 조달에 대하여 실사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주주 간 계약서에도 위 생명보험사가 대한생명 지분을 언제라도 다른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위 공사는 위 생명보험사의 자금출처뿐만 아니라 참여 그 자체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소극적 기망행위와 대한생명 매각 결정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2008. 7. 23. 위 공사의 청구를 기각(예보 패소)하였다.

## ⑤ 검토 결과

이처럼 이면계약에 따른 기망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법적 절차를 통해 그 사실관계는 인정되고 있으나,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계약을 무효화 또는 취소하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 문제점: 전략적 투자자 검증 및 매매계약 체결 업무 미흡

2001. 8. 7. 제11차 공자위에서 대한생명에 대한 투자자 자격을 원칙적으로

국내의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하는 ‘대한생명 세부 매각추진방안’을 의결하면서 예보로 하여금 투자자 자격요건을 검증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매각조건 및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 컨소시엄과의 협상에 대한 실무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한화 컨소시엄이 2001. 12. 14. 제출한 투자제안서에 맥쿼리생명의 자금조달방법에 대해 자금조달준비를 완료하지 않았으나, 컨소시엄이 지급해야 할 매수가격의 본인 부담 부분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자금조달방법과 출처는 구체적으로 기재되거나 설명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2002. 6. 27. 제26차 공자위와 같은 해 9. 23. 제32차 공자위에서 한화 컨소시엄이 투자자 자격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우선 협상대상자 및 최종 인수자로 각각 선정하고, 대한생명(지분 51%)을 매각하도록 의결했으므로 위 공사는 투자자 자격과 관련하여 필수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맥쿼리생명이 투자위험을 부담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자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야 했다.

또한, 경영 능력이 검증된 보험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면 대한생명을 매각한 후에 잔여 지분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공사는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생명을 매각하기 전에 맥쿼리생명이 진정한 전략적 투자자인지를 검증하여야 했고, 대한생명 매각 후에도 위 생명보험사가 진정한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여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매각 관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와 같이 한화 컨소시엄이 제출한 투자제안서에 자금조달방법과

출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거나 설명된 바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위 공사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거나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확인하지 않는 등 위 컨소시엄에 대한 자격 검증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더구나, 2002년 2월경 대한생명의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도 위 컨소시엄에 대해 컨소시엄 외국파트너들의 투자는 제한적이고, 경영 참여범위가 불확실하며, 인수 자금조달능력도 유보적인 한편,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협력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었고, 같은 해 4. 13. 맥쿼리생명에서는 위 공사에 “이사회에 구성원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회신하는 등 경영 참여 등에 불명확한 태도와 의사를 표명하여 위 컨소시엄이 진정한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는에도 위 생명보험사의 경영 참여 등 투자자 자격요건을 직접 확인하거나 대한생명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등의 기본적인 업무처리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위 공사는 2002. 6. 27. 한화 컨소시엄이 대한생명 매각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위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 내용이 투자자 자격요건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맥쿼리생명과 한화그룹 사이에 체결된 이면계약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오히려 같은 해 10. 28. 컨소시엄 구성원 간 별도 약정이 유효함을 인정한다는 약정이 포함된 주식매매계약(주식매매계약서 4.10조) 등을 체결<sup>79)</sup>하였다.

79) 대한생명 매각의 투자자 자격요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보험사인 맥쿼리생명이 장기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는데도 위 생명보험사가 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언제든지 컨소시엄 내부 구성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컨소시엄을 탈퇴할 수 있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주주간 계약서 3.2조)을 체결하였고, 대한생명 매각 1년 뒤인 2003년 12월 실제로 위 생명보험사는 이면계약 내용과 같이 한화건설에 지분 3.5%를 모두 매각하고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였음

그 결과, 2008. 7. 23. 국제중재법원에서 위 공사의 맥쿼리생명에 대한 투자자 자격 검증 방식과 한화 컨소시엄과 체결한 계약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위 공사가 맥쿼리생명이 전략적 투자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오히려 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별도로 체결된 위 약정을 반영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사유로 패소 판정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 (2) 국제중재 신청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

### < 검토 내용 >

- 예보가 한화 컨소시엄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대한생명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국제중재 신청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 ① 예보의 국제중재 신청 관련 처리 경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과정에서 한화그룹과 맥쿼리생명 사이에 체결된 이면계약에 따른 기망행위 사실이 드러난 후, 2006년 예보에서는 외부 법무법인과 내부 법률자문협의회에 한화 컨소시엄의 이면계약을 이유로 위 컨소시엄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등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하여 법률 질의를 하였으나 “준거법이 「민법」임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무효화 하거나 취소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답변<sup>80)</sup>을 받았다.

80) ① 예보에서 항소심 법원 판결 이후인 2006년 1월 법무법인 ㉔㉕에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인지 여부와 한화 컨소시엄에 대하여 국제중재 신청 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 질의를 하자, 위

그런데 2006년 5월(정확한 날짜 미상) 위 공사는 사장 내부 결재로 국제중재를 신청하겠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같은 해 7. 28. 국제중재법원에 한화그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2008. 7. 23. 패소하였다.

## ② 검토 중점

예보의 「이사회 규정」, 「위임전결규정」, 「내규 및 소송 등 관리규정」 등의 내부 규정과 국제중재 관련 법률 자문 서류를 검토하고, 위 공사가 국제중재 신청과 관련하여 공자위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입수한 후에 관련자들로부터 국제중재 신청 처리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으로 위 공사가 국제중재 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 ③ 검토 결과

### 문제점: 국제중재 신청 관련 업무처리 미흡

#### 문제점 가) 이사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위배하면서 국제중재 신청 결정

예보 내부 규정인 「이사회 규정」 제5조 제5호에 따라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필수 의결사항이고,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제6항에 따라

---

법무법인에서는 2006. 1. 27. 대한생명 매각 관련 주식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라고 보기 어렵고, 위 컨소시엄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망행위를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되기도 어렵다면서 국제중재를 신청해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하였음

② 2006년 3월 예보에서 법무법인 ○○에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와 같은 사유로 취소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 질의를 하자, 2006. 3. 24. 위 법무법인에서는 대한생명 관련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보기는 다소 곤란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계약은 컨소시엄이 주체가 되어 정상적으로 이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주장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하였음

③ 예보 내부 법률자문협의회에서도 위 “②항”과 같은 법률 질의에 대해 2006. 5. 10.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고, 매매계약 취소와 관련한 기망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부분도 현재 상태로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한화 컨소시엄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한 예보의 모든 청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하였음

사장이 결재한 문서에 대해서는 사장의 최종 결재 후에 감사에게 송부하여 공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공사 내부 규정인 「내규 및 소송 등 관리규정」 제18조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제1항 및 제46조에 따라 부서장 등은 소송업무를 하면서 법무실장에게 소송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법무실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송심의회위원회에 부의하여 소송사유, 승소 가능성, 소송의 실익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사는 국제중재를 신청하면서 내부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회의 결을 거쳐야 했고, 사장 전결로 국제중재 신청을 결정한 이후에는 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 공람하도록 하여야 했다.

또한, 대한생명 매각 관련 국제중재는 조정 등과 같이 소송에 준하는 분쟁 해결 절차이고, 외부 법무법인과 내부 법률자문협의회의 법률자문 결과가 중재 신청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므로, 「내규 및 소송 등 관리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세칙을 준용<sup>81)</sup>하여 소송심의회위원회에 국제중재 신청 여부를 부의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공사는 국제중재 신청과 관련하여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2006년 5월(정확한 날짜 미상) 사장 전결로 국제중재 신청을 결정한 후, 감사에게 송부하여 공람하도록 하지도 않았고, 소송심의회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받지도 않았다.

---

81) 어떤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는 법규를 그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다른 사항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는 것

문제점 나) 공자위에 국제중재 신청 관련 보고를 하면서 중요사항 누락

위와 같이 예보에서 국제중재 신청을 결정한 후에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2006. 5. 29. 공자위에 ‘대한생명 매각 관련 사후관리 방안’ 보고서를 제출하여 국제중재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고, 공자위의 심의를 받았다.

그런데 위 공사가 공자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외부 법무법인 등의 법률자문 결과, 국제중재를 신청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는 점과 대한생명 매각 관련 국제중재의 경우에 준거법이 국내 「민법」이므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 국제중재 비용(법무법인 비용 등 국제중재과정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얼마가 예상된다는 점을 상세히 기재하여 공자위 위원들이 국제중재 신청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공사는 위 보고서에 한화그룹의 행위는 공자위가 정한 투자자 자격요건을 실질적으로 위배하였으므로 국제중재가 불가피하다며 검토배경, 이면계약의 문제점, 대응방안, 향후 추진계획만을 기재하고, 별첨으로 ‘대한생명 매각 관련 법률검토 의견(매각 당시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㉔㉔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단순히 위 법무법인에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는 민법상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간략히 기재하였다.

이상의 “가항”과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보는 국제중재 신청에 대

한 외부 법무법인과 내부 법률자문협의회의 부정적인 법률자문 결과가 있었는데도 이사회 의결과 감사의 공람,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자위에 국제중재 신청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채로 2006. 7. 28. 한화 컨소시엄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등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하였다.

그 결과, 2008. 7. 23. 국제중재법원에서 국내 「민법」을 근거로 주식매매계약을 무효화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패소 판정함에 따라 위 공사에서는 국제중재 신청 관련 비용으로 210억여 원<sup>82)</sup>의 예산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한화 컨소시엄의 조건 이행에 대한 예보 점검의 적정 여부

#### < 검토 내용 >

- 조건부 우선 협상대상자였던 한화 컨소시엄이 대한생명을 인수한 후에 해당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예보에서 적정하게 점검했는지 여부

#### ① 예보의 한화 컨소시엄에 대한 조건 이행점검과 관련한 경위

2002. 3. 20. 거래구조 등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에서 대한생명 인수를 포기한 후, 대한생명 인수 희망자로 유일하게 남은 한화 컨소시엄에 대해 같은 해 4월부터 인수자격과 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오던 매각소위는 같은 해 6. 18. 제34차 회의에서 위 컨소시엄의 주요한 구성원인 한화그룹이 현행 보험업법령(「보험업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보험사의 신규 설립

82) 패소에 따른 공사 부담 비용 121억 원, 자문수수료 81억 원, 국제중재법원 비용 7억여 원, 출장비 1억 원 등

허가에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위 컨소시엄을 대한생명 매각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4인 중 3인의 의견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2002. 6. 27. 제26차 공자위에서 위 보험업법령에 따른 주요 출자자 요건은 보험사를 신규 설립허가할 때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기존 보험사를 인수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구 금감위 유권해석을 토대로 위 컨소시엄을 조건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만, 매각소위에서 반대한 한화그룹의 자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말까지 부채비율 200% 미만을 달성할 것 등의 조건<sup>83)</sup>을 세부협상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이후 위 컨소시엄이 위 조건을 모두 수용함에 따라 2002. 9. 23. 제 32차 공자위는 위 컨소시엄을 대한생명의 최종 인수자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 10. 28. 예보에서 한화 컨소시엄과 대한생명 주식 51%(한화그룹 30.5%, 오릭스 17%, 맥쿼리생명 3.5%)를 8,236억 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한화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하는 부채비율을 2005. 1. 31.까지 항상 23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2005. 12. 31. 이전까지 2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주주간 계약서 5.2조 a항)과 대한생명은 주주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한화계열사에 신규로 자금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주주간 계약서 5.2조 b항)을 주주간 계약서에 반영하였고, 한화그룹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컨소시엄에 매도한 주식을 반환받을

83) 인수 후 일정 기간(3년) 동안 대한생명은 한화계열사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을 하지 못하고, 2005년 말까지 부채비율 200% 미만을 달성하며, 예보가 감사와 일정한 수의 이사 임명권을 보유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였음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하는 내용(주주간 계약서 5.3조 a항)도 함께 반영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한화그룹이 위 주주간 계약서에 따른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2003. 8. 29.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이행 점검을 실시한 이후로 2006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행점검을 실시<sup>84)</sup>하였다.

## ② 검토 중점

2003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예보에서 총 6차례에 걸쳐 한화그룹에 부여된 조건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작성한 보고서와 이와 관련하여 회신받은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화그룹에 대한 이행점검을 적정하게 했는지 확인하였다.

## ③ 검토 결과

[표 13]과 같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3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3] 한화그룹의 부채비율 현황(2002~2005년)

(단위: %)

구 분	2002년 (230% 미만)	2003년 (230% 미만)	2004년 (230% 미만)	2005년 (200% 미만)
공정거래위원회 공표 부채비율	206.5	194.6	179.2	159.3
지분법 평가이익을 제외한 부채비율	-	208.0	202.6	171.0

자료: 예금보험공사 자료 재구성

84) 제1차 이행점검 : 2003. 8. 29.~9. 17., 제2차 이행점검 : 2004. 7. 5.~7. 13., 제3차 이행점검 : 2004. 11. 11.~11. 19.

제4차 이행점검 : 2005. 7. 18.~7. 22., 제5차 이행점검 : 2006. 1. 9.~1. 19., 제6차 이행점검 : 2006. 6. 12.~ 7. 11.

그런데 국회 등 일부에서 한화그룹이 인수한 대한생명의 지분법 평가이익 등이 위 부채비율에 반영된다면 조건 이행점검의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예보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을 점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표한 부채비율에서 대한생명의 지분법 평가이익을 제외한 부채비율도 함께 검토한 결과, [표 13]과 같이 한화그룹은 대한생명 지분법 평가이익을 제외하고서도 주주간 계약서 5.2조 a항에 따른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02. 10. 28. 한화 컨소시엄과 대한생명의 주식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이전에 대한생명은 이미 총 5건의 여신<sup>85)</sup>, 합계 810억 원을 한화그룹에 지원하였는데, 이후 위 810억 원의 여신에 대해 만기 연장(2005. 7. 31. 기준으로 여신 잔액은 670억 원이었음)을 한 것과 [표 14]와 같이 대한생명, △△△와 ▽▽▽가 @@@(주)로부터 164억여 원의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을 분양받은 것이 주주간 계약서 5.2조 b항에 따른 신규자금 지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발생하였다.

[표 14] 대한생명 등에서 @@@(주)로부터 분양받은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 계	대한생명	△△△	▽▽▽
합 계	16,450	10,774	4,340	1,336
골프회원권	7,080	5,160	960	960
콘도회원권	9,370	5,614	3,380	376

자료: 예금보험공사

85) 2002년 1월 ㉠에 250억 원, 2000년 1월 ㉢에 120억 원, 2002년 1월 ㉣에 300억 원, 2002년 1월 ㉤에 120억 원, 1999년 12월 ㉥에 20억 원의 여신을 각각 취급하였음

그러나 만기 연장의 합의는 기존 채권의 중요 부분에 대한 변경합의가 아니라, 기존 여신이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다7445판결)이 있고, 위 공사에서는 이러한 판례에 대해 법무법인 ㉔ ㉔, 법무법인 ☆☆ 등의 법률 자문을 통해 대한생명의 한화계열사에 대한 만기 연장을 신규 자금지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 등을 참고하여 볼 때,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위 주주간 계약서 5.2조 b항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신규 자금 지원’이란 대한생명과 그 계열사들이 한화계열사에 대해 대출, 회사채 인수, 지급보증 등 신용을 공여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지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 거래와 같은 상품·용역 거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위 법무법인들의 의견도 있었으므로 이것 역시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 **문제점: 취소 대상 매매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미흡**

2004년 11월 예보에서 한화그룹 임원에 대한 검찰수사를 통해 한화그룹과 맥쿼리생명 사이에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2005년 1월 법무법인 ㉔㉔에 이면계약과 관련하여 위 공사가 한화 컨소시엄에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에 대하여 질의하는 등 2006년 5월(정확한 날짜 미상)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법무법인 등에 위 컨소시엄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등에 대한 취소 가능성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한 바가 있

어, 기망행위를 이유로 대한생명 관련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주식매매계약서 제11.3조에 따라 위 컨소시엄에 주식매매계약 등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공사는 한화그룹과 맥쿼리생명 사이에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한화그룹에 대한 조건 이행점검을 실시<sup>86)</sup>하는 등 위 컨소시엄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추인’<sup>87)</sup>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었다.

따라서,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 체결을 이유로 위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 등의 취소를 계속 검토하였던 위 공사는 주식매매계약서 제11.3조에 따라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위 컨소시엄에 송달하여 신속하게 주식매매계약 등을 취소하거나, 취소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는 않더라도 주주간 계약에 따라 한화그룹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때 주식매매계약 등을 추인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위 컨소시엄에 고지하는 등으로 ‘추인’에 해당하여 향후 행사될 수 있는 취소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공사는 이면계약 내용을 인지한 이후에 신속하게 주식매매계약 등을 취소하지 않았고, 2004. 12. 13. 위 컨소시엄으로부터 지분 매각대금의 잔금 4,118억 원을 수령할 때에는 매각대금의 잔금 수령이 앞으로 검찰 수사결과에

86) 제4차 이행점검 : 2005. 7. 18.~7. 22., 제5차 이행점검 : 2006. 1. 9.~1. 19., 제6차 이행점검 : 2006. 6. 12.~7. 11.

특히, 제6차 이행점검은 예보에서 내부적으로 국제중재 신청을 결정한 2006년 5월(정확한 날짜 미상) 이후에 실시하였음

87)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추인이라고 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취소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계약상 권리의 추인으로 보는 것으로 위 ‘추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따라 발생하게 될 공사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매매계약을  
추인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고지하고서도 한화그룹에 대한 제4차에서 제6차  
까지의 이행점검을 실시하면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점검을 실  
시하는 등 한화그룹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위 주식매매계약 등의  
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그 결과, 2008. 7. 23. 국제중재법원에서 위 공사가 이면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에 신속하게 주식매매계약 등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약 1년 반 동안 위 컨소  
시엄과 그 경영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등 회사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  
은 주식매매계약 등을 추진<sup>88)</sup>한 것이라는 사유 등으로 패소 판정하는 하나의 원  
인을 제공하였다.

---

88) 국제중재법원은 예보가 현재 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들이 발각된 후, 거의 1년 반 동안 한화  
컨소시엄의 인수계약 이행을 계속 수용한 것은 주식매매계약 등의 추진이라고 판단하였음

## 4.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매각 관련 업무를 수행·보좌하면서 매각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의 논의 및 찬성·반대에 대한 심사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고,
- ②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에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출석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며,
- ③ 대주주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데도 다른 부실금융기관들과 함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포괄의제 결정하여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주의)

###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 ① 앞으로 생명보험사 매각을 위한 기업가치를 산정하여 매각 협상을 시작하면서 신계약물량의 발생기간을 짧게 인정하는 등으로 신계약가치를 적게 산정하고, 차감할 필요가 없는 지급여력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기업가치가 과소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업무도 제대로 하는 한편,
- ②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을 매각하면서 적정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 협상하지 않도록 하고, 대주주 지분 50%를 넘게 매각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콜옵션 등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매각 협상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③ 컨소시엄의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④ 국제중재를 신청하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승소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부절차도 준수하도록 하며,

⑤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 별 표 】

[별표 1] 사무국과 ♠♠♠ 위원 초안 등 비교

[별표 2] 퇴출은행 최대주주의 부실책임 관련 비교

[별표 3] 신계약물량 발생기간과 할인율에 따른 대한생명 신계약가치 비교

## 사무국과 ♠♠♠ 위원 초안 등 비교

구 분	공자위 사무국 초안	♠♠♠ 위원 초안	'02. 6. 19. 공자위 안건
심사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내용 없음</li> <li>▪ 관련 내용 없음</li> <li>▪ 매각가격의 적정성, 인수자의 적정성 순의 순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각 시 고려사항으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의 원칙에 충실”하여 구조조정 비용 회수의 모델 케이스가 되도록 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 저가 매각 또는 특혜시비 등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함</li> <li>▪ 인수의를 제시한 투자자들과의 협상 결과 @@가 제출한 투자제안서상 거래 방식은 매각추진방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li> <li>▪ 인수자 자격의 적정성, 매각가격의 적정성 순의 순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조정 비용 회수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회수 극대화 원칙에 충실하고, 투명·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매각함으로써 저가매각·특혜시비를 사전 차단</li> </ul>
심사 결과 (인수자 자격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법령상 기존 보험사의 인수자격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li> <li>- 한화 컨소시엄의 경우, 공자위가 의결한 세부매각추진방안에도 부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각심사소위가 한화컨소시엄의 인수 자격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게 된 계기는 올 3월 한화그룹 주요계열사들의 분식 결산사실이 적발되면서 한화그룹의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을 의심할 상황이 야기되었기 때문</li> <li>- 결국 한화컨소시엄이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한화그룹사들의 감사보고서들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주요 출자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li> <li>- 그러나 상기 요건은 보험사의 신규 설립 시 허가요건으로서 현행 법령상 기존 보험사 인수 시에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존재</li> </ul>
심사 결과 (인수자 자격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규정한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인수자가 충분한 경영·출자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li> <li>- 이에 따라 대한생명 인수자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업법」상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규정한 공적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인수자의 충분한 경영·출자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한화컨소시엄의 인수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 불가피</li> <li>- 매각심사소위 위원 4인 중 3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화컨소시엄이 대한생명의 인수자로서 적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자위 사무국 초안과 동일</li> <li>- 이에 따라 대한생명 인수자에 대해서도 현행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위원회에서 제기</li> </ul>
심사 결과 (인수자 자격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요건을 감안한 경우, 한화 컨소시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한화컨소시엄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마땅히 구비해야 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li> <li>- 물론, 이번 사안은 신규허가가 아니라 기존 회사의 대주주 지분을 양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자위 사무국 초안과 동일</li> <li>* 분식회계 문제의 경우 투자제안서 제출시점('02. 3. 15.)에 제기됨에 따라 인수자 적정성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계기를 제공</li> </ul>

구 분	공자위 사무국 초안	◆◆◆ 위원 초안	'02. 6. 19. 공자위 안건
심사 결과 (인수자 자격의 적정성)	<p>① 부채비율 200% 초과</p> <p>② 과거 <del>가가가가대대대대</del> 부실책임과 관련, 현행 금감위 규정에 의거 책임이행 완료</p> <p>- 실질적인 책임이행 여부에 대한 논란은 상존</p> <p>③ 최근 한화 계열사에 대한 분식회계 적발사실 등을 감안할 때 경영 투명성 또는 사회적 신용 관련 문제도 제기</p>	<p>- 그러나 「보험업법」상 주요출자자에게 일정요건을 요구하는 취지는 신규 허가나 지분인수나를 구별할 이유가 없으며, 주요출자자의 사후변경 시에도 사실상 보고를 받고 감독권한을 행사하므로 주요 출자자 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p> <p>▪ 상기 요건을 감안할 경우, 한화 컨소시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p> <p>① 부채비율 232%로서 「보험업법」 관련 법령상 기준인 200% 초과</p> <p>② 한화계열사들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에 결격</p> <p>▪ 둘째, 대한생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p> <p>① 그룹 전체로 최근 10년간 적자발생이 지속되는 등 충분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 보유 여부에 의문</p> <p>② 최근 한화그룹 소속사들의 회사채 발행내역, 회사채 발행 시 지적된 각종 위험성 등에 비추어 한화컨소시엄이 향후 대한생명 정상화를 위한 충분한 자금조달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구심 제기</p>	<p>▪ 재무능력 문제</p> <p>- 한화그룹 주력사의 가용자금규모 및 회사채 만기 현황 등을 감안할 때 대한생명 인수자금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p> <p>- 그러나 향후 대한생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출자능력에는 의문이 제기</p> <p>- 최근 10년간 그룹 전체로 적자발생이 계속되고 주력계열사의 재무능력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p>
결 론 (심사 의견)	<p>▪ 한화컨소시엄의 투자제안서는 매각 가격과 인수자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는 일부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p> <p>-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대한생명의 조속한 민영화 필요성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p> <p>①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 및 국가 신인도 제고</p> <p>② '99년 이후 수차례 매각추진에도 불구하고 매각절차가 장기화됨에 따른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p>	<p>▪ 매각심사소위 위원 4인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3인의 위원은 한화컨소시엄이 인수자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p> <p>- 하지만, 인수자격 문제에 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공자위에 있으므로 추후 가격협상의 진행 여부는 공자위에서 대한생명의 조속한 민영화 필요성 등 각종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p>	<p>▪ 한화컨소시엄의 투자제안서를 인수자 및 매각가격의 적정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당초 공자위가 매각 시 고려사항으로 제시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p> <p>- 이하 공자위 사무국 초안과 동일</p>

구 분	공자위 사무국 초안	◆◆◆ 위원 초안	'02. 6. 19. 공자위 안건
결 론 (심사 의견)	<p>③ 그간의 경영개선성과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시기능 및 선진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점도 감안</p> <p>▪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한화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심의의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p> <p>-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매각가격과 인수자의 적정성 문제 해소를 위 향후 협상 방향과 함께 강구</p>	<p>▪ 추후 가격협상을 하게 될 경우, 매각 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한생명의 가치는 현행 가치평가결과에 동 기준 시점 이후 대한생명의 경영개선실적, 유사기업과의 상대가치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조정</p> <p>- 아울러 한국재무학회의 용역결과를 반영</p> <p>- 구체적인 매각지분비율 등은 매각 주체에 일임하되, 상기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한 지분매각대금 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매각대금에 반영</p>	<p>③번은 제외</p> <p>- 이에 따라 향후 매각협상 방안은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함이 바람직</p>
결 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시 향후 협상 방향)	<p>▪ 매각가격 관련 사항</p> <p>- 매각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한생명의 가치는 현행 가치평가결과에 동 기준 시점 이후 대한생명의 경영개선실적, 유사기업과의 상대가치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조정</p> <p>- 구체적인 매각지분비율 등은 매각 주체에 일임하되, 상기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한 지분매각대금 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매각대금에 반영</p> <p>▪ 인수자 관련 사항</p> <p>- 인수자의 건전한 재무능력 등에 대한 담보를 위해 대한생명 인수 후 일정 시점까지 현행 법령상 보험사 신규 허가 시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p> <p>- 대한생명의 계열사 지원에 따른 재부실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인수 후 일정기간 동안 대출, 유가증권 매입 등 제반 자금지원을 제한</p> <p>- 예보의 경영감시기능 확보 차원에서 예보는 감사 및 보유지분에 비례한 이사 임명권을 보유</p>	<p>▪ 관련 내용 없음</p>	<p>▪ 인수자의 적정성</p> <p>- 대한생명의 인수자는 현행 「보험업법」상 주요 출자자 요건 및 충분한 출자재무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한화컨소시엄의 경우, 현재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p> <p>- 다만, 동 출자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행 「보험업법」에 직접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상기한 조기 민영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자위 결정에 따라 향후 협상을 계속할 경우에는 인수자의 적정성 관련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조건으로 협상하는 것도 강구할 수 있음</p> <p>- 인수자 적정성 해소방안(예시), 공자위 사무국 초안과 동일</p> <p>▪ 매각가격의 적정성</p> <p>- 현행 한화컨소시엄의 투자제안서상 매각대금은 대한생명의 적정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p> <p>- 공자위 사무국 초안과 동일</p>

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자료 재구성

[별표 2]

**퇴출은행 최대주주의 부실책임 관련 비교**

구 분	대대대대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지배구조	최대주주(한화) 지분율(16.5%), 대대대대가 한화계열 2사의 주요 주주	최대주주(《《) 지분율(4.25%)	최대주주(〇〇은행) 지분율(7.60%)	최대주주(은행, 〇〇은행) 지분율(7.60%)	최대주주(생명, 》》》 계열) 지분율(10.08%)
임원의 선임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선임	최대주주인 《《가 비상임 이사로 재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용공여	총여신의 15.2% (지급보증 37.4%)	총여신의 0.0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총여신의 1.54%
관련 임원의 부실 책임	갑〇〇 (문책경고, 손배소제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 관련 여신의 부실화 여부	계열사 여신 6백만 달러 전액 부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료: 구 금융감독위원회 간담회 자료

[별표 3]

신계약물량 발생기간과 할인율에 따른 대한생명 신계약가치 비교

신계약물량 발생 기간	할인율 적용에 따른 신계약가치	
	15%	15%(판매시점까지 20%)
3년	$2.40\text{배} \times 5,498 = 13,196$	$2.22\text{배} \times 5,498 = 12,207$
5년	$3.65\text{배} \times 5,498 = 20,069$	$3.25\text{배} \times 5,498 = 17,870$
10년	$5.87\text{배} \times 5,498 = 32,276$	$4.84\text{배} \times 5,498 = 26,613$
영구	$9.31\text{배} \times 5,498 = 51,191$	$6.38\text{배} \times 5,498 = 35,080$

주: 1. 2002년 3월 말 기준임

2. 신계약가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보와 한화 컨소시엄 계약 시 적용된 5,498억 원임

3. 기업성장률은 예보와 한화 컨소시엄 계약에서 적용한 4.1%를 가정하였음

자료: 예금보험공사

<별첨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 금융위원회 )

2011. 4.

**감 사 원**

##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 II.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1. 녹색금융특화 MBA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과다 출연(주의)
3. 2010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주의)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목적

금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금융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이번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 범위

201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처리한 회계업무 전반과 “2010회계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감사하였다.

##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성과보고서 검사에서는 성과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수준을 소극적으로 설정하였는지 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과 함께 성과지표를 통한 실적치가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검증 가능하고, 측정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

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 '성과지표 실적치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 4. 감사기간 및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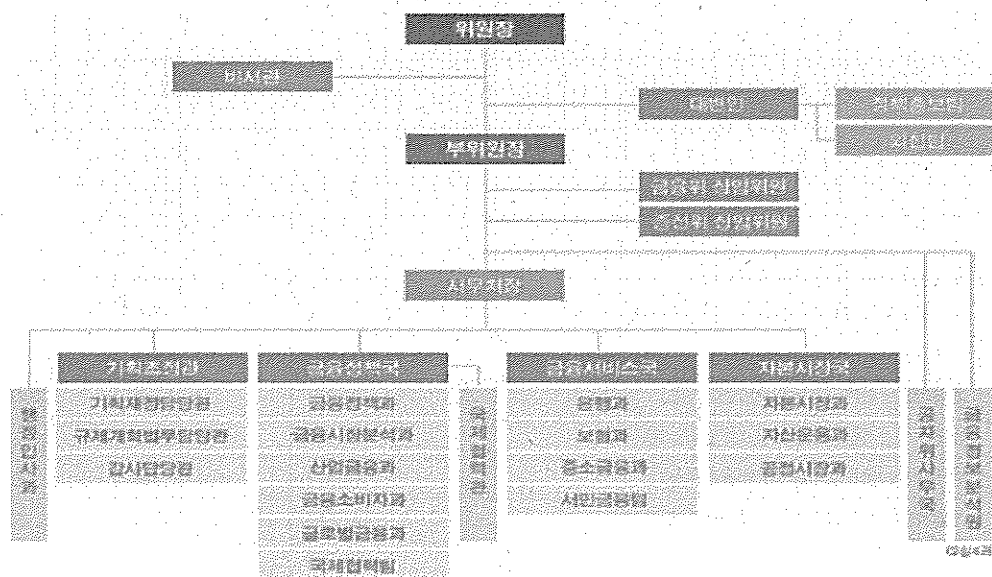
2011. 3. 17.부터 같은 해 3. 25.까지(7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1. 4. 28.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 1. 일반 현황(2010. 12. 31. 현재)

- 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그림 1]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sup>1)</sup> 등 총 9인으로 구성
- 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다. (사무처) 본부에 1관 3국 1대변인 15과 2팀,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 한시조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

[그림 1] 조직 현황



자료: 금융위원회

1) 당연직: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라. 인원

[표 1] 인원 현황(2010. 12. 31.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사무직		법정직		일반직		특정직(간접)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231	230	2	2	5	5	193	190	7	7	1	1	11	11	12	14
본 부	167	167	2	2	5	5	140	139	-	-	1	1	8	8	11	12
공저위 사무국	12	11	-	-	-	-	12	11	-	-	-	-	-	-	-	-
소속기관	52	52	-	-	-	-	41	40	7	7	-	-	3	3	1	2

주: 별도 정원(파견, 휴직 등) 제외

2.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금융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표 2]와 같이 58조 9,104억 원 (일반회계 3조 1,464억 원, 기금 55조 7,640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0%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 3조원으로 전년도에 위 기금으로 전출된 금액 787억 원 보다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2]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단위: 억 원, %)

회 계 구 분		'10세출예산	'09세출예산	증감률
총 계		589,104	586,811	0.4
일반회계		31,464	28,868	9.0
기금	소 계 (관리주체)	557,640	558,766	△0.2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융위원회)	201,758	110,362	82.8
	농어가목돌미련저축장려기금 (금융위원회)	1,559	1,560	△0.1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42,206	57,909	△27.1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20,821	24,595	△15.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협중앙회)	15,736	20,913	△24.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14,577	11,168	30.5
	여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금보험공사)	132,668	117,820	12.6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관리공사)	21,899	12,086	81.2
	구조조정기금 (자산관리공사)	106,416	202,353	△47.4

자료: 금융위원회

결국 일반회계 3조 1,464억 원 중 [표 3]과 같이 회계기금 간 거래 3조 33억 원,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출자금 등 1,097억 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사업금액은 334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정직성 경비가 222억 원으로 전체의 66.5%에 해당(금융위원회가 직접 집행한 주요사업비 예산액은 112억 원)한다.

[표 3]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세부 현황

(단위: 억 원)

일반회계	31,464
인건비	150
기본경비 <sup>1)</sup>	72
주요사업비 - 산업은행, 기업은행 출자 40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리기금 출연 652 - 모기지론 이차보전 민간이전 45	1,209 (작출 금액 합은 1,097)
회계기금 간 거래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30,000 - IBRD차관 원금상환 30 - IBRD차관 이자상환 3	30,033

주: 기본경비는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월정직책금,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그 외 9개 기금이 있고,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리기금 등 2개 기금을 관리(한국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금은 개별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 3. 2010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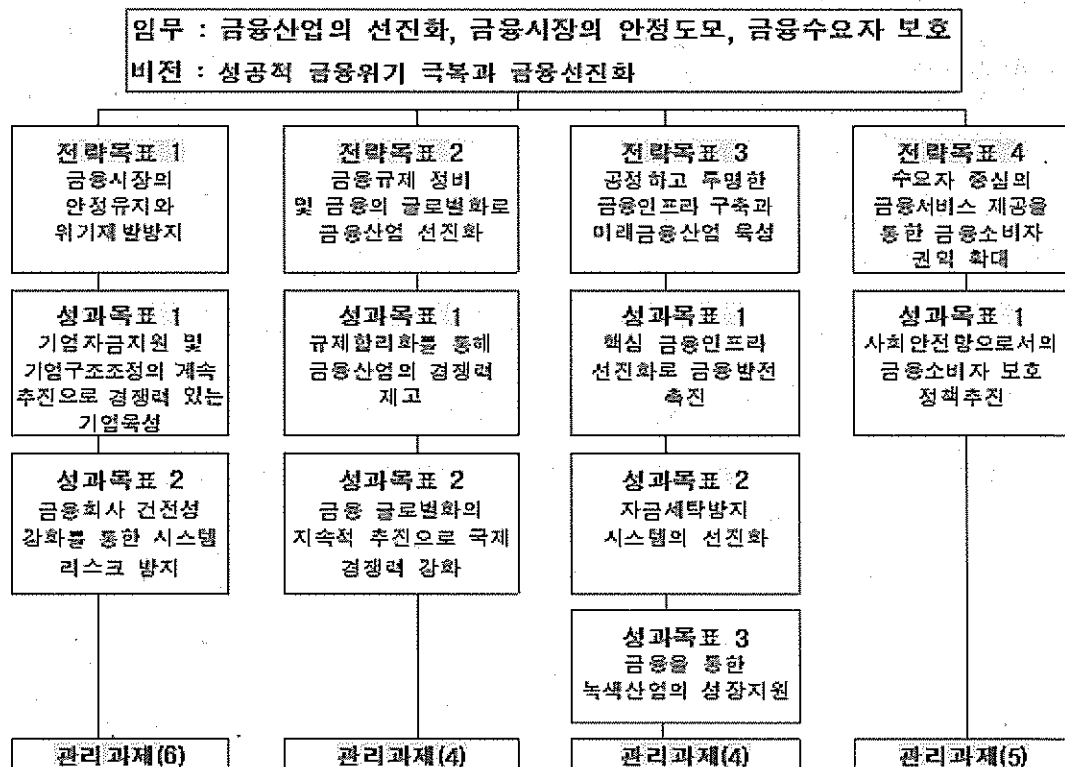
#### 가. 임무 및 비전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금융수요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선진화”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 나. 성과관리체계

위 비전 달성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4개의 전략목표, 8개의 성과목표, 19개의 관리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1개와 29개, 계 4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2] 금융위원회의 성과관리체계도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녹색금융특화 MBA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2010. 1. 15. “2010년 녹색금융 특화 MBA 선정·지원 기본계획(안)” 및 같은 해 2. 2. “녹색금융 특화 MBA 심사·선정 계획(안)”에 따라 △△△△△과 ○○대학교를 녹색금융특화 MBA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각 5억 원, 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당초 2010년 녹색금융특화 MBA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에 학생장학보조비 9억 원과 교수채용비 6억 원 총 15억 원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정무위원회(2009. 12. 3.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녹색금융 MBA 과정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교수채용비 6억 원을 삭감하여 학생장학보조비 9억 원<sup>1)</sup>만이 예산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국회 예산심의·확정 취지에 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은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했다.

또한 개도국 학생장학보조비 4억 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내 녹색금융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데, 국내 전문인력 양성에 앞서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1) 국내학생장학보조비 5억 원, 개도국 학생장학보조비 4억 원

4억 원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라는 지적<sup>2)</sup>이 있었으므로 위 관서에서는 재정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도국 학생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9. 12. 18. “녹색금융 특화MBA 지원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회에서 교수채용 예산을 삭감한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장학보조비 9억 원을 교수채용비, R&D투자비용<sup>3)</sup> 등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녹색금융특화 MBA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교와 △△△△에서 2010. 7월 [표]와 같이 학생장학보조비 545백만여 원, 연구개발비 160백만여 원, 교육인력 지원비 84백만여 원, 기타 사업경비(사업 운영경비 + 간접경비) 109백만여 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자, 같은 해 8. 17. 이를 승인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 국회 예산 및 보조금 예산 신청 집행 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국회 심의·확정 예산(A)	△△△△△		○○대학교		합계(B)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국내학생장학보조비	500,000	151,600	151,600	270,000	270,000	421,600	421,600
개도국 학생장학보조비	400,000	124,000	119,300	-	-	124,000	119,300
연구개발비	-	90,640	88,450	70,000	70,000	160,640	158,450
교육인력지원	-	44,040	28,704	40,000	40,000	84,040	68,704
사업 운영경비	-	64,720	62,714	20,000	14,897	84,720	77,611
간접경비	-	25,000	25,000	-	-	25,000	25,000
미집행잔액	-	-	23,232	-	5,101	-	28,335
총 계	900,000	500,000	500,000	400,000	400,000	900,000	900,000

자료: 금융위원회

그 결과 위 대학교들에서 2010년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된 내용과 다르게 학생장학보조비가 아닌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359백만여 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개도국 학생장학보조비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개도국 학

2) 2009. 11. 12. 국회 경무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상 지적함

3) 사실상 교수채용비 성격이며 교과목개발비는 수당, 영여장외 개발수당, 책임교수 직책판공비 등으로 지급함

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원기관도 개도국 학생 유치계획 마련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하여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대학교는 2010년 개도국 학생을 1명도 유치하지 못하였고 △△△△△는 개도국학생보조비 예산 400백만 원 중 281백만 원<sup>4)</sup>을 개도국 학생보조비와는 다르게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4) 기존에 자체 학교운영비로 개도국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녹색금융 MBA 예산으로 대체하여 120백만 원을 사용함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과다 출연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어민인 저축가입자에게 법정장려금<sup>1)</sup>을 지급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89,206백만 원, 65,000백만 원, 65,200백만 원을 출연(법정장려금 재원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이 부담)하였다.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 관서에서 위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추가 출연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출연하고 나머지는 불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표]와 같이 2010년 11월<sup>2)</sup>, 추가 출연 필요금액<sup>3)</sup> 10,363백만 원보다 5,937백만 원 많은 16,300백만 원을 위 기금에 출연하는 등

1) 농어민인 저축가입자에게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리(일반 1.5 ~ 2.5%, 저소득 6.0 ~ 9.0%) 추가 제공

2) 금융위원회는 2, 5, 8, 11월, 한국은행은 3, 6, 9, 12월에 출연

3)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 지급예상액'에서 '10월 말 기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임. 참고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저축기간이 3년, 5년으로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법정장려금 지급금액이 거의 확정되어 있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필요금액보다 과다하게 출연하였다.

[표] 정부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10월 말 기금 잔액(A)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 <sup>4)</sup> 까지 지급 예상액(B)	추가 출연 필요금액 [C=(B-A)/2]	11월 실제 출연금액(D)	과다 출연금액 (D-C)
2008	39,748	48,037	8,289 <sup>2)</sup>	22,301	14,012
2009	12,290	28,976	8,343	16,250	7,907
2010	14,288	35,013	10,363	16,300	5,937

- 주: 1. 차년도 1월에는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출연계획이 없어 차년도 1월분만큼 해당연도에 추가 출연하여 여유 자금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음
2. 2008년은 한국은행이 3월에 연간 출연금 전액을 출연하였으므로 추가 출연 필요금액이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 지급예상액'에서 '10월 말 기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임
3.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 실제 지급액'은 2008~2010년 각각 46,464백만 원, 28,660백만 원, 33,307백만 원임

자료: 금융위원회

그 결과, 위 기금에서는 연도 말에 법정장려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금액<sup>4)</sup> 중 위 과다 출연금액만큼 불필요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등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필요금액보다 과다하게 출연하여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 출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위 기금의 2008 ~ 2010년 말 잔액은 각각 36,579백만 원, 27,040백만 원, 27,097백만 원임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2010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제5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와 같이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금융수요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선진화”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임무-비전-전략목표(4개)-성과목표(8개)-관리과제(1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1개와 29개, 계 40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40개의 성과지표 중 목표치를 달성한 지표가 22개(55%), 초과 달성한 지표가 13개(32.5%), 목표치에 미달한 지표가 5개(12.5%)로 [표]와 같이 목표치 이상을 달성한 성과지표가 35개로 전체적으로 87.5% 수준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표] 전략목표 달성현황

(단위 : 억 원, %, 개)

전략목표	사업규모			성파지표 실적	
	예산	결산	집행률	달성/전체	달성률
전략목표Ⅰ : 금융시장의 안정유지와 위기 제발 방지	147,944	66,928	45.2	7/10	70
전략목표Ⅱ : 금융규제 정비 및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34.2	31.6	92.1	9/9	100
전략목표Ⅲ :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금융산업 육성	76.8	76.3	99.3	11/11	100
전략목표Ⅳ :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3,932	4,271	108.6	8/10	80
합계	151,987	71,307	46.9	35/40	87.5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기간(2011. 3. 17. ~ 3. 25.) 중 11개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29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 계 40개의 성과지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1. 성과계획 수립 부적정

### ① 당연히 달성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달성

(전략목표) Ⅱ. 금융규제 정비 및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성과목표) Ⅱ-2.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Ⅱ-2-재정①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  
 (성과지표) ② 외국금융회사 예로사항 해소(%)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의 성과지표를 ‘외국금융회사 예로사항 해소’로 설정하고 측정방법을 ‘(조치 및 답변제공건수/접수된 예로 및 건의사항)\*100’으로 하여 목표치를 70%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측정방법은 외국금융회사의 예로 해소와는 무관하게 답변만 있으면 100% 달성되는 것이고, 위 관서에서 설정한 목표치도 2008년 및 2009년 모두

100% 답변이 완료되었는데도 2010년에 70%로 낮게 설정하는 등으로 위 측정방법과 목표치는 위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절하다.

## ②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을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 설정

(전략목표)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금융산업 육성  
(성과목표) III-3. 금융을 통한 녹색산업의 성장지원  
(성과지표) 녹색금융계획 수립(건)

성과목표 “금융을 통한 녹색산업의 성장지원”의 경우 성과지표를 ‘녹색금융 계획 수립(건)’ 및 측정방법을 ‘분기별 보고횟수’로 하여 목표치를 ‘4건’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 따라 녹색금융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므로 ‘분기별 보고횟수’를 위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목표치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③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불가능한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I. 금융시장의 안정유지와 위기 재발 방지  
(성과목표) I-2.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방지  
(관리과제) I-2-재정. 금융·기업 구조조정 지원  
(성과지표) 은행권 부실채권비율(%)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기업 구조조정 지원”의 성과지표를 ‘은행권 부실채권비율(%)’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을 포함하는 시장상황 및 금융회사 여건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재정 사업을 반영하지 못하여 위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서는 부적절하다.

## 2. 성과실적의 신뢰성 미흡

### ① 제시한 측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실적치를 산정하여 목표치 초과 달성

(전략목표) II. 금융규제 정비 및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성과목표) II-2.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II-2-제정② 금융관련 국제협력  
(성과지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 금융 산업의 선진화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관련 국제협력'의 성과지표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 금융 산업의 선진화'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으로 '면담, 협상, 정보교류, 회의 참석 및 MOU 체결횟수'로 하고서는 목표치는 '협상'으로만 측정하기로 하여 5회로 설정하였으나 막상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면담, 협상, 정보교류 등을 모두 포함하여 19회로 제출하여 당초 제시한 목표치를 쉽게 달성하였다.

### ② 설문조사를 임의로 유리하게 해석하여 실적 보고

(전략목표)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금융산업 육성  
(성과목표) III-1. 핵심 금융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관리과제) III-1-제정② 금융행정지원 효율화  
(성과지표) 금융정책 인지도 향상(%)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행정지원 효율화'의 성과지표를 '금융정책 인지도 향상'으로 설정하고 위 성과지표 측정을 위해 위 관서에서는 '주요 금융정책별 평균 인지도 설문조사'를 하기로 하면서 목표치를 10%로 제시하였고 실적은 56.7%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햇살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위 관서에서는 '살과 관련된 정책' 또는 '대북정책' 등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까지 위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햇살론을 서민 대출로 알고 올바르게 응답한 비율은 43.4%에 불과한데 실제 설문조사 결과는 56.7%로 나타나 실적이 다소 과장되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할 때 당연히 달성되거나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어려운 지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
- ②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과를 당초 설정한 측정방법과 다르게 측정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임의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7>

##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운영실태 -

2011. 12.

감 사 원

# I.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에서는 2011년 1월 실시한 “한국수출입은행 기관운영감사”에서 일부 금융기관이 어음대체결제수단<sup>1)</sup>을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B2B대출”(Business to Business대출)이라 한다]<sup>2)</sup>을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취급하는 사항을 지적하여 같은 해 6. 3. 문책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다.

또한 같은 해 4월부터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감사에서 유사사례를 점검(대출금액 10억 원 이상)한 결과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에서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취급된 B2B대출 사항을 파악하였다.

이는 우리은행 등 국내은행에서 실제 상거래 유무(세금계산서 확인 등)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 업체 간 상호 협조 등의 방법으로 실제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이전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을 받아 자금유통<sup>3)</sup>을 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B2B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이하 “구매자금대출”<sup>4)</sup>이라 한다] 취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검토함으로써 금

1) 종이어음 거래업체의 자금난에 따른 연체부도 등 어음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된 수단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전자채권, 전자어음 등이 있음

2)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세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B2B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제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로서 대출신청, 판매내역 확인 및 대출실행 등 모든 절차가 어음발행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출이라고 되어 있음

3) 상거래상 우월적인 구매기업이 부실가능성이 높아지면 자금정색 완화 등을 위해 협력업체인 판매기업 등을 통해 판매기업에 대출된 자금을 되돌려 받아 사용

4)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유통서 문란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실물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실제 상거래를 수반한 대출관행 정착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매기업 등의 결제행태 개선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운영실태” 전반(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사례는 샘플 조사)을 감사하였다.

## 2. 감사대상 및 범위

이번 감사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을 총괄한 한국은행, 국내은행의 대출시스템 등 금융시스템을 감독·검사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B2B대출 등을 취급하는 우리은행·기업은행·경남은행, 구매자금대출 관련 보증을 해주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8개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2009. 1. 1. 이후 처리한 B2B대출과 구매자금대출을 주대상으로 하였다.

##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 실행과 사후관리가 적정한지, 구매자금대출 관련 보증 취급과 대위변제가 적정한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은 적정한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국내은행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을 적정하게 감독·검사하고 있는지와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하였는지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표 1] 참조)

---

씨 제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구매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이라고 되어 있음

[표 1]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운영실태" 감사중점사항

대상기관	감사 중점사항
1. 우리은행 등 국내은행	•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 실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2.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 구매자금대출 관련 보증 및 대위변저의 적정성
3. 한국은행	• 총역한도대출 지원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4. 금융감독원 5. 금융위원회	• 국내은행의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에 대한 감독·감사의 적정성 •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의 적정성

#### 4. 감사기간

이번 감사는 2011. 7. 4부터 같은 해 7. 29까지 12명(외부감사인원 2명 포함)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관계자와 질문서와 답변서를 주고받는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1. 12. 1.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현황

### 1. 도입배경

한국은행에서는 2000년부터 기업 간에 상거래대금 결제 시 종이어음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및 연쇄부도 축소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인 구매자금대출(2000. 5. 22.부터 시행)과 B2B대출(2001. 2. 12.부터 시행)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 2.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한국은행이 도입하기로 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표 2]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다.

[표 2]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관련 인센티브 제도

구분	시행시기	시행기관	내 용
충역 한도대출지원	2000. 5. 22.	한국은행	저리의 정액자금 지원
보증기관 지원	2000. 3. 17.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구매자금 대출 보증 지원
세제지원	2000. 10. 21.	기획재정부	법인세액 10% 이내 공제 등
불공정 행위 완화	2001. 12. 26.	공정거래위원회	법정 감질(1점 내지 2점) 등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제공

### 3. 대출취급 간소화 방안 시행

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 당시에는 상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

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이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2000. 8. 7. 부터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실물로 청구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업무부담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는 대신 세금계산서 내역을 전산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대출취급 간소화 방안'(이하 "간소화방안"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이를 이후 도입된 B2B대출에도 적용하였다.

그런데 간소화방안 전후 마련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등에서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계속해서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 서류에 의해 실제 상거래 유무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국내은행에서는 간소화방안 시행 이후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 4. 대출취급 현황

B2B대출과 구매자금대출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할인어음 방식의 대출은 [표 3] 및 [도표]같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B2B대출 등 대출 현황(잔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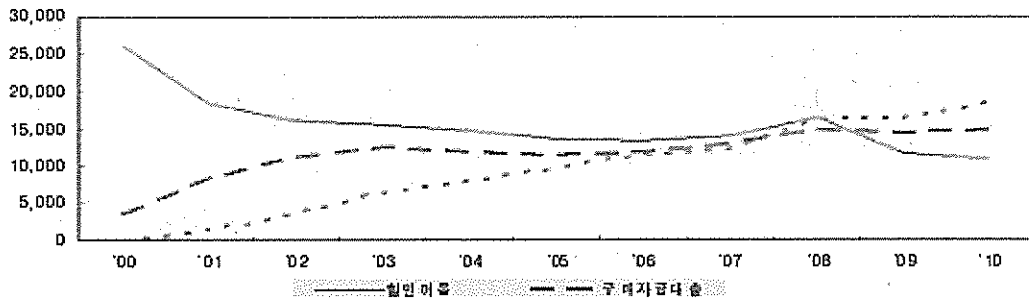
(금액단위: 십억 원)

연도	할인어음	구매자금대출	B2B대출
2000	26,107.6	3,359.4	-
2005	13,648.8	11,408.5	9,753.4
2008	16,392.8	14,903.1	16,264.2
2009	11,651.2	14,308.7	16,160.2
2010	10,953.9	14,795.7	18,276.2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제공

[도표] B2B대출 등 대출 현황(잔액 기준)

(금액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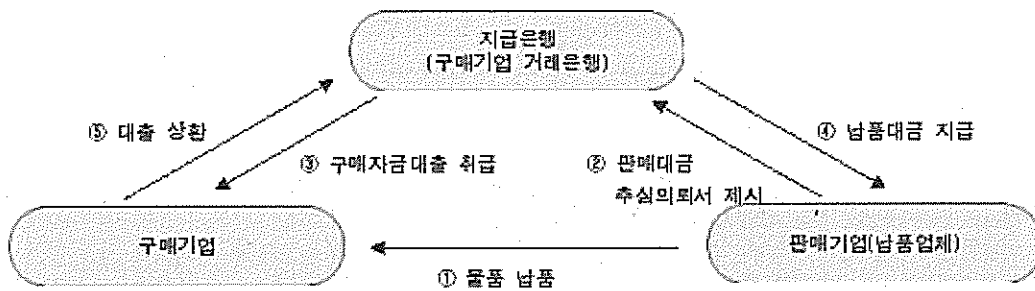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 5. 대출취급 절차

구매자금대출(차주가 구매기업)은 [그림 1]과 같이 판매기업이 물품을 판매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기업 거래은행에 판매대금 추심의뢰서(세금계산서 첨부)<sup>5)</sup>를 제시하면 은행이 구매기업에 대출을 취급한 후 대출금을 판매기업에 직접 지급 결제하고 대출만기일에 구매기업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 구매자금대출 취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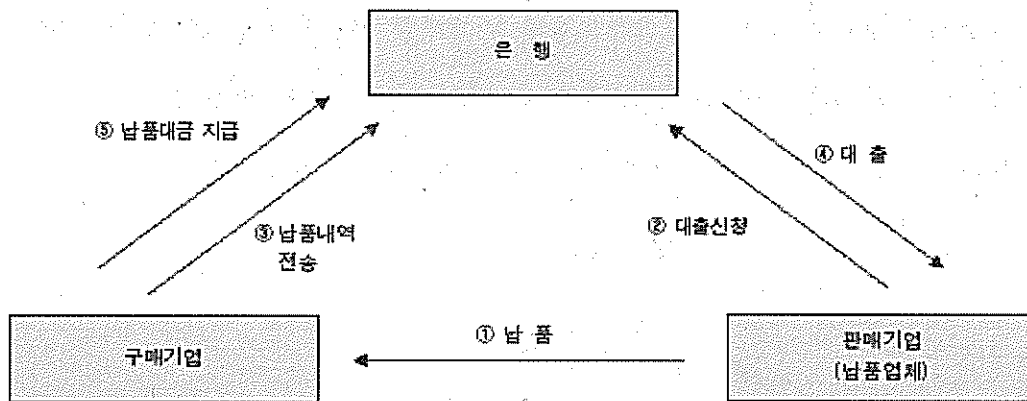


5)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제시하는 전자방식 외에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제시하는 오프라인(Off-line)방식이 있는데 거래 건수가 적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소수의 기업이 이용

- ① 판매기업은 구매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 납품(D일)
- ② 판매기업은 물품납품 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대금 추심외서세금계산서 첨부)를 지급은행에 제시(D+30일 이내)
- ③ 은행이 구매기업에 구매자금대출 취급
- ④ 은행이 판매기업에 대출금으로 납품대금 지급 결제(D+37일 이내)
- ⑤ 구매기업이 대출만기일에 대출 상환

B2B대출(차주가 판매기업)은 [그림 2]와 같이 판매기업이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기업(주로 대기업)으로부터 물품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대신 해당 외상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세금계산서 첨부)하고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구매기업은 채권만기일에 은행에 대금을 납부하여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 B2B대출 취급 절차



- ①~② 판매기업은 물품을 판매한 후 거래은행에 관련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신청(세금계산서 첨부)
- ③ 구매기업은 납품받은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거래은행 앞으로 확인서 전송
- ④ 거래은행은 판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내용과 구매기업이 전송한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대출 실행  
※ 대출이자는 선취(어음할인방식의 할인료와 동일)
- ⑤ 일정기간 후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납품대금을 입금하고 판매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

### III. 감사결과

#### 1. 실태

우리은행 등 국내은행은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이 2000년부터 도입된 이후 10여 년 동안 대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은행 등 17개 국내은행이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취급한 B2B대출(건별 10억 원 이상)<sup>6)</sup> 및 구매자금대출(건별 5억 원 이상)<sup>7)</sup>을 대상으로 대출취급 국내은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실거래 유무 등 대출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확인하도록 하였는데, [표 4]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대출실행 누적액(115조 3,170억여 원)의 7.3%인 8조 4,719억여 원이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인 것으로 확인(B2B대출 2조 4,717억여 원, 구매자금대출 6조 2억여 원)되었다.

####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주요 사례>

- (○○ 계열) □□은행에서 주식회사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계열의 주요 협력업체)에 2008년 이후 취급한 B2B대출 642억 원, 구매자금대출 80억 원, 총 722억 원 중 647억 원이 무거래 대출인 것으로 확인
  - \* ○○계열은 2009. 4. 3. 워크아웃이 개시되어 현재 진행 중
- (□□ 계열)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의 경우, 2008년 이후 은행 등 6개 은행에서 1,300억 원의 관계사 간 구매자금대출 및 B2B대출을 받았는데, 이 중 은행, 은행 대출 총 324억 원을 점검한 결과, 234억 원이 무거래 대출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976억 원도 무거래 대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 □□ 계열은 2010. 6. 30.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진행 중

6)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 간 B2B대출만 대상), 경남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액 3억 원 이상에서 실행된 대출을 대상으로 점검

7)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은 건별 3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점검

[표 4] B2B대출 등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

(단위: 십억 원, %)

은행명	B2B대출 등 실질부적 종목(%)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확인불가P	
		무거래 대출	과다 대출	선 대출	기간초과 대출	소 계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	55,706.8	310.7	17.9	213.2	483.3	1,025.1	1.8	23,989.7	43.1
***	11,515.6	12.6	164.2	497.3	943.3	1,617.4	14.0	1,074.6	9.3
***	2,835.4	26.3	21.8	169.1	19.4	236.6	8.3	17.9	0.6
***	8,853.3	64.4	25.3	325.7	1,860.4	2,275.8	25.7	83.6	0.9
***	6,394.4	7.1	0.1	216.0	75.2	298.4	4.7	27.6	0.4
***	12,855.2	268.0	164.5	1,115.9	381.3	1,929.7	15.0	39.1	0.3
***	6,253.7	57.2	8.3	328.4	85.7	479.6	7.7	25.2	0.4
***	10,902.6	63.8	124.7	233.9	186.9	609.3	5.6	42.7	0.4
총계	115,317.0	810.1	526.8	3,099.5	4,035.5	8,471.9	7.3	25,300.4	21.9

주 : 1.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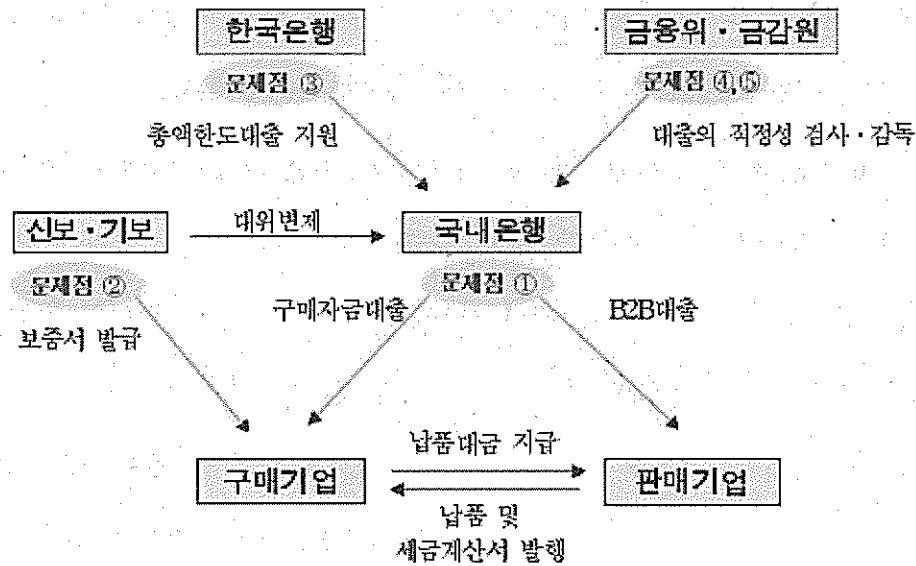
구분	내용
무거래 대출	• 실제 삼거래에 기반하지 않고 구매기업이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운전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거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관계사 등인 판매기업과 공모하여 허위로 판매기업에 B2B대출 등을 받게 한 후에 판매기업으로부터 대출금을 되돌려 받아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
과다 대출	• 실제 삼거래는 있으나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로 무거래 대출의 일종
선대출	• 세금계산서 발행일 전에 대출 실행(B2B대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 전에 외상매출채권이 발행되면 대출일과 관계없이 선대출임)
기간초과 대출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후에 환어음 등을 추심의뢰한 구매자금대출(「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6조)

2. 확인불가(업체 부도나 폐업, 자료 미제출 등)에도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은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 있음  
자료: 우리은행 등 국내은행 자료 재구성

## 2. 문제점

### 문제점 종합

#### □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구조도



#### □ 문제점 개요

- ① **국내은행**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실제 상거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여 허위 대출신청 이후 구매기업이 자금유통 목적으로 판매기업으로부터 대출금을 부당하게 되돌려 받아 사용하는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만연
- ② **신보·기보**에서 대출실행 은행의 부당 또는 부적격대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위변제하거나 대출 적정성 점검 의무도 명백히 부과하지 않음
- ③ **한국은행**에서 **국내은행**의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취급 여부를 제대로 확인·점검 등을 하지 않고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
- ④ **금감원**에서 **국내은행**의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취급 여부 등을 검사·감독하지 않아 관리에 사각 발생
- ⑤ **금융위·금감원**의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방지 시스템 구축 미흡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실제 상거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고 사후에도 확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거래 의심대출 점검도 미흡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에서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인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이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위 3개 은행 여신 담당부서<sup>8)</sup>에서 기업 간 상거래 대금의 원활한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감리 담당부서<sup>9)</sup>에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 대출의 취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절차」(이하 “한국은행 B2B대출 취급절차”라 한다) 제2조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이하 “한국은행 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B2B대출이나 구매자금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간에 해당 대출이 제화 및 용역의 판매대금 결제를 위한 적정한 대출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 「여신업무 취급세칙」 제5조 및 제458조 등<sup>10)</sup>의 규정에 따르면 여신담당자는 여신의 용도 외 자금유용이 없도록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여신 취급 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여신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다.

8) 중소기업은행은 기업고재부, 우리은행은 여신정책부, 경남은행은 기업영업추진부

9) 검사 담당부서는 3개 은행 모두 감사부, 감리 담당부서는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각각 리스크감리부, 여신감리부, 여신감리부

10) 우리은행은 「여신규정」 제6조 및 제8조, 경남은행은 「여신운용규칙」 제12장 제1절 제11조

한편 한국은행은 2000. 8. 7. 상거래대금 결제 시 어음사용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한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을 도입하면서 상거래를 입증하는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B2B대출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실물로 제출하지 않고 전산으로 입력하게 하면 업무를 간소화하는 장점은 있으나, 기업들이 실제 상거래도 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위 3개 은행에서는 B2B대출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실물로 제출받지 않고 그 내역을 전산으로 받기로 하였다면 기업들이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실행 전후로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sup>11)</sup>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월별 또는 분기별)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대출이 무거래 대출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인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차주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제시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적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 은행 기업고객부에서는 '대출 실행 시 전자세금계산서<sup>12)</sup>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11) 대출일자 또는 대출일 전후에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해당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경우, 대출실행일 또는 직전에 대출금액과 유사한 금액의 상환내역이 있는 대출, 관계사 간 거래를 바탕으로 한 대출 등임

12)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일부 개인사업자는 2012년)에게 의무화하였음. 기업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상거래를 하면 세금과 바로 관련되기 때문에 상거래 없이 대출을 위해 허위거래를 한 것으로 꾸미는 실익이 줄어들

구축하고 의심대출에 대해서는 여신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차주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여부를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1. 중소기업은행 B2B대출 등 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중소기업은행에서는 「기업여신상품 취급세칙」 제3장 제3절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전자방식으로 B2B대출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실제 세금계산서 확인 대신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받을 수 있게 관련 업무를 간소화하기만 하고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을 추출하거나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B2B대출 등을 취급하는 여신담당자는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산으로만 확인할 뿐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 등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1. 7. 4. 감사개시일 현재까지 B2B대출과 구매자금대출 실행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을 추출하는 시스템(융통자금<sup>13)</sup> 점검 프로세스 등)'을 구축하지 않는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사례와 같이 여신취급부서의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신감리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13) 실제 상거래 없이 B2B 대출 등을 받아 대출금을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풍상 은행에서 융통자금이라고 함

**<여신감리 등 내부통제 부적정 사례>**

① 리스크감리부에서 2011. 4. 7. 무거래 대출이 의심되는 거래기업 178개를 해당 지점에 통보한 후 같은 해 4. 14.까지 “유통의심 거래 점검결과 처리 보고서”를 제출받음

- ■■■■지점 등 13개 지점에서 △△상사 등 14개 기업이 무거래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표 1] “유통의심 거래 점검결과 처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관계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리스크감리부는 보고서(적정보고 포함)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같은 해 8. 8.까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
- 그 결과 ■■■■지점 등 2개 지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사 등 2개 기업이 [별표 2] “영업점 조치사항 지연 처리 후 대출 명세”와 같이 해당 영업점에서 무거래 대출임을 확인 하고서도 취급금지 등의 조치를 지연함으로써 구매자금대출을 추가로 받게 되었고,
- ■■■■지점 등 6개 지점에서 주식회사 ▽▽▽▽ 등 6개 기업이 [별표 3] “영업점 점검결과 보고 부적정 명세”와 같이 무거래 대출을 받았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이번 감사원 감사 시 확인하여 해당 기업의 관련 대출을 회수하는 한편 취급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음

② 또한, 각 영업점에서는 여신기획부가 2010. 6. 1.부터 B2B대출 등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서 전산을 통해 “유통의심 점검표”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의심 거래(무거래 대출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점검하도록 하였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 이번 감사원 감사 시 무거래 대출로 확인된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이 받은 9건의 대출(23억여 원)이 위 점검표상에 ‘취급주의’ 또는 ‘취급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무거래 대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여신취급제한 등록 등의 사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점검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음<sup>14)</sup>

이에 이번 감사기간 동안 중소기업은행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취급한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sup>15)</sup>을 대상으로 대출취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대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 결과, [표 5]와 같이 총 1조 6,174억여 원의 대출이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로 확인되어 향후 업체부실발생 시 은행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었다.

14) 위 9건, 23억여 원의 대출금은 모두 회수되었음

15) B2B대출은 외상매출채권 발행액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구매자금대출은 대출실행액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임

[표 5] 중소기업은행의 B2B대출 등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

(단위: 십억 원, %)

대출 구분	총계 (A)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정산	확인 <sup>※</sup> 불가
		무거래 대출	과다대출 <sup>※</sup>	신대출	기간초과 대출	소 계			
						금액(B)	비율 (B/A)		
B2B <sup>※</sup>	3,393.3	-	75.3	293.3	-	368.6	10.8	2,132.5	892.2
구매자금	8,122.3	12.6	88.9	204.0	943.3	1,248.8	15.4	6,691.1	182.4
합 계	11,515.6	12.6	164.2	497.3	943.3	1,617.4	14.0	8,823.6	1,074.6

주 1: 과다대출은 세금계산서를 초과하여 실행한 대출금액 기재

2: B2B대출의 경우 총 대출 37조 2,834억 원 중 대기업 대출 33조 8,901억 원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

3: 확인불가는 부도폐업 및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감사기간 내 파악이 불가능한 대출임

자료: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

## 2. 우리은행 B2B대출 등 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우리은행에서는 「여신업무지침」 제413조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라 전자방식으로 B2B대출 등을 신청할 경우 실제 세금계산서 확인 대신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받을 수 있게 관련 업무를 간소화하기만 하고,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을 추출하거나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B2B대출 등을 취급하는 여신담당자는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산으로만 확인할 뿐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 등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2011. 7. 4. 감사개시일 현재 B2B대출의 경우 ‘대출실행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반면 구매자금대출에는 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고,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을 추출하는 시스템(융통자금 점검 프로세스 등)’은 B2B대출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반면 구매자금대출에는 구축(2008. 10. 29. 시행)되어 있는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은 2008년 이후 할인어음에 대해서는 실제 상거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특별감리를 실시하였으나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여신취급부서에서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 또는 수시(기획)감리 등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은행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취급한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sup>16)</sup>을 대상으로 대출취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대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 6]과 같이 총 1조 251억여 원의 대출이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로 확인되어 향후 업체부실발생 시 은행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

[표 6] 우리은행의 B2B대출 등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

(단위: 십억 원, %)

대출 구분	총계 (A)	부적격 대출						정상	확인 <sup>2)</sup> 불가
		무거래 대출	과다대출 <sup>1)</sup>	선대출	기간종료 대출	소 계			
						금액 (B)	비율 (B/A)		
B2B	47,944.1	308.9	17.1	122.3	-	448.3	0.9	24,675.7	22,820.1
구매자금	7,762.7	1.8	0.8	90.9	483.3	576.8	27.9	6,016.3	1,169.6
계	55,706.8	310.7	17.9	213.2	483.3	1,025.1	1.8	30,692	23,989.7

주 1: 과다대출은 세금계산서를 초과하여 실행한 대출금액을 기재

2: 확인불가능은 부도폐업 및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감사기간 내 파악이 불가능한 대출임

자료: 우리은행 제출자료

16) B2B대출은 외상매출채권 발행액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구매자금대출은 대출실행액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임

### 3. 경남은행 B2B대출 등 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경남은행에서는 「여신종류별 운용규칙」 제5-4장 제1절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전자방식으로 B2B대출 등을 신청할 경우 실제 세금계산서 확인 대신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받을 수 있게 관련 업무를 간소화하기만 하고,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을 추출하거나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B2B대출 등을 취급하는 여신담당자는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산으로만 확인할 뿐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 등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남은행에서는 2011. 7. 4. 감사개시일 현재까지 B2B대출과 구매자금대출 실행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을 추출하는 시스템(융통자금 점검 프로세스 등)'도 구축하고 있지 않는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다음 사례와 같이 여신취급부서의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신감리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여신감리 등 내부통제 부적정 사례>

- 여신감리부에서 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자금유통 목적의 불건전한 자금 지원 차단을 목적으로 건별 취급기한이 120일을 초과하는 대출 등을 감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점검 및 감리업무를 하면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구매기업으로서 구매자금대출 4건, 계 4,655백 만 원을 받아 판매기업이자 관계사인 ■■■■■주식회사 등에 지급한 후 당일 위 대출 금을 ○○○○ 계좌로 반환받은 것을 확인(경남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조회)하였는데도 정상적인 대출이라는 해당 지점의 의견서 등을 근거로 실제 상거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종결
  - 결국 위 4,655백만 원은 무거래 대출로 확인되었고, ○○○○은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도 대출금 회수나 신규 여신취급 제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결과 초래

이에 이번 감사 시 경남은행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취급한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sup>17)</sup>을 대상으로 대출취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대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 7]과 같이 총 2,366억여 원의 대출이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로 확인되어 향후 업체부실발생 시 은행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게 되었다.

[표 7] 경남은행의 B2B대출 등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

(단위: 십억 원, %)

구분	총계 (A)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정산	확인 불가 <sup>2)</sup>
		무거래 대출	과다대출 <sup>1)</sup>	선대출	기간초과 대출	소 계			
						금액(B)	비중 (B/A)		
B2B	2,341.7	17.2	18.4	166.0	-	201.6	8.6	2,125.2	14.9
구매자금	493.7	9.1	3.4	3.1	19.4	35.0	7.1	455.7	3.0
합 계	2,835.4	26.3	21.8	169.1	19.4	236.6	8.3	2,580.9	17.9

주 1: 과다대출은 세금계산서를 초과하여 실행한 대출금액을 기재

2: 확인불가는 부도폐업 및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감사기간 내 파악이 불가능한 대출임

자료: 경남은행 제출자료

17) B2B대출은 외상매출채권 발행액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구매자금대출은 대출실행액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임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은행장, 우리은행장, 경남은행장은**

- ①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확인 시스템 및 용통자금 점검 프로세스 구축과 대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대출취급 업무지침이나 자체 감리방안, 향후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취급자에 대한 자체 검사 강화 등 걱정할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나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전후로 세금계산서 확인 등 실제 상거래 유무를 철저히 점검하여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취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구매자금대출 보증 취급 및 대위변제 부적정**

보증취급 시 구매자금대출 실행 은행에 세금계산서 확인 등 대출의 적정성 확보 의무 부과와 의무 미준수 시 대위변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백히 미러하지 않고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양산 초래

신용보증기금에서 2001년 9월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2007년 5월부터 각각 신용도가 낮은 구매기업이 국내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표 8]과 [표 9]와 같이 구매자금대출에 대한 보증 업무를 하고, 구매기업의 연체 등 보증사고 발생 시 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한 국내은행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면 대위변제하고 있다.

[표 8] 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구매자금대출 보증 잔액(2008년~2011년 6월 말)

(금액단위: 십억 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구매자금대출 보증잔액	1,223.4	1,797.4	2,665.4	3,295.4

자료: 신용보증기금 자료 재구성

[표 9]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구매자금대출 보증 잔액(2008년~2011년 6월 말)

(금액단위: 십억 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구매자금대출 보증잔액	779.5	1,150.2	1,359.1	1,284.8

자료: 기술신용보증기금 자료 재구성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하 “한국은행 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라 한다) 제6조와 한국은행 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매자금대출 취급은 세금계산서 등 구매관련 서류에 의하여 구매대금 결제 관련 대출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뢰받거나 전송된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기보”라 한다)은 구매자금대출을 보증할때에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 대상으로만 한정하여 보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00. 8. 7. 상거래대금 결제 시 어음사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중소기업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 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제3조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실제 상거래도 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여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보·기보에서는 국내은행이 신보·기보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취급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은행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sup>18)</sup>(이하 “선관주의의무”라 한다)를 다하였는지 확인한 후 대위변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보·기보에서 국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할 때에 “본 보증서는 한국은행 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일반적인 보증특약만 부여한 채 보증함에 따라 국내은행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내은행이 한국은행 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제3조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였는지만 확인하면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위변제를 해 주고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 시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신보의 보증에 근거하여 실행된 구매자금대출(대출 건별 3억 원 초과)의 적정성을 보증취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한 결과 [표 10]과 같이 무거래 대출이 41건, 184억 원에 이르는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이 계 731건, 3,754억 원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에 향후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를 하여 기금에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18) 대법원 판례 2005다 24349(2006. 3. 10.)에 따르면 보증기관이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편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은행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

[표 10] 신용보증기금 보증 구매자금대출 중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현황

(금액단위: 십억 원)

무거래대출		과다대출		신대출		기간초과대출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1	18.4	30	5.0	68	35.7	592	316.3	731	375.4

자료: 신용보증기금 자료 재구성

또한, 2009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실제 연체 등 보증사고로 인하여 신보에서 대위변제한 52개 구매자금대출 업체<sup>19)</sup> 중 8개 업체<sup>20)</sup>를 대상으로 대출 적정성을 표본 점검한 결과, [별표 4]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부실업체 중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명세”와 같이 ▽▽▽▽▽ 주식회사 등 5개 업체에서 계 144억여 원(무거래 대출 124.9억여 원, 과다 대출 5.7억여 원, 기간초과 대출 14.2억여 원)을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중 56억여 원<sup>21)</sup>을 기금에서 대위변제하여 기금에 손실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 시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기보의 보증에 근거하여 실행된 구매자금대출(대출 전별 3억 원 초과)의 적정성을 보증취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한 결과 [표 11]과 같이 무거래 대출이 8건, 65억 원에 이르는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이 계 425건, 2,607억 원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에 향후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하여 기금에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 정상 대출과 부당 대출을 포함한 대위변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계열 관계사이거나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단위로 계속 대출하는 등 부당 대출 가능성이 높은 18개 기업을 추출한 후 휴·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한 10개 업체 제외

21)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받은 금액은 누적금액으로 계 144억여 원이나 그중 88억여 원은 대위변제를 하기 전에 상환되거나 부분보증비율(80% 내지 85%)을 감당한 금액

[표 11]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구매자금대출 중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현황

(금액단위: 십억 원)

무거래대출		과다대출		신대출		기간초과대출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	8.5	10	1.4	17	7.1	390	245.7	425	260.7

자료: 기술신용보증기금 자료 재구성

또한, 2009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실제 연체 등 보증사고로 인하여 기보에서 대위변제한 32개 구매자금대출 업체<sup>22)</sup> 중 8개 업체<sup>23)</sup>를 대상으로 대출 적정성을 표본 점검한 결과, [별표 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부실업체 중 무거래 대출 명세”<sup>24)</sup>와 같이 5개 업체에서 무거래 대출 계 18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중 39억여 원<sup>25)</sup>을 기금에서 대위변제하여 기금에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에 국내은행이 신보·기보의 보증에 따라 대출을 한 후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월별 또는 분기별)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여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출사고 발생 시 대위변제를 청구한 경우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위변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용보증특약」<sup>26)</sup> 및 「신용보증약관」<sup>27)</sup>에 포함하는 등으로 선관주의 의무를 명백히 하여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22) 정상 대출과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포함한 대위변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함

23)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계열 관계사이거나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단위로 계속 대출하는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가능성이 높은 16개 기업을 추출한 후 휴·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한 8개 업체 제외

24) 기보의 경우 과다대출과 기간초과대출 사례가 미발생

25)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받은 금액은 누적금액으로 계 181억여 원이나 그중 142억여 원은 대위변제를 하기 전에 상환되거나 부분보증비율(85% 내지 100%)을 감안한 금액

26)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음

27)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용임

<조치할 사항>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국내은행의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대위변제하여 기금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신용보증특약」 및 「신용보증약관」에 실제 상거래가 의심되는 대출에 대해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명백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3 총액한도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한국은행은 국내은행이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구매자금대출 등을 취급하고 있는 데도 그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고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이하 “대출규정”이라 한다) 제11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이하 “대출세칙”이라 한다) 제2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B2B대출, 구매자금대출 등의 취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액한도대출 한도범위<sup>28)</sup> 내에서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를 배정하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총액한도대출을 취급한 후 대출규정 제18조와 대출세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실적 등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총액한도대출 취급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행 B2B대출 취급절차 제3조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관련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세칙」(이하 “한국은행 B2B대출 취급세칙”이라 한다)

<sup>28)</sup>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호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통화량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3개월마다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정함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판매업체에 대하여 B2B대출을 실행할 경우 판매업체로부터는 대출신청서 및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을, 구매업체로부터는 물품구매내역을 전송받도록 되어 있고, B2B대출의 융자금액은 판매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고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 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구매자금의 융자금액은 구매업체에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한 업체가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상의 금액 또는 판매업체가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상의 추심의뢰금액 범위 내로 되어 있고,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등은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은행이 금융기관의 B2B대출이나 구매자금대출에 따른 총액한도 대출 지원을 할 때에는 한국은행 B2B대출 취급절차 제2조와 한국은행 구매자금대출 취급절차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업체와 구매업체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해당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판매대금 결제를 위한 적정한 대출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관계규정 등을 위반하여 대출받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예금대출 취급세칙」 제26조, 「한국은행 예금대출 취급절차」 제37조, 한국은행 B2B대출 취급세칙 제7조, 한국은행 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B2B대출이나 구매자금대출 한도 감축 등의 제재조치를 취해 국내 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취급을 방지하여야 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 시 2009. 1. 1.부터 2011. 3. 31.까지 중소기업은행

등 14개<sup>29)</sup> 국내은행이 취급한 B2B대출 중 건당 10억 원<sup>30)</sup> 이상을 대상으로 대출의 적정성을 대출취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자체 확인하게 한 결과, [별표 6] “국내은행의 B2B대출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와 같이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공모하여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B2B대출을 받은 무거래 대출이 167건, 4,299억여 원이었고, 세금계산서 발행일보다 먼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선 대출을 받은 것이 1,344건, 1조 9,274억 원에 이르는 등 12개 은행에서 계 1,768건, 2조 4,717억여 원이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되고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 등 17개 국내은행이 취급한 구매자금대출 중 건당 5억 원<sup>31)</sup> 이상의 대출을 대상으로 대출취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그 적정성을 자체 확인하게 한 결과, [별표 7] “국내은행의 구매자금대출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와 같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공모하여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구매자금대출을 받은 무거래 대출이 396건, 3,801억여 원이었고,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추심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구매업체가 대출받은 기간초과 대출이 4,781건, 4조 355억여 원에 이르는 등 15개 은행에서 계 7,470건, 6조 2억여 원이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은행은 위와 같은 15개 국내은행의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의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사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은행의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포함한 대출 실적을 고려하여 총액한도대상

29) 국내은행 17개 중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는 B2B대출을 취급하지 않음

30)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액 3억 원 이상 중 실행된 대출 확인

31)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은 3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확인

대출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국내은행에서는 총 8조 4,719억여 원의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취급하였는데도 총액한도대출 한도 감액 등의 제재조치를 받지 않아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은행 총재는**

- ① 국내은행이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받은 총액한도 대출금을 산정하여 「한국은행 예금대출 취급절차」 제37조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총액한도 대출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국내은행이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취급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나 기업구매자금대출 실적을 총액한도대출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총액한도대출 취급업무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	<b>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 검사·감독 부적정</b>
---	---------------------------------

세금계산서 확인 간소화 방안 실시 이후 국내은행 등으로 하여금 B2B대출 등 실행 시 대출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대책과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대출시스템 등을 마련하도록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출 적정성 감시도 미흡
---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여신관리의 적정성 등을 항목으로 하는 자산건전성 등의 부문별 평가를

통해 국내은행의 경영실태를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위 감독규정 제7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 자금 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여신 실행 이후에는 용도 외 유용 방지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국내은행들이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 취급 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였는지와 그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검사·감독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상거래대금 결제 시 어음사용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음대체결제 수단을 이용한 B2B대출과 구매자금대출을 도입하여 상거래를 입증하는 세금계산서를 기업들이 직접 제출하는 대신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결제자금 대출을 위해 상거래 유무를 입증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로 제출하지 않고 전산으로 입력하게 하면 업무를 간소화하는 장점은 있으나 기업들이 실제 상거래도 없이 암의로 세금계산서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B2B대출이나 구매자금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이 만연하지 않도록 검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 시 2009. 1. 1.부터 2011. 3. 31.까지 중소기업은행 등 14개<sup>32)</sup> 국내은행이 취급한 B2B대출 중 건당 10억 원<sup>33)</sup> 이상을 대상으로 대출의 적정성을 대출취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자체 확인하게 한 결과, [별표 6] “국내은행의 B2B대출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와 같이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공모하여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B2B대출을 받은 무거래 대출이 167건, 4,299억 여 원이었고, 세금계산서 발행일보다 먼저 외상대출채권을 발행하여 선 대출을 받은 것이 1,344건, 1조 9,274억 원에 이르는 등 12개 은행에서 계 1,768건, 2조 4,717억여 원이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되고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 등 17개 국내은행이 취급한 구매자금대출 중 건당 5억 원<sup>34)</sup> 이상의 대출을 대상으로 대출취급 해당지점으로 하여금 그 적정성을 자체 확인하게 한 결과, [별표 7] “국내은행의 구매자금대출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와 같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공모하여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구매자금대출을 받은 무거래 대출이 396건, 3,801억여 원이었고,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추심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구매업체가 대출받은 기간초과 대출이 4,781건, 4조 355억여 원에 이르는 등 15개 은행에서 계 7,470건, 6조 2억여 원이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되고 있었다.

한편 국내은행 중 우리은행은 B2B대출 실행 시 입력하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기업들이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을 신청

32) 국내은행 17개 중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는 B2B대출을 취급하지 않음

33)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대출채권 발행액 3억 원 이상 중 실행된 대출 확인

34)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은 3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확인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1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용 중에 있으나 그 밖의 국내 은행들은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에서는 앞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15개 국내은행들이 B2B대출과 구매자금대출 총 8조 4,719억여 원을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취급하고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신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는 데도(우리은행 제외) 이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이 향후 부실사고로 연결될 경우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금융감독원장은

- ① 전자방식 외상대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 등의 취급 적정성 등을 철저히 확인·점검하여 국내은행이 B2B대출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② 국내은행들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대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정한 조치를 하는 등 검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B2B대출 등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상거래 관련 대출실행액 등을 국내은행 간 통합 관리·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이 미흡

금융위원회에서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감독규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은행으로 하여금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용도 외 유용 방지 등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은행에서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 취급 시 세금계산서를 통해 실제 상거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어음발행, 타 은행 B2B대출 등으로 이미 결제가 완료된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시하여 대출을 받아 실제 상거래와 무관하게 대출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인데도 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할 당시에는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방법만으로는 이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해당 은행에서 개별기업 상거래대금 실행(결제) 총액<sup>35)</sup>을 파악하여 그 기업의 매입액과 비교할 수 있다면 매입액보다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이 큰 기업의 경우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실제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을 감안하여 여신한도를 결정하고 향후 대출 취급 시 실제 상거래 유무를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당 또는 부

35) 개별기업의 은행별 어음발행액, B2B대출 관련 채권발행액, 구매자금대출 실행액 등을 합한 금액. 현재 국내은행은 자기 은행을 통한 상거래대금 실행액만 알 수 있고 타 은행을 통한 상거래대금 실행액은 알 수 없음

적격 대출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국내은행이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을 정상적인 상거래에 기반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상거래대금 실행(결제) 총액을 전국은행연합회<sup>36)</sup> 등의 전산망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은행으로 하여금 기업의 매입액과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을 비교<sup>37)</sup>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한 여신한도 부여 및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이 매입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sup>38)</sup>해 본 결과, 주식회사 ○○○○○○의 경우 2010년 상거래대금 실행 총액은 814억 원(B2B대출 150억 원, 어음발행 664억 원)이나 실제 국세청에 신고한 매입총액은 485억여 원에 불과하여 328억여 원이 초과하였고, 이 중 B2B대출 150억 원은 정상적인 상거래 없이 업체가 부당 또는 부적격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별표 8] “대출액·매입액 대비 상거래 결제수단 총액 등 비교 명세”와 같이 12개 구매기업에서 상거래 결제총액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입총액보다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매입액보다 많은 부당 또는 부적격대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B2B대출 등이 실제 기업 간의 상거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상거

3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여신한도 및 잔액 등)를 집중관리 및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은행들은 이러한 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으로 제공받아 여신의 심사(한도부여) 및 실행,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음

37)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거래를 기반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금을 결제하고 국세청에 매입을 신고하였다면 상거래대금 결제총액이 국세청 매입신고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였다면 실제 거래 없이 자금유동을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38) 2010년 B2B대출 미결제·연체기업 521개를 표본으로 B2B대출 및 구매자금대출 등 상거래 대금 결제를 위해 실행된 대출총액(어음발행액 포함)을 조사하여 해당 기업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입총액과 비교

래대출 실행 총액을 전국은행연합회 등의 전산망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지 않는 등 걱정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하여 전자방식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정상적인 상거래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거래대출 실행 총액을 전국은행연합회 등의 전산망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은행으로 하여금 기업의 매입액과 상거래대출 실행 총액을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걱정한 여신한도 부여 및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 별 표 】

- [별표 1] 유통의심 거래 점검결과 처리 부적정 명세
- [별표 2] 영업점 조치사항 지연 처리 후 대출 명세
- [별표 3] 영업점 점검결과 보고 부적정 명세
- [별표 4]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부실업체 중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명세
- [별표 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부실업체 중 무거래 대출 명세
- [별표 6] 국내은행의 B2B대출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
- [별표 7] 국내은행의 구매자금대출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
- [별표 8] 매출액·매입액 대비 상거래 결제수단 총액 등 비교 명세

[별표 1]

용통의심 거래 점검결과 처리 부적정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영업점 보고일자	대출 과목	대출 금액 (잔액)	최종 만기일	부적정 기업명	부적정 의심 유형 <sup>1)</sup>	영업점 조치사항	추가 조치사항	추가 조치일자
'11. 4. 14.	구매자금 (B2B)	180 (0)	'11. 7. 8.	***	1,2	조기회수 ( '11. 7. 1.)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11. 7. 29.
'11. 4. 14.	구매자금 (B2B)	180 (0)	'11. 9. 9.	***	1,2	조기회수 ( '11. 4. 26.)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11. 7. 29.
'11. 7. 6.	할인어음	148 (0)	'11. 8. 5.	***	1	만기일 회수	취급금지 특약등록	'11. 7. 29.
'11. 7. 7.	구매자금 (B2B)	9 (0)	'11. 5. 31.	***	2	조기회수 ( '11. 5. 20.)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11. 7. 29.
'11. 7. 8.	할인어음	36 (0)	'11. 4. 15.	***	1	만기일 회수	취급금지 특약등록	'11. 7. 15.
'11. 4. 14.	구매자금 (B2B)	6 (0)	'11. 9. 1.	***	2	조기회수 ( '11. 7. 14.)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11. 8. 3.
'11. 5. 6. '11. 7. 8.	구매자금 (B2B)	89 (0)	'11. 6. 10.	***	2	'11. 5. 6. 청정판단 '11. 7. 8. 부적정판단 조기회수('11. 6. 3.)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11. 7. 29.
'11. 5. 29.	구매자금 (B2B)	50 (0)	'11. 4. 22.	***	2	'11. 4. 20(28백만원회수) '11. 4. 22(28백만원회수)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11. 7. 29.
'11. 4. 12.	구매자금 (B2B)	1,000 (0)	'11. 4. 7.	***	2	만기일 회수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11. 7. 29.
'11. 4. 14.	구매자금 (B2B)	20 (0)	'11. 8. 9.	***	1,2	조기회수('11. 7. 19.)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11. 7. 15.
'11. 4. 14.	구매자금 (B2B)	200 (0)	'11. 9. 5.	***	1,2	조기회수(71백만 원) 만기일회수(129백만 원)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11. 7. 27.
'11. 4. 14.	구매자금 (B2B)	104 (0)	'11. 7. 13.	***	1,2	조기회수(60백만 원) 만기일회수(44백만 원)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11. 7. 27.
'11. 4. 14.	할인어음	60 (0)	'11. 7. 24.	***	2	만기일 회수	취급금지 특약등록	'11. 7. 29.
'11. 4. 14.	구매자금	224 (0)	'11. 7. 29.	***	1,2	조기회수('11. 7. 15.) 만기일회수(77백만 원)	취급금지 특약등록	'11. 7. 29.

주 : 유형1.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신고누락  
유형2. 결제상 여신 취급금액 중 상대거래처 자금이체  
자료: 중소기업은행

[별표 2]

영업점 조치사항 지연 처리 후 대출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영업점 부적정 보고일자	기업명	대출과목	대출금액 (잔액)	추가 대출일자	추가 대출금액 (잔액)	영업점 추가 조치 일자	영업점 추가 조치사항
'11. 4. 14	***	구매자금 (B2B)	180 (0)	'11. 4. 26.	80 (0)	'11. 7. 29. 조기회수('11. 8. 11.)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11. 7. 8	***	구매자금 (B2B)	89 (0)	'11. 5. 26. '11. 6. 20.	45(0) 40(0)	'11. 7. 29. 조기회수('11. 8. 12.)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주: 최초 보고('11. 5. 6.)는 적정이었으나 '11. 7. 8. 영업점 재점검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  
자료: 중소기업은행

[별표 3]

영업점 점검결과 보고 부적정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영업점 적정 보고일자	대출 과목	대출 금액 (잔액)	최종 만기일	검리결과 부적정 기업명	검리결과 부적정 유형 <sup>*)</sup>	검리결과 적정 조치사항	영업점 추가 조치일자	추가 조치사항
'11. 4. 8.	할인대출	97 (0)	'11. 4. 21.	***	1	기업여신상품취급 세칙에 의한 사후관리	'11. 7. 29. 만기일회수	기업여신상품 취급세칙에 의한 사후관리
'11. 4. 14.	구매자금 (B2B)	15 (0)	'11. 3. 31.	***	2	특약사항 등록 등 사후관리	'11. 8. 11. 만기일회수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11. 4. 29.	할인대출	293 (0)	'11. 6. 12.	***	1	기업여신상품취급 세칙에 의한 사후관리	'11. 7. 29. 만기일회수	기업여신상품 취급세칙에 의한 사후관리
'11. 4. 21.	구매자금 (B2B)	21 (0)	'11. 4. 4.	***	1	특약사항 등록 등 사후관리	'11. 8. 11. 만기일회수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11. 4. 29.	구매자금 (B2B)	44 (0)	'11. 7. 18.	***	2	특약사항 등록 등 사후관리	'11. 8. 11. 조기회수 ( '11. 5. 20.)	전자방식 취급금지 특약등록
'11. 4. 12.	할인대출	100 (0)	'11. 7. 9.	***	1	기업여신상품취급 세칙에 의한 사후관리	'11. 7. 29. 만기일회수	기업여신상품 취급세칙에 의한 사후관리

주: 유형1. 매입대출 세금계산서 신고누락  
유형 2. 경제성 여신 취급금액 중 상대거래처 자금이체  
자료: 중소기업은행

[별표 4]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부실업체 중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업체명	무거래대출		과태대출		기간초과대출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25	9,791	-	-	-	-	25	9,791
***	1	1,208	-	-	-	-	1	1,208
***	3	1,384	-	-	-	-	3	1,384
***	2	109	-	-	2	540	4	649
***	-	-	2	578	2	882	4	1,460
합계	31	12,492	2	578	4	1,422	37	14,492

자료: 신용보증기금

[별표 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부실업체 중 무거래 대출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업체명	무거래대출	
	건수	금액
***	38	6,954
***	15	3,495
***	4	1,181
***	5	6,000
***	1	497
합계	63	18,127

자료: 기술신용보증기금

[별표 6]

## 국내은행의 B2B대출 부담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

(금액단위: 십억 원)

은행명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부적격 대출								확인불가	
				무거래 대출		과다 대출		선대출		소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AA	56,911	47,944.1	98	308.9	110	17.1	184	122.3	390	448.3	29,128	22,820.1
2	BB	9	18.5	0	0.0	0	0.0	0	0.0	0	0.0	0	0.0
3	CC	1,171	1,907.3	8	12.7	2	0.0	70	90.0	80	102.7	33	63.5
4	DD	1,382	2,433.2	4	6.4	0	0.0	101	163.7	105	170.1	18	22.3
5	EE	2,082	5,105.3	12	23.2	1	0.9	318	692.4	331	716.5	14	18.0
6	FF	54	80.2	0	0.0	0	0.0	28	34.6	28	34.6	0	0.0
7	GG	1,285	2,305.5	8	56.7	1	0.0	173	271.9	182	328.6	5	5.6
8	HH	189	285.0	0	0.0	0	0.0	6	10.7	6	10.7	0	0.0
9	II	231	343.2	0	0.0	0	0.0	50	73.8	50	73.8	0	0.0
10	JJ	33	46.8	0	0.0	0	0.0	0	0.0	0	0.0	0	0.0
11	KK	2,954	2,341.7	35	17.2	27	18.4	192	166.0	254	201.6	29	14.9
12	JJ	23	40.0	0	0.0	0	0.0	1	2.1	1	2.1	0	0.0
13	LL	10,678	3,393.3	0	0.0	107	75.3	218	293.3	325	368.6	2,893	692.2
14	MM	490	1,016.0	4	4.8	9	2.7	5	6.6	18	14.1	0	0.0
총 계		78,032	67,260.9	187	429.9	257	114.4	1,344	1,927.4	1,768	2,471.7	32,120	23,836.6

주: 우리, 경남, 중소기업은행은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외 대출 포함, 대출실행 건당 3억 원 이상 대상  
 자료: 한국은행 등 자료 제구성

[별표 7]

## 국내은행의 구매자금대출 부당 또는 부적격 취급 명세

(금액단위: 십억 원)

은행명		구매자금 대출실행		부적격 대출										확인불가	
				무거래 대출		과다 대출		선대출		기간초과 대출		소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AA	8,887	7,752.7	5	1.7	11	0.8	182	90.9	800	483.3	774	576.8	1,091	1,099.6
2	BB	1,482	2,063.0	1	0.6	65	62.7	53	42.0	77	133.5	196	238.8	7	4.7
3	CC	5,904	6,946.0	65	51.7	73	25.3	296	235.7	1,975	1,030.4	2,409	2,173.1	22	20.1
4	DD	2,917	3,971.2	1	0.7	1	0.1	52	52.3	61	75.2	115	128.3	6	5.3
5	EE	6,247	7,749.9	206	244.8	249	163.6	393	423.5	271	381.3	1,119	1,213.2	28	21.1
6	FF	968	1,336.3	9	8.1	2	0.3	8	5.1	10	10.5	29	24.0	0	0.0
7	GG	3,389	3,948.2	1	0.5	19	8.3	80	56.5	103	85.7	203	151.0	24	19.6
8	HH	674	1,014.6	0	0.0	0	0.0	0	0.0	2	1.1	2	1.1	0	0.0
9	I	1,257	1,606.2	0	0.0	45	32.7	60	43.4	30	27.6	135	103.7	19	38.0
10	JJ	103	190.1	0	0.0	0	0.0	0	0.0	2	1.0	2	1.0	0	0.0
11	KK	21	24.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2	LL	2	1.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3	MM	719	493.7	17	9.1	7	3.4	8	3.1	42	19.4	74	35.0	7	3.0
14	NN	414	716.7	0	0.0	0	0.0	9	10.0	9	12.2	18	22.2	0	0.0
15	OO	13,485	6,122.3	34	12.6	233	88.9	427	204.0	1,591	943.3	2,298	1,248.8	244	182.4
16	PP	1,367	1,954.9	57	50.3	37	26.3	0	0.0	0	0.0	94	76.6	0	0.0
17	QQ	117	164.3	0	0.0	0	0.0	10	5.6	2	1.0	12	6.6	0	0.0
총계		48,046	48,066.1	396	380.1	745	412.4	1,548	1,172.1	4,781	4,035.5	7,470	6,000.2	1,448	1,483.8

주 : 우리, 경남, 중소기업은행은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외 대출 포함, 대출실행 건당 3억 원 이상 대상  
 자료: 한국은행 등 자료 재구성

[별표 8]

## 매출액·매입액 대비 상거래 결제수단 총액 등 비교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연번	구매기업	매출액 (A)	매입액 (B)	외상매출채권 충발행액 <sup>1)</sup> (C)	상거래 결제수단 총액 <sup>2)</sup> (D)	차액	
						D-A	D-B
1	***	43,292	48,561	15,000	81,444	38,152	32,883
2	***	36,819	40,107	4,356	62,707	25,888	22,600
3	***	22,482	20,955	9,205	43,819	21,337	22,864
4	***	23,144	19,145	7,801	42,237	19,093	23,092
5	***	39,207	35,681	36,277	53,967	14,760	18,286
6	***	12,155	6,834	4,286	23,563	11,408	16,729
7	***	12,254	11,365	6,658	18,020	5,766	6,655
8	***	6,972	6,384	3,603	9,755	2,783	3,371
9	***	15,247	14,413	2,049	17,462	2,215	3,049
10	***	5,834	5,767	5,608	7,292	1,458	1,525
11	***	9,001	7,974	3,394	9,982	981	2,008
12	***	1,053	727	1,095	1,095	42	368

주: 1. 외상매출채권 충발행액: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전산으로 등록한 총 누계액

2. 상거래 결제수단 총액: B2B대출, 구매자금대출, 구매카드, 어음발행액 등 정상적인 상거래를 기반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금을 지불한 총 누계금액(단, 현금론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 자료 재구성

<별첨 8>

특정감사

#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

2012. 2.

감 사 원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	1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2
3. 감사 중점 .....	2
4. 감사 기간 및 인원 .....	2
II. 증권시장 운영 현황 .....	3
1.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체계 .....	3
2. 증권시장 운영 현황 .....	4
3. 증권 예탁·결제 현황 .....	6
4. 증권거래 관련 수수료 체계 및 현황 .....	7
I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8
1) 주식워런트증권(ELW) 제도 운영 부적정(통보) .....	8
2) 파생상품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부적정(통보) .....	16
3)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운영 부적정(통보) .....	21
4)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신용정보 활용 부적정(통보) .....	27
5) 금융투자업자의 예탁증권 관리 부적정(통보) .....	30
6)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부당 매매(문책) .....	38
7) 적극적인 시장감시로 지능적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통보(모범)] .....	40
8)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으로 주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통보(모범)] ...	44

9) 조건부매도증권 의무예탁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주의·통보)	47
10)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수수료 인하 지도·감독 부적정(주의)	55
11) 해외주권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부적정(주의)	62
12)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제도 운영 부적정(통보)	66
13)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 운영 부적정(통보)	69

# I.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 배경 및 목적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규모는 2010년 말 현재 시가총액 1,239조 원으로 세계 17위 수준인 반면, 파생상품시장 규모는 연간 거래량<sup>1)</sup> 37억 계약 건으로 세계 1위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파생상품시장은 주식·채권 등 기초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회피 수단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투기적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이하 “ELW”<sup>2)</sup>라 한다) 거래로 개인투자자 손실액이 1.8조여 원으로 추정되는 등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에 불리한 파생상품 거래에서 개인투자자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증권사에서 스캘퍼(scalper)<sup>3)</sup>에게만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거래 구조에 대한 감독소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증권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2008년부터 2011년 8월 말까지 우회상장한 102개 업체 중 23개 업체(22.5%)가 상장폐지되었고, 2009년부터 2011년 8월 말까지 불성실공시로 373개 업체가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부실 상장·공시가 여전하며, 일부 증권회사의 시세조종<sup>4)</sup> 등 주가조작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증권시장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 파생상품시장 규모는 FIA(Future Industry Association)에서 매년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상품별 거래대금 자료를 발표하는 기관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을 기준으로 비교

2)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미래의 일정시점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살 권리(콜 워런트) 또는 팔 권리(풋 워런트)가 부여된 파생결합증권

3) 알고리즘매매시스템을 통해 초단타매매를 하는 투자자

4) 금융위원회는 ○○증권주식회사가 2010. 11. 11.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한 후 주식 2조 4,353억 원 어치를 매도(KOSPI 지수 53p 하락)하는 시세조종으로 448억 원의 부당 이득 취득한 혐의로 위 증권사를 2011년 2월 검찰에 고발

이에 따라 상장, 공시, ELW 등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와 시장감시 활동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증권시장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개인투자자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이번 감사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2009년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2009년 이후 실시한 증권시장 감독 및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련된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였다.

##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에서는 ① 상장 및 상장관리, ELW시장 운영 및 감독의 적정성, ② 공시제도의 운영 및 시장감시의 적정성, ③ 증권 예탁·결제의 안정성 및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 4. 감사 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는 2011. 9. 19.부터 같은 해 9. 27.까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후 자료수집과 예비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하여 같은 해 10. 10.부터 10. 31.까지 15일간 총 27명이 실지감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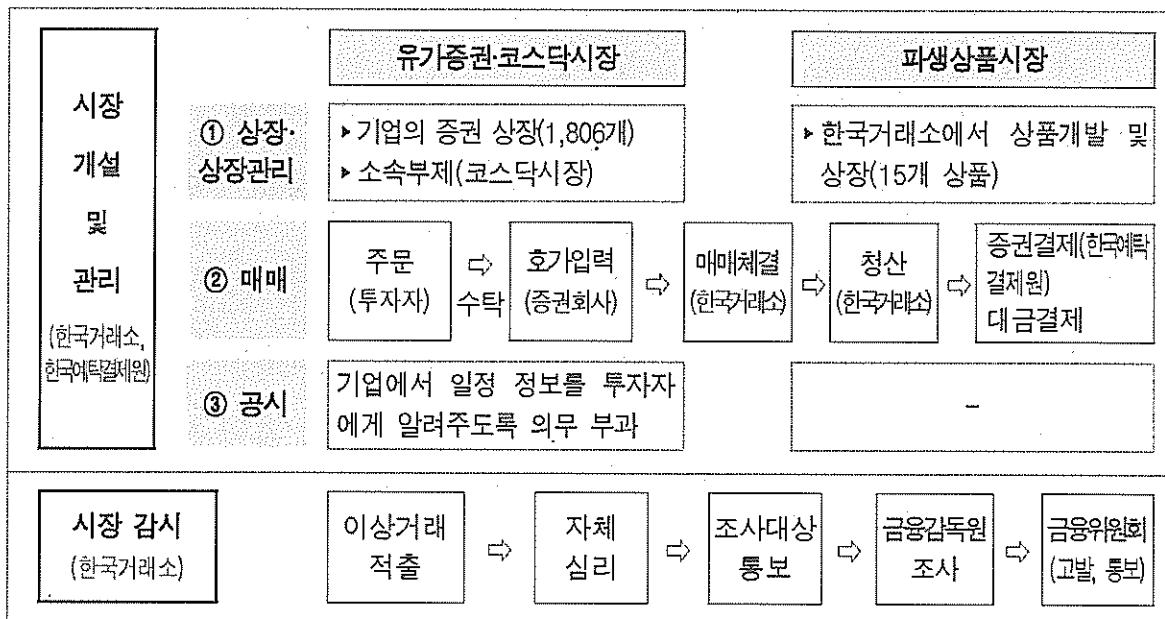
그리고 같은 해 11. 3.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질문서와 답변서 등을 주고받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감사원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2012. 2. 23.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증권시장 운영 현황

### 1.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 체계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 규정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을 독점적으로 개설하여 증권 또는 상품의 상장 및 매매업무, 공시업무, 시장감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같은 법 제294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 집중예탁 및 매매에 따른 증권결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 증권시장 운영 체계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제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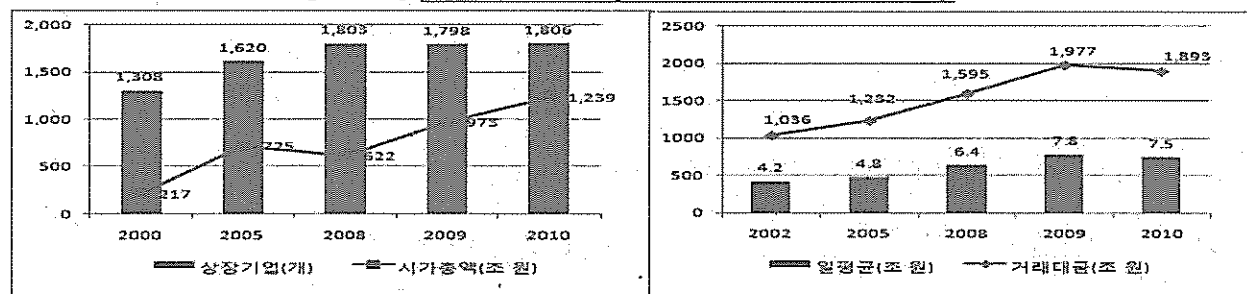
한편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규정에 대해 승인을 하고,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한국거래소 등의 검사<sup>5)</sup> 및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중요 사항 등의 심의·의결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 위탁

## 2. 증권시장 운영 현황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은 [도표 1]과 같이 2010년 말 현재 시가총액 1,239조 원으로 세계 17위 규모(세계증시의 약 2%)이고, 연간 거래대금은 1,893조 원으로 세계 7위 규모(일평균 7.5조 원)이다. 그리고 유가증권시장 777개, 코스닥시장 1,029개 등 총 1,806개 업체가 상장<sup>6)</sup>되어 있다.

[도표 1] 연도별 시가총액, 상장기업 및 거래대금 현황



자료: 한국거래소

한편 파생결합증권인 주식워런트증권(ELW)은 2005년 12월 시장개설 이후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sup>7)</sup>하여 2010년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1조 6천억여 원 수준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 2위 시장규모로 크게 확대되었다.

파생상품시장은 KOSPI200선물·옵션 등 15개 상품이 상장되어 있고, 2010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56조여 원이며 연간 거래량은 [표 1]과 같이 37억여 계약으로 세계 1위(거래량 기준)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표 1] 연도별 세계 주요 거래소 파생상품 거래량 현황

(단위: 백 만 계약, %)

순위	거래소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중
1	KRX(한국)	2,475	2,776	2,867	3,103	3,752	16.8
2	EUREX(독일)	1,527	1,900	2,165	1,687	1,897	8.5
3	CME(미국)	1,403	1,775	1,893	1,476	1,656	7.4
4	NSE(인도)	194	380	602	919	1,616	7.2
5	EURONEXT(유럽)	730	949	1,050	1,056	1,223	5.5

주: EURONEXT는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벨기에의 브뤼셀 등 유럽 3개국의 증권시장이 통합된 단일 증권시장  
 자료: 한국거래소

6) 그 중 외국법인은 중국 ○○○○공사 등 17개 업체가 상장

7) 일평균 거래대금: 2008년 3,845억 원 → 2009년 8,523억 원 → 2010년 1조 6,374억 원

투자자별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주식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비중은 [표 2]와 같이 개인투자자의 경우 2010년에 시가총액의 24%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빈번한 주식거래로 주식 거래대금의 64.2%를 차지하고 있다.<sup>8)</sup> 기관과 외국인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각각 13.5%, 31.2%를 보유하고 있다.<sup>9)</sup>

[표 2] 투자자별 주식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현황

(단위: 천억 원, %)

구분	시장	개인		기관		외국인		기타		합계	
		시가총액	거래대금	시가총액	거래대금	시가총액	거래대금	시가총액	거래대금	시가총액	거래대금
2008년	유가증권	1,557	12,750	711	5,591	1,657	6,580	1,831	822	5,756	25,743
	코스닥	306	5,563	16	201	38	324	102	91	461	6,179
	소계	1,863	18,313	727	5,792	1,695	6,904	1,933	913	6,218	31,922
	(비중)	(30.0)	(57.4)	(11.7)	(18.1)	(27.2)	(21.6)	(31.1)	(2.9)		
2009년	유가증권	2,753	17,117	1,111	6,467	2,897	5,051	2,113	691	8,874	29,326
	코스닥	609	9,934	60	353	63	231	120	102	852	10,620
	소계	3,362	27,051	1,171	6,820	2,960	5,282	2,233	793	9,726	39,946
	(비중)	(34.5)	(67.7)	(12.1)	(17.1)	(30.4)	(13.2)	(23.0)	(2.0)		
2010년	유가증권	2,414	15,401	1,596	6,139	3,755	5,739	3,624	932	11,383	28,211
	코스닥	565	8,920	67	370	99	268	244	104	975	9,662
	소계	2,979	24,321	1,663	6,509	3,854	6,007	3,868	1,036	12,364	37,873
	(비중)	(24.0)	(64.2)	(13.5)	(17.2)	(31.2)	(15.9)	(31.3)	(2.7)		

주: 기타는 일반법인 및 정부기관

자료: 한국거래소

그리고 파생상품시장의 투자자별 비중은 개인투자자 32.2%, 기관 36.2%, 외국인 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해외 선진국<sup>10)</sup>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시장감시 현황을 보면, [표 3]과 같이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건수가 2008년 180건에서 2010년 25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중 파생상품시장에서 적발된 건수가 2009년 27건에서 2010년 6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표 4]와 같이 미공개정보이용 31.6%, 시세조종 28%, 지분보고의무 위반 22.8%,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13.2% 순으로 적발되었다.

8) 주식투자 인구 수는 2010년 12월 말 현재 개인 4,740,056명, 기관·외국인 등 47,012개 업체(명)

9) 2011년 8월 이후 우리나라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은 높은 주식보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및 개인투자자의 단기 매매차익 획득 위주의 투자가 큰 원인으로 파악됨

10) 일본의 경우 개인투자자 비중은 닛케이225선물 10.4%, 닛케이225옵션 14.6%

[표 3] 연도별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현황

(단위: 건)

구분	이상거래 적출	심리	금융감독원 조사대상 통보	금융위원회 조치			
				고발	통보	기타	무혐의
2008년	120,590	344	180	50	65	42	26
2009년	52,184	460	240	65	77	34	23
2010년	52,193	549	257	75	63	40	23

주: 금융감독원 조사대상 통보 건수는 종목 기준, 금융위원회 조치는 조치연도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표 3] 2010년 유형별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보고위반	단기매매차익	합계
유가증권시장	17	15	5	15	7	59
코스닥시장	69	61	7	47	29	213
합 계 (비중)	86 (31.6)	76 (28.0)	12 (4.4)	62 (22.8)	36 (13.2)	272 (100)

주: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종목만 대상으로 한 건수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 3. 증권 예탁·결제 현황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표 5]와 같이 2011년 9월 말 현재 주식 1,052조 원 (시가총액), 채권 1,342조 원을 보관하고 있다.

[표 5] 주식 등 예탁 현황

(단위: 천 매, 조 원)

구분	예탁				CD, CP (금액)	보호 예수			
	주식		채권			주식		채권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주식 수	매수	금액
2009년	2,171	913	790	1,083	78	1,443	92	0.3	0.1
2010년	2,247	1,167	730	1,174	79	1,473	97	1.9	0.17
2011년 9월 말	2,310	1,052	617	1,342	90	611	492	1.20	0.36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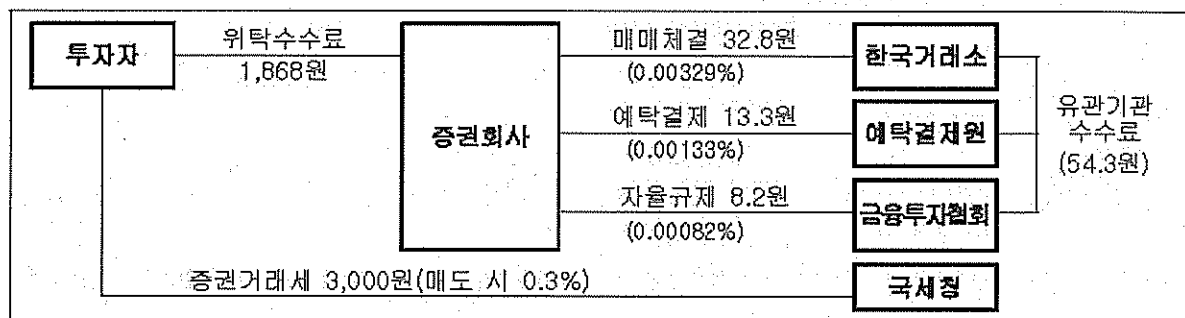
증권결제는 2010년도에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월평균 주식 거래량 및 결제량이 각각 80억 주, 62.4억 주에 이르고, 코스닥시장의 경우 월평균 주식 거래량 및 결제량이 각각 130억 주, 26.8억 주에 이르고 있다.<sup>11)</sup>

11) 월평균 거래량과 결제량의 차이는 차감결제에 따른 것으로 유가증권시장 차감률 21%, 코스닥시장 차감률 80%

#### 4. 증권거래 관련 수수료 체계 및 현황

한국거래소 등은 증권매매 체결과 예탁 결제업무 등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그림 2]와 같이 한국거래소 0.00329%, 한국예탁결제원 0.00133% 등 거래대금의 일정비율을 거래 관련 수수료로 징수<sup>12)</sup>하고 있다.

[그림 2] 주식(1백만 원) 거래 시 수수료 징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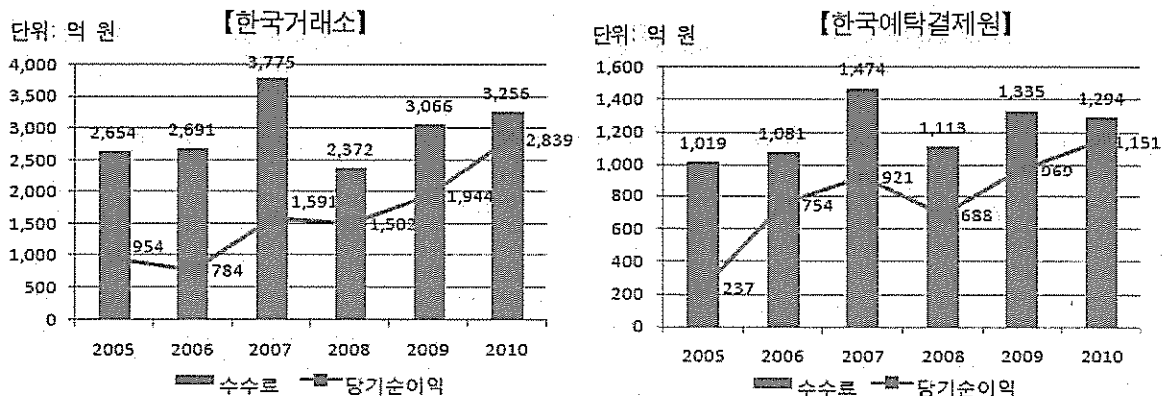


주: 위탁수수료는 온라인 주식거래(HTS)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도표 2]와 같이 2010년도에 각각 수수료 수입 3,256억 원, 1,294억 원, 당기순이익 2,839억 원, 1,151억 원을 얻고 있고, 2010년 말 현재 누적 이익잉여금은 각각 1조 4,850억 원, 7,351억 원에 이르고 있다.

[도표 2] 연도별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징수 현황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12) 한국거래소는 거래수수료 등 3종,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 등 28종, 금융투자협회는 협회비를 징수하고 있고, 수수료 변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 이사회 결의로 변경

# 감 사 원

## 통 보

제 목 주식워런트증권(ELW) 제도 운영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ELW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제반 규정을 승인하고 시장 건전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ELW는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미래의 일정시점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살 권리(콜 워런트) 또는 팔 권리(풋 워런트)가 부여된 파생결합증권으로, 투자자의 최대 손실액이 증권매입액 범위로 한정된다는 측면에서 형식상 ‘증권’에 해당하나,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기초자산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장래에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옵션과 법적성격 또는 거래구조만 다를 뿐<sup>1)</sup> 그 경제적 특성은 동일하다.

ELW 거래제도의 도입배경을 보면, 구 재정경제부에서는 2003년 3월 i) 소액투자자에게 투자기회를 부여하고, ii) 위험회피(hedge) 등의 과정에서 전체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iii) 선진 금융기법 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해 ELW 등 신종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2005. 12. 1. ELW 시장이 한국

1) ELW는 장의파생업을 인가받은 증권사만 발행하고, 유동성공급자(LP)가 존재하며 발행자의 신용위험이 존재하나, 옵션은 불특정 투자자가 발행하고 유동성은 투자자 간 수급에 의존하며 거래소가 결제를 보증하고, 거래소가 만기일과 행사가를 지정하여 표준화된 옵션을 상장하면 시장 참여자가 언제든지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음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개설<sup>2)</sup>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편 ELW 시장개설 이후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0월에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2조 678억 원에 이르는 등 ELW 거래규모가 세계 1위 시장인 홍콩(2조 1,000억여 원)에 근접할 정도로 급격히 커졌다.

그런데 위험회피수단 및 소액투자기회 제공 등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소수 시장참가자의 투기적 수요에 의해 ELW 시장이 팽창하고 있고, 시장에서 가격결정의 공정성도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sup>3)</sup>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과 2011년 5월에 ELW 시장 건전화 방안<sup>4)</sup>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으로 2011년 8월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9,336억 원으로 일시 감소하였으나, 위 건전화 방안은 ELW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투자자 교육, 기본예탁금(1,500만 원)제도 도입 등 소극적인 방안에 불과하여 2011년 10월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이 1조 4천억여 원(유가증권시장 전체의 15.6%<sup>5)</sup> 상당)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는 ELW 시장의 가격결정 구조, 불공정 거래행위 가능성 및 시장참여자별 수익구조 등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ELW 시장이 건전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초 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는 2004년 7월 ELW 시장개설방안을 마련하여 구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기존 KOSPI200 옵션과 유사한 상품인 ELW를 상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거래소 통합 이후 옵션시장과의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보류함

3) "악마의 유혹 ELW"(○○경제 기획연재, 2011년 3월), "증권사-스캘퍼 뒷거래설 업계 무성"(◇◇일보, 2011. 3. 25.) 외 다수 언론보도,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ELW가 투기상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

4) 투자자 교육이수 의무화, 유동성공급지(LP)평가 강화, 기본예탁금 부과, 주문속도 관련 기준 마련 등

5) ELW는 옵션과 경제적 특성이 동일한 반면 이하에서 실시하는 바와 같이 옵션에 비해 가격결정의 공정성이 떨어지고 가격도 더 비싸게 형성되고 있는데도, 2011년 10월 기준 ELW의 일평균 거래규모(1조 4,004억여 원)가 장내옵션의 일평균 거래규모(1조 6,688억여 원)의 83.9%에 이르고 있는 실정

## 1. 유동성공급자(LP)에 의한 가격결정 구조

ELW를 발행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2 내지 같은 규정 제2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유동성공급자<sup>6)</sup>(Liquidity Provider; 이하 “LP”라 한다)를 지정하여 유동성 공급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고 LP는 ELW 발행사로부터 발행물량 전부를 인수한 후 이를 거래소 시장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와 시장에서 매도와 매수 양방향 호가 및 수량을 제시하여 시장을 조성하고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파생상품시장(옵션시장)에서는 다수의 투자자가 한국거래소가 정한 매매규칙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옵션을 매도하고 이를 다수의 투자자가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sup>7)</sup>되는 반면, ELW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장마감 후 ELW를 보유(over-night position)한 금액이 2011년 10월 말 기준 1,304억 원(전체 시가총액 24조여 원의 0.54% 수준)에 불과한 등 시장에서 LP의 독점적 지위가 지속<sup>8)</sup>되고 있다.

이에 따라 LP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제시하는 호가와 수량에 따라 ELW의 가격이 주로 결정되고 있으나, ELW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sup>9)</sup> 중 주가 지수(또는 개별주식의 주가)의 장래 변동성(이하 “내재변동성<sup>10)</sup>”이라 한다)은 LP의

6) 매 5분 이내로 특정종목의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여 유동성을 공급할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ELW를 발행한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사로부터 유동성공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투자회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며 대부분 발행사가 LP업무를 겸하고, 제3자 LP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7) 옵션시장에서는 형성된 시세가 적정 수준보다 높다면 누구라도 매도포지션을 취할 수 있고 반대로 낮다면 매수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양방향 대응이 가능하므로 옵션가격 형성에 있어서 특정인의 영향력 행사가 어려움. 또한 옵션시장에는 다양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고 옵션을 이용한 차익거래나 헤지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8) 장 종료시점에 대부분의 투자자가 보유한 ELW를 LP에게 되팔기 때문에 장 시작 시에는 LP에 의한 공급독점, 장 중에는 LP에 의한 대량호가, 장 종료 시에는 LP에 의한 수요독점 상태가 상장기간 중 계속됨

9) ① 기초자산의 현재가격, ② ELW 행사가격, ③ 기초자산의 변동성(이른바 ‘내재변동성’), ④ 잔존만기, ⑤ 무위험 이자율, ⑥ 기초자산 배당정보 등을 변수로 하여 산출(블랙숄즈 모델)되며, ‘내재변동성’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항목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값

10) 일반적으로 ‘향후 만기시점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얼마나 변동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기대를 계량화한 값’으로, 이를 산출하기 위한 확률적인 기준이나 이론은 없음. 따라서 LP는 과거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기초로 향후 변동가능성을 추론하는 방식을 사용, 그 추론 방식은 LP마다 다른 것이 일반적임

주관적 예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조건의 ELW의 가격이 LP마다 다르게 산정되고 있고, 이와 같이 LP에 의해 형성된 ELW 가격이 적정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위와 같이 ELW 시장의 가격결정 구조 및 적정가격 산정의 어려움에 따라 발행사가 ELW 가격을 높게 발행하거나, LP가 시장에서 매매차익 확보를 위해 임의로 가격을 변동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거래되고 있는 ELW(이하 “지수형 ELW”라 한다)의 가격을 동일 구조<sup>11)</sup>의 옵션가격과 비교한 연구결과<sup>12)</sup>에 따르면 지수형 ELW<sup>13)</sup>는 동일 구조의 옵션보다 평균 24.2%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래소가 매일 공시하고 있는 LP의 ELW 가격결정을 위해 적용한 내재변동성의 일관성<sup>14)</sup>을 분석해보면 [표 1]과 같이 2011년 3분기 중 LP가 내재변동성을 일중에 최고 5% 이상 변동시킨 사례가 총 735회에 달하고 있다.

[표 1] LP에 의한 ELW 내재변동성 변동비율 5% 이상 현황

(단위: 종목 수)

내재변동성 변동비율	5% 이상~ 8% 미만	8% 이상~ 10% 미만	10% 이상~ 30% 미만	30% 이상	계
종목 수	273	198	234	30	735

주: 2011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기간 중 일중 5분 마다 산정한 LP의 내재변동성 변동비율 중 최고치가 5% 이상인 종목 수(잔존만기 30일 미만인 종목은 산출 대상에서 제외)

자료: 한국거래소

## 2. 특정 시장참여자에 의한 시장교란 및 일반 개인투자자의 구조적 손실 발생

2011년 10월 기준 ELW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 1조 4,004억 원 중 투자자별 매매비중을 보면 개인이 6,750억 원(48.2%), LP가 6,310억 원(45.1%)을 차

11)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면서 ELW와 만기와 행사가 등이 동일한 옵션상품

12) 최종 거래일이 2010. 6. 10. 도래, 기초자산이 KOSPI200인 콜 ELW 중 거래가 활발한 13개 종목을 표본으로 동일구조의 주식옵션과 1분 간격으로 가격 비교(“ELW 시장의 가격행태 분석”, 한국증권학회지 제40권 1호, 2011년 2월)

13)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는 동일한 구조의 옵션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의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격을 비교할 대상이 없음

14) 내재변동성이 지나치게 크게 또는 자주 변경된다는 것은 LP의 임의적인 가격결정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지하고 있고, 기관<sup>15)</sup>과 외국인의 참여(각각 3.7%, 2.5%)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일평균 거래횟수가 100회 이상으로 알고리즘 매매시스템<sup>16)</sup>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이하 “스캘퍼”라 한다)은 2011년 9월 계좌 수 기준으로 개인 전체(36,154개 계좌)의 3.46%(1,251개 계좌)에 불과하나 거래 대금은 74.8%(4,286억 원)를 차지하고 있는 등 ELW 시장은 LP와 소수 스캘퍼 간의 투기적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위 “1 항”에서와 같이 ELW의 가격이 시장 참여자 간 경쟁이 아닌 주로 LP가 시스템을 통해 기계적으로 제시<sup>17)</sup>하는 호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스캘퍼는 이러한 가격결정 구조와 LP의 호가제시 시스템을 파악한 후 증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빠른 주문 프로세스<sup>18)</sup> 등을 이용하여 LP의 호가 조정에 선행하여 매수(저가매수)하고 LP 호가가 상향 조정될 경우 즉시 매도(고가매도)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차익을 지속적으로 실현<sup>19)</sup>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기간 중 2010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일평균 ELW 거래 대금이 100억 원 이상인 79개 계좌의 매매손익을 분석한 결과, 스캘퍼는 위 계좌 중 77개 계좌를 통해 총 627억여 원(계좌당 8억 1,443만 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실현<sup>20)</sup>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1)</sup>

15) LP를 제외한 증권사

16) 투자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이 자동화된 방법에 의해 금융상품의 매매 기회를 인지하고 주문을 집행하는 매매유형으로서, 사전에 설계된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각종 분석지표(가격의 움직임, 거래량, 일중 시간대 등)를 분석하여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낼 것인지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

17) LP는 많게는 수 백 종목의 ELW를 운용하면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기초자산 가격에 대응하여 즉각적으로 호가를 변경해야 하므로, LP가 매순간 시장 정보를 확인하면서 개별적인 판단과정을 통해 호가를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호가를 제출

18) LP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에서 수수료 수익 증대 및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목적으로 스캘퍼의 알고리즘 매매시스템을 내부 전산망에 탑재하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보다 주문속도가 20여 배 빠른 주문 프로세스를 제공해주는 등 스캘퍼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되어 12개 증권회사 대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19) LP는 스캘퍼와의 거래로 일시적인 손실을 보더라도 상장 초기에 자산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스캘퍼와의 거래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향이 있어 스캘퍼의 지속적인 수익확보가 가능

또한 금융투자회사도 ELW와 동일한 구조의 옵션을 파생상품시장에서 매입하여 헤지 포지션을 구축한 후 “1 항”에서와 같이 높은 가격으로 ELW를 매각<sup>22)</sup>하거나, 유통 시장에서 ELW의 매도·매수 스프레드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총 2,917억 원의 수익<sup>23)</sup>을 얻고 있다.

반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만기에 권리행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가격이 저렴한 ELW(이하 “외가격 ELW”<sup>24)</sup>라 한다)에 주로 투자하는데, 이러한 외가격 ELW는 기초자산에 비정상적인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그 가격이 “0”으로 수렴<sup>25)</sup>하므로 이를 매입할 경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으며<sup>26)</sup>, 실제로 개인투자자는 [표 2]와 같이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ELW 시장에서 1조 8천억여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등 시장 참여자별 불합리한 수익구조가 ELW 시장에 고착화되어 있다.

[표 2] 2006년 이후 ELW 거래주체별 손익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개인	△2,004	△1,048	△5,647	△5,317	△4,148	△18,164
LP 금융투자회사	323	△648	386	1,789	1,067	2,917
외국법인	△114	△18	1,971	356	△1,218	977

주: 1. 개인손익은 {매도약정-매수약정+권리행사차금+(연말보유 ELW 평가액-전년말보유 ELW평가액)}으로 산출

2. LP손익은 LP영업과 관련한 내부관리 손익(ELW 매매손익+헤지손익-제 비용)

자료: 금융감독원

20) 손실 계좌는 2개(손실 합계액: 7,458만 원)

21) 금융감독원에서 2011년 1월 중 ELW 거래금액 상위 20개 계좌의 손익을 분석한 결과, 해당 20개 계좌는 일명 스캘핑 기법으로 총 47.1억 원의 수익(일평균 계좌당 1,130만 원)을 안정적으로 얻은 것으로 나타남(손실계좌 없음)

22) 이 경우 투자자와의 매매과정에서 ELW 매매차손이 발생하더라도 LP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매입한 옵션상품의 이득으로 이를 상쇄하고, ELW와 옵션의 가격차이 만큼 이득을 볼 수 있음

23) LP의 손익은 (ELW 매매손익+헤지손익-제 비용)으로 구성되므로 헤지비용의 증가(기초자산의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질 경우) 또는 불완전 헤지 등에 따라 일시적인 손실(2007년의 경우 648억 손실)을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이론적으로 LP는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여 ELW 가격을 산정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

24) 2011년 8월 말 기준 콜ELW 7,684개 종목 중 권리행사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보다 높아 내재가치가 “0”이고 시간가치로만 구성된 종목(이하 “외가격 ELW”라 한다)이 6,948개 종목으로 콜ELW의 대부분(90.4%)을 차지

25) ELW는 만기에 권리를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인 ‘내재가치’와 기초자산 변동에 대한 기대치인 ‘시간가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기에 근접할수록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 내로 변동할 확률이 낮아지므로 ‘시간가치’는 점차 “0”으로 수렴

26) 시간가치의 하락에 따른 손실 이외에도 LP의 호가 스프레드(매도와 매수가격 차이)에 의한 손실, 빈번한 거래에 따른 매매수수료 등도 ELW 투자자의 손실을 확대시키는 원인

위 “1~2항”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ELW 시장은 LP가 유통시장에서 가격과 수급을 사실상 결정하는 등 공정성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서, 소수의 투기적 세력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반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비합리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들은 ELW 발행에 대한 규제<sup>27)</sup>가 상대적으로 적고 금융투자회사 간 ELW 투자자 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2011년 8월 말 기준 총 9,286개 종목의 ELW를 경쟁적으로 발행·상장하고 있으나, 이 중 6,889종목은 일중 거래대금이 해당 종목 시가총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는 ELW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ELW 시장에서 투기적 거래수요를 감소시키고 시장 참여자별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도한 ELW 발행 및 호가제출을 제한하는 등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으로 ELW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sup>28)</sup>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7) 장의파생상품 인가를 받고 영업용순자산비율이 300%이상인 금융투자회사는 발행물량 10원 이상, 만기 3개월~3년 이내의 ELW를 제한없이 발행할 수 있고, 종목당 발행비용도 저렴(20억 원 발행 시 상장수수료는 55만 원)

28) 금융위원회는 이번 감사원 감사 후 2011. 12. 1. i) LP에 대한 규제 강화(매도·매수 스프레드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0~15% 사이에서 호가 제출 가능), ii) LP평가 성적이 낮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ELW 발행·상장을 일부 제한, iii)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의 시장 개선계획을 발표하였음

# 감 사 원

## 통 보

제 목 파생상품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감독원 본원

내 용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4-46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위탁증거금 등 파생상품 투자자예탁금<sup>1)</sup>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면서 고객에게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급하는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393조의 규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하여 위탁증거금<sup>2)</sup> 및 거래증거금에 관한 사항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거래소 업무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4-46조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투자자 예탁금의 이용대가로 고객에게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회는 자본시장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2) 위탁증거금이란 장내파생상품 투자자의 향후 결제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예탁받는 결제이행 보증금으로 KOSPI200선물거래의 경우 선물1거래 시 매매금액의 15%를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함. 위탁증거금은 현금, 대용증권(주식, 채권 등), 외화로 예탁할 수 있음

관(이하 “☐☐협회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거래소 업무규정 제134조에 따르면, ‘현금위탁증거금’이란 선물거래를 하는 고객이 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 중 반드시 현금으로 위탁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계약금액×위탁증거금률×현금위탁증거금률<sup>3)</sup>”과 당일체결 순손실 상당액 등으로 정의<sup>4)</sup>되어 있다.

[거래소 업무규정 상 현금위탁증거금 산정 예시]

- KOSPI200선물 1거래의 경우(KOSPI200지수는 240포인트, 현금위탁증거금률은 1/3으로 가정)
  - ① 계약금액은 240포인트×500,000원(거래승수<sup>5)</sup>)으로 1억 2,000만 원
  - ② 위탁증거금은 위탁금액 1억 2,000만 원에 위탁증거금률 15%를 곱한 1,800만 원
  - ③ 현금위탁증거금은 위탁증거금 1,800만 원에 현금위탁증거금률 1/3을 곱한 600만 원
- ※ 선물거래 투자자는 위탁증거금 1,800만 원 중 600만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현금, 대용증권(주식, 채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음

그런데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협회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3-5조 및 ☐☐협회 표준약관 제19조에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투자자예탁금 중 현금위탁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각 회사가 정하는 요율<sup>6)</sup>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현금위탁증거금의 범위가 위 거래소 업무규정 제134조의

3)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5조에 따르면 현금위탁증거금 비율은 3분의 1을 최저율로 하여 3분의 3 이내에서 회원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4) 한국거래소는 현금위탁증거금이 위탁증거금 예탁수단 중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2011. 7. 6.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현금예탁필요액’으로 용어를 변경(시행세칙은 2011. 10. 20. 개정)

5) 선물은 1계약을 기준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1계약을 거래했을 때 얼마만큼의 거래대상을 인수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의 크기를 거래승수라고 함(즉, 지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한 계약의 금액을 산출함)

6) ☐☐증권주식회사의 경우 3개월 예탁금 평균잔액기준으로 1천만 원 미만은 0%, 1천만~3천만 원은 0.25%, 3천만~1억 원은 0.5%, 1억~3억 원은 1%, 3억~5억 원은 1.5%, 5억 원 이상은 2%의 예탁금 이용료를 각각 적용(☐☐주식회사도 ☐☐증권주식회사와 유사한 등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가 비슷한 구조임)

현금위탁증거금과 같은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다<sup>7)</sup>.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별로 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현금위탁증거금의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여 이용료를 산정·지급하고 있을 소지가 있어,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62개<sup>8)</sup> 전체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파생상품 투자자에 대한 예탁금이용료 지급실태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증권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와 ○○증권주식회사는 거래소 업무규정 제134조의 현금위탁증거금 정의와 같이 투자자가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할 위탁증거금(위탁증거금의 1/3<sup>9)</sup>)만 ‘현금위탁증거금’으로 해석하고 이를 초과하여 예탁한 현금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60개 금융투자업자<sup>10)</sup>는 투자자가 현금으로 예탁한 위탁증거금을 모두 ‘현금위탁증거금’으로 해석한 후 현금으로 위탁한 증거금 전체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하고 않고 있었다.(아래 [예시] 참조)

#### [금융투자업자별 이용료 지급대상 투자자 예탁금 산정 예시]

- 앞 페이지의 ‘현금위탁증거금 산정예시’에서 선물거래로 1,800만 원의 위탁증거금(이중 현금위탁증거금은 600만 원)이 발생한 투자자가 파생상품계좌에 1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금융투자업자별 이용료 지급대상 투자자 예탁금 산정 방식

- ① [□□증권 등 2개사] 9,400만 원 = 전체예탁금(1억 원)-현금위탁증거금(600만 원)
- ② [나머지 60개사] 8,200만 원 = 전체예탁금(1억 원)-현금으로 예치한 위탁증거금 전체(1,800만 원)

7) ☐☐협회 표준약관 제5조(수탁의 거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주문을 수탁 거부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을 ‘현금위탁증거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협회는 위 표준약관 제5조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현금위탁증거금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

8) 총 69개 금융투자업자(증권사 62개사, 선물사 7개사) 중에서 파생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7개사를 제외한 숫자

9)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5조에 따르면 현금위탁증거금 비율은 3분의 1을 최저율로 하여 3분의 3 이내에서 회원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2011년 10월 말 현재 모든 금융투자업자는 현금위탁증거금율을 1/3로 정하고 있음

10) 69개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예탁금 적정산정 2개사, 파생상품 미취급 7개사를 제외한 60개 금융투자업자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위탁증거금의 범위가 계좌를 개설한 금융투자회사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협회로 하여금 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현금위탁증거금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i) 현금위탁증거금을 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위탁증거금 중 일부를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결제대기성 현금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급적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고, ii) 2010년 10월 말 현재 모든 금융투자업자가 현금위탁증거금률(위탁증거금 중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비율)을 1/3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안정적인 결제를 위해 보유할 필요가 있는 현금 비율을 스스로 정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현금위탁증거금의 범위를 '최소한 현금으로 위탁하여야 하는 증거금'(위탁증거금의 1/3)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위탁증거금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현금위탁증거금의 범위를 제각각 달리 해석하여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 등 2개 금융투자업자와 달리, 60개 금융투자업자는 2010회계연도(2010. 4. 1.~2011. 3. 31.<sup>11)</sup>) 동안에만 총 3조 676억여 원<sup>12)</sup>의 예탁금(일평균 기준)에 대한 이용료(연간 307억여 원 추정<sup>13)</sup>)를 지

11)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기간이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12) 위 60개 금융투자업자는 '현금으로 위탁해야 하는 증거금'인 1조 188억여 원이 아닌, '현금으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체'에 해당하는 4조 864억여 원을 모두 예탁금 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

급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감독원장은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예탁금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현금위탁증거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투자자가 이를 초과하여 현금으로 예탁한 위탁증거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13) 위 60개 사의 회사별 평균 예탁금 이용료율(최저 0.3%, 최고 2.25%, 회사별 평균 1~1.5%)을 적용하여 미지급 이용료를 산출해 본 결과 2010회계연도에 총307억여 원의 이용료를 미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용료 미지급액은 실제 계좌별로 산출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 감 사 원

## 통 보

제 목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운영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한국거래소 본사

내 용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등에 대한 신고·공시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 1. 공시 후 중단된 자원개발사업 등 미공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 (6)의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서 각각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 지분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실의 공시를 위해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6조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자원개발 투자·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등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거래소에 신고<sup>1)</sup>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상장법인이 위 규정 등에 따라 자원개발 사업에 출자하거나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공시한 이후 해당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러한 사실은 자원개발사업 투자를 공시한 상장법인 투자자 등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또한 상장법인이 실제 사업성이 낮은데도 사실과 다른 자원개발사업 관련 공시를 하여 주가 부양을 꾀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자원개발 투자 등의 사실을 공시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행 여부 및 경과를 의무 공시사항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자원개발 사업에 착수한 사실을 공시한 상장법인에 대해서 자원개발 사업의 진행경과,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규정이 없어<sup>2)</sup> 2008. 1. 1.부터 2011. 9. 30.까지 자원개발 공시를 한 77개 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28개, 코스닥시장 49개) 중 26개 법인은 자원개발 착수 공시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아무런 공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공시가 없는 26개 법인의 자원개발사업 35건에 대하여 2011년 10월 현재 사업진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식회사는 2009. 4. 3. 미얀마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공시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진행 상황이 없는 등 [별표] “거래소 상장법인의 자원개발사업 진행상황”과 같이 16건의 자원개발사업은 투자협상 결렬, 사업타당성 부족, 지분취득 업체의 폐업 등으로 사업의 진행사항이 없거나 사업 중단 또는 이미 해당사업에서 철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신고내용을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에 공시

2) 2011. 7. 11.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자원개발 관련 권리취득에 관한 사항, 인허가·탐사비 관련 사항 등 상세정보를 기재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사항으로서 2011년 10월 말 현재까지 개정된 서식에 의해 공시한 상장법인은 1개에 불과, 최초 공시 이후 진행사항 및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데 그침

그 결과 이와 같이 사업성이 없거나 지분을 취득한 타 법인이 이미 폐업 또는 사업을 철수한 경우에도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를 통해 자원개발사업의 진행 사항을 알 수 없으며, 이러한 악재성 정보를 알고 있는 해당기업의 내부자는 이를 불공정거래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 2. 경영진의 범죄혐의 등 미공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제1항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임직원 등(퇴직한 자 포함)의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때<sup>3)</sup>,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등의 경우 당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 공시<sup>4)</sup>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상장법인에 대한 횡령·배임 등은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이러한 범죄경력자가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다시 유사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1. 10. 10.~10. 31.) 동안 2007년부터 2011년 9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7. 9. 14. 주식회사 □□의 등기이사로 선임된 ◇◇◇는 같은 회사에서 횡령·배임행위(53억 원, 공시일자 2008. 5. 8.)를 한 이후인 2009. 10. 13. 아무런 공시없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회사에서 192억 원을 재차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sup>5)</sup> 있는 등 2011. 11. 6. 현재 27

3)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자본 100분의 5(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금액

4) 상장법인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나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해당 법인의 기업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므로 이해관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투자 등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5) 위 ◇◇◇는 2011. 11. 28. 1심 재판에서 횡령 및 사기(182억 원)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음

명이 2개 이상의 상장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는 동안 횡령·배임행위로 해당법인에 총 1조 1,615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횡령·배임 등 범죄경력이 있거나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자가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미국 증권감독기관인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는 상장법인의 임원 및 집행간부 선임 시 과거 10년간 형사처벌 전력과 민·형사사건의 당사자로 계류 중인 내역 등을 정기보고서 등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sup>6)</sup>

그런데 거래소의 공시규정에는 횡령·배임 등 범죄경력에 있는 자가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공시의무를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횡령·배임 등 범죄경력자가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 등으로 취임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는 이를 알 수 없는 실정이고, 범죄경력자가 동일한 범죄행위를 다른 상장법인에서 계속 저질러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자원개발사업 착수를 공시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 진행경과 및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과거 횡령·배임 등 범죄경력자 등이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에도 관련 범죄경력 및 혐의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6) 미국의 경우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및 1934년 「증권거래법」(Exchange act)에서 요구하는 공시서류 등의 비재무적사항 기재방법에 관한 기본지침인 Regulation S-K Item 401(f)에 이와 같이 규정

[별표]

거래소 상장법인의 자원개발사업 진행상황

연번	종목(시장) <sup>1)</sup>	자원유형	최종 공시일자	개발대상	사업경과
1	○○(유)	유전	2009. 1. 21.	카자흐스탄 ○○	탐사 시추 준비 중
2	○○○○주식회사(유)	가스	2009. 4. 3.	미얀마 ○○	진행사항 없음
		유연탄	2009. 8. 25.	호주 ○○	채탄 중
3	○○(유)	가스	2008. 12. 12.	중국 ○○ <sup>2)</sup>	협상 결렬로 사업 중단
		유전	2009. 1. 21.	카자흐스탄 ○○	시추선 도입 자금 계약
4	○○(유)	가스	2009. 10. 16.	예멘 ○○	생산 중(연간 640만 톤)
		니켈	2010. 7. 6.	마다가스카르 ○○	생산 예정
5	○○(유)	유전	2009. 1. 21.	카자흐스탄 ○○	시추선 계약
		동	2010. 9. 16.	미국 ○○	환경영향평가 중
6	○○(유)	유전	2008. 2. 28.	미국 ○○	사업 지연
7	○○(유)	유전	2008. 12. 19.	콜롬비아 ○○	탐사정 시추 예정
			2009. 1. 21.	카자흐스탄 ○○	탐사 중
8	○○(유)	가스	2008. 3. 5.	미국 ○○	진행사항 없음
9	○○(유)	유전	2008. 3. 5.	뉴질랜드 ○○	탐사 자료취득 중
		구리	2008. 4. 30.	멕시코 ○○	생산설비 구축 중(2011년 8월 현재 건설 공정률 48%)
		유전	2009. 1. 21.	카자흐스탄 ○○	시추현장 조사 중
10	○○(유)	철광석/ 티타늄	2010. 5. 27.	남아공 ○○	개발타당성 없어 투자 보류
11	○○(유)	아연 등	2010. 9. 8.	페루 ○○	투자 진행 중
12	○○(유)	유전	2008. 7. 21.	○○ 지분 취득	사업 중단
13	○○(유)	유전	2009. 8. 21.	○○ 지분 취득	환경조사 등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 중
14	○○(코)	특정 대상 없음	2008. 3. 10.	자원탐사(특정 대상 없음)	지분취득(지분율 19.35%, 취득가액 15억 원, 2010년 장부가액 904만 원) 후 주식양수도 대금 반환청구소송 중(진행상황 파악 불가능)
15	○○(코)	특정 대상 없음	2008. 4. 21.	자원개발(특정 대상 없음)	현금출자(10억 원)를 통해 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설립 후 사업목적에서 자원개발 삭제

연번	종목(시장) <sup>1)</sup>	자원유형	최종 공시일자	개발대상	사업경과
16	○○(코)	유전	2010. 2. 23.	카자흐스탄 ○○	○○와 지분 판매 계약 완료
		유전	2010. 5. 27.	카자흐스탄 ○○	생산 시작
17	○○(코)	원유, 천연가스	2009. 5. 29.	캐나다 ○○	신규 광구 탐사 중
18	○○(코)	특정 대상 없음	2009. 9. 8.	자원개발(특정 대상 없음)	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폐업. 자원개발사업 구조조정 및 전 대 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예정
19	○○(코)	특정 대상 없음	2008. 4. 11.	자원개발(특정 대상 없음)	○○ 출자금 전액 대손상각
		특정 대상 없음	2008. 4. 29.	자원개발(특정 대상 없음)	○○ 출자금 전액 대손상각
20	○○(코)	석탄	2008. 9. 5.	인도네시아 ○○	2010. 8. 31. 사업 철수
21	○○(코)	물리브렌	2008. 4. 11.	물리브렌 ○○	매년 평가손실로 처리. 시추결과에 따 라 지분매각 검토 중
22	○○(코)	구리, 우라늄	2008. 3. 26.	잠비아 ○○	탐사 업체 선정 및 용역 계약
23	○○(코)	특정 대상 없음	2009. 10. 26.	자원개발(특정 대상 없음)	○○ 2010. 7. 22. 상장폐지
24	○○(코)	에너지	2008. 10. 17.	러시아 ○○	자금조달을 위해 중국 ○○과 LOI 체결
25	○○(코)	석탄	2009. 3. 24.	인도네시아 ○○	○○ 폐업
26	○○(코)	무연탄	2008. 12. 22.	북한 ○○	○○ 지분매각

주: 1. (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 ○○은 중국 ○○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한 2004. 12. 24.부터 2009. 6. 12.까지의 조회공시요  
 구에 대하여 위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  
 자료: 한국거래소

# 감 사 원

## 통 보

제 목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신용정보 활용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한국거래소 본사

내 용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2008. 1. 1.부터 2011. 10. 25. 사이에 1억원 이상의 대출원금을 10일 이상 연체한 자료<sup>1)</sup>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09년 이후 상장폐지된 81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75개 기업(93%)에서 대출원금 연체가 상장폐지보다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원금 연체 사실이 기업부실을 예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사실은 상장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여부판단에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

1) 「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신용정보관리기준”에 따르면 해당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10일 이상 연체되면 2영업일 이내에 위 사실을 등록해야 함

로 거래소에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일정 규모 또는 기간 이상의 대출금 연체사실에 대한 공시의무<sup>2)</sup>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식회사 ○○증권 등 37개 투자매매업자 등은 2011. 9. 30. 현재 거래소에 88% 이상(전체 20,000,000주 중 17,633,869주)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거래소는 은행연합회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대출원금 연체 자료를 받아 위 공시의무 이행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을 연체한 사실을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주식회사 □□(2009. 4. 11. 상장폐지)의 경우 2008. 2. 19.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 19억의 연체(2008. 12. 31. 조회 기준)를 시작으로 총 8회에 걸쳐 계 192억여 원(2007년 말 자본총액 82억여 원 대비 234% 수준)의 대출금을 연체한 후 같은 해 8. 14. 관리종목<sup>3)</sup>으로 지정되었는데, 그때까지 투자자에게 위 대출금 연체 사실이 공시되지 아니한 채 거래가 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표]

2) 현재 이와 유사한 공시의무사항으로서 상장법인이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3) 당해 주식의 시장유동성 부족 및 경영악화 등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특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참여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장폐지 등의 투자위험을 알리기 위한 제도

와 같이 대출금을 1억 원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서 2009년 이후 상장폐지된 81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49개 기업(60.5%)의 주식이 최초의 연체기산일 이후에도 위 사실이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873일 동안 그대로 거래되고 있었다.

[표] 대출원금 연체 후에도 정상기업으로 분류된 상장기업 현황

(단위: 개, %)

구 분	계(비율)	정상종목	관리종목	상장폐지
상장기업	81(100)	49(61)	26(32)	6(7)

자료: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 하역금 투자자의 투자여부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금 연체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의 대출금 연체정보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아 공시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감 사 원

## 통 보

제 목 금융투자업자의 예탁증권 관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15조 및 제4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위법행위를 감독하고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은 증권은 해당 증권 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3항 및 자본시장법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의 제78호와 제283호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는 투자자 예탁증권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지 않거나 지체없이 결제원에 예탁하지 않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업무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예탁증권을 지체없이 결제원에 투자자분으로 예탁하게 하고, 투자자 예탁증권을 임의로 자사의 고유재산 계좌에 대체한 후 이를 펀드결제용이나 대차상환 등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20개 증권사<sup>1)</sup>를 대상으로 2009. 1. 1.부터 2011. 10. 31.까지 투자자 예탁증권 계좌 및 고유재산 증권계좌 간의 이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증권에서는 총 48회에 걸쳐 투자자 동의 없이 투자자 증권계좌에 있는 예탁증권<sup>2)</sup>을 아래와 같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1. 투자자 예탁증권을 증권사가 설정한 펀드 결제용으로 무단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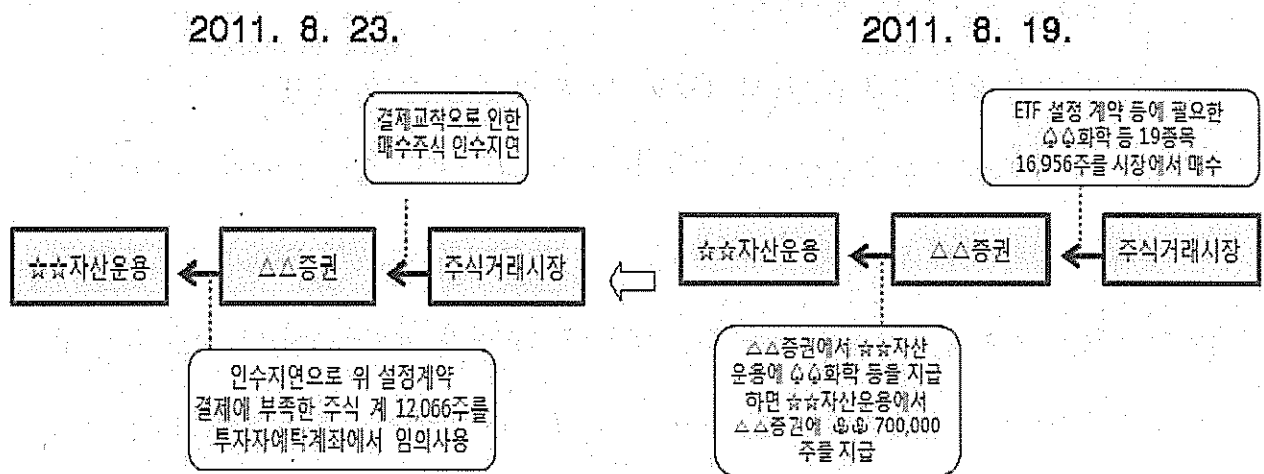
△△증권에서는 2011. 8. 19. 주식회사 ☆☆자산운용과 같은 해 8. 23. ♡♡ 등 19개 종목 14,350주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s, 이하 “ETF”라 한다)인 ☞☞ 700,000주를 지급받는 내용의 ETF 설정계약<sup>3)</sup>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계약 이행에 필요한 ♡♡ 등 19개 종목 16,956주를 주식시장에서 매수하였다.

그 후 △△증권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위 계약의 결제일인 2011. 8. 23. 결제교착<sup>4)</sup>으로 인하여 주식시장거래에서 매수한 ♡♡ 주식 등의 인수가 지연되

- 
- 1) 조사 기간 동안 투자자 증권예탁계좌에서 자기 고유재산 증권계좌로 이체 실적이 있는 금융투자업자와 하루에 20개 종목 이상 증권대차 실적이 있는 금융투자업자 위주로 선정
  - 2) 주식 및 ETF 계 136개 종목, 824,433주, 전일종가기준 46,418백만여 원
  - 3) ETF 설정계약은 증권회사나 기관이 ETF자산운용사에 ETF를 구성하는 주식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ETF 주식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
  - 4) 현행 결제시스템상 증권사는 자신이 매도한 증권을 결제일까지 결제원에 납부해야 매수한 주식을 인도받을 수 있음. 그런데 증권사가 매도증권을 결제원에 납부하지 못하여(예: 매도주문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등)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는 등 결제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

주를 투자자 동의 없이 △△증권 고유재산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같은 날 17시 38분 ☆☆자산운용의 수탁은행인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위 ETF거래 설정계약에 대한 결제를 하였다.

[그림] △△증권 투자자예탁증권 임의사용 흐름도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및 △△증권 자료 재구성

이후 △△증권에서는 2011. 8. 23. 17시 40분에 결제교착이 해소되어 주식시장에서 ♀♀주식 등이 인수되자 같은 날 17시 47분이 되어서야 이를 투자자 계좌에 다시 반환하는 등 19개 종목, 12,066주(230백만 원 상당, 전일종가 기준)를 투자자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

- 5) 위 ETF 설정에 따른 결제는 △△증권이 운용사인 ☆☆자산운용에 ETF 구성종목 전부를 납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 사례의 경우처럼 ETF 구성종목을 자산운용사에 실제로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ETF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증권은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제35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증권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표] “투자자 예탁증권 임의사용 명세”와 같이 2010. 4. 6.부터 2011. 10. 7.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 등의 설정에 필요한 ETF 구성종목인 ▽▽ 주식 등 369,799주(360억 3,700만 원 상당, 전일종가 기준)를 투자자 동의 없이 짧게는 9분에서 길게는 24시간 27분 동안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 2. 자사의 대차증권 상환을 위해 투자자 예탁증권을 무단 사용

△△증권에서는 증권대차거래를 하면서 자사가 차입했던 증권의 상환만기일에 결제지연 등으로 인해 결제마감시각(17시)까지 대차상환에 필요한 증권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한다는 사유로 [별표]와 같이 상환만기일 오전 등에 미리 투자자 계좌에 예탁되어 있던 ▽▽ 등 65개 종목, 454,634주(전일종가 기준, 10,381백만 원 상당)를 △△증권 고유재산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통해 대차증권을 상환하였다.

그리고 결제마감시각 이후 위 대차증권 상환을 위해 주식거래시장에서 매수했던 종목이 인수되면 이를 투자자 계좌에 반환하는 방법으로 위 [별표]와 같이 2009. 8. 17.부터 2011. 9. 16. 사이에 총 39회에 걸쳐 짧게는 24분에서 길게는 9시간 10분까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자 예탁증권을 반복하여 무단 사용하고 있는 등 투자자 예탁증권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①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예탁증권을 임의로 자사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② 투자자 예탁증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주식회사 △△증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등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투자자 예탁증권 임의사용 명세

(단위: 주, 원)

유형	사용 연번	사용 일자	종 목	사용수량 (A)	전일증가 (B)	금액 (A×B)	사용시간
	합계	48회	136 (중복 종목 제외)	824,433		46,418,283,430	
ETF 결제	소계	9회	96	369,799		36,037,126,280	
	1	2010. 4. 6.	▽▽ 등 8개 종목	70,974	58,500 등	6,045,019,700	1시간 59분
	2	2010. 5. 12.	▽▽ 등 4개 종목	45,230	35,700 등	1,535,412,200	1시간 12분
	3	2010. 5. 18.	▽▽ 등 7개 종목	20,160	53,800 등	1,651,216,500	54분
	4	2010. 11. 9.	▽▽ 등 5개 종목	2,063	76,700 등	173,689,200	49분
	5	2011. 8. 3.	▽▽ 등 20개 종목	2,515	145,000 등	323,660,280	57분
	6	2011. 8. 23.	♠♠ 등 19개 종목	12,066	302,500 등	230,341,900	12분
	7	2011. 9. 23.	▽▽ 등 20개 종목	45,507	56,500 등	7,170,639,700	9분
	8	2011. 9. 28.	▽▽ 등 34개 종목	77,308	6,000 등	9,835,233,800	1시간 16분
	9	2011. 10. 7.	▽▽ 등 29개 종목	93,976	21,200 등	9,071,913,000	24시간 27분
대차 상환	소계	39회	65	454,634		10,381,157,150	
	1	2009. 8. 17.	♠♠	15,000	20,740	311,100,000	4시간 55분
	2	2009. 8. 31.	▽▽	880	16,200	14,256,000	1시간 2분
	3	2009. 10. 14.	▽▽	275	98,700	27,142,500	1시간 58분
			▽▽	79	65,000	5,135,000	
	4	2009. 11. 5.	▽▽	2	184,500	369,000	3시간 28분
			▽▽	20	46,000	920,000	
			▽▽	6	46,200	277,200	
			▽▽	2	47,250	94,500	
	5	2009. 12. 15.	♠♠	300,000	22,145	6,643,500,000	7시간 42분
	6	2009. 12. 24.	▽▽	40	22,000	880,000	1시간 28분
			▽▽	18	59,000	1,062,000	
			▽▽	2	71,000	142,000	
			▽▽	4	82,200	328,800	
			▽▽	2	116,500	233,000	
			▽▽	2	784,000	1,568,000	
			▽▽	24	65,600	1,574,400	
			▽▽	4	101,500	406,000	
			▽▽	8	55,200	441,600	
			▽▽	4	175,000	700,000	
			▽▽	40	11,050	442,000	

유형	사용 연번	사용 일자	종 목	사용수량 (A)	전일증가 (B)	금액 (A×B)	사용시간
대차 상환	6	2009. 12. 24.	▽▽	4	66,800	267,200	1시간 28분
			▽▽	4	122,000	488,000	
			▽▽	4	113,500	454,000	
			▽▽	10	58,700	587,000	
	7	2010. 1. 12.	▽▽	2,500	27,300	68,250,000	2시간 59분
	8	2010. 2. 10.	▽▽	20	18,500	370,000	8시간 47분
	9	2010. 2. 11.	▽▽	50	5,000	250,000	8시간 35분
	10	2010. 3. 4.	▽▽	400	45	18,000	2시간 9분
	11	2010. 3. 30.	♀♀	50,000	22,520	1,126,000,000	3시간 22분
	12	2010. 5. 14.	▽▽	600	24,950	14,970,000	6시간 50분
	13	2010. 6. 1.	▽▽	860	6,920	5,951,200	7시간 30분
	14	2010. 6. 10.	▽▽	20	5,250	105,000	6시간 16분
			▽▽	40	6,700	268,000	
			▽▽	110	3,045	334,950	
	15	2010. 6. 14.	▽▽	60	4,775	286,500	4시간 24분
			▽▽	18	41,000	738,000	
			▽▽	10	34,000	340,000	
			▽▽	8	61,900	495,200	
			▽▽	20	11,000	220,000	
			▽▽	60	8,410	504,600	
	16	2010. 6. 30.	▽▽	13	86,200	1,120,600	8시간 13분
	17	2010. 8. 27.	▽▽	2,500	10,700	26,750,000	42분
			▽▽	500	36,300	18,150,000	
	18	2010. 8. 31.	▽▽	5,000	10,700	53,500,000	7시간 41분
			▽▽	1,000	36,450	36,450,000	
			▽▽	11,350	7,200	81,720,000	
	19	2010. 9. 20.	▽▽	492	205,500	101,106,000	24분
			▽▽	232	63,600	14,755,200	
			▽▽	336	773,000	259,728,000	
			▽▽	444	148,000	65,712,000	
	20	2010. 10. 12.	▽▽	1	4,310	4,310	7시간 43분
	21	2010. 10. 15.	▽▽	25,250	7,780	196,445,000	5시간 7분
	22	2010. 11. 1.	▽▽	10	53,600	536,000	6시간 24분
	23	2010. 11. 8.	▽▽	2,800	9,550	26,740,000	1시간 21분
	24	2010. 11. 12.	▽▽	1,000	47,550	47,550,000	4시간 54분
	25	2010. 12. 1.	▽▽	15,150	7,360	111,504,000	3시간 45분
			▽▽	6,300	7,760	48,888,000	
			▽▽	1,680	8,740	14,683,200	

유형	사용 연번	사용 일자	증 목	사용수량 (A)	전일증가 (B)	금액 (A×B)	사용시간
대차 상환	26	2010. 12. 8.	▽▽	290	27,350	7,931,500	3시간 5분
	27	2010. 12. 13.	▽▽	32	795,000	25,440,000	
	28	2010. 12. 14.	▽▽	560	194,000	108,640,000	5시간 15분
	29	2010. 12. 27.	▽▽	4,238	192,500	815,815,000	9시간 10분
			▽▽	50	53,100	2,655,000	
			▽▽	10	146,500	1,465,000	
	30	2011. 1. 31.	▽▽	180	250	45,000	6시간 22분
	31	2011. 3. 7.	▽▽	280	2,185	611,800	7시간 45분
	32	2011. 5. 16.	▽▽	30	20,150	604,500	7시간 14분
			▽▽	530	15,500	8,215,000	
			▽▽	1,473	11,600	17,086,800	
			▽▽	616	5,530	3,406,480	
	33	2011. 5. 30.	▽▽	5	1,280,000	5,640,000	4시간 9분
	34	2011. 6. 3.	▽▽	40	2,905	116,200	6시간 29분
	35	2011. 6. 10.	▽▽	30	223,500	6,705,000	2시간 14분
	36	2011. 6. 15.	▽▽	10	13,200	132,000	5시간 43분
			▽▽	20	26,850	537,000	
			▽▽	4	45,700	182,800	
			▽▽	3	16,150	48,450	
			▽▽	6	2,810	16,860	
			▽▽	85	222,000	18,870,000	
	37	2011. 8. 12.	▽▽	40	29,800	1,192,000	3시간
	38	2011. 8. 31.	▽▽	114	87,800	10,009,200	9시간 4분
	39	2011. 9. 16.	▽▽	120	4,890	586,800	1시간 20분
			▽▽	60	21,100	1,266,000	
			▽▽	300	20,900	6,270,000	
			▽▽	240	3,570	856,800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및 △△증권 자료 제구성

# 감 사 원

## 문 책 요 구

제 목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부당 매매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본사

문책 대상자 ① 한국예탁결제원 ○○본부 ○○팀  
○○○

② 한국예탁결제원 □□본부 □□팀  
□□□

문 책 종 류

문 책 사 유

위 사람들 중 ○○○은 2011. 3. 28.부터, □□□는 2011. 6. 7.부터 2011. 10. 31. 현재까지 각각 한국예탁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 위 직에서 예탁대체 계좌 기획, 질권 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304조 및 결제원 「내부통제규정」(2009. 5.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결제원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모집·매출 등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자기 명의’의 한 계좌만을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은 타인과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목적으로 2000.

8. 30.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2009. 2. 4<sup>7)</sup>부터 2011. 10. 27.까지 자기의 계산으로 총 642회에 걸쳐 4,425백만 원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최대투자액 80백만 원)하였다.

또한, □□□는 「내부통제규정」 제14조에 규정된 규제를 피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목적으로 2003. 10. 16. 개설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9. 2. 4.부터 2011. 9. 29.까지 126회에 걸쳐 1,682백만 원의 금융투자상품을 자기 계산으로 매매(최대투자액 50백만 원)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결재원 「내부통제규정」 제14조에 위배된 것으로 결재원 「상벌규정」 제17조 제6호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위 사람들을 한국예탁결제원 「상벌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7) 자본시장법 시행일

# 감 사 원

##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적극적 시장감시로 지능적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한국거래소 본사

모 범 부 서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부 시장감시1팀

모 범 내 용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3조와 「시장감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장감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판단은 증권 또는 파생상품 종목의 거래양태, 가격변동, 거래량 규모, 시세·거래관여도 및 품문 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감시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시장감시위원회는 거래 상위계좌의 시세·거래관여도 등 한국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매매데이터를 근거로 시세조종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데이터에 근거한 시장감시 방법은 유사 투자자문업자<sup>1)</sup>가 인터넷에 증권방송·카페 등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개설한 계좌를 연계하여 수행하는 지능적인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에는 어려움이

1)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ARS간행물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별도의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지 않음

있다.

그런데 위 관서 시장감시1팀에서는 2011. 4. 14.부터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시장감시업무를 하면서 전통적인 매매데이터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증권사이트 등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시장의 매매양태를 유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투자자문업자가 증권방송·카페를 통해 위 종목을 추천하는 내용과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투자자의 불만사항 등 시장 밖 자료를 수집하는 등 분석범위를 확대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사 투자자문업자인 □□연구소장 ■■■■<sup>2)</sup>이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 매수 추천한 종목이 매수추천 후 일시 상승하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는 데서 단서를 포착하고 감시대상 종목을 해당 증권방송에서 추천한 65개 종목으로 확대하여, 거래상위 계좌들 간의 연계성과 호가·시세판여도 등을 분석하는 한편 ■■■■의 증권방송 내용과 유료회원들의 매매방향성 및 주가의 흐름 등 연관성을 분석하는 등 기존 시장감시 활동과는 다르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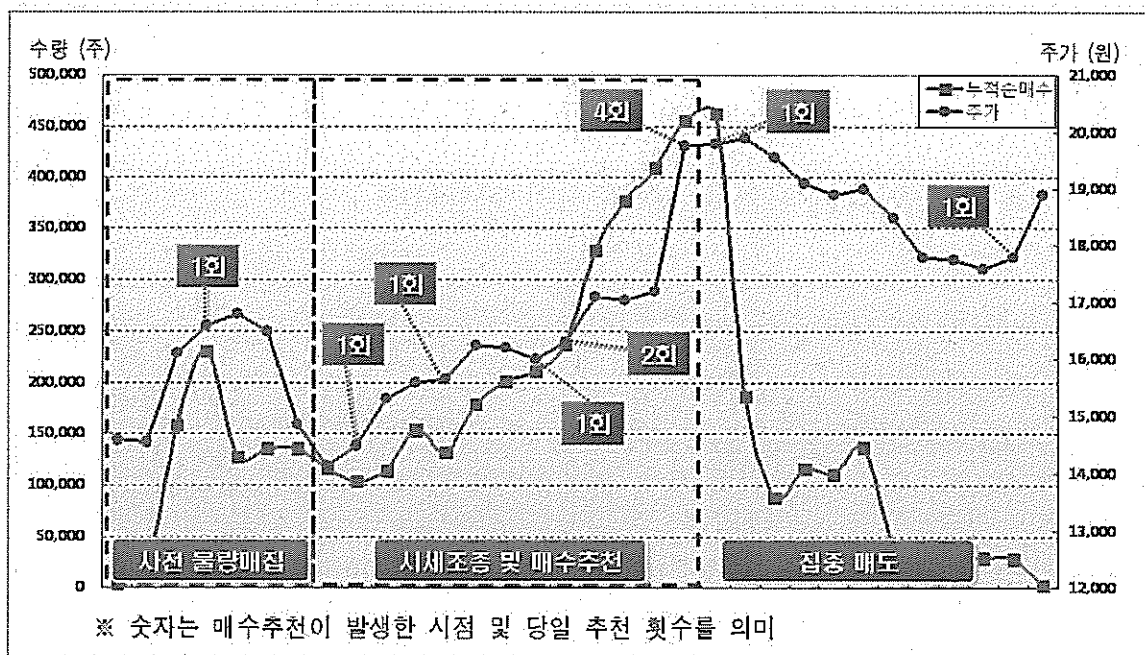
그 결과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이 운영하는 증권사이트의 유료회원(월평균 이용료 100여만 원)으로 구성된 연계계좌군(45명, 137개 계좌)이 ㉠㉡㉢ 등 5개 종목<sup>3)</sup>의 주식을 선매집한 후 연계계좌 간 종가조작, 가장·통정매매, 허수성 매매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은 시세상승기간 동

2) 2007년부터 ‘□□’라는 필명으로 <K>에서 증권 전문가로서 방송을 진행

3)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안 간헐적으로 해당 종목을 매수추천함으로써 시세조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움(아래 [사례] 참조)을 주면서, 주가가 목표가격에 도달하면 연계군의 보유주식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수추천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매집물량이 고가에 매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114억여 원 상당의 부당 매매차익을 얻은 지능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그림] 참조)를 적발<sup>4)</sup>하였다.

[그림]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사례(☐○○)



#### ■ ■ ■ 이 실제 상황과 반대로 추천한 사례]

- 2011. 3. 3. ☐○○ 주식은 898,698주까지 보유한 후 매도하여 2011. 3. 25. 533,361주로 감소한 상태에서 2011. 3. 27. 22시 8분경 ■■■은 다음과 같이 방송

" ~ 우리 방(카페, VIP회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중략) 카페 회원들한테 15,000~16,000원에서 무조건 사라고 문자 드렸죠. 저를 믿고 따르시는 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꼭 말로 해야 하나. 단기 목표가 21,000원, 목표가 23,000원, 손절가는 카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 사람은 익일(월요일) 장중에 310,174주(약 5,870백만 원)를 순매도

4) 한국거래소는 2011. 7. 22. ■■■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금융감독원에 통보

또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시장감시 활동을 계기로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인터넷상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증권사이트에 대한 현황(회원가입 규모, 월가입 회비 등)을 조사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문제점과 경각심을 고취하였으며, 한국거래소 내부적으로 시장감시 세미나, 감시·심리 합동세미나 등을 통해 위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시장감시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 감 사 원

## 통보(모범사례)

제 목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으로 주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본사

모 범 부 서 투자서비스본부 증권대행팀

모 범 내 용

한국예탁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 에서 주권 발행회사와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 대리인으로서 주주명부 작성·관리 등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업무, 유가증권의 발행·교부업무 등 유가증권 발행 대행업무 및 배당금 지급통지서 작성·발송 등 배당금 지급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 등 발행회사와 결제원 사이에 체결한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에 따라 유·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 등의 사유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교부일에 증권회사의 거래계좌가 있는 주주의 주권(주식)은 증권회사로 입고시키고 거래계좌가 없는 주주의 주권(주식)은 주주가 청구했을 때 지급하며 미지급분(미수령주식)은 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관서 증권대행팀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휴면주식 주주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sup>1)</sup>하

1)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캠페인 행사기간은 2009. 5. 1.~8. 31.(4개월), 2010. 7. 26.~9. 8.(7주), 2011. 8. 29.~9. 30.(5주)

면서 [표 1]과 같이 주주명부상의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달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지로 미교부 주식명세와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표 1] 연도별 미수령 주식 통지 현황

(단위: 명)

연 도	통지 기준	행정안전부에 주소의뢰하여 확인한 개인주주	실제 통지한 개인 및 법인주주
2009년	50주 이상 보유자	6,281	6,281
2010년	주식시가 10만 원 이상 보유자	14,702	15,134
2011년	주식시가 5만 원 이상 보유자	16,026	15,609

주: 1. 2011년의 통지기준은 한국에탁결제원 방문 시 발생하는 왕복 교통비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

2. 2011년에는 행정안전부에 주소의뢰한 후 캠페인 행사 전인 같은 해 7월과 8월에 주식을 교부한 주주는 제외하고 발송

자료: 한국에탁결제원

그리고 신문·방송사 등 언론을 활용하여 2009년 32회, 2010년 60회, 2011년 76회 보도자료 등으로 홍보를 하였고, 미수령 주식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미수령 주식을 확인·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 및 ☆☆은행 등 주식업무대행 기관에도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은행은 2010년 11월, ○○은행은 2011년 9월에 위 캠페인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혜자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2011년 캠페인 기간 중 평상시 홈페이지 주식조회시스템을 100라인에서 1,000라인으로 확대(179,863건 조회)하였고, 일반업무를 취급하는 상설창구 이외에 별도의 전용 콜센터를 운영(5,945건 상담)하였으며 기존 채용한 인턴사원 6명을 활용하여 미수령 주식 전용창구를 설치함으로써 고객의 주권 교부처리 시간을 줄이는 등 이용자의 편의까지 배려하였다.

그 결과 [표 2] 및 [사례]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권 교부일로부터 미수령 기간이 3년을 초과<sup>2)</sup>한 주주 계 1,704명(주식 수 30,918주)에게 941억 원 상당의 주식을 찾아주는 등 주주들이 주식 보유사실을 알지 못해 매각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휴면주식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어 미수령 주식소유 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표 2] 연도별 캠페인 효과

(단위: 명, 주, 억 원)

연도	캠페인기간 중 총 교부실적			한국예탁결제원 보유기간 3년 이내 주권 교부실적			캠페인 효과 <sup>주)</sup> (한국예탁결제원 보유기간 3년 초과 주권 교부실적)		
	주주	주식	시가	주주	주식	시가	주주	주식	시가
2009년	1,745	75,458	2,253	1,483	64,139	1,915	262	11,319	338
2010년	3,012	92,547	2,911	2,560	78,665	2,474	452	13,882	437
2011년	1,776	77,870	1,060	786	72,153	894	990	5,717	166
합계	6,533	245,875	6,224	4,829	214,957	5,283	1,704	30,918	941

주: 2011년은 실제 보유기간을, 2009년과 2010년은 보유기간 관련 자료가 없어 3년 초과 경험률(15%)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재구성

### [ 사 례 ]

- 2011년 캠페인 기간 중 ☆☆☆(서울 양천구 거주)는 1982년(날짜 모름) □□주식회사 근무 당시 우리사주 600주를 구입한 후 주식소유 사실을 잊고 있다가 30년이 지나 결제원의 안내문을 받고 무상배당을 받은 주식 등을 포함하여 120백만 원 상당의 주식 및 배당금을 수령

**조치할 사항**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 부서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2) 주권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82%, 3년 이내에 85%를 교부받는 등 3년 이내에 대부분을 찾아가므로 교부일로부터 3년 초과한 주권이 캠페인 기간 내에 교부되는 것은 미수령 주식 보유사실을 잊거나 모르고 있던 주주에게 재산을 찾아주거나 최소한 통상 주주의 주권 수령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감 사 원

## 주의요구·통보

제 목 조건부매도증권 의무예탁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원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15조 및 제4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금 수신을 위해 증권매매를 할 때 일정기간 경과 후 일정가격으로 해당 증권을 다시 매수(매도)하는 조건으로 투자매매업자와 일반법인 또는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인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도·감독하고 그에 따른 제재를 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규정」(이하 “위 규정”이라 한다) 제5-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sup>1)</sup> 등의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조건부매매 업무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위탁을 받거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건부매도증권을 보관·관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관리하고 있는 조건부매도증권 전부에 대하여 투자자 예탁분임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하

---

1) 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여야 하며, 매 영업일마다 투자자별로 산정한 조건부매도증권의 시장가액을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이하 “의무예탁비율”이라 한다)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규정 제5-21조 제4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조건부매도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투자자 예탁분에 보충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고객분 조건부매도증권을 투자자 예탁분<sup>2)</sup>으로 예탁하도록 하면서 의무예탁비율을 둔 취지는 금융투자업자가 조건부매도증권을 환매수하지 못할 위험을 최소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조건부매매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조건부매매거래를 한 금융투자업자가 영업마감 후 또는 영업시간 중에도 조건부 매도증권 환매수가액의 105% 이상을 결제원에 예탁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 조건부 매매 거래를 하는 49개 금융투자업자가 매 영업일 영업마감 후 의무예탁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표 1] “영업마감 후 의무예탁비율 미준수 명세”와 같이 □□□증권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증권”이라 한다)는 2011. 3. 31. 영업마감 후 조건부매도증권 잔량(환매가액 5조 9,683억여 원)에 대하여 의무예탁비율 준수를 위해 6조 2,667억여 원(환매가액의 105%) 이상의 증권을 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하는데도 이보다 2,294억여 원 적은 6조 372억여 원

2) 대고객 조건부매도증권은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거래로서 해당 증권은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보관·관리하며 매도자가 매도하여 결제원에 예탁한 경우 투자자 예탁분 계좌로 들어가고 해당 증권을 환매수한 경우 자기예탁분 계좌로 대체됨

상당의 증권만을 예탁<sup>3)</sup>하는 등 7개 금융투자업자는 총 53회(일자별 의무예탁 부족금액 계 2조 8,350억여 원)에 걸쳐 의무예탁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위 49개 금융투자업자가 영업시간 중에 조건부매도증권 의무예탁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 결과, ☆☆☆증권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증권”이라 한다)는 [표 1]과 같이 2009. 4. 16.부터 2011. 10. 31.까지의 기간(영업일수 633일) 중 628일<sup>4)</sup>에 걸쳐 영업시작 전(7:00~09:00) 또는 영업시간 중에 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투자자 예탁증권 전액(최소 3,180억여 원, 최대 1조 2,971억여 원)을 임의로 자사의 계좌로 이체한 후, 영업마감(16:00) 이후에야 투자자 예탁계좌에 다시 이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등 영업시간 중에는 사실상 투자자 자산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표 1] ☆☆☆증권의 투자자 예탁증권 무단이체 현황

(단위: 일, 억 원)

구분	07:00~09:00		09:00~10:00		10:00~15:00		15:00~16:00		총계	
	일수	대체금액	일수	대체금액	일수	대체금액	일수	대체금액	일수	대체금액
2009년	166	713,974	12	22,370	3	11,163	0	0	181	747,507
2010년	240	1,439,786	3	21,347	1	4,578	1	7,662	245	1,473,373
2011년	176	1,664,315	20	180,060	6	52,754	0	0	202	1,897,129
총계	582	3,818,076	35	223,777	10	68,495	1	7,662	628	4,118,012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및 ☆☆☆증권 자료 재구성

더욱이 위 ☆☆☆증권은 [별표 2] “☆☆☆증권의 영업시간 마감 후 미예탁 명세”와 같이 2009. 7. 13.부터 2011. 9. 30.까지 5차례에 걸쳐서 투자자 예탁증권을 자사계좌로 전량 이체한 후 이를 다음 날 영업종료 후(18:00~21:00)에야 의무예탁비율만큼 예탁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증권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3) □□증권은 익일 영업시작 전에 전일 조건부매도증권 환매수가액에 대하여 의무예탁비율만큼 예탁

4) 전일 증권을 예탁하지 않아 다음날 대체할 증권이 없는 경우인 5일 제외

경우에도 [표 2]과 같이 2011. 10. 4. 11:00에 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할 조건부매도증권 2,255억 원의 10.43%(235억여 원)만 남겨놓고 2,390억 원(10:00의 예탁잔액 2,625억 원-235억 원)을 자사계좌로 대체한 후 16:00까지는 조건부매도증권 잔량의 8.96~10.43%만 결제원에 예탁하는 등 2010. 8. 2.부터 2011. 10. 28.까지의 기간(영업일수 311일) 중 [표 3]와 같이 조건부매도증권 잔량의 50% 이상 미달되게 예탁하고 있는 영업일이 257일, 90% 이상 미달되게 예탁한 영업일도 73일이나 되었다.

[표 2] ○○○증권의 시간대별 계좌 임의대체 현황(2011. 10. 4.)

(단위: 억 원, %)

구 분	7:00 ~8:00	8:00 ~9:00	9:00 ~10:00	10:00 ~11:00	11:00 ~12:00	12:00 ~13:00	13:00 ~14:00	14:00 ~15:00	15:00 ~16:00	16:00 ~17:00	17:00 ~18:00	18:00 ~
예탁원예탁잔액(A)	2,625	2,625	2,625	235	235	235	235	235	235	2,625	2,625	2,625
매도잔량시기(B)	2,625	1,355	1,355	2,255	2,255	2,255	2,255	2,625	2,625	2,625	2,625	2,625
예탁비율(A/B)	100	193.71	193.71	10.43	10.43	10.43	10.43	8.96	8.96	100	100	100
예탁부족액(C=A-B)	0	1,270	1,270	(2,020)	(2,020)	(2,020)	(2,020)	(2,390)	(2,390)	0	0	0
예탁부족비율(C/B)	0.00	93.71	93.71	(89.57)	(89.57)	(89.57)	(89.57)	(91.04)	(91.04)	0.00	0.00	0.00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및 ○○○증권 자료 재구성

[표 3] ○○○증권의 조건부 매도증권 부족 예탁 현황

(단위: 일, 억 원)

구분	50~70% 부족		70~90% 부족		90~100% 부족		총계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2010년	42	65,074	18	45,033	7	21,631	67	131,738
2011년	13	22,284	111	253,656	66	180,725	190	456,665
총계	55	87,358	129	298,689	73	202,356	257	588,403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및 ○○○증권 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금융투자업자가 조건부 매매거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업마감 후 또는 영업시간 중 의무예탁비율만큼의 조건부 매매증권을 결제원에 예탁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조건부 매매거래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 예탁

증권 가액이 환매수가액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업자의 부도 및 파산 등이 갑자기 발생할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조건부매도증권 환매신청에 대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하면서 의무예탁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증권주식회사 등 9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등에 따라 적정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금융투자업자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하면서 투자자 보호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의무예탁비율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영업마감 후 의무에탁비율 미준수 명세

(단위 : 백만 원, %)

번호	날 짜	투자매매업자명	환매가액(A)	에탁금 평가액(B)	의무에탁금액 (C=A×105%)	의무에탁부족 금액(D=C-B)	에탁비율 (B/A)	의무에탁 미달비율(D/A)
1	2010.10.1.	□□□증권	4,689,077	4,902,318	4,923,531	21,213	104.55	0.45
2	2010.10.8.	"	4,839,524	5,027,148	5,081,501	54,353	103.88	1.12
3	2010.10.21.	"	5,288,237	5,549,753	5,552,649	2,896	104.95	0.05
4	2010.10.25.	"	5,294,508	5,553,967	5,559,233	5,266	104.90	0.10
5	2010.10.29.	"	5,429,107	5,655,689	5,700,562	44,874	104.17	0.83
6	2010.11.9.	"	5,606,017	5,885,606	5,886,318	712	104.99	0.01
7	2010.11.26.	"	5,563,630	5,809,156	5,841,811	32,655	104.41	0.59
8	2010.12.24.	"	5,840,945	6,129,322	6,132,992	3,670	104.94	0.06
9	2010.12.31.	"	5,798,252	6,056,283	6,088,164	31,881	104.45	0.55
10	2011.1.12.	"	5,794,553	6,064,849	6,084,281	19,432	104.66	0.34
11	2011.3.31.	"	5,968,354	6,037,299	6,266,772	229,473	101.16	3.84
12	2011.4.18.	"	6,057,492	6,244,438	6,360,367	115,929	103.09	1.91
13	2011.4.22.	"	5,687,978	5,972,312	5,972,376	64	105.00	0.00
14	2011.4.29.	"	5,630,256	5,811,290	5,911,768	100,478	103.22	1.78
15	2011.5.13.	"	5,557,374	5,831,294	5,835,243	3,949	104.93	0.07
16	2011.5.31.	"	5,366,668	5,557,169	5,635,001	77,832	103.55	1.45
17	2011.6.9.	"	5,562,465	5,768,377	5,840,588	72,211	103.70	1.30
18	2011.6.10.	"	5,380,740	5,542,785	5,649,777	106,992	103.01	1.99
19	2011.6.15.	"	5,429,658	5,681,758	5,701,141	19,382	104.64	0.36
20	2011.6.20.	"	5,398,911	5,619,863	5,668,856	48,993	104.09	0.91
21	2011.6.29.	"	5,154,672	5,306,282	5,412,406	106,124	102.94	2.06
22	2011.6.30.	"	4,882,873	5,020,861	5,127,016	106,156	102.83	2.17
23	2011.7.1.	"	4,810,938	5,021,553	5,051,485	29,932	104.38	0.62
24	2011.7.7.	"	4,812,097	5,017,216	5,052,702	35,486	104.26	0.74
25	2011.7.12.	"	4,780,815	4,872,865	5,019,855	146,990	101.93	3.07
26	2011.7.21.	"	4,934,923	5,081,512	5,181,669	100,157	102.97	2.03
27	2011.7.26.	"	4,765,074	4,860,313	5,003,328	143,015	102.00	3.00
28	2011.7.29.	"	4,912,593	5,155,924	5,158,223	2,299	104.95	0.05
29	2011.8.8.	"	4,880,164	5,090,429	5,124,172	33,744	104.31	0.69
30	2011.8.9.	"	4,896,701	5,130,955	5,141,536	10,581	104.78	0.22

번호	날 짜	투자매매업자명	환매가액(A)	예탁금 평가액(B)	의무예탁금액 (C=A×105%)	의무예탁부족 금액(D=C-B)	예탁비율 (B/A)	의무예탁 미달비율(D/A)
31	2011.8.11.	□□□증권	4,794,009	4,897,411	5,033,710	136,298	102.16	2.84
32	2011.8.23.	"	4,944,063	5,093,580	5,191,266	97,686	103.02	1.98
33	2011.8.26.	"	5,054,772	5,249,801	5,307,511	57,710	103.86	1.14
34	2011.8.30.	"	4,909,167	5,132,141	5,154,625	22,484	104.54	0.46
35	2011.8.31.	"	4,901,694	5,119,325	5,146,779	27,453	104.44	0.56
36	2011.9.8.	"	5,044,213	5,208,385	5,296,423	88,038	103.25	1.75
37	2011.9.9.	"	4,952,507	5,149,143	5,200,133	50,990	103.97	1.03
38	2011.9.15.	"	4,931,545	5,079,580	5,178,122	98,542	103.00	2.00
39	2011.9.22.	"	5,059,849	5,248,673	5,312,842	64,169	103.73	1.27
40	2011.9.27.	"	4,983,504	5,109,767	5,232,680	122,913	102.53	2.47
소계	40회	□□□증권 계	208,589,919	216,546,392	219,019,414	2,473,022		
41	2010.12.23.	△△△투자	859,610	883,959	902,591	18,631	102.83	2.17
42	2011.4.8.	"	843,614	875,423	885,795	10,372	103.77	1.23
43	2011.4.7.	"	838,358	867,831	880,276	12,445	103.52	1.48
44	2011.1.25.	"	839,529	880,019	881,506	1,487	104.82	0.18
소계	4회	△△△투자 계	3,381,111	3,507,232	3,550,168	42,935		
45	2011.6.2.	△△△증권	1,376,389	1,427,668	1,445,209	17,541	103.73	1.27
46	2011.6.29.	"	1,329,908	1,345,349	1,396,404	51,054	101.16	3.84
47	2011.5.12.	"	1,075,180	1,093,446	1,128,939	35,493	101.70	3.30
소계	3회	△△△증권 계	3,781,477	3,866,463	3,970,552	104,088		
48	2011.8.10.	▣▣▣증권	2,192,573	2,290,939	2,302,201	11,263	104.49	0.51
49	2011.1.20.	"	2,197,991	2,260,154	2,307,890	47,736	102.83	2.17
소계	2회	▣▣▣증권 계	4,390,564	4,551,093	4,610,091	58,999		
50	2010.10.22.	▤▤▤	3,035,500	3,186,403	3,187,275	872	104.97	0.03
51	2010.10.21.	"	3,024,600	3,063,533	3,175,830	112,297	101.29	3.71
소계	2회	▤▤▤ 계	6,060,100	6,249,936	6,363,105	113,169		
52	2011.1.20.	▥▥▥증권	1,849,514	1,902,965	1,941,990	39,025	102.89	2.11
소계	1회	▥▥▥증권 계	1,849,514	1,902,965	1,941,990	39,025		
53	2011.4.5.	▦▦▦증권	81,038	81,274	85,090	3,815	100.29	4.71
소계	1회	▦▦▦증권 계	81,038	81,274	85,090	3,815		
총계	53회		228,133,723	236,705,355	239,540,410	2,835,053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제구성

[별표 2]

☆☆☆증권의 영업시간 마감 후 미예탁 명세

(금액단위: 억 원)

연월일	일자	구 분	07:00 ~ 08:00	08:00 ~ 09:00	09:00 ~ 10:00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19:00 ~ 20:00
1	2009. 7.13.	예탁잔액	3,663	0	0	0	0	0	0	0	0	0	0	0	0
		매도잔량시장가액	3,368	3,303	3,366	3,364	3,362	3,359	3,349	3,470	3,477	3,535	3,535	3,535	3,535
		예탁부족액	295	(3,303)	(3,366)	(3,364)	(3,362)	(3,359)	(3,349)	(3,470)	(3,477)	(3,535)	(3,535)	(3,535)	(3,535)
	2009. 7.14.	예탁잔액	0	0	0	0	0	0	0	0	0	0	0	3,790	3,790
		매도잔량시장가액	3,422	3,398	3,395	3,392	3,391	3,387	3,384	3,526	3,589	3,628	3,628	3,628	3,628
		예탁 부족액	(3,422)	(3,398)	(3,395)	(3,392)	(3,391)	(3,387)	(3,384)	(3,526)	(3,589)	(3,628)	(3,628)	162	162
2	2010. 5.13.	예탁잔액	5,250	0	0	0	0	0	0	0	0	0	0	0	0
		매도잔량시장가액	3,881	3,583	3,585	4,782	4,782	4,726	4,958	5,054	5,211	9,263	9,262	9,261	9,261
		예탁 부족액	1,369	(3,583)	(3,585)	(4,782)	(4,782)	(4,726)	(4,958)	(5,054)	(5,211)	(9,263)	(9,262)	(9,261)	(9,261)
	2010. 5.14.	예탁잔액	0	0	0	0	0	0	0	0	0	0	5,278	5,278	5,278
		매도잔량시장가액	7,862	3,820	5,006	5,085	4,981	4,974	4,975	5,095	5,173	5,219	5,219	5,219	5,219
		예탁 부족액	(7,862)	(3,820)	(5,006)	(5,085)	(4,981)	(4,974)	(4,975)	(5,095)	(5,173)	(5,219)	59	59	59
3	2010. 5.24.	예탁잔액	5,231	0	0	0	0	0	0	0	0	0	0	0	0
		매도잔량시장가액	3,602	3,576	4,773	4,784	4,776	4,756	4,989	5,093	5,652	5,726	5,726	5,725	5,725
		예탁 부족액	1,629	(3,576)	(4,773)	(4,784)	(4,776)	(4,756)	(4,989)	(5,093)	(5,652)	(5,726)	(5,726)	(5,725)	(5,725)
	2010. 5.25.	예탁잔액	0	0	0	0	0	0	0	0	0	0	0	0	5,202
		매도잔량시장가액	5,582	3,453	4,775	4,771	4,769	4,756	4,628	5,078	5,083	5,141	5,140	5,140	5,140
		예탁 부족액	(5,582)	(3,453)	(4,775)	(4,771)	(4,769)	(4,756)	(4,628)	(5,078)	(5,083)	(5,141)	(5,140)	(5,140)	62
4	2010. 5.31.	예탁잔액	0 <sup>(P)</sup>	0	0	0	0	0	0	0	0	0	0	0	0
		매도잔량시장가액	4,933	3,283	3,258	4,846	4,837	4,836	4,836	4,882	4,919	4,982	4,982	4,982	4,982
		예탁 부족액	(4,933)	(3,283)	(3,258)	(4,846)	(4,837)	(4,836)	(4,836)	(4,882)	(4,919)	(4,982)	(4,982)	(4,982)	(4,982)
	2010. 6.1.	예탁잔액	0	0	0	0	0	0	0	0	0	0	0	0	5,226
		매도잔량시장가액	3,302	3,267	3,261	3,258	3,254	4,773	4,790	4,856	5,134	5,163	5,163	5,163	5,163
		예탁 부족액	(3,302)	(3,267)	(3,261)	(3,258)	(3,254)	(4,773)	(4,790)	(4,856)	(5,134)	(5,163)	(5,163)	(5,163)	63
5	2011. 9.29.	예탁잔액	11,467	11,467	0	0	0	0	0	0	0	0	0	0	0
		매도잔량시장가액	12,194	11,592	2,486	3,484	3,483	7,680	10,987	10,996	11,109	11,434	11,434	11,434	11,434
		예탁 부족액	(727)	(125)	(2,486)	(3,484)	(3,483)	(7,680)	(10,987)	(10,996)	(11,109)	(11,434)	(11,434)	(11,434)	(11,434)
	2011. 9.30.	예탁잔액	0	0	0	0	0	0	0	0	0	0	0	9,920	9,920
		매도잔량시장가액	3,899	3,881	3,879	5,681	5,680	5,675	9,676	10,189	11,692	11,943	11,942	11,942	11,942
		예탁 부족액	(3,899)	(3,881)	(3,879)	(5,681)	(5,680)	(5,675)	(9,676)	(10,189)	(11,692)	(11,943)	(11,942)	(2,022)	(2,022)

주: 7:00~08:00에 5,131억 원을 자기에탁분계좌로 대체함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및 ☆☆☆증권 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한국거래소 등에 대한 수수료 인하 지도·감독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sup>1)</sup> 등을 통하여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거래·예탁 관련 수수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94조, 제373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업무 및 증권 예탁·결제업무를 각각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별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체계”와 같이 거래 수수료(거래대금의 0.00329%)와 예탁·결제수수료(거래대금의 0.00133%)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2010년 3월 금융위원회에 i) 거래소와 결제원의 최저보장 영업이익률을 정한 후 특정 연도에 수수료가 ‘최저보장 영업수익’을 초과할 경우 연말까지 수수료 징수를 면제하거나 다음 해 수수료율을 더욱 낮추는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ii) 시장효율화위원회가 위 기관에서 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된 심의기구로서 금융·법률·회계 및 전산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국거래소 등에서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전산에 대하여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자 할 때는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수수료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만 이를 심의<sup>2)</sup>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위원회가 거래소와 예탁원의 수수료 징수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iii) 절감 가능한 영업비용 및 영업외이익 등을 수수료 감축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증권거래 관련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도록 통보<sup>3)</sup>하였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거래소와 결제원의 최저보장 영업이익률을 정하고,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의 증권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수료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와 결제원에서 2010년 10월에서야 공동으로 컨설팅업체인 ◇◇◇에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용역<sup>4)</sup>을 발주한 후, 2010년에 주식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각각 3,256억 원(영업이익률 41%), 1,301억 원(영업이익률 43%)의 과도한 수수료 수입 및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서도 위 연구용역을 핑계로 2010년 연말에는 아무런 한시적 수수료 면제 조치<sup>5)</sup>를 취하지 않았고 감사원 처분요구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2011년

2) 이에 따라 두 기관이 수익 감소로 연결되는 수수료 인하안을 자발적으로 시장효율화위원회에 부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실정

3) 증권거래 운영실태 감사결과(감사기간: 2009. 10. 29. ~ 같은 해 12. 3.), ① 금융위원회가 2010. 1. 4.부터 적용할 예정인 수수료 인하방안(각각 17.3%, 16.7%)이 위 2개 기관의 영업외이익 및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미흡한 수준이므로 향후 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② 거래소와 결제원에도 최저보장 영업이익률, 영업외이익, 이익잉여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거나 일정기간 징수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함

4) “미래 경영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재무관리 방안”(계약기간: 2010. 11. 26. ~ 2011. 4. 25. 계약금액: 3억 원), 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거래소의 경우 중·장기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약 28~33%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결제원의 경우 중·장기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약 25~30%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에게 환급금을 제공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수수료 통제가 필요하다는 감사원 처분요구에 부합하지 않음

5) 거래소와 예탁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2011. 10. 24.과 같은 해 10. 27.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한시

10월 말까지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또한 위 기관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최저보장 영업이익률을 정하도록 통보 하였을 뿐, 시장효율화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거래소와 결제원의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받은 후에도 수수료 인하 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10년도에 주식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거래소와 결제원은 거래수수료를 각각 3,256억 원, 1,301억 원, 당기순이익을 각각 2,839억 원, 1,151억 원을 얻었고,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거래 수수료 수입 3,035억 원, 1,142억 원)을 얻고 있다.

[표 1]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수수료 수입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거래소	예탁원	거래소	예탁원	거래소	예탁원	거래소	예탁원	거래소	예탁원	거래소	예탁원	거래소	예탁원
거래수수료	17,708	7,350	2,646	1,023	2,591	1,086	3,776	1,479	2,372	1,119	3,067	1,342	3,256	1,301
영업이익률	37.8	36.5	37.3	28.0	35.7	28.2	50.2	42.3	24.9	31.8	36.8	45.5	41.6	43.2
당기순이익	9,616	4,715	954	237	784	749	1,592	921	1,502	688	1,945	969	2,839	1,151

주: 1. 거래소와 예탁원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영업이익률은 각각 34.4%, 40.1%

2. 영업이익률 합계는 6년 평균 수치임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편 유사업종인 증권·선물업의 최근 3년(2008~2010년) 평균영업이익률은 6.06%에 불과한데도 거래소와 결제원의 최근 3년 평균영업이익률은 각각 34.4%, 40.1%로 증권·선물업보다 약 5~6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시행

6)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거래소 34.3%, 결제원 23% 증가

또한, 과도한 수수료 수입에 따른 거래소와 결제원의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도 [표 2]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중은행 및 증권회사에 비해 2.4배 내지 6배 많았다.

[표 2]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시중은행 등의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 원,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당기 순이익	직원 수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	당기 순이익	직원 수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	당기순 이익	직원 수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
한국거래소	1,502	707	2.12	1,944	699	2.78	2,839	682	4.16
한국예탁결제원	688	450	1.53	969	459	2.11	1,151	471	2.44
시중은행(평균)	8,865	14,744	0.60	6,645	14,788	0.45	10,085	14,041	0.72
증권회사(평균)	1,143	2,647	0.43	2,025	2,749	0.74	1,887	2,779	0.68

주: 1. 시중은행은 □□, □□, □□, □□, □□은행

2. 증권회사는 ■■■, ■■■, ■■■, ■■■, ■■■, ■■■, ■■■ 등 매출액 기준 상위 7개사

그리고 거래소는 위와 같은 과도한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표 3]과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보다 약 12.3~16.2% 포인트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고, 배당금 총액도 3년간 평균 49.4% 증가<sup>7)</sup>하였다.

[표 3] 한국거래소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배당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당기 순이익	배당금 총액	배당 성향	당기 순이익	배당금 총액	배당 성향	당기 순이익	배당금 총액	배당 성향
한국거래소	1,502	529	35.2	1,945	674	34.7	2,839	812	28.6
유가증권시장	432,352	86,601	20.0	580,406	107,510	18.5	829,866	134,882	16.3
상장법인 증권회사	12,687	4,100	32.3	18,447	5,273	28.6	17,018	5,126	30.1

주: 1. 배당성향=배당금총액/당기순이익\*100

2. 2007년 한국거래소 배당금 총액은 327억 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배당금 총액은 139,162억 원(증권회사 7,099억 원)

자료: 한국거래소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최저보장 영업이익률을 정하고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7)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3년간 연평균 1% 감소

마련하는 등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징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한국거래소와 한국에탁결제원의 수수료 체계(2011년 9월 말 기준)

가. 한국거래소

수수료 종류	시장	종목	징수기준
거래 수수료 <sup>1)</sup>	유가 증권	주식·수익증권	거래대금×0.00329%
		신주인수권 증권·증서	
		ETF <sup>2)3)</sup> , ELW <sup>2)</sup>	
	채권	국채 <sup>4)</sup>	거래대금×0.0001265%
		REPO <sup>5)</sup>	(거래수수료) 2,560원+0.00001536%×기간 (청산결제수수료) 400원+0.0000024%×기간
		일반채권 <sup>6)</sup>	거래대금×0.0051785%
	코스닥	주식·수익증권	거래대금×0.00329%
		코스닥ETF	
	선물	KOSPI200선물	약정대금×0.00030364%
		주식선물 <sup>6)</sup>	약정대금×0.0018981%
		3·5·10년 <sup>6)</sup> 국채선물	약정대금×0.000202%
		돈육선물	약정대금×0.0051874%
		미국달러선물	(거래체결 시) 약정대금×0.0003818% (최종결제 시) 약정대금×0.0007636%
		엔선물	(거래체결 시) 약정대금×0.0004025% (최종결제 시) 약정대금×0.0008051%
		유로선물	(거래체결 시) 약정대금×0.0002738% (최종결제 시) 약정대금×0.0005476%
		금선물	(거래체결 시) 약정대금×0.0007363% (최종결제 시) 약정대금×0.0014726%
	옵션	KOSPI 200 옵션	약정대금×0.012654%
		미국달러옵션	(거래체결 시) 약정대금×0.012654% (행사배정 시) 약정대금×0.0007636%
상장 수수료	유가증권	상장수수료	상장금액, 상장자본금 등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체계를 가짐
		연부과금	
	채권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코스닥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정보 이용료	현물 및 지수선물	시세정보 등 원시정보	코스콤 원시정보 수익의 34.46%
		시세정보 등 가공정보	코스콤 가공정보 수익의 10%
	상품선물 등	상품선물 및 지수라이선스	KRX가 직접 판매한 수익

주: 1. 거래수수료 체계 개편(2010. 1. 4.)에 따라 청산결제수수료 포함(프로세스이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별도 정액 징수)

2. 2005. 12. 1.부터 유동성공급자(LP) 거래수수료 면제(ETF, ELW, 저유동성 주식)

3. 2012. 1. 2.부터 2012. 12. 28.까지 주식형 레버리지 및 인버스ETF를 제외한 모든 ETF 수수료 면제

4. 2006. 7. 14.부터 장내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면제

5. 2010. 1. 1.부터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면제

6. 2006. 12. 18.부터 시장조성자 거래수수료 일부 환급(파생상품시장 신상품 및 유동성관리품목)

자료: 한국거래소

# 나. 한국에탁결제원

수수료		부과대상	기 준	요 율	
발행 서비스	증권대행수수료	위탁회사	자본금	- 기본수수료 126만 원 ~ 7백만 원(개별수수료는 서비스별 차등 부과)	
	채권등록수수료	발행회사	발행금액	- 채권: 1억 원당 0.1만 원 ~ (최대 50만 원)	
	파생상품발행대행수수료	발행회사	발행건	- 발행 건당 1~3만 원 (타 대행은 1.5~4.5만 원)	
	증권용지관리수수료	발행회사	용지별 발행매수	- 주식: 214.1원 / 수익증권: 1,281.74원 - 신주인수권증서: 270.2원	
에탁결제 서비스	증권회사수수료	증권회사	거래대금, 결제건수	- 주식: 0.1333/10,000(신주인수권증서, ELW, ETF, KDR 포함) - 채권: 0.0171/10,000 - 결제 건: 건당 5백 원	
	에탁수수료	에탁자	일별 계좌잔량, 계좌대체건수	- 주식: 주당 0.00125원~0.00075원(액면 5천 원당 1주) - 채권: 1만 원당 0.00125원~0.00075원(CP, DR, ETF 포함) - 계좌대체 건: 건당 1천 원(인도 측만 부과)	
	주식워런트증권수수료	에탁자	발행금액	- 납입금액의 1/10,000	
	금보관수수료	임치인	일별보관잔량	- 1kg당 1천 원~150원 - 참고증권발행 시: 1매당 2.5천 원	
	보호예수수수료	보호예수 의뢰인	일별보관잔량	- 기본수수료: 의뢰 건당 1백 원 - 주식: 주당 0.01원(액면 5천 원당 1주) - 채권: 1만 원당 0.01원	
	국내교환주식관리수수료	발행회사	발행금액	- 교환사채 총액의 5/10,000	
	의결권행사수수료	에탁자	행사 건수	- 상임대리인: 신청 건당 15만 원+외국인 주주별 1만 원 - 발행회사: 신청 건당 10만 원 - 전자투표: 1억 원당 2만 원~0.5만 원	
	정보이용수수료	정보이용자	상품별 제공정보	- 주식정보: 50만 원~150만 원/월 - 채권정보: 50만 원~100만 원/월	
기관투자자채권결제수수료	채권결제참가자	거래대금	- 1억 원당 20원~100원		
파생거래 지원 서비스	대차중개수수료	차입자, 대여자	대차수수료	- 대차수수료의 2%(수수료가 1% 이하일 경우 대차증권가액의 2/10,000)	
	대용증권관리수수료	선물회원	대용가액	- 매 영업일 대용가액 1억 원당 220원	
	조건부매매(Repo) 수수료	매매참가자, 중개회사	거래대금	- 기관 Repo: 1억 원당 20원 - 대고객 Repo: 1억 원당 2원 (거래기간 1일 미만은 1억 원당 10원)	
	담보콜거래관리수수료	차입자, 대여자	거래대금	- 1억 원당 20원	
	장외파생상품담보관리 수수료	담보권자, 설정권자	담보관리금액	- 1억 원당 일별 20원(정부정책 참가자 1억 원당 2원)	
	고객담보관리수수료	담보권자	담보증권가액	- 연간 3/10,000	
국제 투자자 지원 서비스	해외 증권 관리 수수료	교환주식관리	발행회사	발행금액	- 1천만 \$ 이상: 연간 1/10,000 - 1천만 \$ 미만: 연간 1천 \$
		외화증권관리 수수료	발행사, 권리행사자	정액	- 연간 3백만 원
		오프라인	기관투자자	일별잔량	- 주식: 월평균 시장가치의 3/10,000 - 채권: 월평균 액면가격의 2/10,000
		HTS	증권회사	결제건수	- 건당 5.5\$
	KDR업무수수료	발행회사, 투자자	발행금액/증서 수	- 발행수수료: 증서당 3원~16원 - 전환해지수수료: 1DR당 30원~50원	
	DR관리수수료	해외에탁기관	DR발행 및 해지수수료	- 해외에탁기관 수수료 수입의 일정비율 정수(BONY, JP MORGAN: 16%, 도이치: 20%, CITI: 250만 \$까지 20%, 초과분은 10%)	
	Custody수수료	외국법인투자자	보관잔량, 의결권행사 건수	- 보관수수료: 1억 원당 연간 0.002/10,000~0.7/10,000 - 매매결제수수료: 1억 원당 0.005\$~1.5\$ - 권리행사수수료 : 건당 30\$~50\$	
	집합 투자자 지원 서비스	펀드결제수수료	집합투자기구	신탁원본액	- 연간 0.25/10,000
일반사무관리수수료	집합투자기구	순자산 총액 평균	- 연간 0.4~25/10,000		

자료: 한국에탁결제원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해외주권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한국거래소 본사

내 용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글로벌 거래소 및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성장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해외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거래소(이하 “☆☆☆”라 한다)에 원주가 상장(2009년 9월)된 <<국가 기업인 ‘○○○’(이하 “○○○”이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예탁증서(Korea Depositary Receipts, 이하 “KDR”이라 한다)를 거래소 내 유가증권시장에 2차 상장시키는 등 2011년 10월 말 현재 19개 외국기업(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 시장 14개)을 상장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2011. 3. 21. ☆☆☆에 상장된 ○○○의 원주 가격이 장중에 24% 급락하여 같은 날 장 마감 후 원주와 KDR 간의 가격괴리율이 45.37%(원화환산 원주 증가 3,367원, KDR 증가 4,895원)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는 같은 날 18시 4분 당일 주가급락과 관련하여 미공개정보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를 ○○○에 요구하였고, ○○○은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같은 날 19시 33분 원주에 대한 매매거래중단(trading halt)<sup>1)</sup>을 ☆☆☆에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모두 ☆☆☆의 공시시스템(☆☆☆NET)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공시되었다.

한편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에서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 및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거래소는 같은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공시되지 않은 풍문 및 보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풍문 및 보도가 없더라도 주권 가격 및 거래량이 급변한 경우 미공개된 중요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상장법인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거래소는 같은 규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이 조회공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등의 시장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장감시부서, 풍문 및 보도자료 등 수집부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 권한 등이 부여된 취지는 거래소가 상장기업의 공시에만 의존하여 시장을 관리할 경우 상장기업이 공시의무를 해태하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소가 상장기업에 대한 시장정보 등을 수집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한국거래소와 달리 ☆☆☆거래소 공시규정 43조에 따르면 동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기업은 즉시 비정상적인 거래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에 매매거래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장기업의 매매거래중단 요청을 모두 승인하는 것이 관행임(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 상장법인의 매매중단요청 63건이 모두 승인됨)

그런데 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주된 사업장 및 거래처, 현지 법률에 따른 감독당국 등이 해외에 소재하고 주요 경영진 및 공시책임자 등이 국내 공시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국내 상장기업에 비해 공시의무 위반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언론 등을 통해서 해당 기업과 관련된 풍문, 보도내용 등을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과 같이 2차 상장방식으로 국내에 상장된 외국 기업의 원주 가격이 해외 거래소에서 이상 급락했을 때에는 KDR 가격도 연이어 급락하거나 국내에 미공개된 정보가 현지에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거래소는 ○○ 원주의 주가변동 및 이에 따른 ☆☆☆의 ○○ 관련 공시사항 및 현지 언론보도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등으로 ○○이 공시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는 ○○ 원주가 ☆☆☆에서 매매거래 중단된 사실을 ☆☆☆ 공시시스템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에 대한 시장정보 수집을 국내 언론 및 풍문 등에만 의존해 온 결과, 2011. 3. 22. 9시 50분에 ○○의 국내 공시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sup>2)</sup>받을 때까지 이를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10시에서야 뒤늦게 ○○ KDR의 매매거래를 정지하였다.

그 결과 ☆☆☆자산운용주식회사 등 12개 기관투자가 등(29개 계좌)은 같은 날 장 개시 후 1,819,577주(77억 877만 원)의 ○○ KDR을 순매도하여 같은 날 9시 44분에 하한가(4,165원)까지 주가가 급락하였고, 개인투자자들은 ☆☆☆에서

2) 2011. 4. 14. 거래소는 매매거래중단요청 사실을 지연공시한 ○○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을 부과

원주의 매매거래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그대로 매수하게 되는 등 같은 날 10시까지 총 4,039,038주가 거래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3. 22. 위 KDR을 매입한 개인투자자들은 장기간 매매거래정지<sup>3)</sup>로 인해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상장폐지<sup>4)</sup>에 따른 금전적 피해(매입가액-상장폐지 시 정리매매가액)가 우려된다.

**조치할 사항**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주권기업의 공시 지연 등으로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3) ○○은 ☆☆☆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 자회사(△△)의 장부상 은행잔고 내역의 실재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아 감사결과보고서가 확정될 때까지 위 매매거래중단을 매매거래정지(trading suspension)로 전환해줄 것을 2011. 3. 24. ☆☆☆에 요청

4) ○○은 2011. 10. 24.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음에 따라 거래소에서는 ○○ KDR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같은 해 11. 2. ○○의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2. 3. 15.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

# 감 사 원

## 통 보

제 목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제도 운영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한국거래소 본사

내 용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감시규정」 제6조 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8의 규정에 따라 회원사(증권·선물회사 등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주문·호가 및 체결내역 등을 감시·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게 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적출된 주문행위에 대하여 사전경고,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sup>1)</sup>를 하도록 하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장감시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거래소는 회원사가 거래소의 시장감시 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회원의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이하 “감리”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활동이 중요한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제도는 거래소가 허수성 매매주문<sup>2)</sup>, 통정·가장거래<sup>3)</sup> 등과 같은 불공

1) 반복적출 시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 예고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문수탁을 거부하도록 하고, 직전 조치일로부터 3개월 이상 적출되지 않은 계좌는 최초 적출부터 다시 적용

2)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평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정거래 행위의 적출기준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설정<sup>4)</sup>하고 투자자의 주문행위를 가장 가까워서 인지할 수 있는 회원사로 하여금 예방활동을 수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사전 예방수단이다.

하지만 회원사의 경우 투자자의 주문이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되더라도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거래수수료 수입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거래소는 회원사 업무에 대한 감리활동을 수행하면서 위 모니터링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적출된 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장감시 활동<sup>5)</sup>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거래소는 회원사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에 최근 3년간 회원사로부터 수탁거부된 사실이 있는 증권거래계좌에 대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된 내역과 회원사의 조치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총 2,840명이 86,77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되었는데도 이 중 약 19.9%인 17,246건에 대해서만 예방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4) 허수성 매매주문, 가장·통정성 매매주문, 예상가 관여 등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16개 사항으로 구분하여 적출기준을 설정함  
5) 이상거래가 적출된 종목에 대해서 불공정행위 여부 및 시세관여 정도를 심리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

[표 1] 최근 3년간 수탁거부 계좌 중 모니터링 시스템 적출 대비 예방조치 실적

(단위: 명, 개, 건, %)

총 적출인원(A)	계좌 수(B)	1인 평균 계좌 수 (B/A)	적출건수(C)	조치건수(D)	조치율(D/C)
2,840	3,919	1.38	86,777	17,246	19.9

주: 2008. 9. 1. ~ 2011. 9. 30. 사이에 수탁거부된 계좌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 한국거래소

그리고 위 2,840명 중 [표 2]와 같이 허수성 매매주문, 통정·가장거래 등의 사유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200회 이상 적출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감사일 기준 최근 6개월간(2011. 4. 1.~9. 30.)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29명의 투자자가 3,885회에 걸쳐 75억여 원의 허수성 매매주문을 내거나 1,370회에 걸쳐 2억 1,000만 원을 가장거래하는 등 시장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최근 3년간 수탁거부자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적출 건수별 현황

(단위: 명)

적출 건수	300회 이상	200회 이상~ 300회 미만	100회 이상~ 200회 미만	10회 이상~ 100회 미만	10회 미만	계
인원	4	25	121	1,866	824	2,840

자료: 한국거래소

**조치할 사항**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회원사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제도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반복 적출자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감 사 원

## 통 보

제 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 운영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한국거래소 본사

내 용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부실이 확정되면 부실 정도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폐지하고 있는데, 투자자가 기업의 부실이 확정되기 전에 부실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2011. 5. 2. 투자주의 환기종목(이하 “투자주의종목”이라 한다)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1. 투자주의종목 지정 제외 부적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영업·재무·경영 등에 관한 계량적·비계량적 변수 등을 고려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시행세칙 제28조 제1항 [별표 3]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부실점수를 산출하고 거래소가 정하는 임계(한계) 부실점수를 초과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투자주의종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및 투자자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 기업실질을 기초로 상장유지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이하 “상장폐지 실질심사”라 한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주의종목 지정제도’와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각각 규정되어 있고, 각 제도의 운영 취지 및 효과 또한 다르므로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기업이라도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의 임계 부실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부실위험요인을 해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한편 거래소는 2011. 4. 28. ‘투자주의환기종목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코스닥 상장기업 1,011개를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 등에 의해 산출된 임계 부실점수를 300점으로 정한 후 같은 해 5. 2. 이를 초과한 43개 1) 부실위험기업을 선정한 후, 이 중 주식회사 ㉔〇〇 등 2개 기업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에 따라 부실점수가 높게 산출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투자주의종목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㉔〇〇(대표이사 〇〇〇)의 경우 부실점수가 496점(부실순위 46위)으로 위 임계 부실점수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 5개 연도 연속 영업손실<sup>2)</sup>이 발생(2010년 영업손실액 57억여 원, 매출액 72억여 원)하는 등 부실 위

1) 임계 부실점수 300점을 초과한 89개 기업 중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32개)되거나 상장폐지(14개)되어 투자주의종목 지정 실익이 없는 기업을 제외한 수치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경우 당연 상장폐지 사유

험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0. 12. 17.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의 실질심사<sup>3)</sup>에서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상종목<sup>4)</sup>인 중견기업부로 분류하는 등 [표 1]과 같이 2010. 8. 16.<sup>5)</sup>부터 2011. 4. 27.까지 실시한 실질심사에서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8개 기업은 부실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투자주의종목 지정에서 제외하였다.

[표 1] 상장유지 결정 사유로 투자주의종목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명세

(단위: 점, 위)

기업명	실질심사 종료일	부실위험점수 (부실 순위)	기업명	실질심사 종료일	부실위험점수 (부실 순위)
주식회사 @○○	2010. 8. 16.	421 (55)	주식회사 @○○	2010. 12. 14.	341 (72)
주식회사 @○○	2010. 9. 15.	380 (59)	주식회사 @○○	2010. 12. 14.	323 (83)
주식회사 @○○	2010. 11. 3.	384 (58)	주식회사 @○○	2010. 12. 17.	496 (46)
주식회사 @○○	2010. 11. 10.	424 (54)	주식회사 @○○	2011. 3. 24.	347 (66)

주: 부실순위는 코스닥 상장기업 1,011개 중 부실점수가 높은 순서로 정한 것으로 관리종목지정 기업과 상장폐지 기업이 포함된 순위임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재구성

## 2. 투자주의종목 지정 제외규정 불합리

한편 거래소에서는 2011. 3. 2.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관리종목 지정의 사전 예고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투자주의종목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해 4. 28. 투자주의종목을 지정하면서 임계 부실점수 300점을 초과

에 해당하지만 부칙(2006. 9. 29. 제194호)에서 2013년부터 적용토록 규정

- 3) 2010. 6. 29.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에서 분석회계 등의 사유로 개선기간 5개월을 부여받고 같은 해 12. 17. 5개 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예상(2010년 10월 말 기준 44억여 원 적자)되는 상황이었지만 최대주주 변경 등을 통해 기존의 분석회계한 경영진이 퇴진하여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장유지하기로 결정
- 4) 코스닥 상장기업 중 부실의 정도에 따라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먼저 분류하고 나머지 정상기업에 대해서는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로 구분
- 5) 반기보고서 제출이 마감되는 2010. 8. 15. 기준으로 이후에 실질심사에서 상장유지로 결정된 기업에 대해 투자주의종목 지정에서 제외

한 부실위험기업 89개의 상장주식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32개 종목을 제외하였다.

그런데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 시기는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어 확인된 날의 익일로 되어 있고, 투자주의종목의 지정 및 해제 시기는 일률적으로 당해 연도 5월 최초 매매일(이하 “정기지정일”이라 한다)로 정한 후 그 효과가 1년간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에서 제외된 기업이 다음 정기지정일 이전에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즉시 검토한 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투자자가 부실위험을 적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관리종목을 투자주의종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기업이 투자주의종목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1. 5. 2.부터 같은 해 10. 30.사이에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어 중견기업부 등 정상종목으로 편입된 5개 기업이 해제 당시 투자주의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상사(대표이사 △△△)의 경우 같은 해 5. 14. 법원에 접수(같은 해 4. 27.)된 파산신청이 기각되어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었으나 부실위험점수가 334점(같은 해 4. 28. 기준, 이하 같

다)으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데도 정상기업(중견기업부)으로 분류하는 등 [표 2]와 같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주식회사 ○○○ 등 4개 기업이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데도 정상종목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표 2]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기업 현황

(단위: 점, 위)

구분	기업명	부실위험점수 (부실순위)	관리종목		관리종목 해제 후 분류
			해제일	해제사유	
300점 이상	주식회사 ○○○	818(8)	2011. 9. 16.	매출액 미달 사유 해소 등	중견기업부
	주식회사 ○○○	693(24)	2011. 9. 8.	자본잠식률 해소	중견기업부
	주식회사 ○○○	552(35)	2011. 9. 28.	상장폐지사유 해소	중견기업부
	주식회사 ○○○	334(74)	2011. 5. 14.	파산신청 기각	중견기업부
300점 이하	주식회사 ○○○	47(705)	2011. 6. 30.	거래실적부진 해소	중견기업부

주: 부실순위는 코스닥 상장기업 1,011개 중 부실점수가 높은 순서로 정함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재구성

위 “1~2항”의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에서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되거나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부실위험 기업이 정상종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등 투자자에게 부실위험을 적시에 알려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도 일탈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폐지실질심사에서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기업이나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기업이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0>

재 무 감 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

2012. 4.

감 사 원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목적

금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예산편성과 집행 등 예산낭비 관행을 철저히 검사하고, 국가재무제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금융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이번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 범위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처리한 회계업무 전반과 “2011회계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였다.

##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국가 세입·세출 결산의 검사를 통해 예산낭비 관행, 불합리한 제도 등을 점검하고, 금년부터 결산보고서에 새롭게 추가된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성과보고서 검사에서는 성과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수준을 낮게

설정하였는지 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과 함께 성과지표를 통한 실적치가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검증 가능하고, 측정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 '성과지표 실적치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2. 3. 5.부터 같은 해 3. 16.까지(10일간) 감사인원 18명(회계사 7명 포함)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1. 4. .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Ⅱ.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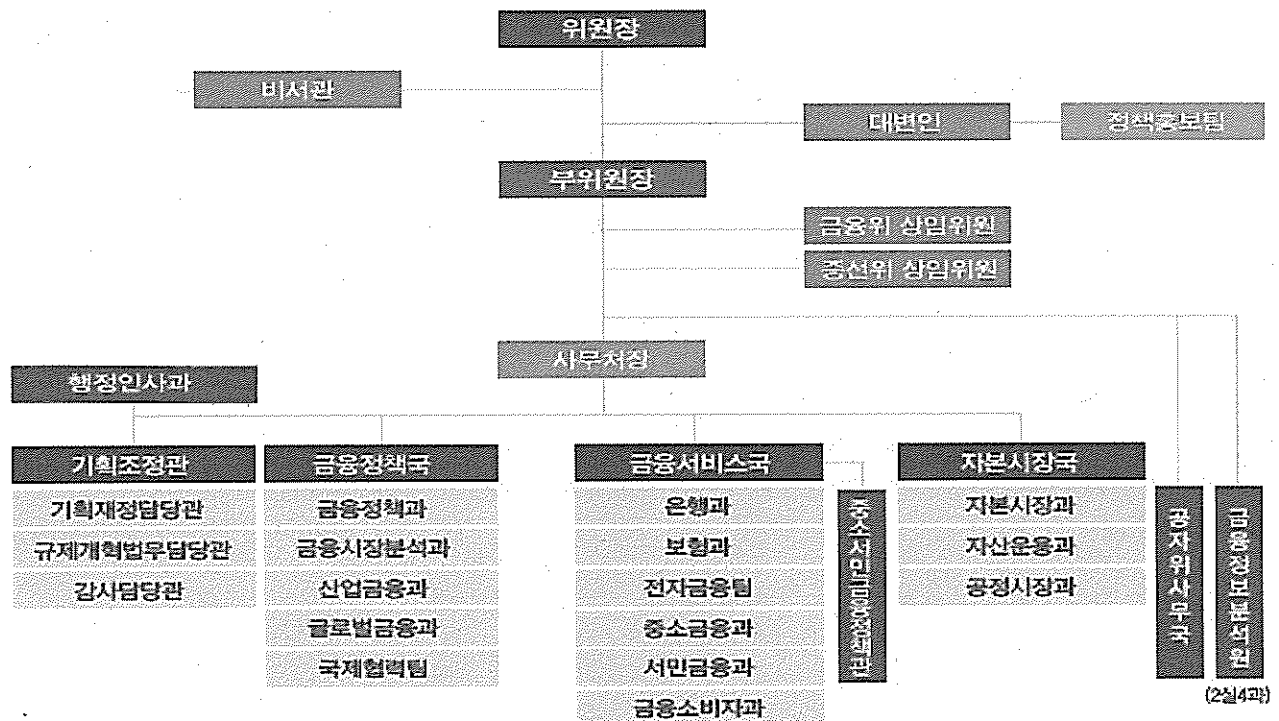
### 1. 일반 현황(2011. 12. 31. 현재)

가. (금융위) 금융정책·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그림 1]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sup>1)</sup> 등 총 9인으로 구성

나. (중선위)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다. (사무처) 본부에 1관 3국 1대변인 1정책관 16과 3팀,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 한시조직으로 공자위 사무국을 설치

[그림 1] 조직 현황



자료: 금융위원회

1) 당연직: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라. 인원

[표 1] 인원 현황(2011. 12. 31.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특정직(경찰)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233	234	2	2	6	6	196	195	7	7	1	1	11	11	10	12
본 부	169	171	2	2	6	6	143	143	-	-	1	1	7	7	10	12
공자위 사무국	12	12	-	-	-	-	11	11	-	-	-	-	1	1	-	-
금융정보분석원	52	51	-	-	-	-	42	41	7	7	-	-	3	3	-	-

주: 별도 정원(파견, 휴직 등)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 2.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금융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표 2]와 같이 31조 7,567억 원 (일반회계 1조 5,556억 원, 기금 30조 2,01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6% 감소하였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 1조 4,494억 원으로 전년도에 위 기금으로 전출된 금액 3조 32억 원보다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2]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단위: 억 원, %)

회계구분		2010 예산	2011 예산	증감률
일반회계		31,464	15,556	△50.6
기금회계	소 계(관리주체)	549,183	302,011	△45
	공적자금상환기금(금융위)	193,291	24,685	△87.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금융위)	1,569	1,542	△1.7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42,206	46,245	9.6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20,821	25,067	20.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협중앙회)	15,736	24,406	55.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	14,577	14,709	0.9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132,668	80,691	△39.2
	부실채권정리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21,899	28,914	32.0
	구조조정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106,416	55,752	△47.6
총 계		580,647	317,567	△45.3

자료: 금융위원회

결국 일반회계 1조 5,556억 원 중 [표 3]과 같이 회계기금 간 거래 1조 4,525억 원,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출연금 등 684억 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사업금액은 347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238억 원으로 전체의 68.5%에 해당(금융위원회가 직접 집행한 주요사업비 예산액은 109억 원)한다.

[표 3]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세부 현황

(단위: 억 원)

일 반 회 계	15,556
■ 인 건 비	163
■ 기 본 경 비	75
■ 주 요 사 업 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 모기지론 이차보전 민간이전	793 (좌측금액 합은 684)
■ 회계기금 간 거래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 IBRD차관 원금 상환 - IBRD차관 이자 상환	14,525

주: 기본경비는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월정직책금,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그 외 9개 기금이 있고,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등 2개 기금을 관리(한국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금은 개별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 3.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

금융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말 자산은 [표 4]와 같이 35조 6,207억 원, 부채는 79조 4,413억 원으로 순자산은 -43조 8,206억 원이고, 재정운영 순원가는 4조 7,825억 원, 비교환 수익 등은 3조 5,367억 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1조 2,458억 원이다.

본 회계연도 말 금융위원회의 자산은 35조 6,207억 원으로 전년도의 43조 2,046억 원보다 7조 5,839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 등이 3,599억 원 증가하였으나, 장기금융상품 등의 투자자산이 7조 8,710억 원(-34.4%)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부채는 79조 4,413억 원으로 전년도의 81조 7,577억 원 보다 2조 3,164억 원 감소하였는바, 이는 장기충당부채 등이 3조 5,741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공채 및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으로 장기차입부채가 5조 6,598억 원(-7.6%)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4]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 요약

(단위: 억 원, %)

구 성	구 분	2010	2011	전년 대비 증감(Δ)	
				금액	비율
재 상 정 태	자 산	432,046	356,207	Δ75,839	Δ17.6%
	부 채	817,577	794,413	Δ23,164	Δ2.8%
	순 자 산	Δ385,531	Δ438,206	Δ52,675	Δ13.7%
재 윤 정 영	재 정 운 영 순 원 가	26,526	47,825	21,299	80.3%
	비 교 환 수 익 등	30,425	35,367	4,942	16.2%
	재 정 운 영 결 과	Δ3,899	12,458	16,357	419.5%
순 자 산 변 동	기 초 순 자 산	Δ438,438	Δ393,245	45,193	10.3%
	기 말 순 자 산	Δ385,531	Δ438,206	Δ52,675	Δ13.7%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 4. 2011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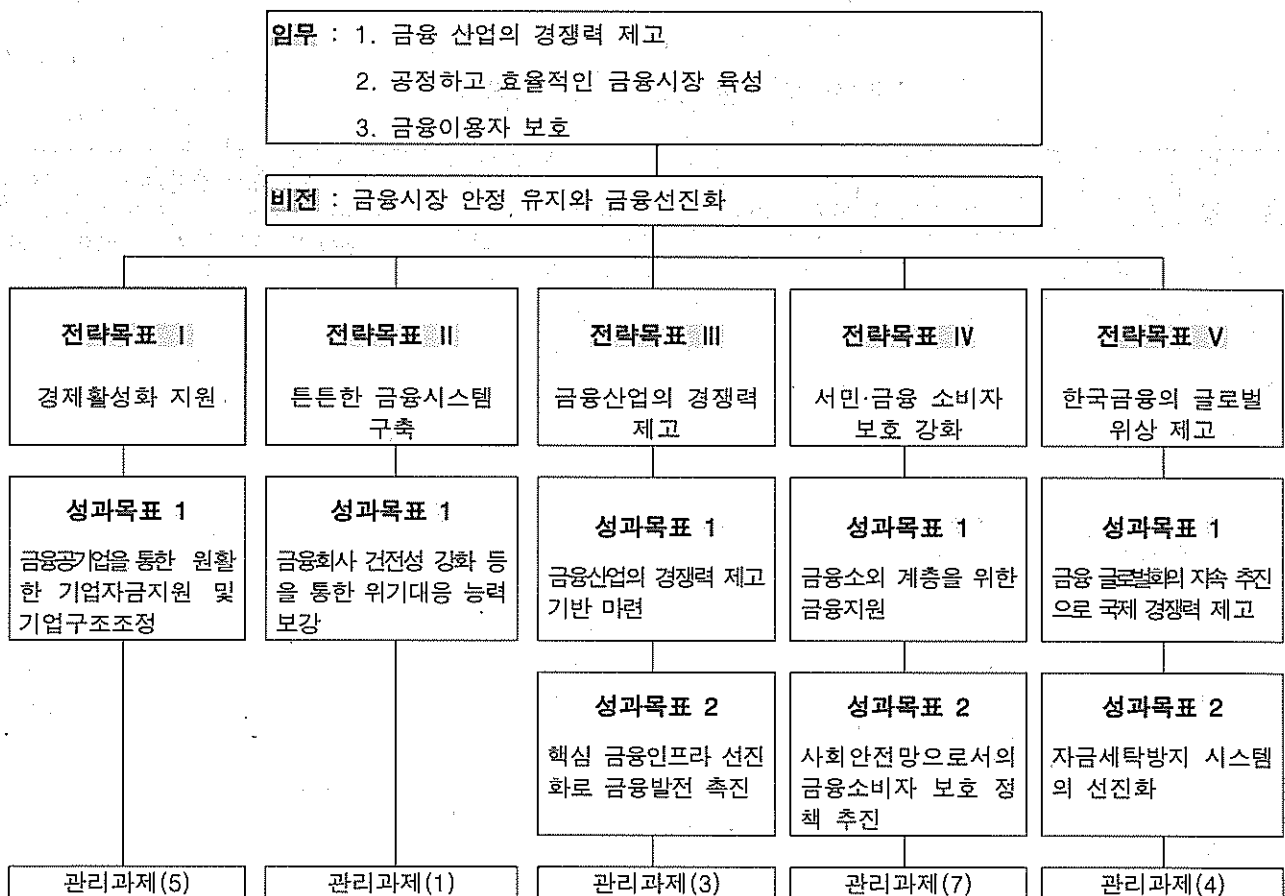
### 가. 임무 및 비전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와 금융선진화”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 나. 성과관리체계

위 비전 달성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5개의 전략목표, 8개의 성과목표, 20개의 관리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1개와 39개, 계 5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2]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도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2011. 6. 27. OOOO연구원과 ‘저축은행 경영부실 실상 및 원인 규명 연구’ 용역계약(계약기간: 2011. 6. 27. ~ 9. 26. 계약금액: 1,500만 원)을 체결하고 최종보고서 100부를 같은 해 9. 26.까지 납품받기로 하는 등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위 연구원 등과 총 18개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연구용역 계약의 「과업지시서」와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제4조 및 제7조 등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연구보고서의 최종 내용을 확정하여 최종보고서 파일과 인쇄본 일체를 제출받은 후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하고,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 이외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제출 기한까지 최종보고서 일체를 작성,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연장된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위원회에서는 ‘저축은행 경영부실 실상 및 원인 규명 연구’ 용역계

약의 경우 보고서 최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OOOO연구원에서 보고서 제출기한인 2011. 9. 26.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계약기간 연장 등 조치 없이 위 연구원에서 같은 해 12. 18. 최종보고서 초안의 컴퓨터 파일과 인쇄본 10부를 제출하자 같은 해 12. 21. 위 연구원에 연구개발비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표]와 같이 총 6개의 연구용역에 대해 최종보고서 인쇄본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연구개발비 1억 6,500만 원을 같은 해 2011. 12. 16.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위 연구원 등 용역수행기관에 미리 지급하였다.

[표] 연구용역 대금 선지급 현황

(단위: 만 원, 부)

과제명	계약 상대방	계약 체결일	대금	결과물 제출기일	대금 지급일	인쇄물 부수	최종보고서 인쇄물 수령일자
저축은행 경영부실 실상 및 원인 규명 연구	OOOO 연구원	2011. 6. 27.	1,500	2011. 9. 26.	2011. 12. 21.	100부	2011. 12. 18.(10부) 90부 미수령
외은지점 규율체계 정비 관련 주요 검토사항	OOOO 연구원	2011. 10. 27.	3,000	2011. 12. 19.	2011. 12. 28.	100부	100부 미수령
ETF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방안 연구	OOOO 연구원	2011. 10. 25.	3,000	2011. 12. 15.	2011. 12. 16.	100부	2012. 3. 9.(100부)
금융회사 간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관리감독 개선방안	OOOO 연구원	2011. 10. 19.	3,000	2011. 12. 16.	2011. 12. 21.	100부	2012. 3. 7.(10부) 2012. 3. 13.(90부)
SIFI 규제 국내 제도화 방안 연구	OOOO 연구원	2011. 10. 19.	3,000	2011. 12. 20.	2011. 12. 28.	50부	2012. 3. 7.(10부) 2012. 3. 13.(40부)
부동산개발금융 제도 개선방안 연구	OO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10. 26.	3,000	2011. 12. 23.	2011. 12. 26.	50부	2012. 3. 7.(10부) 2012. 3. 13.(40부)
합계			16,500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6개 연구용역 중 4개는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감사원 감사기간(2012. 3. 5. ~ 3. 16.) 중인 2012. 3. 7.부터 같은 달 13. 사이에 제출받았고, 나머지 2개의 최종보고서는 감사종료일까지도 제출받지 않았다.

그 결과 위 위원회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과 「연구용역 표준계약서」 약정에 어긋나게 계약업무를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보고서 일체를 제출받지 않고 연구개발비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용역 계약 업체에서 연구용역 마무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연구용역 최종 성과물의 질적 수준, 완성도 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지 않은 연구용역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개발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2011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보고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위 위원회에서는 [별표 1]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도”와 같이 임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와 비전 “금융시장 안정 유지와 금융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5개 전략목표, 8개 성과목표, 20개 관리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1개와 39개 등 계 50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위 위원회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50개의 성과지표 중 목표치를 달성한 지표가 32개(64%), 초과 달성한 지표가 13개(26%), 목표치에 미달한 지표가 5개(10%)로서 [표]와 같이 목표치 이상을 달성한 성과지표가 45개로 전체적으로 90% 수준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 [표] 전략목표 달성 현황

(단위: 억 원, %, 개)

전략목표	사업규모	성과지표 실적
------	------	---------

	예산	결산	집행률	달성/전체	달성률
I. 경제활성화 지원	39,856	34,676	87.0	13/14	92.9
II.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50,000	17,698	35.4	2/2	100.0
III.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17	15	87.6	6/8	75.0
IV.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4,375	4,339	99.2	15/16	93.8
V. 한국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77	75	97.6	9/10	90.0
총계	94,326	56,803	60.2	45/50	90.0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기획재정부 「2011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III-2-(5)에 따르면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는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와 구별되는 별개의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각각의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며, 성과지표별 목표치는 과거 3년간의 추세치 및 전년도 성과를 고려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회계법」 제15조 제4항, 기획재정부의 「2011년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II-1. 에 따르면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작성하고 목표치 등 주요 성과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위원회에서는 위 지침 등에 따라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하고, 설정된 목표에 대응하는 각종 실적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2. 3. 5. ~ 3. 16.) 중 위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1. 성과계획서 작성 부적정

### 가. 성과지표를 중복하여 사용

(전략목표) V. 한국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성과목표) V-1.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추진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성과지표) 양자·다자 간 금융협상을 통한 국제협력강화  
(관리과제) V-1-재정② 금융관련 국제협력  
(성과지표) 국제협상횟수

위 위원회에서는 성과목표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추진으로 국제경쟁력 제고’(V-1.)의 성과지표를 ‘양자·다자 간 금융협상을 통한 국제협력강화’로 선정하면서 측정산식 등을 관리과제 ‘금융관련 국제협력’(V-1-재정②)의 성과지표 측정산식 등과 정확히 일치하게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표명만 다를 뿐 성과지표가 중복 사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 나. 성과지표의 구체성 결여

(전략목표) IV.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  
(성과지표) 금융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제고  
(관리과제) IV-2-재정③ 금융소비자 보호  
(성과지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위 위원회에서는 성과목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IV-2.)의 성과지표를 ‘금융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제고’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과제 ‘금융소비자 보호’(IV-2-재정③)의 성과지표를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성과지표의 경우 측정방식이 개선방안 제출 또는 미제출 등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 과제의 난이도를 적정하

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제고’의 경우 구체성도 미흡하여 성과 측정 시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가 있는 등 성과지표로서 적정하지 않다.

#### 다. 성과지표 목표치를 낮게 설정

(전략목표) Ⅰ. 경제활성화 지원

(성과목표) Ⅰ-1. 금융공기업을 통한 원활한 기업자금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성과지표) 보증지원업체의 만족도(목표치: 70%)

위 위원회에서는 [별표 2] “목표치 하향 설정 명세”와 같이 성과지표 ‘보증지원업체의 만족도’의 목표치를 70%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보증지원업체의 만족도’의 경우 비록 2011년에 신설된 지표이지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이미 있었고 2011년에도 동일한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과거 3년간 추세치가 2008년 86.8%, 2009년 87.9%, 2010년 90.7%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년도 실적치인 90.7%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목표치를 70%로 낮게 설정하였다.

#### 라. 성과지표와 전략목표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지표체계의 혼란 발생

(전략목표) Ⅲ.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성과목표) Ⅲ-1.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성과지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위 위원회에서는 성과목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Ⅲ-1.)의 성과지표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성과지표명은 전략목표명과 동일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성과

지표가 성과목표보다 오히려 상위 개념으로 설정되어 지표체계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등 성과지표로서 적정하지 않다.

## 2.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 가. 근거가 미약한 추정치로 성과 실적치를 산정

(전략목표) III.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성과목표) III-1.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관리과제) III-1-재정① 금융업법 체제개편  
(성과지표) 2단계(기능별) 법령 제·개정

위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 관리과제 ‘금융업법 체제개편’(III-1-재정①)의 성과지표를 ‘2단계(기능별) 법령 제·개정’으로 설정하였고 성과 측정방법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로 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2년 1월 성과보고서 작성 시 위 2건의 법률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는데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0.9,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0.7의 목표달성도 실적을 자의적으로 부여하여 실적치를 1.6<sup>1)</sup>으로 산정하는 등 근거가 미약한 추정치로 성과 실적치를 산정하였다.

### 나. 임의로 측정산식을 변경하여 측정

(전략목표) III.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성과목표) III-2. 핵심금융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성과지표) 정부입법계획 달성률

위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목표 ‘핵심금융인프라

1) 금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입법절차 과정을 감안하여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규제심사를 완료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0.9로, 입법예고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0.7로 총 1.6을 실적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러한 실적 산정 방식은 성과계획서 상에 제시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실적치 산정의 객관성이 미흡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Ⅲ-2.)의 성과지표 '정부입법계획 달성률'의 측정산식을 '당초 입법계획 대비 국회제출'로 설정하였다.

한편, 위 위원회에서 2011년 초 법제처에 제출한 입법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경영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고, 당초 제출한 입법계획 중 실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4건이므로 정부입법계획 달성률을 66.7%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2011. 9. 16. 위 위원회에서는 법제처에 당초 계획에 없으나 국회에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등 2건을 추가하여 입법계획을 수정해 줄 것을 신청하고, 2011회계연도가 10일 남은 2011. 12. 20.에는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경영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등 2건을 철회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위 위원회에서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측정산식을 '(국회제출/당초입법계획)×100'에서 '(국회제출/입법계획)×100'으로 임의로 변경한 뒤 2011년 중 위 추가하고 철회한 건들을 반영하여 6건의 입법계획 중 6건 모두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실적치를 100%로 산정하는 등 성과 실적을 과다하게 측정하였다.

####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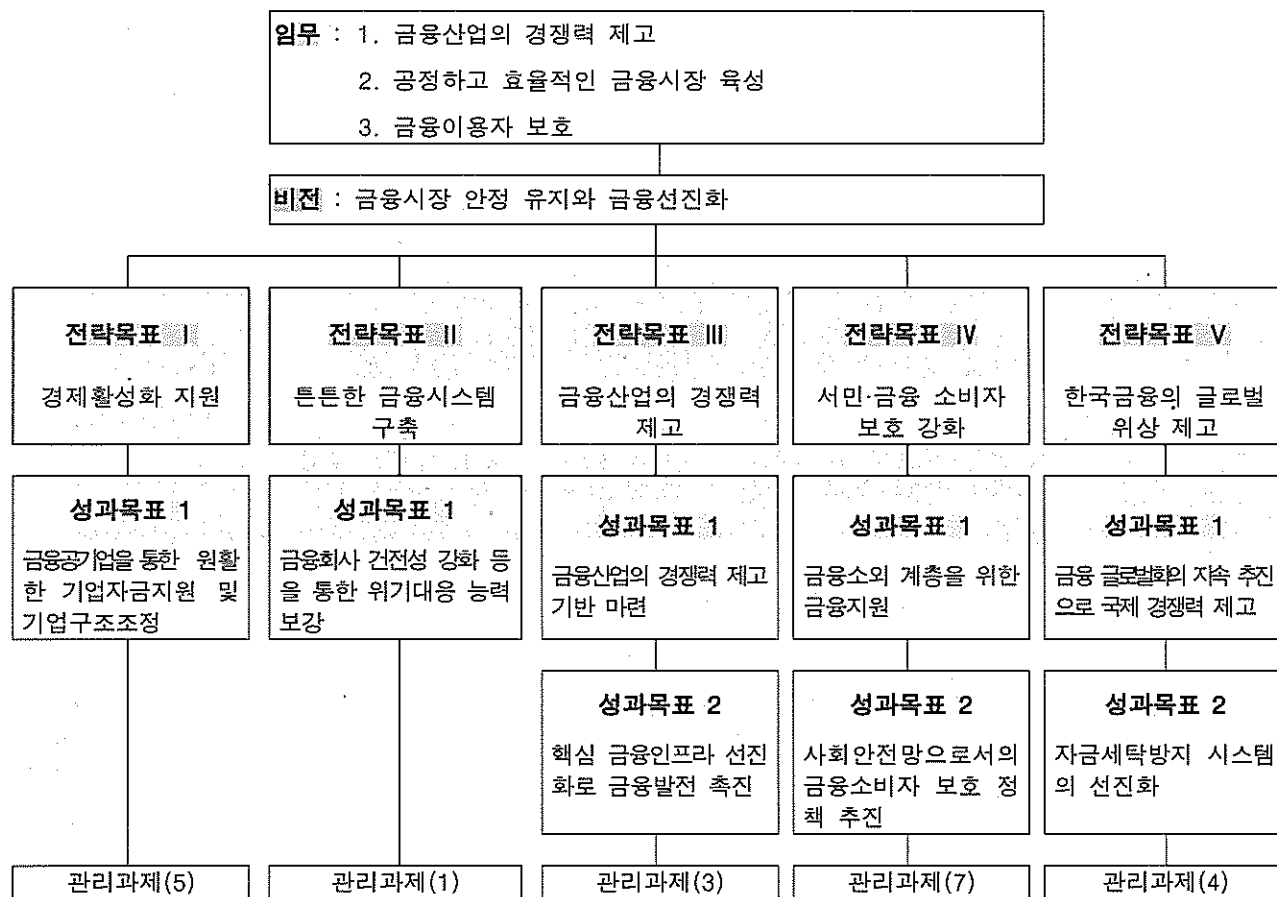
① 앞으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할 때 성과지표를 중복하여 사용하거나 구체성이 미흡한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특별한 사유 없이 낮게 설정하거나 성과지표를 전략목표명과 동일

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하며

②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근거가 미약한 추정치로 성과 실적치를 산정하거나 임의로  
추정산식을 변경하여 측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도**



자료: 금융위원회

[별표 2]

**목표치 하향 설정 명세**

성과목표 I-1. 금융공기업을 통한 원활한 기업자금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08	'09	'10	'11			
보증지원업체의 만족도(%)	목표	-	-	신설	70	"대체로 만족" 이상을 목표로 설정	설문조사	외부위탁 자료
	실적	86.8	87.9	90.7	-			

자료: 금융위원회

<별첨 13>

자체감사(정기)

12.16 ~ 12.22

# 2010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11. 1.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 목 차 -

### I. 감사개요

### II. 감사실시 결과

#### 1. 총 평

####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나.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다.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

라.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수준

####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4. 감사결과 처리요령

## I. 감사 실시 개요

### 〈목 적〉

◇ 예산집행·회계처리 및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등 주요사업 이행·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

⇒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 및 기관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 「'10년 자체감사계획」('10.2.8 기보고)에 따른 감사임

#### 1

#### 실시 개요

□ 감사기간 : '10.12.16(목) ~ 12.22(수), 5일간

□ 감사대상 : '08.7 ~ '10.11 기간중 예산집행실태 등

□ 감사반원: 감사담당관실 5명(감사담당관, 5급 2, 주무관 2)

□ 감사방법: 서면점검

\* 수감부서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서면위주로 실시

#### 2

#### 감사중점

□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의 적정성

□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의 적정성

□ 외부감사(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실태

## 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금번 감사는 '08년 자체감사('08.6.23~6.27) 이후 2년6월만에 실시
  -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하는데 중점을 둠
- 감사결과 금융위 설립('08.2.28) 초기 업무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나타났던 불안정성은 상당부분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
  - 다만, 회계 관련 서류의 관리 등 예산집행의 세부적인 부분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완할 부분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주요 발견사항]

- ①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관서운영경비 출납부서)
  - ☞ 출납서류 편철·관리 및 지출증빙·집행방법 등 부적정
- ② 대통령 지시사항등 주요사업 추진·관리(행정인사과)
  - ☞ 정상적으로 추진·관리 → 특이사항 발견되지 아니함
  - \* 대부분 과제가 완료되었거나 종료요청중이며, 일부 미완료과제도 정상 추진중
- ③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 → 부패영향평가 의뢰 미흡(관련부서)
  - ☞ '09.7 ~ '10.6 기간중 21건의 제·개정(안)중 14건 기한도과 등
- ④ '09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지적사항 이행(관련부서)
  - ☞ 관련 제도 개선등 적절히 조치

##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 ①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 출납 관련서류 편철·관리 부실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 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 &lt;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편철방법&gt;

① 출납계산서(규칙 제7호 서식)

② 국고예금월계대사표(00년 00월분)

③ 세목별 간지(본월지출액: 00원, 건수: 00건)

④ 지급결의서

⑤ 내부결재(품의서)

⑥ 기타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청구서 등)

• 월단위로 편철

• 세목별로 구분

• 5년간 보관

- 그러나 금융정책국 등은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 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관리하여 출납계산서와 국고예금월계대사 및 지출증빙간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함

## &lt; 부서별 지적사항 &gt;

부서명	지 적 내 용
■ 금융정책국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금융서비스국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자본시장국	• '10.1~'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대변인실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 사전품의 없이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경비 집행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 집행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또한,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은 예산 집행시 중요사항은  
국장, 일반사항은 과장이 전결토록 규정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등을 집행하면서  
사전 품의 없이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
  - \* 예산집행시에는 집행건별로 집행사유, 집행대상, 소요예산 및 해당 예산과목  
등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품의)를 득하여 집행하여야 함

## □ 예산집행 품의서에 결재권자의 서명이 아닌 도장 날인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3조제8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문서는  
서명(행정전자서명 포함)에 의한 결재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 서명은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부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등 품의서에 부서장 서명이 아닌  
도장을 날인하여 증빙자료로 관리

##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부서명 서명 및 특근매식비 현금집행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 및 101p)」에 따라 정부구매  
카드 사용시에는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그러나, 상당수 실·국에서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부서명(○○팀 등)  
으로 서명하였고, 대변인실은 특근매식비 집행시 현금으로 집행\*
  - \* '08.12.18(273,000원) 및 '08.12.23(25,000원)

## ②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 통역비 지급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 소득세법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그러나 대변인실은 '09.9.29 김○○에게 통역료 80만원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기타소득세)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 단, 지급금액의 80%(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소득세법 제21조제2항, 84조제3호, 시행령 제87조제1항)
- 강의료 25만원 지급시: 25만원의 80%(20만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은 5만원으로 기타소득세 비과세
- 강의료 30만원 지급시: 30만원이 80%(24만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은 6만원으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 09년도 발생 에디터 비용을 '10년도 예산으로 집행

- 국고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전년도 발생 채무확정액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됨

\* 예외) 공무원보수, 군인사망급여금, 군인전상급여금, 보험료, 이자 등

-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은 '09년 12월 발생한 영문에디터(2명) 비용 2,664,690원을 '10년도 예산(수용비)에서 지급

### □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 지급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기획조정관실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  
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

\* '09.3, 6, 9월에 각각 1,580,000원, 393,000원, 6,160,000원씩을 초과 지급

⇒ 첫째, 예산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집행할 것

-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서명에 의한 사전 결재로 집행
- 정부구매카드 영수증에는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
- 특근매식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
- 연도내 발생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법령상 예외는 제외)
- 예산과목별 교부액을 준수하여 집행

둘째, 예산집행 서류는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할 것

## 나.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 □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개선 필요

-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부서 중 출납 관련 서류의 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부서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 경력이 없는  
초임자(주무관) 1인이 출납업무를 담당
- 출납업무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  
하고 있어 출납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

대변인실	금융정책국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국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담당)

○ 반면, 출납업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부서의 경우 실무관이나 사무원이 출납업무 담당자를 보조

- 출납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업무수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

행정인사과	기획조정관실	금융정보분석원	공자위사무국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보조)	• 주무관 1(담당) • 사무원 1(보조)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보조)	• 주무관 1(담당) • 사무원 1(보조)

⇒ 출납업무 담당 1명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출납공무원 보조자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할 것

\*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서 실시하는 예산·회계교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교육 등

## 다.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

①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 특이사항 없음

□ '11.01 현재 총 38개 지시사항중 36개 완료, 2개 지시사항 추진중

### < 미완료 대통령지시사항 추진현황 >

지시일	지시내용	이행단계	담당과	처리기한
09.09.03	구조조정 추진 관련	추진 중*	기재단	10.12.31
10.12.21	전국민 보안의식 강화	추진 중**	감사	11.12.31

\* 추진계획 수정·보완하여 승인요청 중으로 승인시 처리기한 연장 예정

\*\* 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완료

## ② 국정과제 추진현황 : 특이사항 없음

□ '11.01 현재 27개의 과제중 23개 완료, 4개 과제 추진중

### < 미완료 국정과제 추진현황 >

세부실천과제	계 기	시 한	단 계
단기사채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인수위 국정과제	10.하	연장요청*
산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여건 마련	'09 8.15 경축사	12.하	추진중
체계적인 금융교육실시	인수위 국정과제	12.하	추진중
햇살론의 안정적 정착	'10 8.15 경축사	12하	추진중

\* '11년 상반기까지 기한연장을 요청 중에 있으며 1월중 연장승인 예정

⇒ '10.3.4 ~ 4.16 기간중 우리 위원회등 29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원의 「주요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도 지적사항 없었음

## 다. 법령 제·개정시 필요절차 이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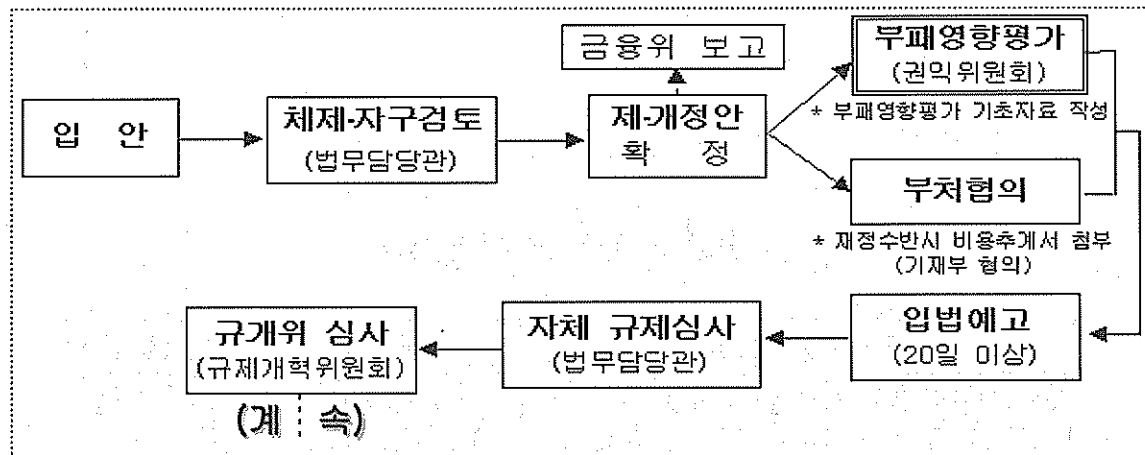
### □ 현 황

- 법령 제·개정시에는 부패영향평가\*,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표1 참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령 입안시 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토록 규정(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0조)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09.10.1 ~ '10.9.30 기간중 총 21건의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 : 부처협의와 병행 실시 >



□ 점검결과

- 법령 입안시 필요한 절차는 대체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으나, 부패영향평가 의뢰가 다소 미흡
- 총 21건 중 7건만이 기한내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12건은 입법예고 이후에 의뢰, 2건은 의뢰하지 않음 (표2 참조)

⇒ 향후 법령 제·개정시 반드시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입법예고 전에 부처협의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할 것

## □ 지적사항 및 조치구분

지 적 사 항	조치구분
<p>■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집행 관련 서류 편철 → 1개월 이내 감사담당관실로 그 결과 회보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대변인실)</li> <li>· 관서운영경비는 지급건별로 결재권자의 직접 서명에 의한 품의 (또는 전자결재)를 통하여 집행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시에는 카드 영수증에 반드시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할 것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기획조정관실, 행정인사과, FIU, 공자위사무국)</li> <li>· 특근매식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대변인실)</li> </ul>	주 의
<p>■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서운영경비 집행시 원천징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 (대변인실)</li> <li>· 법령과 다르게 지난 연도 채무확정액을 현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FIU)</li> <li>· 교부받은 과목별 자금한도를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기획조정관실)</li> </ul>	주 의
<p>■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보조인력 지정 등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출납업무 보조자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하여 출납업무가 안정적·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개선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대변인실)</li> </ul>	권 고

※ 위 지적사항과는 별도로 모든 부서는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시 반드시 부패영향평가 의뢰(국민권익위원회)를 부처협의와 병행하여 실시하시기 바람

## □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각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교육 (1월중)

###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다. 개선·개선통보·시정·권고사항은 2월 이내

###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자체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첨 14> '10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출납관리 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li> <li>- 그러나 대변인실 등은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 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관리</li> <li>○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집행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li> <li>- 그러나 금융정책국 등은 공공요금 납부 등 일부건 품의서 누락하거나 부서장 서명이 아닌 일반도장 날인</li> <li>○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토록 규정</li> <li>- 자본시장국 등은 일부 사용영수증에 '부서명'으로 서명</li> <li>○ [조치요구사항]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부합토록 집행관련 서류의 편철·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서운영경비는 지급진별로 결재권자의 직접 서명에 의한 품의서에 의해 집행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시에는 사용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할 것</li> </ul>	주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 및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li> </ul>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대변인실은 '09.9.29 김○○에게 통역료 80만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li> </ul> </li> <li>○ 「국고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전년도 발생 채무확정액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한됨</li> <li>- 그러나, FIU는 '09년 12월 발생한 영문에디터 2명 비용 2,664,690원을 '10연도 예산에서 지급</li> <li>○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기획조정관실은 '09년 3월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집행</li> </ul> </li> <li>○ [조치요구사항] 원천징수의무를 철저히 하고, 연도 내 발생경비를 차년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매월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준수할 것</li> </ul>	주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li> </ul>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금융정책국 등의 경우 관서운영경비 출 납업무를 1명이 담당하면서 국회업무 및 민원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면서 보조인력을 지정 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서(FIU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납업무에 소홀</li> <li>○ [조치요구사항] 출납업무 담당을 1명으로 운용하고 있는 부서의 경우 보조인력을 지정하여 출납업무 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li> </ul>	권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보조인력 지정하여 출납 업무를 보조토록 조치</li> </ul>	조치완료

<별첨 15>

자체감사(정기)

2011.12.26 ~ 12.30

# 2011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12. 2.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 목 차 -

### I . 감사개요

### II . 감사실시 결과

#### 1. 총 평

####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나. 민원업무 처리

####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4. 감사결과 처리요령

## I. 감사실시 개요

### 〈목 적〉

◇ 예산집행·회계처리, 계약사무, 민원처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

⇒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으로 기관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및 爲民奉仕의 행정구현

\* 「'11년 자체감사계획」('11.2.1 기보고)에 따른 감사임

### 1 실시개요

- ☐ 감사기간 : '11.12.26(월) ~ 12.30(금), 5일간
- ☐ 감사대상 : 以前 자체감사 대상 이후의 예산집행실태 등  
\* 예산집행실태 등은 '10.12월 이후, 민원처리실태는 '10.7월 이후
- ☐ 감사반원: 감사담당관실 5명(감사담당관, 5급 2, 주무관 2)
- ☐ 감사방법: 서면점검(필요시 현장실사)

### 2 감사중점

- ☐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 민원업무 처리의 적정성
- ☐ 以前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의 적정성

## 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 등 기관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조직운영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
- ☐ 감사결과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다만, 예산집행 서류의 관리 및 민원처리기한 준수 등 일부 보완이 필요

### [분야별 주요 발견사항]

####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 ①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관서운영경비 출납부서)

- ☞ 지출증빙 관리 및 배정한도 준수 집행 등 철저 필요

##### ② 5천만원 초과 전용건 일상감사 미이행(기획행정실)

- ☞ 건당 5천만원 초과 이·전용 및 이월은 일상감사 대상

#### 〈민원업무 처리 관련〉

##### ①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통보 부적정

- ☞ 처리기한 도과 처리(109건, 1.7%) 및 임의형식 연장통보 등

##### ② 이첩민원 해소 필요(산금과 민원 92% 신보·기보·캠코에 이첩)

- ☞ 신보·기보·캠코에 국민신문고 구축하여 직접처리 필요

##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 1. 점검 개요

□ 2011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중 각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관서운영경비를 중심으로 점검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총액은 1조 5,530억 77백만원으로 대부분이 전출금·상환지출·이전지출\* 등이며,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IBRD차관원리금상환, 모기지론이차보전, 농어가목돈마련장려기금출연 등

○ 직접 집행액은 306.8억원(2.0%)으로 이 중 인건비(144.1억원)를 제외한 집행(162.7억원)을 중점 점검

<2011년도 일반회계 집행실적 (억원, %)>

구분	인건비	물건비	자산취득	이전지출	상환지출	전출금등	계
예산 (비중)	163.2 (1.0)	155.1 (1.0)	5.0 (0.0)	707.7 (4.5)	31.8 (0.2)	14,493.5 (93.2)	15,556.3 (100.0)
지출 (비중)	157.1 (1.0)	144.1 (0.9)	4.3 (0.0)	705.0 (4.5)	26.7 (0.2)	14,493.5 (93.3)	15,530.8 (100.0)
이월	0	0.7	0	0	0	0	0.7
불용	6.1	10.3	0.7	2.7	5.1	0	24.9

□ 예산집행지침,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등 관련 규정 부합여부 및 집행절차, 증빙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 ② 점검결과 지적사항

### ①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 집행 등

○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32조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

\* 금융정책과(업무추진비 5,095,100원, 특근매식비 2,984,780원 / 6~9월),  
자본시장과(업무추진비 2,345,932원 / 4월)

○ 또한, 기획행정실은 국외출장에 따른 여비를 국외여비가 아닌 국내여비 예산에서 집행

\* APG 연차총회 참석(인도)을 위한 국외여비 2,861,610원을 국내여비로 집행(7.15)

####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시 상대방 성명 등 기재 미비

○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지침 141p)

○ 그러나,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은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 미기재\*

\* 기획재정담당관실('11.2.28 / 970,000원), 국제협력팀('11.6.8 / 954,800원), 정책홍보팀('11.8.11 / 568,000원)

⇒ 매월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준수하고, 예산과목에 충실하여 집행하며,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기재할 것 (주의 : 해당부서)

## ② 출납서류 편철·관리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 출납 관련서류 편철·관리 부실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편철방법>

① 출납계산서(규칙 제7호 서식)	• 월단위로 편철
② 국고예금월계대사표(00년 00월분)	
③ 세목별 간지(본월지출액: 00원, 건수: 00건)	• 세목별로 구분
④ 지급결의서	
⑤ 내부결재(품의서)	
⑥ 기타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청구서 등)	• 5년간 보관

-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월별 출납서류에 출납계산서 등 일부 서식을 누락하여 편철

부서명	누락서류
■ 금융정책과	• 출납계산서, 세목별 간지, 지급결의서
■ 정책홍보팀, 기획행정실	• 국고예금월계대사표
■ 기획재정담당관실	• 세목별 간지

### □ 사전품의 없이 관서운영경비 집행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 집행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그러나 자본시장과는 일반수용비 집행에 있어 일부 품의서 누락

부서명	품의서 누락 사례
■ 자본시장과	• '11.2.23(생수 1,101,100원), 3.16(복사기드럼 765,600원), 4.14(용지 2,127,000원), 5.19(사무용품 657,900원), 9.7(명패 283,800원), 11.30(토너 4,957,700원) 등

⇒ 예산집행 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하고, 수용비 집행시 품의서 누락사례가 없도록 할 것 (주의 : 해당부서)

### ③ 건당 5천만원 이상 전용건에 대한 일상감사 미이행

-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은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으로 규정

※ 일상감사대상(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

- 예산이 5억원 이상인 사업
- 성과관리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집행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일정규모 초과 계약건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의 제조·구매: 5천만원)
-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의 아전용 및 이월
- 주거재 은행의 선정·변경
- 실·국 단위 이상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연찬회 등 행사 및 외부 참석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과단위 행사 포함)

- 그러나 기획행정실은 FIU 인건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본부 인건비에서 8,000만원을 전용('11.12.23)하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음

<FIU 인건비 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일자	건명	세부사업명	'11예산현액	변경액	변경 후 금액
12.23	FIU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 자체전용	FIU 인건비	2,926	80	3,006
		본부 인건비	12,745	△80	12,665

⇒ 향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건에 대하여 반드시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등 「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 (주의 : 기획행정실)

#### ④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모범사례)

□ ○○국은 '10년 자체감사시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 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하여 출납계산서와 국고예금월계대사 및 지출증빙간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고,

○ 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결제권자의 결제를 득한 사전품의 없이 집행하였으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사용영수증에 사용자의 실명이 아닌 부서명으로 서명한 사례가 빈번하여 지적(주의)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11년 1월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가 아래와 같이 교체되면서 금번 감사일 현재 '10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완전히 해소하는 한편 관서운영경비 집행과정에서 '예산집행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함

소 속	성 명	직 급	담당업무	담당기간
○○과	○○○	○○	○○국 관서운영경비 출납	'11.1월 ~ 현재

⇒ 각 과장은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모범사례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행정인사과장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상기 담당자에게 포상 등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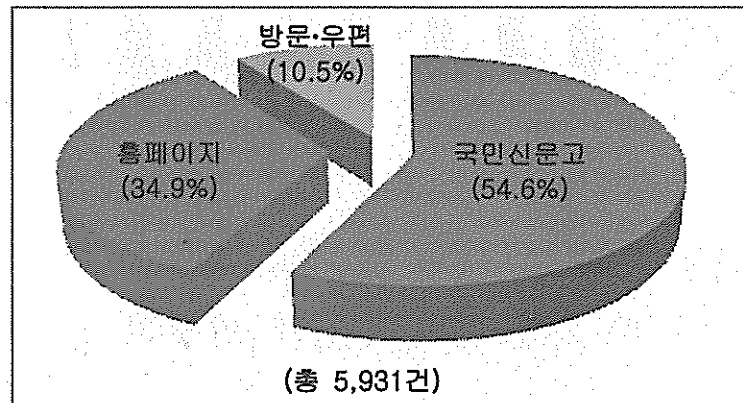
## 나. 민원업무 처리 관련

### ① 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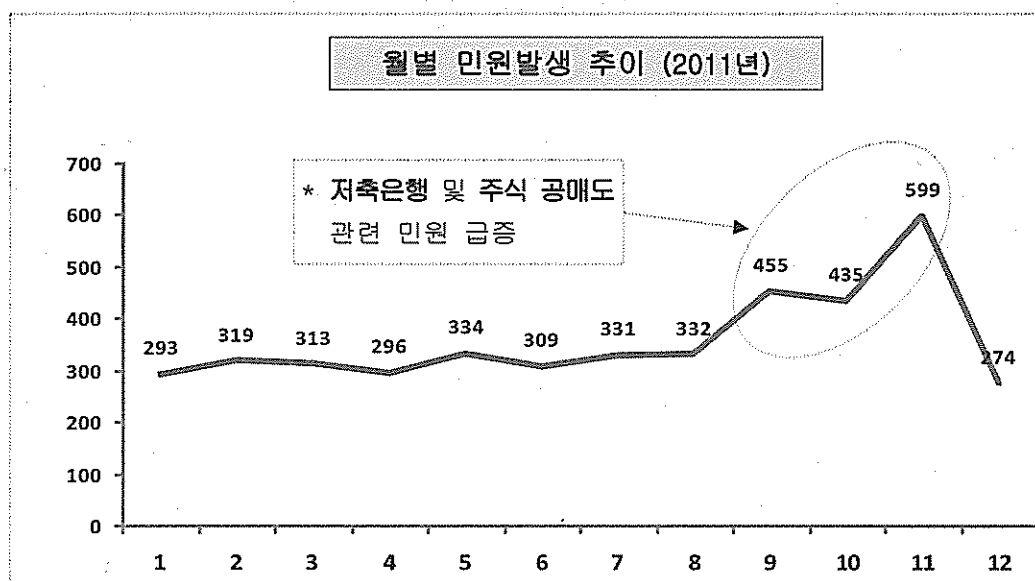
□ 점검대상기간('10.7.1 ~ '11.11.30)중 총 5,931건\* 접수·처리

\* 반복민원 433건 포함시 6,36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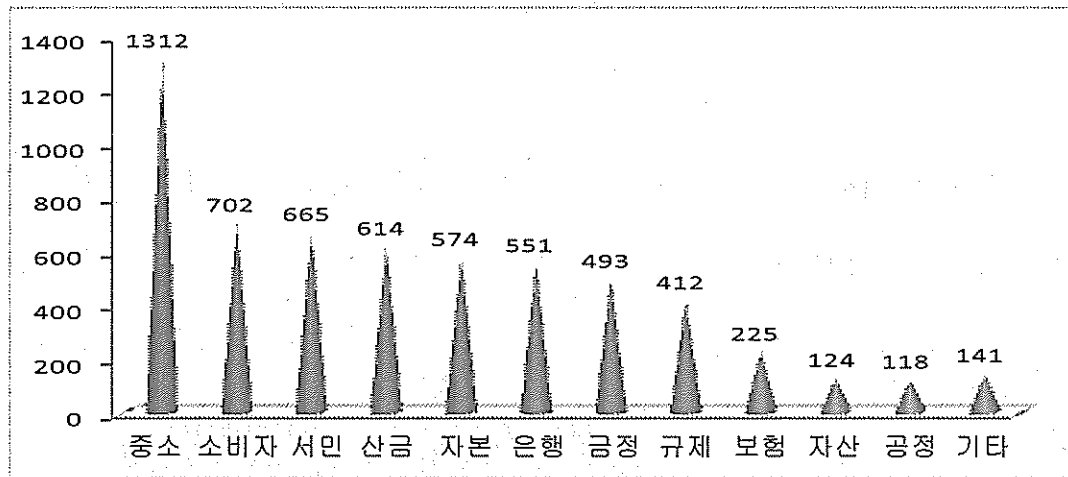
구 분	건 수
신 문 고	3,238
홈페이지	2,067
방문·우편	626
합 계	5,931



- 통상적으로 매월 3백건 내외의 민원이 발생하며, 저축은행 등 특정 사안 발생시 일시적으로 급증



□ 부서별 : 중소기업과 → 금융소비자과 → 서민금융과 순



○ 중소기업·소비자·서민등 3개 과의 민원은 모두 서민금융 관련 민원으로 총 2,679건으로 전체 민원의 45.2% 차지

- 이들 민원의 만족도\*는 44.7%로 전체 만족도 49.0% 보다 4.3%p 낮게 나옴

\* 중소기업(41.7%), 금융소비자(48.5%), 서민금융(49.2%)

○ 산업금융과 민원\*은 대부분(91.8%) 신보, 기보, 캠코 민원으로 해당 기관에 이첩되었으며, 만족도는 42.9%로 나타남

산금과 민원(건)	신 보	기 보	캠 코	기 타	합 계
	311	98	155	50	614

□ 속성별 : 일반민원\*(3,544)→ 법령질의(1,160) → 제도개선(592) → 진정(493) → 기타(231)의 순

\* 일반민원 대부분도 현행제도 내에서 해소가 어려운 진정성 민원

\* 법령질의 만족도는 83.3%로 전체 평균(45.2%)보다 월등히 높음

## ② 점검결과 지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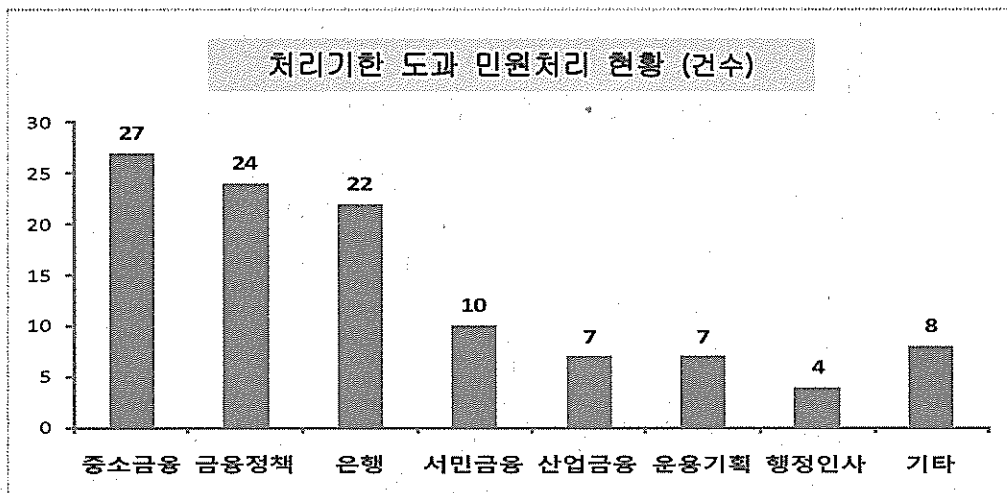
### ①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처리 부적정

- 처리기한 준수율은 98.3%로 '10년 점검시의 95.8%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 평균 99.5%\* 보다는 낮음

\* 「2011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권익위)」에서 금융위의 처리기한 준수율은 '보통'으로 외통부, 교과부 등과 함께 최하위권

- 처리기한 연장 등의 조치 없이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는 109건 (1.7%)으로 중소기업과, 금융정책과, 은행과에 집중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일반질의·상담은 7일, 법령질의를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을 명확히 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시행규칙(제8조)

- 그러나, 일부 서신민원(방문·우편)의 경우 당해 민원인에게 처리기한 연장통보 없이 국민신문고상으로만 연장처리

- \* 서신민원의 경우 행정편의상 국민신문고에 등재·관리하더라도 처리기한 연장은 당해 민원인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서신으로 하여야 함

<사 례>

민원인	접수일	처리일	연장횟수	처리부서
김○○	'11.01.31.	'11.03.18.	3회	금융정책과
이○○	'10.07.16.	'10.08.17.	3회	산업금융과
강○○	'10.10.29.	'10.11.26.	3회	중소금융과
황○○	'11.05.20.	'11.06.22.	3회	서민금융팀
홍○○	'10.08.11.	'10.09.10.	3회	은행과
심○○	'11.10.17.	'11.11.17.	3회	보험과
김○○	'10.07.21.	'10.08.20	3회	운용기획팀

- 또한, 서신으로 연장통보 하는 경우 공문 또는 법정 서식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임의양식\***으로 처리

- \* 담당자, 시행일, 기관장직인 등 없이 A4 용지에 연장사유 및 예정처리 기한만을 임의로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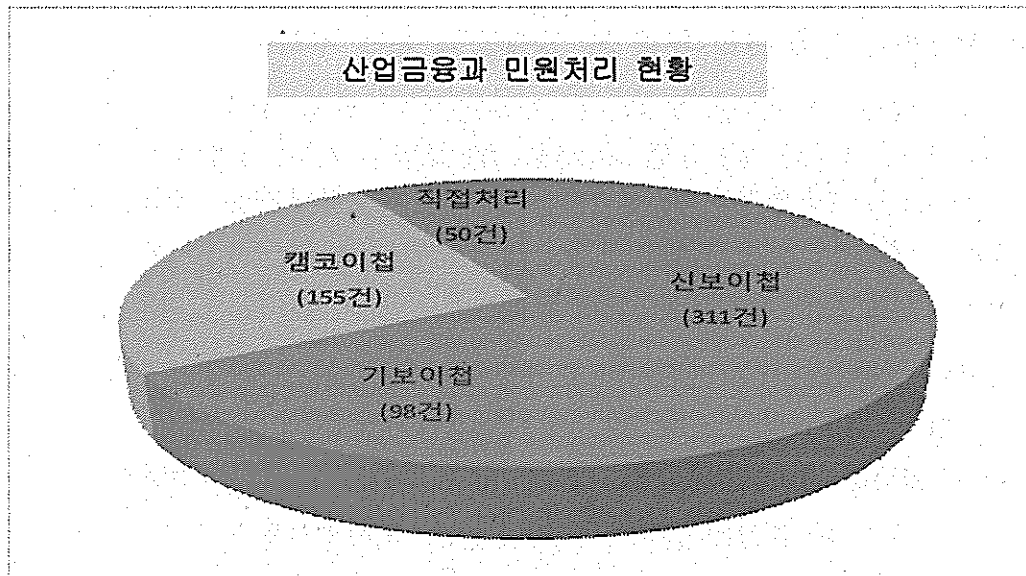
<사 례>

관련 민원현황				처리부서
민원인	신청일	접수일	처리일	
박○○	'11.08.30	'11.08.30	'11.09.16	산업금융과

⇒ 법정 처리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신민원의 처리기한 연장 통보는 반드시 공문 또는 법정서식에 의할 것 (주의 : 해당부서)

## ② 이첩민원 해소노력 필요

- 산업금융과 민원 경우 대부분이 신보, 기보, 캠프 관련 민원으로 접수민원의 92% 가량을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



- 이는 해당 공공기관에 국민신문고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 국민신문고 구축시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
- \* '10년 민원점검시 지적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국민신문고가 구축됨에 따라 자본시장과 민원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최근 예금보험공사의 신문고 구축으로 금융소비자와 민원도 상당수 감소
- \* LH공사, 국민연금공단, 대한주택보증 등 상당수 공기업들 또한 국민신문고를 구축하여 소관 민원을 직접 처리

⇒ 신보 등에 국민신문고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필요 (권고 : 산업금융과)

## □ 지적사항 및 조치구분

분야	지 적 사 항	조치 구분
예산 집행 / 회계 처리	<b>■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납계산서, 한국은행 월계대사, 세목별 간지,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품의서, 영수증 등) 등을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에 부합토록 철저히 관리할 것 (금융정책과, 정책홍보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행정실)</li> <li>일반수용비 집행시 품의서 누락사례가 없도록 할 것 (자본시장과)</li> </ul>	주의
	<b>■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별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자금한도를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금융정책과, 자본시장과)</li> <li>국외여비를 국내여비에예산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기획행정실)</li> <li>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시 증빙서류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기재할 것 (기획재정담당관실, 국제협력팀, 정책홍보팀)</li> </ul>	주의
	<b>■ 일상감사 미이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일상 감사를 이행할 것 (기획행정실)</li> </ul>	주의
	<b>■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업무처리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 (모범사례)</li> </ul>	모범 사례
민원 처리	<b>■ 처리기한 미준수 및 연장처리 부적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리기한을 준수하며, 서신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연장은 연장사유·예정처리기한을 명확히 한 공문 또는 법정서식에 의할 것 (행정인사과, 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은행과, 보험과, 중소기업과, 서민금융과, 응용기획팀)</li> </ul>	주의
	<b>■ 이첩민원 해소노력 필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보 등에 국민신문고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일 필요 (산업금융과)</li> </ul>	권고

## □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각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

###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다. 개선·개선통보·시정·권고사항은 2월 이내

###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자체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첨 16> '11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출납관리 서류 편철·관리 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 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li> <li>-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월별 출납서류에 출납계산서 등 일부 서식을 누락하여 편철</li> <li>○ 「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 집행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li> <li>- 그러나 자본시장과는 일반수용비 집행에 있어 생수 구입권 등 일부건 품의서 누락</li> <li>○ [조치요구사항] 예산집행 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하고, 수용비 집행시 품의서 누락 사례가 없도록 할 것</li> </ul>	주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집행 서류의 편철·관리에 철저를 기하</li> <li>○ 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li> </ul>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p>판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p>	<p>○ [지적사항]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32조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판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p> <p>- 그러나 금융정책과 등은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월별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p> <p>○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p> <p>- 그러나,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은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 미기재</p> <p>○ [조치요구사항] 매월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준수하고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기재할 것</p>	주 의	<p>○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p>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일상감사 의뢰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은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으로 규정</li> <li>- 그러나 기획행정실은 FIU 인건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본부 인건비에서 8,000만원을 전용(11.12.23)하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함</li> <li>○ [조치요구사항] 향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전용건에 대하여 반드시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등 「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li> </ul>	주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li> </ul>	조치완료

지적사항명	조치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조치상황
이첩민원 해소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산업금융과 민원의 경우 대부분이 신보 기보, 캠프 관련 민원으로 접수민원의 92% 가량을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 이는 해당 공공기관에 국민신문고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 국민신문고 구축시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li> <li>○ [조치요구사항] 산업금융과장은 신보 등에 국민신문고를 구축을 협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회신과 함께 이첩에 따른 행정업무를 감소시킬 필요</li> </ul>	권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보등 당해 기관과 협의중 (산업금융과)</li> </ul>	추진중
민원처리기한 미준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처리기한 준수율은 98.3%로 '10년 점검 시의 95.8%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 평균 99.5% 보다는 낮은. 또한 일부 서신민원(방문·우편)의 경우 당해 민원인에게 처리기한 연장통보 없이 국민신문고상으로만 연장처리</li> <li>○ [조치요구사항] 법정 처리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신민원의 처리기한 연장 통보는 반드시 공문 또는 법정 서식에 의할 것</li> </ul>	주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처리기한 등을 준수토록 해당부서에 주의/조치하는 한편 감사결과 전직원 공람</li> </ul>	조치완료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3. 최근 3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채용현황 및 처우 현황 정리

□ 최근 3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채용현황

연도	장애인 채용현황 (총 고용인원)	국가유공자 채용현황 (총 고용인원)
2009	- (6명)	- (4명)
2010	- (6명)	- (4명)
2011	3명 (9명)	- (4명)
2012	1명 (8명)	1명 (4명)

※ 처우는 비장애인 공무원 및 비유공자 공무원과 동일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4. 최근 3년간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연도별 예산, 구매절차, 구매일자, 구매품목 및 업체 등)

#### □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단위: 천원)

소관	구매 일자	구매 품목	업체명	구매 절차	금액
본부	09.1.14	다이어리, 수첩제작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수의	18,040
	09.1.30	문서파일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1,250
	09.2.19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10,091
	09.4.20	비누	한국장애우마을	수의	165
	09.4.20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690
	09.4.30	비누	두레장애인작업장	수의	132
	09.6.9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690
	09.8.14	각티슈	장애인재활센터	수의	143
	09.8.21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690
	09.9.17	종이컵	양주시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수의	40
	09.9.22	문구류, 휴지 등	한국장애우마을	수의	100
	09.10.30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1,126
	09.12.24	복사용지, 문서보존상자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1,094
	09.12.28	다이어리, 수첩제작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수의	13,860
	10.3.10	다이어리, 수첩제작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수의	3,046

소관	구매 일자	구매 품목	업체명	구매 절차	금액
	10.4.15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645
	10.5.14	각티슈	장애인재활센터	수의	143
	10.7.8	문구류, 휴지 등	한국장애우마을	수의	110
	10.10.21	인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수의	17,295
	10.11.12	인쇄 3건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수의	49,968
	10.12.24	인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수의	25,230
	10.12.29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1,943
	10.12.29	다이어리, 수첩제작	(사)한국장애인 이워크협회	수의	26,950
	11.3.15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455
	11.6.20	인쇄	(사)한국장애인 이워크협회	수의	4,784
	11.6.29	인쇄	(사)한국장애인 이워크협회	수의	15,962
	11.7.5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627
	11.8.8	복사용지	늘푸른직업재활원	수의	418
	11.8.16	인쇄	사회복지법인 헤든디자인플러스	수의	4,748
	11.9.23	복사용지	행복한나무(중증장애인)	수의	438
	11.9.28	인쇄	사회복지법인 헤든디자인플러스	수의	4,576
	11.10.7	각티슈	장애인재활센터	수의	143
	11.10.20	복사용지	늘푸른제지(장애인)	수의	410
	11.10.20	인쇄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수의	22,786
	11.11.4	인쇄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수의	28,489
	11.11.22	인쇄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수의	23,703
	11.12.1	인쇄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수의	25,629

소관	구매 일자	구매 품목	업체명	구매 절차	금액
	11.12.7	복사용지	행복한나무(중증장애인)	수의	1,314
	11.12.21	범령집제작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수의	16,418
	11.12.28	다이어리, 수첩제작	(사)한국장애인 이워크협회	수의	23,716
	12.3.22	복사용지	(사)한국근로장애인 진흥회	수의	666
	12.4.18	인쇄 2건	(사)한국장애인 이워크협회	수의	25,957
	12.5.31	인쇄	(사)한국장애인 이워크협회	수의	15,499
	12.6.19	복사용지	(사)한국근로장애인 진흥회	수의	1,468
기획조정관실	09.4.15	복사 용지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수의	690
	09.6.2	복사 용지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수의	843
	09.7.29	정부 화일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수의	750
	09.7.29	복사 용지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수의	920
	09.9.22	복사 용지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380
	09.10.28	복사 용지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수의	805
	09.11.1	복사 용지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수의	645
	09.12.16	복사 용지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수의	645
	10.1.14	복사 용지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25
	11.7.22	복사 용지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수의	627
	11.10.13	인쇄비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수의	2,624
	11.10.13	인쇄비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수의	1,505
	11.10.13	인쇄비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수의	4,192
	11.10.13	인쇄비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수의	4,045
	11.10.13	인쇄비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수의	2,869
	11.10.13	인쇄비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수의	1,027
	11.10.31	복사 용지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수의	2,035
	11.12.28	복사 용지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수의	660

소관	구매 일자	구매 품목	업체명	구매 절차	금액
	12.3.30	복사 용지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수의	657
	12.5.15	인쇄비	한국척수장애인 협회	수의	2,422
	12.5.15	인쇄비	한국척수장애인 협회	수의	1,179
	12.5.15	인쇄비	한국척수장애인 협회	수의	657
	12.6.27	복사 용지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수의	438
대변인실	09.5.27	복사 용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1,304
	09.6.29	복사 용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920
	09.11.3	복사 용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460
	10.4.29	복사 용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645
	10.7.6	복사 용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1,089
	10.8.24	복사 용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1,587
	10.10.12	복사 용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1,016
	10.11.4	복사 용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983
	11.3.28	사무용품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175
	11.8.19	복사 용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535
	11.9.20	복사 용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754
	11.10.7	인쇄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수의	1,796
	11.10.11	복사 용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754
	11.11.3	복사 용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754
	11.11.25	복사 용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754
	11.12.16	복사 용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4,524
	12.4.20	복사 용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754

소관	구매 일자	구매 품목	업체명	구매 절차	금액
	12.4.25	복사 용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754
	12.5.23	복사 용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754
	12.6.12	복사 용지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754
금융정책국	09.04.16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수의	2,662
	09.08.10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수의	3,816
	09.11.25	사무용품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수의	2,596
	10.02.02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수의	1,935
	10.03.16	사무용품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수의	1,975
	10.04.27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수의	3,440
	10.11.10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수의	4,580
	10.11.10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수의	1,305
	10.12.17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수의	572
	11.02.17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수의	3,706
	11.06.08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수의	3,066
	11.10.27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수의	3,669
	11.10.27	자료제작	사회적 기업노란들판	수의	1,558
	11.10.27	자료제작	사회적 기업노란들판	수의	255
	12.04.17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수의	4,051
	12.04.17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수의	1,565
	12.06.18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	수의	2,212
금융 서비스국	09.5.29	복사용지, 행정봉투, 정부화일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2,648
	09.6.29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수의	4,423

소관	구매 일자	구매 품목	업체명	구매 절차	금액
		행정봉투, 정부화일, 보존상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9.9.29	복사용지, 정부화일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3,125
	10.2.3	복사용지, 정부화일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845
	10.5.14	복사용지, 정부화일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371
	10.6.11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106
	10.7.15	복사용지, 보존상자, 행정봉투, 정부화일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594
	10.10.8	복사용지, 보존상자, 행정봉투, 정부화일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809
	10.11.11	복사용지, 보존상자, 정부화일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435
	10.11.19	복사용지, 보존상자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966
	11.2.11	복사용지, 정부화일, 보존상자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2,037
	11.3.18	복사용지, 정부화일, 보존상자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2,085
	11.5.4	복사용지, 정부화일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2,221
	11.6.23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095
	11.8.4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628
	11.9.28	복사용지, 정부화일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658
	11.9.28	재생 프린터 토너	협신사무기 ((주)제이케이오에이)	수의	858

소관	구매 일자	구매 품목	업체명	구매 절차	금액
	11.10.12	인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수의	782
	11.10.31	재생 프린터 토너	협신사무기 ((주)제이케이오에이)	수의	990
	11.11.14	복사용지, 정부화일, 행정봉투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576
	11.11.28	재생 프린터 토너	협신사무기 ((주)제이케이오에이)	수의	1,800
	11.12.15	복사용지, 정부화일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721
	11.12.27	재생 프린터 토너	협신사무기 ((주)제이케이오에이)	수의	420
	12.2.10	복사용지, 정부화일, 보존상자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2,412
	12.3.15	재생 프린터 토너	협신사무기 ((주)제이케이오에이)	수의	100
	12.3.27	복사용지, 정부화일, 보존상자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552
	12.5.2	재생 프린터 토너	협신사무기 ((주)제이케이오에이)	수의	420
	12.6.8	복사용지, 정부화일, 보존상자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2,852
자본시장국	10.03.24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2,663
	10.06.04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2,406
	10.10.12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3,041
	10.12.14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3,010
	11.04.14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2,127
	11.04.25	재생 프린터 카트리지	협신사무기	수의	660
	11.05.27	재생 프린터 카트리지	협신사무기	수의	1,089

소관	구매 일자	구매 품목	업체명	구매 절차	금액
	11.06.28	재생프린터 카트리지	협신사무기	수의	198
	11.07.26	재생프린터 카트리지	협신사무기	수의	330
	11.08.29	재생프린터 카트리지	협신사무기	수의	990
	11.09.02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2,081
	11.11.23	재생프린터 카트리지	협신사무기	수의	1,430
	11.11.29	재생프린터 카트리지	협신사무기	수의	462
	11.12.09	재생프린터 카트리지	협신사무기	수의	660
	12.01.25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2,660
	12.02.17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2,206
	12.02.29	재생프린터 카트리지	협신사무기	수의	660
	12.03.26	재생프린터 카트리지	협신사무기	수의	924
공자위사무국	09.12.17	사무용품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150
	10.03.30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860
	10.05.11	사무용품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985
	10.10.28	사무용품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173.5
	10.12.24	사무용품	열린마음 장애인재활센터	수의	143
	10.12.24	사무용품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916
	11.05.23	사무용품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001
	11.09.14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876
	11.10.11	각티슈	열린마음 장애인재활센터	수의	143
	11.11.15	사무용품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25
	12.01.16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876
	12.07.09	복사용지	한국 근로장애인 진흥회(사)	수의	159.2

소관	구매 일자	구매 품목	업체명	구매 절차	금액
	12.07.09	각티슈	행복한나무(주)	수의	181.5
금융정보 분석원	09.3.19	종이컵, 행정봉투 등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929
	09.6.8	복사용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2,990
	09.9.30	복사용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2,943
	10.5.25	복사용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2,214
	10.10.28	파일 및 문서보존상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339
	10.12.15	복사용지 및 행정봉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2,125
	10.12.24	09년 연차 보고서발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수의	9,625
	11.4.21	복사용지 및 행정봉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460
	11.6.17	행정봉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460
	11.6.20	종이컵	장애인재활센터	수의	110
	11.7.5	복사용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의	1,314
	11.7.29	종이컵	장애인재활센터	수의	110
	11.10.7	종이컵	장애인재활센터	수의	110
	11.11.23	책자 발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수의	4,359
	12.2.15	종이컵	장애인재활센터	수의	110
	12.6.14	종이컵	장애인재활센터	수의	330
	12.8.7	종이컵	장애인재활센터	수의	220
글로벌 금융과	09.04.27	행정물품	서울시립장애인	수의	230
	09.06.22	행정물품	서울시립장애인	수의	267
	09.07.28	복사지	서울시립장애인	수의	470
	09.09.17	복사지	서울시립장애인	수의	690

소관	구매 일자	구매 품목	업체명	구매 절차	금액
	09.11.26	복사지	서울시립장애인	수의	360
	10.02.25	복사지	서울시립장애인	수의	322
	10.05.10	행정물품	서울시립장애인	수의	430
	10.06.28	행정물품	서울시립장애인	수의	504
	10.10.05	행정물품	서울시립장애인	수의	458
	11.05.25	복사지	서울시립장애인	수의	329
	11.08.03	복사지	서울시립장애인	수의	548
	11.10.27	복사지	서울시립장애인	수의	548
	11.12.02	복사지	서울시립장애인	수의	548
	11.12.27	복사지	서울시립장애인	수의	673
국제협력팀	11.12.07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438
	11.12.22	복사용지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수의	657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5. 최근 3년간 인력운용 현황(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 □ 정규직 및 전문계약직, 비정규직 현황

##### ○ 공무원 현황 - 2009년 말

(단위: 명)

직 급 부 서	정무직		고위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이하		기타*		계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위원장실	1	1					1	1	2	2				2	4	6
부위원장실	1	1							1	1			1	2	3	4
사무처장실			1	1											1	1
상임위원실			2	2									1		2	3
증선위원실			1	1											1	1
행정인사과					1		1	2	3	3	7	6	1	1	13	12
대변인실			1	1			1		3	1		2			5	4
기획재정			1	1			1	2	5	3	2	2	1		10	8
규제개혁법무							2	1	2	3	3	3			7	7
감사담당관실							1	1	3	3	2	2		1	6	7
금융정책과			1	1	1	1	1	1	6	4	2	3	2	1	13	11
금융시장분석과							2	1	5	5	2	1	1	1	10	8
금융구조개선과							2	1	4	4	1	1	1		8	6
산업금융과						1	2	1	5	4	2	2	1	1	10	9
글로벌금융과							2	2	4	5	1	1	1	1	8	9
국제협력팀							1	1	3	2	1	1			5	4
은행과			1	1	1		1	2	5	4	2	3	1	1	11	11
보험과							2	1	4	4	2	2	1		9	7
중소서민금융과							2	1	5	5	2	1	1		10	7
자본시장과			1	1	1	1	1	1	5	5	3	2	1	1	12	11
자산운용과							2	1	4	4	2	2			8	7
공정시장과							2	1	3	5	2	2			7	8
금융정보분석원			1	1	1	1	4	4	26	22	12	13	8	9	52	50
공자위 사무국			1	1			2	2	4	4	4	3			11	10
파견 등						1		6		1				1		9
계	2	2	11	11	5	5	33	33	102	94	52	52	21	23	226	220

\* 기능직 및 특정직(경찰)

- 2010년 말

(단위: 명)

직 급 부 서	정무직		고위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이하		기타*		계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위원장실	1	1					1	1	2	2				2	4	6
부위원장실	1	1							1	1			1	2	3	4
사무처장실			1	1											1	1
상임위원실			2	2										1	2	3
증선위원실			1	1											1	1
행정인사과					1		1	1	3	4	7	7	1	1	13	13
대변인실			1	1			1	1	3	2	2	2			7	6
기획재정			1	1			1	2	4	2	2	2	1		9	7
규제개혁법무							2	2	2	3	3	3			7	8
감사담당관실							1	1	3	3	2	1		1	6	6
금융정책과			1	1	1	1	1	1	9	5	2	2	2	1	16	11
금융시장분석과							2	1	5	5	2	2	1	1	10	9
산업금융과							2	2	5	4	2	2	1	1	10	9
금융소비자과							2	2	4	4	1	1			7	7
글로벌금융과							2	2	4	2	1	1			7	5
국제협력팀							1	1	3	2	1	1			5	4
은행과			1	1	1		1	2	4	4	2	2	1	1	10	10
보험과						1	2	1	4	4	2	2	1		9	8
중소금융과							2	1	5	5	2	2	1		10	8
서민금융팀							1	1	3	3	1	1			5	5
자본시장과			1	1	1		1	1	5	6	2	2	1	1	11	11
자산운용과							2	2	3	3	2	2			7	7
공정시장과							2	1	3	4	2	1			7	6
금융정보분석원			1	1	1	1	4	3	26	26	12	12	8	9	52	52
공자위 사무국			1	1			2	2	4	4	5	4			12	11
파견 등				2		1		3		5		1				12
계	2	2	11	13	5	4	34	34	105	103	55	53	19	21	231	230

\* 기능직 및 특정직(경찰)

- 2011년 말

(단위: 명)

직 급 부 서	정무직		고위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이하		기타*		계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위원장실	1	1					1	1	1	1	1	1	2	1	6	5
부위원장실	1	1							1	1			1	1	3	3
사무처장실			1	1									1	1	2	2
상임위원실			2	2											2	2
증선위원실			1	1											1	1
행정인사과					1	1	1	1	4	3	6	7	2	2	14	14
대변인실			1	1			1	1	2	1	2	2			6	5
기획재정			1	1			2	2	3	2	2	2			8	7
규제개혁법무							2	2	3	3	5	5			10	10
감사담당관실							1	1	4	3	1	1	1	1	7	6
금융정책과			1	1	1	1	2	2	8	8	2	2	1	1	15	15
금융시장분석과							2	2	5	5	2	1	1	1	10	9
산업금융과							1	1	5	5	2	2			8	8
금융소비자과							1	1	5	4	1	1			7	6
글로벌금융과							2	2	4	3	1	1			7	6
국제협력팀							1		3	2	1	1			5	3
은행과			1	1	1	1	1	1	5	4	3	3			11	10
보험과							2	1	4	5	2	2			8	8
중소금융과							2	1	5	5	2	2			9	8
서민금융팀							1	1	3	2	1	1			5	4
자본시장과			1	1	1		1	2	5	5	2	1	1	1	11	10
자산운용과							2	1	3	3	2	2			7	6
공정시장과							2	1	3	4	2	1			7	6
금융정보분석원			1		1		4	5	26	26	13	13	7	7	52	51
공자위 사무국			1	1			2	2	4	4	5	5			12	12
파견 등				2		3		5		3		1		3		17
계	2	2	11	12	5	6	34	36	106	102	58	57	17	19	233	234

\* 기능직 및 특정직(경찰)

- 2012년 9월 현재

(단위: 명)

직 급 부 서	정무직		고위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이하		기타*		계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위원장실	1	1					1	1	1	1	1	1	1	1	5	5
부위원장실	1	1							1	1	1	1			3	3
사무처장실			1	1											1	1
상임위원실			2	2											2	2
중선위원실			1	1											1	1
행정인사과							2	2	4	3	6	6	2	2	14	13
대변인실			1	1			1	1	2	2	2	2			6	6
기획재정			1	1	1	1	1	1	4	4	2	1			9	8
규제개혁법무							2	2	3	2	4	5			9	9
감사담당관실							1	1	3	3	1	1	1	1	6	6
금융정책과			1	1	1	1	3	3	8	6	3	3			16	14
금융시장분석과							1	1	5	4	1		1	1	8	6
산업금융과						1	3	2	6	5	2	2			11	10
글로벌금융과							2	2	3	3	2	2	1	1	8	8
신성장금융팀							1	1	2	2	1				4	3
국제협력팀							1	1	2	2	1	1			4	4
은행과			1	1			3	2	5	6	3	3			12	12
보험과							1	1	5	5	2	2			8	8
전자금융팀							1	1	3	2	1	1	1	1	6	5
중소금융과			1	1			2	1	5	6	2	2			10	10
서민금융과							2	2	4	4	2	2			8	8
금융소비자과							1	1	4	3	1	1			6	5
자본시장과			1	1	1	1	1	1	5	4	2	2	1	1	11	10
자산운용과					1	1			4	3	2	2			7	6
공정시장과							1	1	4	4	2	1			7	6
금융정보분석원			1	1	1		4	5	26	24	15	14	8	8	55	52
공자위 사무국			1	1			2	2	4	4	5	5			12	12
파견 등						1		3		2		2		1		9
계	2	2	12	12	5	6	37	38	113	105	64	62	16	17	249	242

\* 기능직 및 특정직(경찰)

○ 전문계약직 현황

연 도	부 서	인 원
2009	대변인실	가급 2명, 나급 1명
	금융정책국	가급 1명
2010	대변인실	가급 2명, 나급 1명
	금융정책국	가급 1명
2011	대변인실	가급 2명, 나급 1명
	금융정책국	가급 1명
	행정인사과	나급 1명
2012	대변인실	가급 2명, 나급 1명
	금융정책국	가급 1명
	행정인사과	나급 1명

○ 비공무원 인원

- 연도별 비공무원 인원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말 기준)
비공무원 (비율, %)	24	40	38	40
무기계약직	13	13	21	27
기간제	11	27	17	13

- 부서별 비공무원 고용현황

연 도	본 부	대변 인실	기획 조정관실	금융 정책국	금융 서비스국	자본 시장국	금융정보 분석원	공자위 사무국	합 계
09	6	2	5	2	1	2	4	2	24
10	9	2	6	7	4	3	6	3	40
11	7	2	7	8	4	3	5	2	38
12	12	1	7	4	5	3	5	3	40

□ 인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단위: 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말기준)
기간제	17	27	17	13
무기계약직	7	13	21	27
기간제⇒무기 계약직 전환 인원	0	6	8	6

□ 청년 인턴 채용 현황(규모, 기간, 예산, 실제업무, 중도퇴  
사자 현황 등)

(단위: 명)

	09년	10년	11년	12년
채용인원	8	5	0	0
중도탈락인원	7	3	-	-
계약종료인원	1	2	-	-
계약연장 및 정규직 채용인원	0	0	-	-
평균 근무기간	2~3월	4~5월		
업무	배치부서별 전공분야 관련 업무			

※ 월급여: 시급 4,460원 월 699000원 실수령(644,000원)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6. 최근 3년간 임직원들 퇴직현황 및 그 사유

성명	퇴직일	퇴직사유
정○○	09.01.05	명예퇴직
노○○	09.01.08	의원면직
이○○	09.01.09	의원면직
전○○	09.01.20	의원면직
홍○○	09.03.17	의원면직
양○○	09.03.26	명예퇴직
김○○	09.04.30	의원면직
나○○	09.05.13	명예퇴직
한○○	09.05.15	의원면직
박○○	09.09.11	명예퇴직
김○○	09.10.12	의원면직
김○○	09.11.17	명예퇴직
이○○	09.11.19	의원면직
김○○	10.02.17	의원면직
나○○	10.03.02	의원면직
임○○	10.04.15	명예퇴직
서○○	10.04.15	의원면직
김○○	10.06.17	의원면직
김○○	10.08.23	의원면직
남○○	10.10.14	의원면직
임○○	10.12.06	의원면직
진○○	11.01.03	의원면직
최○○	11.02.16	명예퇴직
권○○	11.03.26	의원면직
이○○	11.03.27	임기만료
김○○	11.05.02	명예퇴직
안○○	11.06.02	의원면직
공○○	11.09.23	명예퇴직
남○○	11.09.28	의원면직
김○○	11.12.28	과면
이○○	12.01.01	계약만료
박○○	12.02.27	의원면직

성 명	퇴직일	퇴직사유
원○○	12.03.14	명예퇴직
이○○	12.03.21	의원면직
김○○	12.05.18	의원면직
이○○	12.05.21	명예퇴직
김○○	12.05.26	명예퇴직
진○○	12.07.02	명예퇴직
김○○	12.08.02	의원면직
전○○	12.08.13	명예퇴직
김○○	12.08.17	의원면직
김○○	12.08.31	의원면직
오○○	12.09.01	명예퇴직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파견현황 및 파견이유 (외부에서 기관으로 파견된 사례 포함)

#### □ 파견현황

##### ○ 타 기관에서의 금융위 파견 현황

기 관 연 도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계
2009년~ 2011년	검사 3명	4급 1명	4급 1명	총경 1명	28명
	5급 3명	5급 2명	5급 3명	경정 4명	
	6급 1명	6급 2명	6급 2명	경감 2명	
	7급 1명	7급 1명	7급 1명		
	8명	6명	7명	7명	
2012년	검사 4명	4급 1명	4급 1명	총경 1명	32명
	5급 3명	5급 2명	5급 3명	경정 4명	
	6급 1명	6급 3명	6급 3명	경감 3명	
	7급 1명	7급 1명	7급 1명		
	9명	7명	8명	8명	

#### <참고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검사의 정원은 4명(「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받아 보직하는 검사를 말한다)을, 총경의 정원은 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④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법무부,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은 국세청, 8명(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은 관세청, 8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3명)은 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 금융위 직원 외부 파견 현황

- 첨부 엑셀파일 참조

직원 파견현황(국외)

계급	성명	기간	유학국가	파견사유
행정주사	이OO	07.12.27~10.06.26	프랑스	국외훈련
서기관	김OO	07.6.18~08.12.17	미국	국외훈련
서기관	손OO	07.6.26~09.6.25	미국	국외훈련
서기관	이OO	07.7.19~09.7.18	영국	국외훈련
서기관	최OO	08.01.03~08.12.31	미국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이OO	08.06.18~10.06.17	미국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선O	08.06.23~10.06.22	미국	국외훈련
서기관	윤OO	08.06.25~09.12.24	미국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이OO	08.07.03~10.05.03	스위스	국외훈련
서기관	최OO	08.09.01~10.02.28	미국	국외훈련
행정주사	조OO	08.12.7~09.5.16	영국	국외훈련
서기관	김O	09.01.03~09.12.31	미국	국외훈련
서기관	박OO	09.03.18~10.09.17	홍콩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김OO	09.06.27~11.06.24	미국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고OO	09.07.13~11.07.12	미국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이OO	09.08.02~11.07.25	미국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김OO	09.10.01~10.09.30	일본	국외훈련
서기관	이OO	09.11.17~10.11.16	중국	국외훈련
행정주사	목OO	09.11.30~10.5.09	호주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박OO	10.01.03~10.12.31	미국	국외훈련
서기관	성OO	10.01.03~10.12.31	미국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손OO	10.01.05~11.12.31	미국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김OO	10.06.16~11.06.17	미국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박OO	10.06.28~12.06.27	미국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이OO	10.07.21~12.06.20	미국	국외훈련
서기관	김OO	10.07.22~12.01.21	미국	국외훈련
행정주사	최OO	10.08.02~11.01.11	영국	국외훈련
행정주사	이OO	10.09.29~현재	중국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조OO	10.09.30 - 현재	일본	국외훈련
서기관	송OO	10.12.13~12.06.12	호주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김OO	10.10.24~11.04.04	영국	국외훈련
행정주사	채OO	11.01.03~11.06.06	프랑스	국외훈련
서기관	변OO	11.01.05~현재	미국	국외훈련
행정주사	정OO	11.06.13~11.12.03	영국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오OO	11.06.20~현재	네덜란드	국외훈련
행정주사	최OO	11.06.27~11.12.23	영국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김OO	11.07.05~현재	말레이시아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김OO	11.07.17~현재	미국	국외훈련
서기관	윤OO	11.07.25~현재	캐나다	국외훈련
서기관	하OO	11.08.17~현재	미국	국외훈련
행정주사	김OO	11.09.09~현재	카타르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주OO	11.09.16 - 현재	미국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전OO	11.09.26 - 현재	일본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김OO	11.11.15~12.5.4	중국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박OO	12.01.30-현재	한국	국내외연계훈련
행정사무관	이OO	12.02.06-현재	베트남	국외훈련
행정주사	변OO	12.04.02-현재	모로코	국외훈련
서기관	김OO	12.06.06-현재	미국	국외훈련
서기관	윤OO	12.07.22-현재	미국	국외훈련
서기관	김OO	12.07.23-현재	영국	국외훈련
서기관	남OO	12.07.25-현재	미국	국외훈련
행정사무관	신OO	12.07.29-현재	영국	국외훈련

직원 파견현황(국내)

계급	성명	파견기간	파견기관	파견사유
고위공무원	진OO	08.02.13~09.02.08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고위공무원	김OO	08.04.07~09.02.0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타기관 파견
서기관	신OO	08.04.21~09.01.22	미래기획단	타기관 파견
서기관	김OO	08.04.07~09.01.2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타기관 파견
서기관	이OO	08.04.07~09.03.1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타기관 파견
서기관	이OO	08.04.18~10.02.04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타기관 파견
행정사무관	이OO	08.04.21~09.09.10	미래기획단	타기관 파견
서기관	김OO	08.04.21~09.03.19	대통령실	타기관 파견
서기관	배OO	08.04.21~09.01.22	대통령실	타기관 파견
서기관	남OO	08.04.10~08.10.09	서울특별시	타기관 파견
행정주사	강OO	08.04.21~09.02.15	대통령실	타기관 파견
고위공무원	이OO	09.08.31~10.01.2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타기관 파견
고위공무원	정OO	08.12.31~09.12.06	기업재무개선지원단	타기관 파견
서기관	유OO	09.10.01~10.04.19	국무총리실	타기관 파견
서기관	최OO	09.01.23~10.02.0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타기관 파견
고위공무원	이OO	09.02.11~10.02.10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서기관	김OO	09.08.25~10.01.28	대통령실	타기관 파견
서기관	신OO	09.02.25~10.02.18	미래기획단	타기관 파견
서기관	남OO	08.12.01~10.01.03	기업재무개선지원단	타기관 파견
행정사무관	이OO	09.09.11~10.03.10	대통령실	타기관 파견
행정사무관	강OO	09.02.12~09.08.30 09.10.12~11.01.31	G20기획단	타기관 파견
행정사무관	김OO	09.02.12~10.11.30	G20기획단	타기관 파견
행정사무관	송OO	08.12.01~10.03.15	기업재무개선지원단	타기관 파견
행정사무관	김OO	09.05.19~10.11.30	기업재무개선지원단	타기관 파견
부이사관	박OO	09.04.01~09.08.16	대통령실	타기관 파견
서기관	이OO	09.03.12~09.06.25	대통령실	타기관 파견
행정사무관	이OO	08.09.24~10.02.23	국무총리실	타기관 파견
서기관	임OO	10.04.20~10.12.05	국무총리실	타기관 파견
고위공무원	이OO	09.12.10~11.11.30	기업재무개선지원단	타기관 파견

고위공무원	김OO	09.11.24~10.12.15	G20 준비위원회	타기관 파견
서기관	김OO	10.01.04~11.07.13	기업재무개선지원단	타기관 파견
고위공무원	이OO	10.01.27~11.01.26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서기관	유OO	10.02.03~10.11.30	G20 준비위원회	타기관 파견
행정사무관	서OO	10.03.16~11.11.30	기업재무개선지원단	타기관 파견
서기관	김OO	10.02.03~10.11.25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타기관 파견
고위공무원	이OO	10.02.03~11.02.0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타기관 파견
서기관	전OO	10.02.05~12.08.05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타기관 파견
서기관	전OO	10.02.19~11.02.08	미래기획위원회	타기관 파견
서기관	이OO	09.08.24~11.04.2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타기관 파견
서기관	안OO	09.10.19~12.08.05	미래기획위원회	타기관 파견
행정사무관	이OO	10.03.02~11.04.24	국무총리실	타기관 파견
부이사관	홍OO	09.09.18~10.07.25	대통령실	타기관 파견
서기관	탁OO	10.11.26~12.08.05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타기관 파견
서기관	김OO	10.12.06~12.02.08	국무총리실	타기관 파견
부이사관	원OO	11.02.01~12.01.30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고위공무원	이OO	11.02.03~11.12.03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서기관	최OO	11.03.14~11.11.28	대통령실	타기관 파견
서기관	신OO	11.03.14~11.09.25	대통령실	타기관 파견
고위공무원	이OO	11.03.09~11.05.1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타기관 파견
서기관	손OO	12.03.12~12.07.10	미래기획위원회	타기관 파견
행정사무관	이OO	11.04.25~현재	국무총리실	타기관 파견
서기관	전OO	12.02.07~12.08.26	대통령실	타기관 파견
고위공무원	이OO	11.05.20~12.03.3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타기관 파견
서기관	윤OO	11.04.25~12.07.2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타기관 파견
서기관	최OO	11.07.18~11.11.29	기업재무개선지원단	타기관 파견
행정주사보	김OO	11.10.24~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타기관 파견
고위공무원	이OO	12.02.06~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고위공무원	도OO	12.02.15~현재	외교안보연구원	교육파견
서기관	이OO	12.03.05~현재	대통령실	타기관 파견
서기관	김OO	12.03.12~현재	대통령실	타기관 파견
서기관	손OO	12.03.12~12.07.10	대통령실	타기관 파견

서기관	이OO	12.02.09~현재	국무총리실	타기관 파견
서기관	윤OO	12.02.14~12.08.05	미래기획위원회	타기관 파견
고위공무원	성OO	12.02.24~12.08.1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타기관 파견
서기관	박OO	12.07.23~현재	대통령실	타기관 파견
서기관	김OO	12.08.13~현재	대통령실	타기관 파견
고위공무원	김OO	12.08.14~현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타기관 파견
서기관	성OO	12.07.22~현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타기관 파견
서기관	강OO	12.08.06~현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타기관 파견
서기관	이OO	12.08.06~현재	미래기획위원회	타기관 파견
서기관	김OO	12.08.06~현재	미래기획위원회	타기관 파견
서기관	강OO	12.08.06~현재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타기관 파견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8. 최근 3년간 기관별 · 직급별 임금 · 연봉 현황 (정규직 및 비정규직(계약직) 구분)

#### □ 최근 3년간 임금 및 연봉 현황

##### ○ 공무원 급여체계(전 국가공무원 동일)

구 분	보수체계(단위 : 천원)
정무직	고정급적 연봉제 (장관급 : 106,273, 차관급 : 103,209)
고위공무원단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기준급+직무급+성과급) (기준급 : 51,524~76,700, 직무급 : 4,800~10,800, 성과급* : 전년 업무실적 반영)
과장급	성과급적 연봉제 (3급 : 53,632~79,837, 4급 : 42,449~73,036)
4급 이하 (과장급 제외)	봉급(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 4, 5, 8, 10의 봉급표) 수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성과급* : 전년 업무실적 반영 지급

#### <참고 : 직급별 급여 지급 총액>

(단위 : 백만원)

연 도 직 급	2009	2010	2011	2012.8
장관급	113	116	119	82
차관급	112	110	113	78
고위공무원	1,181	1,363	1,366	1,049
부이사관	369	298	420	251
서기관	2,707	2,856	3,054	2,131
사무관	5,149	5,277	5,954	4,210
6급 이하	2,450	2,495	2,855	2,129
계약직	605	871	922	679
특정직(경찰)	409	367	420	316
계	13,095	13,753	15,223	10,925

○ 비 공무원 급여

- 월평균 급여 : 약 130만원 내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준용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9. 최근 3년간 직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과 관련 연도별 지급현황(지급인상률 및 지급액)

#### □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현황

연 도	지급 대상	지급예산
2009	○ 성과연봉(44명) - 연봉제 공무원(과장급 이상, 계약직) ○ 성과상여금 - 4급(호봉제) 및 5급 이하 : 173명	633,642천원
2010	○ 성과연봉(50명) - 연봉제 공무원(과장급 이상, 계약직) ○ 성과상여금 - 4급(호봉제) 및 5급 이하 : 172명	677,161천원
2011	○ 성과연봉(55명) - 연봉제 공무원(과장급 이상, 계약직) ○ 성과상여금 - 4급(호봉제) 및 5급 이하 : 210명	680,607천원
2012	○ 성과연봉(54명) - 연봉제 공무원(과장급 이상, 계약직) ○ 성과상여금 - 4급(호봉제) 및 5급 이하 : 220명	795,129천원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10. 최근 3년간 연도별 급료, 인건비 등 지출액 현황

☐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맞춤형 복지	통근버스 운행비	동호회 지원비	하계휴양 시설임차비	기타*	합계
09	101	-	4	-	10	115
10	118	28	5	10	3	164
11	129	27	5	10	11	182
12	85	18	5	12	4	124

\* 기타: 직원생일케익 구매, 체육행사 보험료, 예방접종 비용 등

☐ 최근 3년간 자녀 학자금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여비 지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지출액	비고
09	952	662	
10	1,153	871	
11	1,041	913	
12	1,009	596	

□ 최근 3년간 인건비 지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지출액	비고
09	14,313	13,589	
10	15,028	14,167	
11	16,350	15,646	
12	17,063	11,642	

\* 12년 금액은 모두 8월말 기준임.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11. 최근 3년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 □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 1. 중앙공무원교육원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행정안전부 주관)

##### 1)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 교육

- 목적 : 올바른 공직관 함양 및 관리자 역량 배양 등
- 실시기간 : 7급 신규자 과정(4주), 5급 승진자교육(6주)
- 교육대상 : 7급 신규 임용자 및 5급 승진자
- 훈련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 2)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 과정 및 외국어교육

- 목적 : 직무 능력 및 외국어 능력 향상
- 실시기간 : 교육과정별로 상이
- 교육대상 : 전 직원 대상
- 훈련기관 : 사이버중앙공무원교육원(<http://cyber.coti.co.kr>) 및 외국어교육업체(<http://mopas.winglish.com>)

## 2. 금융위원회 자체 직장 교육

### 1) 의무교육

- 목적 : 청렴, 안보교육 등을 통한 올바른 공직관 함양
- 실시기간 : 월 1회
- 교육대상 : 전 직원 대상
- 훈련기관 : 금융위원회 강당

### 2) 자체 금융교육

- 목적 : 금융 등 업무관련 상시교육을 통해 직원의 전문적 직무능력 향상
- 실시기간 : 월 2회
- 교육대상 : 희망자
- 지원조건 : 점심식사 제공
- 훈련기관 : 금융위원회 회의실

### 3) 민간위탁교육(전화영어)

- 목적 : 영어회화 능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
- 실시기간 : 교육과정별로 상이
- 교육대상 : 희망자
- 지원조건 : 수강료 일부 지원
- 훈련기관 : 민간위탁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12. 최근 3년간 교육훈련별 임직원 교육이수내역**

☐ 첨부 엑셀 파일 참조 - 별도제출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13. 최근 3년간 법인카드 발급 현황

#### □ 최근 3년간 연도별 발급현황 및 사용자

소관	연도	카드번호	용도	유효기간	사용자
본부	09	4067-0300-0036-3928	업무추진비	02/13	상임위원
	09	4067-0300-0044-5907	업무추진비	02/13	상임위원
	09	4067-0300-0036-2995	업무추진비	02/13	부위원장실
	09	4067-0300-0036-3985	업무추진비	02/13	기재단국장
	09	4067-0300-0045-4917	업무추진비	01/14	위원장
	09	4067-0300-0048-6901	업무추진비	06/14	위원장
	09	4067-0300-0036-3936	업무추진비	02/13	위원장실
	09	4067-0300-0036-3977	업무추진비	02/13	기재단과장
	09	4067-0300-0036-3951	업무추진비	02/13	행정인사과
	09	4067-0300-0049-4913	업무추진비	08/14	행정인사과
	10	4067-0300-0056-1992	일반수용비	10/15	행정인사과
	10	4067-0300-0050-7953	업무추진비	12/14	행정인사과
	10	4067-0300-0056-3915	업무추진비	11/15	행정인사과
	11	9470-0300-0046-3983	특근매식비	02/14	행정인사과
	11	4067-0300-0059-5982	업무추진비	03/14	행정인사과
	11	4067-0300-0059-8952	업무추진비	04/16	사무처장
	11	4067-0300-0056-9995	업무추진비	12/15	위원장실
	11	9470-0300-0061-5988	차량선탁비	02/13	기사실
기획조정관실	09	9470-0300-0048-2991	일반수용비	05/14	기획재정담당관실
	11	9470-0300-0061-0930	일반수용비	07/16	기획재정담당관실
	09	9470-0300-0050-1972	특근매식비	11/14	기획재정담당관실
	09	9470-0300-0041-7997	특근매식비	03/13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11	9470-0300-0061-5905	특근매식비	09/16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09	9470-0300-0041-8904	특근매식비	03/13	의사운영정보팀
	11	4067-0300-0041-2980	여비	02/13	기획재정담당관실
	11	4067-0300-0061-3991	여비	08/16	기획재정담당관실
	10	9470-0300-0041-2998	업무추진비	02/13	기획재정담당관실
	11	9470-0300-0041-3905	업무추진비	02/13	기획재정담당관실
	10	9470-0300-0041-3913	업무추진비	02/13	기획재정담당관실
	11	9470-0300-0044-0924	업무추진비	해지	기획재정담당관실

소관	연도	카드번호	용도	유효기간	사용자
				(11/11)	
	11	9470-0300-0049-8989	업무추진비	09/14	기획재정담당관실
	11	4067-0300-0058-6965	업무추진비	12/15	기획재정담당관실
	12	9470-0300-0064-7957	특근매식비	04/17	기획재정담당관실
대변인실	10	4067-1136-0802-2946	특근매식비	03/13	대변인실
	10	4067-1136-0802-2904	여비	03/13	대변인실
	11	4067-1136-0802-2912	업무추진비	03/13	정책홍보팀장
	11	4067-1136-0802-2920	업무추진비	03/13	대변인
	12	9470-1136-0940-5991	업무추진비	03/13	외신대변인
	12	9470-1136-1000-9949	업무추진비	12/14	대변인실
	12	9470-1136-1212-9943	업무추진비	06/17	정책홍보팀장
	10	9470-0300-0051-7960	특근매식비	01/15	금융정책국
	10	9470-0300-0051-8992	특근매식비	02/15	금융정책국
	10	9470-0300-0051-9909	업무추진비	02/15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국	11	4067-0300-0058-7948	업무추진비	01/16	금융정책국
	11	4067-0300-0061-0955	업무추진비	07/16	금융정책국
	11	4067-0300-0061-0948	업무추진비	07/16	금융정책국
	12	9470-0300-0064-4921	특근매식비	02/17	금융정책국
서비스국	09	4067-0300-0046-5962	특근매식비	03/14	보험과
	09	4067-0300-0048-9954	업무추진비	07/14	금융서비스국
	10	9470-0300-0051-9925	특근매식비	02/15	서민금융과
	10	4067-0300-0052-1962	업무추진비	03/15	금융서비스국
	10	4067-0300-0056-1976	업무추진비	10/15	금융서비스국
	11	4067-0300-0061-9998	업무추진비	11/16	중소서민 금융정책관
	11	9470-0300-0061-9972	특근매식비	11/16	금융소비자과
	11	9470-0300-0061-9980	특근매식비	11/16	전자금융팀
	11	9470-0300-0061-9964	특근매식비	11/16	금융서비스국
	12	4067-0300-0064-3972	업무추진비	01/17	금융서비스국
	12	4067-0300-0064-4913	업무추진비	01/17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국	09	4067-0300-0050-4950	특근매식비	12/14	자본시장과
	09	4067-0300-0050-4943	특근매식비	12/14	자본시장과
	09	4067-0300-0050-4968	특근매식비	12/14	자산운용과
	09	4067-0300-0050-4976	특근매식비	12/14	공정시장과
	09	4067-0300-0050-4927	일반수용비	12/14	자본시장국
	09	4067-0300-0050-4935	일반수용비	12/14	자본시장국
	09	4067-0300-0050-4984	국내여비	12/14	자본시장국
	09	4067-0300-0050-4992	국내여비	12/14	자본시장국
	09	4067-0300-0050-5908	국외여비	12/14	자본시장국
	09	4067-0300-0050-5916	국외여비	12/14	자본시장국
	09	4067-0300-0050-5924	업무추진비	12/14	자본시장국장
	09	4067-0300-0050-5932	업무추진비	12/14	자본시장국
	09	4067-0300-0050-5940	업무추진비	12/14	자본시장국
	09	4067-0300-0050-5957	업무추진비	12/14	자본시장국
	12	4067-0300-0061-6945	일반수용비	12/14	자본시장국
공자위 사무국	09	4067-0300-0049-2966	일반수용비	08/14	공자위사무국
	09	4067-0300-0049-2974	일반수용비	08/14	공자위사무국
	09	4067-0300-0049-3907	일반수용비	08/14	공자위사무국

소관	연도	카드번호	용도	유효기간	사용자
	09	4067-0300-0049-2990	일반수용비	08/14	공자위사무국
	09	4067-0300-0049-3915	특근매식비	08/14	공자위사무국
	09	4067-0300-0049-2982	특근매식비	08/14	공자위사무국
	09	4067-0300-0049-3923	여비	08/14	공자위사무국
	09	4067-0300-0049-3931	여비	08/14	공자위사무국
	09	4067-0300-0049-3949	여비	08/14	공자위사무국
	09	4067-0300-0049-3956	여비	08/14	공자위사무국
	09	4067-0300-0049-3972	업무추진비	08/14	공자위사무국
	09	4067-0300-0049-3964	업무추진비	08/14	공자위사무국
	09	4067-0300-0049-3980	업무추진비	08/14	공자위사무국
	09	4067-0300-0049-4905	업무추진비	08/14	공자위사무국
	09	4067-0300-0049-3998	업무추진비	08/14	공자위사무국
FIU	12	4067-0300-0064-8914	업무추진비	02/13	기획행정실장
글로벌 금융과	09	9470-0300-0045-4925	일반수용비	01/14	글로벌금융과
	11	9470-0300-0045-4941	국내여비	01/14	글로벌금융과
	11	9470-0300-0061-6903	업무추진비	09/16	글로벌금융과
	12	4067-0300-0045-4966	국외여비	01/14	글로벌금융과
	12	9470-0300-0046-1938	업무추진비	02/14	글로벌금융과
	12	4067-0300-0051-1922	업추비(국외)	01/15	글로벌금융과
	12	9470-0300-0051-1930	업무추진비	01/15	글로벌금융과
	12	4067-0300-0059-9992	업추비(국외)	05/16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팀	09	4067-0300-0048-8972	운영비	07/14	국제협력팀
	09	4067-0300-0048-8980	운영비	07/14	국제협력팀
	09	4067-0300-0048-8998	여비	07/14	국제협력팀
	09	4067-0300-0048-9905	여비	07/14	국제협력팀
	09	4067-0300-0048-9913	여비	07/14	국제협력팀
	09	4067-0300-0048-9921	업무추진비	07/14	국제협력팀
	09	4067-0300-0048-9947	업무추진비	07/14	국제협력팀
	09	4067-0300-0048-9939	업무추진비	07/14	국제협력팀
	09	9470-0300-0049-8906	업무추진비	09/14	국제협력팀
	09	9470-0300-0049-8914	업무추진비	09/14	국제협력팀
	09	4067-0300-0050-1949	업무추진비	11/14	국제협력팀
	09	4067-0300-0050-1956	업무추진비	11/14	국제협력팀

□ 포인트 적립액·사용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14. 최근 3년간 임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

#### ☐ 최근 3년간 징계 현황

징계자	징계종류	징계사유	징계일
○○○	견책	음주운전	'09. 1.16
○○○	감봉	금품수수	'09. 2.27
○○○	감봉	금품수수	'09. 2.27
○○○	견책	음주운전	'09. 2.27
○○○	파면	금품수수	'11.12.16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15. 최근 3년간 퇴직 임직원의 유관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연도, 퇴직일, 성명, 직급(직위), 퇴직시 및 퇴직전 1년간 담당업무, 재취업일, 재취업처, 직급(직위) 등)

### □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연도	퇴직일	이름	직위/직급	퇴직전부서	재취업처 및 직위
2009	'09.01.05	정○○	서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협회 부장
	'09.01.09	이○○	행정사무관	은행과	법무법인 변호사
	'09.01.20	전○○	위원장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09.01.20	홍○○	서기관	공정시장과	법무법인 변호사
	'09.03.26	양○○	실장	기획행정실	한국자금중개 전무
	'09.04.30	김○○	행정주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협회
	'09.05.13	나○○	서기관	감사담당관실	한국산업은행
	'09.05.15	한○○	서기관	금융위원회 (고용휴직)	신영증권 상무이사
	'09.09.11	박○○	부이사관	금융위원회 (타기관파견)	SK C&C 상무
	'09.10.12	김○○	행정사무관	금융위원회 (타기관파견)	-
	'09.11.17	김○○	원장	금융정보 분석원	한국증권금융 사장
	'09.11.19	이○○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2010	'10.02.17	김○○	전산서기보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한국거래소
	'10.03.02	나○○	행정사무관	행정인사과	정책금융공사 팀장
	'10.04.15	임○○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통화위원
	'10.04.15	서○○	일반계약직5호	자산운용과	정책금융공사 팀장
	'10.06.17	김○○	일반계약직5호	보험과	-
	'10.08.23	김○○	일반계약직5호	기획행정실	-

연도	퇴직일	이름	직위/직급	퇴직전부서	재취업처 및 직위
	'10.10.14	남○○	행정사무관	산업금융과	정책금융공사 팀장
	'10.12.06	임○○	서기관	금융위원회	파인트리 파트너스 (자산운용사)
2011	'11.01.03	진○○	위원장	금융위원회	송실대 객원교수
	'11.02.16	최○○	원장	금융정보 분석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11.03.27	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11.03.28	이○○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법무법인 변호사
	'11.05.02	김○○	고위공무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11.06.02	안○○	행정사무관	서민금융팀	-
	'11.09.23	공○○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실	금융감독원
	'11.09.28	남○○	팀장	국제협력팀	KT 상무
2012	'12.01.01	이○○	외신대변인	정책홍보팀	-
	'12.02.27	박○○	일반계약직5호	회수관리팀	-
	'12.03.14	원○○	과장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금융결제원 감사
	'12.03.21	이○○	국제협력관	금융정책국	두산그룹
	'12.05.18	김○○	행정사무관	금융소비자과	예금보험공사
	'12.05.21	이○○	과장	감사담당관실	신용보증기금 이사
	'12.05.26	김○○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사장
	'12.07.02	진○○	고위공무원	자본시장국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12.08.02	김○○	일반계약직5호	금융정책과	법무법인 변호사
	'12.08.13	전○○	서기관	금융위원회	Ibk 캐피탈 부사장
	'12.08.17	김○○	일반계약직5호	자산운용과	한국증권금융
	'12.08.31	김○○	일반계약직5호	기획행정실	-
	'12.09.04	오○○	전산사무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16.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관련

- ☐ 첨부 엑셀파일(해외출장현황) 및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연수보고시스템 ([btis.mopas.go.kr](http://btis.mopas.go.kr)) 참조(결과보고서)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이○○	대변인실	주무관	10.10.25~10.10.30	홍콩, 싱가포르	해외홍보 현장학습	₩ 788,500	-	-	\$ 185
이○○	대변인실	대변인	12.06.09~12.06.13	태국, 홍콩	한-태국 금융당국 MOU 체결	₩ 2,107,700	\$ 559	\$ 388	\$ 175
윤○○	대변인실	주무관	12.06.09~12.06.14	태국, 홍콩	한-태국 금융당국 MOU 체결	₩ 1,417,800	\$ 386	\$ 245	\$ 130
김○○	대변인실	사무관	11.12.06~11.12.10	중국 하이난, 홍콩	제4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 및 제6차 한중일 금융감독협력 세미나	₩ 1,263,200	\$ 273	\$ 176	\$ 120
송○○	기업재무 개선지원단	사무관	09.07.06~09.07.09	싱가포르	해운시장동향 파악 및 선박가치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 선박매입프로그램에 대한 해외은행상대 홍보 및 아시아시장의 현지반응 조사	₩ 625,500	\$ 190	\$ 236	\$ 120
이○○	행정인사과	주무관	09.11.29~09.12.12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국가정보원 주관 중앙행정기관 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자의 국외정책연수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서○○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사무관	10.11.24~10.11.26	일본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구조조정 진행상황 현지 조사	₩ 1,250,400	\$ 364	\$ 324	\$ 168
김○○	행정인사과	사무관	10.11.30~10.12.09	영국, 네덜란드	10년 (하반기) 해외성과관리 전문교육과정 출장	₩ 1,830,000	\$ 910	\$ 678	\$ 300
이○○외1인	행정인사과	사무관 주무관	10.12.09~10.12.11	일본	일본 금융청 면담	₩ 1,254,200	\$ 548	\$ 444	\$ 168
최○○외1인	행정인사과	주무관	10.12.15~10.12.18	홍콩	ASPM 국제컨퍼런스 참석	₩ 1,212,000	\$ 774	\$ 536	\$ 208
송○○	행정인사과	사무관	11.9.10~11.9.1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기준세미나(the IMF's Data Standards Initiatives Seminar) 참석	₩ 956,700	\$ 273	\$ 176	\$ 120
조○○	기획조정관	국장	09.01.15~09.01.17	일본	제4차 고위공무원 정책과정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105
이○○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09.04.27~09.05.01	러린	영국대사관 주관 런던회담연수	₩1,827,400	\$870	\$648	\$370
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09.08.26~09.09.02	스페인, 이탈리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1,610,000	\$570	\$472	\$331
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무관	10.06.22~10.06.29	헝가리, 슬로바키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1,813,900	\$522	\$360	\$328
정○○	기획조정관	국장	10.08.23~10.08.27	싱가포르	제3차 국장급 공무원 싱가포르 방문 프로그램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315

지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기적	숙박비	식사비	기타 여비
이○○외 3인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10.12.20~10.12.22	러던	고객확인제도 이행실태 및 임박사례조사	₩6,443,500	\$564	\$930	\$348
채○○외 1인	금융위원회 의사무영정보팀	상임위원 팀장	11.01.26~10.02.01	호주, 말레이시아	고위급 금융정책 당국자간 만남	₩8,211,700	\$752	\$696	\$420
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11.1.26~2.1	호주, 말레이시아	고위급 금융정책 당국자간 만남	₩4,456,400	\$472	\$432	\$240
최○○	의사무영정보팀	팀장	11.1.26~2.1	호주, 말레이시아	고위급 금융정책 당국자간 만남	₩3,755,300	\$280	\$264	\$180
박○○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11.3.13~3.20	아루바	에그용 그룹 회의 참석	₩2,950,100	\$725	\$567	\$210
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11.8.31~9.7	독일, 네덜란드	2011년 중앙은행기관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1,806,600	\$696	\$472	\$240
최○○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	11.9.25~10.1	미국	해외 국정감사 지원(미주)	₩2,796,200	\$750	\$567	\$224
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	11.9.25~10.1	영국, 독일	해외 국정감사 지원(근주)	₩2,615,400	\$682	\$501	\$210
박○○	시장분석과	사무관	09.03.01~09.03.04	동경	제10차 동경 라운드 타이틀 참석	₩ 575,000	\$ 542	\$ 324	\$ 120
진○○	시장분석과	사무관	09.05.17~09.05.23	파리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 세미나 참가	₩ 1,596,400	\$ 725	\$ 567	\$ 210
주○○	금융정책과	과장	09.06.29~09.07.04	프랑크푸르트, 파리	신진국 주요 정책금융기관 방문 및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해외 대응방안 논의	₩ 5,331,600	\$ 618	\$ 584	\$ 210
김○○	산업금융과	사무관				₩ 2,339,700	\$ 530	\$ 442	\$ 180
우○○	산업금융과	과장	10.01.10~10.01.14	룩셈부르크, 제네바	국제적 정부주도 금융규제 현황 등 논의	₩ 2,672,900	\$ 285	\$ 295	\$ 150
박○○	시장분석과	사무관	10.04.11~10.04.18	시애틀, 워싱턴, LA	미국의 금리체계 제도 운용 현황 비교 분석	₩ 4,161,710	\$ 770	\$ 604	\$ 370
이○○	금융소비자과	주무관	10.09.26~10.10.02	토론토, 오타와	캐나다 차등보험료율제 운영현황 등 조사	₩ 2,426,700	\$ 435	\$ 343	\$ 302
권○○외 2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790,700	주최측부담	\$ 261	\$ 150
	대변인실	외신대변인				₩ 561,500	주최측부담	\$ 132	\$ 210
	금융정책과	사무관	10.10.15~10.10.17	상하이	중국 국제금융포럼 참석	₩ 561,500	주최측부담	\$ 132	\$ 90
김○○외 1인	시장분석과	사무관	11.04.05~11.04.10	파리	OECD 금융시장위원회 회의 참석	₩ 2,047,600	\$ 580	\$ 486	\$ 0
	시장분석과	사무관	11.05.17~11.05.20	런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지원	₩ 2,253,600	\$ 290	\$ 324	\$ 120
	시장분석과	사무관	11.9.6~11.9.10	프랑스 파리	WGTM 회의 참석	₩ 2,446,700	\$ 334	\$ 405	\$ 150
박○○	금융제도팀	사무관	11.10.5~11.10.10	프랑스 파리	제113차 OECD 금융시장위원회 참석	₩ 2,289,900	\$ 676	\$ 486	\$ 18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기액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최○○	금융정책과	사무관	11.10.30~ 11.11.3	덴마크 코펜하겐	덴마크 주택금융시스템 조사	₩ 2,870,200	\$ 272	\$ 295	\$ 150
이○○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11.10.30~ 11.11.4	영국 런던	유럽단기자금시장 인프라 및 거래제도 현황 파악	₩ 2,402,200	\$ 600	\$ 486	\$ 180
최○○	글로벌금융과	과장 사무관	11.11.24~ 11.11.29	터키 영국	금융위험도와 터키, 영국 금융감독간 협력체계 구축	₩ 7,466,500	\$ 1,439	\$ 750	\$ 360
송○○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11.12.5~ 11.12.16	싱가포르	IMF 금융시장 및 신용융산업 세미나	₩ 753,650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김○○	금융정책과	사무관	12.4.17~ 11.4.21	프랑스 파리	제22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참석	₩ 2,387,200	\$ 450	\$ 405	\$ 150
송○○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12.4.25~ 11.4.29	프랑스 파리	제114차 OECD 금융시장위원회 참석	₩ 2,387,200	\$ 669	\$ 405	\$ 150
홍○○ 외 1인	산업금융과	과장 사무관	12.6.25~ 12.6.29	싱가포르, 태국	산업은행 민영화 및 IPO 추진	₩ 3,138,000	\$ 772	\$ 500	\$ 300
이○○ 외 1인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09.01.21~09.01.23	일본 동경, 싱가포르	한국 IR 개최	₩ 5,164,300	\$ 354	\$ 365	\$ 120
이○○		부위원장	09.01.28~09.02.01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Davos 포럼) 참석	₩ 4,822,300	\$ 660	\$ 468	\$ 200
이○○ 외 2인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09.01.31~09.02.06	영국 런던, 스위스 취리히	G-20 WGI 회의 참석 및 한국금융바로알리기 설명회	₩ 4,874,800	\$ 969	\$ 764	\$ 24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1,845,000	\$ 435	\$ 324	\$ 120
오○○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09.03.07~09.03.11	사우디 리야드	한-GCC FTA 제2차 협상참석	₩ 1,894,000	\$ 385	\$ 302	\$ 120
이○○ 외 1인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09.03.11~09.03.21	미국 뉴욕, 워싱 턴, 샌프란시스코	한국경제바로알리기 설명회	₩ 2,173,800	\$ 140	\$ 132	\$ 90
	글로벌금융과	부위원장				₩ 5,240,300	\$ 1,845	\$ 1,330	\$ 400
이○○ 외 2인	글로벌금융과	과장	09.03.11~09.03.15	영국 런던	영국 4대 언론 IR 개최	₩ 1,760,600	\$ 1,305	\$ 810	\$ 30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4,750,800	\$ 870	\$ 640	\$ 200
이○○ 외 3인	글로벌금융과	부위원장	09.03.24~09.03.26	홍콩	아시아투자컨퍼런스 참석	₩ 1,503,400	\$ 435	\$ 324	\$ 120
	글로벌금융과	과장				₩ 2,810,200	\$ 435	\$ 324	\$ 12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 480	\$ 15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 243	\$ 90
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09.05.06~09.05.08	싱가포르	IFSB 연례회의 참석	₩ 463,800	\$ 290	\$ 243	\$ 9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463,800	\$ 290	\$ 243	\$ 21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1,177,300	\$ 190	\$ 177	\$ 9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기액	숙박비	식사비	기타 여비
김○○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09.05.10~09.05.16	페루 리마	한-페루 FTA 제2차 협상 참석	₩ 2,432,600	\$ 248	\$ 222	\$ 180
신○○	글로벌금융과	과장	09.05.17~09.05.21	호주 캔버라	한-호주 FTA 제1차 협상 참석	₩ 1,560,600	\$ 210	\$ 220	\$ 150
이○○외2인		상임위원	09.05.25~09.05.29	스위스 바젤, 프랑크스 파리, 홍콩	FSB 오리엔테이션 참석	₩ 7,089,500	\$ 559	\$ 631	\$ 200
	글로벌금융과	과장	09.05.25~09.05.28	스위스 바젤, 프랑크스 파리		₩ 2,414,000	\$ 190	\$ 177	\$ 9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09.05.25~09.05.29	스위스 바젤, 프랑크스 파리, 홍콩		₩ 3,088,500	\$ 335	\$ 339	\$ 150
		위원장				₩ 8,504,000	\$ 614	\$ 594	\$ 240
진○○외5인		상임위원	09.06.24~09.06.27	홍콩, 스위스 바젤	홍콩 비즈니스 강연 및 FSB 총회 참석	₩ 5,227,600	\$ 447	\$ 396	\$ 160
	위원장실	비서관				₩ 2,890,900	\$ 190	\$ 258	\$ 120
	글로벌금융과	과장				₩ 2,890,900	\$ 190	\$ 258	\$ 12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300,700	\$ 285	\$ 236	\$ 12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300,700	\$ 285	\$ 236	\$ 120
유○○외1인	대변인실	대변인	09.06.24~09.06.25			₩ 1,301,400	\$ 166	\$ 107	\$ 35
	대변인실	사무관				₩ 461,100	\$ 145	\$ 81	\$ 30
이○○외2인	금융연구원		09.06.30~09.07.02	중국 상하이	한중일 거시경제 워크숍 참석	₩ 431,000	\$ 140	\$ 132	\$ 9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431,000	\$ 140	\$ 132	\$ 90
이○○	은행과	상임위원	09.08.26~09.08.29	영국 런던	FSB 운영위원회 참석	₩ 5,547,500	\$ 615	\$ 532	\$ 160
이○○		국제협력관	09.09.07~09.09.09	영국 런던	FSB 상임위원회 참석	₩ 1,777,900	\$ 332	\$ 321	\$ 105
		위원장	09.09.13~09.09.15	프랑스 파리	FSB 총회 참석	₩ 8,623,100	\$ 774	\$ 558	\$ 180
	글로벌금융과	과장				₩ 1,872,200	\$ 290	\$ 243	\$ 90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 1,872,200	\$ 290	\$ 243	\$ 9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1,872,200	\$ 290	\$ 243	\$ 90
이○○	위원장실	사무관	09.09.13~09.09.16	외신대변인		₩ 1,872,200	\$ 290	\$ 243	\$ 90
	대변인실	외신대변인				₩ 1,872,400	\$ 190	\$ 177	\$ 90
신○○외1인	글로벌금융과	과장	09.10.19~09.10.24	페루 리마	한-페루 FTA 제4차 협상 참석	₩ 4,269,000	\$ 248	\$ 185	\$ 150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 2,358,900	\$ 224	\$ 150	\$ 13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이○○외1인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09.10.24~09.10.28	이탈리아 로마	FSB 운영위원회 참석	₩ 5,329,200	\$ 447	\$ 396	\$ 160
		사무관				₩ 2,982,200	\$ 285	\$ 236	\$ 120
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09.11.04~09.11.09	영국 세인트앤드루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 2,622,800	\$ 838	\$ 354	\$ 180
박○○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09.11.15~09.11.19	두바이	한-GCC FTA 협상참석	₩ 1,839,600	\$ 261	\$ 196	\$ 104
신○○외2인	글로벌금융과	과장				₩ 1,666,500	\$ 210	\$ 176	\$ 240
		법률자문관	09.12.01~09.12.06	호주 캔버라	한-호주 FTA 제3차 협상 참석	₩ 3,577,900	\$ 354	\$ 288	\$ 280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 1,666,500	\$ 192	\$ 148	\$ 104
이○○외2인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09.12.17~09.12.18	일본 동경	한일 고위급 정례회담 참석	₩ 1,008,000	\$ 205	\$ 266	\$ 80
		서기관				₩ 665,000	\$ 145	\$ 162	\$ 60
		사무관				₩ 665,000	\$ 145	\$ 162	\$ 60
이○○외1인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09.12.03~09.12.12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제7회 동아시아권퍼런스 참석 및 주요 아시아 금융당국 만남	₩ 2,280,200	\$ 1,385	\$ 1,045	\$ 400
		사무관				₩ 1,121,500	\$ 905	\$ 633	\$ 300
진○○외4인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10.01.08~10.01.11	스위스 바젤	FSB 총회 참석	₩ 8,773,800	\$ 614	\$ 408	\$ 180
		과장				₩ 2,599,400	\$ 190	\$ 177	\$ 90
		사무관				₩ 2,599,400	\$ 190	\$ 177	\$ 90
		사무관				₩ 2,511,800	\$ 190	\$ 177	\$ 90
		사무관				₩ 2,511,800	\$ 190	\$ 177	\$ 90
이○○		국제협력관	10.01.16~10.01.19	영국 런던	FSB 상임위원회 참석	₩ 5,659,600	\$ 332	\$ 321	\$ 105
이○○외1인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10.01.19~10.01.22	홍콩, 일본 동경	아시아 지역 금융컨퍼런스 참석	₩ 1,729,900		\$ 532	\$ 160
		사무관				₩ 1,322,500	\$ 435	\$ 324	\$ 120
이○○외1인	국제협력팀	사무관	10.03.03~10.03.05	싱가포르	FSB 감독규제협력상임위원회	₩ 2,430,900	\$ 240	\$ 234	\$ 105
이○○외2인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10.03.07~10.03.11			₩ 816,300	\$ 190	\$ 177	\$ 90
		사무관				₩ 5,882,400	\$ 503	\$ 464	\$ 160
		사무관			FSB 운영위원회 및 제23차 한-영 경제협의회 참석	₩ 2,725,700	\$ 480	\$ 361	\$ 150
이○○	보훈과	사무관	10.03.16~10.03.17	스위스, 영국		₩ 2,725,700	\$ 480	\$ 361	\$ 150
		사무관				₩ 967,000	\$ 205	\$ 266	\$ 80
최○○	글로벌금융과	과장		일본 동경	한중일 고위급 금융당국 회의 및 세미나 참석	₩ 568,200	\$ 145	\$ 162	\$ 6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기적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이○○외1인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10.05.01~10.05.07	캐나다 워털루	CIG(국제지배구조혁신센터) 키폰런스 참석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 594	\$ 240
		사무관				₩ 2,175,300	\$ 380	\$ 354	\$ 180
박○○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10.05.10~10.05.16	뉴질랜드 웰링턴	제4차 한-뉴질랜드 FTA 협상 참석	₩ 2,258,100	\$ 320	\$ 259	\$ 182
		국제협력관				₩ 5,832,700	\$ 452	\$ 506	\$ 175
이○○외1인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0.05.11~10.05.15	스위스 바젤, 영국 런던	FSB 감독규제협력사업위원회 및 감독강화 워크숍 참석	₩ 3,419,200	\$ 385	\$ 383	\$ 150
		상임위원				₩ 5,351,800	\$ 447	\$ 495	\$ 200
오○○외1인	금융정책과	사무관	10.05.15~10.05.22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FSB 운영위원회 및 OECD 한국경제검토회의 참석	₩ 2,102,400	\$ 720	\$ 582	\$ 24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102,400	\$ 720	\$ 582	\$ 240
진○○외1인		위원장	2010.05.19~2010.05.21	독일 베를린	독일 재무부 주관 국제키폰런스 참석	₩ 8,797,200	\$ 307	\$ 408	\$ 180
	글로벌금융과	과장				₩ 3,615,200	\$ 95	\$ 177	\$ 90
박○○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10.05.23~10.05.27	호주 캔버라	제5차 한-호주 FTA 협상 참석	₩ 1,610,200	\$ 192	\$ 185	\$ 130
		상임위원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 297	\$ 120
이○○외1인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0.05.25~10.05.27	중국 베이징	아시아 신흥국 은행규제 및 금융안정 키폰런스 참석	₩ 502,800	\$ 190	\$ 177	\$ 90
		사무처장				₩ 5,111,600	주최측 부담	\$ 665	\$ 200
김○○외1인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10.06.06~10.06.10	미국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주관 아시아인퍼런스 및 은행감독자회의	₩ 1,625,300	\$ 435	\$ 405	\$ 150
		국제협력관				₩ 6,494,500	\$ 360	\$ 468	\$ 210
이○○		상임위원	10.06.08~10.06.13	캐나다 오타와	FSB 감독강화 워크숍 참석	₩ 5,335,700	\$ 447	\$ 495	\$ 20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412,200	\$ 285	\$ 295	\$ 150
이○○외1인		위원장	10.06.08~10.06.12	오스트리아 비엔나	IF(국제금융연합회) 세계 통화 참석	₩ 11,409,900	\$ 1,001	\$ 830	\$ 300
	글로벌금융과	과장				₩ 5,236,300	\$ 335	\$ 361	\$ 150
진○○외1인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0.06.13~10.06.17	캐나다 토론토, 미국 워싱턴	FSB 총회 참석 및 미국금융감독국 방문	₩ 2,441,800	\$ 430	\$ 420	\$ 180
	금융정책과	사무관				₩ 2,441,800	\$ 430	\$ 420	\$ 180
류○○	위원장실	사무관	10.06.27~10.07.01	스위스 제네바	WTO DDA 서비스 협상 참석	₩ 5,236,300	\$ 335	\$ 361	\$ 15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593,800	\$ 285	\$ 295	\$ 150
이○○외1인		국제협력관	10.07.04~10.07.08	독일 베를린	독일 경제개발협력부 주최 국제회의 참석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 312	\$ 140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1,868,300	\$ 285	\$ 236	\$ 120
이○○외1인		국제협력관	10.08.29~10.09.02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 런던	FSB 감독규제개혁 상임위 및 워크숍 참석	₩ 6,659,400	\$ 406	\$ 477	\$ 175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 2,892,000	\$ 335	\$ 361	\$ 15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비	식사비	기타 여비
이○○외1인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10.08.29~10.09.02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FSB 의장 등 주요 회원국과의 주요 금융과제 협의	₩ 6,598,800	\$ 503	\$ 563	\$ 200
		과장				₩ 3,826,100	\$ 335	\$ 339	\$ 150
진○○외2인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2010.9.8	일본 동경	G20 서울정상회의의 금융규제개혁 분야 주요과제에 대한 의견 조율 및 업무협의	₩ 946,400		\$ 186	\$ 60
		상임위원				₩ 946,400		\$ 133	\$ 40
이○○외1인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0.09.12~10.09.15	스위스 바젤	FSB 운영위원회 참석	₩ 657,800		\$ 81	\$ 30
		상임위원				₩ 6,430,600	\$ 298	\$ 396	\$ 160
진○○외3인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0.09.25~10.09.28	프랑스 파리	FSB 총회 및 운영위원회 참석	₩ 2,751,400	\$ 190	\$ 236	\$ 120
		위원장				₩ 9,511,800	\$ 774	\$ 744	\$ 240
		과장				₩ 2,664,300	\$ 435	\$ 405	\$ 150
		사무관				₩ 2,664,300	\$ 435	\$ 405	\$ 150
이○○외2인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0.11.15~10.11.17	홍콩	아시아 리스크 컨퍼런스 참석	₩ 2,664,300	\$ 290	\$ 324	\$ 120
		상임위원				주최측 부담	\$ 205	\$ 399	\$ 120
		사무관				₩ 567,400	\$ 290	\$ 243	\$ 90
		사무관				₩ 567,400	\$ 290	\$ 243	\$ 90
최○○외1인	글로벌금융과	과장	10.11.15~10.11.19	호주 캔버라	한-호주 FTA 2차 회기간 협상 참석	₩ 1,760,700	\$ 210	\$ 220	\$ 150
		주무관				₩ 1,760,700	\$ 192	\$ 185	\$ 130
전○○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0.11.30~10.12.04	중국 산둥성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회의 참석	₩ 402,900	\$ 280	\$ 220	\$ 150
		사무관				₩ 324,500	\$ 435	\$ 405	\$ 150
서○○외2인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0.11.29~10.12.03	영국 런던	영국 금융청(FSA) 주관 국제연례세미나 참석	₩ 1,963,900	\$ 435	\$ 405	\$ 150
		주무관				₩ 1,963,900	\$ 387	\$ 335	\$ 130
이○○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10.12.05~10.12.08	영국 런던	FSB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의 참석	₩ 6,301,900	\$ 332	\$ 428	\$ 140
		상임위원				₩ 2,693,800	\$ 236	\$ 288	\$ 160
이○○외2인	글로벌금융과	과장	10.12.06~10.12.09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카자흐스탄 금융협력 심포지엄 참석	₩ 1,234,000	\$ 140	\$ 176	\$ 120
		사무관				₩ 1,234,000	\$ 140	\$ 176	\$ 120
이○○	보통과	국제협력관	11.01.10~11.01.13	스위스 바젤	FSB 감독규제협력상임위원회 참석	₩ 3,285,200	\$ 240	\$ 312	\$ 140
		국제협력관				₩ 2,473,000	\$ 360	\$ 390	\$ 175
이○○외2인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11.01.15~11.01.19	인도 델리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참석	주최측 부담		\$ 532	\$ 160
		사무관				₩ 118,800	\$ 435	\$ 324	\$ 120
이○○외2인	금융정책과	주무관	11.01.16~11.01.19	홍콩	아시아 파이낸셜 포럼(AFF) 참석	₩ 622,600	\$ 387	\$ 268	\$ 104
		주무관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비	식사비	기타여비
전○○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1.01.18~11.01.21	인도 델리	한-인도 CEPA 제1차 공동위원회의 참석	₩ 1,986,000	\$ 236	\$ 190	\$ 120
이○○외2인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11.01.20~11.01.25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참석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 798	\$ 240
		서기관				₩ 2,007,500	\$ 435	\$ 486	\$ 180
		주무관				₩ 2,007,500	\$ 387	\$ 402	\$ 156
이○○	금융정책과	국제협력관	11.02.02~11.02.03	일본 동경	일본 금융청 주관 국제 컨퍼런스 참석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 214	\$ 70
한○○외2인	글로벌금융과	교수	11.02.03~11.02.06	프랑스 파리	FSB Bail-in WG 회의 참석	₩ 6,145,900	\$ 332	\$ 428	\$ 140
		과장				₩ 1,894,300	\$ 290	\$ 324	\$ 120
		사무관				₩ 1,894,300	\$ 290	\$ 324	\$ 120
서○○외 1인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11.03.04~11.03.11	터키 앙카라, 스위스 제네바	한-터키 FTA 제3차 협상, WTO/ DDA 금융서비스 위원회 참석	₩ 3,174,100	\$ 470	\$ 412	\$ 240
이○○외1인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11.03.09~11.03.15	스위스 바젤, 영국 런던	FSB 국경간위기관리그룹, FSB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 6,764,300	\$ 738	\$ 691	\$ 225
한○○외1인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1.03.22~11.03.25	영국 런던	FSB Bail-in WG 회의 참석	₩ 2,956,500	\$ 625	\$ 523	\$ 210
신○○외2인	글로벌금융과	교수	11.04.03~11.04.06	이탈리아 로마	FSB 총회 참석	₩ 6,401,300	\$ 332	\$ 428	\$ 140
		과장				₩ 2,065,200	\$ 290	\$ 324	\$ 120
		서기관				₩ 6,354,400	\$ 440	\$ 468	\$ 200
서○○외1인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11.04.12~11.04.16	스위스 제네바	WTO/DDA 금융서비스분과 협상 참석	₩ 2,396,300	\$ 190	\$ 236	\$ 120
이○○외1인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11.04.16~11.04.19	미국 워싱턴	기시건전성 감독 관련 국제 컨퍼런스 참석	₩ 3,741,300	\$ 285	\$ 295	\$ 150
전○○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1.05.02~11.05.04	중국 북경	한중 FTA 대비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공동연구 참석	₩ 2,338,300	\$ 261	\$ 245	\$ 130
이○○외1인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11.05.05~11.05.08	스위스 바젤	FSB 정리채계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 7,368,200	\$ 205	\$ 532	\$ 160
김○○	공자위 사무국	국장	11.05.11~11.05.14	프랑스 파리	금융소외계층 포용 글로벌파트너십 회의 참석	₩ 2,090,000	\$ 145	\$ 324	\$ 120
류○○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1.05.16~11.05.18	스위스 바젤	FSB Bail-in WG 회의 참석	₩ 715,400	\$ 190	\$ 177	\$ 90
이○○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11.05.18~11.05.26	미국 뉴욕, 독일 프랑크푸르트	FSB 국경간위기관리그룹, JAIS-FSB 합동 워크숍 참석	₩ 6,764,100	\$ 447	\$ 396	\$ 160
						₩ 3,236,400	\$ 285	\$ 236	\$ 120
						₩ 4,619,800	\$ 332	\$ 428	\$ 140
						₩ 2,771,900	\$ 95	\$ 177	\$ 90
						₩ 9,393,400	\$ 904	\$ 847	\$ 315

지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이○○외1인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11.06.06~11.06.09	독일 프랑크푸르트	FSB 운영위원회 참석	₩ 6,889,400	\$ 298	\$ 396	\$ 160
최○○외1인	글로벌금융과	과장 사무관	11.06.12~11.06.16	이탈리아 로마	FSB 감독감독회의 참석	₩ 2,434,500	\$ 190	\$ 236	\$ 120
이○○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11.06.19~11.06.25	스위스 바젤	FSB 정관계상임위원회 및 신용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 회의 참석	₩ 1,997,100	\$ 285	\$ 295	\$ 150
최○○외1인	글로벌금융과	과장	11.06.21~11.06.25	에디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는 G-20 워크숍 참석	₩ 1,861,200	\$ 285	\$ 295	\$ 150
이○○ 외 1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1.7.6~11.7.9	파리	FSB 총회 참석	₩ 5,984,200	\$ 745	\$ 693	\$ 280
신○○외3명	부위원장실	부위원장	11.7.17~11.7.20	파리	아미앵마켓 포럼 참석	₩ 2,563,000	\$ 285	\$ 295	\$ 150
이○○외2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1.8.1~11.8.2	동경	금융안정위원회(FSB) 그룹자금용 TF 회의 참석	₩ 2,563,000	\$ 261	\$ 245	\$ 130
김○○	글로벌금융과	행정사무관	11.8.28~11.8.31	바젤	금융안정위원회(FSB) 그룹자금용 TF 회의 참석	₩ 8,345,000	\$ 780	\$ 856	\$ 280
김○○외3인	위원장실	위원장	11.9.1~11.9.4	올란바트로	금융안정위원회(FSB) 그룹자금용 TF 회의 참석	₩ 13,088,600	\$ 2,150	\$ 1,612	\$ 560
이○○	금융정책국	국제협력관	11.9.18~11.9.20	런던	금융안정위원회(FSB) 그룹자금용 TF 회의 참석	₩ 2,479,000	\$ 807	\$ 710	\$ 248
이○○외1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1.9.25~11.9.28	워싱턴	금융안정위원회(FSB) 정관계 운영그룹 (ReSG) 회의 참석	₩ 2,630,490	\$ 174	\$ 177	\$ 90
이○○외1인	글로벌금융과	행정사무관	11.9.25~11.9.28	제네바	금융안정위원회(FSB) 정관계 운영그룹 (ReSG) 회의 참석	₩ 4,585,600	\$ 730	\$ 624	\$ 465
신○○외1인	감사담당관실	주무관	11.9.27~11.9.30	바젤	WTOD/DA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회의 참석	₩ 6,485,900	\$ 184	\$ 321	\$ 105
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11.9.29~11.10.4	멕시코	금융안정위원회(FSB) LEI 워크숍 참석	₩ 5,616,200	\$ 347	\$ 294	\$ 156
최○○외3인	부위원장실	부위원장	11.10.1~11.10.4	취리히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 3,513,100	\$ 470	\$ 390	\$ 175
최○○	글로벌금융과	과장	11.10.13~11.10.16	파리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 16,327,100	\$ 1,692	\$ 1,136	\$ 544
서○○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11.10.16~11.10.23	뉴욕, 워싱턴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한미 양국 금융/경제 정책담판시간 협력구축을 위한 회의 참석	₩ 3,328,900	\$ 352	\$ 324	\$ 120
최○○	글로벌금융과	과장	11.11.8~11.11.12	알마타	한-카자흐스탄 금융포럼 참석	₩ 2,265,100	\$ 1,268	\$ 648	\$ 240
이○○외1인	금융정책국	국제협력관	11.11.16~11.11.19	런던, 프랑크푸르트	영국(FSA) 및 독일(BaFin) 금융정책 담판자들과의 업무협의	₩ 3,328,900	\$ 411	\$ 236	\$ 120
김○○외1인	위원장실	위원장	11.11.25~11.11.29	터키, 런던	터키-영국 금융감독국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양국 금융감독국간 업무협의	₩ 9,163,400	\$ 942	\$ 602	\$ 244
이○○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1.11.30~11.12.3	뉴욕	금융안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참석	₩ 33,405,000	\$ 5,584	\$ 2,796	\$ 1,266
이○○외3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1.12.6~11.12.10	하이난	제4차 한중일 고위급 회담 및 제6차 한중일 금융감독협력 세미나 참석	₩ 8,253,100	\$ 214	\$ 399	\$ 120
						₩ 4,242,900	\$ 963	\$ 640	\$ 40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기액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이○○외2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1.12.17~12.1.11	바젤	FSB 총회 참석	₩ 8,963,600	\$ 1,352	\$ 1,094	\$ 510
이○○외1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2.1.15~12.1.19	홍콩	아시아금융포럼(AFF) 참석	₩ 654,600	\$ 523	\$ 856	\$ 280
이○○외1인	금융정책국	국제협력관	12.1.29~12.2.1	런던	FSB 감독규제협력상임위원회의 참석	₩ 4,555,900	\$ 407	\$ 750	\$ 330
이○○외1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2.2.3~12.2.6	LA	제24차 한미 재계회의 참석	₩ 1,930,400	\$ 265	\$ 684	\$ 226
최○○	글로벌금융과	과장	12.2.12~12.2.15	하노이	한국-베트남 금융당국간의 MOU 체결 관련 실무협의	₩ 586,700	\$ 182	\$ 132	\$ 135
김○○외4인	위원장실	위원장	12.2.28~12.3.4	베트남, 인니	금융위원회와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금융당국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 10,548,180	\$ 3,636	\$ 1,460	\$ 925
나○○외1인	글로벌금융과	행정사무관	12.3.28~12.4.1	뉴욕	금융안정위원회(FSB) CBCM 워크숍 참석	₩ 4,509,800	\$ 993	\$ 740	\$ 280
박○○	글로벌금융과	과장	12.4.11~12.4.15	워싱턴	금융안정위원회(FSB) SIE 회의 참석	₩ 2,297,600	\$ 512	\$ 324	\$ 120
이○○외1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2.4.15~12.4.18	브뤼셀	"Global Financial Services Integration" 킥오프스 참석	₩ 3,249,700	\$ 232	\$ 632	\$ 280
이○○외1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2.4.25~12.4.28	바젤	금융안정위원회(FSB) ReSG 회의 참석	₩ 10,238,800	\$ 343	\$ 632	\$ 280
박○○	글로벌금융과	과장	12.5.3~12.5.8	방콕, 아부다비	제3차 한국-UAE 경제공동위원회 (5.7 정관금, 5.6 실무금)에 참석	₩ 2,644,900	\$ 435	\$ 324	\$ 180
이○○외1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2.5.6~12.5.10	바젤	금융안정위원회의 운영위원회(FSB Steering Committee) 및 신흥국 리부 그룹 회의 (EMDE Review Group Meeting) 참석	₩ 9,685,400	\$ 974	\$ 790	\$ 350
박○○외1인	글로벌금융과	과장	12.5.13~12.5.14	베이징	한중 FTA 제1차 협상 참석	₩ 1,486,400	\$ 307	\$ 216	\$ 112
김○○	글로벌금융과	행정사무관	12.5.13~12.5.15	쿠알라룸푸르	FSB 아시아지역협의체 회의 참석	₩ 820,400	\$ 137	\$ 132	\$ 90
이○○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2.5.13~12.5.18	쿠알라룸푸르, 베이징	FSB 아시아지역협의체 회의 참석 및 JFC와 중국 은행감독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녹색금융 포럼 참석	₩ 2,574,200	\$ 173	\$ 540	\$ 240
임○○외1인	금융정책국	국제협력관	12.5.17~12.5.20	런던	영국 런던 금융청(FSA)에서 개최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SRC) 회의 참석	₩ 9,001,300	\$ 1,198	\$ 752	\$ 260
이○○외1인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12.5.22~12.5.24	베이징	2012 중국금융포럼 (China Financial Summit) 참석	₩ 570,700	\$ 284	\$ 474	\$ 210
추○○외3명	부위원장실	부위원장	12.5.27~12.5.30	상하이, 홍콩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 4,203,800	\$ 3,006	\$ 1,079	\$ 544
김○○외4명	위원장실	위원장	12.6.9~12.6.13	태국, 홍콩	금융위원회 태국, 홍콩 출장	₩ 8,280,200	\$ 2,903	\$ 1,805	\$ 880
임○○	금융정책국	국제협력관	12.6.14~12.6.17	임스펠담	금융안정위원회(FSB) 국경간 위기관리그룹 (CBCM) 회의 참석	₩ 6,664,000	\$ 320	\$ 312	\$ 140

직원명	부서	지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비	식사비	기타 여비
임○○	금융정책국	국제협력관	12.6.27~12.6.30	바젤	금융안정위원회(FSB) LEI 이행그룹 (Implementation Group) 회의 참석	₩ 7,009,500	\$ 439	\$ 312	\$ 140
이○○	국제협력팀	사무관	09.09.20~09.09.23	상하이	중국 금융정책 및 금융중심지 조성 정책 파악	₩ 1,332,100	\$ 260	\$ 221	\$ 120
정○○	국제협력팀	사무관	10.02.07~10.02.13	더블린,아테네	위기 이후 주요 금융중심지 현황조사 및 정책 벤치마킹	₩ 3,360,000	\$ 425	\$ 301	\$ 310
권○○외4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0.05.10~10.05.12	싱가포르	한국금융 IR	-	-	\$ 351	\$ 150
	금융위원회 증신위	상임위원	10.05.12~10.05.15	호주 시드니		₩ 3,763,200	\$ 236	\$ 216	\$ 120
	국제협력팀	팀장	10.05.10 ~ 10.05.15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		₩ 1,719,000	\$ 140	\$ 309	\$ 180
	외신대변인실	외신대변인		도니		₩ 1,719,000	\$ 140	\$ 309	\$ 180
정○○외1인	금융정책과	서기관	10.05.10~10.05.12	싱가포르	한국금융 IR	-	-	\$ 177	\$ 90
	국제협력팀	사무관	10.05.10 ~ 10.05.15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		₩ 1,719,000	\$ 140	\$ 309	\$ 180
김○○	국제협력팀	사무관	10.09.10~10.09.13	미국 뉴욕	2010 FSS Korean Finance Job Fair 참석	₩ 1,719,000	\$ 140	\$ 309	\$ 180
	국제협력팀	사무관		스위스 취리히, 룩셈부르크		₩ 2,121,900	\$ 387	\$ 268	\$ 224
윤○○	국제협력팀	팀장	10.10.24~10.10.29	스페인 마드리드, 영국 런던	금융중심지 경쟁국인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의 금융인력 양성 현황파악	₩ 4,298,300	\$ 380	\$ 295	\$ 150
이○○	금융위원회	사무관		스페인 마드리드, 영국 런던		₩ 4,298,300	\$ 380	\$ 295	\$ 150
정○○	국제협력팀	사무관	10.11.21~10.11.25	영국 런던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강화 및 금융중심지 홍보	₩ 6,705,100	\$ 692	\$ 555	\$ 210
정○○	국제협력팀	사무관	11.02.21~11.02.26	영국 런던, 독일 뉘른베르크	금융중심지장제 홍보 및 신박금융 관련 외국 금융사의 국내 유치 활성화	₩ 3,014,500	\$ 575	\$ 420	\$ 180
김○○	국제협력팀	사무관	11.03.27~11.03.31	영국 런던	World Islamic Finance Conference 참석	₩ 2,388,200	\$ 387	\$ 268	\$ 104
이○○	금융위원회	국제협력관	11.9.25 ~ 11.9.28	일본(동경) 총증	2011년 국제 정부위원회 해외국정감사 수감	₩ 2,507,700	\$ 1,004	\$ 428	\$ 140
양○○	국제협력팀	사무관	12.5.15 ~ 12.5.17	중국 북경	국제 녹색금융포럼 참석	₩ 570,700	\$ -	\$ 177	\$ 90
석○○	국제협력팀	사무관	12.7.1 ~ 12.7.4	호주 시드니	현지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 방문을 통해 호주 금융인력 양성 사례 연구	₩ 1,851,300	\$ 181	\$ 176	\$ 120
임○○외1인	중소과	상임위원 사무관	09.04.27~09.05.04	필리핀 마닐라	세계저축은행협회 회의참석	₩ 12,805,300	\$ 970	\$ 1,092	\$ 490
김○○외1인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국장 서기관	09.05.17~09.05.21	영국 런던	영국 재무성 및 FSA 관계자 만담출장	₩ 1,640,300	\$ 933	\$ 940	\$ 325
권○○	보험과	사무관	09.07.07~09.07.12	프랑스 파리	OECD 보험 및 사회적연금 회의 참석	₩ 1,956,400	\$ 580	\$ 486	\$ 180
성○○외1인	보험과	과장 사무관	09.11.01~09.11.08	태국, 베트남	태평양 보험회의 회의참석	₩ 1,529,200	\$ 840	\$ 704	\$ 61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조○○	은행과	사무관	09.11.16~09.11.22	태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싱가포르, 홍콩 투자자 사전 설명회	₩ 1,047,000	\$ 525	\$ 434	\$ 210
김○○외1인	보험과 보험과	사무관 주무관	09.11.29~09.12.06	프랑스 파리	OECD 보험 및 사적연금 회의 참석	₩ 3,619,200	\$ 1,740	\$ 1,296	\$ 448
신○○	은행과	사무관	09.11.29~09.12.05	미국 워싱턴D.C.	IMF 범무부서 세미나 참석	₩ 1,975,100	\$ 725	\$ 567	\$ 210
마○○외1인	은행과 은행과	사무관 주무관	09.12.14~09.12.19	프랑스 파리	OECD 무역위원회 회의 참석	₩ 3,348,400	\$ 1,096	\$ 888	\$ 456
장○○	보험과	과장	10.06.05~10.06.11	스페인 마드리드	2010 국제보험학회(IIIS) 총회 참석	₩ 2,632,600	\$ 475	\$ 413	\$ 210
이○○	중소금융과	사무관	10.10.04~10.10.06	일본 동경	일본 대금업시장 정책연구 및 대금시장여향 조사	₩ 578,000	\$ 290	\$ 243	\$ 60
최○○외1인	금융위 보험과	상임위원 서기관	10.10.26~10.10.29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IAIS 연차총회 참석	₩ 5,138,200	\$ 488	\$ 632	\$ 280
김○○외3인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사무관 사무관	10.11.17~10.11.20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 중앙은행에 대한 한국의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설명	₩ 2,143,200	\$ 708	\$ 536	\$ 818
김○○외1인	보험과 보험과	사무관 주무관	10.11.29~10.12.03	프랑스 파리	OECD 보험 및 사적연금회의 참석	₩ 4,016,000	\$ 1,370	\$ 1,036	\$ 392
허○○외2인	증권위 보험과 금융시장과	비상임위원 사무관 주무관	10.12.15~10.12.23	영국 런던	IFRS 보험계약 Round table 회의 참석	₩ 11,426,300	\$ 2,791	\$ 2,147	\$ 794
안○○외1인	서민금융팀 민간전문가(예보)	사무관 차장	11.01.11~11.01.15	오스트리아 비엔 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주관 미 소금융 플랫폼 회의 참석	₩ 3,482,600	\$ 570	\$ 590	\$ 300
주○○	서민금융팀	주무관	11.05.15~11.05.19	캄보디아	CGAP Annual Meeting 참석	₩ 803,800	\$ 224	\$ 150	\$ 130
신○○	보험과	과장	11.06.18~11.06.24	캐나다 토론토	2011년도 국제보험학회(IIIS) 총회 참석	₩ 2,475,800	\$ 475	\$ 413	\$ 210
배○○	은행과	주무관	11.7.17~11.7.23	인도 코지	제14차 APG 연차 총회 참석	₩ 4,327,600	\$ 525	\$ 343	\$ 182
송○○	중소금융과	사무관	11.9.13~11.9.18	미국 샌프란시스코	2011년 APEC 여성경제회의 참석	₩ 1,877,900	\$ 600	\$ 486	\$ 180
박○○	보험과	사무관	11.9.10~11.9.13	싱가포르	2011년 태평양보험학회(PIC) 총회 참석	₩ 944,200	\$ 411	\$ 236	\$ 120
서○○	은행과	사무관	11.9.28~11.10.1	이탈리아 로마	FATF 전문가 회의 및 WGEI회의 참석	₩ 2,612,700	\$ 348	\$ 236	\$ 120
제○○	보험과	사무관	11.10.9~11.10.13	말레이시아	2011년 제16회 동아시아 개리사 총회 참석	₩ 792,000	\$ 364	\$ 220	\$ 150
김○○외2인	금융위 은행과 중소금융과	과장 사무관 사무관	11.11.27~12.1 11.11.27~12.3	잉스테르담 브뤼셀 프랑크푸르트	커버드론드 해외사례 및 외운지점 해외제도 연구 등	₩ 10,940,100	\$ 1,781	\$ 1,121	\$ 570
김○○외1인	금융위 은행과	사무처장 사무관	11.11.27~11.11.29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화청 설립 40주년 기념행사 및 Global-Asia Dynamics 라운드테이블 참석	₩ 3,125,000	\$ 688	\$ 474	\$ 21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이○○	보험과	주무관	11.11.26~11.12.3	파리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의 참석	₩ 2,207,100	\$ 924	\$ 536	\$ 208
김○○외1인	은행과 보험과	주무관 등	11.12.5~11.12.10	워싱턴 뉴욕	키버트폴드 해외사례 및 외은지점 해외제도 연구 등	₩ 4,412,400	\$ 1,240	\$ 804	\$ 312
마○○	보험과	사무관	12.6.3~11.6.10	파리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의 참석	₩ 2,471,500	\$ 900	\$ 648	\$ 240
배○○	은행과	과장	12.6.9~11.6.13	태국, 홍콩	태국, 홍콩 금융감독과의 MOU 체결 등	₩ 1,417,800	\$ 571	\$ 294	\$ 150
정○○	금융서비스국	국장	12.6.15~12.6.23	브라질 리우데자 네이로, 미국 시카고	IIS(국제보험학회) 참석 및 시카고 한인경제인 협회 세미나 참석	₩ 12,901,800	\$ 960	\$ 624	\$ 280
채○○	보험과	사무관	12.6.15~12.6.24	브라질 리우데자 네이로, 미국 뉴욕	IIS(국제보험학회) 참석 및 미국 보험시장 조사	₩ 3,588,800	\$ 764	\$ 619	\$ 270
정○○	금융소비자과	사무관	12.4.9~12.4.13	러시아 모스크바	APEC 전문가 워크숍 참석	₩ 2,028,200	\$ 450	\$ 405	\$ 150
안○○	금융소비자과	사무관	12.6.25~12.6.29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APEC 주관 키퍼런스 참석	₩ 2,625,900	\$ 348	\$ 295	\$ 150
송○○외1인	서민금융과	사무관 주무관	12.7.1~12.7.7	뉴욕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참석	₩ 5,198,000	\$ 1,572	\$ 1,036	\$ 392
전○○	자본과	사무관	09.03.10~09.03.11	일본 동경	FTSE 신진지수 편입관련 Roundtable 참석	₩ 674,100	\$ 145	\$ 162	\$ 60
김○○	공정과	사무관	09.04.25~09.05.01	스위스 바젤	국제회계감독기구(IFAR) 회의참석	₩ 2,006,800	\$ 475	\$ 413	\$ 210
김○○	자산과	사무관	09.04.26~09.05.03	영국 런던	영국대사관 주관 런던 집합연수	₩ 1,643,500	\$ 870	\$ 648	\$ 240
김○○외1인	자본과	중선위원 사무관	09.06.06~09.06.12	이스라엘 텔아비 브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총회 참석	₩ 6,066,900	\$ 940	\$ 348	\$ 620
이○○외1인	자본과	부위원장 사무관	09.09.07~09.09.08	일본 동경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IR) 및 일본 금융청 방문	₩ 1,555,900	\$ 435	\$ 482	\$ 160
김○○외1인	중선위원 자본과	중선위원 서기관	09.09.07~09.09.10	중국 상해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IR) 및 상해금융감독 당국 라운드테이블 참석	₩ 1,354,000	\$ 564	\$ 464	\$ 410
윤○○	공정과	주무관	09.09.13~09.09.16	싱가포르	국제회계감독기구(IFAR) 회의참석	₩ 688,800	\$ 261	\$ 196	\$ 224
전○○	자본과	사무관	09.10.04~09.10.08	스위스 제네바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 회의 참석	₩ 2,569,000	\$ 285	\$ 295	\$ 280
정○○	자산과	과장	09.10.13~09.10.19	브라질 리우데자 네이루	국제증권감독기구(OPS) 연차총회 참석	₩ 3,022,600	\$ 285	\$ 413	\$ 21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김○○	자산과	사무관	09.10.21~09.10.24	호주 멜버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 (APRC) 참석	₩ 1,445,000	\$ 140	\$ 176	\$ 120
이○○외1인	공정과 자산과	과장 주무관	09.11.17~09.11.20	중국 베이징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중국 국영 자산관리 공사주관 컨퍼런스 참석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김○○외1인	자산과 자산과	사무관 사무관	09.12.17~09.12.22	홍콩, 베트남	아시아지역 핀드교류 협력방안 논의	₩ 1,560,400	\$ 1,000	\$ 713	\$ 620
이○○외1인	자본과 자본과	과장 사무관	10.01.14~10.01.17	미국 뉴욕	장외파생상품 감독자포럼 참석	₩ 4,279,600	\$ 580	\$ 648	\$ 240
김○○	공정과	사무관	10.01.16~10.01.21	영국 런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참석	₩ 1,880,500	\$ 580	\$ 486	\$ 310
구○○	공정과	사무관	10.02.08~10.02.13	프랑스 파리	국제회계감독기구(IFAR) 워크숍 참석	₩ 1,688,000	\$ 580	\$ 486	\$ 180
이○○외1인	공정과 공정과	과장 주무관	10.03.20~10.03.25	아랍에미리트 아 부다비	국제회계감독기구(IFAR) 제7차 정기회의 참석	₩ 3,157,600	\$ 728	\$ 540	\$ 280
최○○외 1인	자본과	상임위원 사무관	10.06.06~10.06.13	캐나다 몬트리알, 미국 뉴욕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총회 참석 및 미국 투자은행(IB) 기관 방문	₩ 9,712,700	\$ 1,782	\$ 1,014	\$ 840
이○○	공정과	사무관	10.06.14~10.06.18	오르단 암만	시장감시교육프로그램 참가	₩ 1,927,000	\$ 350	\$ 264	\$ 310
송○○	자본과	서기관	10.06.30~10.07.02	중국 제남북경	산동기업 한국시장 설명회 참석	₩ 727,400	\$ 95	\$ 59	\$ 90
장○○	자본과	과장	10.07.07~10.07.09	프랑스 파리	장외파생상품 국제 컨퍼런스 참석	₩ 1,815,200	\$ 162	\$ 435	\$ 90
최○○	공정과	과장	10.07.28~10.07.29	일본 동경	국제회계기준(IFRS) 컨퍼런스 참석	₩ 624,900	\$ 145	\$ 162	\$ 190
이○○	자본시장과	사무관	10.09.06~10.09.07	일본 동경	일본 금융당국 정책협의 및 일본 한국자본시 장 투자설명회(IR) 참석	₩ 624,700	\$ 145	\$ 162	\$ 60
권○○외3인	자본시장과	부위원장 과장	10.09.08~10.09.11	중국 북경, 심천	중국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IR) 참석 및 중국 금융당국 정책협의	₩ 4,432,000	\$ 1,158	\$ 876	\$ 560
최○○	공정과	과장	10.09.26~10.09.30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회계감독기구(IFAR) 총회	₩ 2,115,000	\$ 285	\$ 295	\$ 150
최○○외1인	자본과	상임위원 사무관	10.10.07~10.10.11	라오스, 베트남	라오스 및 베트남 출장	₩ 3,220,400	\$ 564	\$ 580	\$ 350
신○○	자산과	과장	10.10.30~10.11.05	호주 시드니	IOPS 연차총회 및 OECD/IOPS 사전연금포럼 참석	₩ 1,729,000	\$ 350	\$ 308	\$ 210
최○○외 1인	자본과 자본과	사무관 주무관	10.11.15~10.11.19	프랑스 파리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의 참석	₩ 3,718,000	\$ 822	\$ 740	\$ 530
김○○외1인	자본과 자산과	사무관 주무관	10.11.24~10.11.27	싱가포르	거래소 국제화 관련 참가를 거래소 방문	₩ 2,059,500	\$ 451	\$ 373	\$ 194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비	식사비	기타 여비
조 ○ ○ 외2인	공정과 공정과	비상임위원 사무관 주무관	10.11.27~10.12.05	브라질 리우데자 네이로	IOSCO SROCC 세미나 참석	₩ 19,782,900	\$ 1,655	\$ 1,863	\$ 864
전 ○ ○	자본과	사무관	10.11.30~10.12.02	중국 상해 심천	ChiNext 및 상해 선물거래소 방문	₩ 1,138,000	\$ 140	\$ 132	\$ 90
이 ○ ○	자본과	사무관	10.12.16~10.12.18	중국 상해 심천	2010 OECD ARCG 회의 참석	₩ 504,700	\$ 140	\$ 132	\$ 90
구 ○ ○	공정과	사무관	11.03.21~11.03.22	말레이시아	Monitoring Board 공청회 참석	₩ 1,125,800	\$ 70	\$ 88	\$ 60
김 ○ ○	공정과	과장	11.03.30~11.04.03	영국 런던	IFRS재단 정기이사회 참석 국외여비 지급	₩ 2,079,200	\$ 435	\$ 405	\$ 150
전 ○ ○	자본과	사무관	11.04.16~11.04.23	남아공	IOSCO 연차총회 참석 국외여비 지급	₩ 4,362,000	\$ 475	\$ 236	\$ 240
최 ○ ○	자본과	사무관	11.05.09~11.05.15	룩셈부르크	IFSB 총회 참석 국외여비 지급	₩ 3,045,600	\$ 475	\$ 413	\$ 210
김 ○ ○	자산운용과	사무관	11.08.01~11.08.04	싱가포르	APEC Fund Passport 관련 워크숍 참석	₩ 1,235,000	\$ 410	\$ 236	\$ 120
김 ○ ○	공정시장과	과장 사무관	11.09.25~11.09.28	태국 방콕	IFIAR 정기총회 참석	₩ 1,311,400 ₩ 1,315,500	\$ 411 \$ 411	\$ 176 \$ 176	\$ 120 \$ 120
홍 ○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1.09.27~11.10.01	터키 이스탄불	IFS2011 총회 참석	₩ 6,396,000 ₩ 2,226,000	\$ 915	\$ 288 \$ 176	\$ 200 \$ 150
김 ○ ○	자본시장과	국장 사무관	11.10.17~11.10.18	중국 상해	한국 자본시장 설명회	₩ 977,000 ₩ 603,000		\$ 116 \$ 88	\$70+₩10,000(비) \$70+₩10,000(비)
최 ○ ○	법률자문관실	법률자문관	11.10.23~11.10.29	프랑크푸르트, 취리히	해외 헤지펀드 관련규제 조사	₩ 6,995,000	\$ 1,056	\$ 693	\$ 280
최 ○ ○	자산운용과	주무관	11.10.24~11.10.30	스페인 마드리드	IOSCO 프로그램 참석	₩ 2,141,000	\$ 591	\$ 294	\$ 182
이 ○ ○	공정시장과	사무관	11.11.15~11.11.18	프랑스 파리	OECD 지배구조 회의 참석	₩ 2,270,300	\$ 450	\$ 324	\$ 120
김 ○ ○	자본시장과	과장	11.11.25~11.11.30	홍콩, 호주 시드니	ATS 규제조사	₩ 3,355,500	\$ 604	\$ 412	\$ 180
이 ○ ○	자본시장과	사무관	11.11.30~11.12.04	미국 뉴욕, 워싱턴 DC	FSB 참석	₩ 2,191,700	\$ 528	\$ 405	\$ 383
류 ○ ○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11.12.11~11.12.17	홍콩, 말레이시아	펀드 패스포트 워크숍 참석	₩ 2,382,800	\$ 952	\$ 687	\$ 280
김 ○ ○	자산운용과	사무관				₩ 1,446,100	\$ 608	\$ 419	\$ 210
전 ○ ○	자본시장과	국장	11.12.06~11.12.07	일본 도쿄		₩ 1,062,000	\$ 223	\$ 214	\$ 70
이 ○ ○	공정시장과	사무관				₩ 657,000	\$ 176	\$ 162	\$ 60
허 ○ ○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11.12.14~11.12.20	뉴질랜드, 호주	해외 투자은행 등 방문	₩ 4,226,700	\$ 472	\$ 360	\$ 280
장 ○ ○	자본시장과	주무관				₩ 2,026,300	\$ 260	\$ 185	\$ 182
김 ○ ○	자산운용과	사무관	12.03.07~12.03.09	홍콩	국제금융정책포럼 참석	₩ 691,000	\$ 300	\$ 243	\$ 9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윤○○	자본시장과	주무관	12.04.17~12.04.22	프랑스 파리	제22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의 참석	₩ 2,386,400	\$ 528	\$ 335	\$ 130
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2.04.17~12.04.19	캄보디아 프놈펜	캄보디아 증권시장 출범식 참석	₩ 1,991,000	\$ 85	\$ 122	\$ 80
이○○	자본시장과	사무관				₩ 927,000	\$ 64	\$ 74	\$ 60
진○○	자본시장과	국장	12.05.13~12.05.17	중국 북경	2012년 IOSCO 연차총회의 참석	₩ 1,319,600	\$ 1,443	\$ 390	
김○○	자본시장과	사무관				₩ 802,300	\$ 295		
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2.06.03~12.06.06	프랑스 파리	OECD 참석	₩ 6,623,300	\$ 1,292	\$ 532	\$ 160
오○○	자본시장과	사무관				₩ 2,424,200	\$ 324	\$ 120	
조○○	자산운용과	주무관	12.06.03~12.06.08	프랑스 파리	제89차 OECD IPPP, IOPS 관련 회의 참석	₩ 2,267,600	\$ 422	\$ 402	
김○○	자산운용과	과장	12.06.24~12.06.28	싱가포르 태국 방콕	제5차 APEC 핀드 상호인증 워크숍 참석	₩ 951,000	\$ 626	\$ 206	\$ 120
김○○		사무관				₩ 951,000	\$ 206	\$ 120	
김○○ 외 4인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09.02.22~09.03.01	프랑스 (파리)	제20기 2차 FATF 총회 참가	₩ 14,170,000	\$ 4,274	\$ 3,532	\$ 1,188
	심사분석실	실장							
	기획행정실	서기관							
	기획행정실	사무관							
이○○ 외 2인	심사분석실	에디터	09.03.01~09.03.08	과테말라	Egmont 실무그룹 회의 참석	₩ 8,930,000	\$ 788	\$ 812	\$ 1,027
	심사분석실	팀장							
이○○ 외 1인	제도운영과	주무관	09.04.26~09.05.07	마카오 뉴질랜드 호주	카지노 AML/CFT 검사체계 수립을 위한 출장	₩ 6,990,000	\$ 1,630	\$ 1,234	\$ 820
	제도운영과	과장							
김○○ 외 6인	기획행정실	실장	09.05.03~09.05.08	호주(시드니)	FATF 상호평가자 회의	₩ 13,190,000	\$ 2,290	\$ 1,710	\$ 1,116
	심사분석실	팀장							
김○○ 외 3인	기획행정실	사무관	09.05.24~09.05.29	카타르(도하)	제17차 에그몬트 그룹 총회 참석	₩ 7,770,000	\$ 1,926	\$ 1,498	\$ 740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금융정보분석원	서기관							
	심사분석실	팀장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대비	기타 여비
김○○ 외7인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09.06.21~09.06.26	프랑스(파리)	FATF 정보원 가임을 위한 상호평가절과 중의 참가(6)	₩ 23,540,000	\$ 5,370	\$ 4,392	\$ 2,269
	심사분석실	팀장							
	기획행정실	사무관							
	기획행정실	사무관							
	기획행정실	사무관							
정○○외3인	제도운영과	사무관	09.07.05~09.07.12	호주(브리스번)	제12차 APG연차 중의 참석	₩ 7,510,000	\$ 1,680	\$ 1,408	\$ 960
	기획행정실	실장							
	기획행정실	사무관							
	기획행정실	사무관							
	심사분석실	사무관							
이○○	금융정책과	사무관	09.07.07~09.07.12	호주(브리스번)	APG 주관 상호평가자 교육	₩ 1,516,600	\$ 280	\$ 264	\$ 180
	기획행정실	사무관	09.08.16~09.08.23						
	금융정보분석원	실장	09.10.12~09.10.16	프랑스(파리)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중의 참석	₩ 10,600,000	\$ 2,983	\$ 2,817	\$ 960
	기획행정실	실장							
	심사분석실	사무관							
박○○ 외2인	기획행정실	실장	09.10.24~09.10.30	캄보디아(세일립)	APG 유형론 워크숍 참석	₩ 6,810,000	\$ 985	\$ 812	\$ 887
	심사분석실	사무관							
	심사분석실	사무관							
	심사분석실	사무관							
	심사분석실	사무관							
신○○	은행과	사무관	09.10.24~09.10.30	캐나다(안타와)	FATF 상호평가자 교육 워크숍 참여	₩ 3,400,000	\$ 720	\$ 702	\$ 315
	기획행정실	실장							
	기획행정실	사무관							
	심사분석실	사무관							
	기획행정실	사무관							
이○○외1인	심사분석실	팀장	10.01.19~10.02.20	호주(시드니)	중장기 정보화계획수립	₩ 5,650,000	\$ 486	\$ 510	\$ 325
	기획행정실	사무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심사분석실	사무관							
	기획행정실	사무관							
최○○외3인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10.02.14~10.02.20	아부다비/싱가포르	FATF 중의/실무회의	₩ 10,640,000	\$ 2,170	\$ 1,932	\$ 910
	심사분석실	사무관							
	기획행정실	사무관							
	기획행정실	사무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10.02.28~10.03.06	몽골(울란바토르)	MOU 체결을 위한 몽골 고위급 협의	₩ 2,850,000	\$ 486	\$ 392	\$ 280
	심사분석실	사무관							
	기획행정실	사무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기획행정실	사무관							

지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김○○	기획행정실	사무관	10.03.09~10.03.14	UAE(모리셔스)	에그용 실무그룹 회의	₩ 3,130,000	\$ 280	\$ 308	\$ 210
강○○외2인	심사분석실	팀장	10.05.23~10.05.26	프랑스(파리)	OECD 재정위원회 소그룹 회의 참석	₩ 9,000,000	\$ 1,760	\$ 1,530	\$ 666
	심사분석실	사무관							
박○○외1인	심사분석실	실장	10.05.23~10.05.26	일본(동경)	심사분석 업무 개선회의	₩ 1,130,000	\$ 885	\$ 696	\$ 364
	심사분석실	주무관							
송○○외1인	제도운영과	과장	10.05.23~10.05.31	미국(워싱턴, 뉴욕,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검사체계 구축방안	₩ 7,560,000	\$ 1,458	\$ 1,740	\$ 800
	제도운영과	사무관							
이○○외2인	기획행정실	실장	10.06.21~10.07.04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제21기 3차 FATF 총회	₩ 8,640,000	\$ 1,860	\$ 1,568	\$ 890
	기획행정실	사무관							
최○○외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10.06.26~10.07.04	몰도바(키르비나)	제18차 에그용 그룹 연차 총회	₩ 19,980,000	\$ 2,218	\$ 1,788	\$ 1,300
	금융정보분석원	팀장							
최○○	기획행정실	사무관	10.07.11~10.07.17	싱가포르	제13차 APG총회	₩ 4,030,000	\$ 1,751	\$ 1,370	\$ 600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							
차○○	심사분석1과	사무관	10.08.22~10.08.27	싱가포르	APG/IMF 상호평가자 워크숍	₩ 940,000	\$ 475	\$ 354	\$ 310
	기획행정실	사무관							
강○○	심사분석1과	사무관	10.10.03~10.10.09	홍콩	홍콩 경찰청 '2010 금융조사과정'강의	₩ 580,000	\$ 870	\$ 567	\$ 340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							
최○○외4인	심사분석1과	원장	10.10.17~10.10.22	프랑스(파리)	제22기 제1차 FATF 총회	₩ 16,780,000	\$ 3,660	\$ 2,557	\$ 1,170
	금융정보분석원	과장							
서○○	심사분석1과	사무관	10.10.17~10.10.23	방글라데시	APG 유형론 워크숍 참석	₩ 2,665,400	\$ 725	\$ 567	\$ 340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							
한○○외1인	심사분석1과	주무관	10.10.24~10.10.31	미국(워싱턴)	선진 AML/CFT 체계 구축방안 협의를 위한 FinCEN 등 방문	₩ 5,600,000	\$ 670	\$ 567	\$ 642
	금융정보분석원	주무관							
최○○	심사분석실	실장	10.11.08~10.11.11	남아프리카공화국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유형론에 관한	₩ 7,280,000	\$ 410	\$ 532	\$ 160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							
최○○ 외1인	심사분석실	실장	10.11.14~10.11.21	남아프리카공화국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유형론에 관한	₩ 12,400,000	\$ 976	\$ 1,264	\$ 69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액	숙박비	식사비	기타 여비
조○○외1인	은행과	사무관		(태이프타운)	2010년도 FATF-에그몬드를 전문가 회의 참석	₩ 4,796,200	\$ 380	\$ 472	\$ 240
이○○외1인	기획행정실	실장	10.12.06~10.12.11	홍콩	FATF 전문가 회의	₩ 2,020,000	\$ 1,555	\$ 1,316	\$ 455
변○○	행정인사과	주무관	10.12.06~10.12.08			₩ 606,000	\$ 268	\$ 387	\$ 104
이○○외1인	기획행정실	실장	11.01.27~11.01.30	프랑스(파리)	제4차 상호평가 이행결과 보고 관련 FATF 사무국 회의 참석	₩ 8,050,000	\$ 622	\$ 752	\$ 260
이○○외1인	심사분석실	팀장	11.02.19~11.02.26	호주(시드니)	선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제재 규속방안 연구	₩ 5,530,000	\$ 936	\$ 760	\$ 488
김○○외3인	기획행정실	실장	11.02.19~11.02.26	프랑스(파리)	FATF 제22기 제2차 중회 참석	₩ 11,840,000	\$ 3,190	\$ 2,430	\$ 900
차○○	기획행정실	사무관	11.02.28~11.03.03	미국(워싱턴)	해적 자금 차단 관련 전문가 회의 참석	₩ 2,030,000	\$ 435	\$ 324	\$ 120
김○○	기획행정실	사무관	11.03.13~11.03.20	아로바	에그몬 그룹회의 참석	₩ 2,950,000	\$ 725	\$ 567	\$ 210
박○○	규제개혁팀무담당관	사무관				₩2,950,100	\$725	\$567	\$210
김○○	기획행정실	사무관	11.03.13~11.03.20	케이프타운	FATF 전문가 회의 참석	₩ 2,120,000	\$ 475	\$ 472	\$ 240
최○○외2인	심사분석실	실장	11.04.09~11.04.17	미국(워싱턴)	FinCEN 회의 참석	₩ 18,500,000	\$ 3,582	\$ 2,889	\$ 945
송○○	제도운영과	과장	11.04.24~11.04.29	스페인/영국	카지노 금융회사 AML/CFT 감독·검사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3,640,000	\$ 480	\$ 420	\$ 180
김○○외1인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11.05.05~11.05.13	홍콩/호주/피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와 회의 개최 및 피지 내관과의 협력 MOU 체결을 위한 공무 국외 출장	₩ 10,070,000	\$ 1,450	\$ 1,422	\$ 630
이○○	기획행정실	팀장	11.05.11~11.05.13	홍콩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와 회의 개최 및 피지 내관과의 협력 MOU 체결을 위한 공무 국외 출장	₩ 610,000	\$ 90	\$ 243	\$ 290
김○○	기획행정실	사무관	11.05.11~11.05.13	프랑스(파리)	FATF 전문가 회의 및 WGTM 회의 참석	₩ 1,900,000	\$ 1,015	\$ 729	\$ 270
최○○외2인	심사분석실	실장	11.06.17~11.06.27	멕시코	FATF 제22기 제3차 중회 참가	₩ 12,850,000	\$ 2,414	\$ 1,972	\$ 920
조○○	은행과	사무관				₩ 2,438,900	\$ 760	\$ 590	\$ 300
박○○	심사분석1과	과장	11.07.10~11.07.17	아르메니아	제19차 에그몬 연차중회 참석	₩ 3,680,400	\$ 535	\$ 352	\$ 240
김○○	기획행정실	사무관				₩ 3,634,900	\$ 348	\$ 308	\$ 222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권○○	심사분석실	팀장	11.07.17~ 11.07.24	인도 코치	제14차 APG 연차총회 참석	₩ 3,608,900	\$ 800	\$ 546	\$ 245
이○○	기획행정실	5급				₩ 3,421,900	\$ 655	\$ 413	\$ 247
김○○	기획행정실	5급				₩ 4,327,600	\$ 524	\$ 413	\$ 249
오○○	심사분석실	5급				₩ 3,421,900	\$ 685	\$ 413	\$ 243
김○○	기획행정실	5급	11.09.06~ 11.09.13	프랑스 파리	WGTM Intersessional 회의 참석	₩ 2,465,300	\$ 330	\$ 405	\$ 168
이○○	심사분석실	5급	11.09.25~ 11.10.01	이탈리아 로마	WGEI Intersessional 회의 참석	₩ 1,986,900	\$ 620	\$ 413	\$ 210
김○○	기획행정실	팀장	11.10.23~11.10.29	프랑스 파리	FATF 제23기 제1차 총회 참석	₩ 6,600,100	\$ 237	\$ 243	\$ 90
이○○	기획행정실	5급				₩ 2,446,000	\$ 760	\$ 486	\$ 180
김○○	기획행정실	5급				₩ 2,292,400	\$ 975	\$ 567	\$ 210
최○○	심사분석실	5급				₩ 2,290,000	\$ 760	\$ 486	\$ 180
김○○	심사분석3과	5급	11.10.23~11.10.29	홍콩	Financial Investigation Course 참석	₩ 649,500	\$ 850	\$ 486	\$ 214
권○○	심사분석3과	경감				₩ 648,800	\$ 850	\$ 402	\$ 210
이○○	심사분석실	팀장	12.01.08~12.01.15	프랑스 파리	FATF 제23기 특별총회 참석	₩ 6,335,700	\$ 960	\$ 798	\$ 265
이○○	기획행정실	5급				₩ 2,166,300	\$ 1,050	\$ 729	\$ 310
차○○	기획행정실	5급				₩ 2,881,900	\$ 900	\$ 648	\$ 258
이○○	기획행정실	팀장				₩ 681,600	\$ 384	\$ 259	\$ 210
김○○	기획행정실	5급	12.01.29~12.02.05	캘리핀 마닐라	에그용 그룹 실무회의 참가	₩ 681,600	\$ 384	\$ 259	\$ 330
고○○	심사분석2과	5급				₩ 681,600	\$ 384	\$ 259	\$ 210
정○○	심사분석1과	6급				₩ 681,600	\$ 360	\$ 210	\$ 182
박○○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 6,333,500	\$ 720	\$ 665	\$ 700
송○○	제도운영과	과장	12.02.13~12.02.19	프랑스 파리	FATF 제23기 2차 총회 참석	₩ 2,378,100	\$ 450	\$ 405	\$ 150
이○○	기획행정실	5급				₩ 2,463,900	\$ 750	\$ 567	\$ 247
김○○	기획행정실	5급				₩ 2,164,700	\$ 900	\$ 648	\$ 290
변○○	심사분석실	7급				₩ 2,463,900	\$ 792	\$ 536	\$ 208
황○○	심사분석실	팀장	12.04.15~12.04.21	싱가포르	FATF WGEI 평가방법론 작성실무회의 참석	₩ 821,800	\$ 517	\$ 468	\$ 251
이○○	기획행정실	5급				₩ 821,800	\$ 647	\$ 413	\$ 273
신○○	심사분석2과	과장	12.04.24~12.04.29	말레이시아	APG 실무회의 참석	₩ 820,100	\$ 308	\$ 220	\$ 150
남○○	기획행정실	5급				₩ 820,100	\$ 308	\$ 220	\$ 150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료	식사비	기타 여비
박○○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12.05.27~12.06.01	미얀마, 태국, 베트남	동남아 후발국 기술지원 및 MOU 체결	₩ 2,823,000	\$ 416	\$ 399	\$ 240
김○○	기획행정실	5급				₩ 1,744,700	\$ 1,805	\$ 243	\$ 345
김○○	기획행정실	5급	12.05.28~12.06.01	미얀마	동남아 후발국 기술지원	₩ 1,484,600	\$ 338	\$ 220	\$ 301
차○○	기획행정실	5급				₩ 1,484,600	\$ 338	\$ 220	\$ 150
이○○	기획행정실	에디터				₩ 1,484,600	\$ 338	\$ 220	\$ 150
권○○	심사분석실	팀장	12.06.13~12.06.23	이탈리아 로마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제23기 3차 총회 및 OECD Tax and Crime Forum 2012 참가	₩ 1,948,700	\$ 1,219	\$ 858	\$ 385
박○○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12.06.17~12.06.23	이탈리아 로마	FATF 제23기 3차 총회 참석	₩ 5,465,400	\$ 608	\$ 693	\$ 280
김○○	기획행정실	실장				₩ 2,036,800	\$ 675	\$ 413	\$ 210
이○○	기획행정실	5급				₩ 2,199,400	\$ 944	\$ 531	\$ 332
이○○	기획행정실	에디터	12.07.07~12.07.15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제20차 애그로물 연차총회 참석	₩ 2,135,700	\$ 809	\$ 472	\$ 264
이○○	심사분석실	실장				₩ 5,976,500	\$ 1,266	\$ 891	\$ 360
송○○	심사분석실	5급				₩ 1,979,600	\$ 829	\$ 531	\$ 270
김○○	기획행정실	5급				₩ 2,128,700	\$ 968	\$ 531	\$ 270
차○○	기획행정실	5급	12.07.14~12.07.21	호주 브리즈번	제15차 APG 연차총회 참석	₩ 2,128,700	\$ 830	\$ 531	\$ 287
박○○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 4,104,100	\$ 435	\$ 432	\$ 240
임○○	심사분석1과	과장				₩ 2,332,400	\$ 231	\$ 352	\$ 260
이○○	기획행정실	5급				₩ 2,279,300	\$ 1,846	\$ 352	\$ 314
남○○	기획행정실	5급				₩ 2,431,000	\$ 965	\$ 264	\$ 265
이○○	기획행정실	에디터	10.07.18~10.07.21	몽골	몽골 금융감독기구 및 부실채권관리기구 업무 협의	₩ 2,332,400	\$ 777	\$ 308	\$ 265
김○○	공자위 사무국	사무관				₩ 1,087,100	₩223,516	₩177,851	₩300,423
이○○	정책개발팀	서기관				₩ 1,087,100	\$ 186.00	\$ 148.00	\$ 240.00
박○○	공자위 사무국	사무관	10.10.04~10.10.07	홍콩	공적자금 투입기관 민영화를 위한 해외법인 매도자 실사지원	₩ 571,100	₩494,116	₩368,032	₩283,975
유○○	공자위 사무국	주무관				₩ 571,100	₩439,593	₩304,422	₩254,441

직원명	부서	직위/직급	기간	출장국	출장내용	항공가격	숙박비	식사비	기타 여비
김○○	공자위 사무국	사무관	10.12.20~10.12.25	워싱턴 뉴욕	미국의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정책조사	₩ 2,583,300	₩500,250	₩465,750	₩172,500
남○○	규제개혁팀무담당관	과장				₩2,584,287	\$435.00	\$405.00	\$150.00
정○○	공자위 사무국	사무관	10.12.20~10.12.24	영국	영국의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정책조사	₩ 1,964,500	₩500,250	₩465,750	₩172,500
박○○	공자위 운용기획팀	팀장(4급)	11.9.13~11.9.15	홍콩(HK), 로스자일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매각관련 해외 투자자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 648,800	\$ 176	\$ 243	\$ 90
김○○	공자위 운용기획팀	행정사무관				₩ 648,800	\$ 176	\$ 243	\$ 90
유○○	공자위 운용기획팀	행정주사	11.12.5~11.12.9	피지(APEC FRTD)	ADB와 피지연발준비은행이 주최하는 세미나 참석	₩ 1,649,300	\$ 284	\$ 150	\$ 130
박○○	공자위 운용기획팀	팀장(4급)	11.12.18~11.12.21	독일(FMSA)	독일 금융시장안정자금 운용실태 및 현황조사	₩ 1,529,700	\$ 232	\$ 236	\$ 120
유○○	공자위 운용기획팀	행정주사보				₩ 1,529,700	\$ 210	\$ 196	\$ 104
김○○	공자위 회수관리팀	행정주사				₩ 1,529,700	\$ 210	\$ 196	\$ 104
김○○	공자위	국장 (일반 고위공무원)	12.3.27~11.3.31	미국 워싱턴	미국 공적자금 투입 회수사례 및 Dodd-Frank법에 따른 금융회사 합병 관련 규제변화 조사	₩ 7,533,600	\$ 669	\$ 535	\$ 175
송○○	공자위 운용기획팀	행정사무관				₩ 2,255,200	\$ 528	\$ 405	\$ 150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17. 최근 3년간 횡령, 예산 부적절 집행 등으로  
인한 소속 임직원 징계 현황(일시, 부서명,  
혐의사실 요약, 조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18. 최근 3년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비고
09	2,886,807	2,883,772	
10	3,146,391	3,142,647	
11	1,555,631	1,553,077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19. 최근 3년간 일반예산 중 광고홍보비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연도별, 건별, 홍보매체, 홍보대행사)

□ 최근 3년간 일반예산 중 광고홍보비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 만원)

연도	홍보매체	예 산	집 행	내 용
'09	조선일보 외 25개 <sup>1)</sup>	4,000	2,140 <sup>2)</sup>	서민생활대책 (달라지는 서민생활)
	KBS		1,100	'5천만의 아이디어로' 방송 협찬
	합계	4,000	3,240	
'10	동아일보	9,300	3,053	FSB 서울총회 개최
	매일경제		1,247	G20 성과 및 대국민 감사
	한국경제		1,247	
	서울경제		832	
	헤럴드경제		832	
	파이낸셜뉴스		624	
	머니투데이		624	
	아시아경제		520	
	아시아투데이		416	
	아주경제		416	
	코리아타임스		624	
	코리아헤럴드		624	
	중앙데일리		624	
	제작인쇄		600	
	합계	9,300	12,283	

연도	홍보매체	예산	집행	내용
'11	중앙선데이	6,000	979	서민금융 지원제도
	동아일보		990	
	The City(더시티)		880	
	시장경제신문		3,410	
	합계	6,000	6,259	
총계			21,780	

※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집행 일임

- 1)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내일신문,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메트로, 포커스, AM7, 노컷뉴스, 시티, 스포츠한국, 이브닝
- 2) 정부합동광고 총 19,256만원 중 금융위 부담 금액 2,142만원 (9개 부처 공동 부담)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20. 최근 3년간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B/A
	예산(A)	결산(B)	
합 계	2,886,807	2,883,772	99.9
□ 금융위원회 운영	2,804,937	2,801,501	99.9
○ 인 건 비	14,313	13,589	94.9
○ 기 본 경 비	8,597	7,655	89.0
- 인건비(일용직)	478	487	101.9
- 운영비	5,082	4,948	97.4
- 직무수행경비	283	291	102.8
- 여비	431	216	50.1
- 업무추진비	794	633	79.7
- 보전금	6	1	16.6
- 민간이전	57	58	101.7
- 건설비	1,137	761	66.9
- 기타유형자산	329	260	79.0
○ 사 업 비	2,782,027	2,780,257	99.9
- 금융중심지 추진	300	177	59
- 금융전문인력 양성	1,500	1,408	93.9
- 산업은행 출자	900,000	900,000	100
- 기업은행 출자	800,000	800,000	100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600,000	600,000	100
- 주택금융공사 출자	400,000	400,000	100
- 농어가목돈 출연	65,000	65,000	100
- 모기지론 이차보전	3,903	2,710	69.4
- FIU 운영(전산망포함)	5,859	5,757	98.3
- 정보화 지원	604	585	96.9
- 정책연구개발	500	499	99.8
- 기타	4,361	4,121	94.5
□ 내부 거래(회계기금간 거래)	81,870	82,271	101.7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집행률 (B/A)
	예산액	집행액(B)	
합 계	3,146,391	3,142,647	99.9
□ 금융위원회 운영	143,104	139,898	97.7
○ 인 건 비	15,028	14,167	94.3
○ 기 본 경 비	7,141	6,415	90.6
- 인건비(일용임금)	670	665	99.3
- 운영비	4,545	4,125	91.9
- 여비	427	316	74.0
- 업무추진비	755	675	89.4
- 직무수행경비	314	316	99.7
- 보전금	1.5	1.5	100.0
- 민간이전	116	98	84.5
- 건설비 및 기타유형자산	312	219	70.9
○ 사 업 비	120,934	119,315	98.6
- 금융업법체계 개편	79	64	81.0
- 금융중심지 추진	298	272	76.0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보조	500	500	100.0
- 금융관련 국제협력	637	488	76.5
- 금융전문인력 양성	1,900	1,900	100.0
- 녹색금융	150	99	66.1
- 금융소비자 보호	-	-	-
- 한국산업은행 출자	10,000	10,000	100.0
- 중소기업은행 출자	30,000	30,000	100.0
-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74	72	97.3
- 모기지론 이차보전	4,563	3,185	69.8
- 농어가기금 출연	65,200	65,200	100.0
- FIU운영	1,256	1,240	97.9
- APG 유형론 실무회의	-	-	-
-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4,656	4,654	99.9
- 정보화 지원(정보화)	570	562	98.7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21	119	98.7
- 정책연구개발	600	574	95.7
- 금융정책 알리기	330	386	99.3
□ 내부 거래(회계기금간 거래)	3,003,288	3,002,749	99.9
- 공자기금 전출금	3,000,000	3,000,000	100.0
- IBRD차관 원리금상환	3,288	2,749	83.6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집행률 (B/A)
	예산액	집행액(B)	
□ 금융위원회 운영	103,100	101,051	98.0
○ 인 건 비	16,350	15,646	95.7
○ 기 본 경 비	7,463	6,813	91.3
- 인건비(일용임금 등)	723	751	103.9
- 운영비	4,748	4,306	90.7
- 여비	441	345	78.2
- 업무추진비	772	715	92.6
- 직무수행 경비	317	316	99.7
- 보전금	1.5	-	-
- 민간이전	123	105	85.4
- 건설비 및 기타유형자산	337	275	81.6
○ 사 업 비	79,287	78,593	99.1
- 금융업법체계 개편	71	50	70.4
- 금융관련 국제협력	573	526	91.8
- 금융소비자 보호	128	112	87.5
- 금융중심지 추진	213	168	78.9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보조	510	510	100.0
- 금융전문인력 양성	1,350	1,350	100.0
- IFIAR 서울 총회	-	-	-
-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60	54	90.0
- 모기지론 이차보전	4,700	4,488	95.5
- 농어가자금 출연	63,700	63,700	100.0
- FIU운영	1,295	1,237	95.5
- APG 유형론 실무회의	430	398	92.5
- FIU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	4,623	4,556	98.5
- 정보화 지원(정보화)	542	519	95.8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13	98	86.7
- 정책연구개발	650	502	77.2
- 금융정책 알리기	330	325	98.5
□ 내부 거래(회계기금간 거래)	1,452,531	1,452,026	99.9
- 공자기금 전출금	1,449,353	1,449,353	100.0
- IBRD차관 원리금상환	3,178	2,673	84.1
합 계	1,555,631	1,553,077	99.8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21. 최근 3년간 정부출연금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 (연도별, 건별)**

☐ 출연금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일시	금액	집행 내역
2009	65,00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2010	65,20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2011	63,70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22. 수입 및 지출 연도별·분야별 상세 내역

□ 최근 3년간 수입 및 지출 연도별·분야별 상세내역

#### 2009회계연도 세입실적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B-A)
합 계	13,313	31,928	8,833	834	22,261	△4,480
전대차관 원금회수	896	1,175	1,175	0	0	280
전대차관 이자수입	196	185	185	0	0	△11
과징금·과태료	12,130	30,274	7,252	834	22,188	△4,878
가산금	91	88	88	0	0	△3
기타경상이전수입	0	206	133	0	73	133

##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B/A
	예산(A)	결산(B)	
합 계	2,886,807	2,883,772	99.9
□ 금융위원회 운영	2,804,937	2,801,501	99.9
○ 인 건 비	14,313	13,589	94.9
○ 기 본 경 비	8,597	7,655	89.0
- 인건비(일용직)	478	487	101.9
- 운영비	5,082	4,948	97.4
- 직무수행경비	283	291	102.8
- 여비	431	216	50.1
- 업무추진비	794	633	79.7
- 보전금	6	1	16.6
- 민간이전	57	58	101.7
- 건설비	1,137	761	66.9
- 기타유형자산	329	260	79.0
○ 사 업 비	2,782,027	2,780,257	99.9
- 금융중심지 추진	300	177	59
- 금융전문인력 양성	1,500	1,408	93.9
- 산업은행 출자	900,000	900,000	100
- 기업은행 출자	800,000	800,000	100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600,000	600,000	100
- 주택금융공사 출자	400,000	400,000	100
- 농어가목돈 출연	65,000	65,000	100
- 모기지론 이차보전	3,903	2,710	69.4
- FIU 운영(전산망포함)	5,859	5,757	98.3
- 정보화 지원	604	585	96.9
- 정책연구개발	500	499	99.8
- 기타	4,361	4,121	94.5
□ 내부 거래(회계기금간 거래)	81,870	82,271	101.7

## 2010회계연도 세입실적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B-A
전대차관 원금회수	1,110	1,010	1,010	-	-	△100
전대차관 이자수입	127	26	26	-	-	△102
과징금·과태료	10,875	36,871	10,743	245	25,883	△132
가산금	81	98	98	-	-	17
기타경상이전수입	-	525	525	-	-	525
합 계	12,193	38,530	12,402	245	25,883	210

#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집행률 (B/A)
	예산액	집행액(B)	
합 계	3,146,391	3,142,647	99.9
□ 금융위원회 운영	143,104	139,898	97.7
○ 인 건 비	15,028	14,167	94.3
○ 기 본 경 비	7,141	6,415	90.6
- 인건비(일용임금)	670	665	99.3
- 운영비	4,545	4,125	91.9
- 여비	427	316	74.0
- 업무추진비	755	675	89.4
- 직무수행 경비	314	316	99.7
- 보전금	1.5	1.5	100.0
- 민간이전	116	98	84.5
- 건설비 및 기타유형자산	312	219	70.9
○ 사 업 비	120,934	119,315	98.6
- 금융업법체계 개편	79	64	81.0
- 금융중심지 추진	298	272	76.0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보조	500	500	100.0
- 금융관련 국제협력	637	488	76.5
- 금융전문인력 양성	1,900	1,900	100.0
- 녹색금융	150	99	66.1
- 금융소비자 보호	-	-	-
- 한국산업은행 출자	10,000	10,000	100.0
- 중소기업은행 출자	30,000	30,000	100.0
-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74	72	97.3
- 모기지론 이차보전	4,563	3,185	69.8
- 농어가기금 출연	65,200	65,200	100.0
- FIU운영	1,256	1,240	97.9
- APG 유형론 실무회의	-	-	-
-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4,656	4,654	99.9
- 정보화 지원(정보화)	570	562	98.7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21	119	98.7
- 정책연구개발	600	574	95.7
- 금융정책 알리기	330	386	99.3
□ 내부 거래(회계기금간 거래)	3,003,288	3,002,749	99.9
- 공자기금 전출금	3,000,000	3,000,000	100.0
- IBRD차관 원리금상환	3,288	2,749	83.6

## 2011회계연도 세입실적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A
전대차관 원금회수	1,038	988	988	-	-	△50
전대차관 이자수입	86	18	18	-	-	△68
과징금·과태료	9,500	42,151	14,301	621	27,229	4,801
가산금	86	173	173	-	-	87
기타경상이전수입	-	434	434	-	-	434
합 계	10,710	43,764	15,914	621	27,229	5,204

##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집행률 (B/A)
	예산액	집행액(B)	
□ 금융위원회 운영	103,100	101,051	98.0
○ 인 건 비	16,350	15,646	95.7
○ 기 본 경 비	7,463	6,813	91.3
- 인건비(일용임금 등)	723	751	103.9
- 운영비	4,748	4,306	90.7
- 여비	441	345	78.2
- 업무추진비	772	715	92.6
- 직무수행경비	317	316	99.7
- 보전금	1.5	-	-
- 민간이전	123	105	85.4
- 건설비 및 기타유형자산	337	275	81.6
○ 사 업 비	79,287	78,593	99.1
- 금융업법체계 개편	71	50	70.4
- 금융관련 국제협력	573	526	91.8
- 금융소비자 보호	128	112	87.5
- 금융중심지 추진	213	168	78.9
-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보조	510	510	100.0
- 금융전문인력 양성	1,350	1,350	100.0
- IFIAR 서울 총회	-	-	-
-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60	54	90.0
- 모기지론 이차보전	4,700	4,488	95.5
- 농어가자금 출연	63,700	63,700	100.0
- FIU운영	1,295	1,237	95.5
- APG 유형론 실무회의	430	398	92.5
- FIU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	4,623	4,556	98.5
- 정보화 지원(정보화)	542	519	95.8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13	98	86.7
- 정책연구개발	650	502	77.2
- 금융정책 알리기	330	325	98.5
□ 내부 거래(회계기금간 거래)	1,452,531	1,452,026	99.9
- 공자기금 전출금	1,449,353	1,449,353	100.0
- IBRD차관 원리금상환	3,178	2,673	84.1
합 계	1,555,631	1,553,077	99.8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2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

□ 2009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1	금융상품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방지방안	09.04.13~ 09.08.14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30
2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09.03.16~ 09.12.16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재)	45
3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09.06.01~ 09.08.31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20.5
4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09.06.10~ 09.08.15	연세대 산학협력단 (최홍식)	40
5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09.05.13~ 09.11.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용협)	30
6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09.05.28~ 09.11.11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28.8
7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09.04.21~ 09.08.28	서울대 산학협력단 (김대일)	30
8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09.07.09~ 09.11.30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35
9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09.08.05~ 09.12.02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32
10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09.08.28~ 09.12.28	아주대 산학협력단 (이윤제)	35
1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 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09.10.07~ 09.12.06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운)	30
12	주요국에서의 금융변혁기에 대응한 금융정책사례 연구	09.10.15~ 09.12.17	한양대 산학협력단 (박대근)	40
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수취 비은행금융 회사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	09.09.30~ 09.12.05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20
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09.09.18~ 09.12.17	(사)한국보험연구원 (유경원)	20
15	금융정보생산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방안 연구	09.10.08~ 09.12.23	한국금융학회 (이인호)	20
16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방안 연구	09.11.11~ 09.12.10	한국채권연구원 (박창균)	23
17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09.09.16~ 09.11.16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20

□ 2010년

연번	과 제 명	계약 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1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10.03.26~ 10.07.25	한국개발연구원 (손욱)	30
2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10.04.01~ 10.07.31	서울대 산학협력단 (정순섭)	30
3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10.04.19~ 10.08.31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40
4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	10.05.28~ 10.07.31	법무법인 을촌 (김정수)	30
5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10.04.13~ 10.07.12	한국개발연구원 (연태훈)	45.5
6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검토	10.06.09~ 10.7.30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30
7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	10.04.09~ 10.09.03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철)	30
8	국내외 조기경보 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시장 조기 경보모형 개선	10.05.01~ 10.10.31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20
9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10.08.30~ 10.12.20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30
10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와 평가	10.09.16~ 10.12.15	한양대 산학협력단 (박대근)	30
11	효과적인 외환간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10.09.20~ 10.12.20	한국금융연구원 (김정환)	25
12	신용정보 유통체계 개선방안	10.10.11~ 10.12.11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재)	30
13	국내은행 해외 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 감독 방안	10.10.11~ 10.12.11	한국금융연구원 (서근우)	25
14	기업경영 안정 등을 위한 상품파생시장 제도 개선방안	10.10.15~ 10.12.14	서울대 산학협력단 (안동현)	30
15	회계감독제도 개편 등에 대응한 감리조치기준 개선안 연구	10.10.15~ 10.12.14	한국법제연구원 (이준호)	30
16	우리나라 특정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10.04.20~ 10.11.30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재)	30
17	금융회사 자금세탁 판단지표(Rule)의 유용성 연구	10.10.15~ 10.12.27	(주)데이터메이션 (한미혜)	27.7
18	한국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10.10.25~ 10.12.20	KAIST, 삼성경제연구원 (이병태)	47.5
19	미국 금융규제개혁법 중 자본시장 관련 규제내용 및 시사점	10.11.03~ 10.12.20	자본시장연구원 (정찬우)	10
20	미국 금융개혁과 보험규제에 대한 시사점 연구	10.11.03~ 10.12.20	보험연구원	3

□ 2011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1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	11.01.27~ 11.06.02	금융연구원 (이명활)	40
2	금감원장 및 감사 성과평가 개선방안	11.04.06~ 11.05.30	금융연구원 (이병윤)	20
3	회계산업 중장기발전 방안	11.05.02~ 11.06.30	한국회계학회 (이창우)	30
4	저축은행 경영부실 실상 및 원인 규명 백서	11.06.27~ 11.09.26	KDI (정찬우)	15
5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백서	11.07.01~ 11.12.30	KDI (고영선)	50
6	대형 IB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연구	11.07.11~ 11.11.04	자본시장연구원 (장정모)	30
7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11.07.26~ 11.11.30	KDI (천규승)	25
8	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11.08.19~ 11.10.31	법무법인 태평양 (정의종)	29
9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계약간 규제 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11.09.23~ 11.12.15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30
10	법인설립과 신탁계약 등이 자금세탁 등 불법적 목적에 이용될 위험과 그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11.10.04~ 11.12.20	김&장법률사무소 (서문식)	39
11	비금융전문직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관한 연구	11.10.12~ 11.12.20	금융연구원 (이윤석)	44
12	금융회사간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인프라 및 관리감독 개선 방안	11.10.19~ 11.12.16	금융연구원 (이규복)	30
1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 도입방안	11.10.19~ 11.12.20	금융연구원 (김동환)	30
14	ET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11.10.25~ 11.12.15	금융연구원 (연태훈)	30
15	부동산개발금융 제도개선방안 연구	11.10.26~ 11.12.25	건국대산학협력단 (고성수)	30
16	외은지점 규율체계 정비관련 주요 검토사항	11.10.27~ 11.12.27.	금융연구원 (서병호)	30
17	외환, 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11.07.15~ 12.02.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용)	35
18	청년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방안	11.12.22~ 12.04.21	금융연구원 (구본성)	30

□ 2012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1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2.04.06~ 12.06.03	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20
2	ELS 및 DLS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12.04.24~ 12.09.23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26
3	고령화 대비 공·사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12.04.30~ 12.08.31	보험연구원 ( 김대환 )	30
4	금융세계 현황 및 발전 방향	12.05.04~ 12.08.31	금융연구원 (연태훈)	30
5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12.05.18~ 12.10.31	한국채권연구원 (박창균)	39
6	기업공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2.05.25~ 12.09.24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35
7	대학생 고금리 대출 이용 실태조사	12.06.08~ 12.07.07	한국궤협연구소 (박병일)	10
8	주요 신흥국과의 전략적 금융 협력 강화 방안	12.06.25~ 12.10.31	대외경제연구원 (강대창)	26
9	금융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12.07.06~ 12.10.05	한국재정학회 연세대 산학협력단 서강대 산학협력단 (원윤희 외 3명)	20
10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12.07.17~ 12.11.20	금융보안연구원 (김영태)	40
1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향	12.07.26~ 12.11.26	한국연금학회 (신성환)	30
12	대부업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 방안	12.07.30~ 12.10.29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20
13	가계부채 미시분석	12.08.16~ 12.11.15	한국금융연구원 ( 서정호 )	40
14	핵·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금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12.08.31~ 12.12.10	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35
15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상품정보 제공방안	12.09.10~ 12.11.30	서울대 산학협력단 (나종연)	34
16	新 FATF 국제규범 주요 내용과 대응전략(금융부문 중심)	12.09.13~ 12.12.30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35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24.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 ○ 접수현황

(단위: 건)

	민원	진정
2010년 (‘10.1.~’10.12.)	3,776	755
2011년 (‘11.1.~’11.12.)	3,223	128
2012년 (‘12.1.~’12.8.)	2,129	6

##### ○ 처리현황

(단위: 건)

	처리완료	민원취하 등
2010년 (‘10.1.~’10.12.)	4,666	380
2011년 (‘11.1.~’11.12.)	3,554	368
2012년 (‘12.1.~’12.8.)	2,042	262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25. 각종 위원회 위원 현황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 금융위원회 위원 구성

직 위	성 명
위 원 장	김 석 동
부 위 원 장	추 경 호
상 임 위 원	홍 영 만
상 임 위 원	이 상 제
당 연 직 위 원(기획재정부 차관)	신 제 윤
당 연 직 위 원(금융감독원 원장)	권 혁 세
당 연 직 위 원(예금보험공사 사장)	김 주 현
당 연 직 위 원(한국은행 부총재)	박 원 식
비 상 임 위 원	심 인 숙

#####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구성

직 위	성 명
위 원 장	추 경 호
상 임 위 원	유 재 훈
비 상 임 위 원	허 창 수
비 상 임 위 원	손 성 규
비 상 임 위 원	류 시 관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 위원 구성 현황

#### 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회	성명	구분	소속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김석동	당연직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	당연직	기획재정부차관
	남상구	위촉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오규택	위촉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이재술	위촉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
	박영석	위촉직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이기화	위촉직	다산회계법인 대표
	민병훈	위촉직	공감 법률사무소 대표

####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심의회

위원회	성명	구분	소속
공적자금상환 기금운용심의회	추경호	당연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성대규	당연직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장
	노형욱	당연직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강태수	당연직	한국은행 부총재보
	조현철	당연직	예금보험공사 이사
	강명석	당연직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
	여은정	위촉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홍명중	위촉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제협력팀

###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 분	성 명	현 직위
민간위원 (10인)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최석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공동대표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Patrick Mange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부사장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
	Michael Hellbeck	한국SC금융지주 부사장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태혁	부산대 경영학부 교수
	김유니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연희	보스턴컨설팅그룹 시니어 파트너
정부위원 (5인)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시장
유관기관 위원 (6인)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종석	한국투자공사장

## 공정시장과

### □ 공정시장과 소관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목적	인적구성	회의개최 시기*
감리 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3, §25)	· 회계감리·조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전 심의	당연직 4인 위촉직 5인	08년 6회 09년 9회 10년 13회 11년 11회 12년 11회
자본시장 조사 심의위원회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21, §22)	·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심의, 이의신청· 직권재심 등에 관한 사전 심의	당연직 4인 위촉직 3인	08년 13회 09년 13회 10년 13회 11년 11회 12년 10회
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3, §24)	· 회계처리기준 수정요구, 회계감사기준 재개정 승인 등 회계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전 심의	당연직 4인 위촉직 7인	08년 4회 09년 4회 10년 4회 11년 3회 12년 3회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공인 회계사법 (§48)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인 회계사에 대한 징계의결	당연직 5인 위촉직 2인	08년 0회 09년 2회 10년 1회 11년 1회 12년 1회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공인 회계사법 (§6조의2)	·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선발인원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중요 사항 심의	당연직 3인 위촉직 4인	08년 1회 09년 1회 10년 1회 11년 0회 12년 1회

\*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융위로 이관된 시점('08.2.29)부터 '12년 8월말 기준

□ 위원 인적사항('12.8월말 기준)

위원회명	위원명	구 분	소속/직위
감리위원회	유재훈	당연직	증선위 상임위원
	김용범	당연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김호중	당연직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김광윤	당연직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양석조	위촉직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정석우	위촉직	고려대 경영대 교수
	황이석	위촉직	서울대 경영대 교수
	지현미	위촉직	계명대 교수
	최호영	위촉직	법무법인 다담 변호사
자본시장 조사심의 위원회	유재훈	당연직	증선위 상임위원
	김용범	당연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정연수	당연직	금감원 부원장보
	양석조	당연직	금융위 법률자문관
	박경호	위촉직	법무법인 원 변호사
	안동현	위촉직	서울대학교 교수
	김유니스	위촉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유재훈	당연직	증선위 상임위원
	김용범	당연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김형돈	당연직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호중	당연직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권현수	위촉직	삼덕회계법인 이사
	한종수	위촉직	이화여대 교수
	전규안	위촉직	송실대 교수
	함종호	위촉직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총괄대표
	이선종	위촉직	삼성전자 부사장
	정다미	위촉직	명지대 교수
	이영훈	위촉직	포스코 전무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추경호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
	신민철	당연직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장
	임송학	당연직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김형돈	당연직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용범	당연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이광남	위촉직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손성규	위촉직	증선위 비상임위원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추경호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
	고승범	당연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김용범	당연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이재일	위촉직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최현덕	위촉직	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
	이정치	위촉직	일동제약(주) 대표이사
	최관	위촉직	성균관대 교수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26. 각 기관·공사별 공문서 수발신 목록 및  
부서별 경상경비 지출부

☐ 별도제출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27. 금융위원회 소송현황('10~12)

#### □ 연도별 소송 현황('12.9.17. 기준)

연도	신규 접수	종결 처리(확정)					계류 (차년이월)
		계	승소	패소	취하	기타	
2010	29*	13	10	0	3	0	16
2011	27	12	8	1	3	0	31
2012	34	13	7	0	6	0	52
계	90	38	25	1	12	0	-

\* 2009년 이월 19건 포함

#### □ 패소 사건 상세 내역

종결 년도	사건명 (원고, 사건번호)	심급별 판결 요지	심급별 결과
201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연대, 서울행정 2007구합35166)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등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거부를 취소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 재판(형사사건)의 쟁점이 아니며,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한 사유만으로 비공개 대상이 될 수는 없음	1심: 일부 패
		○1심 판결 요지 원용 ○(추가) 금융위(금감원) 미보유 정보는 각하	2심: 일부 패
		○2심 판결의 잘못이 없음	3심: 일부 패

#### □ 개별 사건 세부 내역 : 붙임 참조

<b>붙임</b>	<b>금융위원회 소송현황(원고로 제기한 소송 없음)</b>
-----------	----------------------------------

☐ **종결 사건 내역**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 결과 및 종국일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만원)		
						계	착수금	성공 보수
○○(주)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961	시정 조치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발자 소제기	2010-04-15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에 너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7855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발자 소제기	2010-04-15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정○○ 외 4명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60600	순해배상(기)	국가의 '화망모아유동화전문화사'에 부실감독 책임 주장	2011-01-11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고○○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066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과징금을 부과발자 본인이 투자 자 모집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을 주장	2010-07-01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오○○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517	계약이전결정 제외 취소	○○상호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 계약이전을 제외하는 결정은 불법이 라고 주장	2010-04-15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장○○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422	감리결과 조치 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재발자 소 제기	2010-02-18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0076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발자 소제	2011-02-01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박○○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6463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발자 소제	2011-01-11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결과 및 종국일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 만원)		
						계	착수금	성공 보수
○○(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31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받자 소제	2010-11-24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회계 법인 외 3명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9865	감리결과 조치 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재받자 소 제기	2010-03-17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85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받자 소제	2010-08-13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곽○○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1424	금융행정정보공 개거부처분 취소	소의 허오에 대한 신용정보의 공개를 요 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 제기	2010-04-22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차○○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673	정보공개거부처 분 취소	(주)○○에 대한 과징금부과 관련 정보공개 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 제기	2010-06-17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8741	감사보고서감리 결과조처처분 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재받자 소 제기	2010-09-02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	용인시법원 2010차1764	구상금	보험모집인에 대한 국가의 보험업무 감독 소홀이 있었다고 주장	2010-07-16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6834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받자 소제	2010-10-08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4743	조치처분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재받자 소 제기	2011-03-19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저축 은행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6806	부실금융기관지 정취소	유동성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임시 휴업 등을 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받 자 소제기	2011-06-08 승소	태평양	1000	500	500
이○○ 외 2명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8518	손해배상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2011-06-24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383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받자 소제	2011-06-23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결과 및 종국일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 만원)		
						계	착수금	성공 보수
○○시멘트(주)	서울중앙법원 2010가합8360	의결권 확인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자산운용(주)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해 의결권 제한 통보를 하자 소제기	2011-07-28 승소	정부법무공단	500	500	0
전국○○노동조합○○은행지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225	비금융주력자의 한도초과보유지분 처분명령 거부처분 취소	○○펀드Ⅳ의 ○○은행 지분에 대하여 비금융주력자임을 이유로 처분을 명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부하자 소 제기	2011-07-28 소취하	화유	250	250	0
이○○ 외 150명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56574	손해배상	(주)○○테크놀로지외 회계처리기준 위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국가의 감독소홀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2011-08-06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2431	파장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받자 소제	2011-09-06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개혁연대 외 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5166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관련 금융비주력자 판단자로 제공 거부의 취소를 요구	2011-11-24 일부 패소	정부법무공단	200	200	0
허○○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981	부작위위법확인	대주주 사후변경승인 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후변경승인 신청 후 부작위 위법을 주장	2012-04-23 각하	정부법무공단	400	400	0
○○시멘트(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9049	대주주 변경승인 조치통보 취소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자산운용(주)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자 소 제기	2012-04-20 승소	정부법무공단	450	450	0
공○○ 외 2명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5001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재받자 소 제기	2012-04-30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소 결과 및 종국일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 만원)		
						계	착수금	성공 보수
이○○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20949	손해배상(기)	민원사항을 지연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	2012-05-09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백○○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602	공인회계사직무 정지2년 부과처분 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재받자 소 제기	2012-04-30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리츠 주식회사 외 1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27689	손해배상(기)	원고에 대하여 주채권은행도 지정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경영정상 화할 기회를 잃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	2012-05-24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회계 법인 외 3명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5831	감리결과조치통 보처분 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재받자 소 제기	2012-05-23 승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식회사 ○○	순천지원 2012가소9568	손해배상(기)	신용카드 상품의 부실한 인허가, 관리, 감 독 소홀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	2012-07-11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신용 정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2970	업무정지처분취 소 등	경영상태가 불건전하여 영업정지 받자 소 제기	2012-07-17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은행 우리사주 외 4명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189	주식취득승인처 분무효확인등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이 명백하다고 주 장	2012-06-28 승소	화우	250	250	0
진○○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844	제재처분취소	대주주 부담지원 등으로 퇴직자상당 조치 를 받자 소 제기	2012-08-07 소취하	태평양	1000	500	500
○○번호 사모임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191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론스타 ISD 제기 의사 통보서 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소 제기	2012-08-20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236	대표자문채경고 처분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받자 소 제기	2012-08-08 소취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 진행 사건 내역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진행내역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 만원)		
						계	착수금	성공 보수
○○저축 은행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5684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처분 취소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인가취소되자 소 제 기	1심 : 패	한빛	900	900	0
				2심 : 패	세종	600	600	0
				3심 : 패기 환송심 : 진 행중	세종	600	600	0
					세종	300	300	0
황○○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499	제제처분 취소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소홀 등으로 퇴직자 상당조치를 받자소 제기	1심 : 패	정부법 무공단, 김용찬	1400,	700,	700,
				2심 : 패	김용찬	1400	700	700
				3심 : 진행중	변호사 바른	2500	1000	1500
					바른	625	250	375
○○저축 은행 외 76명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428	부실금융기관결 정 및 경영개선명령 취소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	1심 : 승	태평양	600	200	400
				2심 : 진행중		1000	500	500
김○○ 외 23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56779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00	60	40
강○○ 외 80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59563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00	60	40
강○○ 외 123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5907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00	60	40
강○○ 외 18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72108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60	36	24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진행내역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 만원)		
						계	착수금	성공 보수
김○○ 외 9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72771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00	60	40
이○○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292400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50	90	60
강○○ 외 192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470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50	90	60
강○○ 외 93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2969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50	90	60
강○○ 외 140명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829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50	90	60
진○○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06223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50	90	60
진○○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06254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50	90	60
강○○ 외 31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01894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60	36	24
고○○ 외 11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0094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60	36	24
강○○ 외 26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01900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60	36	24
이○○ 외 9명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241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60	36	24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진행내역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 만원)		
						계	착수금	성공 보수
강○○ 외 42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787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250	150	100
강○○ 외 38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6094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50	90	60
김○○ 외 12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6100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50	90	60
김○○ 외 133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43596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250	150	100
전○○ 외 5명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9877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150	90	60
고○○ 외 105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790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250	150	100
강○○ 외 125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5247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250	150	100
강○○ 외 54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5254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250	150	100
정○○	서울중앙지법 2012가소5344215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250	150	100
이○○	부천지원 2012가합4724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감독의무 위반으로 5천만원 초과 예금의 일부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정부법 무공단	250	150	100
강○○ 외 189명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70222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정에 국가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	1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진행내역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 만원)		
						계	착수금	성공 보수
○○회계 법인 외 2명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409	감사업무제한등 처분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받자 소 제기	1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회계 법인 외 3명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416	감사업무제한등 처분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받자 소 제기	1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878	과징금및가산금 부과처분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제제받자 소 제기	1심 : 승 2심 : 패 3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중앙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109	과징금부과처분 등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제제받자 소 제기	1심 : 패 2심 : 승 3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식 회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588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제제받자 소 제기	1심 : 승 2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261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제제받자 소 제기	1심 : 승 2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635	보험설계사등록 취소처분취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가입자에 대해 특 별이익을 제공하여 보험설계사등록이 취소 되자 소 제기	1심 : 승 2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박○○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237	징계처분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받자 소 제기	1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582	직무정지처분취 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받자 소 제기	1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식회사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981	과징금부과처분 등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제제받자 소 제기	1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진행내역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 만원)		
						계	착수금	성공 보수
○○신용 정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5057	신용정보업허가 취소처분취소등	자기자본이 법상 요건에 미달하여 허가 취 소를 받자 소 제기	1심 : 승 2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생명 보험 주식회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305	과징금부과처분 등취소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등 제 재를 받자 소제기	1심 : 진행중	테평양	1000	500	500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8469	과징금부과처분 등취소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등 제 재를 받자 소제기	1심 : 진행중	테평양	1000	500	500
남○○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423	정보공개거부처 분취소	은행입출금 내역 등 보험사기와 관련한 입 증자료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위원회 보유·관리 정보가 아님을 이유로 거부 처 분을 받자 소제기	1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여○○	서울중앙지법 2012715010525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보이스피싱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을 주장	1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노동조합 외 1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091	법률안 공고 처분 취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여 실시하자 행정철 자법 위반 등을 주장	1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회계 법인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4996	회계감리결과제 재처분등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제받자 소 제기	1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식회사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0557	조사·감리결과조 치등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제제받자 소 제기	1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원고	사건번호 (1심)	사건명	사건내용	진행내역	선임 대리인	선임비용(단위 : 만원)		
						계	착수금	성공 보수
○○증권 주식회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638	파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 받자 소 제기	1심 : 진행중	양현	1000	500	500
장○○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041	파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 받자 소 제기	1심 : 진행중	양현	1000	500	500
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129	제제처분취소	투자신탁 자산운용업무 중의 위법·부당행위 로 퇴직자상당조치를 받자 소 제기	1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회계 법인 외 2명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906	감사업무제한등 처분취소	회계 부실감사로 제재받자 소 제기	1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회계 법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651	파징금부과처분 취소등	회계 부실감사로 제재받자 소 제기	1심 : 진행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28. 최근 3년간 각 월별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현황

☐ 별도제출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29. 최근 3년간 각 월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회, 참석/불참 현황  
및 사유, 관련 규정

### ☐ 참석/불참 현황

#### 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연 도	회의 개최	참 석	대 참
'10년	22회	10회	(10회)
'11년	17회	4회	(4회)
'12.9.17	16회	1회	(1회)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심의회 : 공적자금상환기금 심의위원회  
는 서면회의로 운영하고 있어 참석/불참 현황을 작성하고 있지  
않음

### ☐ 불참 사유 및 관련 규정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금융위  
원장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나 공적자금관리위원  
회가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자위 설립 이후부  
터 관례적으로 금융위원장은 최대한 참석을 자제하고 있습니  
다.
- 다만,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민간위원장과 수시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29-1. 금융위, 증선위(최근 3년간 각 월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회의) 현황 및 참석/불참 현황 및 사유, 관련 규정

###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 금융위원회 위원 구성

직 위	성 명
위 원 장	김 석 동
부 위 원 장	추 경 호
상 임 위 원	홍 영 만
상 임 위 원	이 상 제
당 연 직 위 원(기획재정부 차관)	신 제 윤
당 연 직 위 원(금융감독원 원장)	권 혁 세
당 연 직 위 원(예금보험공사 사장)	김 주 현
당 연 직 위 원(한국은행 부총재)	박 원 식
비 상 임 위 원	심 인 숙

####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구성

직 위	성 명
위 원 장	추 경 호
상 임 위 원	유 재 훈
비 상 임 위 원	허 창 수
비 상 임 위 원	손 성 규
비 상 임 위 원	류 시 관

□ 최근 3년간 금융위, 증선위 참석/불참 현황 및 사유

- (붙임1)금융위 회의 참석자 현황(2010-2012.8)
- (붙임2)증선위 회의 참석자 현황(2010-2012.8)

□ 관련규정 :

-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제8조(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제5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10년 금융위원회 회의 참석자 현황

회 차	일자	참석 위원							예산 부충재	예보 사장	체회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임승태→ 최종구)	상임위원 (이종구)	기재부 차 관	금감원장				
1차	10.1.13(수)	○	○	○	×	△	○	×	○	○	
2차	10.1.27일(수)	○	○	○	○	×	△	○	○	○	
3차	10.2.10(수)	○	○	○	○	×	×	×	○	○	
4차	10.3.3(수)	○	○	○	○	△	○	○	○	○	
5차	10.3.17(수)	○	○	○	×	△	○	○	○	○	
6차	10.4.7(수)	○	○	×	○	△	○	○	○	○	
7차	10.4.21(수)	○	○	공석	○	×	○	○	○	○	
8차	10.5.12(수)	○	×	최종구	○	×	○	○	○	○	
9차	10.5.26(수)	○	○	○	×	△	○	×	○	○	
10차	10.6.9(수)	○	○	○	×	△	△	×	○	○	
11차	10.6.23(수)	○	×	○	○	×	○	○	○	○	
12차	10.7.7(수)	○	○	○	○	×	○	○	○	○	
13차	10.7.21(수)	×	○	○	○	○	△	○	○	○	
임시1차	10.8.9(월)	○	○	○	○	○	○	○	○	○	
14차	10.8.18(수)	○	×	○	○	△	○	○	○	○	
15차	10.9.1(수)	×	○	○	×	×	○	○	○	○	
16차	10.9.17(금)	○	○	○	○	△	○	×	○	○	
17차	10.10.6(수)	○	○	○	○	△	△	○	○	○	
18차	10.10.19(화)	○	○	○	○	△	△	×	○	○	
19차	10.11.5(금)	○	○	○	○	△	○	○	○	○	
20차	10.11.18(수)	○	○	○	○	△	○	○	△	○	
21차	10.12.1(수)	○	○	○	○	△	○	○	○	○	
22차	10.12.15(수)	○	○	○	○	×	△	○	○	○	
23차	10.12.29(수)	○	○	○	○	△	○	○	○	○	

※△표시는 대리출석을 의미함.

※ 불참위원 사유 : 출장 및 국회참석, 외부행사 및 외부회의 등

# 2011 금융위원회 회의 참석자 현황

회 차	일자	참 석 석 위 원							예보 사장	한 은 부총재	채회를 → 심인숙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이종구→ 이상제)	상임위원 (최종구→ 이석준)	기재부 차 관	금감원장				
1차	11.1.12(수)	○	○	○	○	○	△	○	×	○	
임시1차	11.1.14일(금)	○	○	○	○	×	○	○	○	○	
2차	11.1.26일(수)	×	○	○	○	△	△	○	○	○	
3차	11.2.16(수)	○	○	○	○	×	○	○	○	○	
임시2차	11.2.17(목)	○	○	○	○	×	○	○	○	○	
임시3차	11.2.19(토)	○	○	○	○	○	○	○	○	○	
임시4차	11.2.22(화)	○	○	○	○	×	○	○	○	○	
4차	11.3.2(수)	○	○	○	○	△	○	○	○	○	
5차	11.3.16(수)	○	○	○	○	○	○	○	○	○	
6차	11.4.6(수)	○	×	이상제 ○	○	○	○	○	×	심인숙 ○	
임시5차	11.4.22(금)	○	○	○	이석준 ○	×	×	○	○	○	
7차	11.4.27(수)	○	×	○	○	×	○	○	○	○	
임시6차	11.4.29(금)	○	×	○	○	×	○	○	○	○	
8차	11.5.4(수)	○	×	○	○	×	○	○	×	○	
9차	11.5.18(수)	○	○	○	○	×	○	○	○	○	
10차	11.6.1(수)	×	○	○	○	△	△	○	○	○	
11차	11.6.15(수)	×	○	○	○	×	△	○	×	○	
12차	11.7.6(수)	○	○	×	○	△	○	○	○	○	
13차	11.7.20(수)	○	×	○	○	×	○	○	○	○	
임시7차	11.8.5(금)	○	○	○	○	×	○	○	×	○	
임시8차	11.8.9(화)	○	×	○	○	×	○	○	×	○	
14차	11.8.26(금)	×	○	○	○	×	△	○	○	○	
임시9차	11.9.5(월)	○	×	○	○	×	○	○	○	○	
15차	11.9.7(수)	○	○	○	○	×	△	×	○	○	
임시10차	11.9.18(일)	○	○	○	○	○	○	○	○	○	

회 차	일자	합 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이종구→이상제)	상임위원 (최종구→이석준)	기재부 차 관	금감원장	에보 사장
16차	11.10.5(수)	○	○	○	○	×	○	○
17차	11.10.19(수)	○	○	○	○	×	○	×
임시11차	11.10.25(화)	○	○	○	○	○	○	○
18차	11.11.4(금)	○	○	○	○	×	○	○
19차	11.11.16(수)	○	○	○	○	×	○	○
임시12차	11.11.18(금)	○	○	○	○	○	○	○
임시13차	11.11.23(수)	×	○	○	○	×	○	×
20차	11.11.30(수)	×	○	×	○	×	○	○
21차	11.12.14(수)	○	○	○	○	×	○	○
임시14차	11.12.22.(목)	○	○	○	○	×	○	○
22차	11.12.28.(수)	○	×	○	○	×	○	○

※ △표시는 대리출석을 의미함.

※ 불참위원 사유 : 출장 및 국회참석, 외부행사 및 외부회의 등

# 2012년 금융위원회 회의 참석자 현황(8월 말까지)

회 차	일자	참석 위 원							은 부총재	심인숙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이석준→ 홍영만)	상임위원 (이상제)	기재부 차 관	금감원장	예보 사장		
1차	12.1.11(수)	×	○	○	×	×	○	○	○	○
임시1차	12.1.13(금)	○	○	○	○	×	○	○	×	○
2차	12.1.27(금)	○	○	공석	○	○	○	○	○	○
3차	12.2.8(수)	○	×	공석	○	△	○	×	○	○
4차	12.2.22(수)	○	○	공석	○	△	○	○	○	○
5차	12.3.7(수)	○	○	공석	×	×	○	×	○	○
6차	12.3.21(수)	○	○	홍영만 ○	○	×	○	○	○	○
7차	12.4.4(수)	○	○	○	○	×	○	○	○	○
8차	12.4.18(수)	○	○	○	○	×	○	○	○	○
9차	12.5.2(수)	×	○	○	○	×	△	○	○	○
임시2차	12.5.6(일)	○	○	○	○	○	○	○	○	○
10차	12.5.16(수)	○	○	○	×	×	△	○	○	○
11차	12.6.8(금)	×	○	○	○	×	△	×	○	○
12차	12.6.20(수)	○	○	○	○	×	○	○	○	○
13차	12.7.4(수)	○	○	○	○	×	○	○	○	○
14차	12.7.18(수)	○	○	○	○	×	△	○	○	○
15차	12.8.22(수)	×	○	○	○	×	△	○	○	○

※ △표시는 대리출석을 의미함.

※ 불참위원 사유 : 출장 및 국회참석, 외부행사 및 외부회의 등

## 2010년 증원선물위원회 회의실적

회차	일자	참 석 위 원				
		위원장	상임위원 (최규연)	최 혁→ 허창수	김문철→ 손성규	조인호
1차	2010.1.6(수)	○	○	○	○	○
2차	2010.1.20(수)	○	×	○	○	○
3차	2010.2.3(수)	○	○	○	○	○
4차	2010.2.24(수)	○	○	○	○	○
5차	2010.3.10(수)	○	○	○	○	○
6차	2010.3.24(수)	○	○	○	○	○
7차	2010.4.13(화)	×	○	허창수 ○	손성규 ○	○
8차	2010.4.28(수)	○	○	○	○	○
9차	2010.5.20(목)	○	○	○	○	○
임시1차	2010.5.26(수)	○	○	○	×	○
10차	2010.6.1(화)	○	○	○	○	○
	2010.6.3(목)	○	○	○	○	○
11차	2010.6.16(수)	×	○	○	○	○
12차	2010.6.30(수)	○	○	○	×	○
13차	2010.7.14(수)	○	○	○	○	○
14차	2010.8.25(수)	×	○	○	○	○
15차	2010.9.8(수)	○	×	○	○	○
	2010.9.17(금)	○	○	○	○	○
16차	2010.10.13(수)	○	○	○	○	○
17차	2010.10.27(수)	○	○	○	○	○
18차	2010.11.10(수)	○	○	○	○	○
19차	2010.11.24(수)	○	○	○	○	○
20차	2010.12.8(수)	×	○	○	○	○
21차	2010.12.22(수)	○	○	×	○	○

※ 불참위원 사유 : 출장 및 국회참석, 외부행사 및 외부회의 등

## 2011년 증원선물위원회 회의실적

회차	일자	참 석 위 원				
		위원장	상임위원 (최규연→ 홍영만)	조인호→ 류시관	허창수	손성규
1차	2011년 1월 5일(수)	○	○	○	○	○
2차	2011년 1월19일(수)	○	○	○	○	○
3차	2011년 2월9일(수)	○	○	○	○	○
4차	2011년 2월23일(수)	○	○	×	○	○
임시1차	2011년 2월25일(금)	○	○	×	○	○
5차	2011년 3월 11일(금)	○	○	○	○	○
6차	2011년3월23일(수)	○	공석	○	○	○
7차	2011년4월13일(수)	○	홍영만 ○	류시관 ○	○	○
8차	2011년4월27일(수)	○	○	○	○	○
9차	2011년5월11일(수)	×	○	○	○	○
10차	2011년5월25일(수)	○	○	○	○	○
11차	2011년6월8일(수)	○	○	○	○	○
12차	2011년6월22일(수)	×	○	○	○	○
13차	2011년7월13일(수)	○	○	○	○	○
14차	2011년8월19일(금)	○	○	○	○	○
15차	2011년8월31일(수)	○	○	○	○	○
16차	2011년9월16일(금)	○	○	○	○	○
17차	2011년9월28일(수)	○	×	○	○	○
18차	2011년10월12일(수)	○	○	○	○	○
19차	2011년10월26일(수)	○	○	○	○	○
20차	2011년11월9일(수)	×	○	○	○	○
21차	2011년11월23일(수)	○	○	○	○	○
22차	2011년12월7일(수)	○	○	○	○	○
23차	2011년12월21일(수)	○	○	○	○	○

※ 불참위원 사유 : 출장 및 국회참석, 외부행사 및 외부회의 등

## 2012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실적

회차	일자	참 석 위 원				
		위원장	상임위원 (홍영만→ 유재훈)	허창수	손성규	류시관
1차	2012년1월6일(수)	○	○	○	○	○
2차	2012년1월18일(수)	○	○	○	○	○
3차	2012년2월1일(수)	○	○	○	○	○
4차	2012년2월15일(수)	○	○	○	○	○
5차	2012년2월29일(수)	○	○	○	○	○
임시1차	2012년3월9일(금)	○	○	○	○	○
6차	2012년3월14일(수)	○	유재훈 ○	○	○	○
7차	2012년3월28일(수)	○	○	○	○	○
	2012년3월30일(금)	○	○	○	○	○
8차	2012년4월13일(금)	○	○	○	○	○
	2012년4월16일(월)	○	○	○	○	○
9차	2012년4월25일(수)	○	○	○	○	○
10차	2012년 5월9일(수)	○	○	○	○	×
11차	2012년 5월23일(수)	○	○	○	○	○
12차	2012년 6월13일(수)	○	○	○	○	○
13차	2012년 6월27일(수)	○	○	○	○	○
14차	2012년 7월11일(수)	○	○	○	○	○
15차	2012년 8월17일(금)	×	○	○	○	○
16차	2012년 8월29일(수)	×	○	○	○	○

※ 불참위원 사유 : 출장 및 국회참석, 외부행사 및 외부회의 등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29-2. 최근 3년간 각 월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각종 회의 현황 및 참석/불참 현황 및 사유, 관련 규정

####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참석 현황

#### □ 국무회의 현황

-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매주 1회\* 개최됨
  - \* 2010년 55회(임시 국무회의 1회 포함), 2011년 56회(임시 1회),  
2012년~9월19일 현재 39회(임시 1회)
- 금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하여 출석하였음

#### <국무회의 규정>

제2조(회의 운영)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 ○ 최근 3년간 국무회의 불참 현황 및 사유

연도	회차	개최일시	불참사유
2010	2회	'10.1.4	증권거래소 개소식 참여
	25회	'10.6.15	해외출장 : FSB(금융안정위원회) 총회
	37회	'10.8.31	모친상
	41회	'10.9.28	해외출장 : FSB(금융안정위원회) 총회
2011	33회	'11.8.2	하계 휴가
2012	-	-	-

## □ 차관회의 현황

○ 차관회의는 차관회의 규정에 따라 매주 1회\* 개최됨

\* 2010년 52회, 2011년 52회, 2012년 ~9월19일 현재 37회

○ 금융위 부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무처장이 대리하여 출석하였음

### <차관회의 규정>

제5조(회의 소집)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제8조(대리 출석) ① 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 최근 3년간 차관회의 불참 현황 및 사유

연도	회차	개최일시	불참사유
2010	3회	'10.1.21	언론사 시상식 참석
	7회	'10.2.18	국회 참석
	16회	'10.4.22	국회 참석
	17회	'10.4.29	국회 참석
	18회	'10.5.6	지방 행사 (미소금융 개소식)
	28회	'10.7.15	민생 현장 방문
	31회	'10.8.5	햇살론 현장 점검
	44회	'10.11.4	청와대 회의
	45회	'10.11.11	싱가폴 정상 영접 - 인천공항
	48회	'10.12.2	국회 참석
	49회	'10.12.9	국회 참석
2011	9회	'11.3.3	국회 참석
	12회	'11.3.24	가계부채 관계기관 대책회의 주제
	26회	'11.6.30	국회 참석
	31회	'11.8.4	하계휴가
	40회	'11.10.7	국정감사 관련 현안설명 및 의원방문
	43회	'11.10.27	국회 참석
	46회	'11.11.18	임시 금융위 참석
	51회	'11.12.22	국회의원 현안업무보고
	52회	'11.12.29	VIP 업무보고 관련 사전 기자브리핑
2012	30회	'12.7.26	국회 참석
	32회	'12.8.9	하계휴가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30. 최근 3년간 LTV · DTI규제 변동현황 일체 (행정지도 시행방안)

- 2009년 이후 LTV, DTI 규제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DTI 규제 변동 현황 ]

- 수도권(투기지역외)에 대하여 DTI비율 규제(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이내) (은행 '09.9.7.) (비은행 '09.10.12)
- 1가구 1주택, 무주택자에 대해 DTI 자율적용(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투기지역 제외, 11.3월까지 한시적용) ('10.8.29)
- DTI규제 자율적용 폐지('11.3.22)
- 젊은층 장래소득, 순자산 소득환산 인정 등 DTI보완 방안 발표(은행 '12.8.17)

#### [ LTV 규제 변동 현황 ]

- 수도권(투기지역 제외) LTV 비율 규제 강화  
(은행 60%→50%, '09.7.6) (비은행 보험 60%→50% 기타 70%→60%, '09.10.12)

[별첨] LTV, DTI 규제 변동시 배포된 보도참고자료 5건

“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h2 style="text-align: center;">배포시부터 보도 가능</h2>
---	---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가계신용전담반		
책 임 자	김영대 국장(3145-8020)	담 당 자	최인호 팀장 (3145-8080)
배 포 일	2009. 7. 6.(월)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8~91) 총 3매

### 제 목 :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악화 가능성과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09.7.6. 은행으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증가지역에 대해 은행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7.7.부터 시행토록 요청하였다.
- ☐ 금융감독원이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의 예시로서 제시한 내용에는 이미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투기지역(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다만, 서민·실수요자 배려 및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금번 LTV 강화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증가 등 이상징후 발생시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붙 임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예시)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예시)

가. 적용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

- 다만, 現 투기지역(강남3구) 및 자연보전권역(가평군 등), 접경지역(연천군 미산면 등), 도서지역(안산 대부동 등)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

나. LTV 강화 내용 : 60%이내 → 50%이내

- 만기 10년이하 또는 만기 10년 초과·담보가액 6억원초과 아파트에 대해 현행 60%이내인 담보인정비율을 50%이내로 차등적용
- 만기 3년이하 아파트 이외 주택에 대해 현행 60%이내인 담보인정비율을 50%이내로 차등적용

만기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포함)		주 택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3년이하		60%이내	50%이내	60%이내	50%이내
3년초과~10년이하		60%이내	50%이내	60%이내	좌동
10년 초과	담보가액 6억원초과	60%이내	50%이내	60%이내	좌동
	담보가액 6억원이내	60%이내	좌동	60%이내	좌동
10년 이상 분할상환*		70%이내	좌동	70%이내	좌동

\* 1년 이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거나 자체 유동화계획이 있는 고정금리부 대출(거치기간 1년 이내, 총부채상환비율 40%이하)을 말함

다. 적용배제

- 5천만원 이하(전금융기관 합산)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제외

라. 시행시기 : '09.7.7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하여 적용

- 시행일 전에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여 '09.7.6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을 적용

《 참고 》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강화 적용대상 지역

구분	적용 지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지역</li> <li>&lt;제외지역&gt;</li> <li>-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li> </ul>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지역</li> <li>&lt;제외지역&gt;</li> <li>-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군양평군, 여주군</li> <li>-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li> <li>-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li> </ul>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지역</li> <li>&lt;제외지역&gt;</li> <li>-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li> </ul>

	<h1 style="text-align: center;">브리핑 자료</h1> <h2 style="text-align: center;">배포시부터 보도 가능</h2>
---	--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가계신용전담반		
책 임 자	김영대 국장(3145-8020)	당 당 자	최인호 반장 (3145-8080)
배 포 일	2009. 9. 4.(금)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8-91) 총 3매

### 제 목 :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 ☐ '09.7.7일 시행된 수도권 LTV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능력 악화 및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자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증가지역에 대해 리스크관리를 추가로 강화하여 9.7.부터 시행토록 요청하였음
- ☐ 금융감독원이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의 예시로서 제시한 내용에는 현재 투기지역(강남 3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담고 있음
  - 다만, 서민·실수요자 배려 및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금번 D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임

붙 임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추가 강화방안(예시)·1부. 끝.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추가 강화방안(예시)

가. 적용대상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

\* 다만, 現 투기지역(강남3구) 및 자연보전·접경·도서지역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

나. 리스크관리 강화 내용

☐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DTI 비율을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확대 적용

구 분		DTI 기본 비율		
담보가치	대출금액	현행	확대적용	
		투기지역	서울 (투기지역제외)	인천·경기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5천만원초과	40%	50%	60%
	5천만원이하	-	-	-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 부터 3개월 경과)	1억원초과	40%	50%	60%
	5천만원초과	50%		
	1억원이하	-		
	5천만원이하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억원초과	40%	50%	60%
	5천만원초과	50%		
	1억원이하	-		
	5천만원이하	-		
3억원 이하	1억원초과	40%	50%	60%
	5천만원초과	50%		
	1억원이하	-		
	5천만원이하	-		
	5천만원초과	50%		
	5천만원이하	-		

다. 적용배제 대상

- 5천만원 이하(전금융기관 합산)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라. 시행시기 : '09.9.7일 시행

- (경과적용) 시행일이전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여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을 적용

《 참고 》

주택담보대출 추가 리스크 강화 적용대상 지역

구분	적용 지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지역</li> <li>&lt;제외지역&gt;</li> <li>-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li> </ul>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지역</li> <li>&lt;제외지역&gt;</li> <li>-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군양평군,여주군</li> <li>-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증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li> <li>-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li> </ul>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지역</li> <li>&lt;제외지역&gt;</li> <li>-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li> </ul>

“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h2 style="margin: 0;">배포시부터 보도가능</h2>
---	--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가계신용전담반		
책 임 자	김영대 국장(3145-8020)	담 당 자	최인호 반장(3145-8080)
	김수봉 국장(3145-7460)		오홍주 팀장(3145-7960)
	조옥현 국장(3145-7550)		송인범 팀장(3145-7552)
	김준현 국장(3145-7410)		김태경 팀장(3145-7330)
	남명섭 실장(3145-8160)		김영기 팀장(3145-8162)
배 포 일	2009.10.8.(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5매

### 제 목 :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 ☐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동업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여전사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리스크증가지역에 대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10.12.부터 시행토록 요청하였음
- ☐ 금융감독원이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의 예시로서 제시한 내용에는 이미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투기지역(강남 3구)을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적용을 담고 있음
  - 다만, 서민·실수요자 배려 및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금번 리스크 관리 강화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편법대출 등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임

붙 임 :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예시) 1부. 끝.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예시)

### 가. 권역별 리스크관리 강화 내용

#### ☐ 보험사

- (LTV) 만기 10년이하 또는 만기 10년 초과·담보가액 6억원초과 아파트(만기 3년이하 아파트 이외 주택 포함에 대해 현행 60%이내인 담보 인정비율(LTV)을 50%이내로 강화

만기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포함)		주 택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3년이하		60%이내	50%이내	60%이내	50%이내
3년초과~10년이하		60%이내	50%이내	60%이내	좌동
10년 초과	담보가액 6억원초과	60%이내	50%이내	60%이내	좌동
	담보가액 6억원이내	60%이내	좌동	60%이내	좌동
10년 이상 분할상환*		70%이내	좌동	70%이내	좌동

\* 1년이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거나 자체 유동화계획이 있는 고정금리부 대출(거치기간 1년이내, 총부채상환비율 40%이하)을 말함

- (DTI)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확대 적용

구 분		DTI 기본 비율			DTI 가산 및 감면	
		현행 <sup>1)</sup>	확대적용 <sup>2)</sup>			
담보가액		대출금액	투기지역	서울 (투기지역제외)	인천·경기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5천만원초과	40%	50%	60%	없음
		5천만원이하	-	-	-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 부터 3개월 경과)		1억원초과	40%	5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고정금리 (+5%p)</li><li>분할상환 (+5%p)</li><li>신용등급 (+5%p 또는 -5%p)</li><li>신고소득 (-5%p)</li></ul>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50%			
		5천만원이하	-	-	-	
		1억원초과	40%	50%	60%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5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5천만원이하	-	-	-	
		1억원초과	40%	50%	60%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50%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초과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	-	
		5천만원초과	50%	50%	60%	
		1억원이하	-	-	-	
	국민주택 규모이내	5천만원초과	50%	50%	60%	
		5천만원이하	-	-	-	

1) 감독규정(6억원초과,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 및 금융회사 내규(기타대출)

2) DTI 최고한도비율은 서울 60%이내, 인천·경기 70% 이내로 제한 (현재 투기지역은 60%이내)

□ 상호금융사·저축은행·여전사

- (LTV) 아파트에 대해 현행 70%이내인 담보인정비율(LTV)을 60%이내로 강화하고 여전사에 대해서도 LTV적용

- 아파트 이외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70%이내) LTV를 그대로 적용

금융기관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포함)	
		변경전	변경후
상호 금융	농협	70%	60%
	수협	70%	60%
	신협	70%	60%
	산림	70%	60%
저축은행		70%	60%
여전사*		미적용	60%

\* 아파트이외 주택은 70% 적용

- (DTI)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확대 적용

구 분		DTI 기본 비율			DTI 가산 및 감면	
		현행 <sup>1)</sup>	확대적용 <sup>2)</sup>			
담보가치		대출금액	투기지역	서울 (투기지역제외)	인천·경기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5천만원초과	40%	50%	60%	없음
		5천만원이하	-	-	-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경과)		1억원초과	40%	5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고정금리 (+5%p)</li><li>분할상환 (+5%p)</li><li>신용등급 (+5%p 또는 -5%p)</li><li>신고소득 (-5%p)</li></ul>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50%			
		5천만원이하	-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억원초과	40%	50%	60%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50%			
		5천만원이하	-	-	-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초과	1억원초과	45%	55%	65%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55%			
		5천만원이하	-	-	-	
	국민주택 규모이내	5천만원초과	55%	55%	65%	
		5천만원이하	-	-	-	

1) 감독규정(6억원초과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 및 금융회사 내규(기타대출)

2) DTI 최고한도는 3억초과 아파트 : 서울 60%이내, 인천·경기 70% 이내(현재 투기지역은 60%이내)

3억이하 아파트 : 서울 70%이내, 인천·경기 75% 이내(현재 투기지역은 70%이내)

나. 적용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

- 다만, 現 투기지역(강남3구) 및 자연보전권역(가평군 등), 접경지역(연천군 미산면 등), 도서지역(안산 대부동 등)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

다. 적용배제

- 5천만원 이하(전금융기관 합산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제외

라. 시행시기 : '09.10.12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하여 적용



- 시행일 전에 금융기관과 대출 상담을 완료하여 09.10.11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을 적용

《 참고 》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강화 적용대상 지역

구분	적용 지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지역</li> <li>&lt;제외지역&gt;</li> <li>-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li> </ul>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지역</li> <li>&lt;제외지역&gt;</li> <li>-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군양평군,여주군</li> <li>-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li> <li>-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li> </ul>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지역</li> <li>&lt;제외지역&gt;</li> <li>-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li> </ul>

“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금융위원회	<h1>보도 참고 자료</h1> <h2>배포시부터 보도 가능</h2>	 금융감독원
--	--	--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책임자	김태현 과장(2156-9710)	양현근 국장(3145-8020)
담당자	오유정 사무관(2156-9712)	최인호 팀장(3145-8080)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공보실(3145-5789~92)
배포일	2011. 3. 22.(화)	총 3 매

### 제 목 : 주택거래 활성화 기초 유지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

#### 1. 추진 배경

- ☐ 작년 하반기 주택거래침체에 따른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완화를 위해 DTI 한시적 자율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8.29 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추진
- ☐ 8.29대책 시행 이후 주택거래가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주택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
  - \* 수도권 APT거래량(천건) : (10.9월)9.0 → (10월)12.4 → (11월)17.5 → (12월)20.2 → ('11.1월)16.0 → (2월)19.0 [07~10년 평균 (1월)12.9, (2월)12.8]
  - \* 주택담보대출(전업권, 조원) : (10.1~8월평균)2.6 → (9월)3.3 → (10월)3.5 → (11월)4.4 → (12월)5.3 → ('11.1월)1.8 → (2월)2.8 [08~10년 평균 (1월)1.6, (2월)2.4]
- ☐ 주택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년 8.29 대책을 수정·보완

## II. 주요 내용

- ☐ 당초 예정대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시한을 3월말로 종료하여, 4월부터는 8.29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

\* DTI 적용비율 : 투기지역 40%, 투기지역외 서울 50%, 인천·경기 60%

- ☐ 실수요 주택거래 애로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 마련

- ①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 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억원)는 지속 유지
- ② DTI 가산항목(고정금리, 분할상환 등)에 비거치식을 추가하여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p 한도내에서 DTI 비율을 확대적용

\* 가산항목 반영시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

	<현행>		<개선>
* 비거치식 분할상환	+5%p	→	+10%p
*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10%p	→	+15%p

## III. 기대 효과

- ☐ DTI 규제의 원상회복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등 건전한 대출관행의 정착을 유도
- 이를 통해 차주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 우리경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또한,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 확대는 지속 유지하는 만큼, 서민대출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아울러,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우대조치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여력 확대, 및 현행 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에 대한 개선 효과도 기대


#### IV. 향후 계획

- ☐ 3월중 금융회사 내규 개정 등을 통해 4월 이후 신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

※ 별첨 : 「주택거래 정상화기조 유지를 위한 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h1>                     보도 참고 자료                 </h1>
	<h2>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h2>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책임자	조성민 팀장(3145-8040)	담당자	류지성 선임조사역(3145-8042)
배포일	2012. 8. 31. (금)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5 매

### 제 목 :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 시행

☐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12.7.21.)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추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함에 따라

○ 정부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12.8.17.)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동 방안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12.8.31. 각 은행에 통보하였으며

○ ‘12.9.20.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될 예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증빙소득에 금융소득 합산방안의 경우 일부 지방은행(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 ‘12.9.28.부터 시행

<붙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보완방안

### 1.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 인정

#### ☐ 적용 대상

○ (인적대상)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

○ (대출용도) 주택구입목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 대출 실행(주택매매계약서 첨부)

○ (소득증빙) 근로소득 증빙자료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일용직은 납세사실증명),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급여내역이 포함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자리론 취급기준상 인정되는 근로소득 증빙자료

○ (대출형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 상환기간 경과에 따라 상환액이 증가하는 점증식 분할상환대출도 포함

#### ☐ 장래예상소득

○ (평균소득증가율) 국세통계연보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

\* 국세통계연보의 가장 최근 통계(4-2-3.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Ⅲ)를 활용하여 계산하고, 신규 국세통계연보가 발표되는 경우 익월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

○ (장래예상소득)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추산

\* 산식(예시) : [직전 1년 소득 + (직전 1년 소득 × (1+평균소득증가율))]/2

#### ☐ 소득지표 활용

○ 직전년도 증빙소득(최소)과 장래예상소득 추산치(최대)의 범위 안에서 실제 상환능력을 면밀히 평가하여 DTI적용 소득규모를 자체적으로 판단

※ 다만, 합리적인 근거없이 장래 예상소득을 최대로 인정하지 않도록 유의

## 2. 순자산의 소득 환산

### ☐ 적용 대상

-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중병소득·신고소득이 없는 자

\* 순자산을 소득환산하여 인정된 소득은 다른 중병·신고소득과 합산 불가

### ☐ 자산의 인정범위

- (소유자) 대출자 본인·배우자 소유의 자산
- (자산종류) 지방세법 제104조 1호에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과 임차보증금
- (자산가액) 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감정기관 등의 감정평가액\*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가치 산정방법을 활용

### ☐ 공제 항목

- 본인·배우자의 모든 부채

\* 대출원리금 잔액(연체금 포함),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1항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기본재산가액

## □ 소득환산

- 순자산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환능력을 면밀히 평가하여 DTI적용 소득규모를 자체적으로 판단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상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를 활용하되 직전년도 통계의 신규발표 후에는 익월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

- 단, 보유자산의 환산을 통해 인정되는 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직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치를 적용하되 직전년도 통계의 신규발표 후에는 익월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

- 자산의 소득환산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은 1건으로 제한

※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를 철저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근거없이 소득환산을 최대한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입자의 자산 보유상황 등 상환능력 유지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

##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증빙소득에 금융소득 합산

-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증빙소득 중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소득 중 연금소득에 의한 입금액 합산 불가

※ 은행별로 전산시스템 개발 후 시행

#### 4.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한 가산·감면항목 적용

##### ☐ (적용대상) 주택구입용 대출

\*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 대출 실행(매매계약서 첨부)

##### ☐ (가산·감면비율) 최대 15%p 범위 내에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가산·감면비율 적용

- 고정금리 : +5%p
- 거치식 분할상환 : +5%p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0%p
- 신용등급 : +5%p 또는 -5%p
- 신고소득 : -5%p

#### 5. 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DTI규제 적용 면제

##### ☐ 적격 역모기지대출에 대하여 DTI규제 적용 면제

- 다만, DTI규제 적용이 면제되는 적격 역모기지대출의 범위\*는 추후 확정하여 통보할 예정

\* 최소지급기간, 지급방식, 수시인출 한도, 가입자 최소연령 등

#### 6. 기타 사항

#####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DTI비율 산출방식 변경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DTI비율 산정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초년도 상환액에서 초상환기간 평균 상환액으로 변경

##### ☐ 신고소득 산정기준 변경

-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추정시 체크카드 사용액의 합산 가능
- 신용카드 사용액, 적립식 계좌 입금액 등을 통한 신고소득의 인정한도를 직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액으로 조정
- 신고소득 중 최저생계비 기준 폐지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31. 최근 3년간부터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퇴직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 사외이사·감사·준법감사인으로 재취업한 현황(이름, 과거 3년간 금융위에서의 부서, 직급, 나이, 출신대학)

☐ 해당사항 없음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32. 최근 3년간 현재 외부 인사에 대한 금융위  
출입증 발급대장 사본

☐ 붙임 엑셀 파일 송부

<붙임> 금융위원회 출입증 발급 현황

출입증 번호	소속기관	구분	성명	비고
090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김형태	수시출입
114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경호	주택금융공사 발급분
115	주택금융공사	부사장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발급분
116	주택금융공사	경영기획부장	이해돈	주택금융공사 발급분
117	기획재정부	차관보	강호인	금융위 당연직위원
118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승우	금융위 당연직위원
119	한국은행	부총재	박원식	금융위 당연직위원
140	예금보험공사	이사	진상근	예금보험공사 발급분
174	정책금융공사	사장	유재한	정책금융공사발급분
175	정책금융공사	이사	최봉식	정책금융공사발급분
199	정책금융공사	이사	이동춘	정책금융공사 발급분
201	정책금융공사	기획관리부장	나성대	정책금융공사 발급분
202	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	자산관리공사 발급분
203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인호	자산관리공사 발급분
204	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	권경성	자산관리공사 발급분
205	자산관리공사	종합기획부장	이종진	자산관리공사 발급분
207	산업은행	은행장	강만수	산업은행 발급분
208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김영기	산업은행 발급분
209	산업은행	감사	이승문	산업은행 발급분
210	산업은행	이사	김한철	산업은행 발급분
211	은행연합회	감사	전병렬	은행연합회 발급분
218	코스콤	전무이사	차왕조	코스콤 발급분
219	예금보험공사	이사	신동진	예금보험공사 발급분
220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원태	예금보험공사 발급분
221	예금보험공사	감사	손교명	예금보험공사 발급분
223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발급분
224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김의수	기술보증기금 발급분
225	기술보증기금	이사	김용환	기술보증기금 발급분
226	금융투자협회	회장	황건호	금융투자협회 발급분
227	금융투자협회	상근부회장	장건상	금융투자협회 발급분
228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안광명	금융투자협회 발급분
229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	강명석	자산관리공사 발급분
230	산업은행	부행장	이삼규	산업은행 발급분
231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김석중	여신금융협회 발급분
232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주용식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급분
233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	이용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급분
23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무이사	장 용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급분
236	산업은행	비서실장	이해용	산업은행발급분
238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회 발급분
242	이화여자대학교	자조심위원	김유니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24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
277	금융투자협회	부회장	남진웅	금융투자협회 발급분

##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 33. 가계부채 TF(가계부채 미시분석 작업반) 구성 현황(명단, 출신, 직급 등), 개최 일시 및 각 소속 공무원의 참석현황

#### □ 가계부채 미시분석 작업반 구성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국장 고승범  
금융정책과장 김태현
- 금융감독원 : 은행감독국장 양현근,  
가계신용분석팀장 조성민
- 금융연구원 : 서정호, 노형식, 김영도 박사

#### □ 가계부채 미시분석 작업반 회의개최 현황 (총5회)

일자	논의내용	참석범위
3.21	작업반 구성, 작업계획 등 논의	미시분석 작업반 전원
3.30	분석 주제 및 작업일정 논의	상동
5.14	미시분석 작업 추진현황 점검	상동
6.26	미시분석 작업 추진현황 점검	상동
8.31	미시분석 작업 추진현황 점검	상동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34. 단기지표금리 개선 위한 관계기관 합동TF 구성  
현황, 개최일지 및 회의록 내용 일체

□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요청하신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1 :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계기관 합동TF 구성현황

첨부2 :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회의자료

## 첨부1

###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계기관 합동T/F 구성현황

소 속	직 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팀장)
	자본시장과장
	은행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한국은행	금융시장부장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금융투자감독국장
	복합금융감독국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인
서울여대	경제학부 교수 1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1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1인
은행연합회	담당 상무 1인
금융투자협회	담당 상무 1인

## 첨부2

###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관계기관 합동T/F 향후 추진과제

- ◇ 7.19(목),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추진과제 및 일정」 등을 논의하였음
- 그간 진행되어 온 단기지표금리 등 단기금융시장 개선 논의를 보다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개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 T/F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팀장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실무 책임자 및 학계 전문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여
-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는 은행·증권사의 의견전달 등을 위해 옵저버로 참여

#### 1. 회의에서 논의된 CD금리 관련 현황

- CD금리(3개월물)는 대출시장 및 자금시장 등에서 주요 단기지표금리로서 활용중
- (대출시장) '12.3말 현재 국내은행 총 원화대출\* (1,080조원) 중 CD금리 연동 대출은 324조원으로 약 30% 비중을 차지
- \* 비중: CD연동 30.0%, 고정금리 27.4%, 코픽스 14.3%, 금융채 13.7%, 코리보 5.6%

<CD연동 대출 비중 추이\*(%, %p, 조원)>

	'09말(A)	'10말	'11말	12.3말(B)	B-A	'12.3말 잔액
원화대출금	49.6	41.2	32.7	30.0	△19.6	323.8
가계대출	72.1	56.4	39.6	37.0	△35.1	166.1
기업대출	32.8	29.4	26.3	24.0	△8.8	143.7

\* 출처: 금융감독원

- (자금시장) '11년말 현재 이자율 관련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거래 잔액은 4,624조원 수준

- 이자율스왑\*의 경우 CD금리가 변동금리 지표로서 대부분 활용

\* 이자율스왑 거래 중 CD금리와 연동된 장기계약 거래도 존재

- 하지만, 예대율 규제 도입계획 발표('09.12월) 및 은행의 예금유입 증가 등으로 CD잔액 및 발행액이 '10년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

- CD금리 산출시 대상이 되는 시장성CD 잔액은 2.4조원 ('12.6말) 수준

< CD 잔액 추이\*(조원)>

	'08말	'09말	'10말	'11말	'12.6말
총 CD	110.2	107.6	43.1	32.5	30.8**
시장성CD***	20.0	13.6	6.6	3.2	2.4

\* 출처: 한국은행      \*\* '12.5말

\*\*\* 시장성CD: 증권사 인수를 통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CD → CD금리 산정 대상

- 시장성CD 발행액 역시 지속 감소세이며, 특히 3개월물 시장성 CD는 '12년중 월평균 1,250억원 발행에 불과

< 시장성CD 월평균 발행액\*(억원)>

	'08년	'09년	'10년	'11년	'12.1~6월
시장성 CD	58,937	36,825	20,656	13,946	9,083
3개월물**	7,972	5,450	5,538	3,645	1,250

\* 출처: 한국은행      \*\* 88~92일물

- CD 발행(거래) 위축 등에 따라 CD금리(3개월물)는 특히 금년중 변동성이 거의 없는 상황 ('12년중 총 13번 변동)

\* 금년중 2bp내외에서 변동하다가, 7.12일 기준금리 인하 후 큰 폭 하락

- 이에 따라 '12년중 CD금리는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표금리로서 대표성이 저하

\* 기준금리(%) : (10말)2.50 (11말)3.25 (12.6말)3.25 (7.18일)3.00 [전년말비 Δ25bp]

\* CD금리(%) : (10말)2.80 (11말)3.55 (12.6말)3.54 (7.18일)3.23 [전년말비 Δ32bp]

\* 은행채(3m,%) : (10말)2.83 (11말)3.65 (126말)3.36 (7.18일)2.92 [전년말비 △73bp]  
[민간평가사 3사가 평균한 은행채 잔존만기 3개월 평가금리]

※ 다만, CD금리와 기준금리와의 차이는 예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  
(‘10년평균)52bp, (‘11년평균)35bp, (‘12년평균)29bp, (‘12.7.18)23bp

## 2. 논의결과: 기본 추진방향 및 향후 과제

□ 그동안 관계기관간 진행되어 온 단기지표금리 등 단기 금융시장 개선노력\*에 이어서,

\* ①'10.7월, 콜시장 건전화 및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 개선방안, ②'11.6월, 단기자금시장 구조적 개선방안, ③'12.6월, RP 및 전자단기사채 활성화 방안 등

○ 향후에도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CD금리 등 단기지표 금리 제도개선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

□ 금일 T/F에서 CD금리 문제점 등을 집중 논의하였고, CD 금리를 포함한 단기지표금리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점검모색

□ 단기지표금리 개선은 대출시장 파생상품시장 등 국내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함

□ 앞으로 T/F에서는 CD금리를 부분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기존 단기금리 보완, CD 발행·유통 활성화 및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유효성 제고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3. 향후 일정

- 향후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 T/F에서 논의를 거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은행,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들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  
하게 될 것임

---

#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논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12. 8. 22.**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계기관 합동T/F**



## 목 차



### I. 그동안 추진경과

<참고1> 그동안 발표된 단기지표금리 등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 II. 단기코픽스 신규도입

### III. 시장성CD 발행 활성화 추진

### IV. CD금리 산정방식 개선

### V. 향후 TF 논의과제 및 추진계획

<참고2> 자금시장 대안 지표금리별 장단점 비교

## I. 그동안 추진경과

-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제도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T/F를 구성(7.19 보도참고자료 배포)

\*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학계전문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참여

- 합동T/F는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현재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

- ⇒ **[기본방향]** 1. 대출시장에서 CD금리를 대신할 수 있는 지표금리 마련  
2. CD금리 유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3. 금리스왑시장 등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모색

\* 다양한 이해관계자, CD연동 상품잔액('12.3말 은행대출 327조원, 금리스왑 4,211조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유효한 CD금리가 고시될 필요

- 그동안 T/F는 총 5차례 회의를 통해 단기코픽스 도입 CD금리 유효성 제고,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등을 다양하게 논의

- 또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공개토론회, 전문가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장참가자 의견\*을 적극 수렴

\* T/F회의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가 참여하여 은행·증권사 의견을 전달

\*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8.20, 금융연구원 주최)

\* 은행 실무담당자(8.7), 은행 부행장(8.13) 등 간담회 개최

- 현재 T/F에서 검토 중인 다양한 방안 중 5차 회의(8.21)를 통해 확정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우선 발표하기로 결정

- 단기대출 지표금리로서 ① 단기코픽스 신규도입
- CD금리 유효성 제고를 위한 ② 시장성CD 발행 활성화 및 ③ CD금리 산정방식 개선

## 참고 1

## 그동안 발표된 단기지표금리 등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 ◇ 그동안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단기지표금리를 포함한 단기금융시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
- 시장참가자들이 CD금리를 대신하여 코픽스, 통안채 금리, RP금리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구분	주요 내용
1. 코픽스 신규도입 (‘10.1월)	<input type="checkbox"/> 대출시장에서 CD금리를 대신할 수 있는 코픽스를 신규도입(은행연합회 매달 공시중) ○ 도입이후 코픽스 연동 대출비중이 +14.3% 증가 * ‘09말→’12.3말 비중: CD(49.6→30.0%), 코픽스(0.0→14.3%)
2. 단기지표금리 육성방안 마련 (‘10.7월)	<input type="checkbox"/> 단기국채 발행을 통해 단기국채금리*를 단기지표금리로 육성 * 원활한 단기국채 발행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통안채 금리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매주 일정규모 이상의 통안채 정례발행 지속
3. 단기자금시장 구조적 개선방안 (‘11.6월)	<input type="checkbox"/> 콜시장 위주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시장을기관간 RP시장 등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 기간관 RP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효성 있는 RP금리가 도출되도록 유도
4. RP시장 활성화 등 RP금리 육성방안 (‘12.6월)	<input type="checkbox"/> RP거래 인프라 보완, 증권금융의 RP거래 시장 조성자 기능 강화 등 RP거래 활성화 세부방안 마련 ○ 예탁결제원 RP거래 시스템(SAFE+)을 통해 주요 일물별 RP금리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12.7월)

## II. 단기코픽스 신규도입

### 1. 검토배경

□ '10.1월, 대출시장에서 CD금리를 대신하기 위해 코픽스\*를 도입

\* 9개 국내은행들의 '자금조달 가중평균비용지수'이며, 매월 1회(매월 15일) 은행연합회에서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발표중

○ 코픽스는 대출지표금리로서 은행 자금조달비용 반영도가 높은 장점 등이 있어,

- 만기가 상대적으로 장기인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활용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존 CD연동 대출 비중이 축소

\* 주택담보대출 코픽스 비중(%): ('10.1월)코픽스도입, ('10말)21.5, ('11말)40.1, ('123말) 41.3

(% , %p)		'09.12말(A)	'12.3말(B)	B-A	'12.3말 잔액
원화대출	CD금리 연동	49.6	30.3	△19.3	327.3조원
	코픽스 연동	-	14.3	+14.3	153.9조원
가계대출	CD금리 연동	72.1	37.0	△35.1	166.2조원
	코픽스 연동	-	34.0	+34.0	152.8조원
기업대출	CD금리 연동	32.8	24.5	△8.3	146.8조원
	코픽스 연동	-	0.1	+0.1	1.0조원

\* 출처: 금융감독원

\* '12.3말 총잔액: 원화대출 1,079.6조원, 가계대출 448.8조원, 기업대출 599.6조원

□ 다만, 코픽스는 총 자금조달의 가중평균비용으로 평균만기가 9~10개월 수준이고 월 1회만 발표됨에 따라,

○ 은행들은 만기가 1~2년내로 짧은 변동금리부 단기대출\*의 경우 여전히 코픽스 보다는 CD금리를 선호하는 경향

\* 예: 운전자금용 기업대출, 가계 신용대출 등

◇ CD금리를 대신할 단기대출 지표금리 개발 필요성이 제기

⇒ 현행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단기코픽스 신규도입 추진

## 2. 단기코픽스 도입방안

◇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3개월물 조달평균비용을 반영하고 매주 발표되는 단기코픽스를 신규도입

□ **[산정 대상은행]** 현행 코픽스 산정대상인 9개 국내은행\*

\* 우리·국민·신한·하나·외환·SC·씨티·농협·기업은행 등

○ 9개은행 수신이 국내은행 총수신의 대다수를 차지('12.7말 87.3%)하고 있어 금리의 대표성 확보가 가능

□ **[산정범위]** 현행 코픽스 산정시 포함되는 조달상품 중 만기가 3개월물\*인 조달상품을 대상으로 산정

\* '11.1월~'12.6월중 9개은행이 매주 신규취급한 총 조달액 중 3개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4.8% 수준

□ **[공시주기]** 단기대출 지표금리로서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주 공시\* 추진

\* 예) 前주 조달평균금리를 月요일·火요일 점검한 후, 水요일 공시

□ **[공시유형]** 9개은행이 매주 신규취급한 3개월물 자금조달의 가중평균금리를 지수화하여 발표(신규취급액 기준만 발표)

### < 코픽스와 단기코픽스 비교 >

구분	코픽스('10.1월~)	단기코픽스
개념	총 조달상품의 가중평균비용지수	3개월물 단기조달상품의 가중평균비용지수
산정 대상은행	9개 은행	左同
산정대상 조달상품 범위	모든 조달상품 (단, 수시입출금식·요구불예금, 전환사채 등 제외)	코픽스 산정대상 조달상품 중 계약만기 3개월물 상품 * 3개월 정기예금, 회전식예금, CD 등
공시주기	매월 1회(매월 15일)	매주 1회(매주 수요일)
공시유형	잔액기준 코픽스 및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단기코픽스
산정방식	수기입력 방식	전산입력 방식

### 3. 기대효과

- 단기코픽스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업대출, 가계신용대출 등의 단기지표금리로서 CD금리를 상당부분 대신할 전망
  - 은행 입장에서 단기코픽스는 단기 자금조달비용 반영도\*가 CD금리에 비해 매우 높은 편
    - \* 단기코픽스는 전체 3개월물 조달의 가중평균금리인 반면, CD금리는 3개월물 조달에서 극히 일부만 차지하고 있는 CD를 대상으로 산정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단기코픽스는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의한 과도한 금리 변동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
- ※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대출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고정금리 및 변동성이 적은 기존 코픽스로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
  - \* '11.6.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속 추진중

### 4. 추진일정

-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은행 및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단기코픽스 세부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9월초)
  - \* 수신상품 세부범위, 은행별로 상이한 3개월물 개념 통일 등
- 단기코픽스 연동 대출상품 개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추진 (~10월말, 9개은행·은행연합회)
  - \* 은행 의견수렴 결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약 2개월 소요
  -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시 전까지 수기방식으로 단기코픽스를 산출하여 금리 적정성 등을 검증할 계획(9월 이후)
- 단기코픽스 공시(11월 첫째주 잠정, 은행연합회)

### Ⅲ. 시장성CD 발행 활성화

□ 예대율 규제 계획 발표('09.12월), 풍부한 은행예금유입 등으로 '10년 이후 은행이 발행하는 시장성CD 잔액이 지속 감소

○ 특히, 금년 7월 중순 이후에는 은행들의 시장성CD 발행이 크게 위축된 상황

(조원, 말잔)	'08말	'09말	'10말	'11말	'12.6말	8.21
시장성 CD	20.0	13.6	6.6	3.2	2.4	0.3

\* 출처: 한은, \* 시장성CD: 증권사인수를 통해 거래되는 CD(→CD금리 산정 대상)

□ 이 경우 증권사들이 잔액이 거의 없는 시장성CD의 금리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CD금리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 기존 CD연동 상품잔액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유효한 CD금리가 고시될 필요

◇ CD금리 연동 대출잔액이 많은 은행들이 시장성CD를 당분간 일정수준 발행기로 협의

○ 은행들이 월평균 잔액이 총 2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성CD를 발행

○ CD금리 유효성 제고를 위해 최소 50%(1조원)는 3개월물 시장성CD로 발행

⇒ CD금리 산정의 직접대상이 되는 3개월물 시장성CD가 과거 수준의 평잔을 유지하게 되면서 CD금리 유효성 제고 효과

## IV. CD금리 산정방식 개선

### 1. 검토배경

- ☐ 최근 CD금리의 유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행 CD금리 산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
  - CD 유통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권사\*가 제출하는 호가를 기준으로 금리가 산정됨에 따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매 6개월마다 CD 거래실적 상위 10개 증권사를 호가제출기관으로 선정
  - 특히, CD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거래가 없는 경우 금리산정 기준이 없어 금리의 투명성 및 정확성이 결여된다는 비판
- ☐ 한편, 일부 증권사는 금리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호가 제출을 기피하고 있어 금리산정의 안정성에도 문제
  - 현재 증권사 호가 제출은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증권사가 호가제출 거부시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

### 2. CD금리 산정방식 개선방안

- ☐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인 CD금리 호가제출 기본원칙 마련

#### < 호가제출 기본원칙(예시) >

- ① CD호가의 공정하고 성실한 제출
- ② CD호가는 CD거래내역 및 기준금리, 유사채권 수익률, 은행 조달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등

## ☐ CD 발행 및 거래내역 등 관련 정보 공시 강화

- (발행정보 공시) 은행의 CD발행내역 실시간 공시시스템 구축
  - \* (현행)CD발행내역이 비공식적으로 집계·유통되고 있어 속도성 및 정확성 결여  
→(개선)은행이 발행 즉시 보고하고, 금투협은 채권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 공시
- (거래내역 공시) 증권사의 건별 CD거래내역 공시를 강화\*  
하고 만기별·잔존기간별 세분화된 집계정보를 제공
  - \* (현행) '09년 제도개선으로 건별 CD거래내역이 공개되고 있으나, 거래 CD의 발행은행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개선) 발행은행도 공시

## ☐ 증권사에 대한 호가제출 의무 및 인센티브 부여

- 협회가 지정하는 증권사에 대한 호가제출의무 부여
  - \* (현행) 현재 금융투자업 규정상 협회에는 금리를 관리·공시할 의무가 있으나 증권사는 관련 의무가 없음 → (개선) 증권사에 호가제출의무 부여
- 필요시 호가제출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지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 3. 기대효과

- ☐ 기본원칙 등을 통해 시중금리 등 시장여건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된 금리산정을 유도
- ☐ 세부정보 공시 강화\*를 통해 금리산정의 투명성 제고
  - \* 공시된 자료는 증권사 금리 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금리산정의 정확성 제고에도 기여
- ☐ 증권사 호가제출 의무부여를 통해 안정적·지속적 금리산출 도모

## 4. 추진일정

- ☐ 협회 기본원칙 마련 및 CD관련 정보 공시강화 시행(9월중, 금투협)
- ☐ 증권사 호가제출 관련 감독규정 개정('12년 하반기, 금융위)

## V. 향후 TF 논의과제 및 추진계획

### 1.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모색

- ☐ 금리스왑거래 등 자금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절한 단기지표금리 검토 필요
  - 그동안 T/F에서 기존 지표금리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대체 지표금리를 검토하였으나 단기지표금리별로 한계\*가 존재
    - \* 통안채금리(은행 신용위험 반영도가 낮음), 은행채금리(3개월물 발행금리가 없음), 코리보(은행 호가에만 의존), RP금리(3개월물 거래가 거의 없음) 등
- ☐ 향후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결과, LIBOR 개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존금리 보완\* 또는 새로운 단기지표금리 육성 등 추진
  - \* 예) 3개월물 이상 RP거래 활성화를 통해 3개월물 RP거래금리 육성 등

### 2. 금번 개선방안 관련 후속조치

- ☐ 금번 개선방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
    - 단기코픽스 도입 및 CD발행 활성화 방안 등이 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 점검
  - ☐ 신규도입되는 단기코픽스의 활용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의견수렴을 거쳐 단기코픽스 활성화 방안 마련 검토
  - ☐ 시중은행들의 시장성CD 발행 유도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 ☞ 향후 관계기관 합동TF를 중심으로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모색 등을 지속 추진

## 참고 2

## 자금시장 대안 지표금리별 장단점 비교

### ◇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로 활용되기 위한 특징(요건)

- ① 전반적인 시중 자금상황을 적절히 반영
- ② 실시간으로 금리 수준의 탐색·산출이 가능
- ③ 이해관계에서 중립성(공정성)이 보장
- ④ 금융기관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반영 등


금리	장점	단점
1.통안증권 금리(91일물) <sup>※</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량이 많아 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잘 반영(실제 거래금리)</li> <li>• 공정성 높음(조작가능성 적음)</li> <li>• 매일 공시(금융투자협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위험금리로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못함</li> </ul>
2. 은행채 금리(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스왑거래의 주 거래자인 은행의 신용위험을 반영</li> <li>• 매일 공시(민간평가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채 발행만기 제한(1년 이상)으로 3개월물 발행금리 산출이 곤란</li> </ul>
3. KORIBOR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BOR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제적 통용성이 높은 편</li> <li>• 매일 공시(연합인포맥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은행들의 호가에만 의존하는 문제</li> </ul>
4. RP금리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2금융권 등 모든 금융기관의 실제 거래금리 반영</li> <li>• 매일 공시(예탁결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국내 RP거래가 7일 이내 초단기물에 편중</li> <li>• 담보부거래로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잘 반영하지 못함</li> </ul>
5. 단기코픽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자금조달사정 및 신용리스크 반영도가 높음</li> <li>• 조작가능성은 적은 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 1회 고시됨에 따라 자금시장 상황을 실시간 반영하지 못함(후행성)</li> </ul>

※ 향후 단기국채금리가 산출되면 통안채 금리와 장단점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35. RP 시장 활성화 및 RP 금리 육성방안 세부내용**

※ 보도자료 첨부

 금융위원회	<b>보도자료</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금융산업의 선진화</li><li>• 금융시장의 글로벌화</li></ul>
	6.20(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 임 자	김학수 과장(2156-9870)	담 당 자	이한샘 사무관(2156-9874)
배 포 일	2012. 6. 19(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6 매

## 제 목 : 단기금융시장 개선을 위한 RP 및 전자단기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

### 1. 최근 금융기관간 단기금융시장 동향

① 그간 증권사 콜차입 규제, RP시장 인프라 개선 등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이 추진되면서, 시장구조가 변화하는 모습

○ 증권사 콜차입 규제 등의 영향으로 콜거래는 '11.5월 32조원에서 '12.4월 24조원으로 감소한 반면,

- 동기간 기관간 RP거래는 15조원에서 21조원으로, 금융회사의 CP발행은 16.5조원에서 16.6조원으로 확대

○ 특히, 증권사 콜차입은 13.9조원에서 7.8조원으로 6.1조원 축소되었고, RP매도는 5.8조원에서 5.9조원으로, CP발행은 2.4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가

	< '11.5월(조원) >			< '12.4월(조원) >	
	전체	증권사		전체	증권사
콜	31.7	13.9	⇒	24.1(Δ7.6)	7.8(Δ6.1)
기관간 RP	14.7	5.8		20.7 (+6.0)	5.9 (+0.1)
금융기관 CP	16.5	2.4		16.6 (+0.1)	3.0 (+0.6)
합계	62.9	22.1		61.4(Δ1.5)	16.7(Δ5.4)

\* 콜, RP는 거래금액의 월평균, CP는 발행금액의 월말잔

※ 증권사 RP매도는 '11.12월 8.1조원까지 늘었으나, '12년초 금리가 하락하면서 감소

② 단기금융시장 내 콜거래가 7.6조원 감소, RP거래가 6조원 증가하면서 무담보 신용거래로 인한 시스템리스크도 점진적으로 축소

○ 다만, RP거래 규모가 채권시장 및 선진국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수준이며, 주요 단기금융수단으로 활성화할 여지가 있음

\* 채권시장 대비 RP시장 규모('11.9말 기준, %) : (한국)2.1, (미국)6.6

③ 시장 참가자의 RP거래 참여를 제약하는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

① RP거래 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나, 다양한 거래조건을 알기 어렵고, 대표성 있는 RP금리(예, 국고채 담보 1일물) 도출도 불가능

\* 현재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에서 영업마감 이후 거래내역을 공개하거나, 실시간으로 전체 거래를 단순평균하여 금리를 산출하여 공시

② 인프라 측면에서도 펀드별 자금을 통합하여 거래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증권금융의 시장조성에도 기능상 한계\*

\* 거래조건이 불일치하는 경우 중개자가 직접 매매하는 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11.4월~), 상대매매(일대일 거래)의 중개에만 국한됨

③ RP거래시 특정증권을 담보로 지정하여야 하는 실무관행 등도 시장 참가자의 담보관리에 불편을 초래

\* 특정한 증권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RP거래조건 입력·확인 및 거래 체결·종료 과정에서 담보증권 변경시 거래시스템에서 수정입력하여야 함

④ 보유채권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증권사들은 RP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 콜차입 수요를 이전하기에 한계

⇒ 제2금융권의 콜거래 수요를 원활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RP 및 전자단기사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마련

## 2. 주요 개선방안

- ◆ RP거래 인프라 보완 등을 통해 RP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시장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 전자단기사채도 증권사 콜차입 수요의 대체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 소형 증권사의 콜수요가 축소될 수 있도록 일시적 자금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 1 RP거래 인프라 보완

#### ① RP거래정보의 실시간 공개시스템 구축(예탁원, '12.7월중)

- RP거래정보가 집중되는 예탁원 RP거래 시스템(SAFE\*)을 통해 RP거래내역 및 주요 일물\*별 금리를 실시간으로 공개

\* (예시) 1일, 3일, 7일, 1개월, 3개월, 6개월

#### ② 담보부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거래시스템 개선(예탁원 13년 상반기 중)

- RP거래시 거래조건에 특정증권을 입력하지 않고 거래기간, 이자율, 담보증권 종류만 지정하는 거래방식 도입

\* [현행] 거래조건 입력시 '국채의 종목번호'까지 입력 → [개선] '국채'만 입력

#### ③ 펀드 통합거래체결 시스템 구축(예탁원, 13년 상반기 중)

- 콜과 같이 수탁은행·자산운용사가 동일한 경우 복수 펀드의 RP거래를 묶어 하나의 거래로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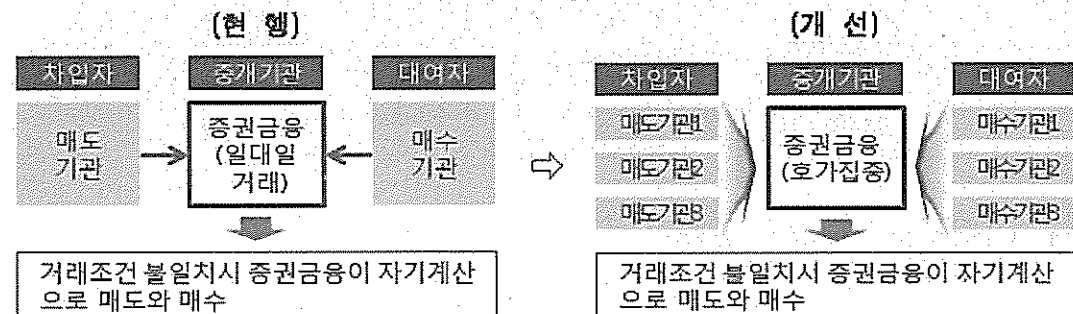
\* (예시) A자산운용사가 펀드1 2억원, 펀드2 3억원, 펀드3 5억원의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 10억원을 단일 거래로 체결 가능

- 예탁원 시스템 개편과 함께 자산운용사·수탁회사 간 시스템도 사전배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 유도(금융투자협회)

#### 4 증권금융의 RP거래 시장조성기능 강화(증권금융, '12년중)

- RP거래 시장조성기능 수행시 복수 참가자의 호가를 집중·공개하여 거래체결을 중개하는 경쟁매매 체결방식 도입

##### < 경쟁매매방식을 통한 딜러형 중개거래 구조 >



## 2 전자단기사채시장 조기활성화 여건 조성

### □ 금융기관간 전자단기사채 거래시스템 구축(증권금융, '12년 중)

- 복수의 자금 수요(전자단기사채 발행사)·공급자(기관투자자)가 참가하여 매매호가 집중 및 거래체결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
- 다만, 증권사 콜수요를 신용도에 기초한 거래로 이전시키려는 취지를 감안, 거래대상을 증권사 발행 초단기물(30일 이내)로 한정

\* 동 시스템에서는 발행시장에서 증권사와 기관투자자 간 거래만 가능하며,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는 배제

## 3 RP 채권여력이 부족한 소형 증권사의 일시적 자금수요 지원

### □ 소형사(예, 자기자본 0.5조원 미만)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콜차입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의 일종자금대출을 확대

- 채권매매 등 영업 과정에서 자금 유출입의 시차에 따른 유동성 부족시 반일물 자금 지원

- 다만, 콜차입을 통한 과도한 자산확대 등과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영업자금·결제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정 영업별 자금수요에 한정하여 대출

< 지원방안 예시 >

- 증권사가 채권매수 후 결제일 오전에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 증금이 매도자에 자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내 자금 회수  
 ※ 증금은 담보확보를 위해 해당 증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증권사의 매도대금 상환과 동시에 질권 해지

### 3. 기대효과


- ① 동 방안이 시행되면 그간 진행되어 온 단기금융시장의 변화(콜거래 축소, RP거래 증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
- ② RP거래가 주요 단기금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
  - ① 다양한 거래조건 등 RP거래 정보가 확대되는 한편, 향후 기간물 거래가 증가하는 경우 주요 일물별 금리 도출 가능
  - ② 담보관리 등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고 시장조성기능이 강화되면서 시장참가자의 참여기반도 확대
- ③ 전자단기사채는 제2금융권의 콜거래 및 RP거래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단기금융시장이 무담보 거래(콜)에서 담보 거래(RP) 또는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별화되는 거래(전자단기사채)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되면서 시스템 리스크 완화 및 효율적 금리체계 형성 가능

#### 4. 향후 추진계획

- ① RP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시스템 개선을 단계적으로 이행
- ② 전자단기사채 제도도 '13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 3/4분기내 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금융회사간 전자단기사채 거래 플랫폼도 구축
- ③ '12년중 소형 증권사 지원체계 마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b>보 도 자 료</b>		· 금융산업의 선진화
	<b>2010. 7. 27(화) 10:30부터 보도가능</b>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기획재정부 국채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 한국은행 자금시장팀		
책 임 자	금융위 정완규 과장 (2156-9870) 기재부 김정관 과장 (2150-5130) 금감원 민병현 팀장 (3145-7582) 한 은 나상욱 팀장 (759-4777)	담 당 자	금융위 최상아 사무관 (2156-9872) 기재부 이경용 사무관 (2150-5132) 금감원 고승홍 선임조사역 (3145-7131) 한 은 이웅천 과 장 (759-4547)
배 포 일	2010. 7. 27(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17매

## 제 목 : 콜시장 건전화 및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을 통한 단기금융 시장 개선방안 추진

- ☐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간 단기금융시장은 차입이 용이하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은 무담보 콜시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특히 증권회사의 경우 단기자금을 콜차입에 크게 의존
    - 과다한 콜 의존은 해당 금융회사들의 리스크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지난번 글로벌 위기사 경험했듯이 콜시장에 대내외 충격이 올 경우 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로 작용할 우려 상존
  - ☐ 따라서 콜을 보완할 수 있도록 RP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
    - RP는 대상채권이 있어 거래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바, 편의성 등 측면에서 콜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고 규제를 정비하여 RP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
  -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금융시장을 대표할 만한 적절한 지표채권금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및 단기금융상품의 적정가격 형성이 저해되는 등시장 인프라 기능 미흡
    - 단기국채 3개월물·6개월물 발행방안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통안채의 지표금리 형성기능을 강화
  - ☐ 이와 같은 방향에 입각하여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우리 단기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불임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하였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콜시장 건전화와 단기지표채권 육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

2010. 7.

금 융 위 원 회  
기 획 재 정 부  
금 융 감 독 원  
한 국 은 행

# ||| 목 차 |||

## I. 단기금융시장 현황

## II. 단기금융시장의 문제점

## III. 개선방안

### 1. 콜시장 건전화

### 2. 기관간 RP시장 활성화

### 3. 단기지표채권 육성

## IV. 향후 추진일정

## I. 단기금융시장 현황

- (개념) 콜·RP거래 및 CP·CD 발행, 유통 등의 방법으로 1년 미만의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 과부족을 조정하는 도매금융시장
- (시장별 현황) 금융회사간 단기자금거래는 여타 단기시장 대비 차입조건이 유리한 무담보 콜시장 중심으로 운영

① (콜) 일평균 거래규모는 약 33조원 수준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약 50%)을 차지

- '08년 금융위기시 11조원 수준으로 급격히 위축되었다가, 최근 시장규모는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 (08.9) 29.0조 → (08.12)24.1조 → (09.3) 11.5조 → (09.12) 30.2조 → (10.6) 33.1조

② (RP) 거래규모(잔액기준)는 지속적으로 증가('07:65조, '08:69조, '09:72조원)하고 있으나 대고객 RP 거래가 대부분(87%)을 차지

< RP 거래 추이 >

(단위:조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RP	52.4	60.8	66.1	65.4	63.4	73.4	75.4	69.1	73.1	75.1	77.8	71.8	77.3	78.2
대고객RP	51.9	59.9	64.4	63.5	61.4	69.5	68.9	62.2	67.8	68.7	69.2	63.3	67.2	66.2
기관간RP	0.5	0.9	1.7	1.9	2.0	3.9	6.5	6.9	5.3	6.4	8.6	8.5	10.1	12.0

③ (CD) 예대율 규제 등으로 인해 최근 발행잔량이 79조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유통시장도 위축(4.5조원 수준)되는 추세

\* CD발행잔량 추이(단위:조원) : (09.12) 113.3 → (10.1) 108.3 → (2) 106.4 → (3) 96.2 → (4) 86.7 → (5)79.2

\* CD거래량 추이(단위:조원, 예탁원 기관결제시스템 결제량 기준)

: (08.12)12.6 → (09.12) 7.3 → (10.1) 6.8 → (2) 6.3 → (3) 3.3 → (4) 4.9 → (5) 4.5

※ '10.6월말 현재 시장별 규모(괄호는 금융기관간 규모, CD는 5월말, 단위 : 조원)  
콜 : 33.1 / RP(기관간 거래) : 78.2(12.0) / CP(기관발행) : 67.8(12.3) / CD(기관보유) : 79.2(10.7)

## II. 단기금융시장의 문제점

- ◆ 콜시장 편중 지속 → 단기금융시장의 왜곡, 시스템리스크 잠재
- ◆ RP 시장 미발달, 단기지표금리 부재 → 단기금융시장의 질적·양적 성장 저해

### 1 콜시장 편중 현상 지속

- 신용차입, 높은 유동성, 낮은 금리 등 콜거래의 편의성으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단기자금수요를 콜시장에 주로 의존
  - \*단기자금시장 비중('10.5월말, %): (콜)50.5, (RP)16.0, (CP)17.2, (CD)16.4
- 콜시장이 지준자금과부족 조절 기능보다는 제2금융권의 영업자금 조달시장으로 기능
  - \*콜머니 비중('10.6월중, %): (은행)40.3, (증권)35.8, (외은지점)17.9, (기타)6.0
  - \*증권사는 콜차입 자금으로 수익률이 높은 단기국공채 등에 투자
- 특히, 증권사의 과도한 콜차입 관행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신용경색시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
  - \*콜시장경색→증권사 콜차입 곤란→증권사 부도→자산운용사 등 콜론 부실화
  - \*자기자본 이상 콜차입 증권사('09년): 13개사(일일거래량 기준)

### 2 기관간 RP시장 활성화 지연

- 선진국은 RP시장을 바탕으로 IB들이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이를 통해 '장-단기채권', '채권현-선물'시장간 연계성이 제고
- 반면, 우리의 경우 RP시장 발달 미흡으로 적극적인 기간물 투자 등 채권유통시장 발달에 저해요소로 작용

## <참고> RP 시장 활성화의 기대효과

### ① 채권시장 유동성 확대 및 금융시스템 리스크 축소

- RP 거래는 담보채권의 매매를 수반하므로 채권수요가 확대되고 채권유통시장의 거래량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
- 신용거래인 콜과 달리 RP 거래는 담보채권이 확보되므로 금융시장의 신용위험을 축소

### ② 금융시장간 연계성 강화

- RP 거래는 자금대차거래인 동시에 채권매매거래의 특성도 있어 단기자금시장과 채권시장을 연결하는 기능
- RP 거래는 채권 현-선물 가격차이, 장단기 금리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거래를 유발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장단기 금융시장간 가격괴리를 축소

\* 예: 국채 현-선물 스프레드(RP 금리 내재가)와 국채담보 RP 거래 금리(실제 RP 금리)간에 괴리가 발생할 경우 차익거래가 발생

\*\* 예: 장단기 금리격차 확대(yield curve steepening)가 예상되는 경우 장기 RP를 매도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단기 RP를 매수

### ③ 단기 기일물 시장의 발달 및 합리적인 금리기간구조 형성

- 1일물 중심인 콜과 달리 RP는 1일물부터 1년물까지 만기가 다양하므로 단기자금시장의 수익률곡선(yield-curve) 형성에 기여

### ④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

- 단기금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통화정책 효과가 채권시장 등 장기금융시장으로 파급되는 금리파급 경로가 원활히 작동

### 3 단기 지표금리의 미발달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전까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여 국채 시장이 발달되지 못하고 적절한 지표금리도 형성되지 못함
- 외환위기 이후 국고채 발행 증가 및 제도 정비로 중장기 채권 시장은 국고채가 지표채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3년, 5년, 10년, 20년물)
- 그러나 단기금융시장은 국고채 발행물량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지표채권을 육성하지 못함
- 여러가지 대체수단\*이 강구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지표채권 요건(표 참조)이 결여되어 있어 지표금리 기능에 한계 노출

\* Koribor, Cofix, CD 등

#### < 지표채권의 요건 >

- ① 위험금융상품 가격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무위험채권일 것
- ② 지속적인 채권발행으로 연속적인 경쟁금리 형성이 가능할 것
- ③ 유통량이 많아 의도적인 시장수급 및 금리조정이 어려울 것
- ④ 시장상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

- 단기금융시장 지표금리 부재로 인해 단기금융상품의 적정 가격 형성이 저해되고 다양한 구조화 증권 등 적극적인 단기금융상품 개발에 한계

\* 지표금리가 형성될 경우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기일물 금리 형성이 가능해져 RP·CP 등 여타 기일물 거래도 활성화 가능

<참고> 지표금리 형성의 기대효과 (장기금리 사례)

□ 98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국채시장 발전방안 추진으로 3년, 5년, 10년물 국고채가 장기 지표금리로 정착

□ 지표금리 형성 이후 장기 채권시장은 비약적으로 발전

① 국채시장의 폭과 깊이가 심화

\* 국고채 발행(조원): (00년) 15.2 → (03년) 34.5 → (09년) 85.0

\* 국고채 거래량(조원): (00년) 213.5 → (03년) 619.9 → (09년) 1,484.4

② 회사채 등 여타 장기물 채권의 발행·유통 활성화

- 국고채 지표금리에 신용위험을 가산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구조로 적절한 가격형성이 가능해짐

\* 회사채 발행(조원): (00년) 59.3 → (03년) 90.5 → (09년) 100.9

\* 회사채 거래량(조원): (00년) 127.9 → (03년) 203.6 → (09년) 197.6

③ 채권 선물 등 금리파생시장 활성화 → 시장금리 결정의 효율성 제고

- 국채선물과 현물시장간 차익거래 기회 제공 등으로 균형가격 형성이 원활해짐

\* 국채선물 거래량(만계약): (00년) 153 → (03년) 1,029 → (09년) 2,005

④ 외국인 투자 증가 등 국채시장의 선진화 제고

\* 외국인 채권 투자잔액(조원): (00년) 0.7 → (03년) 1.8 → (09년) 56.5

⇒ 단기 지표금리 형성시 단기금융시장의 발전, 효율성·안정성 제고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

### Ⅲ. 개선방안

#### < 추진 방향 >

- ◆ 우선 증권회사의 과도한 콜시장 의존을 축소해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은행간 시장으로의 재편방안 검토
- ◆ 기관간 RP 시장을 활성화하여 콜시장 편중현상 완화와 단기 금융시장의 질적 성장 도모
- ◆ 통안채의 단기지표금리 기능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단기 국채발행 여건을 조성

#### 1 콜시장 건전화

##### ① (단기 과제) 증권사의 과도한 콜차입을 규제

- 증권회사별 자체콜차입 한도를 설정(협회 모범규준 마련)하고 증권사 경영실태평가에 콜차입 규모의 적정성 등을 반영(감독원 경영실태평가운용지침에 반영)
- 콜차입 한도 : 일별 콜차입이 자기자본의 100% 이내(한도 초과 증권사는 6개월간 유예기간 부여)
- 기준마련 : 각 증권사 위험관리위원회(또는 이사회)가 설정

#### < 유동성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내용>

- 모범규준에는 콜차입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유동성리스크의 인식·측정·통제·완화 등 유동성관리 질적 체계 전반의 개선을 위한 기준 제시
  - 내부통제
  -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
  - 자금조달의 다변화
  - 콜차입 관리
  - 리스크의 측정·보고
  - 유동성 위기상황분석(Stress-test)
  - 비상자금조달계획 (Contingency Funding Plan) 등

② (중기 과제) 유동성규제 등 건전성규제 정비를 통한 제2금융권  
콜거래 규모 축소

- 증권사가 콜거래시 수반되는 유동성위험을 적절히 인식할 수 있도록 건전성규제(NCR) 정비방안 검토
- 구체적 규제개선방안은 RP 시장 등 대체거래 활성화 추이와 G20 건전성규제(바젤Ⅲ도입)의 논의경과 등을 보아가며 마련

③ (장기 과제) 콜시장의 은행간시장 전환 필요성 검토

- 우리나라 콜시장은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중요한 단기자금  
수급시장으로 정착되어 있는 상황
- 콜시장의 제2금융권 배제 등 급격한 지준시장화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단기자금수급 차질 등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바,
  - 콜시장의 지준시장 전환은 RP 시장 확대, 제2금융권의 콜  
의존도 축소 등 추진여건을 보아가며, 전환 필요성과 추진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 <참고> 주요국의 기관간 초단기 자금대차시장 현황

### ① (미국) Federal Funds Market (은행간 지준시장)

- 연방준비은행에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가 있는 예금취급기관들 (depository institutions) 상호간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단기금융시장
  - \* 시장참가자: 상업은행, 저축대부조합, 상호저축은행, 신용조합 등
  - \* 증권딜러 등은 자금공급만 가능하며, 자금차입은 금지
- Fed Funds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금융기관들은 동 시장 참가 은행과의 RP 거래를 통해 단기자금 과부족을 조절

### ② (유로지역) Unsecured Market (은행 간 무담보 자금 시장)

※ 영국 : O/N Sterling Market (은행간 지준시장)

- 은행들이 참여하여 무담보로 단기자금을 조달·운용하는 시장
- 단기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익일물 70%, 1개월 미만 95% 이상), 1개월 이상 장기물은 신용위험 우려로 담보시장(RP거래)을 이용

### ③ (일본) 콜시장

- 지준예치와 관계없이 모든 금융회사들이 콜시장에 참여
- 담보콜과 무담보콜이 함께 거래되며, 신용경색기에는 무담보콜 비중이 축소되는 경향

### ④ (한국) 콜시장

- 은행간 시장으로 운영되다가 '82년부터 비은행 금융회사 참여를 허용
- '90년대 이후에는 공사, 기금(외국환평형기금, 예보, 주택공사 등)의 참여를 허용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참여
  - \* 법적 근거 : 자본시장법 시행령 §345(자금중개회사의 인가)

## 2 기관간 RP 시장 활성화

### 가. RP 거래 인프라 개선

#### ① RP 거래 통합체결 시스템 도입 (~'11.말, 예탁원 RP시스템 개선)

- (현황) RP 거래 체결이 자산운용사의 개별 펀드별로 각각 이루어짐에 따라 업무부담 가중 및 거래시간 지연
- (개선) 수탁은행·자산운용사가 동일한 경우 복수 펀드를 묶어 RP 거래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일반 주식거래의 경우 수탁은행과 자산운용사가 동일하면 복수펀드의 주문을 일괄하여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신속성·편의성 도모

#### ② 장외 RP 온라인 거래시스템 구축 (~'11.말, 예탁원·자금중개)

- (현황) 장외 RP 거래는 거래정보 탐색이 어렵고 중개회사-환대서비스기관(예탁원)간 시스템 연계가 미흡
- (개선) 우선 중개회사-예탁원간 시스템을 연계하고 장기적으로 거래상대방 탐색, 호가제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시스템 구축

#### ③ 기관간 RP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 지원 ('11.상반기, 예탁원)

- (현황) 장외 RP 거래에 사용되는 예탁원 RP 거래 시스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이 기관간 RP 표준계약서\*와 일부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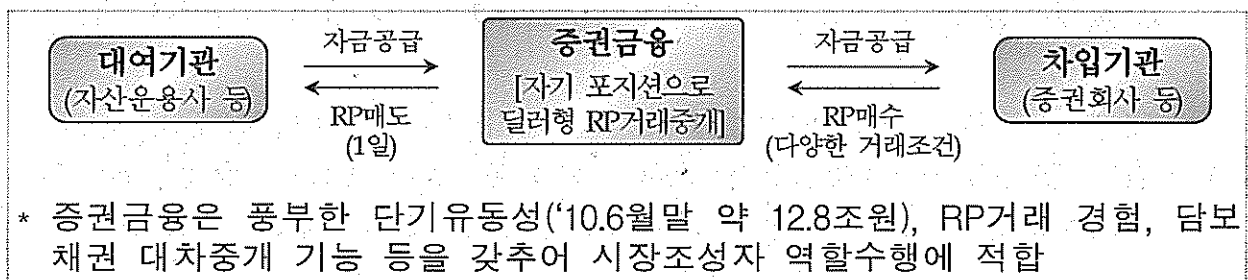
\* 국제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RP 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08년 도입하였으나, 아직 활용도가 저조

- (개선) RP 거래 시스템 및 규정을 국제 표준계약서에 맞게 수정\*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독려

\* RP 대상증권 처분 등과 관련한 조건, 증거금 이행방식 등

#### ④ 증권금융의 장외 RP 시장조성자 기능 도입 ('10.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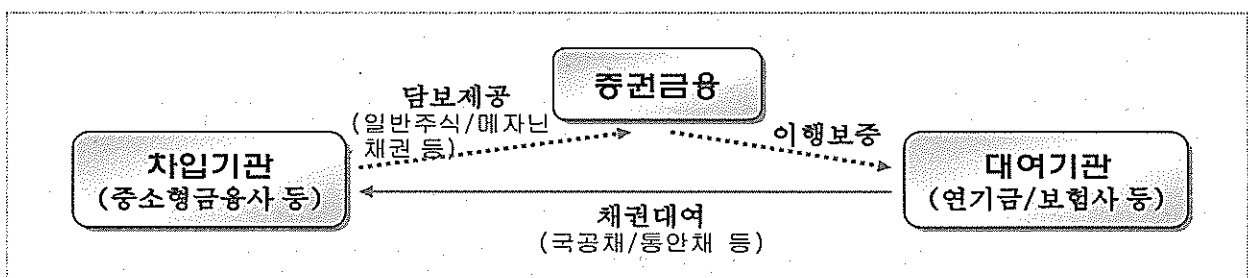
- (현황) RP 시장 미활성화로 만기·담보증권 등 거래조건이 일치하는 거래상대방 탐색과 초기 시장형성에 애로
- (개선) 증권금융의 딜러형 RP 거래 중개를 허용하여 중소형 금융회사의 다양한 RP 거래 수요 충족과 거래 촉진을 도모



#### ⑤ RP 담보채권의 대차거래 지원 ('10.하반기, 증금 규정 개정)

- (현황) 제2금융권 중소형사의 경우 RP 거래에 필요한 담보 적격채권(국공채 등) 부족
- (개선) 증권금융의 채권 대차거래 이행보증의 범위를 확대\* 하여 중소형 금융사들의 RP 담보채권 확보를 지원

\* 이행보증 담보범위: (현재) 현금, AA이상 채권 ⇨ (개선) 주식, 메자닌 채권 등



## 나. 기관간 RP 시장 참여기반 확충

### ① 펀드(MMF)간 RP 자전거래 예외허용 기준 구체화 ('10.하반기, 모범규준 제정)

- (현황) 자산운용사는 펀드간 RP 자전거래 허용기준이 불명확하여 펀드환매 대비 자금을 RP 보다는 1일물 콜론으로 운용
- (개선) 펀드간 RP 자전거래의 예외 허용기준을 수익률조작 우려가 없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콜론의 RP 전환을 유도

\* RP 자전거래 허용기준(안): 펀드간 수익자 이익 동등하게 고려, 환매대응 위한 불가피성, 담보증권은 국채·특수채·최상위등급 채권 등에 한정, 거래상대방은 국가·공법인·투자적격 이상 금융기관에 한정 등

### ② MMF의 동일인 총거래한도 계산시 RP 매수거래 예외 인정 ('10.하반기, 금투업규정)

- (현황) MMF 운용시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과 동일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금융기관 예치, 단기대출, RP매수 등)합계액이 펀드재산의 10%\* 초과를 금지하고 있어 콜에 비해 불리

\* 다만, 신용평가등급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대출한 30일 이내의 Call론은 제외

- (개선) RP 매수거래는 동일인 총거래한도 계산시 제외

- 단, 거래상대방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외대상거래를 콜론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엄격히 한정

\* RP 매수거래시 담보증권의 부도위험은 거래상대방(RP 매도자)이 부담하나, 거래상대방도 동시에 부도날 경우 매수자에 위험이 전가될 가능성

\*\*① RP 만기 30일 이내, ② 거래 상대방은 신용평가 상위 2개 등급 이내 금융기관으로 한정, ③ 대상증권은 국채/지방채/특수채/최상위 등급 사채 등

**③ 금융회사간 대고객 RP(RP형 CMA) 거래 제한 ('10.하반기, 자본  
시장법 시행령)**

- (현황) 금융회사들은 대고객 RP 거래의 편의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기관간 RP 거래수요도 대고객 RP 형태로 거래

\* 대고객 RP의 경우 사전에 약정금리가 공표되고, 담보채권 관리의무가 매도자에게 있는 등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 기관간 RP보다 편리

- (개선) 신탁자금을 제외한 금융회사 자체자금은 기관간 RP로 거래하도록 규정하여 기관간 RP 시장 확대 도모

\* 일반 고객의 투자자금인 신탁자금의 경우 금리 미확정 등 영업애로로 인해 기관간 RP 거래 강제가 곤란

**④ 한은 RP 대상기관 선정시 기관간 RP 실적 반영 비율 상향  
['11년 선정시부터 반영('10.8~'11.6월 거래분), 금통위]**

- (현황) 한은은 '08년부터 한은RP 대상기관 선정시 기관간 RP 실적을 반영 (기존기관 5%, 신규신청기관 65%)

- (개선)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

**※ RP시장 관련 기초치사항**

- '06년 통합 도산법 시행 : RP거래가 파산관재인자의 부인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RP매매의 거래 안정성 제고
- '08년 기관간 RP수수료 인하 : 예탁원의 기관간 RP수수료를 46% 인하 (1억원당 37원→20원)
- '09년 RP거래 원천징수 예외 인정 : 법인세법 개정시('09.12.23)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재개하였으나, RP매수채권 제3자 매도관련 부분은 원천징수를 면제하여 RP거래의 애로 해소

### 3 단기지표채권 육성

#### ① 지표채권 육성 방향

- 지표채권의 요건을 갖춘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여 단기지표채권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현재 국고채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고 있어 단기국채 발행시 국고채 총발행액 증가분이 국회동의 과정에서 국가채무증가로 오인될 가능성
  - \*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선진국 : 국채순증발행한도만 국회 승인, 차환 및 발행주기 등은 국채시장 관리차원에서 정부가 결정
- 따라서 '11년중 국가재정법을 개정\*한 후 단기국고채 발행 추진
  - \* 국회승인 대상 : 국고채 발행총액 → 국고채 발행 순액

#### ② 단기국고채 발행 전까지 통안채를 단기 지표채권으로 활용

- 단기지표금리로서 통안채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통안채 정례발행을 추진
  - (i) 91일물(7.23일 현재 잔액: 14.3조원)의 경우 매주 1.0~1.5조원의 정례 발행을 지속하여 단기 금리형성 기능을 강화
    - \* 2009년중 통안채 주별 발행규모는 최저 7,700억원에서 최고 3조원으로 변동성이 컸음
  - (ii) 182일물은 현재 발행량이 거의 없는 바 우선 소규모(격주 0.5조원 내외, 월 2회)로 정례발행을 추진하고 향후 시장여건을 보아가며 발행빈도 및 규모를 확대

## IV. 향후 추진일정

---

① 콜시장 자율규제 강화 : 3/4분기중 추진

② RP시장 활성화 : '10년 하반기 중 제도정비하고 '11년부터 시행

- 다만, RP 시장 활성화 조치 중 예탁원 RP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11년 중 완료

③ 단기지표금리 육성

① 단기 통안채 정례발행 : 즉시 시행

② 단기국채 발행 : '11년 말까지 국가재정법 개정 등 제도 기반 정비 및 세부 방안(발행물량, 발행방식, 재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

- 단기국고채 발행은 한은의 통안증권 지표금리 형성 노력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12년부터 추진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36. 단기코픽스 세부 시행방안 내용 일체

- ☐ 단기코픽스 관련 요청하신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단기코픽스 도입방안

## 1. 검토배경

□ '10.1월, 대출시장에서 CD금리를 대신하기 위해 코픽스\*를 도입

\* 9개 국내은행들의 '자금조달 가중평균비용지수'이며, 매월 1회(매월 15일) 은행연합회에서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발표중

○ 코픽스는 대출지표금리로서 은행 자금조달비용 반영도가 높은 장점 등이 있어,

- 만기가 상대적으로 장기인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활용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존 CD연동 대출 비중이 축소

\* 주택담보대출 코픽스 비중(%): ('10.1월)코픽스도입, ('10말)21.5, ('11말)40.1, ('12.3말) 41.3

(% , %p)		'09.12말(A)	'12.3말(B)	B-A	'12.3말 잔액
원화대출	CD금리 연동	49.6	30.3	△19.3	327.3조원
	코픽스 연동	-	14.3	+14.3	153.9조원
가계대출	CD금리 연동	72.1	37.0	△35.1	166.2조원
	코픽스 연동	-	34.0	+34.0	152.8조원
기업대출	CD금리 연동	32.8	24.5	△8.3	146.8조원
	코픽스 연동	-	0.1	+0.1	1.0조원

\* 출처: 금융감독원

\* '12.3말 총잔액: 원화대출 1,079.6조원, 가계대출 448.8조원, 기업대출 599.6조원

□ 다만, 코픽스는 총 자금조달의 가중평균비용으로 평균만기가 9~10개월 수준이고 월 1회만 발표됨에 따라,

○ 은행들은 만기가 1~2년내로 짧은 변동금리부 단기대출\*의 경우 여전히 코픽스 보다는 CD금리를 선호하는 경향

\* 예: 운전자금용 기업대출, 가계 신용대출 등

◇ CD금리를 대신할 단기대출 지표금리 개발 필요성이 제기

⇒ 현행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단기코픽스 신규도입 추진

## 2. 단기코픽스 도입방안

◇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3개월물 조달평균비용을 반영하고 매주 발표되는 단기코픽스를 신규도입

□ **[산정 대상은행]** 현행 코픽스 산정대상인 9개 국내은행\*

\* 우리·국민·신한·하나·외환·SC·씨티·농협·기업은행 등

○ 9개은행 수신이 국내은행 총수신의 대다수를 차지(12.7말 87.3%)하고 있어 금리의 대표성 확보가 가능

□ **[산정범위]** 현행 코픽스 산정시 포함되는 조달상품 중 만기가 3개월물\*인 조달상품을 대상으로 산정

\* '11.1월~12.6월중 9개은행이 매주 신규취급한 총 조달액 중 3개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4.8% 수준

□ **[공시주기]** 단기대출 지표금리로서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주 공시\* 추진

\* 예) 前주 조달평균금리를 月요일·火요일 점검한 후, 水요일 공시

□ **[공시유형]** 9개은행이 매주 신규취급한 3개월물 자금조달의 가중평균금리를 지수화하여 발표(신규취급액 기준만 발표)

### < 코픽스와 단기코픽스 비교 >

구분	코픽스('10.1월~)	단기코픽스
개념	총 조달상품의 가중평균비용지수	3개월물 단기조달상품의 가중평균비용지수
산정 대상은행	9개 은행	左同
산정대상 조달상품 범위	모든 조달상품 (단, 수시입출금식·요구불예금, 전환사채 등 제외)	코픽스 산정대상 조달상품 중 계약만기 3개월물 상품 * 3개월 정기예금, 회전식예금, CD 등
공시주기	매월 1회(매월 15일)	매주 1회(매주 수요일)
공시유형	잔액기준 코픽스 및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단기코픽스
산정방식	수기입력 방식	전산입력 방식

### 3. 기대효과

□ 단기코픽스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업대출, 가계신용대출 등의 단기지표금리로서 CD금리를 상당부분 대신할 전망

○ 은행 입장에서 단기코픽스는 단기 자금조달비용 반영도\*가 CD금리에 비해 매우 높은 편

\* 단기코픽스는 전체 3개월물 조달의 가중평균금리인 반면, CD금리는 3개월물 조달에서 극히 일부만 차지하고 있는 CD를 대상으로 산정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단기코픽스는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의한 과도한 금리 변동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대출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고정금리 및 변동성이 적은 기존 코픽스로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

\* '11.6.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속 추진중

### 4. 추진일정

□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은행 및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단기코픽스 세부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9월초)

\* 수신상품 세부범위, 은행별로 상이한 3개월물 개념 통일 등

□ 단기코픽스 연동 대출상품 개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추진 (~10월말, 9개은행·은행연합회)

\* 은행 의견수렴 결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약 2개월 소요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시 전까지 수기방식으로 단기코픽스를 산출하여 금리 적정성 등을 검증할 계획(9월 이후)

□ 단기코픽스 공시(11월 첫째주 잠정, 은행연합회)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37.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금융감독원과  
주고받은 공문 파일

☐ 별도제출

정 호 준 의 원



##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

### 1-1. 미소금융서민금융 지원대책

- “제도 도입 시 수요전망” 대비 현재 실적, 제도변동 현황
- 최근 3년간, 연도별·지역별·신용등급별 지원실적
- 최근 3년간 편법대출 적발현황 및 사례
- 미소금융 이용시 요구되는 서류 및 지원 자격 현황

#### ☒ “제도 도입 시 수요전망” 대비 현재 실적, 제도변동 현황\*

#### ☐ 수요전망 대비 현재 실적

- (수요전망) 사업 개시 후 10년간 기존 제도금융권 밖 약 20만~25만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 금융위,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확대방안 (‘09.9.17.)」

- (지원실적) ‘12.7.31. 현재, 지점을 통한 미소금융의 대출 전수는 74,776건\*으로 전망치 대비 약 37%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임

\* 미소금융지점 34,038건, 기존복지사업자(소액금융) 40,738건

## □ 제도변동 현황\* (대출기준<지원대상> 변경 연혁)

\* 미소금융지점을 통한 미소금융

○ 미소금융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

시기	지원대상*	비고
'09.12~ '10.6.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소득·저신용계층	
'10.7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계층 ○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자	
'10.8 ~ 현재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계층 - 다만,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코리아크레딧 뷰로 기준)되더라도 재평가하여 7등급 이하면 지원대상에 포함 ○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자	

\* 확대 내용은 밑줄로 표시

## ② 연도별·신용등급별 지원실적\*

\* 미소금융지점을 통한 미소금융

○ 연도별 대출실적

(‘12.7.31.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분	건수	금액
2010년	7,770	795
2011년	16,489	2,548
2012년	9,779	1,304
계	34,038	4,647

○ 지역별· 신용등급별 대출실적

(‘12.7.31.기준, 단위: 건, 억원)

구분	건수	금액
0	182	17
7	12,754	1,569
8	10,028	1,200
9	1,659	183
10	781	80
차상위*	8,634	1,598
계	34,038	4,647

\* 신용등급 1~6등급의 저소득계층

※ 지역별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③ 편법대출 적발현황 및 사례\*

\* 미소금융지점을 통한 미소금융

○ 정기적인 점검결과, 해당사항 없음

#### ④ 미소금융 대출 이용시 요구되는 서류 및 지원자격 현황

##### □ 징구서류

※ 전체 징구 서류 중 대출 종류 및 신청인 상황에 맞는 서류만 징구

구분		구비서류
기본서류		<input type="checkbox"/>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신분증 <input type="checkbox"/> 소득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재산관련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상가·주택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등 <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보고서(필요시) <input type="checkbox"/> 금융거래확인서(필요시) <input type="checkbox"/>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필요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필요서류
추가서류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및 창업임차자금	<input type="checkbox"/> 컨설팅결과보고서(최근 3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창업교육수료증(최근 3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임대차계약서(현재·재계약)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input type="checkbox"/>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input type="checkbox"/> 컨설팅결과보고서(최근 3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종 1년간/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임대차계약서(현재·재계약) <input type="checkbox"/> 자금용도 및 활용 계획서(필요시)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input type="checkbox"/> 무등록사업자확인(진술)서

## □ 대출기준 (지원대상)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계층
  - 다만,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 되더라도 재평가하여 7등급 이하면 지원대상에 포함
-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자

## 1-2. 햇살론 서민금융 지원대책

- “제도 도입 시 수요전망” 대비 현재 실적, 제도변동 현황
- 최근 3년간, 연도별·지역별·신용등급별 지원실적
- 최근 3년간 편법대출 적발현황 및 사례

### ① “제도 도입 시 수요전망” 대비 현재 실적, 제도변동 현황

#### □ 수요전망 대비 현재 실적

- (수요전망)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대출시 약 100만명의 서민에게 대출 가능 할 것으로 전망
- (지원실적) '10.7.26~'08.31까지 취급실적은 총 241,600건  
21,440억원

#### □ 제도변동 현황\* (대출기준<지원대상> 변경 연혁)

시기	지원대상	비고
'10.7~ '10.9.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근로자(일용직·임시직 포함)	
'10.9	○ 신용 6등급 이하라도 연소득 4천만원이하만 대출 가능하도록 제한	
'10.11	○ 근로자 지원요건 중 '3개월이상 계속근로'를 '최근 3개월간 매달 10일 이상 근로'인 경우로 명확화 하여 이직 등 단기간 근로 공백자 지원, 90일 이내의 출산 휴가는 근로기간으로 인정	
'11.2	○ 저소득자 범위를 '연소득 2천6백만원'으로 상향조정	
'11.9~현재	○ 대환대출 실시 - 추진내용 :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한 연이율 20% 이상 고금리채무를 저금리의 햇살론으로 전환 - 대출대상 : 고금리 채무를 6개월이상 정상상환 중인 자 - 대출한도 : 3,000만원 이내에서 고금리채무 해당액	

## ② 연도별·신용등급별 지원실적\*

###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억 원)

구 분	2010.7.26	2011	2012.7월까지	계
건 수	152,731	56,097	26,562	235,390
금 액	13,859	4,835	2,214	20,908

### □ 지역별·신용등급별 지원실적

(‘12.7.31.기준, 단위: 건, 억 원)

구분	건수	금액
0	86	4
1~5등급*	61,800	6,061
6	63,220	6,194
7	71,489	5,993
8	30,779	2,187
9	6,726	391
10	1,290	78
계	235,390	P20,908

\* 연소득 2,600만원 저소득자

※ 지역별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 ③ 편법대출 적발현황 및 사례

○ 해당사항 없음

#### 4 미소금융 대출 이용시 요구되는 서류 및 지원자격 현황

##### □ 징구서류

- 본인확인서류, 근로 및 영업사실 확인서류 등

(표1) 근로자 구비서류

구 분			서류명칭
공 통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신 고 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일용근로 자 제외)	직전년도 이전 입사자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당해년도 입사자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근무처 자격득실 이력 포함) 3.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일용근로자		1. 근로(고용) 계약서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3.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근로소득 미신고자			1. 근로(고용) 확인서 2.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표2) 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 구비서류

접수서류 목록		비고
공통	주민등록등본	◦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장 임차계약서 접수 생략
	사업사실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무등록 자영업자는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중 기청 고시)」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 인적용역제공자는 소득세납부 증빙서(사업소득원 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등)
		◦ 농림어업 종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확인서 또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입증서류 등
	연간소득 증빙서류	▪ 연간소득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3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3개월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창업자	창업교육· 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 정부, 공공기관 등 창업교육기관*이 발급한 교육이수 확인서류 * 소상공인지원센터 ‘성공창업패키지’ 과정, 창업진흥원 ‘기술창업학교’, 소상공인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별로 소재), 근로복지공단 창업교육
	창업준비 소요 자금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공사(인테리어 등)계약서, 납품계약서 (냉동기·쇼케이스·진열대 등의 설비 및 상품) 등 ◦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영수증 또는 입금증 원본

## □ 대출기준 (지원대상)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 40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연소득 26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근로자(일용직·임시직포함)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자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미신고자 포함)
- 신청일 현재 창업 준비 중이거나 영업 중인 자(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으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무등록·무점포자 포함)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

2. 최근 3년간, 부실 저축은행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한 증권선물위의 검토보고서 및 조치내역

☐ 별도제출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

3. 최근 3년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채권금융기관에 요구한 시정요청 사항 및 시정요구 미이행에 따른 조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

### 4. 최근 3년간,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해당 불공정영업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 현황

#### ☐ 시정조치 현황

의결일자	조치대상	위반사유	조치내역
11.08.26	외환은행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태료 부과</li> <li>기관주의</li> </ul>
11.11.04	국민은행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태료 부과</li> <li>기관주의</li> </ul>
12.05.16.	기업은행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조치 명령</li> <li>과태료 부과</li> <li>기관주의</li> </ul>
12.05.16.	농협은행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조치 명령</li> <li>과태료 부과</li> <li>기관주의</li> </ul>
12.05.16.	SC은행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조치 명령</li> <li>과태료 부과</li> <li>기관주의</li> </ul>
12.05.16.	부산은행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조치 명령</li> <li>과태료 부과</li> <li>기관주의</li> </ul>
12.05.16.	수협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조치 명령</li> <li>과태료 부과</li> <li>기관주의</li> </ul>
12.05.16.	씨티은행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조치 명령</li> <li>과태료 부과</li> </ul>
12.05.16.	신한은행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조치 명령</li> <li>과태료 부과</li> </ul>
12.06.08.	하나은행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조치 명령</li> <li>과태료 부과</li> </ul>
12.09.19	경남은행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태료 부과</li> <li>기관주의</li> </ul>
12.09.19	대구은행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태료 부과</li> <li>기관주의</li> </ul>

※ 은행법 시행령 개정('10.11.15)으로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조항 신설

##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

### 5. 최근 3년간, 은행 및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현황

☐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백만원)

부과일자	부과대상자	부과사유	과징금
'08.02.22	우리은행	은행법 제38조	2,992
'10.10.18	OCBC은행서울지점	은행법 제35조 제3항	136
'10.11.18	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점	은행법 제35조 제3항	1,176
'11.11.09	SC은행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제10호	3

##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

### 6.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처분관련 행정심판 현황('10~'12)

#### □ 금융위원회 처분 관련 행정심판 현황

청구일	재결일	사건명	청구인	재결결과
'08-06-18	취하	'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정○○	취하
'09-07-04	'10-03-02	우리은행 신용카드사업권허가 취소청구	김○○	각하
'10-02-16	'11-08-09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박○○	기각
'10-02-16	'11-08-09	공인회계사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백○○	기각
'09-12-31	'10-05-18	감봉요구 취소청구	황○○	각하
'09-12-31	'10-08-17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리소스	기각
'09-12-31	'10-08-17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리소스	기각
'09-12-31	'10-08-17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리소스	기각
'09-12-16	'10-04-2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차○○	인용
'09-11-13	'11-08-09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	○○회계법인	기각
'11-11-11	'12-01-10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김○○	각하
'11-10-04	'11-12-06	파생상품업무규정 변경안 승인 취소청구 등	허○	각하
'11-05-31	'11-12-06	임원 개선요구처분 취소청구	김○○	기각
'11-08-31	'12-02-07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김○○	기각*
'11-02-24	취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저축은행	취하

청구일	재결일	사건명	청구인	재결 결과
'10-11-02	'11-08-30	신용정보회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신용 정보	각하
'11-04-12	'11-10-11	공인회계사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정○○	기각
'11-04-12	'11-10-11	공인회계사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이○○	기각
'11-02-14	'11-07-19	신용정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신용 정보	기각
'10-12-07	'11-04-19	신청서류 송부이행청구	노○○	각하
'12-07-13	진행중	금융기관 감사 해임권고 취소청구	문○○	진행중
'12-03-03	'12-05-01	정보공개 이행청구	신○○	각하
'12-02-14	진행중	공인회계사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박○○	진행중
'12-02-13	진행중	공인회계사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고○○	진행중

#### □ 증권선물위원회 처분 관련 행정심판 현황

청구일	재결일	사건명	청구인	재결 결과
'10-08-24	취하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청구	정○○	취하
'10-08-24	취하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청구	이○○	취하
'10-08-24	취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회계 법인	취하
'09-10-23	'10-12-07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기각
'11-08-10	'12-01-03	공인회계사 감사업무 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한○○	기각
'11-08-10	'12-01-03	공인회계사 감사업무 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조○○	기각
'12-05-18	진행중	과징금부과처분등 취소청구	○○공업 (주) 외 2	진행중
'12-05-17	진행중	감리업무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회계 법인	진행중
'12-03-12	진행중	회계감사업무 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회계 법인	진행중

## □ 인용 사건 상세 내역

종결 년도	사건명 (청구인)	사건 개요 및 결정 요지
2010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차○○)	<p>○(주)씨모텍(코스닥 상장기업) 허위공시관련 과징금 부과 기록 일체 정보공개 청구</p> <p>-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검사 및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내용이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공개시 씨모텍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유로 거부 처분</p> <p>○이 사건 정보는 전자정보시스템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초과하지 않고 있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함</p>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

7. 최근3년간 증선위 위원구성 현황 및 위원별 회의  
출석률

8. 최근3년간 증선위 안건 목록 및 2011년 8월31일  
제15차 증선위 정례회의 회의록 사본

□ 최근 3년간 증선위 위원구성 현황 및 위원별 회의  
출석률은 「(붙임1) 증선위 회의 참석자 현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3년간 증선위 안건 목록 및 2011년 8월31일 제15차  
증선위 정례회의 회의록 사본은 「(붙임2)최근3년간  
증선위 안건 목록」과 「(붙임3)2011년 제15차 증선위  
회의록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실적

회차	일자	참 석 위 원				
		위원장	상임위원	최 혁→ 허창수	김문철→ 손성규	조인호
1차	2010.1.6(수)	○	○	○	○	○
2차	2010.1.20(수)	○	×	○	○	○
3차	2010.2.3(수)	○	○	○	○	○
4차	2010.2.24(수)	○	○	○	○	○
5차	2010.3.10(수)	○	○	○	○	○
6차	2010.3.24(수)	○	○	○	○	○
7차	2010.4.13(화)	×	○	허창수 ○	손성규 ○	○
8차	2010.4.28(수)	○	○	○	○	○
9차	2010.5.20(목)	○	○	○	○	○
임시1차	2010.5.26(수)	○	○	○	×	○
10차	2010.6.1(화)	○	○	○	○	○
	2010.6.3(목)	○	○	○	○	○
11차	2010.6.16(수)	×	○	○	○	○
12차	2010.6.30(수)	○	○	○	×	○
13차	2010.7.14(수)	○	○	○	○	○
14차	2010.8.25(수)	×	○	○	○	○
15차	2010.9.8(수)	○	×	○	○	○
	2010.9.17(금)	○	○	○	○	○
16차	2010.10.13(수)	○	○	○	○	○
17차	2010.10.27(수)	○	○	○	○	○
18차	2010.11.10(수)	○	○	○	○	○
19차	2010.11.24(수)	○	○	○	○	○
20차	2010.12.8(수)	×	○	○	○	○
21차	2010.12.22(수)	○	○	×	○	○
참석수(참석률)		20(83%)	22(91%)	최 혁6(100%) 허창수17(94%)	김문철6(100%) 손성규16(88%)	24(100%)

## 2011년 증원선물위원회 회의실적

회차	일자	참 석 위 원				
		위원장	상임위원 (최규연→ 홍영만)	조인호→ 류시관	허창수	손성규
1차	2011년 1월 5일(수)	○	○	○	○	○
2차	2011년 1월19일(수)	○	○	○	○	○
3차	2011년 2월9일(수)	○	○	○	○	○
4차	2011년 2월23일(수)	○	○	×	○	○
임시1차	2011년 2월25일(금)	○	○	×	○	○
5차	2011년 3월 11일(금)	○	○	○	○	○
6차	2011년3월23일(수)	○	공석	○	○	○
7차	2011년4월13일(수)	○	홍영만 ○	류시관 ○	○	○
8차	2011년4월27일(수)	○	○	○	○	○
9차	2011년5월11일(수)	×	○	○	○	○
10차	2011년5월25일(수)	○	○	○	○	○
11차	2011년6월8일(수)	○	○	○	○	○
12차	2011년6월22일(수)	×	○	○	○	○
13차	2011년7월13일(수)	○	○	○	○	○
14차	2011년8월19일(금)	○	○	○	○	○
15차	2011년8월31일(수)	○	○	○	○	○
16차	2011년9월16일(금)	○	○	○	○	○
17차	2011년9월28일(수)	○	×	○	○	○
18차	2011년10월12일(수)	○	○	○	○	○
19차	2011년10월26일(수)	○	○	○	○	○
20차	2011년11월9일(수)	×	○	○	○	○
21차	2011년11월23일(수)	○	○	○	○	○
22차	2011년12월7일(수)	○	○	○	○	○
23차	2011년12월21일(수)	○	○	○	○	○
참석수(참석률)		21(87%)	최규연:6(100%) 홍영만:16(94%)	조인호:5(71%) 류시관:17(100%)	24(100%)	24(100%)

## 2012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실적

회차	일자	참 석 위 원				
		위원장	상임위원 (홍영만→ 유재훈)	허창수	손성규	류시관
1차	2012년1월6일(수)	○	○	○	○	○
2차	2012년1월18일(수)	○	○	○	○	○
3차	2012년2월1일(수)	○	○	○	○	○
4차	2012년2월15일(수)	○	○	○	○	○
5차	2012년2월29일(수)	○	○	○	○	○
임시1차	2012년3월9일(금)	○	○	○	○	○
6차	2012년3월14일(수)	○	유재훈 ○	○	○	○
7차	2012년3월28일(수)	○	○	○	○	○
	2012년3월30일(금)	○	○	○	○	○
8차	2012년4월13일(금)	○	○	○	○	○
	2012년4월16일(월)	○	○	○	○	○
9차	2012년4월25일(수)	○	○	○	○	○
10차	2012년 5월9일(수)	○	○	○	○	×
11차	2012년 5월23일(수)	○	○	○	○	○
12차	2012년 6월13일(수)	○	○	○	○	○
13차	2012년 6월27일(수)	○	○	○	○	○
14차	2012년 7월11일(수)	○	○	○	○	○
15차	2012년 8월17일(금)	×	○	○	○	○
16차	2012년 8월29일(수)	×	○	○	○	○
참석수(참석률)		17(89%)	홍영만:6(100%) 유재훈:13(94%)	19(100%)	19(100%)	18(94%)

# 2010년 증권선물위원회 목록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1월6일	제1차	의결 안건	1	(주)코람코자산신탁의 출자승인·대주주 요건심사대상 제외 인정 및 (가칭)(주)코람코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	(주)유타엑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	(주)스타맥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4	(주)위너스인프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5	(주)하이스마텍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6	(주)케이에스리소스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	(주)신지소프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8	태광관광개발(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조치안
			9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0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010년1월20일	제2차	의결 안건	11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2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3	○○○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4	○○○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5	(주)트라이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	(주)유타엑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1	2009년도 하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	기업회계기준서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 제정결과 보고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3	2009년도 감사인 선임 및 지정결과 보고
2010년2월3일	제3차	의결 안전	23	(주)○○○ 감리조치 관련 ○○○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24	○○○(주)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
			25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6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7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8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010년2월24일	제4차	의결 안전	2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	○○○(주), (주)○○○,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7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0	(주)○○○ 등 1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2	○○○ ELW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3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등에 대한 조치안
			44	(주)일공공일안전컨택트(舊 (주)엔블루와이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45	한국자산신탁(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46	(주)다올신탁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47	(가칭)(주)코람코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48	(가칭)파인트리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49	○○○및 ○○○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50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51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52	○○○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53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과의 합병 승인안
			54	○○○(주)과 ○○○(주)의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안
2010년3월10일	제5차	보고 안전	4	2009년도 불공정행위신고에 대한 표상금 지급결과 보고
		의결 안전	55	아시아신탁(주)의 인가조건 변경승인안
2010년3월24일	제6차	의결 안전	56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57	(가칭)노루라이화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58	트러스트자산운용(주)의 인가조건 변경승인안
			59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60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61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62	(주)중앙디자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3	(주)지오엠씨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4	(주)쓰리소프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5	(주)솔라엔텍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6	(주)모리소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7	(주)카이시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8	(주)위너스인프라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9	(주)바이오하이테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2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75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7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8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9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80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81	㈜○○○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82	㈜○○○의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83	㈜○○○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2010년4월13일	제7차	보고 안전	5	2010년도 감리실시 및 선정계획 보고
		의결 안전	84	○○○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과의 영업양수도 승인안
			85	한국에탁결제원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86	한국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87	한국에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88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8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9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9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9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9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94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95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96	㈜재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97	코디콤(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98	스멕스(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99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0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4월28일	제8차	의결 안건	10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2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0	○○○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1	(가칭)캡스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12	(가칭)지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13	솔로몬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1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15	하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16	○○○의 금융투자업 폐지 및 해산 승인안
2010년5월20일	제9차	의결 안건	117	(가칭)제이피에셋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18	(가칭)피에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19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20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21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22	○○○의 ○○○ 대주주 변경 및 출자승인안
			123	○○○의 ○○○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
			124	○○○의 ○○○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
			12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26	2010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등 선정안
			127	2009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기업집단 인정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128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29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0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1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2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3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보고 안전	6	2009사업연도 중 결합대상계열회사 변동보고
			7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감리 처리결과 보고
2010년5월26일	임시1차	의결 안전	134	네오세미테크(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10년6월1일	제10차	의결 안전	135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6	(주)정원엔시스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7	해원에스티(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8	(주)고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9	(주)코어비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40	(주)퓨처인포넷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41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42	엘엔지특수전선(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4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6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7	삼원테크(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8	(주)오라바이오텍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9	(주)엘림에듀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50	(주)이룸텍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51	페이퍼코리아(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52	(주)케이에스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6월16일	제11차	의결 안건	153	엠씨티티코어(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54	(주)태창파로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55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156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57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58	○○○의 증권업 허가조건 취소 및 대주주 변경 승인안
			159	(가칭)한맥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60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운용(주)의 인가조건 취소 승인안
			161	마이어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16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163	(주)코다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64	동산진흥(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65	(주)아이디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66	(주)이엔텍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7	(주)모비딕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68	(주)이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69	(주)회춘디앤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70	(주)에버리소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010년6월30일	제12차	의결 안건	17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2	(주)○○○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6	(주)중앙디자인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77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8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7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7월14일	제13차	의결 안전	180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81	○○○의 ○○○ 관련 제한완화 승인안
			182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83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84	(가칭)지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85	(가칭)베스타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6	(가칭)(주)알에이케이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7	(가칭)아주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8	아시아신탁(주)의 대주주변경 승인안
			189	(주)단성일렉트론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90	(주)투미비티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91	(주)제로원인터랙티브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92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93	(주)지케이파워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4	(주)포네이치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5	(주)제네시스엔알디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6	(주)이루넷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7	(주)현대금속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8	(주)삼지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9	(주)에이스일렉트로닉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0	우리담배판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1	(주)에스피코프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2	(주)아구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8	2010년도 상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10년8월25일	제14차	의결 안건	210	금산법 제24조 운용규제 개선방안
			211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2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213	한국에탁결제원 증권등에탁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14	○○○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15	○○○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안
			216	○○○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안
			217	○○○의 금융투자업 폐지승인안
			218	키움증권(주)의 (가칭)키움자산운용(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및 (가칭)키움자 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19	(가칭)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의 금융투자업 겸영 인가안
			220	하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21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2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8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30	삼원테크(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31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232	(가칭)베스타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9월8일 2010년9월17일	제16차	의결 안전	233	(가칭)㈜말에이케이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34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35	○○○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 인가안
			23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237	㈜포네이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38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39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0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1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2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4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5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6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8	㈜세라텍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9	오펜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0	㈜폴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1	에이스하이텍(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2	㈜서광건설산업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3	태창기업(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4	㈜단성일렉트론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5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6	㈜유비프리시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57	㈜진성티이씨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58	㈜삼성수산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59	㈜○○○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60	정우개발(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35	(주)유평터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61	(주)하이력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62	(주)000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63	스맥스(주)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신우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치의 일 부취소안
			264	(주)중앙오션(舊 (주)메가바이온)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안
			265	(주)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66	(주)전산텍스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67	(주)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68	한국섬배(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69	(주)위지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보고 안전	9	주총 참석요구 불응한 감사인 징계요청 처리보고
2010.10.13	제16차	의결 안전	270	(가칭)한주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간안
			271	(주)000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72	(주)사이버페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안
			273	(주)000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74	(주)에듀아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75	두울산업(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76	효자산업(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77	(주)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78	000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79	000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80	000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81	000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82	000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에 대한 제정결과 보고

일자	회사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보고 안전	1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 확정급여자산 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1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대한 제정결과 보고
			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및 시행일과 경과규정'에 대한 제정결과 보고
2010.10.27	제17차	의결 안전	283	동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284	○○○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285	○○○의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안
			28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287	(주)에피밸리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88	(주)유비트론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89	(주)피에스앤지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0	(주)엘앤씨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1	(주)루멘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2	(주)한국자원투자개발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3	(주)○○○등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11월10일	제18차	의결 안전	30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6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의 대주주변경 승인안
			307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308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09	한국말콤산업(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310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개정안
			311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
			312	(주)씨엘앤티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313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314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315	○○○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안
			316	○○○의 금융투자업 조건변경안
			317	○○○의 금융투자업 조건변경안
		보고 안전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고
			19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감리 처리결과 보고
			318	(가칭) 키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19	○○○(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320	○○○(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32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2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23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2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25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26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2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28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11월24일	제19차	의결 안전	329	유리이에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30	(주)마이크로로봇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31	(주)케이알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32	(주)코다코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33	네오웨이브(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34	코더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35	(주)보흥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36	(주)도원기술단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37	하이셀(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3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39	(주)○○○등 4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2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4	(주)○○○ 및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7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1	동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52	○○○의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안
			353	○○○의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안
			354	○○○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55	○○○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안
			356	○○○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12월8일	제20차	의결 안건	357	○○○의 ○○○에 대한 출자승인안
			358	(주)메카포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359	(주)에스브이에이치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360	한국전파기지국(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361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362	(주)네이처글로벌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363	(주)유성티에스아이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364	테스텍(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365	(주)스마트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66	(주)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367	(주)서일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68	(주)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69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70	(주)서울상호저축은행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371	금호타이어(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372	신우회계법인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
			373	○○○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10년12월22일	제21차	의결 안건	374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7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7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4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7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7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7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1	분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 개정안
			20	기업회계기준서 제105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개정결과 보고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보고 안전	2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2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2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2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 2011년 증권선물위원회 목록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1년1월5일	제1차	의결 안건	1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011년1월19일	제2차	의결 안건	2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5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6	한국예탁결제원 외화증권예탁및결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	〇〇〇의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안
			8	〇〇〇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9	엔에이치투자선물(주)의 인가조건 취소안
			10	(주)〇〇〇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11	삼화전기(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2	(주)알이네트웍스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
			13	(주)〇〇〇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
			14	(주)로엔케이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5	(주)〇〇〇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6	(주)〇〇〇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	(주)〇〇〇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	(주)〇〇〇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9	(주)〇〇〇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	(주)〇〇〇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	(주)〇〇〇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	(주)〇〇〇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3	(주)〇〇〇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	(주)〇〇〇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	(주)〇〇〇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보고 안건	26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	2010년도 하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	2010년도 감사인 선임 및 지정 결과 보고
2011년 02월 09일	제3차	의결 안건	27	○○○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28	다이와증권 캐피탈마켓㈜ 서울지점의 인가조건 취소안
2011년 02월 23일	제4차	의결 안건	29	2010.11.11. 옵션만기일 KOSPI200 구성종목 및 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	(가칭)아주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1	에스케이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2	○○○과 ○○○의 합병승인 및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3	○○○의 ○○○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
			3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6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8	○○○ 등 ○○○ 20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0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11년 02월 25일	임시 제1차	의결 안건	41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2	○○○(주) 및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3	○○○(주) 외 ○○○ 주식에 대한 불공정고래 조사결과 조치안
			44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5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6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7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8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9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0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51	(주)히스토시스템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52	(주)셀런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53	(주)스튜디오에프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54	(주)브이에스에스티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55	(주)다휘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56	하이셀(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011년3월11일	제5차	의결 안건	57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58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59	○○○의○○○에 대한 출자승인안
			60	○○○의 ○○○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
			61	○○○의 ○○○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
			62	(주)손오공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63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64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65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66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67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보고 안건	3	2011년도 감리실시 및 선정계획 보고
2011년3월23일	제6차	의결 안건	68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6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7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4	2010년도 불공정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과 보고
2011년4월13일	제7차	의결 안건	79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80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81	○○○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안
			82	네오세미테크(주)의 분반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83	(주)소예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84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85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86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87	(주)버쉴솔루션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011년4월27일	제8차	의결 안건	88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89	○○○(주)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조치안
			90	(주)에이스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9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3	○○○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03	우원개발(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04	(주)제네시스엔알디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05	유니모씨앤씨(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06	(주)국제건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07	(주)○○○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 등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2011년5월11일	제9차	의결 안건	108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0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10	한국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111	○○○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112	(주)신종제약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13	진흥기업(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14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15	게임하이(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16	(주)알앤엘바이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011년 5월25일	제10차	의결 안건	117	(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18	(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19	(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20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2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22	(주)○○○등 6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23	(주)○○○ 등 6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2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2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26	○○○등 ELW 30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27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28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29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130	와이즈에셋자산운용(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31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2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3	신한회계법인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4	2011 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등 선정안
			135	코오롱의 2010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 인정안
2011년6월8일	제11차	보고 안전	5	2010 사업연도 중 결합대상 계열회사 변동 보고
		의결 안전	136	(가칭)코스모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37	(가칭) 프런티어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38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주)의 인가조건 취소안
			139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14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2011년6월22일	제12차	의결 안전	141	한국자산신탁(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14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4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44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14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4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47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48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49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50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51	○○○의 금융투자업 조건변경안
			152	○○○의 금융투자업 폐지승인안
			15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1년 7월 13일	제 13차	의결 안건	156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7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8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9	아이엔지리얼이스테이트자산운용(주)의 인가조건 취소 및 대주주변경 승인안
			160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161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 품질관리감리 업무규정 중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162	토자이홀딩스(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63	(주)청주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64	(주)와이케이공삼팔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65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66	삼원철강산업(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67	(주)큐앤에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심의자료
			168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69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70	(주)취영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171	(주)남해종합건설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72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73	(주)라비돔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74	○○○의 ○○○에 대한 출자승인안
		보고 안건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8월 19일	제 14차	의결 안건	175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76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77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78	○○○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179	(가칭)프런티어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1년8월31일	제15차	의결 안건	180	(주) 다원텍과 소프트포럼(주)의 피닉스자산운용(주) 대주주 변경승인 위반관련 조치안
			181	한화투자신탁운용(주)과 푸르덴셜자산운용(주)의 합병 인가안
			182	마이애셋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183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주)의 인가조건 취소안
			184	공인회계사 ○○○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185	○○○회계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186	공인회계사 ○○○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187	○○○(주) 증권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188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18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19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19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192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19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19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19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196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197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198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19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0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0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02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0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04	(주)부산저축은행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5	(주)보광티에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6	(주)포휴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7	(주)뉴젠아이씨티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8	알티전자(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9	(주)오라바이오텍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10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등 전면 개편방안
		보고 안전	9	2011년도 상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11년9월16일	제16차	의결 안전	211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12	(주)한미개발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13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14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15	(주)오뚜기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216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217	○○○(주)의 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18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19	(주)임동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20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21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22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23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24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보고 안전	10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감리 처리결과 보고
			1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한 개정 결과 보고
			225	○○○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226	○○○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227	○○○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28	(주)○○○주식에 대한 불공채거래 조치안
			229	(주)○○○주식에 대한 불공채거래 조치안
			230	(주)○○○주식에 대한 불공채거래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1년9월28일	제17차	의결 안건	231	○○○㈜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32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3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3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35	(주)코리아본뱅크의 신고·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
			236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37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38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011년10월12일	제18차	의결 안건	239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40	○○○의 금융투자업 조건변경안
			241	○○○ 일부개정 규정안
2011년10월26일	제19차	의결 안건	242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43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4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4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46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24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248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4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5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5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52	○○○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5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54	○○○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5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56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257	(주)○○○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58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25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260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26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262	아진산업(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63	주토토저축은행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64	주스마트저축은행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65	아트원제지(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66	엠벤처투자(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67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68	주삼양옵텍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69	한솔제지(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70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71	주이스타에프앤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72	폴리비전(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011년11월9일	제20차	의결 안전	273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74	(가칭)코스모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75	주디테크놀로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011년11월23일	제21차	의결 안전	276	○○○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과의 영업양수도 승인안
			277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278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28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28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28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284	주○○○ 등 13개 종목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28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28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1년12월7일	제22차	의결 안건	28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28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28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290	제일창업투자(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91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93	(주)해파호프코리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94	(주)한글과컴퓨터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95	(주)대양글로벌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96	(주)에스에이앤아이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97	(주)유일엔시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98	(주)에스씨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99	(주)엘앤피아너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00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301	○○○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302	○○○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안
			303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04	한국에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0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0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07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08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0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27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31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31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31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31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1년12월21일	제23차	의결 안건	314	○○○㈜등 23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315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316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317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318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319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281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320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321	㈜○○○ ELW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322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323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324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325	㈜○○○ 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292	㈜아인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1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대한 개정 결과 보고
			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제정 결과 보고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2012년 증권선물위원회 목록

일자	회차	안건 유형	제 목
2012년1월6일	제1차	의결 안건	동아타이어공업(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경은저축은행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세종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더존이앤씨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012년1월18일	제2차	의결 안건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가칭)카이로즈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채거래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채거래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채거래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채거래 조치안
			○○○(주)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채거래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채거래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채거래 조치안
			○○○ 등 25개 ELW에 대한 불공채거래 조치안
			(주)○○○ 등 2개 종목 주식에 대한 불공채거래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채거래 조치안
			(주)지엔텍홀딩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더존비즈온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아이디엔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삼화상호저축은행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2011년도 감사인 선임 및 지정결과 보고

일자	회차	안전 유형	제 목
2012년2월1일	제3차	의결 안전	(주)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신민상호저축은행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도민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주)블루젬디앤씨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미스터피자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동양시멘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벽산건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인선이엔티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000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2012년2월15일	제4차	의결 안전	000(주)등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주)000 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000 등 20개 주식워런트증권의 불공제거래 조치안
			(주)000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주)000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주)000 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주)000 주식에 대한 불공제거래 조치안
			000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000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보고 안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1년도 하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11년도 불공정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과 보고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과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의 합병 인가안
			마이여자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000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000 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000 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제 목
2012년2월29일	제5차	의결 안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회계법인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회계법인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주)삼우이엠씨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드로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대성회계법인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회계법인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전	○○○회계법인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결과 보고
2012년3월9일	임시 제1차	의결 안전	○○○(주) 등 8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등 30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12년3월14일	제6차	의결 안전	한국에탁결제원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
			○○○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주)엔티피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보고 안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감리 처리결과 보고

일자	회차	안건 유형	제 목
2012년3월28일 2012년3월30일	제7차	의결 안건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한국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주) 등 3개사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치안
			(주)대국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회계법인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회계법인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주)아티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감리 처리결과 보고
			한국자산신탁(주)의 (가칭)(주)KAIT캐피탈에 대한 출자승인안
			글로벌리더스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주)아이비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천지인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굿모닝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제 목
2012년4월13일 2012년4월16일	제8차	의결 안건	○○○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서한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등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등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등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회계법인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회계법인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주)스름이앤에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아인스엠앤엠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씨티엔티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아이알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보고
			한국에탁결제원 증권등에탁업무규정 및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주)○○○ 등 17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등 52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등 2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제 목
2012년4월25일	제9차	의결 안전	(주)○○○ 등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12년5월9일	제10차	의결 안전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유아이에너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회계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주)피에스엔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대한전선(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디에이치패션(구 대한종합상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쌍용양회공업(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보고 안전	공사채등특별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2년5월23일	제11차	의결 안전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결과 보고
			2011사업연도 중 결합대상계열회사 변동보고
			○○○(주)과 ○○○(주)의 합병 승인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제 목
2012년6월13일	제12차	의결 안건	○○○(株)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株)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株)수성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자본시장불공정거래 조사 개선 방안
2012년6월27일	제13차	의결 안건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株)000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株)000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株)000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株)신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금융회사 회계요류 수정관련 감경 운영방안
2012년7월11일	제14차	의결 안건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株)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株)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株)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 실시안
			○○○(株), ○○○(株)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株)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株)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보고 안건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 마련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제 목
2012년8월17일	제15차	의결 안건	한국에탁결제원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주)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취소 등 조치안
			○○○(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12년8월29일	제16차	의결 안건	○○○(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주)에 대한 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반도산업(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큐리어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등 13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 등 22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주)○○○후순위채 매출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11. 8. 31.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8월 31일(수) 15:25 ~ 17:45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위원장	신 제 윤
-----	-------

위원	홍 영 만
----	-------

위원	허 창 수
----	-------

위원	손 성 규
----	-------

위원	류 시 관
----	-------

#### 4. 회의경과

##### 가. 개 회

성원이 됨에 따라 위원장은 2011년도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하고 2011년도 제15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

##### 나. 의결안건 심의

- ☐ 의안 제183호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주)의 인가조건 취소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 의안 제184호 『공인회계사 ○○○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본인은 회사의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실히 검토하였으며, 감사과정에서 회사가 감사인을 압박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는 등 감사인으로서 정당한 주위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함]

- 이의신청인이 당초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함

(사전조치 통지서상의 조치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진술하지 않았다고 답변)

- 감사인의 이의신청 내용이 원조치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통상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원조치를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유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짐

⇒ 수정 의결함\*

\*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수정

- 의안 제185호 『○○○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186호 『공인회계사 ○○○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독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187호 『○○○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건설은 이 건 CP의 발행 이전에는 회생절차 신청을 검토한 바 없으며 Q&A 자료에 허위 기재내용이 없다는 점, 그룹 및 대주주 측은 ○○○건설의 CP 발행 및 Q&A 자료 작성에 관여한 바 없고 회생절차 신청을 미리 결정한 바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함]

- 그룹 측은 ○○○건설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질의함

(3월 중순경에 동사의 심각한 자금 사정을 인지하였다고 답변)

- ○○○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질의함

(CP를 발행하고 난 이후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불가피한 수순을 밟게 된 것이라고 답변)

- 그룹 회장의 2세 중에 ○○○건설의 경영에 관여한 자가 있었는지 및 그의 담당업무에 대하여 질의함

(둘째 자제가 부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인사·총무·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월에 퇴임하였다고 답변)

- ○○○건설은 올해 1월부터 급격한 재무상태 악화로 인해 그룹의 자금지원 및 CP 발행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 그룹 회장 등이 동사의 경영·자금을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P의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고 금융회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CP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 결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짐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188호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의안 제189호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의안 제190호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의안 제191호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 의결함

- 상장폐지 및 우회상장, 전력자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인 경우 조사실시 순위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의안 제192호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의안 제193호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의안 제194호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의안 제195호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 의결함

- 의안 제196호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귀 원에서 시세조종 동기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합병절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이며, 실무자에게 주식 매수를 부탁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과정에서 평소 거래량이 많지 않던 주식을 매수주문함에 따라 호가단위가 큰 폭으로 변동한 것이지 본인은 구체적인 매매가격, 매매수량, 매매방법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함]

※ 첫 번째 진술인 퇴장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금번 주식 거래는 금전 이익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방어 등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본인이 거래한 행위가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당시에는 주식거래에 대한 경험미비와 지식부족 등 무지로 인해 알 수 없었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함]

※ 두 번째 진술인 퇴장

- 우회상장 과정에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고 보유지분을 고가로 매각하기 위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점, 합병 후 기존 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사전에 체결하고도 증권신고서 등에 고의로 기재를 누락한 점, 혐의자들이 최초 문답과정에서 주가관리를 하였다고 시인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한 정황 등을 미루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를 한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짐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197호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의안 제198호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의안 제199호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의안 제200호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 의결함

- 의안 제201호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의안 제202호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의안 제203호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 의결함

- 의안 제204호 『(주)부산저축은행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의안 제205호 『(주)보광티에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의안 제206호 『(주)포휴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의안 제207호 『(주)뉴젠아이씨티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의안 제208호 『알티전자(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의안 제209호 『(주)오라바이오텍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 의결함

- 의안 제210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등 전면 개편방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다. 보고안전 심의

- ☐ 보고안전 제9호 『2011년도 상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조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접수함

#### 라. 폐 회

2011년도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 정 호 준 의원(민주통합당)

### 9. 금융위원회(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재산변동 내역

- 최근 3년간 '정기변동사항 제출'

#### □ 금융위 1급 이상 공직자 재산 정기변동신고 내역

직위	직급	이름	최근 3년간 정기변동신고내역	승진 및 임용
위원장	장관	김석동	2011.12.31	'11.1월 위원장
부위원장	차관	추경호	2010.12.31 2011.12.31	'10.5월 고공단 가급 '11.9월 부위원장
금융위 상임위원	고공단 가급	홍영만	2010.12.31 2011.12.31	'10.5월 고공단 가급
금융위 상임위원	고공단 가급	이상제	2011.12.31	'11.3월 고공단 가급
증선위 상임위원	고공단 가급	유재훈	해당없음	'12.3월 고공단 가급
사무처장	고공단 가급	정은보	해당없음	'12.7월 고공단 가급
금융정보 분석원장	고공단 가급	박재식	해당없음	'12.2월 고공단 가급

#### □ 정기변동공개내역 : 별도제출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

10. 최근 3년간 각 금융공공기관의 보유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청와대, 기재부, 총리실 등 다른 부처로부터 받은 공문, 또는 금융공공기관에게 발송한 공문

☐ 붙임 참조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 농림수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현물출자 협조 요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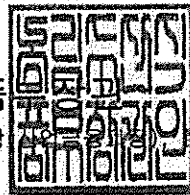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는 농협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되고, 농협중앙회의 각 사업부분 별 전문성·책임성이 제고되며,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되도록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여 '11.3.11일 농협협동조합법을 개정하였고('11.3.31일 공포), 이에 따라 '12.3.2 일에 농협중앙회가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3. 이관 관련, 국회심의,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자본 5조원을 농협에 지원키로 하였으며, 그중에서 4조원은 이차보전 방식, 1조원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4. 이에 귀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농협에 현물출자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물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출자관리과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정책임공공이사장)

농업사무관

홍인기

농업금융정책 2012. 4. 20.

책과장 박범수

참조자

시행 농업금융정책과-1680 (2012. 4. 20.) 접수 산업금융과-578 (2012. 4. 23.)

우 427-719 경기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물부농업 / <http://www.miffaff.go.kr>  
금융정책과

전화번호 02-500-1742, 팩스번호 02-503-7259 / [hong2522@miffaff.go.kr](mailto:hong2522@miffaff.go.kr) / 비공개(2)  
2261

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

### 11. 녹색금융 관련 정책금융기관별 지원실적 현황

□ 정책금융기별 녹색기업 금융지원 실적은 아래와 같음

단위 : 개, 억원(잔액기준)

지원기관		지원현황			
		대기업수	대기업 지원액	중소기업수	중소기업 지원액
산은	2011년 6월	3	2,420	7	708
	2012년 6월	26	3,156	87	3,130
기은	2011년 6월	-	-	2,978	11,837
	2012년 6월	-	-	3,504	14,018
신보	2011년 6월	1	27	8,962	42,497
	2012년 6월	2	13	13,969	76,286
기보	2011년 6월	-	-	2,341	14,746
	2012년 6월	-	-	3,687	20,846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

**12.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의 업권별 재취업 현황**

☐ 금융위 출범(2008.3) 이후 업권별 재취업 현황

업권별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기타*	합계
재취업자 수	1명	5명	-	1명	44명	51명

\* 금융 관련 협회, 공공기관 및 법무법인 등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

**13. 한·벨 투자협정분쟁 자문과 관련, Arnold & Porter LLP, 법무법인 태평양에게 의뢰한 자문내역 및 자문보고서 1부**

□ 국제투자분쟁이 시작되었고 우리 정부는 이미 분쟁 대응체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바,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향후 중재에서 사용될 증거자료 중 하나로서 공개될 경우 정부의 대응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 향후 중재 절차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출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

### 14. 금융위원회의 '11.11월 이후 연구용역 목록

#### 기획재정담당관실

#### □ '11. 11월 이후 연구용역 목록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1	청년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방안	11.12.22~ '12.04.21	금융연구원 (구본성)	30 (이월)
2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2.04.06~ 12.06.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20
3	ELS 및 DLS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12.04.24~ 12.09.23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26
4	고령화 대비 공·사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12.04.30~ 12.08.31	보험연구원 (김대환)	30
5	금융세계 현황 및 발전 방향	12.05.04~ 12.08.31	금융연구원 (연태훈)	30
6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12.05.18~ 12.10.31	한국채권연구원 (박창균)	39
7	기업공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2.05.25~ 12.08.23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35
8	대학생 고금리 대출 이용 실태조사	12.06.08~ 12.07.07	한국갤럽연구소 (박병일)	10
9	주요 신흥국과의 전략적 금융 협력 강화 방안	12.06.25~ 12.10.31	대외경제연구원 (강대창)	26
10	금융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12.07.06~ 12.10.05	한국재정학회 연세대 산학협력단 서강대 산학협력단 (원윤희 외 3명)	20
11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12.07.17~ 12.11.20	금융보안연구원 (김영태)	40
12	공시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향	12.07.26~ 12.11.26	한국연금학회 (신성환)	30
13	대부업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 방안	12.07.30~ 12.10.29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20
14	가계부채 미시분석	12.08.16~ 12.11.15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40
15	핵·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금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12.08.20~ 12.12.20	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35

## 금융분쟁대응팀

### □ '11. 11월 이후 법률자문 목록

연 번	담당부서	계약내용	계약 체결일	계약자
1	은행과	한·벨 투자협정분쟁 자문	2012.8.1	Arnold & Porter LLP
2	은행과	한·벨 투자협정분쟁 자문	2012.6.29	법무법인 태평양

정호준의원(민주통합당)

15. 최근 3년간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연구용역과  
관련한 기안서 및 예산지급명세서, 결과보고서  
각 1부

□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관련 연구용역 및 결과보고서 :  
별도제출

① 「금융능력 및 이해도에 대한 실태조사」

②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e-book으로 게시

③ 「금융교육 중장기 비전」

□ 관련 기안서·예산지급명세서 : 별첨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



## 금융위원회



수신자 행정인사과장  
(경유)

제목 일반용역 계약체결 의뢰

---

금융교육 내실화를 위한 금융능력 및 금융이해도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과 제 : 금융능력 및 금융이해도 조사
2. 일반용역 수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천규승 박사)
3. 일반용역 수행기간 : 10년 6월 10일 ~ 11년 8월 10일
4. 용 역 비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수의계약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수의계약사유서 1부  
3. 연구용역계약서 1부  
4. 연구용역산출내역서 1부. 끝.

## 금융소비자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금융소비자과 전결 06/09  
과장

협조자

시행 금융소비자과-527

접수

우 15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번지 금융위원회 금융  
소비자과 / <http://www.fsc.go.kr>  
전화 02-2156-9777 전송 02-2156-9769 / [ljh109@korea.kr](mailto:ljh109@korea.kr) / 비공개(5)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



## 금융위원회



수신자 행정인사과장  
(경유)

제목 일반용역대금 지급요청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금융능력 및 금융이해도 조사」에 대한 일반용역을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대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반용역명 : 금융능력 및 금융이해도 조사
- 용역계약자 : 한국개발연구원(대표:현오석)
- 용역 기간 : 2011년 6월 10일 ~ 2011년 8월 10일
- 지급청구일 : 2011년 8월 10일
- 청구 금액 : 금 사천만원정 (40,000,000원/ VAT 포함)
- 예산과목 : 014-1100-1131-303-210-01(금융소비자보호)

- 붙임
1. 관련 문서 사본(공문 및 세금계산서 등) 1부.
  2. 검수조서 1부.
  3. 최종보고서(별첨). 끝

## 금융소비자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금융소비자과 전결 09/06  
과장

협조자

시행 금융소비자과-709

접수

우 15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번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 <http://www.fsc.go.kr>

전화 02-2156-9777

전송 02-2156-9769

/ [ljh109@korea.kr](mailto:ljh109@korea.kr)

/ 비공개(5)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하나 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 2011 을지연습



## 금 융 위 원 회



수신자 행정인사과장  
(경유)

제목 일반용역 입찰공고 의뢰 및 계약체결 요청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일반용역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조달청 입찰공고 의뢰 및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사 업 명 :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4개월간
- 다. 소요예산 : 금 7천만원(부가세포함)
- 라. 예산과목 : 금융정책지원-금융소비자 보호(014-1100-1131-303-210-01)
- 마.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붙임 1. 과업지시및제안요청서 1부  
2. 연구용역산출내역서 1부. 끝.

## 금융소비자과장

행정사무관

금융 소비자 과 전결 08/01  
과장

협조자

시행 금융소비자과-639

접수

우 15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번지 금융위원회 금융 / <http://www.fsc.go.kr>  
구조개선과

전화 02-2156-9766 전송 02-2156-9459 / [dh5750@korea.kr](mailto:dh5750@korea.kr) / 비공개(5)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



## 금융위원회



수신자 행정인사과장  
(경유)

제목 일반용역대금(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지급요청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일반용역을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대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반용역명 :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 용역계약자 : 한국개발연구원(대표:현오석)
- 용역기간 : 2011년 9월 21일 ~ 2011년 12월 10일
- 청구금액 : 금 육천만원정 (60,000,000원/ VAT 포함)
- 예산과목 : 014-1100-1131-303-210-01(금융소비자보호)

- 붙임 1. 관련 문서 사본(공문 및 세금계산서 등) 1부.  
2. 검수조서 1부.  
3. 최종보고서(별첨). 끝

## 금융소비자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금융소비자과 전결 12/15  
과장

협조자

시행 금융소비자과-932

접수

우 15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여의도동)

/ <http://www.fsc.go.kr>

전화 02-2156-9777

전송 02-2156-9769

/ [ljh109@korea.kr](mailto:ljh109@korea.kr)

/ 비공개(5)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



## 금융위원회



수신자 행정인사과장  
(경유)

제목 연구용역(금융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계약기간 연장 요청

상기 연구용역에 대한 추가적인 과업지시 수행을 위해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구용역명 : 금융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 수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계약금액 : ₩25,000,000원)
- 계약기간연장 : 1개월 연장

※ 기존( '11.07.26.~ '11.10.31.) → 변경( '11.07.26.~ '11.11.30.) 끝.

## 금융소비자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금융소비자과 전결 10/31  
과장

협조자

시행 금융소비자과-818

접수

우 15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여의도동)

/ <http://www.fsc.go.kr>

전화 02-2156-9777

전송 02-2156-9769

/ [ljh109@korea.kr](mailto:ljh109@korea.kr)

/ 대국민공개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



## 금융위원회



수신자 행정인사과장  
(경유)

제목 연구용역대금 지급요청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금융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용역 대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구용역명 : 금융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 용역계약자 : 한국개발연구원(대표:현오석)
- 발 주 일 : 2011년 7월 26일
- 지급청구일 : 2011년 11월 30일
- 청구금액 : 금 이천오백만원정 (25,000,000/ VAT 포함)
- 예산과목 : 014-7100-7135-302-260-00(정책연구개발)

- 붙임 1. 관련 서류(공문 및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2. 검수조서 1부.  
3. 최종보고서(별첨). 끝

### 금융소비자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금융소비자과 전결 12/08  
과장

협조자

시행 금융소비자과-907

접수

우 15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여의도동)

/ <http://www.fsc.go.kr>

전화 02-2156-9777

전송 02-2156-9769

/ [ljh109@korea.kr](mailto:ljh109@korea.kr)

/ 비공개(5)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

**16. 「금융교육 중장기 비전」 마련 사업에 따른 「금융  
평등 배분지수」 개발현황 및 지수조사 결과보고서**

- ☐ 금융역량 평등 지수 개발(안)(‘11.12.)은 붙임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P.102~104)  
(2011.12, 한국개발연구원)

- ☐ 금융역량 평등 지수 개발(안)을 바탕으로, 2013년 금융  
역량 평등 지수를 개발하여, 금융교육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의 중장기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 목적

국민 전체의 금융역량은 어떤 수준이고, 계층 간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여 금융역량 강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척도로 활용

## □ 추진 절차

## 1. 사전 조사

- ① 본 연구에서 제시된 6개 금융생활 영역을 각각 금융 역량을 구성하는 3개 하위 요소로 나누어 18개 부문을 설정하고 각 부문별로 다양한 문항을 전국 규모로 사전 조사하여 그 결과치를 합산하여 표준 금융역량을 산출한다.
- ② 18개 부문의 문항 중 표준 금융역량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아 설명력이 충분한 문항을 선별한다.
- ③ 사전 조사로 선별된 문항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 등의 각종 금융 관련 통계 자료, 금융교육 기관과 단체들의 현장 자료, 그리고 관련 연구 결과를 계량적으로 종합하여 금융역량 평등 지수 측정 문항의 대표성을 보완한다.

## 2. 본 조사

사전 조사 결과의 계량적 대표성 보완으로 대표 문항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본 조사를 실시한다.

- ① 금융역량 평등 지수 측정은 전국 규모로 조사하며 충분한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표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령, 지역, 남녀 비율을 조절한다.
- ② 기타 특성 변수를 포함한다. 기타 특성 변수는 연령, 지역, 성, 소득 정도, 교육수준, 직업 등으로 한다.
- ③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한다.(여건에 따라 분기별, 매년, 격년 등으로 할 수 있다)

## 3. 금융역량 평등 지수 측정 및 평가

가. 측정 문항 개발 및 득점 기준 설정(예)

문1) 지난 1년간 선생님 님의 가게 수입과 지출 상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수입과 지출 영역]

- ① 수입으로 충분히 저축하고 지출도 이루었다(4점)
- ② 수입으로 약간의 저축을 하고 지출을 충분히 하였다(3점)
- ③ 저축은 못하고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었다(2점)
- ④ 저축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여 저축해 놓은 돈을 꺼내어 썼다(2점)
- ⑤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여 빚을 졌다(0점)

문2) 저축예금 계좌에 100만원이 있고 연간 이자율이 2%라고 할 때, 예금을 찾지 않으면 5년 후에 계좌의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저축과 자산관리 영역]

(득점 기준) 정답의 경우 1점, 오답은 0점

이하 생략

나. 금융역량 평등 지수 계산

#### 1) 전체 지수 산출

문1)에 대해 조사 대상 개인의 점수를 파악하고 이를 전체, 연령별, 지역별, 소득계층별, 직업별 등으로 합산한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최대 4,000점, 최소 0점을 얻을 수 있는데 실제 점수가 3,000점이라면 이를 4,000점으로 나눈 0.75가 영역1의 결과치이다.

문2)의 경우 대상자 전원이 정답을 맞추면 1,000점이 되고 모두 틀리면 0점이 된다. 만약 실제 조사 결과가 500점이면 이를 1,000점으로 나눈 0.5가 결과치이다.

전체 지수는 문3)부터 문18)까지 계산하여 그 결과치를 평균한 값(예를 들어  $0.58 = (0.75 + 0.5 + \dots) / 18$ 문항)으로 산출한다.

그러나 단순 평균으로 전체 지수를 산출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역량지수  $= (W_1 0.75 + W_2 0.5 + \dots) / 18$  과 같이 가중치  $W_i$ 를 부여하여 설명력을 높이도록 한다. 가중치는 사전 조사 과정에서 기존 자료, 학술 연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

#### 2) 금융이용자의 특성별 격차 비교

지수의 값은 각 소득 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결과를 이용해 소득계층 간 금융이용 역량의 격차를 살펴 볼 수 있다. 각 분위의 지수가 각각 0.4, 0.5, 0.6, 0.65, 0.8로 나타난다면, 최하 소득계층과 비교할 때의 최상 소득계층의 금융역량은 2배가 된다.

이 예는 연령대별, 성별, 직업별 등 특성별로 적용하여 금융역량의 격차를 비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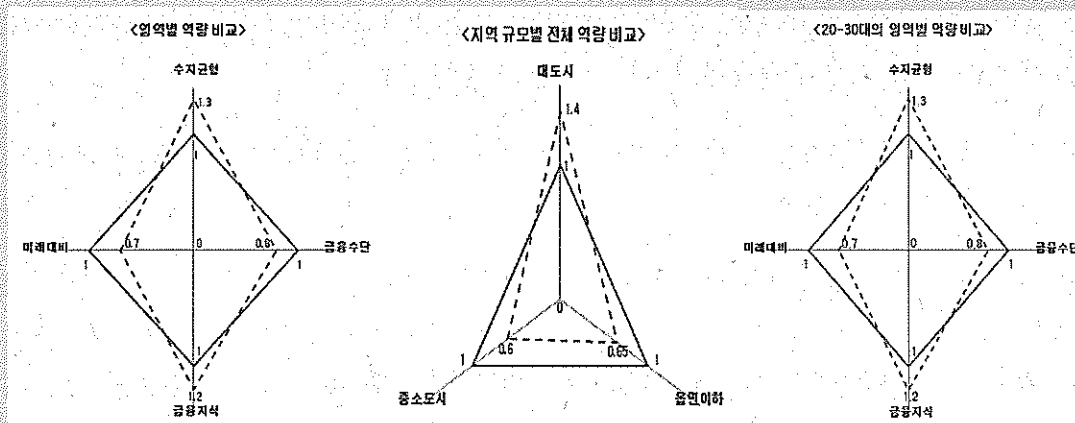
### 3) 영역별 격차 비교

지수의 값으로 금융생활 영역별 격차를 비교할 수도 있으며, 영역별 교차 비교도 가능하다. 즉, 대출 이상 학력의 소득 5분위계층과 중졸 이하 학력의 소득 1분위계층 간의 금융역량 격차를 비교할 수 있다.

#### 다. 금융이용 역량 평등 지수를 활용한 정책적 대응

금융역량 평등 지수의 측정과 여러 가지 격차 비교를 통해 각 계층별로 금융이용 역량 상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정책적으로 적절한 금융역량 강화 사업을 강구할 수 있다. 대도시 지역의 20대, 30대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고 금융지식도 높은 편이어서 주어진 금융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금융생활은 취약하여 이들에게는 미래를 대비해 좀 더 저축하고자 하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든지, 또는 고소득층은 모든 면에서 금융역량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채가 높은 비율이고 금융자산이 수익성 위주로 운용하는 경향이 높아 보다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든지 등의 평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본문의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용 능력 및 이해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면 전체 지수와 해당 영역별(연령층, 또는 소득계층별 등)지수를 모의 산출할 수 있다. 모의 산출 지수를 활용하면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미흡하나마 한정된 범위 내에서 금융역량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상기 조사 결과는 금융생활 영역을 OECD 권고안에 따라 수입지출, 미래대비, 금융수단, 금융지식 등 4부문으로 한정된 것이다. 위의 왼쪽 그림으로는 우리나라 성인 금융역량의 상대적 과부족을 파악한 것이며, 가운데 그림으로는 지역별 격차를, 세 번째 그림으로는 20-30대 연령층의 내적 금융역량의 과부족을 미흡하게나마 파악한 것이다.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

17.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1부

☐ 별첨참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12. 30  
개정 2009. 1. 23  
개정 2009. 2. 26  
개정 2009. 3. 17  
개정 2009. 3. 24  
개정 2009. 5. 29  
개정 2009. 7. 21  
개정 2009. 7. 24  
개정 2009. 8. 28  
개정 2009. 9. 25  
개정 2009. 10. 26  
개정 2009. 10. 27  
개정 2009. 11. 16  
개정 2009. 12. 14  
개정 2010. 1. 14  
개정 2010. 1. 21  
개정 2010. 1. 29  
개정 2010. 2. 26  
개정 2010. 3. 26  
개정 2010. 5. 19  
개정 2010. 6. 13  
개정 2010. 6. 25  
개정 2010. 7. 23  
개정 2010. 9. 2  
개정 2010. 9. 17  
개정 2010. 10. 15  
개정 2010. 10. 21  
개정 2010. 11. 19  
개정 2011. 1. 26  
개정 2011. 2. 16  
개정 2011. 4. 27  
개정 2011. 7. 8  
개정 2011. 7. 28  
개정 2011. 8. 19  
개정 2011. 9. 27  
개정 2011. 10. 27  
개정 2011. 11. 4  
개정 2011. 12. 19  
개정 2012. 1. 17  
개정 2012. 2. 1

개정 2012. 3. 9

개정 2012. 3. 29

개정 2012. 4. 13

개정 2012. 4. 24

개정 2012. 7. 10

## 제1편 총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융투자업규정”이라 한다)에서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수행과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영업 및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영·규칙·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편 공통업무 및 영업행위

### 제1장 투자권유 등

(본장제목개정 2010.10.15)

#### 제1절 투자권유 및 판매관련 규칙

(본절제목개정 2010.10.15)

**제2-1조(목적)** 이 절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중매매거래”란 같은 날에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는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2. “시스템매매”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내재하고 있으면 해당 소프트웨어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도 시스템매매로 본다.
3. “온라인거래”란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컴퓨터 등 유·무선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4. 삭제 <2009.2.26>

**제2-3조(투자자정보의 확인)**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고, 해당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② 삭제 <2010.10.15>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을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투자권유의 적합성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0.15)

② 삭제 <2010.10.15>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④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5)

**제2-5조(설명의무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이조에서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5)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경우 시행령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거래에 대한 설명서는 별표 1부터 별표 6-1까지의 설명서 또는 위험고지를 참조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0.2.26, 2010.10.15)

1. 장내파생상품

2. 해외파생상품거래

2-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영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설 2009.8.28)(개정 2011.7.28)

3. 장외파생상품

4. 외화증권

5. 주식워런트증권

6. 신용거래

7. 신용 파생결합증권(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설 2010.2.26)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을 매매하고자 하거나 신용융자거래 또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제2항제3호의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26, 2009.8.28, 단서신설 2012.3.29)

④ 금융투자회사는 공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이 만기일 또는 최종 환매청구일 이전에 최초로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일반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서신, 전화, 전자우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2. 조기상환조건 및 조기상환시 예상수익률
  3. 환매청구방법, 환매청구기한 및 환매수수료 등
- ⑤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최초로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신청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9)
- ⑥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의 투자설명사항 등이 포함되고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자가 법인·단체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1.19)

**제2-6조(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 고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7의 “일중매매거래 위험고지서”를 참조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온라인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에 제1항의 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시스템매매에 대한 위험 고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별표 8의 “시스템매매 위험고지서”를 참조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스템매매가 반드시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내용
  2.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
-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내재된 가격예측이론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온라인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에 제1항의 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시 금지행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회사(이하 “판매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를 고유재산의 운영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 그 밖에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3.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시하는 행위
4.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회사와 그 임직원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를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회사가 판매회사의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동법 제48조의2제2항의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5)
5. 판매회사의 직원이 집합투자업과 관련된 수탁업무·자산보관업무·일반사무관리업무 또는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겸직하는 행위 (개정 2010.10.15)
6. 판매회사 변경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판매회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그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개정 2010.10.15)
7. 정당한 사유 없이 공모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신설 2010.10.15)
8.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회사에게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회사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사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보다 부당하게 높은 거래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0.10.15)
9.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취득자금 수취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2010.10.15)
  - 가. 판매회사의 임직원 이외의 자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 나. 판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거나 판매회사 또는 임직원이 선납하는 행위
  - 다. 자금의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
10. 일반투자자에게 계열회사등(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가목(2)의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을 투자권유하거나 안내하는 행위 (신설 2012.7.10)

**제2-8조의2(집합투자증권 판매시 준수사항)** ① 판매회사는 영업점에 자금입출 등 통상적인 창구와 구분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 및 판매 등 집합투자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창구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다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판매나 계약의 체결, 기타 서비스 제공 등과 연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되거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이 아닐 것
2. 펀드투자상담사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 투자권유를 할 것
3. 투자자에게 환매제한 등의 부당한 제약을 가하지 아니할 것
4. 집합투자증권의 실적배당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③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 판매가 관계법규 및 자신이 마련한 투자권유준칙(이하 이 조에서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는 판매회사의 인력현황 및 판매건수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판매회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회사는 투자권유를 한 임직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실적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실적 평가시 관계법규등의 준수 여부 및 민원발생 여부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판매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거래를 통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시 일반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투자의 적합 또는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0.10.15]

⑦ 판매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계열회사등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0)

⑧ 판매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계열회사등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등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0)

⑨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0)

1.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이 계열회사등인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그 판매비중·수익률·비용
  2. 당해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제49조, 제52조 또는 제71조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사실로 인하여 판매회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을 경우 그 사실
- ⑩ 제9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항목 및 서식 등 그 밖의 내용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2.7.10)

**제2-9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관련 불편신고센터 설치)** ① 판매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집합투자증권 판매관련 불편신고센터(이하 “민원센터”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민원센터는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판매회사와 그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광고나 투자설명, 투자권유시 민원센터의 이용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 ④ 판매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당해 분기별 신고접수 및 처리내역을 협회에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라 판매사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2-10조(표준투자권유준칙)**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 ② 협회장은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11조(집합투자증권 잔고 등의 통보)**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보유내역, 평가금액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 순자산총액 및 적용법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대상, 통지주기 등 세부기준은 판매회사가 정하며, 적용법률이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인 경우에는 추가 판매가 금지되어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시 판매회사는 판매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1.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통지 지연 또는 불능 (개정 2009.12.14)
2. 주소기재오류, 전자메일박스 용량초과 등의 투자자 귀책사유

## 제2절 전문투자자 지정

**제2-12조(전문투자자 지정신청)** ① 영 제10조제3항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전문투자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1. 별지 제2호의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서” 1부 (개정 2010.9.1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개정 2009.2.26)
  - 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장 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투자등록증 사본 또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서류) (신설 2009.2.26)
  - 나.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09.2.26, 개정 2010.9.17)
3.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제출인이 외화표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잔고는 제출일 직전 영업일의 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7호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산정) (개정 2009.2.26, 개정 2010.9.17)
4. 개인인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계좌개설일부터 1년이 지났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해당 계좌는 제3-3조에서 정하는 폐쇄계좌로 분류되지 아니한 계좌이어야 한다. (개정 2010.9.17)
5. 금융투자회사가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대행 위임장 및 금융투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09.2.26, 개정 2010.9.17)
6.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신설 2009.2.26)

② 외국인이 전문투자자로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제1항에 따른 제출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2.26)

③ 금융투자회사는 전문투자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전문투자자 지정신청 및 제2-16조에 따른 확인증 재발급 신청사무의 대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중전 제2항에서 이관 2009.2.26, 개정 2010.9.17)

**제2-13조(전문투자자 지정 및 지정말소)** ① 협회는 제2-12조에 따라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의 “전문투자자 지정명부”에 기재하고, 제출인 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4호의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한다.

1. 제1항 각 호 서류의 누락 여부
2. 영 제10조제3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개정 2009.2.26)
- ② 협회의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은 지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③ 전문투자자는 협회의 전문투자자 지정효력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제2-12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협회는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협회는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문투자자 지정을 말소한다.

**제2-14조(전문투자자 분류)** ① 협회로부터 전문투자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전문투자자의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시하고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의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협회에 전문투자자 지정여부 및 잔존 효력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분류하는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에게 향후 위험고지 및 설명 등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④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전문투자자 지정효력 기간이 만료하거나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전문투자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5조(전문투자자 관리대장의 유지)** 금융투자회사는 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로 전환한 투자자의 성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투자자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의 성명
2. 전문투자자 지정일자
3.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기간
4. 전문투자자 해제일자 및 해제사유 등

**제2-16조(확인증 재발급 신청)** 협회로부터 확인증을 발급받은 전문투자자가 확인

증을 분실,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전문투자자 확인증 분실 (도난) 확인서”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협회에 확인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절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제2-17조(투자권유대행인의 구분)**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집합투자증권(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개정 2009.2.26, 2011.1.26)
2.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 및 영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개정 2009.2.26, 2010.1.29, 2011.1.26)
3. 삭제 <2011.1.26>

**제2-18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1호의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하고 같은 규정 제1-4조제1호에 따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2011.1.26)
  - 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투자자문·투자일임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 나.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신탁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2.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전문인력규정 제3-1조제2호의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또는 제4호의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같은 규정 제1-4조제2호에 따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9, 2011.1.26)
  - 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투자자문·투자일임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나.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협회가 실시하는 별표 8-1의 “신탁 등록교육”을 이수할 것

3. 삭제 <2011.1.26>

**제2-19조(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의 임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증 사본(전면 및 후면)
3. 해당 금융투자회사와의 투자권유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4.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경력증명서
6. 삭제 <2009.9.25>
7. 반명합판 사진 1매

②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업무위탁범위가 변경된 경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0조(등록 및 등록거부)** ①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8호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발급한다.

1. 제2-19조 제1항 각 호 서류의 누락 여부
2. 투자권유가 가능한 해당 자격요건의 구비 여부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성명,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 투자권유가 가능한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투자권유대행인은 별표 8-2의 “투자권유대행인 보수교육 세부기준”에 따라, 협회가 실시하는 해당 보수교육을 2년 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1년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1.1.26)

⑤ 삭제 <2010.3.26>

⑥ 삭제 <2011.1.26>

**제2-21조(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 ①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으로 한다.
2.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시까지로 한다.

② 협회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을 말소한다.

**제2-22조(금융투자회사의 보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9호의 “투자권유대행인 변동보고서” 서식에 따라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신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2.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한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제2-23조(등록증 재발급 신청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분실, 도난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 분실(도난) 확인서”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협회에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한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회수하여 협회에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이 등록증을 분실(도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 분실(도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장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제2-24조(목적)** 이 장은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사분석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2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자료”란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1.11.4)

2. “금융투자분석사”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전문인력규정 제2-1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0.1.29)
3. “조사분석 담당부서”란 명칭에 관계없이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공표”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또는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발표(언론기관 배포·인터넷 게재·영업점비치·영업직원에 대한 통보·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지 등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26조(조사분석의 원칙)**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의 대가로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 대상법인 등 외부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신뢰도를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공정성을 현저하게 결여하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7조(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①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을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없이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해당 제3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①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분석사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9.25)

④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 대상법인 및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9.25)

⑤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업무(영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다.

1.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업무 관련부서간의 자료교환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할 것
2.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업무 관련부서간의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기록·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 부서의 직원이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할 것

⑥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임원이 기업금융·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회의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회의내용이 협회의 정관 및 규정,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2.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권관련사채권과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가. 자신이 안정조작(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을 말한다) 또는 시장조성(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개정 2011.11.4)
- 나. 자신이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이하 “주선등”이라 한다)

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인수·합병의 대상법인 및 그 상대 법인. 다만, 인수·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1.4)

다. 자신이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한 주선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개정 2011.11.4)

(1) 지분매각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매각대상법인 및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이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1.11.4)

(2) 지분매입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해당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및 매입대상법인. 이 경우 매입대상법인에 대하여는 지분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1.11.4)

라.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 제14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는 법인 (개정 2009.2.26)

마.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인 법인. 다만,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법 제71조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

②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신과의 이해 관계를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보증·배서·담보제공·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
2.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3. 자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제1항제3호나목 본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인수·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하인 법인
5. 자신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

- 인으로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6. 자신을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자신과 주권의 모집주선 또는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주가 상장된 후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권을 발행한 상장법인 (신설 2009.9.25)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신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개정 2011.11.4)
- ③ 제1항제3호나목 및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① 협회의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의 대표주관회사에 해당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대표주관업무(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간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제2-2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조사분석자료 의무공표 횟수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기간을 감안하여 차감한다.
  2. 대표주관회사로서의 업무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유가증권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위한 업무인 경우
  3. 조사분석업무의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투자 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말한다)를 공표한 경우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추가로 공표하여야 하며, 추가로 공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신이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 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2. 제1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본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

1. 금융투자분석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4. 모집 또는 매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처분하는 경우

5.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권리행사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④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09.9.25)

**제2-32조(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적 이해관계라 함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말한다.

1. 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2. 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 주식매수선택권

3. 제1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③ 제1항에 따라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2.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이해관계의 세부내용(종류·수량·취득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부여받은 일자·수량 및 행사가액)

3. 그 밖에 이해상충 예방을 위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는 경우 일반투자자가 그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말미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표시

2. 강연이나 설명회, TV·컴퓨터 등을 이용한 화상강연 등의 경우에는 구두로 고지하거나 자막으로 표시

3. 그 밖에 일반투자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

⑤ 제1항에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가액의 합계가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은 보유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가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주식워런트증권·주식선물·주식옵션 :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영업일 종가

2.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관련사채권·주식매수선택권 : 권리행사로 수령하게 되는 주식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의 직전 영업일 종가

**제2-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실히 심의하여야 한다.

1. 관계법규의 준수여부

2. 금융투자분석사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의 여부

3. 분석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가치평가에 도달하는 논리전개의 타당성 여부

4. 투자성과의 보장 등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여부

②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 특정인에 대한 제공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2. 조사분석자료를 특정인에게 한정하여 제공하거나 공표하기 전에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경우 제공일시, 상대방 등 세부 내용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조사분석자료의 정확성 및 객관성 검증을 위한 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③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투자등급의 의미와 공표일부터 과거 2년간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를 말하며 기세를 포함한다)의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의 구체적 내용 없이 매수·매도 등의 단순한 투자의견만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에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재산적 이해관계, 외부자료를 인용한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33조의2(조사분석업무 관련 정보의 공시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다.

1.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및 생년
2. 금융투자분석사의 협회 등록번호
3. 금융투자분석사의 현재 소속 금융투자회사명
4. 금융투자분석사의 현재 소속된 금융투자회사에서의 근무 월수
5. 금융투자분석사의 협회 등록 총 월수 및 금융투자회사당 등록 기간. 다만, 금융투자회사명은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금융투자회사별 금융투자분석사 현황 및 인원수

② 금융투자회사는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상장법인을 분석대상으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사분석자료의 제목
2. 조사분석자료의 분석대상 법인명
3.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의 성명
4.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자
5. 조사분석자료의 주요내용

## 6. 조사분석자료의 전자문서 사본

③ 협회와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 상호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10.7.23]

## 제3장 투자광고

### 제1절 총칙

**제2-34조(목적)** 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법 제57조제1항 단서의 금융지주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① 이 장에서 “투자광고”란 금융투자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29, 개정 및 단서삭제 2011.8.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8.19)

1.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2. 홈페이지 및 홈트레이딩시스템 이용 안내 등 투자유인행위가 없는 단순한 정보 제공 행위
3.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제2-36조(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최대

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의무 표시사항 및 표시 금지사항

제2-37조(의무 표시사항)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내용
2.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제1항 각 호의 내용
3. 별표 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② 금융투자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3항 각 호의 내용
2.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3. 환매수수료
4.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이 경우 보수는 총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보수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5. 고유한 특성 및 위험성 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특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
6. 별표 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42조제1항제6호 본문의 투자광고와 휴대전화·라디오를 이용한 투자광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2.26, 개정 2009.2.26, 2009.7.24, 2010.1.29)

④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위험을 알리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투자광고에 표시하도록 금융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⑤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시사항 중 위험고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할 것
2. 용지규격 210×297밀리미터 (A4용지) 기준 8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 전면으로 게재하는 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0.1.29, 2011.8.19, 단서신설 2011.8.19)

3. 영상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1회당 투자광고 시간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동안 투자자가 해당 위험고지내용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되,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체화면의 5분의 1 이상의 면적에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개정 2009.7.24, 2010.1.29)
4. 인터넷 배너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위험고지내용이 3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파생상품, 그 밖에 투자위험성이 큰 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위험고지내용이 5초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8.28, 개정 2010.1.29)
5. 삭제 <2011.8.19>
6. 삭제 <2011.8.19>

**제2-38조(금지행위)**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9)

1.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다만,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9)
2.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3. 집합투자기구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예상수익을 또는 목표수익을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9)

가. 집합투자기구의 상환목표수익률 (신설 2011.8.19)

나.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의 전환목표수익률 (신설 2011.8.19)

다.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 (신설 2011.8.19)

4.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목 이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라. 영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마. 금융투자업규정 제4-11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5.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6.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비교대상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7.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8.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영 제6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10.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11.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12. 수익율, 수수료 등(이하 이 호에서 “수익율등”이라 한다)을 특별히 우대하여 제시하면서 우대조건·기간 등을 수익율등의 글자 크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익률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신설 2009.7.24)
13. 별표 10의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제 12호에서 이동 2009.7.24)
14. 그 밖에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 인식하게 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개정 2009.7.24, 2010.1.29)
15. 사진·문자·그림 등을 이용하여 법인·단체를 포함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신설 2010.3.26)

**제2-39조(홈쇼핑 광고)** 금융투자회사는 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1. 녹화방송의 형태로 제작·집행할 것
2.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설명은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할 것
3. 투자자의 전화문의에 대한 응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한다는 사실을 안내자막 및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4. 운용실적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말 것
5. 제2-37조제5항에 따른 위험고지 사항을 총 광고시간의 3분의 1이상의 시간동안 안내자막 또는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6. 투자광고의 내용이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 가. 환매청구방법
  - 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다.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라. 그 밖에 환매수수료 등 환매관련 사항

### 제3절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표시

**제2-40조(준수사항)** 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을 병기할 수 있으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19)

1. 별지 제13호의 “투자광고계획신고서”(이하 이 장에서 “신고서”라 한다) 제출일전 10영업일내의 기간 중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특정일(이하 이 장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순자산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개정 2009.2.26, 2010.1.29, 2011.8.19)
2.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상의 수익률을 사용하되, 기준일로부터 과거 6개월 및 1년 수익률을 함께 표시할 것.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수익률과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기준일까지의 수익률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2011.8.19)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 가.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나. 기준일 및 기준일 현재의 순자산총액 (개정 2011.8.19)
  - 다. 설정일 또는 설립일
  - 라. 수익률 산출기간 및 산출기준 (개정 2010.1.29)
  - 마. 수익률의 세전·세후 여부 (개정 2010.1.29)
4. 투자설명서상의 주된 운용대상자산의 비율 및 자산운용보고서상의 운용내역에 근거하여 벤치마크의 수익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계산하여 병기할 것. 다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객관적인 벤치마크를 산

정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②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③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운용실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1.8.19)

1. 기준일 현재 동일 유형내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 (개정 2010.1.29, 2011.8.19)
2. 제1항제2호 본문, 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를 것 (개정 2010.1.29)
3. 삭제 <2010.1.29>

④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1. 기준일로부터 과거 1개월수익률을 표시할 것. 이 경우 연으로 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2.26, 2010.1.29, 후단신설 2010.1.29)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이 장에서 “방송”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09.7.24, 2010.1.29, 2011.8.19).
3.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판매 또는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운용실적 등에 관한 비교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⑤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적립식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하 이 항에서 “적립식수익률”이라 한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9, 개정 2011.8.19)

1. 신고서 제출일이 속한 달 직전월의 마지막 영업일(이하 이 항에서 “기간말영업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순자산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개정 2011.8.19)
2. 매월 첫 영업일에 일정금액의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 기간말영업일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할 것
3. 기간말영업일로부터 연 단위로 과거 3년 이상의 적립식수익률을 사용할 것. 이 경우 기간말영업일로부터 과거 3년 적립식수익률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4.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보수·수수료가 차감된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할 것
5.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를 것. 이 경우에 “기준일”은 각각 “기간말영업일”로, “수익률”은 각각 “적립식수익률”로 본다.

**제241조(운용실적 비교광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나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운용실적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비교대상이 동일한 유형의 집합투자기구일 것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자료를 사용하되, 자료의 출처가 동일한 평가회사일 것 (개정 2010.1.29)
3.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수익률을 가장 상위 운용실적부터 차례대로 표시할 것. 이 경우 광고물에 표시된 비교대상별로 기준일로부터 연 단위로 과거 2년 이상의 수익률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4.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평가한 운용실적의 등급이나 순위를 인용하는 경우 평가자료의 출처 및 공표일을 표시할 것 (개정 2010.1.29)
5. 삭제 <2010.1.29>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공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할 것 (개정 2010.1.29)
  - 가. 광고물에 표시된 비교대상에 대해 제24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신설 2010.1.29)
  - 나. 평가자료에 포함된 전체 비교대상의 수 (신설 2010.1.29)
  - 다. 비교대상이 유형별 운용실적인 경우 해당 유형에 속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수 (신설 2010.1.29)

#### **제4절 투자광고의 심의**

**제242조(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1.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고 제246조에서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7.24)
  - 가. 크기, 색상 또는 배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의무표시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09.7.24)
  - 나. 전화 등 통신매체의 번호,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영업점의 명칭, 약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개정 2009.7.24)
  - 다. 판매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개정 2009.7.24)
  - 라. 수익률 및 기준일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집합투자증권 등 실적배당상품의 운용실적은 제외한다. (개정 2009.7.24)
  - 마. 전단, 팜플렛 등의 인쇄물(이하 이 장에서 “인쇄물”이라 한다)을 이용한 투

자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9.7.24, 개정 2011.8.19)

바.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09.7.24)

사. 제2-37조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신설 2009.9.25, 개정 2011.8.19)

2. 변경될 수 있는 부분(기초자산, 수익률 등 단순한 항목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변경될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고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만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09.7.24)

3. 지점 또는 영업소가 자체 제작하여 시행하는 경우. 다만, 특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광고물 중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이하 이 장에서 “신문등”이라 한다), 인쇄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7.24, 2011.8.19)

4.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기반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자사 홈페이지등”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이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투자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한 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투자광고. 다만,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운용실적이나 수익률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7.24, 2011.8.19)

5.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한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광고 (신설 2009.2.26)

6. 단순히 금융투자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사에 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제외한다. (신설 2009.7.24, 개정 2011.8.19)

가. 방송 (신설 2011.8.19)

나. 신문등 (신설 2011.8.19)

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기간행물(이하 이 장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 (신설 2011.8.19)

라. 자사 홈페이지등을 제외한 웹사이트,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 (신설 2011.8.19)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자료를

교부하는 경우 (신설 2009.7.24)

8. 다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명칭, 수수료, 수익률 또는 특징 등을 표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경우 (신설 2009.7.24)

9.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09.7.24, 개정 2011.8.19)

10. 시황, 업황 등의 전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09.7.24)

②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가 관계법규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광고물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월별 사전 승인 내역을 별지 제11호의 “광고물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 보고서”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투자광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광고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즉시 해당 광고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⑤ 금융투자회사는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 “광고책임자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지정·변경) 통보서”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제2-43조(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 ①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투자광고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② 금융투자회사는 신고서를 별표 11의 “투자광고계획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광고안 및 신고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제2-44조(협회의 심사)** ① 협회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별지 제14호의 “투자광고 심사결과 통보서”(이하 이 장에서 “심사결과통보서”라 한다) 서식에 따라 신고서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협회의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에 투자광고의 수정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요구일부터 수정안 또는 추가자료가 협회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
2. 투자광고 심사를 자율규제위원회에서 하는 경우 자율규제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3. 협회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투자광고의 적격성을 질의한 경우 해당 질의를 한 날부터 관계기관의 회신이 협회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
4.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에 대한 투자광고의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어 규칙 제12조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기간
- ② 협회는 투자광고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적격: 광고안의 내용이 적절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협회가 판단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2. 조건부적격: 협회가 요구한 대로 광고안을 수정하거나 추가자료를 제출한 후에 시행이 가능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3. 부적격: 광고안의 시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협회가 판단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 ③ 협회는 투자광고를 심사할 때에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투자광고를 수정하게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9)

**제2-45조(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2.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은 투자광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투자광고. 다만, 제2-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는 제외한다. (개정 2009.7.24, 2010.1.29)
3. 제2-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 (개정 2010.1.29)
4.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투자광고
5.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제도·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협회가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투자광고
6. 협회로부터 사용중단을 요구받은 투자광고

**제2-46조(심사결과의 유효기간)** ① 협회가 적격 통보하였거나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유효기간은 협회의 심사필 번호가 금융투자회사에 부여된 날(제2-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제2-42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날)과 신고서에 기재된 광고시행 예정일 중 늦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과 신고서에 기재된 최종시행예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투자광고에 포함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이 동일한 기간으로 산출한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과 15% 이상 차이가 나거나 집합투자기구의 등급 또는 순위가 달라진 경우 해당 변동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투자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26, 2009.7.24, 2010.1.29, 단서신설 2010.1.29)

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고 있거나 제2-42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매체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한 투자광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개정 및 단서삭제 2010.1.29, 개정 2011.8.19)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광고로서 운용실적이나 수익률(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은 제외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투자광고: 기준일로부터 3개월 (개정 2009.2.26, 2010.1.29, 2011.8.19, 단서삭제 2010.1.29)

3. 그 밖의 투자광고: 1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은 투자광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협회로부터 유효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후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최초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1.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을 것 (개정 2010.1.29)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0.1.29)

가. 시황, 업황 등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상황에만 적용 가능한 정보 (신설 2010.1.29, 제3호에서 이동 2010.1.29)

나. 운용실적 또는 수익률 (신설 2010.1.29)

다. 수수료, 이자율, 통계수치, 그 밖에 기준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수치 (신설 2010.1.29)

3. 삭제 <2010.1.29>

4.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법규, 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의 변경이 없을 것

5. 연장신청일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투자광고 심사결과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영업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의 “투자광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9)

(본조제목개정 2010.1.29)

**제2-47조(심사필의 표시)**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물의 적절한 위치에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은 사실 및 유효기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협회가 적격으로 통보한 투자광고(제2-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를 포함한다): “한국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호 (20 . . ~ 20 . . )” (개정 2009.7.24, 2010.1.29)

2. 제2-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 “OO회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호 (20 . . ~ 20 . . )” (개정 2009.7.24, 2010.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투자광고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부분에서 유효기간을 대신하여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송, 인터넷 배너, 돌출광고,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7.24, 2010.1.29, 2011.8.19)

**제2-48조(재심사의 청구)** ①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투자광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회사가 재심사를 청구한 투자광고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제2-49조(심사수수료의 징구)** ①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심사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수수료의 징구 기준 및 금액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5절 제재 등

**제2-50조(시정요구)**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관계법규 및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하거나 투자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해당 투자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51조(제재)**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관계법규 및 이 장의 규정을 위

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 **제4장 영업보고서 및 경영공시 등**

### **제1절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제2-52조(목적)** 이 절의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인 금융투자회사(이하 “겸영금융투자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3조(대표이사의 서명)** 금융투자회사의 대표이사는 영업보고서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작성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영업보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54조(기재내용)** 영업보고서의 항목 및 서식 등 그 밖의 내용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5조(공시방법)** ① 금융투자회사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1년간 영업보고서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본점 및 영업점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법 제160조에 따라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공시한 경우 해당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3.17)

② 금융투자회사는 주주·투자자 및 그 밖에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영업보고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컴퓨터 등 유·무선 전자통신수단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6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금융투자회사는 영업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45일(사업연도 경과 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제작성된 결산기 영업보고서의 경우 결산기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전산파일과 함께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법 제160조에 따라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전산파일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3.17)

②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에 제출한 영업보고서에 오류 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

우 당초의 기재사항과 정정사항을 비교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협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57조(자료의 요구)** 협회는 영업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절 주요 경영상황 공시

**제2-58조(목적)** 이 절의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공시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9조(공시사항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금융투자회사는 본점 및 영업점 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4.24)

1.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 : 해당 부실채권의 동일 기업집단명 및 소속 개별 기업명, 금액, 사유, 금융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등. 다만, 개별기업명은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한다.
  2.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 : 해당 금융사고등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금융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 등
  3.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 : 금액, 금융투자회사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 등
  4.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 :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권고, 요구, 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 및 사유, 향후계획 등
  5.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 : 원화유동성비율 위반 내용 및 사유, 향후계획 등
  6.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 : 회계기간 변경 결정 내용 등 (신설 2012.4.24)
- ② 법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하 이 절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

이 아닌 금융투자회사(이하 “비상장 금융투자회사”라 한다)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투자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금융투자회사는 본점 및 영업점 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주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자회사인 비상장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지주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8조 또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로써 공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4.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시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2-60조(공시책임자)** ① 금융투자회사는 주요경영사항의 공시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주요경영사항의 공시책임자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3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절 기타 공시사항

**제2-61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금융투자회사는 법 제160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전산파일과 함께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오류 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당초의 기재사항과 정정사항을 비교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협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2조(수수료 부과기준 제출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에게 필요한 공시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따라 공시사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시사항의 제출방법 등 그 밖의 내용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5장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제2-63조(목적 등)** ① 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4-61조, 제4-62조, 제4-76조 및 제4-92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거래상대방(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금융투자회사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편익 등(이하 이 장에서 “재산상 이익”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한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7)

1. 삭제 <2009.10.27>
2. 삭제 <2009.10.27>
3. 삭제 <2009.10.27>
4. 삭제 <2009.10.27>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9.10.27)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2.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개정 2009.10.27)
3. 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 (개정 2009.10.27)
4.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 (개정 2009.10.27)
5.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7)

**제2-64조(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재산상 이익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09.10.27)

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 접대의 경우 해당 접대에 소요된 비용. 다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체 소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4.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제2-65조(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① 금융투자회사가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1회 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27)

② 금융투자회사가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회사가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은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직전 연간 또는 직전 회계연도 기간 중 실현한 영업수익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을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수익은 인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상의 1년간 추정 영업수익으로 하며, 금융위원회 등록업무만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수익은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으로 한다. (개정 2009.2.26, 2009.10.27)

1. 영업수익이 1천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3과 10억원 중 큰 금액 (신설 2009.10.27)

2. 영업수익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수익의 100분의1 또는 30억원 중 큰 금액 (신설 2009.10.27)

⑤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이하 이 항에서 “추첨등”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생상품(유사해외통화선물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동일 일반투자자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사해외통화선물 및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09.10.27) (개정 2011.12.19)

⑥ 신탁회사(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토지신탁(신탁의 인수시에 신탁재산으로 토지 등을 수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 등에 건물, 택지, 공장용지 등의 유효시설을 조성하여 처분·임대 등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와 관련하여 신탁수익(토지비 및 사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익자에게 선지급할 경우에는 별표 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에 의한 선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

다. (신설 2009.12.14)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①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회당 및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0.27)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의 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

**제2-67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① 금융투자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였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의 내역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7)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0.27)

1.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사용범위가 공연·운동경기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0.27)

가.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회사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

는 자(그 임원 및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09.10.27, 2009.12.14)

나. 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09.10.27)

다.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중개회사(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09.10.27)

5.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위법·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제2-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투자중개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09.10.27)

9. 투자매매회사 또는 투자중개회사가 판매회사의 변경 또는 변경에 따른 이동액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10.1.29)

②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보전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0.27)

## 제6장 직원 채용 및 복무 기준

제2-69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직원채용 및 복무기준과 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원의 자질향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2-74조는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겸영금융투자회사, 법 제5편 제9장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가 전문인력규정 제1-3조 각 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 및 같은 규정 제2-15조제1항 각 호의 펀드관계회사인력에 대해 같은 규정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9.3.24, 2010.1.29, 2011.4.27)

**제2-70조(채용결정 전 사전조회)** ① 금융투자회사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예정자가 제2-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전문인력규정 제2-11조제3항 또는 제2-1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응시 제한기간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거부기간 경과여부를 채용결정 전에 별지 제16호의 “비위행위 확인의뢰서”의 제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1.29)

② 협회는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조회가 있는 경우 조회결과를 문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71조(채용금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금융투자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대하여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징계 등의 사유가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징계퇴직 처분을 받거나 퇴직 후 징계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해당 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유예기간에 한한다.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채용금지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자체 징계일, 금고 이상의 형 선고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빠른 일자를 기산일로 한다.

**제2-72조(복무원칙)**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은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73조(금지행위)** 금융투자회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계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주소를 사용토록 하는 행위

3. 본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타인의 명의로 주소 등을 사용하는 행위
4.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와 금전의 대차를 하거나 소속 금융투자회사와 제휴관계를 맺지 아니한 제3자와의 금전의 대차 등을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5. 그 밖에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투자자 보호에 배치되는 행위

**제2-74조(징계내역 보고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거나 임원에 대하여는 주의적 경고 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퇴직자의 경우 주의적 경고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한 경우 인지일 또는 부과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 “징계내역보고서”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수의 위법·부당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된 위법·부당행위를 적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주의적 경고이거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견책 이상 3월 이하의 감봉(퇴직자에 대한 3월 이하의 감봉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책임의 종류가 행위자, 지시자, 공모자, 그 밖에 적극 가담자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4.27)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해당 임직원의 인적사항 및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한 비위행위자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③ 금융투자회사는 직권재심 또는 임직원의 재심청구 등으로 최초의 징계처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변동 내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④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징계내역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보고토록 할 수 있다.

**제2-75조(직원에 대한 관리)** 금융투자회사는 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및 매매거래, 투자상담 등과 관련된 다른 법인 또는 단체(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해당 사업(금융투자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승인절차 및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2-76조(징계내역 열람신청)**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였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자신의 계좌 또는 자산을 관리하는 직원(관리에정 직원을 포함하며 해당 투자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영업점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의 징계내역 열람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직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의 “징계내역 열람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투자자의 징계내역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조 회를 신청한 투자자에게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7조(협회의 징계내역 통보)** ① 협회는 제2-76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징계내역 열람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내역을 별지 제19호의 “징계내역 통보서”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게 통보하는 징계내역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부과한 견책 이상(퇴직자에 대한 견책상당 이상의 처분을 포함한다)의 징계 중 해당 직원의 책임의 종류가 지시자, 행위자, 공모자, 그 밖에 적극 가담자인 징계에 한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불구하고 해당 징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징계일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 면직(면직상당 포함) : 10년

나. 정직(정직상당 포함) : 5년

다. 감봉(감봉상당 포함) 및 견책(견책상당 포함) : 3년

2. 감독당국이 사면하거나 금융투자회사에게 사면 또는 징계기록 말소 등을 요청한 경우

3.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금융투자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징계라고 인정한 경우

**제2-78조(투자자에 대한 통보)** ① 금융투자회사는 제2-77조에 따라 협회로부터 “징계내역 통보서”를 받은 경우 해당 통보서를 조 회를 신청한 투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징계내역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투자자에 대한 통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9조(징계내역 조회제도 안내)**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2의 “징계내역 열람제도 이용안내”를 교부하고, 징계내역 열람제도의 이용절차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2-80조(정정신청 등)** ①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협회에 대하여 자신의 징계내역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별지 제18호의 “징계내역 열람신청서”를 소속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징계내역 열람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내역을 별지 제19호의 “징계내역 통보서”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③ 제2항 및 제2-77조제1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징계내역을 통보받은 해당 임직원은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속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협회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정정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④ 협회는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정여부 및 정정내용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77조제2항 및 제3항, 제2-78조제2항은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회의 징계내역 통보 및 해당 징계내역의 이용제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81조(교육연수)** ①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윤리관 정립, 준법의식 함양 등을 위하여 임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소속 금융투자분석사에 대하여 연간 4시간 이상의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2항의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2조(공로자 표창)**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증권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83조(직원수 등의 보고)** ① 금융투자회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임직원수 및 임직원 이동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투자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연령, 성별, 학력, 근속연수, 전문자격, 고용계획 등의 통계자료
2. 직무별 인원수, 현 직무 근무연수, 연수경력 등의 통계자료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료

## 제7장 신상품 보호

[본장 신설 2009.5.29]

### 제1절 총칙

제2-84조(목적) 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의 신상품 개발에 따른 선발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 간 신상품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금융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9.5.29]

제2-8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상품”이란 금융투자상품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판매된 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30)
  - 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 (개정 2010.4.30)
  - 나. 금융공학 등 신금융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한 상품 또는 서비스 (개정 2010.4.30)
  - 다. 기존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개정 2010.4.30)
2.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상품을 개발한 금융투자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신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신청회사”란 협회에 배타적 사용권 부여를 위한 심의를 신청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09.5.29]

### 제2절 신상품심의위원회

제2-86조(신상품심의위원회의 설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신상품인지 여부 및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
2. 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3. 배타적 사용권 침해에 관한 침해배제신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09.5.29]

**제2-8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및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6인 이내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이내 (개정 2010.4.30)
2. 금융투자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 개발 담당 임원 2인 이내 (개정 2010.4.30)
- ② 위원장은 신상품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내 소관부서의 본부장으로 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90조의 규정 위반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⑥ 위원장은 제2-8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소집 전 신청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3인 이내의 전문가(이하 이 장에서 “외부전문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심의업무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⑦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위원장이 그 인원 및 위촉기간을 정한다.

[본조 신설 2009.5.29]

**제2-88조(심의위원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1. 제2-8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신청이 협회에 접수된 경우(단, 제2-91조제4항에 따라 협회가 신청을 반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개최일 3영업일 전까지 회의안건, 소집 일시, 장소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회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회의준비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협회에서 신상품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경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 중 1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9.5.29]

**제2-89조(심의위원회의 의결방법 등)**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4.30)

1. 제2-86조제1호의 사항 중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신상품인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방법 (개정 2010.4.30)

2. 제2-86조제1호의 사항 중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제 2-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한 방법

3. 제2-86조제2호 내지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방법 (개정 2010.4.30)

② 심의위원회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신청회사는 심의 및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09.5.29]

**제2-90조(비밀준수의무)** ① 위원 및 협회 임직원은 제2-91조제1항에 따른 신청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심의 대상 신상품에 관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요청이 있거나,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등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 및 협회 임직원은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 신설 2009.5.29]

### **제3절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및 이의신청**

**제2-91조(배타적 사용권 심의 신청 등)** ① 신상품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고자 하는 신청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
2. 신상품 설명서
3. 준법감시인의 법률의견서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협회에 접수된 때 발생하며, 심의의 우선순위는 신청의 효력이 발생한 순서에 따른다.

③ 협회는 신청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신청회사는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배타적 사용권 부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신청회사가 제3항에 따른 협회의 추가서류 제출 요청을 받고도 기한 내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3. 심의신청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기본구조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국내외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0.4.30)

[본조 신설 2009.5.29]

**제2-92조(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대한 심의 등)** ① 위원장은 제2-91조제2항에 따라 심의신청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신상품인지 여부 및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에 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가 신청회사에 대하여 제2-91조제3항에 따

라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요구일로부터 추가서류가 협회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회사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소집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추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회의 소집 사실을 신청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2-100조에 따른 심의기준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발생일은 심의위원회의 배타적 사용권 부여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8영업일째 되는 날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의결 후 지체없이 의결내용 및 그 사유를 신청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9.5.29]

**제2-93조(심의결과 공지)** 협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신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본조 신설 2009.5.29]

**제2-94조(배타적 사용권의 이용)** ① 신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는 기간 중에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금융투자회사 외의 금융투자회사는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지 못한다. (개정 2010.4.30)

② 금융투자회사가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신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9.5.29]

**제2-95조(이의신청)** ① 심의위원회의 배타적 사용권 부여결정에 이의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는 제2-93조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협회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2-92조제5항에 따른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협회는 그 사실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금융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본조 신설 2009.5.29]

**제2-9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등)** ①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2-93조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9영업일 이내(협회가 이의신청회사에 대하여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불가피하게 심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4영업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금융투자회사 및 이의신청회사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미 부여된 배타적 사용권을 취소한다.

④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경우, 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결정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취소일 다음 영업일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회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09.5.29]

#### **제4절 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

**제2-97조(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금융투자회사는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침해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5.29]

**제2-98조(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에 대한 심의 등)** ① 위원장은 침해배제 신청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침해배제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침해회사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침해배제 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침해배제를

신청한 금융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본조 신설 2009.5.29]

## **제5절 기타**

**제2-99조(금지행위 등)**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타 금융투자회사의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고의적인 조작행위
3. 타당성이 없는 빈번한 이의신청 등으로 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배타적 사용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협회는 그 위반내용 등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심의위원회는 협회정관 제3장 제3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5.29]

**제2-100조(심의기준 및 서식 제정)** ① 심의위원회는 제2-8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기준 및 서식 등이 제·개정된 경우 협회는 이를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본조 신설 2009.5.29]

**제2-10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 사용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09.5.29]

## **제3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 **제1장 계좌관리 및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 **제1절 투자자계좌의 통합 및 폐쇄**

**제3-1조(목적)** 이 절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가 아닌 투자매매회사 또는 투자중개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투자자 계좌를 통합하거나 폐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8)

**제3-2조(계좌의 통합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투자자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계좌는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은 금융투자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취득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 가격)
  2.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주식워런트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하며,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시에는 결제금액(실물결제의 경우에는 상장주권 평가가격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3. 상장채권 및 공모 추가연계증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
  4.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
- ② 금융투자회사는 통합계좌로 분류된 계좌에 대하여 입·출금(고) 및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금 및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등의 입금(고)는 예외로 한다.
- ③ 금융투자회사는 통합계좌로 분류된 계좌의 투자자가 입·출금(고)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및 통합계좌 해제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계좌의 폐쇄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쇄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계좌의 폐쇄를 요청하는 경우
  2. 계좌의 잔액·잔량이 “0” 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계좌의 투자자가 배당금(주식) 등의 출금(고)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계좌가 폐쇄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 제2절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3-4조(목적)** 이 절의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지급대상)**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자예수금
2.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3.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다만,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중 현금예탁필요액(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금예탁필요액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4.13)

**제3-6조(예탁금이용료 지급방법)**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투자자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이용료율 및 변경절차)**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7영업일전까지 그 내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금융투자상품의 온라인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및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에 대한 통지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이 항 전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 제2장 신용공여

**제3-8조(목적)** 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 제4-26조, 제4-28조 및 제4-34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가 아닌 투자매매회사 또는 투자중

개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신용공여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장주권”이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말한다.
2. “비상장채권”이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3. “기업어음증권”이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영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증권을 말한다.
4. “신탁수익증권”이란 법 제110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10.27)

**제3-10조(담보증권의 제한)** 금융투자회사가 예탁증권 담보유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증권은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주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 가.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 나.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하였거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증권
2. 비상장주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
  -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
  - 나.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업자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국제 신용평가기관(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투자적격등급(Moody's는 Baa3 이상, S&P는 BBB- 이상, IBCA는 BBB 이상, 국내 신용평가기관은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증권 A3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미만의 판정을 받은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증권 발행법인이 발행한 주권
3. 비상장채권
4.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채권
5.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가 불가한 집합투자증권 및 신탁수익증권

6.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7. 주식워런트증권
8.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것
9.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 중인 증권
10. 그 밖에 금융투자회사가 담보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증권

**제3-11조(담보증권의 처분방법)**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청구한 증권 중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은 처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2.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3. 그 밖에 증권 :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제3-12조(담보가격의 산정)**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청구한 증권은 담보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투자회사의 주식 : 기준가격
2. 기업어음증권 및 추가연계증권을 제외한 공모파생결합증권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
3. 그 밖에 증권 :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제3-13조(담보증권 처분방법 등의 고지)**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담보증권 처분방법 및 담보가격 산정방법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3-14조(신용공여 상황의 제출)**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4조제1항에 따라 매일의 신용공여 상황의 제출방법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3장 신용정보의 관리

### 제1절 총칙

**제3-15조(목적)** 이 장의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및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협회와 신용정보 집중·활용 협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가 신용정보를 수집, 제공, 관리 등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와 신용정보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6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수”란 위탁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매매거래함에 있어 금융투자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 “동결계좌”란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에 따라 미수가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상장증권 매수의 경우에는 위탁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상장증권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계좌를 말한다.
3.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이란 금융투자회사가 채권(債權)회수를 위하여 위탁자의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 대주를 임의로 상환·정리한 이후에도 잔존하는 미회수채권을 말한다.
4. “신용거래집중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동결계좌 요건에 해당하는 미수발생정보(이하 “미수발생 정보”라 한다)

나.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 발생정보(이하 “미수채권 발생정보”라 한다)

## **제2절 신용정보의 등록 및 활용**

**제3-17조(신용정보의 등록)** ① 금융투자회사는 신용정보가 발생하거나 그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의 등록, 등록 및 해제사유, 등록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표 13의 “신용거래집중정보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8조(동의서의 징구)** 금융투자회사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개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에 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10.26) (개정 2012.2.1)

**제3-19조(신용정보의 적용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에 등록된 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날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를 협회를 통해 다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적용한다.

1. 미수발생정보 : 미수가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

2. 미수채권발생정보 : 미수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6일째 매매거래일이 되는 날. 다만, 미수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여 5일째 매매거래일이 되는 날의 미수채권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회에 등록된 미수채권 발생정보의 변동시점은 변동이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로 한다. 다만, 해당 미수채권 발생정보를 협회를 통해 다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신용정보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를 협회를 통해 다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통보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기산한다.

1. 미수발생정보

가. 매수대금 미수 : 미수가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나. 매도증권 미수 : 미수가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2. 미수채권 발생정보 :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 다만, 미수채권 잔액이 10만원 이하로 변동되었거나 변동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변동일 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

### 제3절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3-20조(신용정보 제공 등의 제한) 개인의 신용정보는 해당 신용거래집중정보주체(이하 “신용정보주체”라 한다)와의 신용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의 유·무선통신 등에 의하여 신용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11.9.27)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

- 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간의 정보의 집중관리 또는 활용을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5.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같은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유가증권의 양수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8항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11.9.27)
  7.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11.9.27)
  8.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11.9.27)
  9.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투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11.9.27)
  10.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제3-21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① 금융투자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고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서면으로 신용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경과 등을 우선 통보하고 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2조(신용정보의 누설 금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신용정보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27)

## **제4절 신용정보의 관리**

**제3-23조(신용정보의 보존)** ①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에 등록된 신용정보를 제3-19조제3항에 따라 해제되는 날 전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② 금융투자회사는 미수채권 발생정보가 제3-19조제3항에 따라 해제되지 않는 경

우 당해 미수채권발생정보를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7)

**제3-24조(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에 등록한 신용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 또는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신용정보의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1.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설 2011.9.27)
2.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착오 그 밖에 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금융투자회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위탁자가 결제일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1.9.27)
- ②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삭제 또는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업무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27)
- ③ 금융투자회사는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 조치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제3-2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협회는 신용정보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삭제, 정정, 추가한 신용정보의 내역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25조의2(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금융투자회사는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0.1.14] (개정 2011.9.27)

## **제5절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보안 및 관리**

**제3-2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금융투자회사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②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7조(전산시스템의 보호)** 금융투자회사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에 대한 불법적 접근이나 입력정보의 변경·훼손·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충분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 **제4장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본장 신설 2009.8.28]

**제3-28조(목적)** 이 장의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8.28]

**제3-29조(거래 방법)** 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대상은 원화를 제외한 이중통화로 한다.

②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로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투자자로부터 거래단위당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예치·신탁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제1항제1호 각 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4.27) (개정 2011.12.19)

④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예탁자산평가액이 회사가 정한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미화이어야 한다. (개정 2011.4.27) (개정 2011.12.19)

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투자자의 계산으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⑥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계좌별로 동일한 유사해외통화선물 종목에 대하여 매도와 매수의 약정수량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9]

**제3-30조(호가제공)** ① 금융투자회사는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으로부터 호가를 제공받아 투자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호가 제공시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제3-31조(부적합 교육 등의 금지)**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유사해외통화선물에 대한 교육·설명회를 하거나 모의거래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경험, 금융지식 및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린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르는 위험
2.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본조신설 2009.8.28] (개정 2011.12.19)

**제3-32조(설명의무 등)**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없이 일반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제3-33조(재무현황 공시)** 금융투자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분기별 재무현황을 매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제3-34조(손익계좌비율 제출 및 공시)** ①금융투자회사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직전 4개 분기에 대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동 비율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다.

②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의 산정기준, 제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17]

## 제4편 집합투자업

### 제1장 총 칙

**제4-1조(목적)** 이 편은 집합투자회사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집합투자업의 신뢰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집합투자기구 명칭의 사용)** ① 집합투자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법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2. 집합투자회사의 회사명을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포함할 경우 명칭의 앞부분에 표기할 것. 다만, 회사명칭이 긴 경우 회사명칭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생략·조정하여 표기할 수 있다.
3. 판매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운용전략 등 상품내용과 다르거나 투자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업계가 공동으로 취급하는 특성의 집합투자기구로 그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과 다르게 수식어를 부가함으로써 투자자의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명칭에 “사모”를 포함할 것
8. 운용전문인력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집합투자회사는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60% 이상을 특정 종류의 증권 또는 특정 국가·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자산이 집중투자자산(60%)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다.

③ 판매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판매(광고선전, 통장인자 등을 포함한다)함에 있어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 명칭으로 인한 인지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명칭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생략·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협회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투자설명서 제출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효력이 발생한 날에 해당 공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투자설명서가 협회에 제출되면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등 삭제 <2011. 7. 8>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및 통계

#### 제1절 총 칙

**제4-57조(목적)** 이 장은 관계법규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기관 등에서 협회에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의 공시·통계자료(이하 “공시·통계자료”라 한다)」 등에 관해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건전한 영업행위 및 투자자보호에 있어서 필요한 공시·통계자료의 작성·발표·제공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실적공시”란 법 제90조제4항, 영 제9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 비교공시를 말한다.
2. “해외투자형”란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최저 60%이상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자집합투자기구와 종류형집합투자증권(법 제2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르게 발행된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종류형집합투자증권”라 한다),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편입하는 상위 집합투자기구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최저 60%이상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다만,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구분이 곤란한 경우 운용전략상 연평균 60%이상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3. “국내외혼합투자형”란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최저 30%이상~60%이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와 종류형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편입하는 상위 집합투자기구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최저 30%이상~60%이내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다만,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구분이 곤란한 경우 운용전략상 연평균 최저 30%이상~60%이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국내투자형”란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상 해외자산으로의 투자 비중이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협회 전자공시시스템”이란 협회의 법정공시 등을 공시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6. “협회 펀드통계시스템”이란 협회의 집합투자기구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7. “투자신탁 등”이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회사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을 말한다.
8. “집합투자기구 비용”이란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수수료, 보수, 기타비용 등을 말한다.
9. 삭제 <2010. 5. 19>
10. 삭제 <2010. 5. 19>

제4-59조 삭제 <2010. 5. 19>

제4-60조 삭제 <2010. 5. 19>

제4-61조 삭제 <2010. 5. 19>

## 제2절 제출 및 의무사항

### 제1관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제4-62조(영업보고서)** ① 투자신탁 등은 법 제90조제1항, 제186조제2항, 영 제94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317)

② 영업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4-63조(결산서류 등)** ① 투자신탁 등은 법 제90조제2항, 제18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사유발생 후 2개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의 청산인은 법 제203조제5항,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이

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류 등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4-64조(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① 투자신탁 등은 영 제94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를 제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4-65조(수시공시)** ① 투자신탁 등은 법 제89조, 제186조제2항, 영 제9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내역을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시공시 내역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회사는 법 제88조, 영 제92조제1항제2호·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 및 영 제9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② 투자신탁 등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산운용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③ 자산운용보고서는 금융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작성하거나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1.2.16)

④ 자산운용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개정 2011.2.16)

**제4-67조(회계감사보고서)** ① 투자신탁 등은 법 제240조제3항 및 영 제265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협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4-68조 삭제 <2009.3.17>**

**제4-69조(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 초과시 공시)** ① 집합투자회사(투자회사의 법인 이사인 집합투자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법 제247조제5항제5호 및 규칙 제24조제2항·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회사와 신탁회사가 산정한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의 편차가 1,0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이 내역을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 초과시 공시사항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4-70조(집합투자기구기준가격정보)** ① 투자신탁 등은 영 제94조제3항에 따라 각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회사 또는 투자자의 비공개 요구가 있는 사모 간접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가격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준가격에 대한 자료의 제출방법 등 그 밖의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4-71조(집합투자기구비용)** ① 투자신탁 등은 영 제94조제3항에 따라 각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타비용에 관한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기구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4-72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 ①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법 제280조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54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현황에 관한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 이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2관 집합투자관련 통계 등에 관한 사항

**제4-73조(판매수수료현황)** ① 판매회사는 집합투자기구별 판매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판매수수료현황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4-74조(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 ① 판매회사는 국내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별 매각규모 등 관련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4-75조(집합투자기구상시정보)** ① 투자신탁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수수

료, 투자증권편입비율 등 관련 정보를 매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기구 상시정보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4-76조(증권매매현황)** ① 투자신탁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증권매매정보 등 관련 정보를 매 영업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기구의 증권매매정보 등 관련정보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4-77조(해외투자지역별 현황)** ① 투자신탁 등은 해외투자형과 국내외혼합투자형의 투자지역, 통화 등 관련 자료를 매 영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외투자 지역별 현황 자료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3절 발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제1관 운용실적공시에 관한 사항**

**제4-78조(목적)** 이 절의 규정은 법 제90조제4항, 영 제94조제2항 및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9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공시주기, 비교방법 등 그 밖에 운용실적의 비교·공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제4-79조(적용범위)** 이 절에서 정하는 운용실적공시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9조제18항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4-80조(일반원칙)** ① 협회가 운용실적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개정 2009.10.27)

1. 운용실적분류기준 (개정 2009.10.27)
2. 집합투자회사 (개정 2009.10.27)
3.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개정 2009.10.27)
4. 집합투자기구(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개정 2009.10.27)
5. 운용보수·판매보수·판매수수료 (개정 2009.10.27)
6. 영 제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수익률, 영 제94조제2항제7호 단서의 원본액은

평가일 현재 설정원본(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31조의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법 제233조의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을 기준으로 하며, 50억을 기준으로 별도로 비교·공시한다. (개정 2010.6.13)

② 제1항 각호의 세부적인 구분기준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4-81조(집합투자기구의 분류)** ① 집합투자기구의 분류라 함은 제4-80조제1항제4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법 제9조제2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규약 또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등에 따라 세분화 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0.27)

② 제1항의 세부적인 구분기준은 협회장이 정한다. (개정 2009.10.27)

**제4-81조의2(운용실적분류기준)** ① 제4-80조제1항제1호의 운용실적분류기준이라 함은 제4-81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분류를 주된 투자대상자산 등에 따라 정한 분류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9.10.27)

② 제1항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은 협회장이 정한다. (신설 2009.10.27)

**제4-82조(공시주기)** ① 운용실적 비교·공시의 공시주기는 1개월로 하며, 발표 이후 투자신탁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7)

② 상환된 집합투자기구는 상환일의 다음 달에 공시한다.

③ 공시기준일과 발표일자 등의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4-83조(공시대상)** ① 운용실적 비교·공시 대상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일 현재 설정원본이 100억 이상인 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별도의 운용실적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1조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이하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경우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09.10.27)

**제4-84조(수익률산정방식)** ① 운용실적의 산출은 Time Weighted 방식을 적용하며, 기간 중 분배율을 반영한 일별 등락률을 평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2년, 3년, 4년, 5년, 연초 또는 설정일 대비(집합투자기구유형이 전환된 집합투자기구(종류형집합투자증권 포함)의 경우 전환일 대비)의 구간별로 곱하여 산출하고,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27)

$$\text{구간별 수익률} : \prod_{d=n}^m (1 + R_d) - 1$$

일별 등락률 :

$$R_d = \frac{\text{비교기말일의수정기준가격} - \text{비교기초일의수정기준가격}}{\text{비교기초일의수정기준가격}} \times 100$$

- ② 운용실적의 표시는 백분율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수익률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 ③ 가격이 외화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협회장이 해당 통화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④ 비교기초일 또는 비교기말일의 가격은 각 월의 마지막 영업일의 종가를 반영한 다음 달 첫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제4-85조(순위표시대상)** ① 순위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형집합투자증권 기준을 한다. (개정 2009.10.27)

1. 운용실적분류기준 적용시 평가대상 집합투자기구(종류형집합투자증권 포함)가 10개 이상인 경우 (개정 2009.10.27)
  2. 평가일 현재 운용경과일수가 1년(집합투자기구유형이 전환된 집합투자기구(종류형집합투자증권 포함)의 경우 전환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이고, 설정원본이 100억 이상이면서, 평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 설정원본이 10억 이상인 경우 (개정 2009.10.27)
  3. 평가일 현재 유형과 과거 유형이 동일한 경우 (개정 2009.10.27)
  4. 국내투자형이고 추가 설정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개정 2009.10.27)
  5. 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개정 2009.10.27)
- ② 제1항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 협회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86조(순위의 표시)** 제4-85조의 순위표시대상에 대한 순위의 표시는 운용실적분류기준에 따른 순위표시대상 총수 대비 해당 집합투자기구(종류형집합투자증권 포함)가 차지하는 순위를 표시한다. (개정 2009.10.27)

**제4-87조(일일공시)** ① 협회는 투자신탁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자료를 가공하여 일간, 주간, 월간, 분기 등의 운용실적 등락폭, 등락률 등을 공시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투자신탁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가공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제4-88조(공시방법)** 협회는 운용실적 공시자료를 책자 또는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한다.

## 제2관 집합투자기구 관련정보 제공

**제4-89조** 삭제 <2011. 7. 8>

**제4-90조** 삭제 <2011. 7. 8>

**제4-91조** 삭제 <2011. 7. 8>

**제4-92조** 삭제 <2011. 7. 8>

**제4-93조(공시자료의 세부사항, 분류 등의 처리)** ① 삭제 <2011. 7. 8>

② 이 장에 명시되지 않은 공시·통제자료 등의 공시 및 발표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제1절 일반사무관리회사

**제4-94조(목적)** 이 절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의 이익보호 및 집합투자업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4-95조(내부통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일반사무관리업무에 필요한 전산관리, 준법감시,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96조(계산업무)** ①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재산계산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 회계처리지침을 문서 형태로 보유하고, 승인된 지침에 의해서 계산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입력(전산으로 처리된 경우를 포함한다)과 결과물의 대사는 별도의 담당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 정보
2. 주식, 채권 등의 증권종목정보
3. 주가, 환율 등의 시세정보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작업사항

③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산출이 완료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회계내역을 수정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매월 신탁회사와 증권 보유내역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계산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한 모든 투자자정보와 운용정보는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4-97조(비밀정보의 관리 등)** ①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비밀정보(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며, 일반대중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이 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ID 및 비밀번호 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은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4-98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공받은 집합투자재산명세 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명세 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이 영 제64조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에 그 매매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2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제4-99조(목적) 이 절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의 이익 보호 및 집합투자업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4-100조(내부통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평가업무에 필요한 자산관리, 집합투자기구의 평가, 준법감시,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101조 (집합투자기구평가정보제공)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사전에 정한 방법과 표현을 준수할 것
2. 특정 집합투자회사나 특정 판매회사를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표현하지 아니할 것
3.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평가방법을 적절히 전달할 것

제4-102조(집합투자기구 평가기준의 제출)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영 제282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합투자기구평가기준의 공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4-103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① 집합투자회사는 법 제259조제2항 및 영 제282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매 월말기준(이하 “작성기준일”

이라 한다)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로부터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제출 받은 경우 작성기준일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집합투자재산의 명세 등 집합투자기구 운용정보를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해당 정보의 제공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채권 등 집합투자재산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한 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이 영 제64조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에 그 매매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제4-104조(비밀정보의 관리 등)**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비밀정보(임직원이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며, 일반대중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이 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은 ID 및 비밀번호 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임직원은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절 채권평가회사

**제4-105조(목적)** 이 절은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의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채권 등의 가격 평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채권평가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4-106조(내부통제)** 채권평가회사는 채권평가업무에 필요한 전산관리, 집합투자기구의 평가, 준법감시,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107조(증권평가기준의 제출)** ① 채권평가회사는 법 제264조제2항 및 영 제287조제2항에 따라 증권평가기준의 제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권평가기준의 공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4-108조(비밀정보의 관리 등)** ① 채권평가회사는 비밀정보(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며, 일반대중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이 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채권평가회사는 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ID 및 비밀번호 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채권평가회사 및 임직원은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4-109조(집합투자재산 명세 정보)** ① 채권평가회사는 영 제287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집합투자회사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채권평가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집합투자재산명세 정보를 채권 등 평가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집합투자재산 명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채권평가회사에서 채권 등 집합투자재산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한 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이 영 제64조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에 그 매매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 **제5장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변경**

[본장 신설 2010.1.21]

**제4-110조(목적)** 이 장은 영 제7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장에서 “펀드”라 한다)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0.1.21]

**제4-111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경판매회사”란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기 전 펀드를 판매한 판매회사를 말한다.

2. “변경대상판매회사”란 투자자가 영 제7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판매회사를 말한다.
3. “펀드 판매회사 변경업무 공동규약”(이하 이 장에서 “규약”이라 한다)이란 펀드 판매회사간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하여 상호간 준수하기로 한 약정을 말한다.
4. “전산시스템”이란 펀드 판매회사 변경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설계·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0.1.21]

**제4-112조(적용범위)** 이 장은 법에 따라 판매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모든 펀드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판매회사 변경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협회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 신설 2010.1.21]

**제4-113조(판매회사의 의무)** ① 판매회사는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된 모든 펀드에 대하여 변경판매회사 또는 변경대상판매회사가 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경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을 위하여 해당 펀드의 계좌정보확인서 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펀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산일 또는 결산일 이전 1영업일인 경우
2. 압류, 가압류 등 투자자의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
3. 일부 좌(주)에 대하여만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4. 변경대상판매회사가 해당 펀드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협회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투자자가 판매회사 변경을 신청한 경우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판매회사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을 신청한 펀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변경대상판매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불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협회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판매회사 또는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그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불가능사유가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투자자에게 유선,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변경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1.21]

**제4-114조(변경절차)** ① 변경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을 위하여 해당 펀드의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판매회사로부터 발급한 계좌정보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거래할 수 있는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토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0.1.21]

**제4-115조(변경수수료 금지)** 판매회사는 판매회사 변경의 절차를 이행하는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징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0.1.21]

**제4-116조(환매수수료 등)** ① 판매회사 변경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판매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환매수수료를 징구할 수 없다.

② 판매회사를 변경한 펀드의 경우 환매수수료 면제를 위한 기산일은 해당 펀드의 최초 가입일로부터 계산한다.

[본조 신설 2010.1.21]

**제4-117조(변경대상 펀드의 자료 보고)** ① 제4-112조가 적용되는 펀드에 대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회사는 펀드의 신규 판매 또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펀드의 수수료율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수수료

등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0.1.21]

## 제5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제5-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자문회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문·투자일임 관련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가족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투자자문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하고자 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하여 매매하는 행위
3. 다른 투자자문회사 또는 투자일임회사 등과 서로 잔 후 매매정보를 공유하여 매매하는 행위

**제5-2조(계약의 체결)** 투자자문회사 또는 투자일임회사는 법 제97조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자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 가. 투자자문의 범위를 주식, 채권, 증권 관련 지수 파생상품 등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나. 투자자문의 방법을 구술, 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를 기재할 것
  - 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투자자문대상 자산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
  - 라. 해당 투자자문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 및 투자자문대상 자산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
  - 마. 투자자의 투자자문 요구 방법이나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
2. 투자일임의 범위 및 제공방법

가. 투자일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나. 투자일임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기재할 것

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투자일임대상 자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동의를 얻어 매매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

라. 주로 거래하는 투자중개회사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해당 투자일임회사와의 관계를 기재할 것

3. 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

가. 일반적인 수수료 체계를 기재할 것

나. 해당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되는 수수료 산정방법, 수수료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다. 투자일임계약의 중도해지시 수수료 산출방식 및 환급 또는 징수절차를 기재할 것

4. 투자실적 평가 및 통보 방법(투자일임계약에 한한다)

가. 투자실적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나. 투자실적 평가결과의 통보시기, 통보방법, 통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제5-3조(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보고)** ①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는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317)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시기·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6편 신탁업

**제6-1조(설정에 따른 회계처리)** ① 신탁의 설정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을 신탁하는 경우 금액이 납입되는 날

2. 금전외의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제6-2조(해지에 따른 회계처리)** ①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신탁계약에 따라 금전이 지급되는 날에 해지 처리할 것

2. 현물해지의 경우 현물이 출고되는 날에 해지 처리할 것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제6-3조(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회사는 법 제24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6-4조(신탁재산원천징수)** ①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집합투자회사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관련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탁재산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제출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6-5조(회계처리의 모범기준)** 협회는 신탁업의 신뢰성 제고 및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탁재산의 설정·해지, 운용, 평가등과 관련한 회계처리 업무에 대한 모범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6-6조(신탁업위원회 등의 설치)** 협회는 신탁업무 및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업계의 중요한 현안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7조(신탁재산 운용의 위탁)** 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제6-8조(신탁업에 관한 보고)** ①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탁업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시기·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 **제7편 채무증권 등의 장외 거래**

### **제1장 총칙**

**제7-1조(목적)** 이 편의 규정은 법 제286조제1항, 영 제307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제5-9조, 제5-15조, 제5-24조제1항 및 제2항, 제5-5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등에 따라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2조(용어의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중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권을 말한다.
2. “대표수익률”이란 협회가 지정한 채무증권을 투자매매회사 등(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 제8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투자중개회사·채권중개전문회사(이하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와 거래한 수익률을 거래대금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수익률을 말한다.
3. “호가정보”란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 중개를 위하여 제출하는 종목명, 수량, 수익률 등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4. “최종호가수익률”이란 협회에 의해 별도로 선정된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협회가 지정한 채무증권을 거래한 최종거래수익률 또는 호가수익률을 산술 평균한 수익률을 말한다.
5. “시가기준수익률”이란 협회에 의해 별도로 선정된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신용등급별·잔존만기별로 협회가 지정한 기업어음증권을 거래한 최종거래수익률 또는 호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수익률을 말한다.
6. “발행정보”란 발행기관, 발행이자율, 보증유무, 복수신용평가등급 등 채무증권 발행조건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말한다.
7. “채권중개전문회사”란 금융투자업규정 제5-10조에서 정하는 채권매매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8.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이란 채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0.2.26)
9. “채권거래인력”이란 금융투자회사에서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신설 2010.2.26)

## **제2장 채권장외거래 호가정보의 공시** (제목개정 2010.2.26)

**제7-3조(호가정보의 보고)** ①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 중개와 관련된 호가정보를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을 통하여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항에서 “은행 등”이라 한다)가 은행 등을 제외한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채권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해당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보

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등의 발생으로 호가정보의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방법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④ 제1항에 따른 호가정보의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2.26)

(본조제목개정 2010.2.26)

**제7-4조(호가정보의 공시)** ① 협회는 제7-3조에 따라 보고받은 호가정보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0.2.26)

②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협회가 호가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③ 호가정보의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2.26)

(본조제목개정 2010.2.26)

### **제3장 채권장외거래수익률 등의 공시**

**제7-5조(장외거래내역의 보고 등)** ①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장외시장에서 투자자와 채권을 매매거래하거나 중개한 경우 해당 채권거래와 관련된 건별 매매·중개거래 내역을 매매계약 체결시점부터 15분 이내에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금융투자업규정 제5-6조에 따른 매매약정단가는 채권의 이자지급방법 및 원금상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4에서 정하는 “채권수익률의 가격환산 산식”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산출된 단가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는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1. 미래현금흐름(이자 및 원금) 계산시 원미만 소수점 처리

가. 복리채, 복·단리채 : 산정된 원리금의 원미만 절사(단, 발행자가 원미만 금액을 절상하여 원리금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절상)

나. 이표채, 분할상환채 : 산정된 원리금의 원미만 사용(단, 발행자가 원미만 금액을 절상(사)하여 원리금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절상(사))

2. 일자계산의 처리 : 역에 의한 일자를 사용(윤년인 경우에는 366일 사용)

3. 이자지급 주기의 현금흐름 할인 방식

가.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채(할인채, 단리채, 복리채 등)미래현금흐름 할인

- 1) 연단위 기간 : 복리할인
- 2) 연단위 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

나. 이표채 미래현금흐름할인

- 1) 이자지급 단위기간 : 복리할인
- 2) 이자지급 단위기간 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단, 발행자가 정한 현금흐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단리 할인)

다. 거치 및 원금분할상환채권 미래현금흐름 할인

- 1) 현금흐름발생 단위기간 : 복리할인
- 2) 현금흐름발생 단위기간미만의 단수기간 : 단리할인(단, 발행자가 정한 현금흐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단리 할인)

③ 금융투자업규정 제5-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투자자조건부매매 현황 및 기관간조건부매매 중개내역의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5-56조 제1항에 따른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매매거래의 중개내역의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6조(거래수익률 등의 공시)** ① 협회는 제7-5조에 따라 보고받은 채권거래 및 조건부매매 관련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1. 장외거래 대표수익률
2. 종류별·잔존기간별 가중평균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3. 종목별 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4. 기관 간 조건부매매의 중개내역
5. 그 밖에 채권장외거래 및 조건부매매 관련 정보

② 협회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익률 공시를 위하여 공시대상 채권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7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매매수익률호가 보고 및 공시)**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5-11조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 지정된 투자매매회사 등은 매매수익률 호가를 매도·매수별로 매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출한 매매수익률 호가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제7-8조(최종호가수익률의 공시)**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최종호가수익률을 전산

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1. 특정 잔존기간의 수익률
2. 잔존만기별 수익률
3. 삭제 <2009.7.21>

② 제1항에 따른 최종호가수익률의 공시와 관련하여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하는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 선정기준 및 수익률 공시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장 채권발행정보의 관리 및 공시

제7-9조(채권발행정보의 관리) 협회는 채권장외거래 및 채권장외거래수익률 공시 등에 필요한 채권발행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채권발행정보를 전산파일 등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다.

제7-10조(채권발행정보의 조회 및 확인) 협회는 제7-9조에 따라 관리하는 채권발행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발행인 또는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채권발행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11조(채권발행정보의 공시) 협회는 제7-9조에 따라 관리하는 채권발행정보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 제5장 기업어음증권 거래 등의 공시

제7-12조(기업어음증권의 거래방법 등) ①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기업어음증권을 실물 또는 통장(증권카드를 포함한다) 거래방식으로 매매 또는 중개하며, 기업어음증권 실물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기업어음증권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통장 또는 해당 기업어음증권의 여백에 복수신용평가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복수신용평가등급과 수익률 등을 영업점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복수신용평가등급의 변경이나 기업어음증권의 상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13조(매매단가의 계산 등)** ① 기업어음증권의 매매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매매단가 = 액면금액 - (액면금액×수익률×기간÷365)

②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매출한 기업어음증권을 해당 기업어음증권의 만기일 전에 투자자가 재매입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단가의 산정에 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할인을 받은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기업어음증권을 상환된 것으로 처리하고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7-14조(거래내역 보고)**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기업어음증권을 거래한 경우 해당 기업어음증권 거래와 관련된 내역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5조(대표수익률 등의 공시)** 협회는 제7-14조에 따라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기업어음증권 관련정보를 활용하여 거래종류별·잔존기간별로 대표수익률 등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이 경우 공시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6조(최종호가수익률 등의 공시)** ① 협회는 기업어음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 및 시가기준수익률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종호가수익률 및 시가기준수익률의 공시와 관련하여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하는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의 선정기준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7조(발행정보의 보고)**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기업어음증권을 할인 또는 중개하거나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인이 만기 전에 자기가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관련정보를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8조(발행정보의 관리 및 조회)** ① 협회는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정보를 전산매체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기업어음증권 발행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인 또는 채권거래 금융

투자회사에 대해 발행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6장 금리선물의 최종결제가격산정 기준수익률 공시

제7-19조(목적) 이 장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의 금리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최종결제가격 산출시에 적용되는 국채의 기준수익률을 산정·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27)

제7-20조(수익률 보고회사의 지정 등) ① 국채수익률 보고회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권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의 국고채전문딜러로 한다.

② <삭제 2011.4.27>

③ 수익률 보고회사가 국고채전문딜러의 지정취소 및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수익률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월 3회 이상 보고를 누락하거나 제7-22조제2항에서 정한 수익률 보고시한을 초과한 경우 협회는 수익률 보고회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익률 보고회사는 수익률 보고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21조(수익률 보고대상 채권 등) ① 국채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은 한국거래소가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 채권으로 한다.

② <삭제 2011.4.27>

제7-22조(기준수익률의 산정 및 공시) ① 수익률 보고회사는 매 영업일(거래소 휴장일은 제외한다) 11시 30분, 15시 30분 현재의 수익률을 협회에 보고한다. 다만, 금리선물 최종거래일에는 10시, 10시 30분, 11시 현재의 수익률을 추가로 보고한다.

② 수익률 보고시한은 제1항에 따른 보고기준 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로 한다.

③ 협회는 보고된 국채 수익률 중에서 상하 각 5개의 수익률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4사5입 한다)하여 기준수익률을 산정하고, 동 수익률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각 보고기준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발표한다. (개정 2011.4.27)

## 제7장 채권평가회사의 평가가격 모니터링

**제7-23조(목적)** 이 장의 규정은 협회가 법 제26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의 채권평가가격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24조(평가가격의 제출)** ① 채권평가회사는 매일의 채권평가가격 등을 다음 영업일 08:30까지 전산단말기 등을 통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평가 기준수익률(협회가 정한 채권 종류별 잔존만기별로 채권평가회사가 제출하는 시장 참고수익률을 말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은 당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9.7.21)

② 제1항에 따라 채권평가회사가 협회에 제출하는 채권평가가격 등에는 평가일자, 종목명, 표준코드 등 채권의 식별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채권평가가격,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등의 제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21)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채권평가회사가 제출한 채권평가가격,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09.7.21)

**제7-25조(평가가격의 조회 및 확인)** 협회는 채권평가가격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유선 등의 방법으로 채권평가회사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의 조회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26조(협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평가 모니터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채권평가가격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채권평가회사의 이의 신청시 이에 대한 조정
2. 모니터링 기준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채권평가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할 수 있다.

**제7-27조(평가가격의 모니터링)** ① 협회는 채권평가가격의 모니터링 결과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하여 채권평가회사에게 채권가격평가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 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채권평가가격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채권평가회

사에 통보할 수 있다.

**제7-28조(시정권고)** ① 협회는 채권평가가격의 모니터링 결과 명백한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의 시정 권고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9조(이의신청)** ①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의 시정권고, 모니터링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고일 또는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채권평가회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협회는 협의회에서 채권평가회사의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채권평가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평가회사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심의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③ 채권평가회사는 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결과 접수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30조(모니터링 기준 및 결과 공표)** ① 협회는 채권평가가격 모니터링 기준을 공표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채권평가가격 모니터링 결과를 매분기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 **제8장 기타 장외거래 공시**

**제7-31조(대차거래내역 공시 등)** ① 영 제182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등은 당일 중 발생한 증권의 대여현황과 체결된 대차거래증권의 종목, 수량 등의 거래내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차거래내역 공시사항의 세부항목 및 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7-32조(양도성예금증서 거래내역 공시 등)**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거래한 경우 해당 양도성정기예금증서의 거래와 관련된 내역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및 공시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장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본장 신설 2010.2.26]

**제7-33(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지원 범위)**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은 채권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중개 업무를 위한 호가정보 등의 탐색 및 거래상대방과의 협상 등 (거래의 체결 및 결제는 제외한다)을 지원한다.

[본조 신설 2010.2.26]

**제7-34(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 신고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를 신고하여야 하며,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 변경시 지체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는 채권거래인력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소속회사 등의 변경시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0.2.26]

**제7-35(호가정보 보고의 갈음)**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을 통해 거래상대방과 호가정보를 교환(일방의 호가정보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으로써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2.26]

**제7-36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협회는 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거래전용시스템 이용자의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이 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2.26]

## **제8편 보칙**

**제8-1조(내부통제)** 금융투자회사는 경영건전성 제고 및 관계법규의 준수 등을 위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참조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8-2조(조사 및 제재 등)** ① 협회는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의 규정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8-3조(자료제출)** ① 협회는 이 규정의 시행 및 금융투자회사 영업행위의 건전성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에게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서식, 제출주기 등은 협회장 또는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4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기준)** 집합투자회사는 협회장이 정하는 표준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위험관리기준에 참고하여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제8-5조(사고증권 신고)** 금융투자회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을 발견하거나 증권이 도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6조(준법감시인협의회의 설치)**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준법감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및 업계 주요 현안의 공유를 위하여 준법감시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7조(업무위탁의 기준)** 협회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8조(저작권 등)** 협회가 발표 및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협회에 귀속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0.5.19]

**제8-9조(자료사용의 제한)** ① 협회 임직원은 협회장의 승인 없이 공시·통계자료(이하 이 편에서 “정보”라 한다)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상업적 혹은 언론 보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언론기관이 보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2항의 정보 외에 별도의 요청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협회장의 승인 없이 본래 요청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가공하거나 임의로 배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0.5.19]

**제8-10조(확인서 제출 및 시정요구 등)** ① 협회는 상업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내용에 따라 관련 관계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배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단·변경·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구받은 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5.19]

**제8-11조(권한의 위임)** 협회장 또는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5.19]

## **부 칙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채권장의거래공시 등에 관한 규칙', '금리선물의 최종 결제가격 산정기준 수익률 공시에 관한 규칙', '증권회사의 어음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 '증권업 신용정보 관리규정'
2.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선물협회의 '광고에 관한 규칙', '투자조언행위 규범', '선물업자 임직원 징계기록 관리지침'
3.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운용협회의 '간접투자 광고에 관한 규정', '간접투자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공시 및 통계자료 등에 관한 규정', '간접투자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정',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위험관리기준', '업무규정', '준법감시인협의회 규정'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규정에 따른 광고 등 신고, 신청, 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부칙 중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5조(조사분석업무에 관한 집합투자회사의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2편 제2장은 규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원채용금지에 관한 집합투자회사 등의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집합투자회사, 전업 투자자문회사·투자일임회사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2-71조제1항 제2호는 이 규정 시행일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시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09.2.26)**

이 규정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호, 제2-17조 및 제2-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영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3.17)**

이 규정은 200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3.24)**

이 규정은 200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5.29)**

이 규정은 200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7.21)**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7.24)**

이 규정은 200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8.28)**

이 규정은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및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제3-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9.25)**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10.26)**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10.27)**

이 규정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0조제1항, 제4-81조, 제4-81조의2, 제4-82조제1항, 제4-83조, 제4-84조제1항, 제4-85조제1항 및 제4-8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일자로 발표되는 운용실적 비교공시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09.11.16)**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1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7조, 제2-18조, 제2-25조, 제2-69조, 제 2-70조 및 <별지 제17호> 중 개정 규정은 2010년2월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전문인력규정 부칙(2009.12.1) 중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자는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본다.

## **부 칙(2010.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8호 및 제 9호, 제7-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7-4조, 제7-33조부터 제7-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3.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4.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6.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7.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9.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9.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금융투자회사와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법 제46조의2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5조 제5항 및 제6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규정 시행당시 금융투자회사와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법 제46조의2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투자자
2.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한 주식워런트 증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투자자

## **부 칙 (201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투자권유대행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2-18조제3호에 따라 금융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규정 제2-18조제2호에 따른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수 있는 자격을 포함한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2-18조제3호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라목의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 금융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펀드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전문인력 규정 부칙(2009.12.1)에 따라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투자자문·투자일임 등록교육 또는 신탁 등록교육을 이수한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 제2-18조제1호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투자자문·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수 없다.

제4조(투자권유대행인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권유대행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연도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및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 **부 칙 (201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6조제3항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7.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8.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9.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9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1.17)**

이 규정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2.1)**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3.9)**

이 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3.29)**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4.13)**

이 규정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4.24)**

이 규정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7.10)**

이 규정은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09.11.16 전면개정, 2010.9.2 개정, 2010.10.25 개정, 2011.7.28 개정, 2011.10.27 개정, 2012.3.9 개정)

##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 본 설명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거래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국 금 융 투 자 협 회

※ 본 위험고지서 및 설명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귀하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위험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I. 장내파생상품거래 유의사항

II. 장내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서

III. 장내파생상품거래 설명서

1.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정의

2. 거래상품 주요 내용

A. 주식상품거래

a-1 주가지수선물거래

a-2 주가지수옵션거래

a-3 주식선물거래

a-4 주식옵션거래

B. 금리상품거래

C. 통화상품시장거래

c-1 통화선물거래

c-2 통화옵션거래

D. 일반상품거래

E. 선물스프레드거래

F.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3.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개요

## I. 장내파생상품거래 유의사항

장내파생상품거래는 그 구조나 위험 등에 있어서 주식, 채권 등의 현물거래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행하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및 투자목적·자금규모·투자경험 등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투자경험, 투자목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가?
2. 투자원금이나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용의가 있는가?
3. 장내파생상품의 상품구조 및 거래를 개시한 이후 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가?
4. 회사의 장내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내게 제공하는 당해 장내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 및 설명서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내가 직면하게 될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5.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을 알고 있는가?

본 위험고지서 및 설명서의 목적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숙지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게 심도 있는 상담을 요청함으로써 고객의 상황에 맞는 투자를 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 II. 장내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서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7조, 영 제53조, 및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규정에 의하여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와 장내파생상품 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로 함)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손실금액이 증가하거나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등의 변동으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탁증거금이 인상되는 경우 귀하는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예탁하여야 합니다.
3.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기관투자자가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귀하의 미결제약정 그 밖에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의 거래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선물거래에 있어서 가격제한폭까지 움직였거나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부재 등의 경우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6. 거래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액·잔량 등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귀하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8. 거래소의 회원인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9. 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옵션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만기시 옵션이 행사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게 됩니다.
  - 콜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권리
  - 콜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의무
  - 풋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권리
  - 풋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의무
10. 옵션매수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수를 위하여 지불하였던 금액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수한 옵션이 만기시에 전혀 가치가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11. 옵션매수자는 만기 이전에 당해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수자가 당해 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2. 옵션매도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도의 대가로 수령하였던 매도대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도한 옵션의 만기시 가격이 예상 방향과 반대로 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손실액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13. 옵션매도자는 만기 이전에 당해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당해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도자가 당해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14. 일반적으로 옵션은 행사할 가치가 있을수록(내가격옵션) 옵션가격(프리미엄)이 높고 행사할 가치가 없을수록(외가격옵션) 옵션가격은 낮습니다. 만일 고객께서 단지 옵션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옵션을 매수하신다면 옵션가격과 거래비용 전체를 손해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들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제도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고지서는 장내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 내용이나 장내파생상품 관련 법령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Ⅲ. 장내파생상품거래 설명서

여기서 설명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제도는 장내파생상품관련 법령 개정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령의 개정에 주의하시고  
금융투자회사에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정의

- ▶ 거래소가 개설한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 ▶ '선물거래'란 ① 당사자가 장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거래 또는 ② 당사자가 기초자산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지수 등의 수치와 장래의 특정 시점의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되는 현금을 수수할 것  
을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 '옵션거래'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의 매매거  
래 등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상대방은 당사자 일  
방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거래상품 주요내용

##### A. 주식상품거래

##### a-1. 주가지수 선물거래

##### (1) 기초자산

- ▶ 코스피200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코스피200입니다.
- ▶ 스타지수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스타지수입니다.

##### (2) 거래수량단위(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최소단위의 수량을 말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는 1계약이며, 1계약의 금액은 가격에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으로 합니다. (개정 2011. 7.28)

- ▶ 거래승수는 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에는 50만으로 하고, 스타지수선물  
거래의 경우에는 1만으로 합니다. (개정 2011. 7.28)

##### (3) 결제월 및 거래기간

- ▶ 결제월은 3월, 6월, 9월 및 12월(이하 '분기월'이라 합니다)입니다. 결제월의

수는 4개이며,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1년입니다.

(4) 호가가격단위(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0.05
- ▶ 스타지수선물거래의 경우 0.50

(5)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 ▶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겨집니다)이며,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입니다.

(6) 가격제한폭, 상한가 및 하한가

- ▶ 가격제한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정규거래의 경우 기준가격×가격제한비율(10%)
- ② 글로벌거래의 경우 기준가격×가격제한비율(5%)

- ▶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입니다.

- ▶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이 됩니다.

#### a-2. 주가지수옵션거래

(1) 기초자산 및 거래수량단위

- ▶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기초자산은 코스피200입니다.
- ▶ 거래수량단위는 1계약이며, 1계약의 금액은 가격에 거래승수(500,000)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개정 2012.3.2)

(2) 결제월 및 거래기간

- ▶ 결제월은 매월이며 결제월의 수는 분기월 중 2개와 그 밖의 월 중 2개로 합니다.
- ▶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분기월의 경우 6개월, 그 밖의 월의 경우 3개월입니다.

(3) 호가가격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호가의 가격이 3포인트 미만인 경우 0.01포인트
- ▶ 호가의 가격이 3포인트 이상인 경우 0.05포인트

(4)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 ▶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겨집니다)이며, 권리행사결제일은 권리행사일의 다음 거래일입니다.

### a-3. 주식선물거래

#### (1) 기초자산

- ▶ 주식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선물거래의 기초주권
(예시)* 주식회사KB금융지주, 삼성전자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신한금융지주회사, SK텔레콤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주식회사, LG전자주식회사 등 ( )개사
*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 #### (2) 거래수량단위는 1계약이며, 1계약의 금액은 가격에 거래승수(10)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 (3) 결제월 및 거래기간

- ▶ 결제월은 분기월입니다. 결제월의 수는 4개이며,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1년입니다.

#### (4) 호가가격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호가의 가격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원
- ▶ 호가의 가격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인 경우 25원
- ▶ 호가의 가격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 50원
- ▶ 호가의 가격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250원
- ▶ 호가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500원

#### (5)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 ▶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겨집니다)이며,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입니다. 다만, 기초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경우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초주권에 관한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가격제한폭, 상한가 및 하한가

- ▶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가격제한비율(15%)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입니다.
- ▶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입니다.

- ▶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이 됩니다.

#### a-4. 주식옵션거래

##### (1) 기초자산

- ▶ 주식옵션거래의 기초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옵션거래의 기초주권
(예시)* 주식회사KB금융지주, 삼성전자주식회사, SK텔레콤주식회사, 주식회사포스코, 주식회사케이티,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기아자동차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한항공, 삼설물산주식회사 등 ( )개사
*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 ##### (2) 거래수량단위는 1계약이며, 1계약의 금액은 가격에 거래승수(10)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개정 2011. 10.27)

##### (3) 결제월 및 거래기간

- ▶ 결제월은 매월입니다. 결제월의 수는 분기월 중 2개와 그 밖의 월 중 2개입니다.
- ▶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분기월의 경우에는 6개월, 그 밖의 월의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 (4) 호가가격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호가의 가격이 1천원 미만인 경우 10원
- ▶ 호가의 가격이 1천원 이상 2천원 미만인 경우 20원
- ▶ 호가의 가격이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인 경우 50원
- ▶ 호가의 가격이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경우 100원
- ▶ 호가의 가격이 1만원 이상인 경우 200원

##### (5)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 ▶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겨집니다)이며, 권리행사결제일은 권리행사일의 다음 거래일입니다. 다만, 기초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경우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초주권에 관한 주식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B. 금리상품선물거래

(1) 기초자산

- ▶ 3년 국채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액면 100원, 만기 3년, 표면금리 연5% 및 6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표준물입니다.
- ▶ 5년 국채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액면 100원, 만기 5년, 표면금리 연5% 및 6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표준물입니다.
- ▶ 10년 국채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액면 100원, 만기 10년, 표면금리 연5% 및 6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표준물입니다.
- ▶ <삭제 2011.4.27>

(2) 거래단위

- ▶ 국채선물거래의 경우 액면 1억원
- ▶ <삭제 2011.4.27>

(3) 거래수량단위는 1계약이며, 1계약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국채선물거래의 경우 가격×거래승수(100만)
- ▶ <삭제 2011.4.27>

(4) 결제월 및 거래기간

- ▶ 결제월은 분기월입니다.
- ▶ 결제월의 수 및 거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채선물거래의 경우 결제월의 수는 2개이며,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6개월입니다.
  - ② <삭제 2011.4.27>

(5) 호가가격단위는 0.01입니다.

(6) 가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 국채선물거래의 경우 액면 100원당 원화
- ▶ <삭제 2011.4.27>

(7)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 ▶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겨집니다)이며,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입니다.

(8) 최종결제

- ▶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9) 3년 국채선물의 협의대량거래(Block Trades)**

- ▶ 경쟁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에 종목, 가격 및 수량을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하여 3년국채선물이 체결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 ▶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수량은 500계약이상 3,000계약 이하입니다.
- ▶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시간은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후 10분부터 종가단일가 호가시간의 개시(최종약정가격을 접속거래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거래시간의 종료로 합니다) 전 10분까지의 시간 중에 단일가 호가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C. 통화상품거래**

**c-1. 통화선물거래**

**(1) 기초자산**

- ▶ 통화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미국달러, 엔 및 유로입니다.

**(2) 거래단위**

- ▶ 미국달러선물거래의 경우 1만달러
- ▶ 엔선물거래의 경우 1백만엔
- ▶ 유로선물거래의 경우 1만유로

**(3) 거래수량단위는 1계약이며, 1계약의 금액은 가격에 거래승수(1만)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4) 결제월 및 거래기간**

- ▶ 결제월은 매월이며 결제월의 수는 분기월 중 4개와 그 밖의 월 중 4개로 합니다.
- ▶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분기월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그 밖의 월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5) 호가가격단위는 0.10입니다.**

**(6) 가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 미국달러선물거래의 경우 1달러당 원화
- ▶ 엔선물거래의 경우 100엔당 원화
- ▶ 유로선물거래의 경우 1유로당 원화

**(7)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 ▶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

당겨집니다)이며,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입니다.

**(8) 협의대량거래(Block Trades)**

- ▶ 경쟁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에 종목, 가격 및 수량을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하여 미국달러선물거래, 엔선물거래 및 유로선물거래가 체결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 ▶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수량은 1,000계약이상 15,000계약 이하입니다.
- ▶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시간은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후 10분부터 종가단일가 호가시간의 개시(최종약정가격을 접속거래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거래시간의 종료로 합니다) 전 10분까지의 시간 중에 단일가 호가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9) 미국달러선물거래의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

- ▶ 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을 최종거래일 이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달러선물거래의 종목,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 체결되는 거래를 말하며 해당 미결제약정수량에 관한 미국달러와 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합니다.
-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신청수량은 최소 1계약이상 15,000계약 이하입니다.
-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신청시간은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후 10분부터 종가단일가 호가시간의 개시(최종약정가격을 접속거래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거래시간의 종료로 합니다) 전 10분까지의 시간 중에 단일가 호가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c-2. 통화옵션거래**

(1) 기초자산은 미국달러입니다.

(2) 거래단위는 1만 미국달러입니다.

(3) 거래수량단위는 1계약이며, 1계약의 금액은 가격에 거래승수(1만)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4) 결제월 등

- ▶ 결제월은 매월이며 결제월의 수는 분기월 중 2개와 그 밖의 월 중 2개로 합니다.
- ▶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분기월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하고 그 밖의 월의 경

우에는 3개월입니다.

(5) 호가가격단위는 0.10이며 가격은 원화로 표시합니다.

(6)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 ▶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겨집니다)이며, 권리행사결제일은 권리행사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입니다.

## D. 일반상품거래

(1) 기초자산

- ▶ 금선물거래와 미니금선물거래의 경우 순도 99.99%의 금괴
- ▶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돈육대표가격

(2) 거래단위

- ▶ 금선물거래의 경우 중량 1천그램, 미니금선물거래의 경우 중량 1백그램
- ▶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중량 1천킬로그램

(3) 거래수량단위는 1계약이며, 1계약의 금액은 가격에 거래승수(금선물과 돈육선물의 경우 1천, 미니금선물의 경우 1백)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4) 결제월 및 거래기간

- ▶ 결제월은 매월이며 결제월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금선물거래와 미니금선물거래의 경우 2월, 4월, 6월, 8월, 10월 및 12월 중 6개와 그 밖의 월중 1개
  - ②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분기월 중 2개와 그 밖의 월 중 4개
- ▶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금선물거래와 미니금선물거래의 경우 결제월이 2월, 4월, 6월, 8월, 10월 및 12월인 경우에는 1년, 그 밖의 월인 경우에는 2개월
  - ②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6개월

(5) 호가가격단위와 가격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금선물거래와 미니금선물거래의 경우 호가가격단위는 10원, 가격은 1그램당 원화로 표시
- ▶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호가가격단위는 5원, 가격은 1킬로그램당 원화로 표시

(6)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 ▶ 일반상품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각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겨집니다)입니다. 다만, 휴장일 및 거래소가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이 변경됩니다.

- ▶ 일반상품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각 결제일의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 거래일로 합니다. 다만,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돈육대표가격이 최종거  
래일의 다음 거래일까지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소 규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최종결제일을 변경합니다.

## E. 선물스프레드거래

※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의 2개 종목 중 동일한 수량으로 일방 종목의 매  
도와 타방 종목의 매수를 동시에 성립시키기 위하여 해당 2개 종목의 가격  
차이("선물스프레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1)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

- ▶ 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원월종목 간 1개
- ▶ 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거래, 스타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주식선물스프레  
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각 원월종목 간 3개 (개정 2011.4.27)
- ▶ 돈육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각 원월종목 간 5개
- ▶ 금선물스프레드거래 및 미니금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각  
원월종목 간 6개
- ▶ 미국달러선물스프레드거래, 엔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유로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최근월종목과 각 원월종목 간 7개

### (2)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표시

- ▶ 호가가격단위 및 거래수량단위는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거래의 호가  
가격단위 및 거래수량으로 합니다.
- ▶ 가격은 0, 양수 또는 음수로 표시합니다.

## F.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방법이 표준화된 미국달러선물거래와는 별도로 거래  
당사자가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1)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미국달러입니다.

(2) 거래단위는 1만 미국달러입니다.

(3) 거래수량단위는 1계약이며, 1계약의 금액은 가격에 거래승수(1만)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4) 호가가적단위는 0.10입니다.

(5)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 거래당사자는 플렉스협의를거래 신청일의 다음 거래일부터 미국달러선물 연속 6개 결제월종목 중 마지막 결제월종목의 최종거래일까지의 거래일 중 매거래일별로 최종거래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달러선물의 각 결제월종목의 최종거래일 및 최종거래일의 전후 1거래일은 제외됩니다.

▶ 최종결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종목의 경우 최종거래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
- ② 현금을 수수하는 종목의 경우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6) 플렉스협의를거래 신청시간 및 신청수량

▶ 플렉스협의를거래의 신청시간은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후 10분부터 종료 전 20분까지의 시간 중에서 미국달러선물거래의 단일가호가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미국달러선물거래의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 플렉스협의를거래의 신청수량은 10계약 이상, 5,000계약 이하입니다.

### 3.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개요

#### A. 기본예탁금

▶ 위탁자가 미결제약정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탁하는 때에는 사전에 당해 회사가 정하는 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장내파생상품계좌의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1. 7.28)

#### B. 위탁증거금의 예탁

- 위탁자는 장내파생상품계좌별로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합니다.
- 위탁증거금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기 이전에 예탁받는 위탁증거금(사전위탁증거금)과 정규거래시간의 종료후에 예탁받는 위탁증거금(사후위탁증거금)으로 구분됩니다.
- 거래소 규정에 의한 현금예탁필요액을 제외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대용증권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1. 10.27)

▶ 사전위탁증거금은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①+②+③) 이상으로 합니다. (개정 2011. 10.27)

① 위탁받은 주문에 대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선물거래 : 위탁금액 × 위탁증거금률\* (개정 2011. 10.27)

\* 위탁증거금률은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나. 선물스프레드 거래 : 위탁수량 × 계약당 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 (개정 2011. 10.27)

\* 계약당 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은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다. 옵션거래의 매수 : 위탁금액 (개정 2011. 10.27)

라. 옵션거래의 매도 : 위탁수량 × 거래승수\* × 옵션가격변화분(단, 옵션가격 변화분에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이 거래소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당최소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계약당최소증거금액으로 합니다) (개정 2011. 10.27)

\* 거래승수는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②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기초자산의 가격·수치, 변동성 등이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후보다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미결제약정 등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위험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011. 10.27)

③ 결제예정금액(결제예정금액(장중선물순손실금액, 장중옵션순매수대금, 당일 결제금액 및 익일결제금액을 말하며, 다만, 사전위탁증거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익일결제금액은 제외합니다.) (개정 2011. 10.27)

④ <삭제 2011.10.27>

▶ 사후위탁증거금

① 사후순위험위탁증거금액(기초자산의 가격·수치, 변동성 등이 당일의 장종료 후보다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미결제약정 등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위험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위탁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1. 10.27)

②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은 당일 중 회사가 정하는 시간 또는 다음 거래일의 10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입니다.

### C.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및 추가예탁 등

▶ 회사는 위탁자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글로벌거래와 관련하여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글로벌거

- 래에 참여하는 위탁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1. 10.27)
- ▶ 장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예탁총액이 유지위탁증거금보다 적거나 예탁현금이 유지현금예탁필요액보다 적은 경우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1. 10.27)
  - ▶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은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거래일의 12시입니다. 다만, 회사는 위탁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개정 2011. 10.27)
  - ▶ 회사는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 없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및 외화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 D. 결제

##### (1) 선물거래의 결제 방법

###### ▶ 일일정산

- ① 회사는 선물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거래일마다 장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정산가격으로 위탁자와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글로벌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는 글로벌거래의 종료 후에 개시되는 정규거래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 ② 이에 따라 회사와 위탁자는 당일차금(당일의 약정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과 갱신차금(직전거래일의 정산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합니다.

###### ▶ 최종결제

- ① 미결제약정을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한 경우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거나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최종결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금을 수수하는 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차금(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수수하는 방법으로,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해당 기초자산과 최종결제대금을 거래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하게 됩니다.

최종결제방식	대상 거래
현금의 수수	(예시)* 코스피200선물, 스타지수선물, 3년국채선물, 미니금선물 등
기초자산의 수수	(예시)* 미국달러선물, 엔선물, 유로선물, 금선물 등

\*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 (2) 옵션거래의 결제방법

### ▶ 옵션대금의 수수

- ① 회사와 위탁자는 옵션대금(옵션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약정가격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합니다. (개정 2011. 10.27)

### ▶ 위탁자의 권리행사 신고

- ① 위탁자가 권리행사를 하려면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게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화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종료 후부터 장종료후 30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1. 10.27)
- ②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의 종료시점에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도 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그 밖에 비용을 차감한 후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종목은 권리행사의 신고가 없어도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 위탁자가 권리행사의 포기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권리행사결제

- ① 회사와 위탁자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거나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결제를 합니다.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권리행사차금(행사가격과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과의 차이에 권리행사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해당 기초자산과 권리행사결제대금(행사가격에 권리행사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을 거래소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개정 2011. 10.27)

최종결제방식	대상 거래
현금의 수수	(예시)* 코스피200옵션 등
기초자산의 수수	(예시)* 미국달러옵션 등

\*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 (3) 결제시한

- ▶ 회사와 위탁자 간의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은 수수일의 12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통화상품거래 및 금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최종결제일 또는 권리행사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을 수수시한으로 합니다. (개정 2011. 10.27)

\*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제대금, 권리행사차금 및 권리행사 결제대금의 총 지급액과 총수령액의 차감액

\*\*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각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

- ▶ 위의 수수시한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E. 거래시간

### (1) 정규거래시간

- ▶ 정규거래시간은 9:00 ~ 15:15까지입니다. 다만, 돈육선물시장의 경우에는 10:15 ~ 15:15분까지입니다.
- ▶ 위의 정규거래시간에도 불구하고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종목은 제외되며,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에는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거래의 2개 종목 중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이 있는 종목으로 합니다)의 정규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주식상품시장의 경우 9:00 ~ 14:50
  - ② 금리상품시장, 통화상품시장, 금선물시장의 경우 9:00 ~ 11:30
  - ③ 미니금선물시장의 경우 9:00 ~ 15:15
  - ④ 돈육선물시장의 경우 10:15 ~ 15:15
  - ⑤ 선물스프레드시장의 경우 ①부터 ④까지의 거래시간 중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거래의 종목에 해당하는 거래시간

### (2) 글로벌거래시간

- ▶ 코스피200선물시장의 글로벌거래시간은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입니다. 다만,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경우와 글로벌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글로벌 거래를 하지 아니합니다.

### (3) 단일가호가시간

▶ 단일가호가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최초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정규거래시간의 개시전 60분간
- ② 시스템장애 발생 등 거래의 임의적 중단\* 이후 거래가 재개되어 최초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시간
- ③ 서킷브레이커 발동 등 거래의 필요적 중단\* 이후 거래가 재개되어 최초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재개한 때부터 10분간
- ④ 종가단일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규거래시간 종료전 10분간

* 중단사유는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

## 해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본 고지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와 해외파생상품거래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별표 2-1>에 의한 위험고지 적용(신설 2009.8.28)

해외파생상품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투자경험과 자금력을 필요로 하므로 귀하는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래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함은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해당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를 말합니다.
  - ①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하는 거래
  - ②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약정수치)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 ③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술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 ④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 또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해외파생상품거래
2. 해외파생상품거래는 높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증거금의 규모는 계약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으나, 시장의 상황이 자신에 불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실로 상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4.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손실금액이 증가하거나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등의 변동으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탁증거금이 인상되는 경우 귀하는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예탁하여야 합니다.
5.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선물가격 또는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등의 급변동으로 인한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미결제약정을 임의의 시점에 시장가주문으로 처분하거나, 그 밖에 예탁자산의 전부 또는 임의로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해외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률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해외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상황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았던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으며, stop loss주문이나 stop limit 주문을 할 경우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거래체결이 불가능하거나 귀하가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8. 해외파생상품거래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됩니다.
9.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해외파생상품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합니다.
10. 해외선물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외시장에서 거래되

는 해외파생상품거래 경우 공인된 선물거래소의 거래와는 다른 제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국내외의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에 대한 거래한도 제한 등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2. 거래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고 등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귀하가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14.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등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시스템 고장으로 요구대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문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도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들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제도 및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계약 내용이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회사에게 확인한다.

성명 또는 법인명 : \_\_\_\_\_ (인/서명)

주소(본사소재지) : \_\_\_\_\_

<별표 2-1> (신설 2009.8.28, 2012. 1.17 개정)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본 고지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투자경험과 자금력을 필요로 하므로 귀하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래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한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고지서는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개정 2012. 1.17)

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라 함은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거래를 말합니다. (개정 2012. 1.17)

### ① 거래대상, 거래단위 및 위탁증거금

- ▶ 거래대상은 \_\_\_\_\_입니다.
- ▶ 거래단위는 기준통화의 100,000 단위이며, 거래단위는 「계약」으로 표시됩니다.
- ▶ 위탁증거금은 거래단위당 미화 \_\_\_\_\_달러입니다.
- ▶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의 \_\_\_\_\_분의 \_\_\_\_\_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 ② 거래시간

- ▶ 거래시간은 한국시간 월요일 오전\_\_시에 시작되어 토요일 오전\_\_시까지입니다. 회사는 거래시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며, 거래시간은 서버타임 적용시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거래비용

- ▶ 1계약당 위탁수수료는 \_\_\_\_\_입니다.
- ▶ 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호가스프레드(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를 말합니다) 등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 ④ 호가제시방법

▶ 회사는 (변동스프레드 또는 고정스프레드) 방식으로 호가를 제시합니다.

2.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높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위탁증거금의 규모는 계약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높은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으나, 시장의 상황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급격한 손실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실로 상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4. 외환시장의 높은 가격변동성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탁자산 평가액이 회사가 정한 유지증거금을 하회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주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매매는 시장가 주문으로 처리되며, 체결가격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은 유지증거금 수준 이하 또는 "0"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귀하에게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이 제공하는 고시환율을 제시하며 동 고시환율은 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나 타사의 고시환율, 실제 체결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2012. 1.17)
6.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 거래상대방이 됩니다. 귀하가 매수 또는 매도 거래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 해당 거래의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됨에 따라 귀하의 거래손익과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거래손익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 2012. 1.17)
7.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체결 예상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에 차이(slippag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변동성, 거래량 급증 또는 주문전달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그 차이는 고객이 요청한 가격에 충분한 유동성이 없는 경우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체결예상가격과 실제체결가격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이며, 귀하도 회사가 제공하는 슬리피지 선택 기능(no slippage or not)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8.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는 외환시장이 급변할 때나 유동성이 감소하는 시간에는 호가 제공이 지연 또는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았던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즉,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2. 1.17)
9. 국제 외환시장과 전산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산 장애, 인터넷장애 등으로 인한 거래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화주문 데스크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귀하의 주문을 처리할 것이나, 원활한 주문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0. 귀하가 한국시간 오전\_\_시 이후까지 미결제약정을 보유(roll-over)하면 오버나잇(overnight) 이자를 수령 또는 지급하게 됩니다.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서는 실물인수도가 없는 대신 이러한 롤오버 비용(rollover costs)을 주고 받습니다.
1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됩니다.
12.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합니다.
13.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제도는 공인된 거래소의 거래와는 다른 제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 2012. 1.17)
14. 국내외의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에 대한 거래한도 제한 등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5. 거래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고 등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귀하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자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자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17.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등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시스템 고장으로 요구대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

문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도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19. 당사 고객의 최근 4개 분기 손익계좌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중개회사의 자료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기 합니다. (신설 2012. 1.17)

	( )년( /4) 분기	( )년( /4) 분기	( )년( /4) 분기	( )년( /4) 분기
전체 대상 계좌수	( )	( )	( )	( )
이익계좌비율(%)	( )%	( )%	( )%	( )%
손실계좌비율(%)	( )%	( )%	( )%	( )%

위 사항들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제도 및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약관 및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약관 내용이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위험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회사에게 확인한다.

성명 또는 법인명 : \_\_\_\_\_ (인/서명)

주소(본사소재지) : \_\_\_\_\_

<별표 3>

##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이에 관한 선도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 및 이들 거래를 조합한 거래를 포함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러한 위험의 정도는 거래 종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위험고지에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고객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본질과 손실을 볼 잠재적인 위험의 정도를 이해하고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금융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도 있을 수 있으며, 기한전 거래종료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거래 목적, 위험을 수용하는 자신의 성향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각 거래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에 수반하는 여러 위험은 고객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들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고객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3) 고객이 알아야 하는 주요 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시장 위험(Market Risk)

이는 기초자산의 가격 등이 변동함에 따라 거래의 시장가치가 변화할 위험입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시장상황이나 변동에 따라 그 자체로서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변동성은 기초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또는 연관된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에 의하여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거래의 가치가 보다 급작스럽게, 빈번하게 또는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회사와 담보 약정을 한 때에는 그러한 약정 및 개별 거래의 조건에 따라 거래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거래를 회사가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2)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이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거래를 청산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는 위험입니다.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일반적으로 개별 고객의 특정한 요구에 맞추어 만들어지는 거래인 관계로 정해진 만기일 전에 거래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청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3) 신용 위험(Credit Risk)

이는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즉, 파산 등의 사유로 거래상대방이 그 의무를 전부 이행할 수 없게 될 위험입니다.

#### 4) 통화 위험(Currency Risk)

외국통화로 표시된 거래에서 환율 변동으로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 5) 관리 위험(Operational Risk)

이는 거래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체제나 전산 시스템이 적절하지 못함으로써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 6) 해당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주요 위험

※ 금융투자회사가 작성

#### (4) 삭제 <2009.5.29>

(4) 이 위험고지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과 그 밖의 주요한 특징을 모두 기술하고 있지 못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 본인이 해당 거래의 여러 계약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하고자 하는 거래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전문가나 그 밖에 제3자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한 이후 거래를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2009.5.29)

고객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회사에게 확인한다.

성명 또는 법인명 : \_\_\_\_\_ (인/서명)

주소(본사소재지) : \_\_\_\_\_

<별표 4>

## 외 화 증 권 거 래 설 명 서

한 국 금 융 투 자 협 회

외화증권거래는 그 구조나 위험 등에 있어서 국내주식거래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화증권거래를 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본 설명서 및 관련법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목적·자금규모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설명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외화증권거래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

## 목 차

### I. 외화증권거래의 개요

### II 외화증권거래의 위험성

### III. 외화증권거래의 통지

### ◆ 용어해설 및 손익계산 예

## I. 외화증권거래의 개요

### 1. 외화증권거래의 의미

외화증권거래란 투자자가 외국의 거래소시장 또는 국내장외시장에서 투자대상 외화증권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외화증권거래의 세부내용

#### 가. 투자대상 외화증권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객과 국내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 나. 투자한도 및 매매방법

1) 외화증권거래의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화증권 투자시 발생하는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 2) 매매방법

▶ 고객이 외화증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 다. 투자계좌의 개설

#### 1) 외화증권전용계좌의 개설

▶ 고객이 외화증권을 거래할 때는 하나 또는 복수의 회사를 지정하여 매매 및 보관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약관의 주요내용과 외화증권 거래의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투자유의사

항을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하고 이를 서명(전자서명포함) 또는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의 개설

- ▶ 회사는 고객명의(회사 등의 명의를 부기)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을 **외국환은행에** 개설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환전 및 송금하거나 회수합니다. 따라서, 상기 외화 계정을 개설하기 위한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외화증권의 보관

### 1)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 ▶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외화증권예탁자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의 외화증권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 중 한국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에 집중예탁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의 법령 또는 관행 등으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집중예탁합니다.

### 2) 한국예탁결제원이 선임할 수 있는 외국보관기관

- ▶ 한국예탁결제원이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선임할 수 있는 외국보관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
- ② 상기 ①에 해당하는 기관이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제예탁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기관
- ③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의 금융기관
  - 보관규모가 미화 100억달러 이상의 국제증권 전문보관기관
  - 국제보관업무의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증권시장 사정에 정통한 기관
  - 국제적 또는 특정권역(대륙별)에 걸쳐 보관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 ④ 상기 ①~③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으로서 특정국가에서 특화된 예탁·보관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마. 투자관련자금의 환전, 송금 및 수령

- 1) 회사는 외화증권투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고객명  
의 외화예금계정외에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환전 및 외화  
송금을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행하거나, 상기 1)의 회사 외화예금계  
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통  
보받게 됩니다.
- 3) 회사는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  
하여 외화증권의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  
거나 외국으로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 4) 회사는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고자 할 때에  
는 외국의 납입은행 등에 자기명의로 직접 외화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 5) 상기 3)에 따라 외화를 송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  
제원에 통보하게 됩니다.
- 6) 회사는 고객의 외화증권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외화를  
상기 3)의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 바. 외화증권거래의 결제

##### 1) 결제방법

- ▶ 회사는 고객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국통화로 외화증권의 국내장외  
거래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고, 해당 외국통화로 직접 결제가 불가능  
한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 2) 결제일

### ① 해외증권시장거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이하 “약정일”)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증권이 거래된 해외 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이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로 합니다. 다만, 약정일 이후 상기 결제기간 경과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 증권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국내장외거래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로 합니다.

## 사. 매매 증거금 및 수수료

▶ 외화증권거래시 매매 증거금 및 수수료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3. 기 타

고객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서면으로 해당 고객과 관련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집합투자재산의 명세서, 기준가격 대장, 운용내역서 및 이에 상당하는 서류, 집합투자재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외화증권거래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거래 회사에게 문의하시고, 외화증권의 매매 또는 취득에 따른 매매결제, 예탁·보관 및 권리행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관련 자금의 환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I. 외화증권거래의 위험성

외화증권거래에서는 해당 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손익이 발생하는 이외에, 해당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환위험 노출 및 투자환경의 상이 등 제반위험요인이 국내증권거래보다 더 많이 수반되므로, 외화증권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고객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1. 외화증권거래는 해당 통화의 예상치 못한 가치변동에 따라 환거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통화의 가치는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외화증권은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의 접근과 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3. 외화증권은 투자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제도, 법규 및 매매방식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개별증권의 거래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4. 외화증권거래는 매매방식, 배당 및 이자의 지급방법 및 공휴일에 따른 업무일 등 해당 국가의 시장관행이 국내와는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5. 시차 또는 정보전달통신상의 문제로 해당 국가의 당일 시장변화와 투자증권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투자정보의 취득이 지연되어 적기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외화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재무관련정보(회계처리방법, 기업평가의 관행 등)의 해석이 국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외화증권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설명된 사항이 외화증권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외화증권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외화증권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II. 외화증권거래의 통지

#### 1. 주요 통지내용

##### 가. 매매성립결과 통지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성립 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약정금액(수량×단가) 및 현지 수수료·제비용(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외화증권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 총 외화 결제금액, 외화환전 필요금액 등 매매 성립 내용을 통지합니다.

##### 나. 권리행사 등에 관한 통지

- 1) 회사는 고객의 외화증권 권리행사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2) 회사는 주주총회·사채권자집회·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 취득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3) 회사는 발행인으로부터 교부된 통지서 또는 자료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령한 때에는 해당 수령일로부터 이를 3년간 보관하고 고객의 열람에 제공합니다.

#### 2. 통지의 시점

##### 가. 거래의 통지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나. 월별 거래현황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 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

합니다.

#### 다. 반기별 계좌잔액·잔량현황 통지

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라. 수시통지

회사는 거래인감의 변경, 증권카드의 재발급,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간 이관·이수 및 통합계좌에서의 해체 등의 경우에 고객의 미결제약정, 현금 등의 잔액·잔량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귀하가 통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 금융투자회사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용어의 해설 】

- 외화증권 :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
- 고    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
- 외국 회사 :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 해외 증권시장 :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 해외증권시장거래 :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수탁을 받아 해외 증권시장에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거래
- 국내장외거래 : 회사와 고객이 외화증권을 국내에서 상대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중개에 의한 거래
- 외국보관기관 : 한국예탁결제원이 회사로부터 예탁 받은 고객의 외화증권을 외국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선임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등
- 외화예금계정 : 고객의 외화증권 매매 또는 외화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의 예치, 송금·수령 및 원화와 외화간 환전을 위해 고객,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외국환은행 및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

- 금융투자회사의 역외펀드 : 해외에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
- 외국의 납입은행 : 외국에서 발행되는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 외국현지의 은행
- 외국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
- 전자서명 :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 【 손익계산의 예 】

(상황1) 고객 甲은 X금융투자회사에게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IBM 주식 500주를 2008. 9. 3에 매수주문을 하고 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뉴욕현지에서 2008. 9. 5에 매매체결이 이루어지고, 결제일은 2008. 9. 7이 되었다. (2008. 9. 3 현재 IBM 주가 70달러, 환율 1달러=1,200원으로 가정)

- 1) 甲이 매수주문 후 2008. 9. 5에 IBM 주가가 1주당 71달러로 상승하여 매매가 체결된 경우 甲의 추가비용은?

▶  $500 \times 71 \times 1,200 = 42,600,000$ 원이 총매수대금임. 이에 IBM 500주 매수를 위해 당초보다 600,000원의 추가비용 발생

- 2) 甲이 매수주문 후 2008. 9. 5 환전당시 원/달러 환율이 100원(1달러=1,300원) 상승한 경우 甲의 환차손은?

▶  $500 \times 70 \times 1,300 = 45,500,000$ 원이 총매수대금임. 즉, 주가의 변동은 없으나 원화가치가 10% 하락한 경우에는 3,500,000원의 환차손 발생

(상황1) 고객 甲은 X금융투자회사에게 2008. 8. 1에 7,000달러(8,400,000원)에 매수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IBM 주식 100주를 2008. 9. 3에 매도 주문을 하였다. 뉴욕현지에서 2008. 9. 5에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고, 결제일은 2008. 9. 7이 되었다. (2008. 8. 1 및 9. 3 IBM 주가 70달러, 환율 1달러=1,200원으로 가정)

1) 甲이 매도주문 후 2008. 9. 5에 IBM 주가가 1주당 65달러로 하락한 경우 甲의 매매손실은?

▶  $100 \times 65 \times 1,200 = 7,800,000$ 원의 매도대금이 입금됨. 매수금액 8,400,000원이 7,800,000원으로 감소하여 600,000원의 매도손실 발생

2) 甲이 매도주문후 2008. 9. 5 환전당시 원/달러 환율이 100원(1달러=1,100원) 하락한 경우 甲의 환차손은?

▶  $100 \times 70 \times 1,100 = 7,700,000$ 원이 매도대금으로 입금됨. 즉, 주가의 변동은 없으나 원화가치가 10% 상승한 경우에는 700,000원의 환차손 발생

※ 상기 손익계산의 예는 특정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투자상황과는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시장상황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별표 5> (2010.9.2 개정, 2011.7.28 개정)

##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설명서

### 한 국 금 융 투 자 협 회

※ 본 거래설명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귀하가 주식워런트증권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주식워런트증권의 위험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 목 차

### I. 주식워런트증권 매매거래의 위험성

### II. 주식워런트증권의 개요

1. 기초자산
2. 주식워런트증권의 종류
3. 기본예탁금 및 거래·호가단위
4. 거래시간 및 거래중단
5. 가격제한폭 및 호가의 종류
6. 결제 및 최종거래일
7. 결제방식
8. 상장폐지 기준

### III. 용어해설

## I.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의 위험성

주식워런트증권 거래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하여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단기간내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워런트증권을 거래하시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귀하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1. 주식워런트증권은 기초자산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변동합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귀하의 예상과 달리 움직이는 경우 짧은 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2. 주식워런트증권은 회사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므로 만기시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에 상장된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책임지나 만기시 회사의 결제의무에 대해서는 보증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및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워런트증권을 매수한 경우 만기 이전에 해당 증권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산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부도, 은행거래정지, 영업정지, 파산 또는 해산,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주식워런트증권은 행사가치가 높을수록(내가격워런트) 가격이 높고, 행사가치가 낮을수록(외가격워런트) 가격이 낮습니다. 만일 고객께서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행사가능성이 낮은 주식워런트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커다란 손실을 볼 가능성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5.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나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을 발행한 상장회사로부터 배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며,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 배당청구권 등)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응증권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조기종료 주식워런트증권은 일반 주식워런트증권에 조기종료조건 (Knock-Out)이 추가로 부여된 주식워런트증권으로 조기종료조건을 충족할 경우 만기 이전이라도 강제로 증권의 효력이 종료되는 상품입니다.

▶ 따라서 조기종료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거래는 그 즉시 정지되고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되며 상장폐지 이후에는 잔존가치를 초과하는 이익획득 기회는 소멸됩니다.

▶ 조기종료 발생과 관련된 투자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자산가격이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에 도달하였어도 거래소 시스템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매매거래 정지되는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어 그 시점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거래소 시스템이 조기종료 발생을 인지한 시점'이 조기종료 발생 기준시점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거래소 시스템이 해당 조기종료 주식워런트증권을 매매거래정지한 시점이 조기종료 기준시점이므로 조기종료 직전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주문은 체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조기종료 관찰기간은 주식시장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전체이며, 시가 및 종가를 포함한 기초자산의 모든 체결가격이 조기종료 관찰가격이 되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시가단일가격이 결정되는 즉시 조기종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시가단일가 호가접수시간에 주문을 내어 정상접수되었다면 이 주문은 시가로 조기종료되기 이전의 주문이므로 정상 체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KOSPI200 주가지수의 최초값은 주식시장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개시시점인 09:00에 산출되지 않고 09:01분에 산출됩니다. 따라서 지수가 공식적으로 산출되지 않는 09:00~09:01사이에도 조기종료 주식워런트증권은 정상적으로 체결되며, 09:01분에 공표된 최초 지수로 바로 조기종료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조기종료 주식워런트 증권은 내가격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므로 일반 주식워런트증권에 비해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산

가격이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 부근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가격 급변 위험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조기종료 여부 확인방법

조기종료 여부 확인 방법
(예시)* 발행회사는 조기종료발생시 지체없이 조기종료 발생일시, 해당 종목, 평가기간 등을 공시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주문을 수탁하는 금융투자회사의 HTS나 거래소의 상장공시시스템( <a href="http://kind.krx.co.kr">http://kind.krx.co.kr</a> )에서 조기종료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조기종료 여부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 II. 주식워런트증권의 개요 (개정 2011. 7.28)

### 1. 기초자산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거래소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종료 주식워런트 증권은 KOSPI200\*에 한정됩니다.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
(예시)** (1) KOSPI100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또는 KOSPI100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2) 스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을 감안하여 거래소 규정이 정하는 종목 또는 당해 복수종목의 바스켓 (3) KOSPI200 (4) 스타지수 (5) 니케이225(Nikkei 225 Stock Average) (6) 항생지수(Hang Seng Index)

\* 추가되는 경우 회사가 자율적으로 추가 기술

\*\*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 2. 주식워런트증권의 종류

주식워런트증권은 권리유형에 따라 콜워런트(Call Warrant)와 풋워런트(Put Warrant)로 구분됩니다.

콜워런트는 기초자산을 사전에 미리 정한 가격(권리행사가격)으로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로부터 인수하거나 그 차액(만기평가가격-권리행사가격)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를 의미하며,

풋워런트는 기초자산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인도하거나 그 차액(권리행사가격-만기평가가격)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를 의미합니다.

## 3. 기본예탁금 및 거래·호가단위

### (1) 기본예탁금 및 예탁총액의 지급 (개정 2011. 7.28)

- ▶ 기본예탁금 :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개인인 위탁자가 주식워런트거래를 위탁하는 때에는 사전에 회사가 정하는 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1. 7.28)
- ▶ 예탁총액의 지급 : 회사는 위탁자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 대용가액의 합계액)이 기본예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경우에는 예탁총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1. 7.28)

### (2) 매매수량단위 거래단위 : 10증권

### (3) 호가가격단위 : 5원

## 4. 거래시간 및 거래중단

### (1)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시간

매매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까지이며 호가접수시간은 매매거래시간 개시 6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입니다.

## (2) 거래의 중단 및 재개

▶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중단** : 거래소는 KOSPI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1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의 중단을 말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20분이 경과한 때에는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

▶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 거래소는 ①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풍문 등과 관련하여 증권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 ②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③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는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 당해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종목별 매매거래정지후 매매거래 재개에 관하여는 회사가 필요시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기술

▶ **매매거래가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합니다. 이 경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터 10분간 접수된 호가로 합니다.

## 5. 가격제한폭 및 호가의 종류

(1)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주식워런트증권에는 주식과 달리 가격제한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호가는 지정가호가(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를 말합니다)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지정가 주문에 대하여 아이오씨(IOC)조건 또는 에프오케이(FOK) 조건을 부여한 경우 회원사 자율적으로 관련 내용 기술

## 6. 결제 및 최종거래일

- ▶ 주식워런트증권의 결제일은 매매거래가 체결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입니다(T+2일).
- ▶ 주식워런트 증권에 최종거래일은 ① 현금결제인 경우에는 권리행사기간 만료일 2일전(매매거래일 기준), ② 실물인수도결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권리행사기간 만료일 5일전(매매거래일 기준)입니다. 다만, 현금결제인 경우로서 만기평가가격 기준일이 최종거래일전인 경우에는 만기평가가격 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현재는 주식워런트증권의 실물 인수도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현금결제(차액정산)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7. 결제방식

- ▶ 만기일 현재 행사가치가 존재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을 매수한 고객(만기일 현재 고객계좌부에 등재된 자)이 별도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결제를 이행하여 만기일로부터 2영업일 되는 날에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자동권리행사).
- ▶ 만기시 평가가격은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최종거래일을 포함한 직전 5거래일 종가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최종거래일의 주가지수 증가로 합니다.

## 8. 상장폐지 기준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 기준
(예시)* (1) 발행인 가.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였을 때 나. 주권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기초자산 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이 상장폐지되었을 때 나.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산출할 수 없게 된 때(지수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

(3) 권리행사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기간만료·권리행사완료·권리행사조건의 달성으로 인하여 권리행사내용이 확정된 때 또는 최종거래일이 종료된 때

(4) 유동성 공급

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 공급자의 수가 1사 미만이 되고 그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유동성 공급 계획(발행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나. 유동성공급자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 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주식워런트증권의 전부 보유

가.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상장된 주식워런트증권을 전부 보유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한 때

나.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상장된 주식워런트증권을 전부 보유한 날로부터 1월간 변동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때

(6) 신고의무 위반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기타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 III. 용어해설

1. 기초자산(Underlying Asset) :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자가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행사의 대상물을 의미하며, 현재는 KOSPI 100 구성주식 및 KOSPI 200 주가지수가 기초자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콜워런트(Call Warrant) :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로부터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을 권리행사가격으로 인수하거나 그 차액(만기평가가격 - 권리행사가격)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를 의미하며, 기초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라 이익(가격하락시 손실)이 발생합니다.
3. 풋워런트(Put Warrant) :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을 권리행사가격으로 인도하거나 차액(권리행사가격-만기평가가격)을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로 기초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라 이익(가격상승시 손실)이 발생합니다.
4. 내가격워런트(In-the-money Warrant) : 콜워런트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높은 워런트를, 풋워런트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낮은 워런트를 의미합니다.

5. **등가격워런트(At-the-money Warrant)** : 기초자산의 시세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가격이 같은 워런트를 의미합니다.
6. **외가격워런트(Out-of-the-money Warrant)** : 콜워런트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낮은 워런트를, 풋워런트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 가격보다 높은 워런트를 의미합니다.
7. **행사가격(Exercise price or Strike price)** :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격으로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시 정해집니다.
8. **한국주가지수 200(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200 : KOSPI 200)**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 시장대표성, 유동성 및 업종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200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를 의미하며, 1990년 1월3일을 100.00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매년 6월 지수구성 종목을 정기적으로 심의·변경하며,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또는 합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구성종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지정가주문(Limit order)** : 고객이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거래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정가격 또는 지정가격 보다 유리한 가격(매수의 경우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 매도의 경우 지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됩니다.
10. **조기종료 발생 기준가격(Knock-Out Barrier)** : 조기종료 이벤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11. **조기종료 이벤트(Knock-Out Event)** : 기초자산가격이 미리 정한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이하(콜 조기종료 주식워런트의 경우), 혹은 발생기준가격 이상(풋 조기종료 주식워런트의 경우)으로 변동하는 경우 해당 종목이 상장폐지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12. **조기종료 관찰기간(Observation Period)** : 기초자산가격이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종목의 조기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13. 조기종료 관찰가격(Observation Price) : 조기종료 관찰기간 내의 기초자산의 체결가격**

귀하가 통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내용 등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6>

## 신 용 거 래 설 명 서

한 국 금 융 투 자 협 회

신용거래는 일반 현금거래와는 달리 시장변동에 따라 손실의 위험성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본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설명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신용거래계좌 개설 전에 신용거래의 개념 및 위험성 등을 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 《 목 차 》

1. 신용거래제도 개요

2. 신용거래의 위험성

3. 기타 주요사항

## 1. 신용거래제도 개요

## □ 신용거래의 개념

신용거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용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며, 신용공여의 재원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나 주권을 빌려주는 자기신용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금융이 있습니다.

## □ 신용거래의 구조

### 1) 신용거래계좌 설정

- ① 약관 및 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용거래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②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100만원을 납입합니다.

## 2) 신용거래 개시

- ① 신용거래보증금률에 따라 사전에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합니다.
  - 신용거래보증금률 : 융자 \*\* % (현금 \*\* %, 대용 \*\* %)  
대주 \*\* % (현금 \*\* %, 대용 \*\* %)
- ② 최소담보유지비율은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시가상당액의 \*\*\*%이며, 미달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 추가담보 납부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다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 ③ 추가담보납부기간(요구일로부터 \*일 이내)동안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합니다.
- ④ 고객은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부합니다.
- ⑤ 회사는 신용거래대주 담보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이용료(연 \*%)를 지급합니다.
- ⑥ 고객은 신용거래 계좌의 순재산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규로 신용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신용거래보증금률	용자 : 대주 :	임의상환정리	담보요구일로부터 *일째
담보유지비율	*** %	신용거래계좌설정 보증금이용료	연 * %
신용공여이자율	연 * %	신용공여이자 징수일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연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 3) 신용거래대상종목

- ①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합니다.
- ② 그 외에 신용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 거래소가 매매호가전에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

### 4) 상환

- ① 회사는 신용거래용자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 ② 고객은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하고, 현금,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은 상환을 신청(\*\*시까지)한 당일 상환됩니다.
- ③ 회사는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

로 필요한 수량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용자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이자,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 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 2. 신용거래의 위험성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용거래용자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15%이며, 보증금률 60%인 경우 6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 담보비율은 250%입니다.  $(1,000 \div 400 \times 100)$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4일간 연속 하한가로 마감된다면 원금 전액을 상실하게 됩니다.

### 2) 신용거래대주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례)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15%이며, 보증금율 100%일 때 현금

1,000만원을 담보로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받은 경우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로 마치고 4일간 연속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 1,0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 3)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임의상환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4)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기타 주요사항

#### □ 약관 ·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용거래계좌설정정보증금 이용료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율, 신용거래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신용거래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대용증권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에 대한 통지는 당해 내용을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관계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회사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월간 게시합니다. 이 경우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유통금융종목에 대한 권리

- 회사가 증권금융회사의 유통금융을 통하여 신용거래를 행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처리 등의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용거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설명서 및 신용거래약관을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신용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험고지

**신용 파생결합증권은 준거기업과 관련된 신용사건에 연계하여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입니다. 신용 파생결합증권을 거래하시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귀하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 파생결합증권이 준거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 상품은 상품 구조와 손실발생위험에 있어 회사채와는 다른 상품입니다.

1. 투자자는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 및 발행회사가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받게 되나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준거채무의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평가된 금액을 현금 또는 채권으로 상환받게 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사건\*은 주로 파산, 지급불이행, 채무재조정을 말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각 파생결합증권별(발행회사 및 발행회사 등)로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신용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003 Credit Derivatives Definition에 열거된 외의 사건을 신용사건으로 정한 경우 반드시 명기 (예시) 준거기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관리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신용사건에 포함됩니다.

3. 신용사건의 발생은 준거기업, 준거채무 또는 채무에 대하여 신용사건 관찰 기간 동안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투자자는 준거기업 및 준거채무\* 외에 (투자)설명서 상에 기재된 채무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채무에는 준거기업이 보증한 채무\*도 포함되므로 준거기업이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신용사건을 구성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다음과 같이 구체적 설명 기재**

(예시1) 준거채무는 하나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중 하나의 준거채무에 대하여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신용사건을 구성하게 됩니다.

(예시2) 준거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준거기업이 보증한 자회사채무에 채무재조정이 있는 경우 신용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투자자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4. 신용 파생결합증권은 발행회사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므로 만기시 발행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거기업과 관련된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발행회사에 파산, 회생 및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발행회사의 신용도도 투자 판단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5. 신용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만기 이전에 중도환매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환매가 가능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의 헷지거래 비용 등을 감안한 평가금액으로 상환받게 되므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들은 신용 파생결합증권에 수반되는 위험·제도 및 이 증권과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신용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고지 내용은 발행회사의 해당 신용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나 신용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국내의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중매매거래위험고지서

\*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라 함은 하루 중에 금융투자상품을 매수·매도를 반복함으로써 하루 중의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귀하는 일중매매거래를 하기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일중매매는 단기간 내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경험이 부족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투자원본을 모두 잃을 수도 있고, 원본초과손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일중매매거래는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나보다 더 뛰어난 수많은 전문가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뉴스, 특이한 거래행태 등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예측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잦은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등의 부담으로 고객의 손실이 더 커지거나 이익 중 상당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시스템매매위험고지서

“시스템매매(System-trading)”란 고객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

시스템매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매매는 투자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이해없이 시스템매매를 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시스템매매는 지나친 매매거래를 유발하여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급격한 시장변화나 전산장애 등으로 시세지연, 체결지연, 또는 주문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착오나 조작 실수로 인하여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별표 8-1> (신설 2011.1.26)

## 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 등록교육 필수과목 및 최소교육시간

구 분	과 목	시간
투자자문·투자일임 등록교육	· 관련 법규 · 투자자문·투자일임상품 및 영업실무	5
신탁 등록교육	· 관련 법규 · 신탁상품 및 영업실무	5

<별표 8-2> (신설 2011.1.26)

### 투자권유대행인 보수교육 세부기준

투자권유대행인	보수교육
펀드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상담사 보수교육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상담사 보수교육

<별표 9> (개정 2009.8.28, 개정 2011.8.19)

## 금융투자회사의 의무고지사항

투자광고의 내용	의무기제사항
1. 외화증권에 투자·운용되는 금융투자상품	○ 환율변동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상품	○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사실
3. 주식워런트증권(개정 2009.8.28)	○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4. 시스템 트레이딩	○ 입력조건에 따라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는 사실
5. 과세 관련사항	○ 과세율이나 과세기준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 소득공제의 기준과 과세율이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개정 2011.8.19)
6.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 운용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7. 신용공여	○ 담보유지비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담보증권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
8.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가 $\pm 0.5\%$ 이상일 경우 기준가격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9. 파생상품(신설 2009.8.28)	○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신설 2009.8.28) ○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청산될 수 있고, 시장 급변동시 예탁잔고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신설 2009.8.28)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경우, 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시 호가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신설 2009.8.28)
10. 고위험 채권(신설 2011.8.19)	○ 하이일드 채권은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리금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신설 2011.8.19) ○ 후순위사채는 발행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하는 경우 일반 부채의 상환이 종료된 후 원리금이 지급되는 등 별도의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신설 2011.8.19) ○ PF ABCP는 차주 또는 시공사의 유동성·신용 악화, 매입보장의무자인 금융기관의 의무 면제·불이행으로 인한 차환 실패 등 사정 발생시 원리금이 원활히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신설 2011.8.19)

<별표 10> (개정 2012.3.9)

##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

### **1. 공정한 거래질서 및 건전한 투자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 가. 고객 등에게 혐오감이나 위화감 등을 조성하는 행위
- 나. 다른 금융투자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영위업무 등을 비방하는 행위
- 다. 관계법규, 협회의 정관·규정, 그 밖에 자율결의사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 라. 가격변동위험, 국가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의 투자위험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개정 2012.3.9)
- 마.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회가 공정한 거래질서 및 건전한 투자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 **2.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최저, 유일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다. 특정시점 또는 특정기간에 해당되는 사항을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
- 라. 금융지주회사, 계열회사,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다른 회사 등의 우월적 지위를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부당하게 인용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 마. 언론에 잘못 보도된 내용임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행위
- 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사.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회가 허위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 **3. 다른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행위**

- 가. 우월성 부각을 목적으로 유리한 내용만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 나. 부분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전체적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상호 관련이 없는 사항을 비교하여 우월성을 표시하는 행위
- 다.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사에 유리하도록 비교기준을 설정하여 우월성을 과대표시하는 행위

라. 객관적 근거 없이 비교대상보다 우월하다고 표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회가 부당한 비교표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별표 11>

## 투자광고계획신고서 작성요령

구 분	신문, 잡지 등	방송, 온라인	게시물, 인쇄물	판촉물
투자광고의 종류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또는 계약과 관련된 광고는 “금융투자상품광고”,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하거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광고는 “집합투자증권광고”, 금융투자회사의 이미지의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는 “이미지광고”, 투자대회·사은품 지급행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개최하는 행사와 관련된 광고는 “행사광고”, 2종류 이상의 투자광고가 공존하는 경우 “공존광고”로 기재			
투자광고의 주제어	주요 핵심어 또는 표제·부제 등 투자광고의 주제어를 기재			
대상(배포) 지역	전국광고물의 경우 “전국”으로, 지점광고물의 경우 “○○지역”으로 기재			
투자광고의 규격	-	상영시간	-	-
실시방법	신문, 잡지 등 간행물의 종류	TV, 라디오, 인터넷, 휴대전화 등 광고 매체의 종류	포스터, 간판, 현수막, 전단, 리플렛 등의 종류	수첩, 메모지 등 판촉물의 종류
시행예정일정	최초 시행예정일부터 최종 시행예정일 기재			
시행예정횟수 (수량 등)	게재횟수	방송 및 상영횟수	배포·게시 수량	배포 수량
첨부서류	- 광고안 사본 - 증빙자료	- 스토리보드 등 자막·음성 - 전송메시지 전체 - 웹사이트 게시 페이지, 연결된 페이지 - 증빙자료	- 광고안 사본 - 증빙자료	- 광고안 사본 - 증빙자료

## 징계내역 열람제도 이용안내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위규행위와 관련하여 부과받은 과거의 징계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좌관리 직원의 적합성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징계내역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 □ 열람신청인 및 열람대상자

- 금융투자회사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고객은 자신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 또는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직원”의 과거 징계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열람신청절차

-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거래 금융투자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사 인사부 또는 영업추진부(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준법감시부서) 등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 징계내역 통보

- 징계내역은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보되며,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내역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3~6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통보대상 징계내역 및 통보내용

- 금융관계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전책” 이상의 징계내역 및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 □ 통보대상 제외

- 전책이상의 징계라 하더라도 해당 징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위법·부당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감독소홀·단순추종 등으로 부과된 징계

- ▶ 감독당국이 사면 등의 취지에 따라 통보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 징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 징계면직 : 10년, 정직 : 5년, 감봉 및 전책 : 3년

## 신용거래집중정보 관리기준

### 1. 미수발생정보

등록사유	등록시기	정보공유기간	등록정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결계좌로 지정된 경우	미수가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	-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미수가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 다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 금융투자회사명 - 위탁자명 - 고객식별정보*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결계좌로 지정된 경우		-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미수가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90일간 - 다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 를 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90일간	- 등록사유 - 미수발생일

### 2. 신용거래의 무담보 미수채권정보

구분	사유	등록시기	정보공유기간	등록정보
등록	- 금융투자회사가 채권(債權)회수를 위 하여 위탁자의 신용거래용자 또는 신용거래 대주를 임의 상환정리 후 에도 미수채권이 잔존하는 경우	- 미수채권 발생일부터 기산 하여 5일째 매매거래일 의 미수채권 잔액이 1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일부터 6일째 매매 거래일 - 미수채권 발생을 통보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등록일 부터 해제일까지  (다른 금융투자회사로 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정보공유기간을 기산)	- 금융투자회사명 - 위탁자명 - 고객식별정보*
변동	- 미수채권 잔액이 변동한 경우	-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		- 미수발생 (변동)일 - 미수채권 최종액
해제	-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 미수채권 잔액이 10만원 이하로 변동된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 - 미수채권 잔액이 10만원 이하로 변동된 사실을 통보 받은 날		

\* 고객식별정보

- ① 개인 : 주민등록번호 ②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③ 외국인 및 외국법인 : 여권번호, 외국인 투자등록번호 등

## 채권수익률의 가격환산 산식

채권 구분	산식	부호정의
1. 할인채권	$P = \frac{F}{(1+r)^T \left(1 + r \times \frac{D}{Y}\right)}$	<p><math>P</math> : 가격  <math>F</math> : 액면가액(10,000원)  <math>r</math> : 수익률  <math>D</math> : 결제일로부터 총 잔존기간 중 만기로부터 연단위로 정제된 기간을 제외한 연미만 잔존기간의 실제일수  <math>Y</math> : 실제일수  <math>T</math> : 결제일로부터 총 잔존기간 중 만기로부터 연단위로 정제된 년수</p>
2. 원리금 일시상환 채권 (단리채, 복리채, 복·단리채)	$P = \frac{S}{(1+r)^T \left(1 + r \times \frac{D}{Y}\right)}$	<p><math>P</math> : 가격  <math>S</math> : 액면 10,000원당 만기원리금합계  <math>D</math> : 결제일로부터 총 잔존기간 중 만기로부터 연단위로 정제된 기간을 제외한 연미만 잔존기간의 실제일수  <math>Y</math> : 실제일수  <math>r</math> : 수익률  <math>T</math> : 결제일로부터 총 잔존기간 중 만기로부터 연단위로 정제된 년수</p>
3. 이표채권	<p>발행시점에서 만기기간을 일정 단위기간으로 정제 가능한 경우 :</p> $P = \left[ I_1 + \frac{I_2}{\left(1 + \frac{r}{K}\right)^1} + \dots + \frac{I_n}{\left(1 + \frac{r}{K}\right)^{n-1}} + \frac{F}{\left(1 + \frac{r}{K}\right)^{n-1}} \right] \div \left(1 + \frac{r}{K} \times \frac{D'}{B}\right)$	<p><math>P</math> : 가격  <math>I_n</math> : <math>n</math>기의 액면가액 10,000원당 이자지급금액  <math>r</math> : 수익률  <math>K</math> : 연단위 이자지급 횟수  <math>F</math> : 액면가액(10,000원)  <math>D'</math> : 결제일로부터 다음 이자지급일까지의 실제일수  <math>B</math> : 직전이자지급일(또는 발행일)과 다음 이자지급일까지의 실제일수  <math>n</math> : 만기까지의 이자지급발생횟수</p>

채권 구분	산식	부호정의
4. 분할상환채권	<p>발행시점에서 만기기간을 일정 단위기간으로 정제 가능한 경우 :</p> $P = [CF_1 + \frac{CF_2}{\left(1 + \frac{r}{K}\right)^1} + \frac{CF_3}{\left(1 + \frac{r}{K}\right)^2} + \dots + \frac{CF_n}{\left(1 + \frac{r}{K}\right)^{n-1}}] \div \left(1 + \frac{r}{K} \frac{D'}{B}\right)$	<p><math>P</math> : 가격  <math>CF_n</math> : <math>n</math>기에 발생하는 현금흐름  <math>r</math> : 수익률  <math>K</math> : 연단위 현금흐름 발생횟수  <math>D'</math> : 결제일로부터 다음 현금흐름 발생일까지의 실제일수  <math>B</math> : 직전 현금흐름발생일(또는 발행일)과 다음 현금흐름 발생일까지의 실제일수  <math>n</math> : 만기까지의 현금흐름발생 횟수</p>
5. 변동금리부 채권	$P = [E(CF_1) + \frac{E(CF_2)}{\left(1 + \frac{r}{K}\right)^1} + \frac{E(CF_3)}{\left(1 + \frac{r}{K}\right)^2} + \dots + \frac{E(CF_n) + F}{\left(1 + \frac{r}{K}\right)^{n-1}}] \div \left(1 + \frac{r}{K} \frac{D'}{B}\right)$	<p><math>P</math> : 가격  <math>F</math> : 액면가액  <math>E(CF_n)</math> : <math>n</math>기의 기대이자액(표면가산금리와 표면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시점에 기대되는 액면금액 당 이자금액)  <math>r</math> : (유통가산금리와 유통기준금리 등이 고려된) 수익률  <math>K</math> : 연단위 이자지급 횟수  <math>D'</math> : 결제일로부터 다음 이자지급일까지의 실제일수  <math>B</math> : 직전 이자지급일(또는 발행일)과 다음 이자지급일까지의 실제일수  <math>n</math> : 만기까지의 이자지급 횟수</p>

##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 1. 관리형 토지신탁

구 분	내 용
1. 목적 및 정의	<p><input type="checkbox"/> 목적</p> <p>○ 관리형토지신탁(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을 말한다)에서 토지비 PF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을 목적으로 신탁수익을 신탁종료 전에 선지급 할 경우 안정적 사업관리가 가능한 선지급 범위를 정함</p> <p><input type="checkbox"/> 용어 정의</p> <p>○ 분양수입금=사업비(A)+토지비(B)+사업이익(C)</p> <p>- 사업비(A) :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p> <p>- 토지비(B) :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비용으로 사업비 이외의 비용</p> <p>○ 신탁수익 : 토지비(B)+사업이익(C)</p> <p>○ 자금보충약정 :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부담의무를 지는 것</p> <p>○ 관계회사 :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관계회사</p>
2. 선지급 조건	<p>[시공사]</p> <p><input type="checkbox"/>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채 신용등급 BBB<sup>0</sup> 이상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이 있어야 함. 다만, 회사채 미발행 시공사의 경우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CP 등급이 A3이상이거나 기업신용평가가 BBB<sup>0</sup>이상이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채 신용등급 BBB<sup>-</sup> 이하의 시공사가 책임준공약정을 한 경우에는 BBB<sup>+</sup> 이상 시공사(당해 사업의 공사도급금액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액도 함께 보유)가 자금보충약정 또는 책임준공 연대보증을 하여야 함</p> <p>[신탁계약서 및 개별약정서]</p> <p><input type="checkbox"/> 대출금융기관이 수익권에 대한 질권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토지비 등의 선지급이 가능함을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함</p> <p><input type="checkbox"/>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선지</p>

	<p>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을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서 및 개별약정서에 명기하여야 함</p> <p>[분양계약서]</p> <p><input type="checkbox"/> 수분양자의 보호를 위해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분양계약서에 명기하여야함</p>
3. 선지급 금액	<p><input type="checkbox"/> 선지급 금액의 산정</p> <p>○ 선지급 금액 ≤ 분양수입금 * [토지비 / (토지비+사업비)] (기 수납된 분양수입금 중 토지비 비율만큼 선지급 가능)</p> <p>※ 토지비와 사업비는 신탁계약시 사업수지표상 자료를 적용. 다만, 토지취득에 따른 이자비용은 계산에서 제외함</p> <p>○ 총 선지급 금액은 예상 신탁수익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p>
4. 적용예외 (개정 2010.6.25)	<p><input type="checkbox"/>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의 적용 없이 선지급 가능</p> <p>① 대출금융기관이 자금보충약정을 한 경우 ② 시공사의 관계회사(회사채 신용등급 BBB<sup>+</sup> 이상이어야 함)가 자금보충약정 및 책임준공 연대보증을 한 경우 ③ 사용승인일 이후 ④ 1인 단독 매수자(수분양자)가 확정되고 시공사(BBB<sup>0</sup>이상)의 책임준공 약정이 체결된 경우로서 위탁자 및 시공사의 요청과 매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만, 매수자가 중도금을 납입한 이후 또는 사용승인일 까지 계약해제를 금지한 경우에 한함</p>
5. 금지사항	<p><input type="checkbox"/> 대출약정의 효력이 신탁계약의 효력보다 우선하는 내용의 신탁계약 체결 금지</p> <p><input type="checkbox"/> 신탁회사는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에 반하는 금융기관과의 임의인출 약정, 금융기관과의 자금집행순서 및 방법 임의변경약정 등 체결 금지</p> <p><input type="checkbox"/> 신탁회사가 당사자가 되는 토지비 대출약정 체결 금지</p> <p><input type="checkbox"/> 신탁재산(분양대금계좌, 운영계좌, 보험금 및 건축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대출금융기관의 질권설정 또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 등 금지 (개정 2010. 6. 25)</p> <p><input type="checkbox"/> 신탁회사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선지급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한 이체 외에 시공사 등 제3자의 계좌로 이체 금지</p>

## 2. 차입형토지신탁

구 분	내 용
1. 목적 및 정의	<p><input type="checkbox"/>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입형토지신탁(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신탁사가 부담하는 신탁을 말한다)에서 토지비 PF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을 목적으로 신탁수익을 신탁종료 전에 선지급 할 경우 안정적 사업관리가 가능한 선지급 범위를 정함</li> </ul> <p><input type="checkbox"/> 용어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수입금=사업비(A)+토지비(B)+사업이익(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A) :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li> <li>- 토지비(B) :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비용으로 사업비 이외의 비용</li> </ul> </li> <li>○ 신탁수익 : 토지비(B)+사업이익(C)</li> </ul>
2. 선지급 조건	<p>[신탁계약서 및 개별약정서]</p> <p><input type="checkbox"/> 대출금융기관이 수익권에 대한 질권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토지비 등의 선지급이 가능함을 차입형토지신탁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함</p> <p><input type="checkbox"/>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을 차입형토지신탁 계약서 및 개별약정서에 명기하여야 함</p> <p>[분양계약서]</p> <p><input type="checkbox"/> 수분양자의 보호를 위해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분양계약서에 명기하여야함</p>
3. 선지급 금액	<p><input type="checkbox"/> 선지급 금액의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지급금액 ≤ 분양수입금* - 사업비** (지급시점에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선지급 가능)</li> <li>* 지급시점의 분양분에 대한 기 수납 및 장래 수납예정 분양수입금총액</li> <li>** 지급시점까지 지급된 사업비 및 향후 지급 예상되는 사업비</li> </ul> <p>○ 총 선지급 금액은 예상 신탁수익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p>

4. 적용예외	<input type="checkbox"/> 사용승인일 이후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적용 없이 선지급 가능
5. 금지사항	<input type="checkbox"/> 대출약정의 효력이 신탁계약의 효력보다 우선하는 내용의 신탁계약 체결 금지  <input type="checkbox"/> 신탁회사는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에 반하는 금융기관과의 임의인출 약정, 금융기관과의 자금집행순서 및 방법 임의변경약정 등 체결 금지  <input type="checkbox"/> 신탁회사가 당사자가 되는 토지비 대출약정 체결 금지  <input type="checkbox"/> 신탁재산(분양대금계좌, 운영계좌, 보험금 및 건축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대출금융기관의 질권설정 또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 등 금지 (개정 2010. 6. 25)  <input type="checkbox"/> 신탁회사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선지급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한 이체 외에 시공사 등 제3자의 계좌로 이체 금지

<별지 제1호> 삭제 <2009.2.26>

<별지 제2호> (개정 2009.2.26, 개정 2010.9.17)

##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서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	
<전문투자자의 인적사항 등>	
1. 명칭(법인명 또는 성명)	
2.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거주지 또는 주소지)	
3.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금융투자상품 잔고액(제출일 직전영업일기준, 원화)	원
<p>- 첨 부</p> <p>1. 법인등기부등본<sup>1)</sup> 사본 1부</p> <p>2.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p> <p>3.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제출일 직전영업일 기준) 1부</p> <p>4. 개인의 경우 반명함판 사진 1부</p> <p>5. 개인의 경우 계좌개설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한 서류에 한함)</p> <p>6. 금융투자회사 대리시 위임장 및 금융투자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p> <p>* 본인이 전문투자자로 지정될 경우 귀 협회가 본인이 전문투자자임을 확인할 목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지정신청을 대리할 경우에도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함)</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 (인)</p> <p>「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또는</p> <p style="text-align: right;">○○금 용 투 자 회 사<sup>2)</sup> (인)</p>	

-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포함) 중 선택, 외국법인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투자등록증, 해외에서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서류 중 선택
- 2) 전문투자자 지정신청 사무를 금융투자회사가 대리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인) 기재

<별지 제3호>

## 전문투자자 지정명부

성 명 (또는 법인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지정 신청일	년 월 일		
금융투자상품 잔고금액	원		
개좌 개설일	년 월 일		
거래 금융투자회사	○○ 금 융 투 자 회 사		
지 정 번 호			
지 정 일 자	년 월 일	지정의 효력기간	~

전문투자자 지정경력			
지정번호	지정일자	정지일자	정지사유

<별지 제4호> (개정 2009.2.26)

## 전문투자자 확인증

개인의 경우  
반명함판 사진 첨부

1. 성           명 :  
(또는 법인명)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전문투자자 지정번호 :
5. 전문투자자 지정일자 :
6.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기간 :

한국금융투자협회

년   월   일

한국금융투자협회

지정필인

**<별지 제5호>**

## 전문투자자 확인증 분실(도난)확인서

<b>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b>	
<b>&lt;확인증 분실(도난) 전문투자자의 인적사항 등&gt;</b>	
1. 성명(또는 법인명)	
2.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지정번호	
4. 지정일자	
<p><b>분실(도난)사유 :</b></p>  <p>상기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분실(도난)하였기에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6조에 따라 이를 신고합니다.</p> <p>※ 전문투자자 확인증 재발급 신청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반명합판 사진1부 제출)</p> <p><input type="checkbox"/>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습니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20    년    월    일  <b>신 고 인</b>                      (인)              또는    <b>○ ○ 금 용 투 자 회 사</b>  <b>대표이사<sup>1)</sup></b>                      (인)           </div>	

1) 전문투자자 확인증 분실(도난) 신고 및 재발급신청 사무를 금융투자회사가 대행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인) 기재

<별지 제6호> (개정 2009.9.25)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

<b>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b>			
<투자권유 대행인 인적사항 등>			
1.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회사			
2. 투자권유대행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투자권유를 위탁할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4. 투자권유를 위탁할 계약의 범위			
5. 투자권유대행인의 경력			
①			
②			
6.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①		(취득일 :   년   월   일)	
②		(취득일 :   년   월   일)	
7.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서 또는 지점			
<b>■ 첨부서류</b> 1. 주민등록증 사본(전면 및 후면) 2. 금융투자 전문인력 자격증 사본 3. 투자권유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4.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경력증명서 6. 반명합판 사진 1매			
<p>「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9조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0px;">             20   년   월   일  <b>신청인</b> (인)               또는               ○ ○ 금 융 투 자 회 사  <b>대표이사¹)</b> (인)           </div>			

1)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 사무를 금융투자회사가 대행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인) 기재

<별지 제7호> (개정 2011.1.26)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원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탁자 상호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범위					
관리지점(부서)					
등록번호		등록일자	년	월	일
자격취득유형	<input type="checkbox"/>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을 합격하고 협회가 정하는 등록교육 이수 <input type="checkbox"/>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을 합격하고 협회가 정하는 등록교육 이수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하고 협회가 정하는 등록교육 이수				
취소여부	<input type="checkbox"/> 취소	취소일자	년	월	일
등록의 효력정지여부	<input type="checkbox"/> 정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5px;"> <span>정지사유</span> <span></span> <span>정지기간</span> <span>~</span> </div>				

금융투자회사 근무경력		
종사기간	금융투자회사	직위
~		
~		

투자권유대행인 경력					
등록번호	등록일자	금융투자회사	해임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투자권유대행인 교육 이수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	연수과정	수료일	비고

<별지 제8호> (개정 2009.2.26)

등 록 증

자 격 구 분	투자권유대행인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자	
소 속 회 사	
성 명	
주 민 번 호	
취급금융상품	
<p>위 사람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임을 확인합니다.</p> <p>20    년    월    일</p> <p>한국금융투자협회장</p>	

**<별지 제9호>**

## 투자권유대행인 변동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	
<div style="text-align: center;">&lt;투자권유대행인 인적사항 등&gt;</div>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등록번호	
4. 등록일자	
5. 변동내역	
<input type="checkbox"/> 등록취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div>
<input type="checkbox"/> 직무정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span>~</span> <span>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div>
<input type="checkbox"/> 계약해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div>
<input type="checkbox"/> 업무위탁범위변경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flex: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 전 :</li> <li>● 변경 후 :</li> </ul> </div> <div style="flex: 2; height: 4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top: 5px;"></div> </div>
<p>「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2조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변동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인)</p>	

1) 투자권유대행인 변동보고 사무를 금융투자회사가 대행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인) 기재

<별지 제10호>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 분실(도난)확인서

<b>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b>	
<b>&lt;등록증 분실(도난) 투자권유대행인 인적사항 등&gt;</b>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등록번호	
4. 등록일자	
<p><b>분실(도난)사유 :</b></p>  <p>상기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분실(도난)하였기에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3조에 따라 이를 신고합니다.</p> <p>※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반명함판 사진1부 제출)</p> <p><input type="checkbox"/>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고 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또는</p> <p style="text-align: right;">○ ○ 금 용 투 자 회 사</p> <p style="text-align: right;">대표이사<sup>1)</sup>                      (인)</p>	

1)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 분실(도난) 확인 및 재발급신청 사무를 금융투자회사가 대행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인) 기재

<별지 제11호>

## 광고물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보고서

사전 확인 번호	광고 종류	매체 종류	광고상품명	광고내용	배포지역 / 대상	최초사용일 / 광고기간	규격	수량 / 회수	비 고
20    년    월    일 준법감시인   ○   ○   ○ (인)									

\* 광고종류는 판매광고 또는 이미지광고 중에서 기재

\*\* 광고내용이 법·영·규칙·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법령, 상품약관(정관)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사실과 상이한 경우 그 책임은 본 회사에 있습니다.

붙임 : 1. 엑셀파일\*

※ 위의 표 내용을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이 경우, 위의 표는 공란으로 처리할 수 있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2조 제3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사전  
확인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금   용   투   자   회   사

대표이사 (인)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

<별지 제12호> (개정 2009.2.26)

## 광고책임자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 (지정·변경)통보서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보고자
성명	정		부			
직책	정		부			
소속부서명	정		부			
전화	정		부			
FAX	정		부			
E-Mail	정		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2조 제5항에 따라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지정·변경)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금 용 투 자 회 사

대표이사

(인)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

<별지 제13호> (개정 2009.2.26)

## 투자광고 계획신고서

### 1. 투자광고에 관한 사항

광고이용매체	
투자광고의 종류	금융투자상품광고, 집합투자증권광고, 공존광고, 이미지광고, 행사광고, 기타 (            )
투자광고의 주제어	
대상(배포)지역	
규격 및 실시방법	
시행예정일정	최초시행예정 20    .    .    부터 최종시행예정 20    .    .    까지
시행예정횟수(수량 등)	
유사광고 심사필번호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호 (20    .    .    ~ 20    .    .    )

### 2. 담당자 성명, 연락처(☎ / FAX) :

### 3. 준법감시인 성명 :

(印 또는 서명)

### 4. 준법감시인 심사필 번호 :

#### ■ 첨부서류

가. 광고안 0 부

나. 그 밖에 증빙자료 0부

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3조에 따라 투자광고계획을 위  
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금 용 투 자 회 사

대표이사

(인)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

<별지 제14호> (개정 2009.2.26)

## 투자광고 심사결과 통보서

### 1. 투자광고에 관한 사항

접수일	
광고이용매체	
투자광고의 종류	
투자광고의 주제어	
심사결과	( 적격, 부적격, 조건부적격 )
심사필번호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호 (20 . . ~ 20 . . )

### 2. 부적격·조건부적격 사유

부적격·조건부적격 사유(유형)	권고 내용

### 3. 그 밖의 준수사항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4조에 따라 투자광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금융투자협회장

○ ○ 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15호>

## 투자광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1. 투자광고에 관한 사항

기존 심사필번호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호 (20 . . . ~ 20 . . . )
유효기간 연장사유	
연장사용 예정기간	~
제2-46조제2항각호 해당여부	

### 2. 담당자 성명, 연락처(☎ / FAX) :

#### ■ 첨부서류

- 가. 광고안 0 부
- 나. 그 밖에 증빙자료 0부
- 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투자광고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금 용 투 자 회 사

대표이사

(인)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

<별지 제16호>

## 비위행위 확인의뢰서

채용대상자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채용예정일자	년 월 일	
전근무처	회사명	○ ○ 금융투자회사
	직위	
	퇴직일자	년 월 일
	퇴직사유	
<p>「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0조에 따라 상기 채용예정자의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거부기간 경과여부 등의 확인을 의뢰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p>		

<별지 제17호> (개정 2009.2.26, 2009.3.24, 2010.1.29)

## 징계내역 보고서

<b>비 위 행 위 관 련 자</b>	성 명 :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근무부서 : 부(지점)		직위 :		채용일자 : 년 월 일	
	전문인력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펀드투자상담사(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산운용사(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증권투자상담사(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분석사(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투자상담사(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위험관리전문인력(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투자상담관리인력(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펀드관계회사인력(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비전문인력						
징계일자 : 년 월 일						
징계의 종류(1)						
퇴직여부 <input type="checkbox"/> 퇴직 (퇴직일 :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재직중						
조치기관: <input type="checkbox"/> 자체감사 <input type="checkbox"/> 금감원문책요구 <input type="checkbox"/> 협회 문책요구 <input type="checkbox"/> 거래소문책요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						
<b>사 고 내 용</b>	- 위규사항 요약					
	위법·부당행위의 종류	책임의 종류	징계의 종류(2)	위 규 사 항 요 약	위반 법규	위법·부당행위 관 련 기 간
	<input type="checkbox"/> 펀드투자상담사 업무 관련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업무 관련					
	<input type="checkbox"/> 증권투자상담사 업무 관련					
	<input type="checkbox"/> 투자상담관리인력 업무 관련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산운용사 업무 관련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분석사 업무 관련					
	<input type="checkbox"/> 위험관리전문인력 업무 관련					
	<input type="checkbox"/> 펀드관계회사인력 업무 관련					
	<input type="checkbox"/> 무자격자의 금융투자전문인력 업무 영위					
	<input type="checkbox"/> 협회의 제규정 위반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항					
- 위법·부당행위 내용 (6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재할 것)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 징계내역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 ○ 금 용 투 자 회 사 대표이사 (인)						

<별지 제18호>

# 징계내역 열람신청서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귀하

**<열람 대상자 인적사항 등>**

순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점명	비 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내역 열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인)

- 첨 부 : 징계내역 열람 동의서 1부\*

\*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본인의 징계내역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요

<별지 제19호>

## 징계내역 통보서

○○ 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귀하	
<직원 인적사항 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징계내역 1	
징계 일자	년 월 일
1징계 당시 소속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회사
징계 사유	<input type="checkbox"/> 임의매매 <input type="checkbox"/> 위법일임매매 <input type="checkbox"/> 미공개정보이용행위 <input type="checkbox"/> 시세조종 <input type="checkbox"/> 횡령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징계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면직 <input type="checkbox"/> 정직 <input type="checkbox"/> 감봉 <input type="checkbox"/> 견책
징계내역 2	
	이하생략
<p>「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내역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한국금융투자협회장</p>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기관 귀하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1.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예)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예)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국적,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납세실적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예) 신용정보집중관리·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및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 업무 목적 달성시까지

#### (2)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예)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 거래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공동사업자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예)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 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예)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국적,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예)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1), (2)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_\_\_\_\_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예) 상품 및 서비스 소개, 회원유치, 서비스이용 권유 등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_\_\_\_\_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예)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사은품·할인쿠폰 제공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호준 의원(민주당)

18. 최근 5년간 금융투자협회의 과장급 이상  
“정당가입자 또는 국회경력자” 채용현황(해당  
자의 인적사항 및 채용일시, 퇴직일시, 연봉,  
직급 명기)

☐ 동 요구자료는 금융투자협회에 이첩하여 해당 의원실로  
직접 회신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894

1894

1894

# 조 원 진 의 원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1. 2011.10.5 개최한 금융위원회 의안 제 225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안전사본 별도제출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2. 2011.12.28 개최한 금융위원회 의안 제309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안전사본 별도제출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3. 2012.1.27 개최한 금융위원회 의안 제12호,  
제16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안전사본 별도제출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4. 2012.2.8 개최한 금융위원회 회의 의안 제22호,  
제23호, 제25호, 제28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  
사본

☐ 안전사본 별도제출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5. 2012.2.22 개최한 금융위원회 회의 의안 제31호,  
제32호, 제35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안전사본 별도제출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6. 2012.3.7 개최한 금융위원회 회의 의안 제46호,  
제47호, 제49호, 제50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  
사본

☐ 안건사본 별도제출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7. 2012.3.21 개최한 금융위원회 의안 제62호~67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안전사본 별도제출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8. 2012.3.21 개최한 금융위원회 보고 안건 제13호,  
제14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안건사본 별도제출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9. 2012.4.18 개최한 금융위원회 회의 의안 제80호,  
제86호~93호, 제103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안전사본 별도제출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10. 2012.5.2 개최한 금융위원회 회의 의안 제106호,  
제108호, 제109호, 제112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안전사본 별도제출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11. 2012.5.16 개최한 금융위원회 보고안전 제36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안전사본 별도제출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12. 2012.6.8 개최한 금융위원회 의안 제144~147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안전사본 별도제출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13. 2012.6.20 개최한 금융위원회 의안 제151~154호,  
제159호에 대한 보고자료 원본사본

☐ 안전사본 별도제출

